

# 남북한 사회격차 완화를 위한 북한의 의식주 생활 지표 분석

조성은

김예슬·민기채·김현진·강미진·윤지현·최용호·최슬기·남영민·김효주·현인애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 연구진

연구책임자	조성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진	김예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민기채	한국고통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현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강미진	(주)NK투자개발 대표
	윤지현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최용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최슬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남영민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박사과정
	김효주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연구원
	현인애	이화여자대학교
해외사례 조사연구진		
	김도윤	아일랜드 코크한글학교 교사
	김승혜	북한인권정보센터 연구원
	김준기	한국고통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재학

연구보고서 2021-46

### 남북한 사회격차 완화를 위한 북한의 의식주 생활 지표 분석

발행일	2021년 12월
발행인	이태수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소	[3014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전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a href="http://www.kihasa.re.kr">http://www.kihasa.re.kr</a>
등록	1999년 4월 27일(제2015-000007호)
인쇄처	고려씨엔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ISBN 978-89-6827-844-0 93330  
<https://doi.org/10.23060/kihasa.a.2021.46>

## 발|간|사

문재인 정부의 출범 이후 남북관계는 긍정적인 사건과 부정적인 사건이 교차되면서, 그야말로 격변을 과정을 겪었다. 한때 한반도 평화가 눈앞에 다가온 듯 기대도 높았지만, 북미 관계의 냉각으로 그간의 많은 교류·협력 관계가 단절되고 교착상태에 빠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평화정착이라는 방향만큼은 여전히 중요한 국정 목표이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이다. 특히 인권의 관점에서 볼 때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이 최소한 유지될 수 있으려면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국제사회의 지원은 불가피하다. 그리고 앞으로 먼 미래를 생각할 때 북한 체제의 개혁·개방은 불가피하며 이를 통해 북한과 남한의 사회적 격차가 줄어들어야 한반도 통일이라는 헌법적 목표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를 통해 장기적으로 남북 간 사회격차가 완화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책방안이 도출되고 이후 보건복지 분야의 교류·협력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앞으로 남북관계가 긍정적으로 발전하여 본 연구가 더 구체화되고 실현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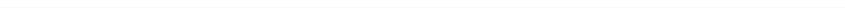
이 보고서는 조성은 연구위원의 책임 하에 본원의 최슬기 부연구위원, 김현진 전문연구원, 김예슬 연구원이 연구진으로 참여하였으며, 서울대학교 윤지현 교수님과 남영민 선생님, 한국교통대학교 민기채 교수님 연구팀, (주)NK투자개발 강미진 대표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용호 연구위원님, 이화여대 현인에 박사님, 서울대학교 김효주 연구원님이 외부 필진으로 집필에 참여하였다. 모든 연구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유익한 의견을 주신 노대명 선임연구위원, 김태완 연구위원, 평택대학교 손병돈 교수님, 그리고 익명의 평가자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

---

전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힌다.

2021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이 태 수**





Abstract .....	1
요약 .....	5
<b>제1장 서론 .....</b>	<b>13</b>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5
제2절 연구 내용과 연구 방법 .....	18
<b>제1부 북한의 의식주 생활: 식량과 영양을 중심으로</b>	
<b>제2장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의 변화와 주민생활 .....</b>	<b>25</b>
제1절 김정은 시대 경제 정책의 변화 .....	27
제2절 북한 가계의 소득 변화 .....	31
제3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북한 상황의 변화 .....	56
<b>제3장 북한 가계 소비 부문 시장가격의 변화 .....</b>	<b>71</b>
제1절 국정 가격과 시장 가격 .....	73
제2절 북한 가계의 소비지출과 시장 가격 .....	78
제3절 북한 가계의 비소비 지출 .....	105
<b>제4장 북한 식량 생산과 식품 소비의 변화 .....</b>	<b>109</b>
제1절 북한 식량수급 분석 .....	112
제2절 북한 식품 소비실태 분석 .....	136
제3절 코로나19 이후 북한 주민의 식품 소비의 변화 .....	152

---

<b>제5장 북한 주민의 식생활과 영양</b> .....	<b>159</b>
제1절 북한 주민의 식품공급량과 영양공급량 .....	162
제2절 북한 주민의 영양 상태 .....	181
제3절 북한 주민의 건강 유지를 위한 최소 식품소비 탐색 .....	215

## 제2부 체제 전환국 사례 분석: 발틱 3국을 중심으로

<b>제6장 체제전환국의 변화와 합의</b> .....	<b>235</b>
제1절 체제전환 이후 정치적 변화와 성과 .....	239
제2절 체제전환 이후 경제적 변화와 성과 .....	244
제3절 체제전환 이후 사회적 변화와 성과 .....	292
제4절 체제전환 이후 보건복지 변화와 성과 .....	328
제5절 체제전환국의 성과와 한계 .....	355
<b>제7장 체제전환 이후 발틱 3국의 사회문제와 사회정책적 대응</b> .....	<b>361</b>
제1절 체제전환 이후 발틱 3국의 사회문제 .....	363
제2절 체제전환 이후 발틱 3국의 사회정책적 대응 .....	386
제3절 발틱 3국 사례의 합의 .....	421
<b>제8장 결론</b> .....	<b>427</b>
제1절 연구의 주요 결과 .....	429
제2절 북한 주민의 영양 개선을 위한 남북 교류·협력에서의 정책적 시사점 .....	436



---

제3절 체제 전환국 사례의 시사점 .....	438
<b>참고문헌 .....</b>	<b>443</b>
<b>부록 .....</b>	<b>469</b>
[부록 1] 북한 내부 소식통의 특성 .....	469
[부록 2] 북한 주민의 식생활 관련 방송 및 지면 기사 목록 .....	470
[부록 3] 발틱 3국 체제 전환 관계자 인터뷰의 주요 내용 .....	475

# 표목차

---

〈표 3-1〉 북한 평양·북청·혜산 물가 (2018~2021년) .....	79
〈표 4-1〉 FAO 북한 식량 생산량 통계 .....	117
〈표 4-2〉 통계청 북한 식량 생산량 통계 .....	119
〈표 4-3〉 북한의 식량품목 수입 현황 .....	122
〈표 4-4〉 FAO 분석에 제시된 작물별 파종에 필요한 단위면적당 수량 .....	125
〈표 4-5〉 FAO 분석에 적용된 수확 후 손실률 .....	128
〈표 4-6〉 북한 식량수급 현황 .....	130
〈표 4-7〉 2008~2018년 북한 비료 소비량 .....	133
〈표 4-8〉 가구 유형별 식량 배급량과 열량 .....	143
〈표 4-9〉 지역별 식량 배급량과 열량 .....	144
〈표 4-10〉 시기별 농식품 소비지표 .....	146
〈표 4-11〉 가구 유형별 농식품 소비지표 .....	148
〈표 4-12〉 하루 식사 횟수 추이 .....	149
〈표 4-13〉 주식의 구성 추이 .....	150
〈표 4-14〉 고기 섭취 횟수 추이 .....	150
〈표 4-15〉 식생활 종합 실태 추이 .....	151
〈표 5-1〉 분석에 적용한 식품 품목별 식품 및 남북한의 1인 1일당 공급량 .....	169
〈표 5-2〉 FAO 식품수급표와 Canpro 분석 결과의 주요 영양소 공급량 비교 .....	172
〈표 5-3〉 남북한의 1인 1일당 영양소 공급량 .....	173
〈표 5-4〉 북한의 영양소별 주요 10가지 급원식품: 열량 및 다량 영양소 .....	175
〈표 5-5〉 북한의 영양소별 주요 10가지 급원식품: 비타민 .....	177
〈표 5-6〉 북한의 영양소별 주요 10가지 급원식품: 무기질 .....	179
〈표 5-7〉 북한 주민의 영양 상태 관련 지표 .....	182
〈표 5-8〉 북한 에너지섭취부족 인구비율의 공시적 비교 .....	185
〈표 5-9〉 식품섭취점수에서의 식품군별 가중치 .....	189
〈표 5-10〉 세계기아지수 산출방법 .....	192



〈표 5-11〉 북한 영유아 만성영양실조율, 급성영양실조율, 저체중률 및 과체중률의 공시적 비교 .....	197
〈표 5-12〉 2021년 북한 VNR보고서의 영유아 만성 영양실조율 및 영양불량률 .....	198
〈표 5-13〉 북한 영유아 빈혈 유병률의 공시적 비교 .....	200
〈표 5-14〉 북한 완전모유수유율의 공시적 비교 .....	201
〈표 5-15〉 북한 영유아 최소 식이빈도 비율, 최소 식이 다양성 비율, 최소 적정섭취 비율의 통시적 비교 .....	203
〈표 5-16〉 북한 영유아 최소 식이빈도 비율, 최소 식이 다양성 비율, 최소 적정섭취 비율의 공시적 비교 .....	203
〈표 5-17〉 2021년 북한 VNR보고서의 영아 및 영유아 사망률 .....	205
〈표 5-18〉 북한 영아 및 5세 미만 사망률의 공시적 비교 .....	206
〈표 5-19〉 북한 가임기 여성 빈혈 유병률의 공시적 비교 .....	209
〈표 5-20〉 북한 저체중아 출산율의 공시적 비교 .....	211
〈표 5-21〉 북한 모성사망비의 공시적 비교 .....	213
〈표 5-22〉 북한 주민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체위 자료를 포함한 보고서 및 논문 .....	217
〈표 5-23〉 북한 주민의 에너지필요추정량 산출 결과: 시나리오 1 .....	222
〈표 5-24〉 남한 주민의 에너지필요추정량 산출 결과: 시나리오 1 결과 비교를 위한 산출 .....	223
〈표 5-25〉 북한 주민의 에너지필요추정량 산출 결과: 시나리오 2 .....	224
〈표 5-26〉 남한 주민의 에너지필요추정량 산출 결과: 시나리오 2 결과 비교를 위한 산출 .....	225
〈표 5-27〉 201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의 대표영양가표 .....	227
〈표 5-28〉 북한 주민의 에너지필요추정량 산출 결과에 따른 201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의 권장식사패턴 .....	229
〈표 5-29〉 201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의 식품군별 대표식품 .....	230
〈표 5-30〉 201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의 대표 식품 중 북한 주요 생산 및 소비 식품 .....	230
〈표 5-31〉 권장식사패턴에 따른 북한 주민을 위한 식품 소비 구성 제한: 아동·청소년기 (9-18세) .....	231
〈표 5-32〉 권장식사패턴에 따른 북한 주민을 위한 식품 소비 구성 제한: 성인기(19세 이상) .....	232

〈표 6-1〉 체제전환국 그룹별 국가 .....	238
〈표 6-2〉 그룹별 세계자유지수 .....	240
〈표 6-3〉 그룹별 민주주의 지수 .....	242
〈표 6-4〉 그룹별 경제자유지수 .....	245
〈표 6-5〉 그룹별 국내총생산(명목GDP) .....	247
〈표 6-6〉 그룹별 1인당 국내총생산(명목GDP) .....	249
〈표 6-7〉 그룹별 경제성장률(실질GDP) .....	251
〈표 6-8〉 그룹별 1인당 경제성장률(실질GDP) .....	252
〈표 6-9〉 그룹별 1인당 국민총소득(GNI) .....	254
〈표 6-10〉 그룹별 GNI 대비 ODA 수혜율 .....	256
〈표 6-11〉 그룹별 1인당 ODA 수혜액 .....	257
〈표 6-12〉 그룹별 ODA 공여 규모 .....	259
〈표 6-13〉 그룹별 GNI 대비 ODA 공여율 .....	260
〈표 6-14〉 그룹별 GDP 대비 수출입 비율 .....	262
〈표 6-15〉 그룹별 소비자물가지수 .....	264
〈표 6-16〉 그룹별 소비자물가상승률 .....	265
〈표 6-17〉 그룹별 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 .....	268
〈표 6-18〉 그룹별 경제활동인구(전체) .....	270
〈표 6-19〉 그룹별 경제활동인구 성비(남성) .....	272
〈표 6-20〉 그룹별 경제활동인구 성비(여성) .....	274
〈표 6-21〉 그룹별 경제활동참가율(전체) .....	276
〈표 6-22〉 그룹별 남성 경제활동참가율 .....	278
〈표 6-23〉 그룹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	280
〈표 6-24〉 그룹별 고용률(전체) .....	282
〈표 6-25〉 그룹별 고용률(남성) .....	283
〈표 6-26〉 그룹별 고용률(여성) .....	285
〈표 6-27〉 그룹별 실업률(전체) .....	287



〈표 6-28〉 그룹별 실업률(남성) .....	288
〈표 6-29〉 그룹별 고용률(여성) .....	290
〈표 6-30〉 그룹별 인구수(전체) .....	292
〈표 6-31〉 그룹별 인구 성비(남성) .....	293
〈표 6-32〉 그룹별 인구 성비(여성) .....	295
〈표 6-33〉 그룹별 0~14세 인구 비율 .....	296
〈표 6-34〉 그룹별 15~64세 인구 비율 .....	298
〈표 6-35〉 그룹별 65세 이상 인구 비율 .....	299
〈표 6-36〉 그룹별 합계출산율 .....	301
〈표 6-37〉 그룹별 조사망률 .....	303
〈표 6-38〉 그룹별 신생아 사망률 .....	305
〈표 6-39〉 그룹별 자살률 .....	307
〈표 6-40〉 그룹별 기대수명(전체) .....	308
〈표 6-41〉 그룹별 기대수명(남성) .....	310
〈표 6-42〉 그룹별 기대수명(여성) .....	312
〈표 6-43〉 그룹별 노령화 지수 .....	314
〈표 6-44〉 그룹별 노년 부양비 .....	316
〈표 6-45〉 그룹별 지니계수(세전: 시장 소득) .....	318
〈표 6-46〉 그룹별 지니계수(세후: 가처분 소득) .....	319
〈표 6-47〉 그룹별 지니계수 개선도(세전-세후) .....	321
〈표 6-48〉 그룹별 하루 \$1.9 빈곤율 .....	323
〈표 6-49〉 그룹별 상대적 빈곤율(전체) .....	325
〈표 6-50〉 그룹별 상대적 빈곤율(노인) .....	326
〈표 6-51〉 그룹별 GDP 대비 연금지출 비율 .....	328
〈표 6-52〉 그룹별 GDP 대비 공공 연금지출 비율 .....	329
〈표 6-53〉 그룹별 GDP 대비 개인 연금지출 비율 .....	331
〈표 6-54〉 그룹별 퇴직 전 소득 대비 총(Gross) 연금대체율 .....	333

〈표 6-55〉 그룹별 퇴직 전 소득 대비 순(Net) 연금대체율 .....	334
〈표 6-56〉 그룹별 퇴직 전 소득 대비 연금대체율 개선도 .....	335
〈표 6-57〉 그룹별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 .....	336
〈표 6-58〉 그룹별 GDP 대비 공공부문 사회복지지출 비율 .....	338
〈표 6-59〉 그룹별 GDP 대비 법정민간부문 사회복지지출 비율 .....	340
〈표 6-60〉 그룹별 1인당 사회복지지출 비용 .....	341
〈표 6-61〉 그룹별 GDP 대비 국민부담률 .....	343
〈표 6-62〉 그룹별 경상의료비 대비 정부 의료비 비율 .....	345
〈표 6-63〉 그룹별 경상의료비 대비 민간 의료비 비율 .....	346
〈표 6-64〉 그룹별 경상의료비 대비 본인 부담 지출 비율 .....	348
〈표 6-65〉 그룹별 병상 수 .....	349
〈표 6-66〉 그룹별 의사 수 .....	350
〈표 6-67〉 그룹별 의사 1인당 병상 수 .....	352
〈표 6-68〉 그룹별 국민 1인당 연간 진료 횟수 .....	354
〈표 6-69〉 정치, 경제, 사회 지표에서의 그룹별 순위 .....	355
〈표 7-1〉 체제전환 이후 국가별 무역현황(GDP대비) .....	367
〈표 7-2〉 에스토니아의 산업분야별, 실업상태, 비활성상태 연간 노동력 이동 (1999년~2000년) .....	370
〈표 7-3〉 라트비아의 산업분야별, 실업상태, 비활성상태 연간 노동력 이동 (1999년~2000년) .....	370
〈표 7-4〉 리투아니아의 산업분야별, 실업상태, 비활성상태 연간 노동력 이동 (1999년~2000년) .....	370
〈표 7-5〉 발틱 3국의 소득불평등: 지니계수 및 십분위 비교(1988년~2000년) .....	375
〈표 7-6〉 국가들의 소득불평등의 정도 .....	376
〈표 7-7〉 가구별 소비재 소유여부 .....	379
〈표 7-8〉 가구별 생활필수품 부재 현황 .....	379
〈표 7-9〉 발틱 3국의 인구 변화(2000년~2010년) .....	381



〈표 7-10〉 발틱 3국의 빈곤 정의와 빈곤감소 목표 .....	387
〈표 7-11〉 발틱 3국의 최초 빈곤정책의 명칭과 내용 .....	390
〈표 7-12〉 발틱 3국의 최저임금과 평균임금의 변화(1995~2011) .....	390
〈표 7-13〉 발틱 3국의 실업급여(2000년대 초반) .....	392
〈표 7-14〉 발틱 3국의 적극적 노동시장에 대한 GDP 대비 지출비율(2001년) .....	395
〈표 7-15〉 발틱 3국의 3층 체계 도입 시기 및 내용 .....	398
〈표 7-16〉 발틱 3국의 2층 체계 도입에 따른 전환비용 .....	400
〈표 7-17〉 발틱 3국의 상병수당 급여 내용(2001년) .....	409
〈표 7-18〉 발틱 3국의 상병수당 보장기준(2018년 기준) .....	410
〈표 7-19〉 노인에게 제공된 장기요양 관련 서비스 구조 .....	417
〈표 7-20〉 체제전환 이후 발틱3국의 사회문제와 사회정책적 대응 .....	424
〈표 8-1〉 체제전환 이후 발틱3국의 사회문제와 사회정책적 대응과정에서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시사점 .....	441

# 그림 목차

[그림 1-1] 1~5차 연도 연구의 개요 .....	17
[그림 3-1] 북한 평양·북청·해산의 쌀 가격 추이(2018-2021) .....	82
[그림 3-2] 북한 평양·북청·해산의 설탕 가격 추이(2018-2021) .....	85
[그림 3-3] 북한 평양·북청·해산의 닭고기 가격 추이(2018-2021) .....	87
[그림 3-4] 북한 평양·북청·해산의 고등어 가격 추이(2018-2021) .....	88
[그림 3-5] 북한 평양·북청·해산의 콩산유 가격 추이(2018-2021) .....	91
[그림 3-6] 북한 평양·북청·해산의 배 가격 추이(2018-2021) .....	93
[그림 3-7] 북한 평양·북청·해산의 점퍼 가격 추이(2018-2021) .....	98
[그림 3-8] 북한 평양·북청·해산의 마스크 가격 추이(2018-2021) .....	103
[그림 4-1] 거울통계 개념도 .....	121
[그림 4-2] 남북의 경지면적 변화 추이 .....	132
[그림 4-3] 2020 북한의 GHI 평가 .....	137
[그림 4-4] 북한의 GHI 추세 .....	137
[그림 4-5] GHI 구성 .....	138
[그림 4-6] 북한의 GHI 세부지표 추세 .....	139
[그림 4-7] 북한의 월평균 식량배급량 추이 .....	142
[그림 4-8] 북한의 식량배급을 통한 공급 에너지량 .....	147
[그림 5-1] 북한의 1인 1일당 식품공급량 추이 .....	163
[그림 5-2] 북한의 식품군별 1인 1일당 식품공급량 추이 .....	165
[그림 5-3] 북한의 1인 1일당 에너지, 단백질, 지방 식품공급량 추이 .....	166
[그림 5-4] 남북한의 동식물성 급원식품별 주요 영양소 공급량 .....	180
[그림 5-5] 북한 에너지섭취부족 인구비율의 통시적 비교 .....	185
[그림 5-6] WFP의 기아지도 2021 .....	186
[그림 5-7] 북한 식품섭취불량 가구비율의 통시적 비교 .....	190
[그림 5-8] 식품섭취점수 산출에 활용된 북한 가구의 식품군별 섭취일수 .....	191
[그림 5-9] 북한 세계기아지수의 통시적, 공시적 비교 .....	193
[그림 5-10] 영유아 만성영양실조, 급성영양실조, 저체중 및 과체중의 정의 .....	194



[그림 5-11] 북한 영유아 만성영양실조율, 급성영양실조율, 저체중률 및 과체중률의 통시적 비교 .....	196
[그림 5-12] 북한 영유아 빈혈 유병률의 통시적 비교 .....	199
[그림 5-13] 북한 완전모유수유율의 통시적 비교 .....	201
[그림 5-14] 북한 영아 및 5세미만 사망률의 통시적 비교 .....	205
[그림 5-15] 북한 가임기 여성 단백질에너지 영양실조율의 통시적 비교 .....	207
[그림 5-16] 남북한 가임기 여성의 단백질에너지 영양실조율 비교(2012년) .....	208
[그림 5-17] 북한 가임기 여성 빈혈 유병률의 통시적 비교 .....	209
[그림 5-18] 남북한 가임기 여성의 빈혈 유병률 (2012년) .....	210
[그림 5-19] 북한 저체중아 출산율의 통시적 비교 .....	211
[그림 5-20] 북한 모성사망비의 통시적 비교 .....	213
[그림 5-21] 남북한 가임기 여성의 육류 및 생선류, 달걀, 유제품 섭취율(2012년) .....	214
[그림 5-22] 북한 주민의 에너지필요추정량 산출 시나리오 .....	219
[그림 6-1] 그룹별 세계 자유 지수 .....	241
[그림 6-2] 그룹별 민주주의 지수 .....	243
[그림 6-3] 그룹별 경제자유지수 .....	246
[그림 6-4] 그룹별 국내총생산(명목GDP) .....	248
[그림 6-5] 그룹별 1인당 국내총생산(명목GDP) .....	250
[그림 6-6] 그룹별 경제성장률(실질GDP) .....	252
[그림 6-7] 그룹별 1인당 경제성장률(실질GDP) .....	253
[그림 6-8] 그룹별 1인당 국민총소득(GNI) .....	255
[그림 6-9] 그룹별 GNI 대비 ODA 수혜율 .....	257
[그림 6-10] 그룹별 1인당 ODA 수혜액 .....	258
[그림 6-11] 그룹별 ODA 공여 규모 .....	260
[그림 6-12] 그룹별 GNI 대비 ODA 공여율 비교 .....	261
[그림 6-13] 그룹별 GDP 대비 수출입 비율 .....	263
[그림 6-14] 그룹별 소비자물가지수 .....	2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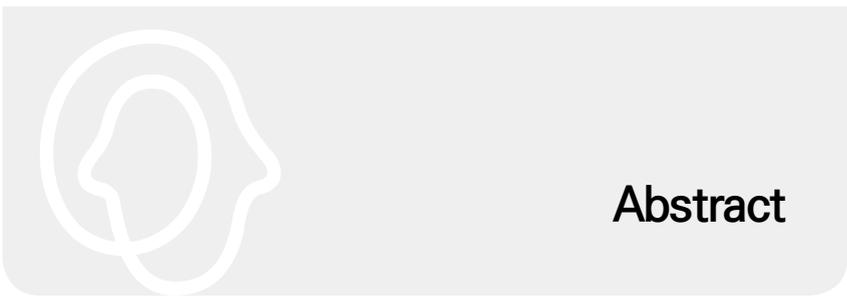
[그림 6-15] 그룹별 소비자물가상승률(1990~1999년) .....	266
[그림 6-16] 그룹별 소비자물가상승률(2000~2009년) .....	267
[그림 6-17] 그룹별 소비자물가상승률(2010~2020년) .....	267
[그림 6-18] 그룹별 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 .....	269
[그림 6-19] 그룹별 경제활동인구수(전체) .....	271
[그림 6-20] 그룹별 경제활동인구 성비(남성) .....	273
[그림 6-21] 그룹별 경제활동인구 성비(여성) .....	275
[그림 6-22] 그룹별 경제활동참가율(전체) .....	277
[그림 6-23] 그룹별 남성 경제활동참가율 .....	279
[그림 6-24] 그룹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	281
[그림 6-25] 그룹별 고용률(전체) 비교 .....	283
[그림 6-26] 그룹별 고용률(남성) .....	284
[그림 6-27] 그룹별 고용률(여성) .....	286
[그림 6-28] 그룹별 실업률(전체) .....	288
[그림 6-29] 그룹별 실업률(남성) .....	289
[그림 6-30] 그룹별 실업률(여성) .....	291
[그림 6-31] 그룹별 인구수(전체) .....	293
[그림 6-32] 그룹별 인구 성비(남성) .....	294
[그림 6-33] 그룹별 인구 성비(여성) .....	296
[그림 6-34] 그룹별 0~14세 인구 비율 .....	297
[그림 6-35] 그룹별 15~64세 인구 비율 .....	299
[그림 6-36] 그룹별 65세 이상 인구 비율 .....	300
[그림 6-37] 그룹별 합계출산율 .....	302
[그림 6-38] 그룹별 조사망률 .....	304
[그림 6-39] 그룹별 신생아 사망률 .....	306
[그림 6-40] 그룹별 자살률 .....	307
[그림 6-41] 그룹별 기대수명(전체) .....	309



[그림 6-42] 그룹별 기대수명(남성) .....	311
[그림 6-43] 그룹별 기대수명(여성) .....	313
[그림 6-44] 그룹별 노령화 지수 .....	315
[그림 6-45] 그룹별 노년 부양비 .....	317
[그림 6-46] 그룹별 지니계수(세전: 시장 소득) .....	319
[그림 6-47] 그룹별 지니계수(세후: 가처분 소득) .....	320
[그림 6-48] 그룹별 지니계수 개선도(세후-세전) .....	322
[그림 6-49] 그룹별 하루 \$1.9 빈곤율 .....	324
[그림 6-50] 그룹별 상대적 빈곤율(전체) .....	326
[그림 6-51] 그룹별 상대적 빈곤율(노인) .....	327
[그림 6-52] 그룹별 GDP 대비 연금지출 비율 .....	329
[그림 6-53] 그룹별 GDP 대비 공공 연금지출 비율 .....	330
[그림 6-54] 그룹별 GDP 대비 개인 연금지출 비율 .....	332
[그림 6-55] 그룹별 퇴직 전 소득 대비 총(Gross) 연금대체율 .....	333
[그림 6-56] 그룹별 퇴직 전 소득 대비 순(Net) 연금대체율 .....	334
[그림 6-57] 그룹별 퇴직 전 소득 대비 연금대체율 개선도(총연금대체율-순연금대체율) .....	335
[그림 6-58] 그룹별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 .....	337
[그림 6-59] 그룹별 GDP 대비 공공부문 사회복지지출 비율 .....	339
[그림 6-60] 그룹별 GDP 대비 법정민간부문 사회복지지출 비율 .....	340
[그림 6-61] 그룹별 1인당 사회복지지출 비용 .....	342
[그림 6-62] 그룹별 GDP 대비 국민부담률 .....	344
[그림 6-63] 그룹별 경상의료비 대비 정부 의료비 비율 .....	346
[그림 6-64] 그룹별 경상의료비 대비 민간 의료비 비율 .....	347
[그림 6-65] 그룹별 경상의료비 대비 본인 부담 지출 비율 .....	348
[그림 6-66] 그룹별 병상 수 .....	350
[그림 6-67] 그룹별 의사 수 .....	351
[그림 6-68] 그룹별 의사 1인당 병상 수 .....	353

---

[그림 6-69] 그룹별 국민 1인당 연간 진료 횟수 .....	354
[그림 7-1] 발틱 3국의 인플레이션: GDP deflator(1991~1999) .....	364
[그림 7-2] 발틱 3국의 경제성장률(1996년~2020년) .....	365
[그림 7-3] 발틱 3국의 실업률(1991년~2019년) .....	368
[그림 7-4] 에스토니아의 성별 고학력 실업률(1998년~2019년) .....	371
[그림 7-5] 라트비아의 성별 고학력 실업률(1998년~2019년) .....	372
[그림 7-6] 리투아니아의 성별 고학력 실업률(1998년~2019년) .....	372
[그림 7-7] 발틱 3국의 지니계수(2003년~2019년) .....	377
[그림 7-8] 발틱 3국의 총인구수의 변화(1986년~2020년) .....	381
[그림 7-9] 발틱 3국의 출산율(1985~2019) .....	382
[그림 7-10] 발틱 3국의 성별 사망률(1000명 당)(1980년~2020년) .....	383
[그림 7-11] 발틱 3국의 기대수명(1985~2019) .....	384
[그림 7-12] 발틱 3국의 이민율(1990년~2015년) .....	384
[그림 7-13] 발틱 3국의 노인부양비(1986년~2019년) .....	385
[그림 7-14] 발틱 3국의 성별 암 사망률(2016년) .....	407
[그림 7-15] 발틱 3국의 성별 심장질환 사망률(2016년) .....	407
[그림 7-16] 발틱 3국의 성별 뇌혈관 질환 사망률(2016년) .....	408



## Abstract

### **Analysis of North Korea's living indicators of food, clothing, and shelter for Reducing the Social Gap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Project Head: Cho, Sung-Eun

With the emergence of new domestic markets and the development of consumption in North Korea, many changes have occurred in the production activities of North Koreans and the economic agents. The household income of North Koreans seems to have also increased significantly due to the overall increase in production. The household's official income grew up in line with the increased production and incentives in the state-owned sector, and the informal household income also expanded significantly during the development of marketization. The advent of the comprehensive market has activated not only the consumer goods market, but also the sectors of services, labor, finance, and real estate, eventually increasing the opportunities for household income creation. As a result, most North Korean households have emerged from the absolute poverty and are generating their incomes and assets based on their own economic activities, which has been confirmed through the consumption patterns. However, this social change has been realized unevenly rather than evenly, so that

---

Co-Researchers: Kim, Ye-seul · Min, Ki-Chae · Kim, Hyun-Jin · Kang, Mi-Jin · Yoon, Ji-Hyun · Choi, Yong-Ho · Choi, Seul-Ki · Nam, Young-Min · Kim, Hyo-ju · Hyun, In-Ae.

the gap among the classes in North Korea is widening.

North Korea's average food production of 4.23 million tons in the 2000s rose to 4.66 million tons in the 2010s as a result of various efforts. Along with this trend, the general level of diet of North Koreans seems to have been gradually improving. The surveys with the North Korean defectors show that access to food is improving both in quantity and in quality. However, food shortage in North Korea is still ongoing because of considerable fluctuation in food production from year to year.. Food production in recent years has been particularly inconstant. Due to the recent sluggish food production, many residents are reducing the number of meals or substituting corn or potatoes for rice. It is basically not easy to obtain such foods as vegetables, fruits, and meat, and access to the basic food itself has also fallen down, making it more difficult to secure the necessary calories and essential nutrients. Whe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us, is paying attention to the North Korean dietary lif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not only the quantitative aspect of food but also the quality as well. The proportion of the population lacking energy intake in North Korea continued to increase, and it was reported to be 42.4% in 2018-2020 and 40% in 2019 for the proportion of the population with food insecurity. This means about 40% of the North Korean population either short of energy or in a state of food insecurity. The proportion of households with poor food

intake increased sharply to 11% in 2019, 38% in 2020, and 70% in 2021, indicating that the dietary diversity of households in North Korea has deteriorated significantly over the past three ye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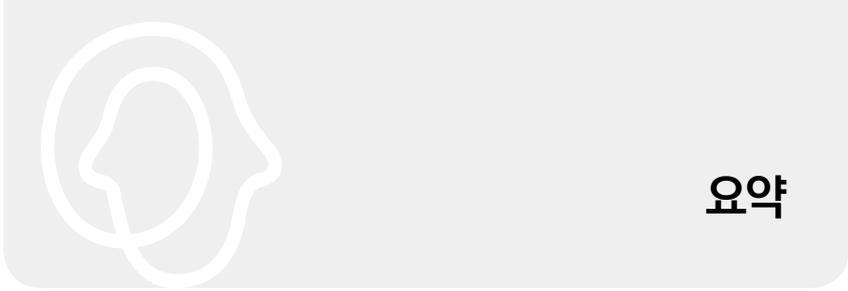
However, considering the overall data, it is judged that the nutritional status of North Koreans is improving as the values of various indicators have changed in a positive direction compared to the past. In particular, the malnutrition rate of the underprivileged has improved remarkably, which is judged not to be serious even when compared to the global average and to the other low-income countries. However, the gap with South Korea is still not narrowing. Particularly, taking into account the indicators related to the overall nutritional status of North Koreans,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support is urgently needed. Therefore, although the nutritional status of North Koreans has generally improved compared to the past, it can still be judged to be at a level of concern and in need of support from the outside world.

Efforts are very important and urgently required to reduce the gap of nutrition and health between the two Koreas by improving the diet and nutritional status of North Koreans in the process of preparing for the reunification. In addition to the long-term efforts, a short term suggestion is to consider exchanges and cooperation to apply the successful nutrition improvement programs of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r the

#### 4 남북한 사회격차 완화를 위한 북한의 의식주 생활 지표 분석

South Korean government to North Korea.

**Keyword:** North Korean dietary life,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Korea Reunification



## 요약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5년차 연구 중 2년차에 해당하는 연구로서 1년차 연구에서 장기적 지향으로서 평화복지체제에 대해 논의하고, 북한 주민의 소비품목을 전반적으로 탐색한 바 있다. 2년차인 본 연구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 특히 식생활과 영양에 집중하여 분석하고 건강 및 보건의료, 주거 및 여가, 문화생활 부문의 지표 분석은 3차, 4차 년도 연구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코로나19의 대유행 이후 북한의 식량문제와 이와 연결되는 식생활과 영양 문제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을 고려하여 이 부분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 2. 주요 연구결과

#### 1) 북한 경제와 가계소비의 최근 경향

김정은 시대 북한은 종합시장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시장경제 원리를 내부체제로 용인 흡수하면서, 가계의 자생력 증가와 국영기업소의 생산력 확대를 도모해 왔다. 북한은 2014년부터 ‘사회주의 기업책임 관리제’를 도입하며 국영 기업소에게 일정한 자율권을 부여했고, 협동농장도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생산의 자율성과 인센티브를 보장받고 있다. 국영 부문의 생산이 증가하면서 일반 주민들의 자본이나 노동이 국영 부문으로 수용되는 기회도 늘어났다. 새로운 내수시장이 등장하고, 소비시장이 발달함으로써 북한 주민들과 경제주체들의 생산 활동에도 커다란 변화가 발생했다. 북한 내부 생산력 증대에 따라 대중무역이 크게 증가했

고, 이는 다시 새로운 자금과 원부자재로 투입되어 북한 내부 생산력이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개선됐다.

전반적인 생산증가로 인해 북한 주민들의 가계소득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가계 소득은 소속 직장에서 주어지는 임금과 현물공급 등 공식소득과 가계별 개인 활동을 통해 얻어지는 비공식 소득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국영 부문의 생산증가 및 인센티브 확대로 가계 공식소득이 증가했으며, 시장화 발달 과정에서 가계 비공식 소득도 크게 증가했다. 종합시장 등장 이후 소비재 시장 뿐 아니라 서비스, 노동, 금융, 부동산 부문 등이 발달하면서 가계의 소득창출 기회가 늘어났다.

그러나 유엔의 대북제재 강화에 이어 COVID-19로 인한 대중무역 차단 조치가 이어지면서 북한 경제는 소폭 침체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다만 북한은 COVID-19 확산을 겪지 않고 있으며, 북한 내부에서 이동과 경제활동 등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북한은 대중무역이라는 변수를 제외하면 내수시장에서의 변화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 가계의 소비는 김정일 시대와 비교할 때 큰 폭의 성장과 변화를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북한 가계는 절대 빈곤 상황에서 벗어나 나름의 경제활동을 기반으로 소득과 자산을 늘려가고 있으며, 이는 소비 패턴을 통해 확인됐다. 다만 이 변화는 고르게 나타나기 보다는 사회적으로 불균등하게 실현되고 있어 북한 내 계층간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2) 북한 주민의 의식주 생활

김정은 시대에 북한의 가계는 과거에 비해 다양한 항목에서,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이는 북한 가계의 소득 증가, 특히 비공식 소득 증

가에서 기인하는 결과이다. 북한 주민들은 일상적으로 시장을 통해 식량을 소비하고 있는데, 시장 가격은 일정한 추세를 보인다. 전년도 수확량, 국가배급의 유무, 지역 간 물류 이동 등 변수가 시장 가격에 반영되고 있지만, 시장 가격 자체는 일정한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기본 식량 외에도 부식, 식음료 등에서 북한 주민의 소비수준이 김정일 시대와 비교할 때 큰 폭으로 개선됐다. 육류 및 육가공 소비와 수산물 소비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의류 등 생활필수품에서도 수요가 증가하고 소비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전통적인 국가공급 대상들이 모두 시장에서 거래되면서 주민들의 선택해야 할 폭이 넓어졌다. 중국산 수입품이 크게 증가했으며, 북한 내부 생산품도 늘어나게 되면서 다양한 품질과 가격으로 유통되고 있다.

주거와 관련된 부분에서 변화도 두드러진다. 주택을 건설하고 보수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으면서 가계별로 주거 상황을 개선하고 있으며, 가구나 가전제품 수요도 과거에 비해 높아졌다.

가계 소비 중에 교통과 관련한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개인 경제활동이 증가했음을 시사한다. 과거 국영철도 중심의 대중교통이 ‘씨비차’로 불리는 버스, 승합차, 승용차, 화물차, 오토바이 등의 민간제공 대중교통으로 크게 확대되었다. 사람과 물류의 이동이 증가함과 동시에 통신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여 많은 사람이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다, 디지털 미디어 기기의 사용도 북한 사회의 변화를 나타낸다.

### 3) 북한 주민의 식량소비와 식생활

본 연구에서는 북한 주민의 생활 수준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노력으로, 농업 생산의 한계에 따른 식량 부족 문제와 최근 식생활 수준의 양상

을 살펴보았다.

2000년대 평균 423만 톤에 머무르던 북한의 식량 생산량은 2010년대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466만 톤 규모로 상승하였다.<sup>3)</sup>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포전담당책임제와 농장책임관리제로 대표되는 농업개혁을 통하여 농산물 증산을 유도하는 한편, 중국과의 무역과 투자협력 활성화를 통하여 농업투입재가 공급되면서 거둔 성과이다.

이러한 추세와 함께 북한 주민의 전반적인 식생활 수준도 점진적으로 향상되어 왔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의 결과를 살펴보면 식품에 대한 접근성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모두 개선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sup>4)</sup> 또한 중국으로부터 수입품목 중 농식품 품목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다도 쌀, 옥수수 등 전통적인 식량품목에서 밀가루, 설탕, 콩기름 등으로 비중이 옮겨가고 있어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가 남아 있고 그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먼저, 앞서 식량수급 동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 주민의 식량난은 현재진행형이며, 식량 생산에 있어서 연도별 편차가 상당하다. 특히 최근 들어 이 식량 생산량의 변동성은 더욱 커진 양상이다. 여기에는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데에서 오는 영향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더불어 2020년 초에 발생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북한 국경이 봉쇄되면서 농업생산에 필수적인 기자재는 물론 지원 물품까지 북한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이로 인한 여파가 크고 심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북한 당국 차원에서는 식량 생산에 사활을 걸고 증산을 독려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영농물자에 대한 국가적 지원 강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농촌동원, 퇴비과제 등으로

3) 최용호(2021), 북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과 농업부문 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 다만 조사대상의 북한이탈주민은 출신 지역이나 계층적인 측면을 감안했을 때 대표성이 크다고 볼 수는 없음.

주민들의 부담만 가증될 뿐이다.

다음으로, 식생활 측면에서 몇 가지 우려가 제기된다. 앞서 살펴본 식생활 실태 분석에 따르면, 지역적, 계절적, 직업적, 계층적 차이로 인해 식량 접근성이 크게 다를 수 있었다. 서남부 곡창지대 주민과 발농사 위주의 동북부 지역은 배급되는 식량의 양과 구성이 다르다. 또한 6, 7월부터 식량작물을 수확하여 분배가 이루어지는 시점까지 식량사정은 상대적으로 급격히 어려워지는데, 이러한 현상은 매년 반복되고 있다. 한편, PDS에 의존하는 가구는 협동농장 또는 국영농장 종사가구에 비해 배급량 자체가 적을 뿐만 아니라 식량 확보 방법이 제한적이어서 더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국제사회의 식량지원에 의존해 왔던 장애인, 임산부, 노인, 어린이 등 취약계층은 대북 지원활동이 지연 또는 중단되면서 큰 어려움에 봉착했을 가능성이 크다.

식량 접근성 이외에 균형적인 영양 섭취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최근 식량 생산이 부진함에 따라 많은 주민은 끼니 수를 줄이거나 쌀 대신 옥수수나 감자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식량 부족의 어려움에 대처하고 있다. 채소, 과일, 고기 등 부식의 접근성이 기본적으로 좋지 않은데다 기초 식량 자체의 접근성까지 떨어지면서 필요한 열량과 필수 영양소 확보가 더 힘들어진 것이다. 우리를 포함한 국제사회가 북한 식생활에 관심을 가질 때 단순히 식량의 양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질적인 측면도 고려가 필요하다.

이러한 북한의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어도 단기적으로 북한 외부로부터의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의 팬데믹 상황을 감안할 때 북한의 국경봉쇄가 풀리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진정 되는데로 코로나 방역협력과 함께 당장 시급한 식량과 농기자재를 지원하여 인도적 위기를 해소하고 농업생산이 감소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 4) 북한 주민의 영양 상태

먼저 북한 주민 전반의 영양 상태 지표 현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북한의 에너지섭취부족 인구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8-2020년 42.4%, 식품불안정 인구비율은 2019년 40%로 보고되었다. 이는 북한 인구 중 약 40%가 필요한 만큼의 에너지를 섭취하지 못하거나 식품불안정 상태에 놓여있음을 의미한다. 식품섭취불량 가구비율의 경우, 2019년 11%, 2020년 38%, 2021년 70%로 가파르게 증가하여 최근 3년동안 북한의 가구 식이다양성이 매우 악화되었음을 보여준다. 북한의 세계기아 지수는 꾸준히 개선되고 있기는 하나 2020년 27.5점으로 여전히 심각 단계에 속한다.

북한 영유아의 영양 상태 관련 지표의 현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영유아 만성영양실조율, 급성영양실조율, 저체중률은 꾸준히 개선되어 2017년에 각각 19.1%, 2.5%, 9.3%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수치는 세계 및 저소득 국가 평균과 비교 시 양호한 수준으로 판단되며 과체중률 또한 2017년 2.5%의 매우 양호한 수준이다. 영유아 빈혈 유병률은 2018년 31.4%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수치는 세계 및 저소득국가 평균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기는 하나, 북한 영유아 세 명 중 한 명에 가까운 어린이가 빈혈 상태인 것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북한의 완전모유수유율은 2017년 71.4%로, 양호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영유아의 식이적절성을 평가하는 지표인 영유아 최소 식이빈도, 최소 식이다양성, 최소 적정섭취 비율은 2017년에 각각 75%, 46.7%, 28.6%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수치는 저소득국가 및 세계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기는 하나, 북한 영유아의 70% 이상이 최소한의 적정섭취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임을 고려하면 개선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영아 및 5세 미만 사망률은 꾸준히 개선되어 2019

년에 각각 13.1%, 17.3%로 보고되었다.

북한 가임기 여성의 영양 상태 관련 지표 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임기 여성 단백질에너지 영양실조율은 2012년 23.2%로, 북한 가임기 여성 다섯명 중 한명 이상이 영양실조 상태로 나타났다. 빈혈 유병률 또한 2010년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 33.9%로 세계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다. 저체중아 출산율의 경우, 2017년 3.1%로 남한보다도 낮은 매우 양호한 수준이다. 모성사망비는 2017년 10만명 당 89명으로 저소득 국가 및 세계 평균과 비교 시 낮은 수준이다. 가임기 여성 최소 식이 다양성 비율은 2017년 49.6%로, 북한 가임기 여성의 절반 이상이 최소한의 다양성이 보장된 식사를 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2021년 7월에 북한이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이행 상황을 보고한 'Voluntary National Review' 보고서에는 영양 상태 관련 지표의 현황이 제시되어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북한의 영유아 만성 영양실조율은 17.4%, 영양불량률은 4.5%로 나타났다. 2019년 영아 및 영유아 사망률은 각각 1,000명 생존출생 당 7.7명, 16.8명으로 보고되었으며, 모성 사망비는 100,000명 생존출생 당 49명으로 보고되었다. 전반적으로 북한이 보고한 VNR보고서의 영양 상태 관련 지표 현황은 동일 시점의 국제기구 자료에 비해 다소 긍정적인 경향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영양 상태가 과거에 비해 개선되고 있음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전반적인 자료들을 종합해 볼 때, 여러 지표의 수치가 과거에 비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였다는 점에서 북한 주민의 영양 상태는 개선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취약계층의 영양불량률이 눈에 띄게 개선되어 저소득 국가 및 세계 평균과 비교하였을 때에도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남한과의 격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

다. 특히 북한 주민 전반의 영양 상태 관련 지표를 살펴보면, 국제사회의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북한 주민의 영양 상태는 전반적으로 과거에 비해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우려할만한 수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 3. 결론 및 시사점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북한 주민의 식생활과 영양 상태를 개선하여 남북 간의 영양 및 건강 격차를 줄이는 노력은 매우 중요하고도 긴급한 과제이다. 그러나 1995년부터 시작되어 약 10여 년간 활발히 진행되었던 남북교류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부터 급격히 축소되기 시작하여 현재는 거의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다. 2014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독일 드레스덴 선언과 2018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교류가 재개되는 듯 하였으나 이 또한 지속적인 교류협력의 성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위한 장기적 노력과 함께 보다 단기적으로는 국제기구나 남한 정부의 성공적인 영양개선 프로그램을 북한에 적용하기 위한 시도도 고려해 볼 것을 제안한다. 유니세프의 지역사회기반 대응법 (Community-based management of acute malnutrition, CMAM) 이 중단되지 않도록 기금을 지원하고, 남한의 임산부와 영유아 대상 영양개선 프로그램인 영양플러스 사업이 북한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민간단체를 통한 교류협력을 추진해 보는 것이 우선 필요할 것이다.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제 1 장

##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과 연구 방법



# 제 1 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남북관계는 상당기간 냉각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21년 미국의 대선 이후 새로 집권한 바이든 행정부는 아직까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고 있고, 2022년 한국의 대선을 앞두고 남북 간의 새로운 움직임도 멈춘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한 공영의 목표는 변함없이 우리가 추진해야할 지향이다. 분단 이후 남과 북 모두 불필요한 군사비 지출과 이념 대립으로 자원을 소모해왔던 과거를 지속해서는 안 된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이 정착하고 그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치·군사적 평화 정착과 더불어 북한 주민의 생활수준을 안정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대북정책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남북한 사회통합의 비용을 분산시키고 북한 내의 개혁·개방을 촉진하는 효과로 이어질 것이다. 이에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수준의 안정을 꾀할 수 있는 남북한 교류·협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북한 주민의 생활수준 개선을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북한 주민의 생활 현황을 보다 현실에 가깝게 파악하기 위해 북한 주민의 식생활과 영양을 중심으로 의식주 부문의 지표 분석을 시도한다. 이러한 북한 주민 생활에 대한 실증적 분석은 남북한 교류·협력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도 필요한데, 사회과학적인 방법론

을 적용하여 객관적인 연구 결과 및 기초자료를 축적하여 남북한 교류협력 정책 개발에 실증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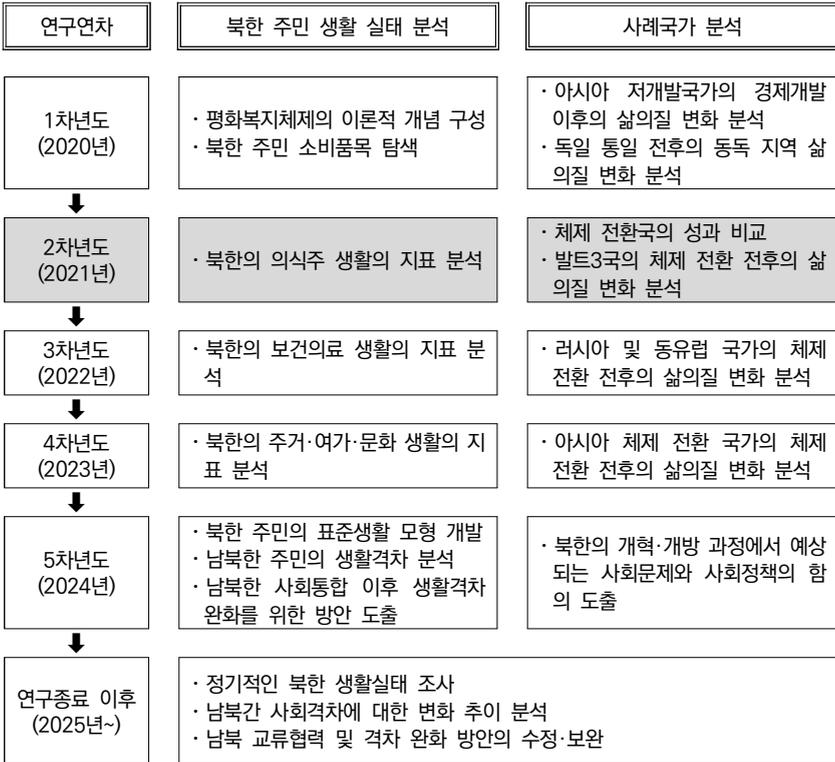
본 연구는 5년차 연구 중 2년차에 해당하는 연구로서 1년차 연구에서 장기적 지향으로서 평화복지체제에 대해 논의하고, 북한 주민의 소비품목을 전반적으로 탐색한 바 있다. 2년차인 본 연구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 특히 식생활과 영양에 집중하여 분석하고 건강 및 보건의료, 주거 및 여가, 문화생활 부문의 지표 분석은 3차, 4차 년도 연구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코로나19의 대유행 이후 북한의 식량문제와 이와 연결되는 식생활과 영양 문제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을 고려하여 이 부분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의생활은 생존과 인간발달에 주는 영향이 크지 않으며, 주거의 경우 사회주의 체제의 특성 상 최소한의 주거공간은 전체 주민에게 배분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보장의 관점에서 기존 연구보다 더 정교한 분석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5년에 걸친 본 연구에서는 저개발 상태이며 폐쇄형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이, 개발과 개방을 진행할 경우 주민들의 생활에서 어떠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으며 주목해야 할 사회문제 그리고 이에 대한 사회정책의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예측하기 위해 유사 국가들의 사례를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1차 연도에는 아시아 저개발 국가들의 개발과정에서 빈곤과 불평등 변화를 탐색하였는데, 2차 연도인 본 연구에서는 발트3국의 체제 전환 전후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탐색한다. 사례 국가들에 대한 연구와 함께 올해부터 체제 전환국들의 변화를 다루기 때문에 발트3국을 포함하여 체제 전환 국가들을 유형화하여 유형별 변화를 전반적으로 비교하였다.

다음의 [그림 1-1]은 1차 연도부터 5차 연도까지 계획하고 있는 중기

연구의 전반적 개요를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 1-1] 1~5차 연도 연구의 개요



자료: 저자 작성

이 연구는 사회개발을 통해 북한의 기초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남북한 사회 격차를 완화를 위한 교류협력을 지속하는 것이 남북한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의 밑거름이 된다는 전제에서 진행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정책에 기반하여 남북한 교류·협력이 효과적으로 확대되고, 이를 통해 향후 남북한 주민의 생활 격차가 완화되고 한반도 평화가 정착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 제2절 연구 내용과 연구 방법

### 1. 연구 내용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부에서는 먼저 의식주 부문에서의 북한의 생활수준을 1차 연도에서 파악한 품목을 중심으로 시장가격과 함께 보다 실증적으로 파악한다. 1차 연도 연구에서 파악한 북한 주민의 전반적인 생활 실태에 따른 소비 품목들을 바탕으로 2차 연도 연구인 이 연구에서는 의식주 부문에 집중하여 북한의 생활실태 파악의 정교화를 시도한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의 전반적인 변화와 북한 가계 소득변화를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주요 품목들의 북한 내 국정 가격과 시장 가격의 변화를 파악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북한 주민의 생존과 삶의 질에서 가장 기초적인 식량 소비와 식품 소비에 보다 집중하였는데, 소비 실태 파악과 함께 영양학적 측면에서 식생활을 평가하고 영양학적으로 지지되는 최소 식품소비의 모형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제4장에서는 북한 식량 생산과 식품 소비 변화를 분석하고 제5장에서 북한 주민의 식생활을 영양학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북한 주민의 최소 식품소비 모형을 제시하였다.

한편 제2부에서는 체제전환국들의 다양한 성과를 비교하고, 발트3국의 사례 연구를 통해 북한의 개발 방향과 그에 따른 생활수준의 변화 양상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5년간의 연구를 통해 북한의 개혁·개방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개발과정의 국가, 체제전환 국가를 전반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2차 연도인 이번 연구부터 4차 연도까지 체제 전환국을 유형별도 검토할 예정으로(<그림 1-1> 참조), 제6장에서는 체제전환국들을 유형화하여 그 성과를 발틱3국과 비교하고 제

7장에서는 체제 전환 과정에서 발틱3국의 사회문제와 사회정책적 대응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남북한 교류협력과 그에 따른 정책 개발에 대한 실증적 차원에서의 시사점을 결론부에서 도출하였다.

##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북한 연구의 특성 상 문헌 및 기존 자료에 대한 조사를 기본으로 한다. 북한의 보건·복지에 대한 국내 문헌, 해외 문헌에 대한 자료조사를 바탕으로 분석하는데, 특히 최근 국제기구를 통해 보고된 북한의 통계자료들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였다.

먼저 북한의 식량 또는 곡물 생산 관련 통계는 미국 농무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이하 USDA) 산하 해외농업국(Foreign Agricultural Service, FAS)이 발표하는 자료, 유엔 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이하 FAO)에서 발표하는 자료, 한국의 농촌진흥청에서 추정하여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자료 등이 있다. 미국 농무부는 세계농업생산(World Agricultural Production) 발간을 통해 주요 식량작물에 대한 세계 주요 생산국의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등을 매월 발표하고 있다(World Agricultural Production, 2021). 이 중 쌀, 옥수수 등 일부 품목에 대하여 북한의 생산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 자료는 북한을 대상으로 한 종합적인 식량수급 분석에는 적합하지 않다.

FAO는 북한 정부가 유엔에 제출한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농업 생산 관련 통계를 작성·발표하고 있다. FAO의 통계 작성 목적 중 하나가 식량 부족을 겪는 지역이나 국가에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현황 파악

을 위한 정확한 통계자료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과거 북한이 제공한 자료가 부정확하거나 의도적으로 왜곡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 통계자료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성영상 분석, 현장조사 등을 통해 북한이 제공한 자료를 검증하고 보완하고 있다.

FAO의 북한 농업 생산 통계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제공된다. 하나는 FAOSTAT이라는 통계 시스템에서 확보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북한을 대상으로 식량사정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에서 작성되는 보고서<sup>1)</sup>와 리포트<sup>2)</sup>를 통해 제공된다. 북한의 식량수급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의 연구에서는 FAOSTAT보다는 보고서와 리포트를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북한을 대상으로 특정하고 있고, FAO와 WFP(World Food Programme, 세계식량계획) 합동조사단의 현장실사와 여러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작성됨에 따라 북한 농업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고 신뢰성에서 강화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도 이 자료를 활용하여 북한의 식량수급 상황을 분석한다.

한국의 농촌진흥청은 북한지역의 기상과 병충해 발생 및 비료수급 상황, 국내외 연구기관의 작황자료와 위성영상 분석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북한의 식량작물 생산량을 추정한다(농촌진흥청 보도자료, 2020년 12월 18일자). 이 추정 결과는 통계청에 제공되어 통계청 북한통계에서 연도별 북한의 식량생산 통계를 발표한다. 이 자료는 FAO 자료와 함께 북한 농업 및 식량 관련 많은 분석과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일부 이 자료를 참고하였다.

식량, 식품 소비와 관련하여서는 정기적으로 북한 자료를 보고하고 있

---

1) 보통 'Special Report: FAO/WFP Crop and Food Security Assessment Mission (CFSAM)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북한 작황 및 식량안보 평가 특별보고서)'라는 제목으로 발간되고 있음.

2) 북한에 대한 특별 리포트는 조기경보시스템(Global Information and Early Warning System on Food and Agriculture, GIEWS)을 통하여 발간되고 있음.

는 FAO의 자료, SDGs와 관련하여 북한이 UN에 제출한 VNR 등에서 최근 북한의 식생활과 관련한 자료들을 확보하여 분석하였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160여 개국은 FAO의 권장 방식에 따라 자국의 식품수급표를 작성하고 있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 북한의 경우, 중앙통계국이 식품수급표를 작성하여 FAO에 제출하고 있다(권태진, 2021b). FAO는 이러한 세계 여러 나라의 식품수급표를 매년 업데이트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그밖에 비교평가를 위해 국제식량정책연구소의 세계기아지수(Global Hunger Index, GHI)를 활용하고, 시계열적인 분석을 위해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북한이탈주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참고하였다. 세계기아지수(GHI)는 전 세계적, 지역적, 국가적 차원에서 기아(hunger)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측정하고 지속적인 동향 추적을 위해 고안된 지표이다. 이 GHI는 국제식량정책연구소(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가 기아 퇴치의 진행 상황이나 부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매년 GHI 점수를 계산하여 국제적 민간지원단체인 Concern Worldwide and Welthungerhilfe와 함께 매년 발표하고 있다. 여기에 북한의 자료도 포함하고 있다.

북한 주민의 영양 상태와 관련해서는 UNICEF 등의 국제기구가 주기적으로 수행하는 영양조사(nutrition survey)와 다중지표군집조사(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를 활용하였다. 영양학적 평가는 FAO의 식품수급표를 이용하여 2013년의 북한 식품공급량 및 영양소 주요 급원식품을 연구한 박혜림(2019)의 방법에 따라, 2018년 북한의 식품공급량에 따른 영양소 공급량과 주요 급원식품을 분석하였다.

최근 북한의 현황과 관련해서는 대북자료를 직접 수집하여 국내 공공기관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 있는 전문기업과 협업하여 북한 내 정보망

## 22 남북한 사회격차 완화를 위한 북한의 의식주 생활 지표 분석

을 통해 수집한 북한 내 물가 정보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특정 지역의 소식통으로 언급한 경우 협업한 기관과 연락하는 북한 현지의 소식통으로 신변의 안전을 위해 자세한 정보 수집 방법 등은 공개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 기업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주요 대상에 대한 정보는 부록으로 간략히 제시하였다.

그밖에 북한 현황을 담고 있는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등의 북한 공식 언론기관 자료와 국내외 언론기관의 북한 관계 기사를 분석하였다.



# 제 1 부

## 북한의 의식주 생활 : 식량과 영양을 중심으로

제2장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의 변화와 주민생활

제3장 북한 가계 소비 부문 시장가격의 변화

제4장 북한 식량 생산과 식품 소비의 변화

제5장 북한 주민의 식생활과 영양





## 제2장

###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의 변화와 주민생활

제1절 김정은 시대 경제 정책의 변화

제2절 북한 가계의 소득 변화

제3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북한 상황의 변화



## 제 2 장

#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의 변화와 주민생활

### 제1절 김정은 시대 경제 정책의 변화

#### 1. 종합시장과 시장원리 수용

북한은 우선 종합시장을 중심으로 성장해온 시장경제 흐름을 체제 내부에서 용인했다. 북한은 <7.1경제관리개선조치>(2002)와 종합시장 도입(2004)이라는 개혁적인 선택을 보였으나, 이후에는 국가배급제 복귀(2005), 4차 화폐개혁(2009) 등 극단적인 반(反)시장 정책으로 회귀했다. 당시 북한은 국가 방침에 따라 종합시장을 도입하고도 국가가 종합시장 뿐 아니라 상거래 전반을 통제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고집했다. 종합시장에 대한 통제는 상거래의 ▲자격(상인의 직업이나 나이) ▲품목 ▲가격 등에 대한 제한을 기본 골자로 삼았다. ‘허용’과 ‘통제’ 사이에서 국가정책이 우왕좌왕하면서 시장 활동의 주역이었던 북한 주민들 뿐 아니라, 이들을 통제 감독해야하는 간부들까지 큰 혼란에 빠졌다. 이를 일거에 해소하기 위해 2009년 화폐개혁, 종합시장 폐쇄, 외화 사용 전면 금지 등의 정책이 실시 됐으나, 결과적으로 북한 경제는 커다란 혼란에 빠지게 되면서 김정은은 3대 부자세습을 공식화했던 노동당 지도부에게 커다란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했다.

김정은은 과거 종합시장 통제 정책을 모두 철회함으로써 종합시장의 현상 유지 정책을 선택했다(통일교육원, 2019, p.187).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더 이상 종합시장을 억압하지 않고 국경기업의 시장 활동까지

적극적으로 유인하는 등 일부 시장경제 원리를 체제 내부로 수용했다. 행정구역마다 종합시장을 증개축 하고 매대를 제공하였으며, 각 지역 인민위원회의 관리 아니라 매대 상인들에게 자릿세, 판매세 명목으로 세금을 걷었다. 자연발생적으로 존재하던 노점 상인들도 공식 종합시장으로 편입시켰다.

국가 차원에서 종합시장 시스템을 용인함에 따라 북한 경제는 2000년대의 혼란을 극복하고 점차 안정화될 수 있었다. 북한 주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시장 활동에 나서게 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효율성이 높아졌다. 특히 국영생산 부문들까지 시장 활동에 참여하면서 북한 사회의 생산총량이 늘어났다. 북한은 2014년 국영기업소 및 공장 등에 자율경영과 인센티브 분배를 강화하는 ‘사회주의 기업책임 관리제’를 도입했다. 국영기업소들이 생산계획, 생산조직, 노동력조절, 제품 개발, 품질 관리, 인재 관리, 무역 시도, 재정 권리, 생산물의 가격 제정 및 판매 등에서 일정한 자율권을 부여한 것이다(양문수, 2017, pp.87-88). 협동농장도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생산의 자율성과 인센티브를 좀 더 높은 수준으로 보장받았다(김소영, 2019, p.69). 국영부문이 시장 활동에 나서게 되면서 일반 주민들의 자본이나 노동력이 국영 부문으로 수용되는 기회가 늘어났다. 서비스업이 빠른 속도로 활성화되는 결과도 이어졌다. 새로운 내수시장이 등장하고, 소비시장이 발달하여 주민들의 경제인식에도 커다란 변화가 발생했다.

## 2. 적극적인 대중(對中) 무역 확대

북한은 중국을 중심으로 대외무역을 확대했다. 이미 김정일 시대에 국가가 독점하던 무역 권한을 국영기업, 무역회사, 각 국가 조직들에 분배

하면서 대외무역 확대를 시도했다. 김정은 집권 이후에는 보다 적극적인 수출정책이 시도됨으로서 무역총액이 급증했다. 김정일 집권 시기까지 북한의 대외무역 규모는 대략 30~40억 달러 수준에 머물렀으나, 김정은 시대에는 수출입이 가파르게 증가하여 2014년에는 76.1억 달러에 달했다. 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압도적으로 높다(홍제환, 2017, p.33). 석탄, 철광석, 섬유 등의 원자재와 임가공 수출이 늘어났다. 상품 교역 뿐 만 아니라 해외 노동자 파견 등 인력 자원을 이용한 외화벌이도 적극적으로 허용됐다. 특히 대중무역이 급속히 확대됐다.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의 북한 관광이 증가했고, 중국 자본의 북한 투자도 늘어났다. 곡물, 원유 등 전략 물자는 물론 산업용 원부자재와 내구 소비재의 수입도 증가했다. 최소한 중국을 향해서는 북한의 경제가 상당 부분 개방됐다. 중국과 무역이 활성화되면서 북한 내부의 생산에 필요한 재화 수입도 늘어났고, 이는 다시 북한 내부의 생산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이어졌다.

북한의 대중무역 확대 결과 내수경제(종합시장) 중심으로 성장하던 북한 경제는 대외교역의 경제구조로 변화했다. 대외무역에서는 무역회사의 성장과 활약이 두드러졌다. 2000년대까지 북한의 무역회사들은 북한 내부에서 생산하는 지하자원이나 산림자원을 해외시장에 팔거나, 해외 시장의 상품을 북한에 들여와 이익을 추구하는 거간활동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김정은 시대에 이르러 무역회사들은 북한의 주요 국영기업소들과 협력하여 북한 내부에서 완제품이나 1차 가공품의 생산을 이끌었다. 다른 한편으로 축적된 자본과 원자재 수입능력을 이용하여 북한 내수시장에 공급될 상품 생산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무역회사의 주도로 석탄공업과 경공업이 발전하게 되었고, 무역회사가 주도하는 새로운 생산망이 구축됐다.

### 3. 국영부문 생산성 향상 도모

북한은 김정일 시대 국정 목표였던 ‘선군정치(先軍路線)/국방공업 우선 발전’ 전략을 ‘핵/경제 병진노선’으로 수정보완하면서 경제발전을 국가목표의 하나로 제시했다. 김정은의 병진노선은 국가경제 혹은 인민경제가 군수경제의 종속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되는 기회가 됐으며 국영부문의 생산성 향상을 촉구하는 정치적 명분으로 작동했다. 석탄/전력/금속/철도 등 4대 선행부문이 점차 발전하면서 전체적인 제조업 성장에 영향을 미쳤다. 과거 북한의 제조업은 북한식 표현으로 ‘경공업’ 비중이 매우 높았는데, 2000년대까지 북한의 경공업은 그 생산량과 생산성이 1980년대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경공업은 서비스업이나 건설업, 광업보다도 훨씬 더 뒤쳐진 것으로 평가됐다. 국영기업소가 생산하는 경공업 제품은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도 외면 받을 정도로 품질이 낮았다. 그러나 김정은 집권 이후 제조업의 역량이 꾸준히 강화되었다. 특히 국영 무역회사들이 외화벌이 자본을 바탕으로 내수 생산에 투자를 반복하면서 경공업, 식품 가공업 등에서도 품질이 향상되고 있다. 중국에서 수입이 늘어나면서 기계공업 등에서도 생산성이 늘어났다. 제조업의 발달은 국영기업소와 국경기업소, 국영기업소와 개인, 개인과 개인 간 협력을 촉진하고 부가적인 서비스업 발달에도 도움이 됐다. 경공업의 발달은 자본재 생산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정은 시대에는 전반적으로 거시경제 현황이 안정됐다. 종합시장에서 거래되는 식량 등 생필품 가격, 위안화 등 환율 등이 추세적 안정세를 보이게 됐다. 거시 경제의 안정화는 건설업에서도 발견된다. 건설업은 신속한 자금 회전이 필요한 부문으로 북한 수준의 정부재정에만 의존해서는 원활한 진행이 어렵다. 거시경제가 안정화되면서 ‘돈주’로 대표되는 민간

의 자본이 건설업에도 흘러들어가게 되면서 건설업 자체도 활성화됐다. 김정은 시대 경제발전 전략은 2016년부터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으로 정식화됐다(김석진, 2021, p.2).

다만 최근 북한 경제는 유엔의 대북제재 강화와 COVID-19 팬데믹에 따른 대중무역 중단에 따라 여러 가지 난관에 직면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1차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에서 미진했던 부문과 대중무역 중단을 고려해 2021년 1월 2차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발표했다(나혜윤, 2021.1.9.). 김 위원장은 “지난해까지 내세웠던 목표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엄청나게 미달”했다고 인정하면서도, 국가경제를 중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예측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다짐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대북제재’라는 기본 제약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2차 5개년 전략 역시 성공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으나, 2020년 북중무역 차단 이후에도 북한 내부에서 경제 혼란이 발생하지 않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제2절 북한 가계의 소득 변화

### 1. 북한 가계의 공식소득 증가

북한 주민의 가계 소득은 크게 공식소득과 비공식 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식소득은 소속 직장의 공식 분배와 거주지 국가행정조직 차원에서 주어지는 국가 혜택이다. 북한 주민들은 소속 직장과 거주지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기본 분배를 받으며, 개인이 아닌 가족 단위로 그 혜택이 전달된다(NK투자개발, 2021a, p.5).

분배는 ‘노동에 따른 분배’와 ‘국가 혜택 차원에서 분배’로 나뉘진다(박석삼, 2004, p.15). ‘노동에 따른 분배’는 개인의 사회적 노동에 대한 사회적 보상 차원의 분배이다. ‘노동에 따른 분배’는 개인이 투입한 노동의 양과 질을 평가하여 그에 맞게 ‘생활비’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 생활비가 바로 임금이다. 노동의 양과 질에 대한 평가는 노동의 종류에 따라 차이를 둔다. 북한 주민들은 배치된 직장의 유형에 따라 대략 농업과 일반 제조업, 서비스업 등 3개 부분에서 서로 다른 평가기준을 받는다. 북한의 경제부문을 기준으로 국영기업소, 협동농장, 편의봉사부문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가혜택 차원의 분배’는 국가가 전체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교육, 의료, 사회보험, 사회보장 등의 공적 혜택을 의미한다. 북한은 사회주의 원칙에 따라 국가가 주민들에게 각종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가계 지출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선전해왔다. 다른 나라에 비교할 가계 평균 소득이 매우 낮은 수준이었지만, 이에 상응하여 가계지출 부담도 매우 낮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국가공급이 붕괴하면서 북한 가계 소득에서 공식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미미해졌다.

비공식 소득은 개인 소토지 농사 등 매우 제한적인 영역에서만 존재했으나 2000년대 종합시장 이후 매우 광범위한 영역으로 확대됐다. 북한 가계에서 공식소득은 매우 미미한 규모로 일반 주민 대부분은 비공식 부업에서 얻는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정은 시대로 넘어오면서 종합시장 발달, 중국무역 확대, 제조업 성장 등을 배경으로 일반 주민들의 비공식 소득 창출 기회가 크게 늘어났다. 한편, 김정은 시대 경제 성장에 따라 북한 가계의 공식소득 분야에서도 일정한 확대가 엿보인다. 국영 생산 부문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소 마다 명목임금을 일정하게 상향조정하고, 현물 분배도 일부 늘린 것이다(NK투

자개발, 2021a, p.6).

### 가. 국영기업소의 분배

국영기업의 노동 분배는 노동자가 제공한 노동량과 노동질에 따라 차등을 둔다. 노동자의 노동 댓가를 북한에서는 ‘생활비’라고 부른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노동법 제38조). 북한은 ‘노동정량’과 ‘노동등급’에 노동의 양과 질을 평가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70조). 노동정량은 단위 시간 대비 작업량 혹은 노동투입시간을 기준으로 삼는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노동정량법 제2조). 노동등급은 노동의 질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노동 강도나 작업의 숙련도를 반영하여 등급을 나눴다. 노동의 양은 노동 투입시간으로 측정되고, 노동등급은 1~4분류에 특수 1~2분류를 더해 총 6분류, 1~8급의 기능을 고려 나눈다고 한다(박석삼, 2004, p.33).

원칙적으로 생산부문에 따라, 직종에 따라, 직제에 따라, 기능 급수에 따라 기본생활비가 책정된다. 국영기업소에서는 노동자, 기술자, 사무원 등이 대표적이다. 노동에 따른 분배로는 기본생활비에 추가 노동에 대한 수당이 붙을 수 있다. 생활비는 기본적으로 정액화 되었으나 실제 지불액수가 너무 적어 자신의 공식 임금이 얼마인지도 제대로 모르는 노동자들도 있다. 일반적인 제조업 분야 노동자에게는 노동을 통해 생산된 수행 실적에 따라 생활비를 계산하고, 노동 결과를 정량화하기 어려운 병원, 학교 노동자 등은 법정노동일수를 토대로 생활비를 책정한다. 이미용 등 편의봉사 분야에서는 서비스 대상의 숫자를 할당하여 노동결과로 측정하기도 한다. 건설노동자, 운수노동자 등은 작업 대상을 맡기고 노동량에 관계없이 작업이 완료되면 정해진 생활비를 지급한다.

명목상 국영기업소 노동자들에게는 상금, 장려금, 가급금 등의 인센티브 제도가 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노동법 제39조, 40조). 상금은 생산계획을 초과수행한 경우 지급된다. 장려금은 기술혁신이나 생산 공정 개선, 제품 품질 향상, 자재 절약 등에 공을 세운 사람에게 지급된다. 가급금은 북한식 상여금의 일종인데, 근속연한을 기본으로, 별도의 기술자격 등을 고려하는 추가 인센티브이다. 노동 작업 환경이 위험하거나 노동 강도가 높은 노동자를 우대하려는 발상에서 시작됐다.

이러한 생활비는 국영기업소 마다 노동자들에게 지불해야 하는데, 그 재원은 차이가 있다. 국가 예산에 따라 운영되는 기업소는 국가예산에서 자금을 받아 생활비를 지불하고, 독립채산제를 허락받은 국영기업소는 자체의 생산물 판매 수입금으로 생활비를 지불해야한다.

#### 나. 협동농장의 분배

협동농장에서는 ‘노력일’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분배한다. 농장원의 노동을 ‘양과 질’로 평가고 이를 ‘노력일’로 환산한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노동법 제43조). 북한 주민들은 농장원의 노력 일을 “공수(工數)”라고 부른다(NK투자개발, 2021a, p.7). 공수를 계산하는 방식은 규격화 되어 있다. 농장원이 투입한 노동 강도에 따라 6개 등급으로 분류하여 공수를 달리 적용한다. 예를 들어 노동 강도가 최고 등급인 6등급은 1.6일 공수로 계산해주고, 등급이 낮아질 때마나 0.2씩 공수가 감소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최저 등급 노동은 0.6공수가 된다. 노동의 양은 각 작업마다 정해진 작업량에 따라 평가된다.

농장원의 공수는 농장원 개인 단위로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작업 분조(分組) 단위로 측정한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농장법 제22조). 북한의

협동농장은 다수의 작업반으로 구성된다. 각 작업반은 다수의 분조로 구분되며, 분조 단위로 작업 할당량을 배정한다. 각 분조에 일정한 면적의 토지와 농기구를 할당하고, 단위 면적 당 수확 계획과 노력일 투하 계획을 부여하는 것이다. 계획수행 정도에 따라 분조의 노력일을 평가하여 분배 기준으로 삼는다. 기본 분배 몫은 1년 동안 농장의 총생산액을 기준으로 산출되며, '작업반 우대 몫' 등 계획을 초과 달성한 작업반 구성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특별 상금도 있다. 그러나 초과 달성과 관련한 상금은 그 산정 액수가 미미하여 실제 분배량 결정에는 반영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협동농장별로 건물 시설 유지보수, 탁아소/유치원 운영, 농장원의 사회보험기금 등을 자체 운영자금을 우선 배정하는데, 이는 모두 총생산액에서 차감되어 실질적인 농장원 분배 몫이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협동농장에서는 일반적으로 농장원에 대한 분배 지급은 연간 분배와 월간 분배를 병행하고 있다. 월간 분배는 연말정산 전에 기본 분배 몫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이고, 연간 분배는 연말정산을 통해 이미 확정된 기본 분배 몫에서 월간 분배 몫을 제외하고 지급한다. 농장원들에 대한 분배는 생산물을 직접 분배하는 '현물분배'와 임금을 계산해주는 '현금분배'가 동시에 실시된다(NK투자개발, 2021a, p.7).

#### 다. 국가적 혜택에 따른 분배

혜택에 따른 분배는 사회적 소비 몫을 재원으로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이 선전하는 교육, 의료, 보육, 사회보장, 사회보험 등이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47조, 제49조, 제56조). 기본 식량 및 의류, 주택 등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도 국

가적 혜택이라고 볼 수 있다. 국가 예산 중 인민적시책비를 통해 주민들에게 재분배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정법 제16조). 이론상으로는 가계가 지출해야 할 내용을 국가가 무상 공급함으로써 가계 소비 부담을 줄이고 실질 가계 소득을 증가시킨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실제 제공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품질이 낮아 주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오히려 실생활에서는 추가 가계지출이 요구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감소시키는 결과가 예상된다.

## 2. 북한 가계의 비공식 소득 증가

전통적으로 북한 주민들은 1차 산업에서 비공식 소득을 얻어왔다. 1990년대 국가공급 붕괴 이후 폐기발 경작(옥수수/콩/감자), 가축 사육(닭/돼지/토끼), 산림자원 채취(약초/버섯/산나물/목재), 수산물 채취, 일용직 노동 등으로 생계를 이어왔다.

김정은 시대 시장경제가 발달하면서 광산/탄광에 고용되거나 개인 수공업자에 고용되는 경우가 늘어났다. 현재는 종합시장에서 장사, 국영상점 운영, 공식/비공식 무역 참여, 요식업·숙박업·운수업·건설업 등에 직접 참여하거나 고용되는 사람들도 늘어났다. 일반적인 서비스업인 이미용, 재봉, 약전(가전제품수리), 교통수단 수리 등에서 자영업을 벌이는 사람들도 있다(NK투자개발, 2021b, p.3). 기존의 전문기술 영역인 교육 의료 분야에서도 개인 서비스가 능가하고 있으며, 환전 및 대부업 등도 새로운 소득 경로로 부각되고 있다. 간부들 역시 광범위해진 뇌물 문화 덕에 비공식 소득이 크게 늘어났다.

북한 내부 소식통은 북한의 일반적인 가구의 가계 소득에서 70%~90%

가 비공식 분야에서 소득을 추정한다(NK투자개발, 2021a, p.8). 월별 가구당 비공식 소득은 북한 돈 최소 10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다양하다.

## 가. 소비재 시장의 발달과 가계 소득 증가<sup>3)</sup>

### (1) 소비재 시장 현황

소비재 시장이 발전하면서 북한 가계의 비공식 소득이 증가하게 되었다. 1990년대 경제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경제활동에 따라 소비재 시장이 확대되었고, 김정은 시대에 이르러 국가 차원에서 이를 체제 내부로 수용하게 되었다.

오늘날 북한 소비재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종합시장이다. 2003년 김정일 위원장이 ‘종합시장 계획’을 승인함에 따라 2004년 봄부터 북한 전역의 시 군 구역마다 1개 이상의 종합시장이 들어섰다. 울타리, 지붕, 매대, 입구, 시장관리소가 갖추어진 상설시장으로, 지역 인민위원회 상업 부문이 행정관리를 담당한다. 여러 연구를 종합하면 북한의 종합시장은 평양 등 전역에 400개가 넘는다(홍민, 차문석, 정은이, 김혁, 2016, p.17). 과거에 외국에서 수입된 소비재는 국가가 운영하는 외화상점 등에서만 유통됐으나, 종합시장 등장 이후 각 지역에 판매소를 설치하여 수입 소비재도 종합시장에 들어왔다. 종합시장은 북한의 정권 수립 이후 최대의 고용 창출 효과를 유발했다.

종합시장은 크기, 이용자의 규모 등에 따라 도매급 시장과 소매급 시장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도매/소매 분류는 공식적인 분류는 아니며, 시장의 규모와 거래량에 따라 일반 주민들의 편의에 따라 분류된다. 먼저 북

3) 본 소절은 NK투자개발, (2021b) 북한 산업별 시장화 현황, NK투자개발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가 재구성함.

한의 도매 시장으로는 그 규모 순으로 평안남도 평성시 옥전동에 위치한 <덕산농민시장>, 함경북도 청진시 수남구역에 위치한 <수남 시장>, 평안북도 신의주시에 위치한 <남민시장>이 유명하다. 다음으로 <혜산농민시장>처럼 각 지역의 대표 종합시장 중에 도매와 소매 성격이 혼재돼있는 경우다. <무산시장>과 같은 군/구역급 시장들은 소매 성격이 강한 종합시장이다. 북한에서 '도매시장'으로 부각 되는 시장들은 다양한 형태의 일 자리를 창출했다. 유동 인구나 물동량의 증가는 주차장, 세차장, 주유소(연유공급소), 수리점 등의 확대를 동반했으며, 모두 새로운 고용을 만들었다.

2000년대 후반부터 개인들이 이윤의 일정 부분을 상납하면 국영상점을 실제로 경영할 수 있게 되었다. 북한은 행정구역 단위인 시/구역 기준으로 ▲식량/식료 ▲경공업품 ▲채소 등 부식 ▲의약품 등의 전문 국영상점이 존재했다. 그러나 1990년대 국가공급 붕괴 이후 상점 운영이 어려워지자, 돈 많은 개인들이 국영기업소의 이름을 빌려 장사를 하게 됐다. 이어 국가 부문이나 외화벌이 기업들도 국영상점을 열어 돈벌이에 나섰다. 따라서 최근에는 종합시장과 큰 차이가 없다고 내부 소식통들은 설명했다. 국영상점이 얻는 그 이윤은 개인, 관리 기관, 국가 부문이 공동으로 분배한다. 특히 기업이나 기관 단위에서 상점을 설치하고, 실제로는 개인이 운영하게 하여 상점 사용료를 받는 방식도 늘어났다. 8.3 제품을 주로 판매하겠다는 아이디어로 시작된 직매점 역시 비슷한 운영방식이다.

평양1백화점 등에서 일부 상품이 국정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지만, 이 역시 시장 가격을 고려하고 있다. 대부분의 대형 판매점들은 사실상 시장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한다. 다만, 대형 판매점의 경우 건설 초기부터 일정한 규모의 자금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무역회사들의 투자를 받는 경우도 있다. 중국 자본이 직접 투자하는 방식의 합작도 이뤄진다. 국가나 지

방 인민위원회 차원에서 시설을 현대화하고, 중국에서 물품을 수입해서 직접 판매하는 방식이다. 지방에서는 개별 상인에게 임대, 혹은 위탁하는 방법도 이용된다. 평양의 <광복거리상업중심>은 일종의 대형 마트로 초대형 국영상점이라고 볼 수 있다(NK투자개발, 2021b, p.15). 판매되는 상품의 상당 부분이 중국산 수입품이다. 채소나 수산물 등 신선식품 일부가 북한산이라고 전해진다.

### (2) 소비재 시장의 발달과 소비수준의 변화

김정은 시대에 와서 북한 가계의 소비수준이 크게 높아졌다는 것이 북한 내부소식의 공통적인 분석이다(NK투자개발, 2021a, p.9). 물론 이런 추론이 북한 내부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배제하는 건 아니다. 식(食) 생활과 의(衣)생활에서의 변화뿐 아니라 주거와 관련한 소비도 크게 달라졌다. TV, 전기밥솥, 가스레인지 등의 보급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북한 주민들도 집 내부를 꾸미는 인테리어나 고급 가구에 관심이 많다고 한다. 바닥용 장판, 도배지 등 중국산 인테리어 제품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한편, 종합시장을 선두로 하는 소비재 시장의 발달은 새로운 일자리와 소득 증가 기회를 제공했다. 소비재 시장은 새로운 공급과 수요를 유발하며 많은 사람이 다양한 돈벌이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북한의 실질 고용 증가는 소비재 시장에서 시작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

### (3) 소비재 시장의 파급효과

소비재 시장의 발달은 다른 시장 부문의 발달도 촉진 시켰다.

첫째, 소비재 시장의 발달은 단지 '소비'를 증가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

고, 개인의 '생산'과 '소득'을 동시에 증가시켰다. 개인이 집에서 식료품을 만들어 파는 형태에서부터 신발이나 빗과 같은 소소한 생활필수품을 만들어 파는 가내 수공업까지 고루 발달했다. 이제는 국영기업의 제약회사와 연계된 개인이 의약품을 생산하는 경우도 있다. 가구는 중국에서 수입되는 것도 있으나 개인들이 제작하는 것도 널리 팔리고 있다. 가내 수공업의 발달로 인해 집을 개조하여 작은 설비를 들이고 사람을 고용하는 공장제 수공업도 등장했다. 빵과 같은 소비재를 생산해 내는 개인도 늘어난 것이다.

둘째, 소비재 시장의 발달은 국영 공장기업소의 생산도 증가시켰다. 예를 들어 벽돌을 생산하는 국영공장은 벽돌을 만들어 시장에 판매하고 있는데, 이는 개인 도매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기존의 공장 시설과 노동력을 이용하여 개인들로부터 주문받은 기계를 생산하여 남은 이윤으로 소속 노동자들의 월급을 지급하는 공장기업소도 늘어나고 있다. 소비재 시장의 발달이 국영기업소의 실질적인 고용을 증가시키고 효과로 이어졌다.

셋째, 소비재 시장의 발달은 노동시장, 자본시장, 부동산 시장 등 생산요소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다. 아무리 개인 생산이라 하더라도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사람을 고용하고, 설비를 늘리는 것이 필수가 된다. 더 많은 생산을 위한 자금을 돈주에게 빌리기도 한다. 소비재 시장 수요는 생산요소 시장의 발달을 촉진하는 것이다.

넷째, 소비재 시장의 발달은 서비스 시장의 발달과 관계가 깊다. 소비재는 유통이 필수이므로 소비재 생산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유통망 확대를 부른다. 유통의 요지에 도매시장이 생겨나고, 도매 시장은 지역 소매시장의 공급지가 된다. 이런 방식으로 생산과 유통의 분화되어 유통과 관련한 다양한 직업이 등장했다. 북한의 유통을 상징하는 키워드는 바로

‘찌비차’이다. 찌비차로 사람과 물류의 이동이 증가했으며, 이는 동시에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의 수요도 불러일으켰다.

## 나. 서비스 시장의 발달과 가계 소득 증가

### (1) 서비스 시장의 현황

북한은 서비스 역시 국가에서 공급하거나 지역 인민위원회에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편의봉사법 제11조). 서비스가 국가공급 대상이므로 그 가격은 실제 무상이거나 무상에 가까운 수준 제공되는 되는 것이 기본이다. 그러나 1990년대 국가공급 붕괴로 인해 국방과 치안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서비스 부문에서 국가투자가 급감했다. 국가투자가 부실하니 서비스의 질과 양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전락했다. 그 결과 2000년대부터 종합시장을 거점으로 하는 민간 서비스 공급이 늘어났다.

종합시장의 등장으로 사람과 물류를 이동시키는데 필요한 서비스가 수요를 등장했으며, 이는 자본이나 기술이 부족한 개인들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졌다. 서비스 분야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개인들의 소득이 조금씩 상승했고, 개인 소득의 증가는 미용이나 재봉 등 개인형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확대시켰다.

서비스 분야의 돈벌이가 잘 된다는 믿음이 확산되면서 서비스 분야에 대한 투자도 늘어났다. 국영 부문이 독점하고 있는 영업권을 개인들이 활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자기가 번 돈으로 투자를 하거나, 남의 돈을 빌려 투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서비스업을 시작했다. 특히 개인이 사업자 등록 등 공식적으로 자영업할 수 없다는 점에서 광범위한 뇌물 문화가 확산됐다. 북한의 뇌물문화는 소비재 시장보다 서비스 시장에 굳건하게

자리하고 있다. 소비재 유통은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공급을 민간이 대신한다는 정치적 명분을 갖기 때문에 처음부터 강력한 통제 분야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서비스 분야는 언제든지 자영업화 될 수 있다는 성격 때문에 ‘반사회주의’라는 명목으로 배척되던 분야였다. 따라서 초기 서비스 시장은 뇌물로 작동되는 경향이 강했고, 이런 분위기는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뇌물문화는 공식소득에 대한 의존성이 높았던 북한의 간부층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주로 국가보위성이나 인민보안성과 같은 사법 영역의 간부들이 뇌물을 챙겨왔는데, 폭넓게 서비스 시장이 발달함으로써 행정 간부들까지 일종의 인허가 권한을 활용한 뇌물 챙기기에 나설 수 있게 된 것이다.

## (2) 개인 서비스업의 발달

북한 당국은 명목상으로는 서비스 산업을 여전히 국가에서 공급하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자금력과 운영 능력을 갖춘 개인이 돈벌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획득된 수익의 일부를 국가 부문이 흡수하는 형식이다. 김정은 시대에는 민간이 주도하는 서비스 공급망의 확대가 북한 체제 유지에 불안 요소가 아니라는 경험적 판단이 강화되면서, 서비스 시장에 대한 국가 통제가 느슨해진 측면도 있다. 시장 활동 참여자들은 이제 뇌물을 ‘세금’으로 인지하고 있으며, 비용으로 가격에 반영되고 있다. 예를 들어 씨비차에 뇌물이 광범위해 지다보니, 북한 전역에 일종의 ‘시장 가격’이 형성된 것이다. 일반주민들은 이동시 간부들에게 바치는 뇌물을 ‘교통비용’의 일부로 생각한다.

김정은 시대에는 국영상점의 변화가 돋보인다. 1990년대까지 개인이 공식적으로 영업활동을 벌일만한 시설이 마땅치 않았다. 2000년대 종합시장 등장으로 개인이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조선민주

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상업법 제86조). 종합시장 매대는 북한 최초로 자영업 공간이 합법화되었다는 의미가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많은 자본과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개인들의 요구까지 완전히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었다. 돈 많은 개인들은 도매거래, 무역 거래 등과 더불어 국영상점에 진출하는 경우도 있었다. 국영 부문에 뇌물을 주거나 이익금의 일정액을 상납하는 것을 약속하고 국영상점의 영업권을 얻는 방식이다. 국영상점은 본래 설치 목적에 따라 국영 생산 부문 혹은 국영기업소 산하의 분점, 직매점, 수매점 등의 기능을 갖고 있었으나, 점차 판매하는 품목이 변화했다. 가격 역시 종합시장 가격에 맞춰졌다. 국영상점 영업권을 얻는 개인들은 종합시장 상인들과 경쟁하면서 시장 논리에 따라 영업하고 있는 것이다.

### (3) 국영서비스 분야의 발달

서비스 시장에서의 개인참여가 폭증하면서 서비스의 방식도 분화했다. 첫째, 기존의 국영 편의 봉사 영역에 제공되던 서비스를 개인들이 대신 공급하여 사적으로 돈을 버는 경우이다. 세차장, 주요소, 자동차 수리점 등은 시장원리로 운영되어 개인 고용 및 소득에 기여하고 있다. 둘째, 국영기업이나 국가기관이 주민에게 무상 혹은 국정 가격으로 공급하던 서비스를 개인이 제공하고 사적으로 돈을 버는 경우이다. 써비차가 대표적이다. 셋째, 과거 북한에 공식부문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서비스로 개인이 돈을 버는 경우이다. 오토바이로 사람을 태워주거나 자동차로 짐을 운반해주는 영업은 국영 부문에도 존재하지 않았던 서비스이다.

국영 편의 봉사 부문에 소속된 서비스 노동자들은 사업소를 통해 국가에 납부해야 할 금액을 할당받는다. 그 할당을 채우고 나면 나머지 수입은 모두 자기 몫으로 남는다(NK투자개발, 2021b, p.5). 과거 국정 가격

으로 공급되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돈을 버는 개인은 인허가 및 영업 유지와 관련된 뇌물, 세금 등을 제외하고 자기 몫을 챙길 수 있다. 과거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서비스로 돈을 버는 개인은 이윤의 대부분이 자기 몫으로 챙길 수 있다.

#### (4) 서비스업의 발달과 가계 소득 증가

서비스업의 개인화는 다양한 형태의 돈벌이와 직업을 창출했다. 자동차/오토바이/자전거 등 이동 수단과 관련한 유지보수 및 수리, 의류수선, 이미용 및 건강 서비스 등이 활발해졌다. 시장화에 따라 전반적으로 서비스 공급이 확대되는 가운데, 수리나 유지보수, 미용, 재봉 등 국가에 의해서 공급되던 서비스업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 다. 노동시장의 발달과 가계 소득 증가

#### (1) 노동시장의 형성과 발달

북한은 정권 수립 직후부터 개인의 노동을 강력하게 통제했다. 개인의 노동은 모두 사회적 노동으로 해석되어 집단과 국가의 통제대상이었다. 개인 입장에서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한됐고, 사회적으로는 노동시장에 대한 수요가 차단됐다. 그러나 1990년대 국가공급 붕괴로 인해 노동 부문에도 상당한 변화가 시작됐다. 국가의 노동 통제는 국가공급에서 당위성이 유지될 수 있다. 국가가 공급에 대한 약속과 책임을 이행하지 않게 되면서 개인은 비로소 자신의 노동력을 자신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활용하게 됐다. 소속 직장을 벗어나 개인 노동을 제공하지 않고서는 생존 자체가 불투명했다. 개인 소토지 농사, 소매 장사, 서비스업 진출 등은 모두

개인의 생존을 위한 자구책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노동시장의 형성과 노동 공급의 기본 조건으로 무르익게 됐다.

종합시장의 발달과 시장화 흐름에 따라 노동에 대한 새로운 수요도 늘어났다. 시장화에 따라 사(私)경제가 발전하게 되면서 사적 노동이 필요한 분야가 늘어났다. 국경 밀수를 주도하는 무역회사나 화물차를 이용해 장사하는 도매상 등은 모두 개인적으로 사람을 고용했다. 씨비차 운행, 휴대전화기 판매 등 서비스 분야에서도 사적 고용이 늘어났다. 국영 부문의 공식소득에 의존하던 북한 주민들에게는 새로운 돈벌이 기회로 작용했다.

북한은 2000년대까지 정규적인 소득이 거의 없는 실질 실업인구가 매우 많았던 것으로 추정된다(이석, 2016, 4p). 김정은 시대에 시장경제가 확산되면서 이들을 고용하려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사적 노동시장은 급속히 확장됐다. “개인 간 고용은 비사회주의 행위”라며 사회주의 노동 질서를 회복하려 했던 김정일 시대와 달리, 김정은 시대에는 이런 현상들이 폭넓게 용인되는 분위기로 바뀌었다. 노동시장 및 노동에 대한 유연한 대응은 국영 서비스업에서도 발견된다. 과거 북한은 각 부문 집단별로 국가 과제를 할당했다면, 이제는 소속 노동자 개인별로 국가 과제를 부과하는 경우도 등장했다. 노동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만 채우면 나머지 시간에는 자유롭게 돈벌이에 나서 개인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의 노동시장이 유연해지면서 국영 부문의 노동자 처우도 달라졌다. 국영기업소도 생산만 하면 이윤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일종의 숙련공에 대한 수요가 등장한 것이다. 노동시장이 발달은 국영기업소 노동자들의 임금과 처우를 개선하는 데 일조했다.

## (2) 노동 수요와 공급의 변화

김정은 시대 북한에서 사적 노동이 가장 활발한 분야는 바로 무역 부문이다. 무역회사들은 국가로부터 발급받은 무역 워크 기준으로 무역을 수행하는데 대부분은 공식/비공식 무역을 겸업하고 있다. 무역회사들은 무역 자체에 대한 허가권만 갖고 있을 뿐, 국영기업소처럼 국가로부터 원부자재나 노동력을 공급받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무역회사들은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여 이윤을 내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NK투자개발, 2021b, p.28). 무역회사들은 기존의 국영기업소 생산을 이용하거나 자체로 새로운 생산을 하청 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다양한 고용이 일어났다. 무역 상품을 싣고 내리는 상하차 노동, 광물 수출을 위한 광산 노동, 수산물 수출을 위한 어업 노동 등에서 새로운 노동 수요가 발생했다.

교통/물류 분야에서도 노동 수요는 증가했다. 일단 화물차, 버스 등 이동 수단들이 증가하며 이를 운행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졌다. 특히 자동차를 실제 소유하거나, 자동차를 다루고 정비하는 사람들이 각광을 받게 되었다. 돈주, 운전사, 차장, 정비공 등 다양한 직종이 등장했다. 뿐만 아니라 주차장, 세차장, 주유소, 식당 등에서도 새로운 서비스 노동자를 요구하게 됐다. 운수업은 최근 북한 남성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직종으로 꼽힌다. 소속 조직 생활 압박을 덜 받고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을 얻기 때문이다. 뇌물을 통해 얼마든지 운전면허증, 운행허가증 등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직종과 관련한 제도적 장벽도 낮은 편이다.

국영기업소에 소속된 노동자들도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했다. 특히 중앙으로부터 생산량 압박이 덜한 지방 경제 소속 기업소 노동자들이 사적인 노동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진출했다. 북한 돈 5,000원 전후의 명목 임금만으로는 생계를 꾸려 나갈 수 없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가장 흔

한 형태는 '8.3 노동'이다. 노동자가 일정한 금액을 소속 기업소에 납부하고, 출근 의무를 면제받는 관행이다. 8.3 노동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납부하고 출근을 하지 않은 채 개인적으로 돈벌이를 하는 '정액 납부' 형식이다. 두 번째는 평소에는 출근을 하다가 개인적인 돈벌이 기회가 생길 때마다 결근하는 방식이다. 결근 기간에 따른 돈을 소속 기업소에 바친다. 마지막으로 '문서만 소속된' 형식이 있다. 원래는 그 기업소 소속이 아니었으나 자동차 등 운송 수단을 소유했거나, 중국에 유력한 무역파트너를 알고 있다는 등의 특수한 조건을 갖춘 사람은 기업소에 적(籍)을 둘 수 있다. 평소에는 자유롭게 개인 활동을 하다가 기업소가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이를 해결해주는 방식으로 기업소에 기여하는 것이다.

### (3) 노동시장의 파급효과

노동시장의 형성과 발달은 비효율적인 국영기업에 묶여 있던 노동자들이 보다 생산성이 높은 직종으로 진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공식 소득에 비해 비공식 소득의 크기와 기회가 월등하다는 점이 노동시장 이동의 핵심 동력이다. 노동시장이 유연해지면서 해당 노동에 대한 시장평가가 높아졌으며, 다양한 소득 계층이 등장하게 되었다.

## 라. 사금융 시장 발달과 가계 소득 증가

### (1) 사금융 시장의 현황과 성격

북한 시장화 현상 중에서 금융·외환 부문을 하나의 독립된 '시장'으로 설정하는 것은 여전히 논쟁적이다. 첫째, 북한에는 국영은행에서 금융·외

환이 거래하고 있지만, 실제 북한 주민들의 이용률이 극히 낮다. 조선중앙은행을 비롯한 여러 개의 국영은행이 존재하지만, 개인 혹은 국영기업이 은행을 통한 저축, 대출, 송금 등의 서비스를 거의 이용하고 있지 않다. 둘째, 북한에는 아직까지 자산거래 시장이 확립되지 않았다. 개인 간 주택 거래는 공식적으로 불법이며, 금과 같은 유색금속 자산은 개인소유가 금지되고 있다. 셋째, 개인 간의 금융 거래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제도나 법률에 의해 개인들의 금융 거래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하면 금융시장을 북한 경제의 한 부분으로 선정하기에 무리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가계 소득과 지출을 살피는 데 있어서 사금융 부문을 빼놓을 수 없다.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행위는 북한 시장화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회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는 개인의 소득 뿐 아니라 자산 축적 과정을 추정하는 기초가 된다.

## (2) 사금융 거래 현황

김정은 시대에 상거래와 영업활동이 늘어나면서 개인의 창업이 늘어났다. 창업 과정에서 반드시 자본이 필요한데, 개인 간 돈을 빌려주거나 일정 지분을 투자하는 방법으로 자본 조달이 이뤄진다. 장사를 시작하려면 밑천이 있어야 하며, 수레로 짐을 운반해주며 돈을 빌려면 수레가 필요하고, 오토바이로 사람을 태워주는 장사를 하려면 오토바이가 필요하다. 장사를 좀 크게 하려면 사람을 고용해야 한다. 이런 사업비용 혹은 창업비용과 관련한 자금 수요는 거의 대부분 ‘개인 대 개인’ 간 금융 거래를 통해 해결된다(NK투자개발, 2021a, p.14).

국영기업소나 협동농장에서도 개인에게 돈을 빌린다. 즉 돈주에게 돈을 빌려 이자와 함께 현금으로 상환하거나, 생산물로 현물 상환하는 방법이 있다. 국가 부문에서 아파트 건설 사업을 벌이면 돈주에게 자금을 조

달하고, 완공된 아파트로 상환하는 방식도 있다. 돈주의 입장에서는 현금이라는 유동성 자산을 아파트라는 부동산 자산으로 바꾸는 과정으로 이윤과 자산을 축적한다.

### (3) 돈주(錢主)

김정은 시대에 북한의 시장화가 활발해지면서 돈주의 역할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북한 주민들이 지칭하는 “돈주”는 그 개념이 매우 포괄적이다. 일반 주민들은 자기보다 자산이 많거나 현금 동원력이 높은 사람을 ‘돈주’라고 부르는 걸로 추정된다(NK투자개발, 2021a, p.15). 돈주의 등장은 90년대말~200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주로 써비차를 운영하거나 혹은 도매 장사 등 개인 대부업으로 돈을 벌었다. 당시에는 북한의 경제 성장이 미비했으며, 소비재 시장은 이제 막 확대되는 시점이었고, 중국과 무역은 여전히 제한적이었다. 특히 김정일은 시장화 현상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따라서 돈주가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아직 형성되지 못했다.

그러나 김정은 시대에 돈주의 돈벌이 규모가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첫째, 김정은 시대에는 종합시장에 대한 통제가 감소하면서 상품거래가 늘어나고 서비스 제공이 활성화됐다. 둘째, 원거리 물류 이동에 대한 통제가 사라지면서 북한 내부의 물류 이동이 많이 증가했다. 셋째, 중국제품에 대한 수입 통제가 완화되면서 소비재뿐 아니라 중간재, 자본재에 대한 수입량이 증가했다. 돈주들의 돈벌이 대상이 늘어난 것이다.

최근 돈주의 행보에서 주목할 점은 ‘자금 유통’과 ‘자산 축적’ 측면이다. 김정일 시대까지 돈주의 본질은 장사였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다. 그러다가 김정은 시대에는 돈주이 생산 및 서비스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돈주가 제공하는 자금은 개인뿐 아니라 국영기업소의

생산에서도 큰 영향을 미친다.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는 데도 일조한다. 한편, 돈주는 주택이나 달러/위안화 등 외화로 자산을 축적한다. 돈주에게 자산 축적 기회가 열리고 있다는 것은 자본의 집중과 집적이 가능해짐을 의미한다. 향후에도 북한의 금융시장 성장이 점쳐지는 대목이다. 다만, 북한 제도가 여전히 사적소유를 법적으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돈주를 완전한 자본가로 설명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김정은에 대한 충성경쟁과 이권 다툼이 만연해 있는 북한에서 고위 간부들의 숙청에 여일 위험도 많다.

간부들이 일반 주민들에 비해 돈을 모을 가능성과 기회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은 분명하지만, 간부 계층에서 돈주가 출현했다고 볼 수는 없다. 김정은 시대에는 노동당 간부들이 공개적으로 장사에 나서기에는 당의 기강잡기 분위기가 너무나 강력하다. 간부들은 이권이 있는 사업에 개입하여 직접 뇌물을 받던가, 아니면 국가 계획 추진 및 충성자금 조성 과정에서 '자기 뭇'을 착복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무역회사 간부라고 해서 자동으로 돈주가 되는 것은 아니다. 무역회사 간부는 다른 정치/군사/행정 부문의 간부들에 비해 국가지표 달성과 관련한 압박이 더 높다. 장사에 크게 한번 성공한다고 해서 그 이익 모두를 차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무역회사 간부들은 스스로 자본금이나 원자재를 확보해야 외화를 벌수 있다. 국가에서 보장되는 것은 중국 진출 허가나 '무역워크'와 같은 행정조치 정도다. 무역 간부들이 익숙한 선택은 믿을 만한 돈주와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무역회사 간부들은 돈주의 투자를 받고 무역을 진행하고, 관련 이익을 돈주와 분배한다.

간부의 배우자나 친인척이 돈주로 성장하는 사례는 많다고 전해진다. 북한에서 장사로 큰돈을 벌기 위해서는 ▲사법기관의 단속이나 통제를 회피할 수 있는 권력 ▲국가정책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정보력 ▲중국

과 북한 내부를 연결하는데 동원할 수 있는 인맥 등을 갖고 있어야 한다. 배우자나 친인척이 간부라면 당연히 적극적인 보호와 편의를 제공받게 된다.

돈주의 출신성분을 따져보면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계층이 바로 화교(華僑)이다. 조선족 포함 중국 국적자 상당수가 문화대혁명 기간 북한에 정착했다. 중국인민해방군으로 한국 전쟁에 참전했다가 북한에 잔류한 중국인도 소수가 있다. 이들은 북한군 입대, 대학진학, 노동당 입당 등이 제한된다. 그런데 1990년대 국가공급 붕괴 이후 이들의 출신성분이 오히려 돈벌이에 유리해졌다. 북한 당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화교나 화교 자손의 중국 방문을 연간 2회 정도 허용하고 있다(NK투자개발, 2021c, p.19). 이들은 중국의 친척으로부터 현금 현물 도움을 받거나 돈벌이를 할 수 있었다. 다만 COVID-19 발생 이후에는 이들 역사의 출입국이 통제되고 있다.

화교 신분은 북한 내부에서도 일정한 이익이 있다. 첫째, 화교들은 중국 친척과 국제전화와 국제 편지 등의 교류가 가능했다. 둘째, 합법적으로 중국을 방문할 수 있는 화교들은 국경 도시들에 대한 접근 또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일반주민들에 비해 엄청난 '이동의 자유'를 오래전부터 누려 왔다. 셋째, 북한 사회에 주류 계층에 편입될 수는 없었지만, 역으로 일정한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었다. 특히 '직장 출근 의무'에서 사실상 배제됐다. 결국 북한 사회의 의도적인 배제와 무관심이 오히려 화교의 경제 활동 자유로 이어진 것이다.

2000년대부터 무역, 외화벌이, 대외합작 등 중국이라는 배경을 활용하라는 국가정책들이 제시됨에 따라 간부들 사이에서 화교의 몸값이 더욱 높아졌다. 화교가 누렸던 특수는 약 10만 명에 이르는 일본인 귀국자들과 극단적으로 비교된다. 일본인 귀국자들은 고향 친척방문이 일절 허용되

지 않았으며, 자본주의를 체험했다는 이유로 오히려 일반 주민들보다 더한 통제에 시달려야 했다.

#### (4) 화폐와 이자

시장거래에서 많이 사용되는 화폐는 북한 원화가 아니라 위안화와 달러이다. 김정은 시대에 북중무역 증가로 위안화 사용범위가 커졌다. 종합 시장 물건 가격은 위안화로 표기되는 경우가 많아졌으며, 1위안, 2위안, 5위안 등 소액 화폐도 흔히 통용되고 있다. 달러의 경우 주로 10달러, 20달러, 50달러, 100달러 정도만 유통되는 것과 차이가 크다.

개인적으로 돈을 빌리는 경우 사금융에서 그 이자는 일정하지 않다. 돈을 빌리려는 주체의 경제력, 담보물의 가치, 사업 아이템, 기간에 따라 이자가 정해진다. 개인 사금융이 발전하면서 김정은 시대에 와서는 연 이자율이 대략 25~40%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NK투자개발, 2021a, p.16). 북한에서 1년 이상 장기 대부는 흔치 않다고 한다. 아주 친하고 신용이 높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1년 이상 돈을 빌려주는 경우는 드물다. 북한의 시장이자율이 높은 것은 대부 자금이 대부분 단기성이기 때문이다.

#### (5) 사금융 시장의 경제적 파급효과

북한의 사금융은 생산재, 소비재, 노동, 서비스 시장의 발전을 촉진하고 있다. 사금융이 공장이나 협동농장에 유입됨으로서 이들의 생산도 증가하는 효과도 가져왔다. 생산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 고용이 늘어나는 효과도 있다. 국가에서는 명목상 ‘고리대업’을 범죄로 간주하고 있지만, 돈주 자체에 대한 처벌이나 사회적 배제는 시도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내부속통에 따르면 국가사업에 돈을 투자하는 돈주는 운이 좋

은 경우에 김정은 표창도 받을 수 있다고 전해진다(NK투자개발, 2021a, p.17).

## 마. 부동산 시장의 발달과 가계 소득의 증가

### (1) 부동산시장의 발달 과정

원칙적으로 북한에서는 주택을 팔고 사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 제146조). 모든 부동산은 국가 소유이며, 개인이나 기업은 ‘이용권’만 보장받는다. 심지어 부동산을 빌려주는 것도 금지 사항으로, 이용하지 않는 부동산은 국가에 반납하는 것이 기본이다. 북한 당국은 1980년대부터 각 기관이나 기업소가 자체적으로 주택을 지어 노동자들에게 배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1990년대 국가공급이 붕괴하고 기관/기업소의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신규 주택 공급이 대폭 감소하게 된다. 2000년대부터 경제가 회복되자 돈주 등 자산을 축적하는 개인이 신규 주택 수요자로 등장했다. 좋은 입지에 좋은 시설을 갖춘 주택을 보유할 경우, 장사에도 도움이 되고 삶의 질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2000년대 초반까지 북한의 주택거래는 개인이 주택구조만을 변경해서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수준에 머물렀다.

그런데 2000년대 후반부터 김정일의 지시로 신규 주택 건설이 국가 차원에 추진됐다. 신규 주택 건설은 그 소유와 사용 방식과 무관하게, 인민들의 생활수준이 개선되는 것으로 해석되었으며, 최종에는 최고지도자의 치적으로 활용됐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개인이 신규 주택을 짓고, 돈주는 국가 주택 건설 사업에 자금을 대는 방식이 확산됐다. 신규 주택 건설 및 기존 주택 보수가 활발해지면서 개인 간 주택 거래, 혹은 주택 교환이 활성화됐다.

김정은 시대에는 국가기관의 명의를 빌려 신규 주택을 건설하여 개인에게 분양·판매하는 수준으로까지 발전했다(NK투자개발, 2021b, p.45). 주택 이외에도 종합시장의 매대, 탄광, 광산 등 생산기지까지 다양한 부동산에 대한 실질 사용권이 거래된다고 한다. 부동산 시장은 건설 관련 신규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다양한 원부자재 수요라는 파급효과를 불러온다.

## (2) 주택의 시장 가격

주택 등 부동산의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은 크게 입지와 사용 편의성으로 나뉘 볼 수 있다. 입지와 관련해 중요하게 평가되는 부분은 ▲종합시장 등 상권 ▲썬비차, 열차 등 대중교통 편의성 ▲기반시설과 인접성 학교나 행정기관 등과의 인접성 등이 꼽힌다. 사용 편의성으로는 ▲주택의 크기 ▲내장재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부업에 활용할 수 있는 추가 공간 등에 따라 가치가 평가된다. 주택의 경우 입지와 사용 편의성에 따라 집약 효과가 발생하고 있는데, 거주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에 따라 ‘간부동네’ ‘부자동네’ ‘노동자동네’ 등으로 구별되고 있다. 신규 주택을 구입하거나 기존 주택을 개보수할 정도면 어느 정도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평가된다.

## (3) 신규 주택의 건설 과정

북한은 모든 경제활동을 국가계획에 따라 추진하기 때문에 주택 건설 역시 국가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 원칙이다. 모든 행정단위에는 ‘도시계획’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과 부서가 존재하며 여기에서 해당 건설과 분양 계획을 집행한다. 그러나 국가 계획보다 앞서는 것이 최고지도자의

지시와 의지이다. 최고지도자가 건설을 지시한 평양시 중구역이나 만경대구역 등의 신규 아파트는 분양과 관련해서 지역 인민위원회나 국영기업소가 개입하지 못한다. 이런 곳은 주로 체제 충성계층의 사람들에게만 주택이 배정된다. 김정은 집권 이후에는 창전거리아파트, 은하과학자거리 아파트, 미래과학자거리 아파트 등이 체제선전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관이나 기업소도 주택 건설 계획을 추진할 수 있다. 기관이나 기업소에서 주택을 짓는다고 계획하면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들은 주로 자기 자본이 어느 정도 있고 간부들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다. 기관 기업소가 주도하는 주택 건설에서는 자금의 대부분을 돈주 등 개인이 투자한다. 개인이 승강이 1대와 관련한 자재나 비용을 제공하면 완성된 아파트 1채를 분양해주는 식이다. “시멘트 5톤을 보장하면 아파트 1채를 내 준다”는 식의 거래도 이뤄진다. 김정은 시대에는 현물이 아니라 현금을 받고 새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가 더 많아졌다고 한다. 현금만 있으면 다양한 건설 자재를 종합시장에서 조달하거나 중국에서 수입해올 수 있기 때문이다. 완공된 신규 주택의 일부는 국가에 바친다. 이런 주택은 최고지도자의 선물 명목으로 누군가에게 분양되기도 한다. 기관이나 기업소 입장에서는 인민들에게 신규 주택을 건설한다는 것 자체가 국가 앞에 내세울 수 있는 ‘자기 성과’가 된다(NK투자개발, 2021b, p.48). 그러면서 주택 건설 사업 자체에서 이익을 남기기도 한다. 현금투자가 많을수록 최종 이익도 늘어나게 된다.

지방 도시에서는 기관 기업소를 중심으로 개인들이 공동 투자하는 주택 건설도 추진되고 있다. 개인들이 돈을 모아 주택을 건설하고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팔아 이윤을 분배하는 것이다. 공동 자금으로 단층집 여러 채를 구매해 단층집을 허물고 그곳에 5~6층짜리 아파트를 세우는 전형적인 ‘재건축 사업’이다. 아파트 1층은 주로 상점용 공간을 배치하는데 이

는 전형적인 중국식 건축 방법이다. 현재 (주)NK투자개발이 보유하고 있는 북한 주택 내부 사진에서도 중국식 건축 방법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주택 건설 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법적 절차는 해당 인민위원회 간부들이나 사법기관 간부들에게 뇌물을 주는 방식으로 해결한다.

#### (4) 주택시장 발달의 파급효과

주택시장 발달은 건설업을 촉진 시킬 뿐 아니라 개인들의 자산 축적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건설업이 발달하면 새로운 일자리와 소득 효과가 발생한다. 주택 건설 자체는 새로운 원부자재 수요를 키운다. 최종적으로 주택을 사고파는 것은 자산 축적으로 효과도 있다. 주택 자산은 사금융에서 담보력을 높이는 효과로 이어져 상대적으로 더 큰 사적 자본 유통을 촉진하게 된다.

### 제3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북한 상황의 변화

#### 1. 북한 당국의 COVID-19 대응

##### 가. 국경통제

북한은 비교적 초기에 국경을 폐쇄하는 등 신속하게 COVID-19 상황에 대응했다. 2020년 1월 22일부터 외국인 입국을 전면 중단하고, 모든 국경 통로를 닫고, 남북연락사무소까지 폐쇄했다. 범 내각 조직인 중앙보건인민위원회를 중심으로 국가비상방역체제로 전환하여, 지방인민위원회 별로 비상방역지휘부를 조직했다. 국가차원에서 자원과 물자 공급을

총괄 지도하는 국가계획위원회가 중앙보건인민위원회 실무를 담당했다(정빛나, 2020.2.9.). 내각 보건성 산하 감염병 관리 책임부서인 국가위생검열원과 국가전염병감시센터가 방역의 일선 감시를 맡았다.

북한은 2020년 1월 25일 전면적인 국경봉쇄조치를 단행했다(NK투자개발, 2021c, p.70). 1월 28일부로 신의주 세관 업무가 공식 중단했다. 평양을 출발하여 단둥, 심양을 거쳐 베이징에 도착하는 국제열차와 평양과 단둥 사이를 운행하는 국제열차 모두 운행을 멈췄다. 화물만 운반하는 국제열차는 2020년 3월 초부터 간간히 운행을 시작했다. 신의주 소식통에 따르면 단둥에서 출발해서 평양에 도착하는 국제열차는 오직 화물만 싣고 운행했다. 그러나 3월 말부터 세계적으로 COVID-19 감염자가 폭증하자 북한도 중국으로 물자 반입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수산사업소 소속 선박에 대한 조업도 제한됐다. 신의주 소식통은 “2020년 6월부터 통제가 풀려서 동립 수산사업소에서는 위생원들이 일일이 일꾼들의 체온을 확인하고야 바다에 나가게 했다.”고 말했다. 다만, 조업 이후에 중국에 직접 수산물을 판매하는 것은 더욱 엄격하게 통제됐다. 중국 측과 접촉 과정에서 바이러스 감염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였다.

국경에서 들어오는 물자는 모두 10일간 검역기간을 두었고, 지역 간 이동에서도 검역이 강화됐다(박수윤, 2020.2.23.). 도·시·군 경계점과 인적 이동이 많은 도로 요충지마다 설치되어 있는 ‘10호 초소’ 등 검열 초소에서 유동 인구를 차단하고 발열 증상을 확인했다.

2020년 7월 19일 재입북 탈북자 김 모 씨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개성에 들어가면서 북한은 김 씨를 철저히 격리하고 개성시에서 김 씨와 접촉한 모든 대상과 경유지들을 모두 조사하고 검진·격리했다(문동희, 2020.7.26.). 7월 24일 오후부터 개성시 전체를 완전히 봉쇄했고 개성 시내 지역별 봉쇄를 이어갔다. 8월 13일에는 개성시 봉쇄조치 해제가 결

정됐다. 그러나 전국차원에서 국경봉쇄를 유지하고 외부 지원을 금지하는 강경한 조치가 추가됐다.

2021년 북한은 1월 5일부터 12일까지 평양에서 제8차 <당 대회>를 개최했다(김정근, 2021.1.13.). 2월 16일 김정일 생일을 맞아 각종 행사가 북한 전역에서 열렸다. 4월 6일 평양에서는 <노동당 제6차 세포비서 대회>가 열렸다(김서연, 2021.4.7.). 이어 4월 27일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제10차 대회가 평양에서 개최됐다(김서연, 2021.4.29.). 김정은은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수천 명의 참가자가 마스크를 쓰고 참석했다.

## 나. 수입 통제와 검역

북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에서 COVID-19 발생했던 초기부터 북한은 물건에 바이러스가 묻어 사람에게 전염될 가능성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했던 걸로 보인다(NK투자개발, 2021c, p.72). 그 밖에 식수와 공기를 통한 전염, 야생 동물을 통한 전염 등에도 심각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북한 당국은 철도, 화물차, 선박 등을 통해 중국에 반입되는 물자에 COVID-19 바이러스가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로 세관을 통과한 모든 물품을 노상에서 2주 동안 방역소독을 마친 후에 국내로 유통하는 한편 수입 물자에 대한 소독을 지속적으로 독려했다.

중국에서 반입되는 수입 물자는 교두와 항마다 설치된 세관 창고나 검역소 창고에 2주 이상 보관하고, 매일 내용물을 지속적으로 소독하도록 했다. 2021년 2월부터는 신의주 국경 세관에 대형 소독장비가 설치되는 것이 목격됐다(NK투자개발, 2021c, p.72). 신의주 소식통은 “교두 세관 앞마당에 대형 소독장이 설치됐다.”고 전했다. 소독장 설비는 중국에서 신의주 세관으로 들어오는 화물차와 적재된 화물을 한 번에 소독할 수 있

는 장비로 추정된다. 해산 소식통에 따르면 해산 교두 세관에도 소독 장비가 설치됐다. 무산 소식통과 평성 소식통에 따르면 청진, 흥남, 송림, 남포 등에 있는 항구들에도 화물차와 컨테이너를 소독할 수 있는 대형 소독장비가 설치됐다.

평양 소식통은 “국가 방역사업 때문에 외국 수입품 유통이 크게 줄어들긴 했지만, 남포항을 통해 간간히 수입품이 들어왔다.”고 말했다. 두만강 국경 지역에서는 공식적인 북중 무역은 차단되고 있으나, 일부 물동량은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021년 1월 말에 두만강 국경 교두를 모두 폐쇄하라는 조치가 별도로 내려왔던 사례로 보면 회령, 셋별 등지에서는 소규모 밀무역이 이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 다. 주민 이동 및 물류 통제

아직까지 북한 당국은 주민의 국내 이동을 전면 통제할 적은 없다. 그러나 국경 지역 등 의심증상자가 출현할 경우 특정 지역에 대한 일시적인 봉쇄와 해제를 지시해왔다. 전체적으로 지역 간 이동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와 소독을 반드시 확인하는 방향으로 내부를 관리했다. 주민들의 이동은 눈에 띄게 감소했다고 북한 소식통들은 말했다. 사람의 이동이 줄어들면서 물류의 이동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었다.

북한 내부 이동에서도 국가 통제가 강화됐다. 각 지역 인민위원회와 사회안전부는 자동차 운행증, 여행증명서의 발급 요건을 강화하고, 써비차에 대한 도로 단속에 나섰다. 기존의 10호 초소 뿐 아니라 사회안전부에서 추가 설치한 이동초소에서 사람과 물류 이동에 대한 검사를 강화했다. 특히 북중 국경 지역에 내륙으로 이동하는 사람과 물류에 대한 단속이 엄격해졌다. 검역증명서나 위생방역 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현장 단속을

통해 운행 중지를 결정했다. 위생방역확인서는 써비차 등 이동 수단에 대한 소독 여부와 탑승자의 증상 여부를 입증하는 증명서로, 이동하려는 사람뿐 아니라 이동 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들도 소지해야 했다. 신의주 소식통은 “뇌물로 위생방역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북한 주민들도 가급적 위생방역확인서 없이 이동하길 꺼린다고 한다.

10호 초소 등 주민 이동과 물류를 검사 통제하는 초소들이 늘어나고, 초소에 상주하는 인원들도 보강됐다(NK투자개발, 2021c, p.73). 평성 소식통은 “국가 방역사업이 강화되면서 2020년 가을에 고속도로와 지방 도로에도 초소가 늘었다.”면서 “기존에 있던 초소에도 구들장을 새로 깔고, 석탄과 펄감이 국가 차원에서 공급됐다”고 말했다.

일반주민들의 시내 이동도 크게 감소했다. 북한 당국이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직장폐쇄’나 ‘종합시장폐쇄’를 지시한 적은 없지만, 지역 내에서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수시로 공장과 농장이 휴업에 들어갔으며, 종합시장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개방 시간을 크게 줄였다. 주민들의 이동과 이동 수단의 움직임이 감소하면서 근거리 이동 물류와 장거리 이동 물류도 많이 감소했다. 신의주 소식통은 “일단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뭘 사고팔고 거래할 일도 없고, 상품을 주고받을 일도 크게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 라. 집합 시설 통제와 지역봉쇄

### (1) 종합시장과 편의 봉사 분야

지역봉쇄가 결정됐던, 개성시와 국경 연선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종합시장 자체가 폐쇄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중앙의 결정

에 따라 시기에 따라 최대 일주일 이내로 종합시장이 문을 닫는 경우가 있었다고 양강도 혜산 소식통은 전했다. 북한의 종합시장은 각 지역 상황에 따라 비상방역지휘부의 결정에 따라 운영시간이 정해졌는데, 대체로 하루 개방 시간은 2~4시간 정도로 축소됐다(NK투자개발, 2021c, p.79). 종합시장에 입장하려는 사람들은 시장관리소 간부들과 지역 규찰대로부터 발열 상황, 마스크 착용 등을 확인받고 입장할 수 있었다. 종합시장 내에서는 “2미터 거리두기”가 권장돼 한 라인의 장사꾼들은 격일로 시장에 나가게 조직됐으며, “서로 대화하지 말라”는 지침이 내렸다. 종합시장에 따라 매대에 앉아 장사하는 상인들은 2부제, 3부제로 장사를 하게 했다. 평양 소식통은 “매대를 두 개 혹은 세 개를 한 묶음으로 해서, 오늘은 이 사람이 장사하면 내일은 저 사람이 앉아 장사하도록 했다.”면서 “반드시 옆 매대는 비워두게 했고, 손님에게 물건 팔 때도 대화를 하지 말고 종이에 글자를 써서 가격을 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2020년 이후 북한 종합시장은 운영시간과 참여자, 판매 품목 등에서 많이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산 수입품이 감소함에 따라 거래되는 물품의 종류와 양도 줄어들게 되고, 일부 중국 수입품은 가격이 크게 오르기도 했다. 혜산 소식통은 “지난 2월에 중국산 밀가루, 맛내기, 설탕, 콩기를 등 가격이 크게 올랐는데, 3월부터는 조선산 제품이 풀리면서 다시 가격인 안정된 경우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요즘에 혜산농민 시장에 나가보면, 매대 장사꾼도 절반밖에 없고, 매대에 진열된 물건들도 많지 않다.”고 덧붙였다. 시장 밖 자전거보관소나 써비차 집결 지점 등도 한산한 풍경이라고 한다.

식당, 이용·미용, 가전제품, 의류, 소매점, 주유소, 세차장, 백화점, 대형마트 등 편의봉사 분야에도 특별한 폐쇄조치는 없었다고 북한 내부 소식통들은 말했다(NK투자개발, 2021c, p.79). 편의봉사 분야 시설들은

각 지역 비상방역지휘부의 핵심 방역 대상 중에 하나다. 평양 소식통은 “대부분 국영상점, 백화점, 상업봉사 단위들은 바이러스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운영시간이 크게 줄었다.”고 말했다. 편의봉사 분야는 지역과 시설마다 크고 작은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오후에 문을 열고 일몰 전에는 문을 닫았다고 했다. 업장 종사자들과 이용객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게 했고, 출입과정에서 발열 체크를 의무화 했다. 주민들의 이동이 전반적으로 위축되면서 편의봉사분야에 출입하는 이용객의 숫자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평성 소식통은 “편의봉사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타격이 제일 크다.”면서 “종합시장 매대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동네 사람들에게라도 물건을 팔 수 있는데, 편의봉사 사람들은 자기 노동력으로 먹고 사는 직업이기 때문에 손님이 줄어들면 곧바로 자기 수입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 (2) 공장기업소와 농장

북한 당국은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별도의 직장폐쇄 조치는 내리지 않았다. 평양소식통은 “우리는 어느 직장에서 감염자가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없다.”며 “국가 행사가 있거나 계절적으로 바이러스 유행 가능성이 있다고 할 때 가끔씩 출근하지 말라는 지시는 있었지만, 공장기업소나 협동농장이 폐쇄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무산 소식통도 “중국에 도강했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바이러스를 퍼뜨릴 위험 때문에 가끔 ‘출근하지 말라’는 지시는 있었지만, 직장폐쇄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 (3) 학교

북한 내부 소식통들에 따르면 2020년 2월 20일부터 전국의 학교를 대

상으로 긴급 방학을 결정했다(NK투자개발, 2021c, p.78). 북한 학교의 긴급 방학은 이후 4월 17일까지 연장했는데, 중앙대학, 지방대학, 고급중학교 3학년까지만 계획대로 이날 개학했고, 고급중학교 1·2학년과 초급중학교, 소학교, 유치원, 탁아소는 5월 20일까지 다시 연장됐다. 그러나 다시 6월 1일로 개학이 연기됐다가, 6월 3일에서야 전면 개학이 이뤄졌다. 개학 한 달 만에 북한 당국은 다시 7월 조기 여름방학을 결정했다. 중앙대학의 경우에 8월 10일부터 임시방학을 중단하고 수업을 재개했다. 그러나 나머지 학교들은 9월 10일에야 비로소 가을학기를 시작할 수 있었다.

2021년에도 초급·고급 중학교의 신학기 개학을 당초 3월 초에서 4월 1일로 연기했다. 개학 이후에도 등교는 연기되었으며 약 3주 정도 교사들의 가정방문 수업으로 대체했다. 실제 등교 수업은 4월 26일부터 재개됐다.

## 2. COVID-19 관련 주민 통제

### 가. 주민 교양과 내부 선전

2020년 3월부터 주민 거주지와 직장에서 COVID-19 대응 관련 국가 차원의 선전 선동이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NK투자개발, 2021c, p.75). 내용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소금물 양치 ▲손 씻기 ▲자가 격리 세대 접근 금지 등이었다고 평양 소식통은 말했다. 방역 활동을 강조하는 차량 선전 방송은 각 지역에서 매일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무산 소식통은 “청진, 회령, 무산에서는 각 인민위원회 선전부, 당 선전부에서 합동으로 매일 시내를 돌며 차량 방송을 한다.”고 말했다.

혜산 소식통에 따르면 2020년 5월 중순에 처음으로 개인용

COVID-19 교양 자료집이 일반 주민들에게 가정마다 배포됐다.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폐염증을 철저히 막자> 제목의 자료는 각 가정마다 나누어졌다. COVID-19 증상과 관련해서는 ▲발열 ▲피로감 ▲마른기침 ▲무증상을 꼽았고, 증상이 심각하면 사망에 이른다고 경고했다. 예방으로는 ▲마스크 착용 필수 ▲손 소독 ▲꾸준한 체력 단련 등을 주문했다. 특이한 점은 야생 동물 섭취 금지, 병사한 동물 섭취 금지, 냉동 수산물, 육류, 우유 등을 충분히 끓여 먹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2021년 상반기에 주민들에게 전달된 교양자료에서도 그 내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전체적인 방역 수칙은 2020년 내용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식수는 꼭 끓여 먹을 것 ▲외국에서 들어온 물자를 함부로 만지지 말고 방역수칙대로 소독할 것 ▲야생 동물과 접촉하지 말 것 등 초기 중국에서 유행했던 여러 의혹과 소문들이 반영된 정보들이 여전히 강조되고 있다. 무산 소식통은 “지금도 국경경비대에서는 새나 산짐승을 총 쏘아 죽이고 있다.”고 말했다. 북중 국경에서 처리된 야생동물은 모두 현장에서 불태운다고 한다.

최근 주민 교양에서 가장 강조되는 점은 “사상적 해이”이다. 원산 소식통은 “벌써 1년 넘게 국가방역 교육과 선전이 이어지고 있으니, 이제는 더 특별한 내용이 없다.”면서 “사상적으로 해이되지 말라, 긴장감을 풀면 안 된다 등 했던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내부 소식통들에 따르면, 지금까지 북한 주민들에게 백신 접종과 관련된 북한 당국의 계획이나 입장이 발표된 적은 없다. 실제 감염자 실태, 사망자 여부, 치료제 개발 문제 등에 대한 정보도 거론되지 않았다. 혜산 소식통은 “우리는 예방약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다”면서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무리죽음 당하는 상황이라고 하니까, 백신 주사로 예방한다는 생각을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나. 사회적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해 북한 주민들에게 가장 널리 퍼져있는 지시는 “말하지 않기”이다(NK투자개발, 2021c, p.83). 거리두기의 적용 장소는 학교, 직장, 공공장소, 편의 봉사 시설 등이다. 공장과 농장에서는 작업 시 2미터 이상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가까이서 대화하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졌다. 학생들도 친구들과 대화를 자제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종합시장 상인들끼리도 옆자리에 있는 상인이나 손님들과 대화를 자제하도록 교육되고 있다.

대중교통이나 써비차를 이용할 때는 “한 자리씩 비워두고 앉으라.”는 지시가 내려졌지만, 이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평양소식통은 “아무리 전염병 시대라고 하지만, 지하철과 전차에는 항상 사람이 만석”이라면서 “빈자리를 남겨두고 앉으라는 지시는 지켜지는 경우가 없다.”고 말했다.

## 다. 사적 집합 금지

북한은 2020년 4월 청명절을 맞아 가족 간 집합 금지를 지시했고, 이후 추석 등 민속명절 마다 반복 강조했다(NK투자개발, 2021c, p.84). 원산 소식통은 “가족들이 모여 제사를 지내거나 성묘에 가는 것이 모두 금지됐다”고 말했다. 청명절은 김정은 집권 이후 2014년부터 민족명절로 지정되었으나, 국가방역사업 원칙에 따라 가족 간 모임을 금지한 것이다.

평양 소식통에 따르면, 중앙인민보건위원회의 방침에 따라 결혼식 등 개인 행사도 집합 금지 대상이다. 개인 행사와 관련해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되는 구체적인 지침은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결혼식, 장례식, 생일 잔치 등에 가족 외의 사람이 참여하면 지역 조직의 단속에 적발된다고 평

양 소식통은 전했다. 실제로 단속에 걸릴 정도로 많은 사람이 참석하는 개인 행사는 거의 열리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평양 소식통은 “2020년 8월에 동대원 구역에서 결혼식을 가진 젊은 부부가 친구들과 친척들 7명을 집에 초대해서 식사를 하다가, 인민반장에게 적발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식사에 참석한 사람 중에 의심 증상이 없어서 이 부부는 처벌은 피했으나, 소속 직장에 자기 비판서를 제출해야 했다고 한다.

### 3. 북한의 COVID-19 대응 평가와 향후 전망

#### 가. 노백신 정책과 북중 국경 차단

COVID-19 상황으로 인해 북한 경제 전반이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대중 수출이 감소하고, 중국 등 해외 진출을 통한 외화벌이가 위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중국산 수입품의 감소는 원자재와 소비재 확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북한 당국이 ‘경제’와 ‘방역’ 중에 확실하게 방역을 선택하며 경제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감수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한 것으로 보인다. 방역에서만큼은 그 효과가 확인됐다고 볼 수 있으나, 경제에서 어려움을 누적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지금까지 북한에서 COVID-19와 관련한 집단감염, 지역감염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 당국은 세계보건기구(WHO)에 “확진자 0명”으로 보고하고 있다(윤진, 2021.11.18.). 여러 언론과 대북 매체들이 집단감염과 사망에 대한 의혹을 제기해왔으나, 구체적인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만약 북한에서 집단감염, 지역감염이 발생했다면, 북한 내부가 현재와 같은 상황을 유지할 수 없었을 것이다. 북한은 진단키트

등 검사 장비가 부족으로 감염자를 신속하게 구별하여 격리하는 것이 어렵고, 감염자에 대한 치료 시설과 의료기술도 턱없이 부족하다. 감염자 확산이 시작되면 일정한 범위에서 통제하는 건 불가능한 현실이다. 북한의 입장으로는 외부 차단에만 성공하면 내부에서 COVID-19가 발생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북한을 방문하는 외국인도 거의 없고, 외국을 왕래하는 북한 사람도 매우 제한적이며, 그 대상도 결국은 중국에 국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COVID-19 발생 초기에 비교적 신속하고 단호하게 중국과 교류를 차단한 것이 큰 효과를 발휘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20년 재입북 탈북민의 개성 진입 사건으로 북중 국경을 통한 감염자의 북한 진입 가능성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국경에서 사건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신속하게 지역봉쇄를 선택한 것도 방역 성공의 요인으로 꼽힌다. 한편, 북한 주민들과 일선 간부들의 경우 국가의 지시에 복종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고, 북한 보건 의료 시스템에 대한 불신과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심이 매우 높다. 결과적으로 개인 방역수칙 준수와 관련해 매우 높은 수준의 경각심과 실천이 유지됐다. 북한은 의료체계의 후진성이라는 근본적인 약점에도 불구하고, ▲중국만 차단하면 스스로 고립될 수 있는 국제적 환경 ▲국가의 결정이 무조건 집행되는 사회체제 ▲전체 사회 구성원들 높은 경각심과 실천 등이 어우러지며 COVID-19 위기 상황을 버텨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둘째, 방역에서 일정한 성공과 달리 경제 부문에서는 중국과 무역 축소 후과가 점차 누적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중무역 차단은 북한 경제의 근간을 위축시키는 선택이다. 우선 인력수출과 임가공이 현저하게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국가와 기업, 개인의 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북한 내부에서 생산되는 지하자원이나 원자재 등의 수출 감소 역시 마찬가지이다. 수입 감소는 생산과 소비를 위축시키며, 내수

생산도 위축시킨다. 북한 경제 전반에 연관되어 있는 교통과 물류 분야도 큰 어려움이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주민들의 체제 순응 정도에는 큰 변화가 없어, 내부 혼란 등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COVID-19 대응과 관련, 중하급 간부들과 일반주민들의 보편적인 정서 속에서는 국가에 대한 불만이나 반감이 많지 않다는 게 내부 소식통들의 설명이다. 세계적인 전염병 문제라는 점에서 국가나 당, 고급 간부들에게 책임을 돌릴 이유도 마땅치 않다. 평양 소식통은 “우리는 1990년대 미공급과 굶주림을 겪었고, 해마다 큰물 피해가 이어지기 때문에 자연현상을 이유로 국가에 불만을 가지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일종의 ‘숙명론’적인 사고가 일반주민들 사이에 널리 퍼져있다는 말이다.

#### 나. 대북제재 결과와 COVID-19 대응 결과의 혼재

2017년 이후 대북제재는 중국의 역할과 참여라는 변수로 인해 북한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됐다. 중국이 성실하게 제재 의무를 이행할 것인가와 별개로 북한이 중국의 체면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제재를 우회할지에 관심이 모아졌다. 북한의 시장에서는 2018년부터 공식 수출이 중단된 석탄이나 수산물에 내수시장에 풀리는 현상이 확인됐다. 수출형 물류가 내수시장으로 회귀하는 모습도 발견됐다. 2019년부터는 이러한 흐름이 가속화되는가 싶었는데, 2020년 COVID-19 상황이 발생하면서 대북제재에 대한 대응과 방역과 관련된 대응이 혼재되는 양상으로 바뀌었다.

특히 COVID-19 대응과 관련해 북한 당국 스스로 중국과 무역을 차단하면서 북한에서 가계 소비 변동 요인을 구별해내는 것이 어렵게 됐다.

북한경제가 대북제재와 COVID-19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이나, 지금까지 구체적인 결과의 선후차는 모호하다. 내부 소식통들이 전하는 ‘체감 경기’만 놓고 보면, COVID-19 영향으로 북한 가계 살림이 크게 악화됐다는 징후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 제3장

### 북한 가계 소비 부문 시장 가격의 변화

제1절 국정 가격과 시장 가격

제2절 북한 가계의 소비지출과 시장 가격

제3절 북한 가계의 비소비 지출



## 제3장 북한 가계 소비 부문 시장 가격의 변화

### 제1절 국정 가격과 시장 가격

국정 가격이 과거에는 의미 없는 것으로 평가됐으나 최근 북한 국영 부문 생산성이 과거에 비해 높아지면서 북한 경제주체들 사이에서 국정 가격 준수 여부가 새로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북한 관영 매체에서 여전히 국가계획위원회와 국가가격제정위원회가 중요한 기관으로 언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정은 시대에 국영기업소의 자율성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국영기업소가 국가 계획에 여전히 포함되고 있다는 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내부 소식통들은 국영기업소가 판매하는 품목들의 가격이 시장 가격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국정 가격 산정의 정확한 매커니즘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확인이 어렵다. 북한 당국이 국영기업소가 생산한 품목에 대해 국영기업소가 완전히 자유롭게 가격을 책정하도록 허용하고 있는지의 여부가 불투명한 것이다. 다만, 당분간 북한에서는 국정 가격과 시장 가격이 공존하는 이중가격, 혹은 북한 당국이 제시하는 시장 가격의 상한선 등, 3중 가격이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 1. 국정 가격의 의미와 구성 요소

북한은 여전히 사회주의적 경제원칙을 중요한 준거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전반적인 경제 정책은 ‘계획의 유일화’ ‘계획의 세분화’라는 두 가지

원칙아래 집행된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34조). 국가 경제의 기본 수요와 공급 계획은 오직 중앙에서만 결정(유일화)할 수 있고, 중앙은 모든 것(세분화)을 결정한다. 계획의 유일화/세분화 권한을 쥐고 있는 기관은 중앙 독립기관인 <국가계획위원회>이다. <국가계획위원회>는 산하에 <국가가격제정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국가가격제정위원회>가 제정하는 모든 영역의 가격이 바로 '국정 가격'인 것이다.

<국가가격제정위원회>의 기본 원칙은 '가격의 일원화'이다. 동일제품, 동일가격 원칙을 기본으로 가격의 유일성을 담보하는 것을 기본 활동 사명으로 한다. 북한에서는 모든 가격제정을 <국가가격제정위원회>가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부 지방공업 부문에서 생산하는 소상공이나 지역 특산품에 한해 각 지방 인민위원회가 담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전해진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격법 제11조).

북한에서 국정 가격은 모든 생산 단위와 공급 단위에게 강제되는 규정으로 크게 ▲도매가격 ▲소매가격 ▲수매가격 ▲운임과 요금 등으로 구분된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격법 제2조).

도매가격은 국영기업소 사이에서 생산수단, 원/부자재, 소비품을 거래할 때 기준이 되는 가격이다. 소매가격은 ▲국정 소매가격과 ▲종합시장 소매가격으로 구분된다(NK투자개발, 2021b, p.15).

국정소매가격은 국가가 직할하는 소매 판매점(국영상점/백화점/마트)에 적용되는 가격이다. 종합시장 소매가격은 종합시장 매대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이 준수해야 하는 가격이다. 소매가격은 특정 상품에 대한 판매 혹은 공급 가격을 명시하는 경우뿐 아니라 때때로 가격상한제를 제시하여 일정 가격 이상으로 판매 혹은 공급하지 못하도록 조치까지 포함된다. 실제 북한 종합시장에서 식량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일정 가액 이상으로 판매하지 못한다는 지침이 매대 상인들에게 전달되는데, 이것이 바로 소

매가격 상한제의 결과이다.

수매가격은 국가가 협동농장, 수산사업소, 외화별이사업소 등에서 농수축산물을 매입하거나 주민 개인의 생산물을 매입할 때 적용하는 가격이다. 국가는 높은 가격에 매입하고, 이를 낮은 가격에 인민들에게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수매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낮다는 점에서 가격 효율성이 제대로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

운임은 국영 부문이 제공하는 여객 수송 서비스와 화물 수송 서비스에 적용되는 가격이다. 철도, 자동차, 선박, 항공기, 지하철, 무궤도전차 등이 국정 가격으로 운임이 책정된다(NK투자개발, 2021c, p.43). 국정 운임은 대부분 다른 시장 가격에 비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저렴한 운임으로 인해 수송 서비스를 담당하는 국영 부문의 수익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국영 운송 서비스에서 뇌물 문화가 광범위하게 퍼져있으며, 2000년대 이후에는 개인영업이나 국영 부문의 자체 돈벌이가 크게 증가했다. 요금은 국가가 제공하는 서비스나 서비스 성격의 시설 이용에 지불하는 가격이다. 개인소토지세, 물세, 전기세 등 사용료와 국영 편의봉사시설에서의 이미용 서비스에 대한 요금이 있다.

## 2. 국정가격의 결정 요인

국정가격은 크게 ▲원가 ▲사회순소득 ▲부가금을 고려해 결정된다(박석삼, 2004, p68).

원가는 생산을 위해 지출된 모든 비용을 망라하는 개념으로 원료, 원자재, 부자재, 연료, 고정시설 감가상각, 임금, 기타 관리비용 등을 모두 고려한다. 북한에서는 재무적으로 원가 지출이 낮을수록 생산성이 높은 것

으로 평가하는 관행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점차 원가에서 시장 가격을 반영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원가를 지출을 절약하게 되면 그만큼을 생산 단위에 인센티브로 돌려는 제도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김정은 시대에는 원가 절감 그 자체보다 기술혁신이나 경영 혁신으로 생산력을 증대시키는 것을 더 장려하고 있다. 국가계획을 달성한 초과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더 강조하는 것이다.

사회순소득은 ‘이윤’에 대한 북한식 개념이다. 노동자들은 원래 가진 자산이 없어 자신의 노동을 자본가들에게 판매하게 되는데, 노동자들의 노동을 통해 가치가 발생한다는 것이 북한식 해설이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노동자들이 자본가들에게 자신의 노동을 판매할 필요가 없으므로 ‘사회를 위해’ 노동을 하게 되는데, 노동자들이 창출한 가치를 북한은 ‘사회순소득’이라고 개념화했다. 따라서 사회주의 국가는 노동자들이 창출한 사회순소득으로 국가 재원을 삼는다는 해석이다. 북한은 사회순소득을 ‘이윤’과 ‘거래수입’ 명목으로 구분하여 국가재정에 귀속한다. 이윤은 일종의 법인세 성격으로 이후에 기업소 운영자금, 상금, 문화후생기금 등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거래 수입은 부가가치세처럼 국가재정에 바로 넣는다.

부가금은 생산물의 유통이나 공급과정에서 지출되는 비용을 상계하기 위한 요소이다. 국영상점의 경우에는 국영기업소로부터 도매가격에 소비재를 인수하여, 일정 비율의 비용을 첨가하여 주민들에게 소매가격으로 판매한다. 여기서 국영상점이 첨가하는 비용이 바로 부가금이다. 이 부가금이 해당 단위의 이윤이 되며, 이것을 축적하고 활용하는 것을 골자로 ‘독립채산제’가 설계됐다. 이러한 부가금은 상품이 유통되는 중요한 요인이다. 자재 상사의 경우 생산기업소에 자재를 판매할 때 부가금을 적용하며, 외화별이 사업소들 역시 생산품을 해외에 수출할 때 이런 방식으로

부가금을 책정한다.

### 3. 국정 가격과 물가

북한의 시장물가는 북한의 가계 경제 상황을 살펴보는 핵심 지표 중 하나이다. 1990년대 국가공급의 붕괴 이후 개별상품에 대한 국정 가격은 시장거래에서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 국정 가격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원활한 국가공급이 보장이 조건이다. 북한 당국은 여러 차례 국정 가격을 재조정하는 방향으로 국정 가격 시장거래 가격의 차이를 보정하려고 했으나, 국가공급이 뒷받침되지 않는 국정 가격은 시장거래자들에게 철저히 외면됐다. 그러나 김정은 시대 국영기업소의 시장참여가 증가하면서 국정 가격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여전히 국영기업소가 국가 계획 부문에 잡혀 있기는 하지만, 국영기업소의 자율성이 과거에 비해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다.

북한 주민들은 국가가 지정한 개별상품에 대한 “국정 가격”과 대비하여, 경제주체들이 시장거래를 통해 수용하는 상품 가격을 “시장 가격”이라고 통칭하게 됐다. 또 개별상품의 시장 가격 추세에 대해 북한 주민들은 “물가”라고 부른다(NK투자개발, 2021a, p.29). 물론 북한 주민들이 말하는 “물가”는 일반 시장경제에서 다루는 물가지수(market price index)와는 완전히 다르다. 대북매체나 일부 연구자들이 흔히 사용하는 “물가”라는 표현 역시 북한 주민들이 생각과 설명을 전달하는 측면에서 이용되고 있다. 북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국정 가격과 관련해서 북한 당국이 공개하는 별도의 물가지수는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가가가격제정위원회>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을 직접 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물가지수를 산정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 제2절 북한 가계의 소비지출과 시장 가격

김정은 시대 북한 가계의 의식주 관련 소비지출은 김정일 시대에 비해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최근 10년래 시장 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경제활동이 이어지면서 가계 소득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가공급 체제가 붕괴 됐던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까지는 다수의 북한 주민들이 절대 빈곤에 시달리고 있었다. 2000년대 초에는 〈7.1조치〉 등의 결과로 일반 주민들의 명목임금이 상승하고 곡물 등 생필품의 시장거래 가격도 높아졌다. 2000년대 초반의 개인 거래 주택가격은 2000년대 후반으로 넘어오면서 상승 추세를 보였다. 북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김정은 시대에는 가계에서 소비하는 곡물의 양이 소폭 감소한 대신 육류와 어류 등 고단백 식품들의 소비가 상대적으로 증가했다. 일각에서는 대북제재 이후 북한 내부 식량 수급 상황을 우려하기도 하였으나, 아직까지 추세적인 식량 위기는 감지되지 않는다.

(표 3-1) 북한 평양북창혜산 물가 (2018-2021년)

(단위: 북한 원)

		지역	쌀 (1kg)	설탕 (1kg)	닭고기 (1마리)	고등어 (1kg)	콩산유 (5kg)	배 (1kg)	점퍼 (1벌)	마스크 (1장)
2018	1월	평양	4,690	5,200	23,000	17,000	3,900	10,300	50,000	5,000
		북경	4,900	5,200	23,000	17,000	4,500	9,000	50,000	6,000
		혜산	5,000	5,000	24,000	18,000	5,000	11,000	50,000	5,000
	4월	평양	5,260	5,100	21,000	16,500	4,500	12,000	50,000	5,000
		북경	5,400	5,150	20,000	17,000	4,800	10,500	50,000	5,000
		혜산	5,500	5,400	20,000	18,000	5,000	11,000	50,000	5,000
	7월	평양	4,900	4,900	18,700	15,000	5,000	12,000	50,000	4,000
		북경	5,000	5,000	19,000	16,000	5,000	11,000	50,000	4,500
		혜산	5,060	5,050	19,000	17,400	4,800	13,500	50,000	4,500
	10월	평양	4,990	4,500	19,000	17,000	4,100	10,000	54,000	4,500
		북경	5,000	4,500	20,000	17,000	4,300	9,200	55,000	5,000
		혜산	5,040	4,900	20,000	18,000	4,500	10,500	55,000	5,000
2019	1월	평양	4,200	4,500	19,600	16,000	3,000	10,000	53,000	4,000
		북경	4,400	4,500	21,000	17,000	3,200	10,000	54,000	4,000
		혜산	4,550	4,500	22,000	16,000	3,500	12,500	55,000	4,000
	4월	평양	4,000	4,100	23,500	15,000	3,200	10,000	50,000	5,000
		북경	4,050	4,000	23,000	15,300	3,400	9,300	51,000	5,500
		혜산	4,200	4,000	24,000	16,000	3,500	12,000	50,000	6,000
	7월	평양	4,990	4,000	25,000	15,000	3,000	11,000	50,000	7,200
		북경	5,200	4,100	26,000	15,000	3,100	10,800	50,000	7,900
		혜산	5,400	3,900	27,000	16,000	3,000	12,000	50,000	8,000
	10월	평양	5,000	4,300	19,500	13,800	3,000	5,000	50,000	3,000
		북경	5,050	4,400	21,000	14,000	3,600	4,000	50,000	3,500
		혜산	5,100	4,300	20,000	15,000	4,000	6,500	50,000	4,000
2020	1월	평양	4,520	4,500	26,700	10,800	3,500	10,000	50,000	4,000
		북경	4,540	4,500	27,000	10,500	3,600	10,000	50,000	4,000
		혜산	4,560	4,300	28,500	11,800	4,000	11,500	50,000	4,000
	4월	평양	5,050	5,000	28,000	11,500	3,600	12,750	58,000	2,000
		북경	5,300	5,100	28,000	12,000	3,700	11,000	57,000	2,100
		혜산	5,580	5,000	28,000	12,000	3,900	13,000	60,000	2,000
	7월	평양	4,000	5,500	24,000	12,000	2,650	11,000	55,000	2,000
		북경	4,100	6,000	23,800	14,000	2,700	10,000	56,000	2,000
		혜산	4,300	5,800	25,000	14,000	2,800	12,400	56,000	2,000
	10월	평양	4,700	6,000	21,600	14,000	4,000	15,000	50,000	1,200
		북경	4,700	10,000	23,000	15,000	4,200	13,000	53,000	1,400
		혜산	4,800	10,000	24,000	15,000	4,500	16,000	55,000	1,500
2021	1월	평양	4,200	18,000	22,000	15,000	4,400	18,000	55,000	1,500
		북경	4,200	16,000	23,000	15,000	4,300	15,000	58,000	1,500
		혜산	4,500	19,000	24,000	16,000	4,500	19,000	60,000	1,600
	4월	평양	4,000	14,000	24,000	10,800	4,400	15,000	55,000	1,700
		북경	4,170	26,900	25,000	11,000	4,800	15,000	58,000	1,800
		혜산	4,300	26,000	26,000	12,000	5,000	17,000	60,000	1,800
	7월	평양	4,000	12,000	20,000	12,000	4,500	15,000	60,000	1,400
		북경	4,300	15,000	20,000	12,700	4,700	14,000	60,000	1,500
		혜산	4,300	15,000	20,000	14,000	5,000	16,000	60,000	1,500
	10월	평양	4,500	18,000	20,000	13,000	4,000	9,800	60,000	1,500
		북경	4,800	18,500	20,000	12,500	4,100	10,000	60,000	1,500
		혜산	5,000	18,500	20,000	14,000	4,300	10,500	60,000	1,600

※ 닭고기 : 1마리 무게는 2.5kg.

자료: NK투자개발. (2021a). 북한 가계 생계비 조사. 내부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1. 곡물과 주식(主食)

전통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식량 조달은 국가배급에 의존했으나 1990년대 이후 스스로 조달하는 방법이 확산됐다. 국가의 식량 공급은 연령과 직업에 따라 1일 식량공급 표준을 작성하여 식량을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식량 공급 기준은 총 9등급으로 구분되는데 영아(嬰兒) 대상 100g이 9등급, 가장 높은 1급은 900g이다. 유해직종 노동자나 탄광 발파공 등 중노동 분야의 종사자들이 최고등급에 속한다. 전업주부의 경우 중학생 기준인 300g에 불과하다. 국영기업소나 국영부문 사무원들의 경우 배급표에 따라 식량을 배급받는다. 배급표는 통상 보름 기준으로 발급되며, 배급표를 들고 지정된 날짜에 식량공급소에서 식량을 수령한다. 은퇴한 노부모나, 미성년 자녀들, 전업주부 등은 세대주의 소속 직장에서 식량을 배급한다. 세대주의 노동량과 상관없이 피부양자의 배급량은 지켜지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북한은 1980년대부터 1일 식량 공급량이 표준량에 미치지 못하게 됐고, 1990년대 국가공급 붕괴 이후에는 주민들의 식량 공급이 사실상 중단됐다. 2000년대 이후 북한 당국은 주민 식량 공급을 복원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았는데, 주요 기조는 주민들의 소속 직장이나 거주 지역 행정조직에 식량공급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에 불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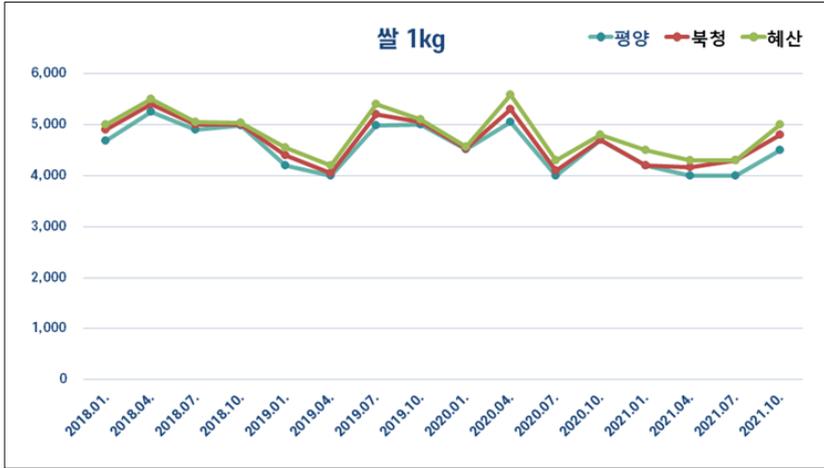
2000년대 이후에는 주민들 스스로 소토지 농사나 장사 등을 통해 스스로 식량을 조달하는 관행이 자리 잡게 됐다. 국가 식량 공급은 배급량과 시기가 불규칙하기 때문에 “받으면 좋고, 못 받아도 상관없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다. 종합시장 등을 거점으로 삼는 장사와 다양한 부업이 증가하면서 일반주민들의 평균 소득이 증가하게 되었고, 이는 곧 식생활 개선으로 이어졌다.

혜산 소식통은 “지금어 어느 때라고 사람들이 밥만 먹는 것으로 만족하겠나?”라면서 “대부분 세대마다 간식 담은 용기를 따로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소비하는 쌀, 옥수수 등 주식(主食)의 양이 줄어 밥그릇 자체가 바뀌고 있다고 한다. 사발에 밥을 먹던 과거 문화가 사라지고 밥공기에 밥을 담아 먹는다는 설명이다. 유아에게는 질게 밥을 지어 먹이던 문화도 사라져서, 지금은 ‘영양 쌀밥’이나 ‘잣죽’ 통조림 등 영유아식도 공산품으로 제조되어 팔리고 있다. 이런 소비경향에 따라 일반 가정에서 소비하는 쌀 양이 과거보다 감소했다는 것이 혜산 소식통의 설명이다.

북한 가계가 소비하는 주요 곡물은 쌀, 옥수수, 감자, 보리, 콩 등이다. 2021년 10월 14일 기준 북한의 종합시장에서 거래되는 쌀 가격은 전월 대비 소폭 상승했지만, 상승폭은 크지 않다. 이는 COVID-19 방역을 이유로 북중무역이 차단된 상황에서도 북한 내부 쌀 수급에는 별다른 위기가 감지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북한 종합시장에서 쌀 가격(kg)은 북한 돈 4,000원대 중후반에서 5,000원 초반 사이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다. 북한의 중국과 무역을 거의 차단하고 있는 외중에서도 종합시장 쌀 가격이 비교적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혜산 소식통은 ▲북한 당국이 종합시장 쌀 가격과 관련 ‘가격상한제’를 지시하며 통제하고 있고, ▲최근 북한에서 생육기일이 짧은 조기 수확 곡물의 수확량이 증가했으며 ▲쌀 가격이 오르면 대체품으로 가공식품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그림 3-1] 북한 평양·북청·해산의 쌀 가격 추이(2018-2021)

(단위: 북한 원)



자료: NK투자개발. (2021a). 북한 가계 생계비 조사. 내부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옥수수 가격은 COVID-19 발생 이후 쌀 가격의 50% 수준에 맞춰지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오랫동안 북한 종합시장에서 쌀과 옥수수 가격은 2:1을 비율을 유지했다.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종합시장에서 쌀과 옥수수의 교환비율은 가장 변동성이 적은 부문 중 하나였다. 그런데 김정은 시대 초반기(2014~2017)에는 옥수수 가격이 쌀 가격 대비 30%대까지 하락했다. 쌀 대비 옥수수 가격 하락은 쌀과 옥수수의 대체효과가 약화된 것으로 평가됐다. 주식으로 옥수수 대신 쌀을 소비하는 세대가 급증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2018년 유엔의 대북제재가 본격화되면서 옥수수 가격이 조금씩 상승하더니 다시 쌀 가격의 50% 수준까지 올라온 것이다. 해산 소식통은 옥수수 가격의 상승은 쌀 대체효과가 아니라 옥수수 자체의 수요증가로 해석한다. 그는 “전염병으로 수입이 감소한 사람들이 요즘에 다시 옥수수 술을 만들어 판다.”면서 “옥수수 술 장사꾼이 늘어나면서 옥수수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옥수수 1kg으로 술을 만들면

대략 1.2kg 정도를 얻을 수 있는데, 술 1.2kg의 판매가격은 북한 돈 4,500원 정도가 된다. 옥수수 100kg을 술로 만들어 팔면, 대략 인건비 포함 북한 돈 25만 원 정도의 수익을 남길 수 있다는 단순 계산이 가능하다.

신의주 소식통은 옥수수 가격 상승 원인을 밀가루 부족으로 꼽는다. 북중 무역 통제 결과 중국에서 수입되는 밀가루가 감소하여 북한 국영기업 소 경공업 부문에서 밀가루의 대체품으로 옥수수를 이용한 빵류 과자류를 생산했다는 것이다. 북한 종합시장에서 밀가루 거래 가격(kg)은 김정은 집권 초반기 대중무역이 활성화되면서 북한 돈 3000원대 후반~ 4000원대 초반수준을 유지했으나, 2021년 9월에는 9000원 대 후반까지 상승했다(NK투자개발, 2021a, p.32). 이렇게 수입품의 가격이 오르게 되면 북한 주민들은 대체품으로 장사를 이어가든가 아니면 장사품목 자체를 변경하기도 한다.

북한 주민들의 주식 중에 감자와 보리도 빼놓을 수 없다. 감자는 북한이 식량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1990년대부터 양강도 대부분 지역의 산림을 개간하고 농장을 설치했다. 과거에 보리, 콩을 심었던 밭에도 감자를 심는 경우가 많아졌다. 감자는 튀김, 국수 등 다양한 가공품으로 이용된다. 양강도 대부분 지역에는 감자가공공장과 전분 공장이 있다. 감자가공 공장에서는 전분으로 된 청수국수와 감자라면을 생산하며, 전분 공장에서는 엿사탕도 생산한다.

혜산 소식통에 따르면 양강도에서는 혜산시와 삼지연시의 일부 지역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 지역에서 감자 농사를 벌인다. 대흥단군, 백암군, 운흥군, 김정숙군, 보천군, 갑산군 풍서군, 삼수군 등에서 감자를 주력 농사로 삼는다. 백암군과 대흥단군은 북한 농업성 4과가 직할하는 현지 지도부를 설치되기도 했다.

강원도 이남 지역에서 주로 생산되는 고구마도 최근 10여 년간 가격변화가 있었다. 생산 지역에서의 고구마 가격은 비교적 저렴하지만, 양강도와 함경남북도 등의 원거리 지역으로 유통될 경우, 생산지 가격에 비해 비싼 가격에 팔린다. 고구마 가격은 계절적 변화도 동반하는데, 겨울과 이른 봄에 가격이 비싸진다. 여름에는 유통되는 양이 거의 없어서 가격 자체가 의미가 없을 때도 있다. 고구마는 북한 주민들에게 주식이라기보다 간식거리에 가깝다. 평양의 곳곳에 설치된 이동매점들에서도 군밤과 군고구마를 팔 수 있도록 허용되고 있다. 평양 소식통에 따르면 고구마의 가격(kg)당 생산지에서는 북한 돈 1,200원, 원거리 지역에서는 2,100원 전후의 시세를 보이는데, 비생산 시기에는 생산지에서 2,400원, 비 생산지에서는 4,200원 정도로 거래되고 있다.

## 2. 식료품과 음료

북한 주민들은 명절 음식으로 떡과 빵을 만들어 먹는다. 한국처럼 ‘추석 송편’, ‘설날 떡국’ 등의 관행은 없다. 송편과 같은 떡은 사시사철 먹는다. 명절, 생일, 결혼, 회갑, 돌잔치 때에도 송편은 필수 음식으로 자리 잡았다. 2010년대에는 서양식 케이크가 등장하게 됐는데, 일반 주민들 사이에서 가정행사에 필수품처럼 여겨진다. 케이크는 어떤 재료를 사용했는지와 케이크가 몇 단 높이인지에 따라 가격이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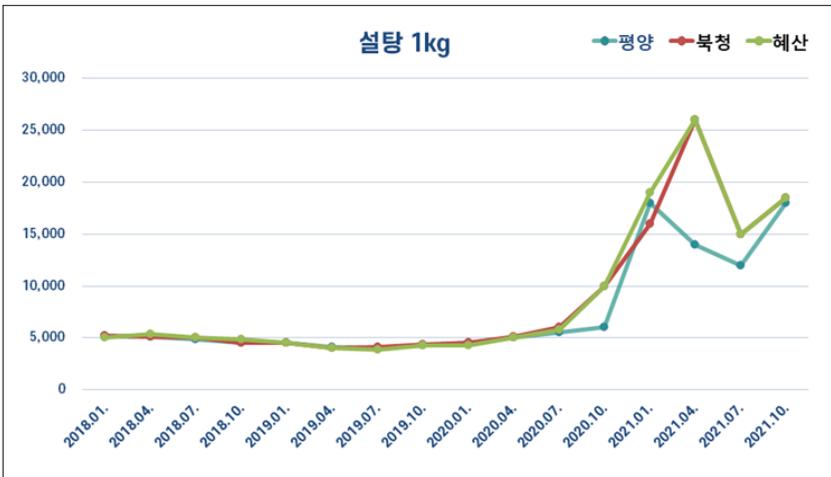
2000년대까지 일반주민들의 길거리 음식으로 사랑받았던 파배기는 현재 북한 종합시장에서 자주 볼 수 없다고 한다. 신의주 소식통은 “수입산 밀가루의 공급이 줄어들면서 밀가루 가격이 많이 오른 탓”이라고 설명했다. 과자와 사탕 등 당과류의 경우에는 북중무역 통제가 시작되기 전과 비교할 때 유통량이 감소했다. 하지만 여전히 종합시장에서 손쉽게 구매

할 수 있다고 한다.

사탕류의 가격은 북중무역 통제 이전보다 소폭 상승했다. 시장 유통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사탕 과자의 가격도 코로나 이전보다 오른 상태다. 혜산 소식통에 따르면 양강도 혜산시장에서는 2019년 12월부터 북한 돈 5,000원(kg)에 팔리던 사탕들이 2020년 초부터 조금씩 오르더니, 2020년 말에는 27,000원까지 상승했다. COVID-19 발생 이전보다 5.4 배 상승한 것이다.

[그림 3-2] 북한 평양북청혜산의 설탕 가격 추이(2018-2021)

(단위: 북한 원)



자료: NK투자개발. (2021a). 북한 가계 생계비 조사. 내부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김정은 시대에 커피와 차(茶)는 일반 주민들의 기호식품으로 자리 잡았다. 과거부터 일반 주민들은 차 문화를 중국 문화의 일부로 인식했다. 반면 커피는 자본주의 문물의 상징으로 주민들에게 배척받은 측면이 있다. 북한의 다부작 예술영화 ‘민족과 운명’과 한국전쟁시기를 다룬 영화 ‘이름 없는 영웅들’에서 등장하는 커피는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마시는 ‘시커

면 물' 그 자체였다. 그런데 커피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인식이 크게 바뀌었다. 개성공단으로부터 유입됐던 한국산 커피믹스가 북한 주민들에게 새로운 기호식품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한국산 공산품을 접하고 소유한다는 것 자체가 부(富)의 상징처럼 여겨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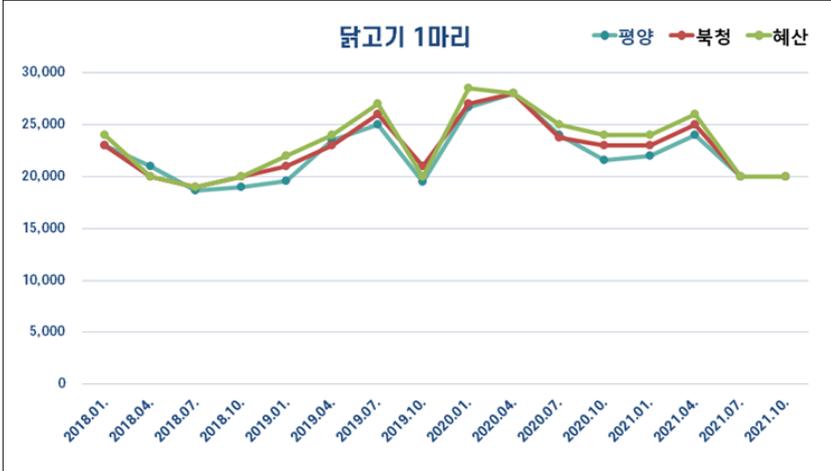
신의주 소식통은 김정은 위원장이 경공업발전을 집중적으로 주문한 것도 차와 커피의 확산에 일조했다고 전했다. 그는 “지금은 우리도 우유커피를 비롯해서 결명자, 보리, 미나리, 인삼 등의 맛을 내는 국산차가 있다.”고 말했다. 다양한 북한산 커피와 차들이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기호식품은 북한 종합시장에서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

### 3. 육류 및 육가공품

김정은 시대에 강원도 세포 등판에 대규모 축산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계기로 육류와 육가공품 생산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혜산 소식통은 “2014년부터 종합시장에서 팔리는 고기와 가공품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는 물론이고 양고기, 오리고기 등 다양한 육류가 종합시장에서 팔리고 있다. 드물지만 중국에서 수입된 냉동육 소고기도 있다고 내부 소식통들은 전해오고 있다.

[그림 3-3] 북한 평양·북청·해산의 닭고기 가격 추이(2018-2021)

(단위: 북한 원)



자료: NK투자개발. (2021a). 북한 가계 생계비 조사. 내부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최근 북중 무역 중단으로 소고기는 종합시장에서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돼지고기와 양고기, 염소고기 등은 kg 단위로 팔리고, 닭과 오리 등은 마리당 거래된다. 닭, 오리 무게는 대략 2.3~ 2.5kg 정도가 기본이다.

북한도 최근에는 육가공품 통조림을 생산하고 있는데, 소고기와 돼지고기의 구별 없이 1개당 북한 돈 1만 4천원에 거래되고 있다. 강원도 세포등판에서 생산된 육류는 소시지나 햄 등으로 가공되기도 한다. 소시지는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반찬 중에 하나이다. 양강도 해산시장에서 소시지 1개의 가격은 북한 돈 1,200원 정도 판매되는데, 크기에 따라 가격이 다양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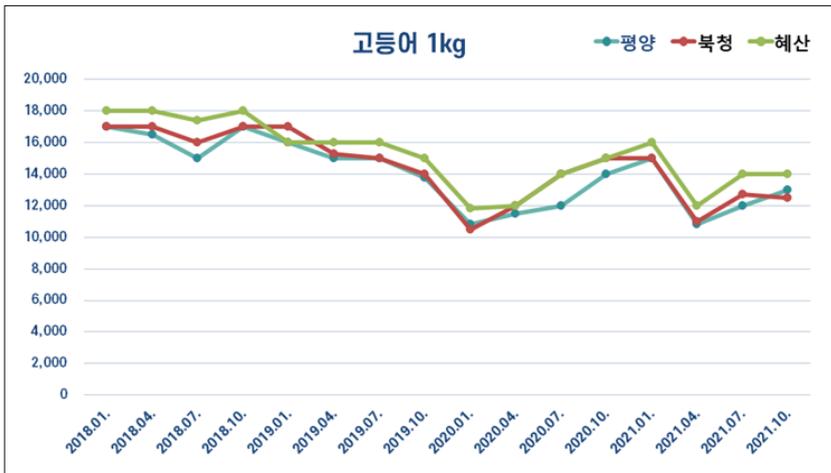
#### 4. 수산물 및 해조류 가공품

김정은 시대에 북한은 국가 차원에서 수산물 생산을 독려해왔다. 북한

의 인민위원회 상업망을 이용한 수산물 유통이 늘어났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수차례씩 수산사업소를 현지지도하며 생산과 공급을 독려했다.

[그림 3-4] 북한 평양북청혜산의 고등어 가격 추이(2018-2021)

(단위: 북한 원)



자료: NK투자개발. (2021a). 북한 가계 생계비 조사. 내부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평양소식통은 “예전에는 명절이라고 해도 수산물 공급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명절마다 세대별로 물고기 공급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에는 간부 계층이나 관련 특수분야 종사자에게만 주로 공급됐다. 일반 주민들의 경우는 수산물 중 고급 어족이든 일반 어족이든 명절이나 가족 행사가 있을 때만 섭취하는 수준이었다.

김정은 시대에는 일반 주민들도 수산물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핵실험으로 2017년 수산물 수출이 중단되기 전까지, 종합시장에서 동태 가격(kg)은 북한 돈 11,000원~12,000원 사이에서 거래됐다. 세관을 통한 공식 수출이 막힌 후에는 밀무역으로 증가로 인해 시장거래 가격이 상

승했다. 양강도 해산시장의 경우 2019년에 초에 13,000원에서 팔리던 동태가 그해 연말에는 15,000원까지 높아졌다. 북중무역이 전면 차단됐던 2020년 봄에 16,000원에 팔리다가 여름을 넘기면서 일시 하락세를 보였고, 그해 연말에는 다시 18,000원까지 상승을 보였다. COVID-19로 인한 북중무역 차단이 2년 차로 넘어오면서 수산물 가격의 변동 폭이 커졌다. 2021년 10월 기준 동태 가격은 북한 돈 20,000원을 넘어섰다 (NK투자개발, 2021a, p.37). 명태/동태는 북한 주민들이 가장 많이 섭취하는 수산물 중 하나이다.

고등어나 임연수어 등 고급어족은 명절 때나 수확철에만 구매할 수 있다. 또 미역 등 해초류는 봄과 가을에 일반주민들의 필수 부식물이다. 북한 주민들의 간식 혹은 술안주로 사랑받는 오징어도 유통량이 많아졌다. 김정은 시대에는 경공업 분야의 다양한 부문에서 생산량이 증가해 왔는데, 종합시장에서는 맛살, 말린 조개, 진공포장 명태 등 갖가지 수산 가공품이 소량 포장되어 팔리고 있다. 가격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다.

내부 소식통들에 따르면 종합시장 뿐 아니라 거리 판매대에서도 김밥이 팔리고 있다. 20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김은 귀한 식자재였다. 어쩌다 명절에 김밥을 만들어 먹거나 특별한 도시락용으로 주먹밥을 만들 때 이용됐는데, 김정은 시대에는 길거리 음식으로도 자리 잡을 정도로 대중화됐다. 북한의 김밥은 한국의 김밥처럼 내용물이 풍부한 것은 아니지만, 장사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더해져 여러 가지 맛으로 분화됐다. 종합시장에서 팔리는 김밥은 크기와 내용물에 따라 개당 북한 돈 700원, 1000원, 1200원 등 다양하다. 북한의 국영식당에서는 종합시장보다 비싸게 팔리는 편이다. 평양 소식통에 따르면 외국인들이 방문할 수 있는 대형식당에서는 한 줄에 1,500원짜리 김밥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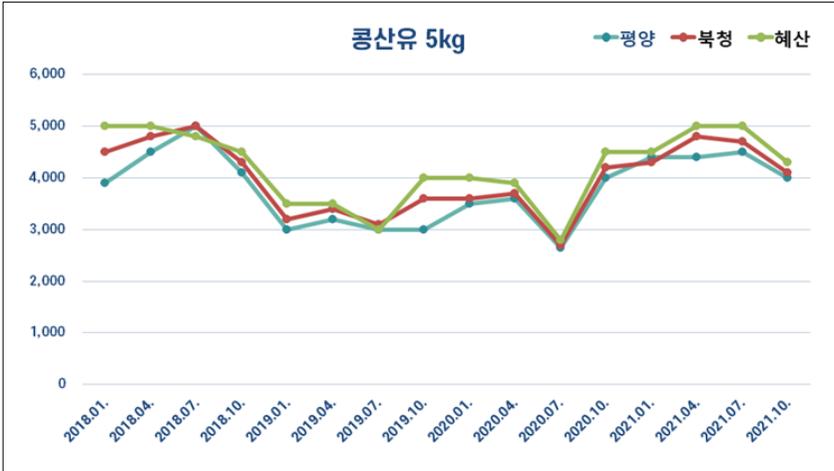
## 5. 유제품 및 알류

북한 주민들에게 “유제품”은 익숙하지 않은 용어였다. 2010년대 초반부터 종합시장에 ‘젖산유’로 불리는 요구르트와 ‘콩산유’로 불리는 두유가 대대적으로 유통되면서 북한 주민들의 유제품 섭취도 일상적인 현상이 됐다. 북한은 1990년대까지는 평양시에서만 콩우유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공급했었는데, 공급을 시작한 지 얼마 후에 경제난이 닥쳐 1990년대 후반까지 간간히 평양시 학생들에게 콩우유 공급이 이뤄졌다. 2000년대부터 각 도 인민위원회의 능력에 따라 지방 학생들에게도 콩우유 공급이 시작됐다. 종합시장 등장 이후 개인들이 생산한 수제 콩우유가 등장했고, 김정은 시대에는 중국산 요구르트가 유통됐다. 최근에는 콩우유를 생산하는 국영기업소와 개인 장사꾼들이 늘어났다.

현재 북한 시장에서 팔리고 있는 젖산유와 콩산유 중에 중국산 젖산유의 수입은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국내산 콩우유의 유통은 북중무역 차단 이전보다 늘어났다. 신의주 소식통은 “중국산 젖산유 수입이 줄어들면서 국내산 콩산유를 사는 사람들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북한산 콩산유 가격은 전 연도의 콩 농사 작황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 북중무역 차단 등 외부 영향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혜산 소식통에 따르면 양강도 혜산시장에서 콩산유 1통(5kg)의 가격은 북한 돈 5,000원 정도이다. 북중무역 차단 이전까지 3,900원~4,000원에 거래되던 것과 비교하면 가격 상승세가 분명하다.

[그림 3-5] 북한 평양·북청·해산의 콩산유 가격 추이(2018-2021)

(단위: 북한 원)



자료: NK투자개발. (2021a). 북한 가계 생계비 조사. 내부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김정은 시대에는 각 지역 축산단지 등에서 생산되는 유제품의 유통이 크게 늘어났다. 국영 축산단지는 물론, 각 기업소에서도 염소나 토끼 등을 키워 고기와 우유 생산하기 때문이다. “풀과 고기를 바꾸자”는 북한의 구호가 전체 생산 부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북한 전역에 자리한 애육원, 고아원, 육아원 뿐 아니라 유치원과 탁아소에서도 자체 유제품 생산기지를 두고 학령 전 아동들에게 유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COVID-19 사태와 북중무역 차단으로 인해 북한 내수 경기가 주춤함에 따라 다시 가축 키우기에 나서는 개인들이 늘어난 것도 유제품 공급 확대의 작은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이런 추세가 반영되어 종합시장에서 멸균 우유의 가격은 북중무역 차단 이전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우유 생산 공장이 있는 지역과 가축 키우기에 적합한 농촌지역일수록 각 가정의 우유 섭취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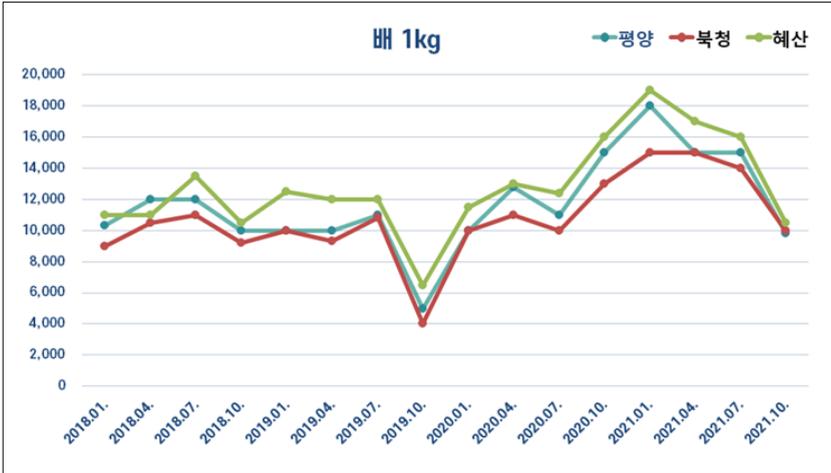
한편, 북한 주민들의 단백질 섭취에서 빼놓을 수 없는 품목은 달걀이다. 달걀은 봄부터 초가을까지 종합시장에서 많이 유통된다. 최근에는 가공한 메추리알도 종합시장에서 유통되면서 일반 주민의 간식거리, 찬거리로 애용되고 있다. 메추리알은 과거 혁명사적지 답사를 위한 숙영소나 국영 여관 등 국가관리 기관의 숙박시설에서나 유통되던 상품이었다.

## 6. 과일류

북한 북부지역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지역에서는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등 다양한 과일이 생산되고 있다. 북한의 황해남도에는 과일이 많이 생산되는 ‘과일군(郡)’이 있다. 북한은 1970년대부터 과일군의 과일 재배 면적을 늘렸고 과일군은 북한 과일 생산에서 상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함경남도 북청군에서 생산되는 사과는 북한 전역에서 생산되는 사과 중에 최고로 평가된다. 북청 사과는 상온 보관을 했을 때 집 안에 사과 냄새가 넘칠 정도로 향기가 짙다. 북청 사과는 맛도 일품이어서 시장에서 비싼 가격에 팔린다. 함경남도 함주군은 배 생산으로 유명하다. 함주배는 크기와 당도가 훌륭하며, 상온 보관에서도 장점이 있다. 남포시 룡강군에는 복숭아가 특산물이다. 복숭아는 보관 가능 기간이 짧아서 북한에서 통조림으로 생산된 것도 인기가 높지 않다.

[그림 3-6] 북한 평양·북청·해산의 배 가격 추이(2018-2021)

(단위: 북한 원)



자료: NK투자개발. (2021a). 북한 가계 생계비 조사. 내부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북한에서 사과와 배는 재배지역이 넓어 생산량도 많고, 생산량에 따라 다양하게 가공되어 판매된다. 김정은 시대에는 생산지뿐 아니라 원거리 지역에서도 유통량이 늘었다. 김정은 시대 대중무역이 활성화되면서 과거에는 국경 지역의 일부 도시시장에서만 볼 수 있었던 바나나가 북한 전역의 종합시장에서 유통되었다. 물론 현재는 북중무역 차단으로 유통량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고 한다. 바나나뿐만 아니라 파인애플, 귤 등 북한 주민들이 “남방과일”이라고 부르는 과일들도 돈만 있으면 구매가 어렵지 않다. 이런 남방과일은 수입량의 여부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크다.

북한 내부 소식통들에 따르면 2021년 10월 기준 귤(kg)의 종합시장 거래 가격은 북한 돈 19,000원 수준이다(NK투자개발, 2021a, p.40). 물량이 부족하면 23,000원까지 가격이 된다. 바나나도 대부분 종합시장에서 유통되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평안남도 평성시 덕산농민시장에서 팔리는 바나나는 개 당 북한 돈 3,100원이다. 평성

소식통에는 “평안남도의 한 기업소에서 자체로 바나나를 생산하고 있는데, 지금은 수확기가 지나서 시장에서 팔리는 것은 모두 수입산”이라고 말했다. 국산 바나나는 그나마 평안북도 선천군과 염주군에서 일부 생산되고 있다고 한다. 북한 주민들에게 남방과일은 일상 식생활과 밀착된 품목은 아니지만, 북한 가계의 소비수준을 대략적으로 유추할 수 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 7. 채소(남새) 및 조미식품

북한 주민들의 식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식은 김치이다. 북한 주민들은 김치를 “반년(半年)식량”이라고 부를 정도이다. 김정은 시대에는 북한 당국도 곳곳에 김치공장을 세워 시장공급에 나서고 있다. 김치를 담그는데 중요한 채소인 배추, 무, 당근뿐 아니라 시금치, 오이 등 채소 유통도 과거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지구 온난화 영향으로 북한의 온실 재배 생산품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다만, 저장기간이 짧은 채소의 경우에는 여전히 제철에만 유통된다.

북한 농장에서 온실 재배가 늘어나면서 부추 등은 사시사철 재배가 가능해졌다. 파, 당근, 오이 등도 온실 재배가 늘어나면서 염장을 하지 않고 싱싱한 채로 팔리는 경우가 많다. 배추, 무, 시금치 등은 여전히 수확철 가격과 비수확철 가격 차이가 크다. 애호박의 경우에는 수확철 가격(kg)이 북한 돈 700~800이라면 비수확철에 가격은 2,000원을 넘어간다. 오이는 겨울을 대비해서 염장을 해서 먹는 경우가 많다. 수확철 오이 가격(kg)은 1,200원 수준이지만, 비수확철로 넘어가면 9,000원까지 상승한다(NK투자개발, 2021a, p.40). 오이는 지리적 위치에 따라 가격이 변하기도 하는데 북쪽으로 갈수록 비싸진다.

김정은 시대에는 경공업 분야 중에 식료공장의 생산 증대가 눈에 띈다. 북한은 2000년대부터 각 군/구역 단위의 식료공장들을 ‘기초식품가공공장’으로 정비하고 주민들에 대한 식품공급 정상화를 추진했지만 당시에는 그 성과가 뚜렷하지 않았다. 기존에 기초식품 가공공장에는 간부층에 대한 특수공급품 외에도 종합시장에 유통하는 일반 제품들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에는 다양한 형태의 조미료 등이 국영기업소에서 생산되고 있으나, 간장, 된장, 고추장 등 필수품의 경우 좋은 재료를 구매해서 가정에서 직접 제조하는 세대도 있다.

## 8. 주류

김정은 시대에 북한의 경공업 생산 능력이 회복됨에 따라 국영기업소의 주류 생산도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대동강맥주와 백두산 들쭉술, 인풍 포도술 등 북한 시장에서 다종의 공장생산 술들이 팔리고 있다.

평양 소식통에 따르면 대동강맥주 브랜드로 7가지 종류 생산된다. 평양의 광복상업증심 등 대형 매장에는 맥주병에 번호를 붙여 판매하고 있다. 1번은 주원료로 보리 100%가 들어가고 색이 제일 진하다. 2번은 보리 70%, 흰쌀이 30%가 들어가 색이 좀 연하다. 3번은 보리와 흰쌀이 반반씩 들어간다. 4번은 흰쌀 70%, 5번은 100% 쌀로 만든다. 6번은 보리 80%에 쌀 20%로 흑맥주 종류이다. 6번은 커피 맛, 7번은 초콜릿 맛이 난다.

김정은 시대에는 여성들의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이 늘어나면서 여성들의 음주도 늘어나고 있다고 평양 소식통은 말했다. 북한 종합시장에서 대동강맥주 1캔 가격은 북한 돈 9,000~10,000원으로 결코 싼 가격은 아니다. 이 가격이면 쌀 2kg을 살 수 있다.

농촌지역 주민들의 주류 소비는 도시 주민들과 조금 다르다. 북중무역 차단 이후 북한 당국이 술 담그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주민 교양에서 강조 하기도 했다. 경제적으로 중하층 주민들일수록 소득이 감소하면 술을 만드는 횟수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사서 먹는 것 보다 만들어서 먹는 것이 비용 면에서 더 싸고, 또 만든 술을 판매해서 추가 소득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 종합시장에서는 다양한 술들이 팔리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가정에서 만들어 파는 ‘민주(民酒)’의 가격이 가장 싸고 <백두산 들쭉>이나 <칠보산 송이버섯>, <개성 고려인삼>, <강계 포도> 등 특산물을 이용하여 만들어 파는 술들은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다(NK투자개발, 2021a, p.41).

## 9. 의류와 신발류

의류가 국가공급 중심이던 시절에는 북한 주민의 의류는 획일화된 측면이 있다. 특히 북한은 공공분야 종사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단체 유니폼화 된 의류가 대부분이었다. 국가보위성 사회안전성 등 사범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폴색, 철도 부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곤청색, 학교 여교사들은 치마저고리 등이 정형화된 의복이었다. 또 노동자들의 출근 복장도 소속 직장별로 규격화되었다. 대학생들과 소학교,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 학생들도 비슷한 교복을 입는다.

북한은 주민들을 출신성분과 사회 성분을 고려해 크게 중앙공급대상과 일반공급대상으로 나눈다(NK투자개발, 2021a, p.42). 공급 관련 등급도 매일공급, 1주 공급, 2주공급, 인민반공급 등으로 대상을 구분하고, 평양과 도시, 지방 도시, 농촌지역에 따라 공급에 차이를 두었다. 주요 간부층과 평양시민 등 등권층에는 필요한 양만큼 수시로 배급하지만, 지방의

일반 주민들에게는 공급 여력이 될 때만 하는 등 정책 차별을 두고 있다.

북한의 전통적인 공급체계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은 인민반을 통해 공급표를 발급아 국영상점에서 옷감이나 의복을 국정 가격으로 구매하게 된다. 의복 공급 역시 중앙공급대상자와 일반공급 대상자로 나누고 급수에 따라 차별이 있었다. 간부층과 예술가, 기자, 교원 등 특수 집단은 일반주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품질 좋은 옷감이나 의복을 공급받았다. 급수가 낮은 일반 노동자와 농민은 공급 의류의 품질과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학생들의 교복은 국가공급품이었다. 모자, 장갑, 목도리, 양말, 신발 등은 자유 판매품으로 개인의 임금을 이용해 구입하는 게 기본이다.

그러나 1990년대 국가공급 붕괴로 인해 의복 공급은 식량 배급보다 먼저 중단됐다. 식량난에 직면한 일반 주민들이 가장 먼저 시장에 내다 판 것 중 하나가 바로 의복이다. 이후 2000년대 시장화 추진 이후 대부분 의복은 종합시장에서 구매하거나 개인 거래로 해결하고 있다. 종합시장이 들어선 이후에는 의복의 수입과 판매가 활성화됐다. 의복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증가에 따라 의복과 관련한 유행도 형성됐다. 특히 한국 드라마와 영화가 주민들 사이에 유행하면서 젊은이들과 중년 여성들 사이에 한국 혹은 중국의 트렌드를 추종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다. 종합시장과 국가 유통망에서 판매되는 옷의 대부분은 중국산 저가 의복이었으나, 김정은 집권 이후에는 북한 내 의복 생산이 늘어나면서 국산품의 유통량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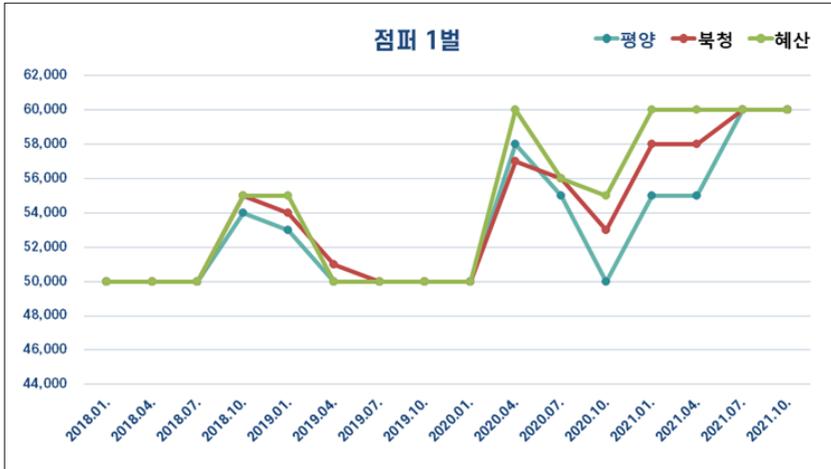
이미 김정일 시대부터 중국에서 많은 양의 중고 의류가 수입되며 북한 주민들의 의류 소비가 다양해졌다. 김정은 시대에는 중국산 기성복의 대량 수입뿐 아니라 북한 국영기업소들도 다양한 옷감과 의류를 생산하고 있다. 특히 리셀주 등장으로 유행을 추구하는 여성들이 소비가 늘어났다. 머리 스타일과 악세사리까지 다양한 수요가 발생했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여성들이 체형을 드러내는 옷을 입거나 앞부분이 많이 트인 옷을 입으면 거리 단속대상이었지만, 최근에는 무릎 위까지 올라간 치마나 목 아래가 노출된 하절기 상의를 선택하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다. 아동용, 청소년용 의류도 과거보다 상대적인 가격이 비싸졌다.

다만, 남성들의 경우 여전히 검은색이나 곤청색 계열의 옷을 주로 입고 있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 의류의 경우 전국적인 가격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단일 기성품이 많지 않은데, 남성들이 흔히 입는 인민복 점퍼의 경우 전국적으로 고른 가격을 보인다. 종합시장이나 국영상점에서 남성용 인민복 점퍼가 북한 돈 5만원~7만원 수준에 팔리고 있다(NK투자개발, 2021a, p.42). 가격의 차이는 주로 옷감 재질에서 오는 것이다.

[그림 3-7] 북한 평양·북청·혜산의 점퍼 가격 추이(2018-2021)

(단위: 북한 원)



자료: NK투자개발. (2021a). 북한 가계 생계비 조사. 내부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북한 주민의 의류 선택 트렌드는 다양해진 의류 수요를 해소할 만큼 상당한 의류공급이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을 가능케 한다. 김정은 시대에는

북한의 의류 생산 능력뿐 아니라 디자인 능력도 전반적으로 발전한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배경이 있다. 우선 외화벌이 차원에서 중국에 나가 의류공장에서 일하다 돌아온 숙련공들이 있다. 다음으로 중국 기업들의 임가공 위탁을 받은 국영공장에서 근무하며 디자인과 재봉과 관련된 숙련기술을 획득한 사람들이다.

북한 주민들의 생필품에는 신발도 있다. 북한은 포장된 도로가 많지 않고 하루 도보량이 자체가 많기 때문에 신발 소비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북한 주민들은 도시 거주자보다 농촌 거주자들이 신발과 양말 구매가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한다. 해산소식통은 “농촌 사람들은 도보 활동 범위가 도시 사람들보다 넓고 이동시간도 많다.”면서 “농촌사람들이 신발이나 양말을 더 자주 구매한다.”고 말했다.

신발과 양말은 시장 가격은 도시와 농촌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씨비차’ 등의 물류 이동 수단이 늘어나면서 공산품에 대한 지역 간 가격 차이가 상당 부분 해소된 탓이다. 신발의 경우 과거에는 북한 돈 5,000원 전후의 상품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에는 수만 원~수십 만 원짜리도 팔린다. 다양한 기능과 내구성을 가진 중국산 제품의 수입이 늘어난 것이다. 양말은 저가의 중국산 수입품보다는 내구성이 좋은 중국산 수입품이나 북한에서 생산된 제품이 더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한다. 양말 1켤레 가격은 일반적으로 북한 돈 5,000원~10,000원 수준이다(NK투자개발, 2021a, p.43).

## 10. 주거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주택은 아파트와 단독주택, 땅집, 하모니카 주택 등으로 분류된다. 북한 주민들의 실제 주택 마련 방법은 크게 ▲국가

선물 ▲국가공급 ▲개인구매 ▲증여 등으로 구별할 수 있다. 국가선물은 말 그대로 최고지도자나 국가에서 특정한 주민들에게 포상 개념으로 주는 특별 혜택이다. 국가공급은 거주지 국가기관이나 소속 기업소에서 거주권을 승인해주는 형식이다. 연합기업소 혹은 1, 2, 3급 등 중앙기업소들은 자체로 주택을 건설할 수 있고, 소속 노동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다만 건설비용 문제 때문에 실제로 지역 행정이나 국영기업소에서 주민 공급용으로 신규 주택을 건설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 농업 부문에서는 각 지역의 협동농장경영위원회 산하 농촌건설대가 존재하고 있는데, 협동농장 농장원에게 문화주택을 건설해 공급할 의무가 있다. 이 부분에도 건설비용 때문에 신규 공급이 거의 없다. 문화주택의 형태는 지역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30평대 단독주택이나 1동 2세대의 25평대 주택들이 일반적이다. 북한 문화주택은 주방, 방 2개, 외부창고 1개, 내부창고 1개가 보편적인 구조로 알려져 있다.

북한은 만성적인 신규 주택 공급 현상을 겪고 있다. 토지와 주택 모두 국가 소유로서 개인이 신규 주택을 건설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2000년대 시장화 현상으로 개인 소득이 증가하면서 신규 주택 혹은 더 나은 주택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다. 주거에 더 많은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2000년대 중반부터 ‘집테크’라고 불리는 개인 주택 거래 중계자가 출현했다. 김정은 시대에는 돈주와 같이 자산을 축적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더 좋은 주택을 구매하거나 아예 신규 주택을 건설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평양과 사리원, 해주, 원산, 함흥, 평성, 혜산 등 북한 대부분 도시에서는 주택매매가 비공식적으로 벌어지고 있고, 일부 농촌에서도 주택 거래가 빈번하다. 1500위안(元) 수준의 상대적으로 저렴한 농촌 주택부터 20만 달러 이상의 비싼 가격에 거래되는 도시 아파트까지 거래되는 주택의 유형과 가격은 매우 다양하다(NK투자개발,

2021b, p.47).

주택의 취득 방법이 무엇이든, 모든 주택에는 ‘주택사용료’가 책정되고 이는 전국적으로 일괄 징수되고 있다. 농촌에서도 해당 인민위원회에 주택사용료를 걷어간다. 수도물 사용료는 공동 수도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수도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우물을 사용하는 농촌주택은 납부 의무가 없다. 주택의 유지보수는 국영 부문의 서비스를 공급받는 것이 원칙이나, 실제로는 거주자가 자신의 돈으로 보수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 11. 가전제품

북한 주민들이 주거에 소비하는 내구재 ‘5장(機)6기(機)’라는 표현으로 압축되어 있다. 5장은 이불장, 옷장, 식장(食機), 장식장, 신발장을 뜻하며, 6기는 텔레비전 수상기, 재봉기, 사진기, 냉동기, 선풍기, 녹음기이다. 때로는 세탁기를 6기에 넣기도 했다. 그러나 2000년대 시장화 현상에 따라 중국산 수입품이 유통되면서 5장6기의 의미와 구성도 변화해왔다. 음성 녹음과 음악 재생이 되는 녹음기를 밀어내고 DVD플레이어를 뜻하는 ‘녹화기’가 선호되더니, 이후에는 변압기나 15V 자동차 배터리, 태양광 패널 등이 생활 필수 가전으로 포함됐다.

북한 주민들의 전체적인 소득이 향상되면서 휴대전화가 생활필수품으로 자리 잡았고, 중산층 이상에서는 컴퓨터, 에어컨, 자동 세탁기 등의 구매가 늘었다. 이밖에 전기밥솥, 진공청소기, 가스레인지, 전자레인지, 드라이기, 믹서기, 자동면도기 등도 김정은 시대에 구매가 늘어난 제품들이다.

북한 주민들이 분기 혹은 년 단위로 납부하는 전기요금은 시장 물가에 비해 매우 저렴한 가격이다. 북한 가구 당 전기세 부담은 2018년까지는

세대별로 월평균 북한 돈으로 17원~33원 수준이었다(NK투자개발, 2021a, p.45).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전기세가 마지막 국정 가격”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였다. 김정은 시대에 대중무역을 통해 태양광 패널이 대거 수입되고, 주민들의 전기 이용이 늘어나게 되면서 북한 당국은 전기세 인상을 시도했다. 북한은 전력 낭비를 줄인다는 명목으로 2019년 말부터 양강도 등 일부 지역을 시작으로 새로운 요금체계를 시행하고 있다. 새로운 요금체계는 가전제품 보유수를 고려해 요금을 차등화했다. 현재 북한 주민들의 가정에서 사용하는 텔레비전, 녹화기, 세탁기, 밥솥 등은 북한 돈 1000원에서 3000원까지 기기별로 차등 적용된다.

## 12. 위생용품

북한 시장에 북한산 비누와 샴푸 등 일반 위생용품들이 대량 등장한 시기는 2010년 중반부터이다. 이전까지는 중국산 저가 제품들 위주로 시장에서 소비됐다. 북한이 경공업 분야에 대한 생산을 강조하게 되면서 샴푸 린스 주방세제 등 위생용품과 생리대 등도 북한산이 유통되고 있다. 현재 십 여종의 치약들과 다양한 생리대가 유통되고 있어 북한 주민들의 위생용품 소비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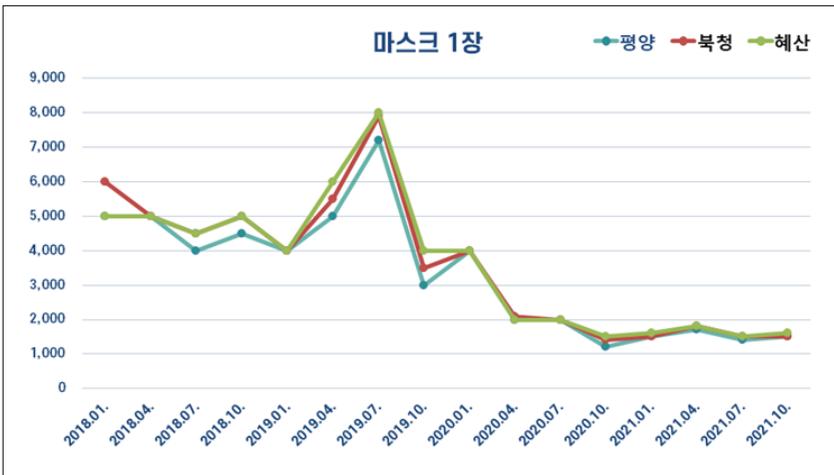
## 13. 보건 의료

북한의 보건의료 체계는 무상 치료이며 예방치료가 기본이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보건법 제2~3조). 1990년대 이후 사실상 개인이 의료진에게 비용을 지불해야 제대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무상 치료 정책이 고수되고 있다. 김정은 시대에는 원칙에 따라

의약품 판매의 국가 통제를 복원을 시도하고 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의약품관리법 제38조 참조). 그러나 여전히 종합시장 매대나 국영상점에서 의사나 약사의 처방전 없이 다수의 의약품이 판매된다.

[그림 3-8] 북한 평양·북청·혜산의 마스크 가격 추이(2018-2021)

(단위: 북한 원)



자료: NK투자개발. (2021a). 북한 가계 생계비 조사. 내부 자료.

## 14. 교통

김정은 시대의 특징 중 하나는 대중교통의 발달이다. 대중교통은 국영 부문의 발달과 함께 ‘씨비차’로 불리는 개인 서비스와 개인들의 교통수단 소유 증가 측면도 살펴야 한다. 자전거, 오토바이, 승용차, 승합차, 버스, 화물차 등 거의 모든 종류의 운송 수단이 증가했다. 특히 화물차량과 택시 등의 증가는 가계의 소득 증가뿐 아니라 가계의 교통비용 지출 증가로 이어졌다. 신의주 소식통이 소개하는 한 택시 기사는 코로나 이전까지 매 달 2,500 ~4,000위안 정도의 영업이익을 얻었다. 택시는 개인이 소유할

수 없으므로 명의를 빌린 기업소에 매달 1,000위안을 납부하면 나머지는 자기 몫이 됐다고 한다. COVID-19 방역 조치로 주민 이동이 줄어들면서 최근 영업이익은 매달 2,000~3,000위안 수준으로 떨어졌다(NK투자개발, 2021a, p.46). 그러나 이 소식통은 “그래도 택시 기사들은 여전히 먹고 살 만큼 벌고 있다.”고 말했다.

대중교통의 증가에 따라 유류 가격에도 변화가 있었다. 헤산 소식통에 따르면 2021년 10월 기준 헤산시장 주변에서 거래되는 휘발유는 북한 돈 9,900원(kg), 디젤유는 7,500원이다.

## 15. 통신 및 미디어기

김정은 시대의 변화 중에 북한 주민들의 미디어기기 소유도 눈에 띄게 늘어났다. 북한의 휴대전화 가입자를 600만 명으로 추정하는 연구가 있는데, 북한 소식통들의 추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평양 소식통은 “성인 10명이 있다면 이중에 6명~7명이 휴대전화기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안전원이나 보위원 등 사법기관 종사자들이 사용하는 진달래 폰은 보안 기능이 강화된 기기이다. 신의주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출시됐던 <평양>과 <아리랑>은 북한 돈으로 480만원, 550만원 등에 판매되고 있다(NK 투자개발, 2021c, p.30).

데스크 탑 및 노트북 컴퓨터의 보유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컴퓨터는 단순한 오락 혹은 동영상 시청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대학생 등 전문 지식층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장사를 하는 사람들도 자신의 거래 내역을 컴퓨터로 기록한다. 평양 소식통은 “평양의 중앙대학 학생들은 절반은 노트북이나 태블릿을 갖고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 제3절 북한 가계의 비소비 지출

북한의 가계 지출에서 비소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 주민들의 비소비 지출로는 ▲뇌물 ▲조직 분담금 ▲이자비용 ▲개인부조금 ▲은행저축 등을 상정해 볼 수 있다(NK투자개발, 2021a, p.47).

#### 1. 뇌물

북한에는 광범위한 뇌물문화가 자리하고 있다. 실제 북한 주민들 간부들에게 바치는 뇌물을 간부에게 대신 바치는 국가 세금이라고 생각하거나, 사업상 필요경비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 뇌물은 원인과 용도에 따라 금액이 천차만별이다. 길거리 규찰대 단속 등 생활 뇌물은 북한 돈 5,000원에서 10,000원 사이, 사법상 형사책임이 부여되는 사안은 수백~수천 달러, 열차 탑승 등 공공서비스를 임의로 이용하는 경우 북한 돈 1~5만원, 사업상 편의 제공 등은 수백 달러 등이 필요하다(NK투자개발, 2021a, p.48).

#### 2. 조직분담금

조직 분담금은 노동당 혹은 노동당 외곽단체에 조직원으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다. 북한 주민은 만 16세 이상부터 정년퇴직 전까지 생애주기에 따른 직업과 체제 충성도 등을 평가받고, 〈조선노동당〉,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조선직업총동맹〉,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 등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김정은 집권 이후에 노동당 위상과 조직사업이 강화되며 외곽단체들의 조직정비가 위에서부터 시작됐다. 이런 배경에서 각 조직 분담금이 김정일 시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인상됐다. 명목 금액만 인상된 것이 아니라 분담금에 대한 징수도 정례화되고 있다고 내부소식통들은 전했다.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에 가입한 전업주부들의 경우에는 사회동원 참여비로 1일 기준 북한 돈 5,000원~ 6,000원 정도를 납부하고 있다. 1년 정액비 개념으로 일시 납부할 경우 북한 돈 25만원 수준으로 표준화되고 있다(NK투자개발, 2021a, p.48).

### 3. 이자비용

북한 가계가 지불하는 일반적인 이자 비용은 개인채무에 따른 이자이다. 북한 은행들은 개인에게 대출상품을 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서는 사금융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사금융 이자는 지역과 대상에 따라 차이가 크지만 개인 신용 수준에 따라 연리 25~40% 사이에서 합의된다(NK투자개발, 2021a, p.48).

### 4. 개인 부조

김정은 시대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호전되면 생애주기에 따른 개인 애경사를 챙기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 부조도 과거보다 활성화되어 있다. 결혼식 축의금의 경우 지인 사이에서는 50위안 전후, 친인척 간에는 150위안~200위안 사이가 일반적이다. 인맥 관리 목적이 되는 직장 내 상급자나 간부가 자녀 결혼식을 치를 경우에는 500위안, 1000위안까지 부조금이 뛰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NK투자개발, 2021a,

p.48).

장례 부조금은 결혼식 부조금보다 부담이 적은 편이다. 농촌에서는 통상 술 5kg 정도가 ‘성의표시’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현금 부조일 경우 30위안~50위안 정도가 일반적인 관행이다. 도시에서는 형편에 따라 50위안~100위안 정도로 장례 부조금을 소비한다(NK투자개발, 2021a, p.48).

김정은 시대 가계 소득 증가로 돌잔치를 챙기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북한 젊은 세대로 아이를 적게 낳는 추세라, 아이를 낳게 되면 돌잔치를 준비하는 가계가 많다. 가족 및 지인 자녀의 돌잔치의 경우 ‘옷 한 벌’을 선물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현금 부조일 경우 자신의 경제력과 상대방과의 친분을 고려하여 50위안~200위안 수준에서 액수가 정해진다.





## 제4장

### 북한 식량 생산과 식품 소비의 변화

제1절 북한 식량수급 분석

제2절 북한 식품 소비실태 분석

제3절 코로나19 이후 북한주민의 식품 소비의 변화



## 제 4 장 북한 식량 생산과 식품 소비의 변화

북한의 식량문제는 꽤 역사가 오래되었다. 처음 식량난이 외부로 알려진 때는 1990년대 중반 이른바 고난의 행군 시기이다. 그 이후 여러 차례 농업개혁과 다양한 정책사업이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5년이 넘는 기간 동안 북한 당국은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식량 부족 문제는 단순히 배고픔뿐만 아니라 다른 관련 사회경제적 문제에 직접적으로 이어져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고 있다. 북한 주민 전반적으로 영양 섭취가 오랫동안 충분하지 않은 점은 각종 질병에 취약하고 체격이 왜소해지는 등의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높아 국제사회는 그동안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하여 이들을 돕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에 따른 국경봉쇄로 대북 지원사업이 중단 또는 지연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북한 주민의 생활 수준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북한 식량 및 농업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북한 농업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와 식량 증산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논의한다. 또한 식생활의 수준을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식생활 실태에 대해서도 몇 가지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이 장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먼저 북한 식량수급 분석을 통해 식량 부족분의 변화 양상을 살펴본다. 이어서 북한 주민의 식생활 실태 분석을 통해 대략적으로 식생활의 수준을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식량수급 상황과 식생활 실태로부터 도출되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 제1절 북한 식량수급 분석

북한 주민의 식생활 관련 논의에서 북한 주민이 충분한 수준의 식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식량수급 분석이다. 식량의 총 공급이 필요한 수요를 충족시키는가를 비교하여 수급 상황을 평가해 보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자료 출처별 특성에 유의하면서 식량 생산측면을 중심으로 북한 식량수급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북한의 식량 생산 현황

북한 식량 관련 논의는 식량을 정의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북한 주민의 주식은 보통 쌀, 옥수수, 감자를 조리한 음식(밥, 국수, 죽)이며 여기에 잡곡과 콩을 섞는 경우가 많다(이순형 외, 2020, p.172~173). 주식은 지역과 계절에 따라 크게 차이가 있다. 황해남북도, 평안남북도 등 곡창지대와 양강도, 자강도 등 북부지역은 주요 재배작물이 다르기 때문에 주식의 종류도 다르다. 또한 쌀, 옥수수 등 전년도 가을수확 작물이 소진되고 햇작물이 수확되어 분배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겨울밀과 봄보리가 주식으로 큰 역할을 한다. 이러한 특성을 종합해 볼 때, 북한의 식량은 쌀, 옥수수, 보리, 밀과 호밀, 귀리, 기장, 수수 등 잡곡, 그리고 대두와 감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한다.<sup>4)</sup>

---

4) 참고적으로 이 식량의 종류 가운데 대두와 감자를 제외한 쌀, 옥수수, 보리, 밀, 잡곡을 일컬어 곡물이라고 부름.

북한 식량수급 상황에 대한 분석과 판단은 보통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북한 식량 관련 통계자료를 추정·발표하는 기관이 많지 않으나 제시하는 수치가 다른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추정하는 기관별로 적용한 방법론과 가정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다. 여기서는 기관별 추정방법과 설정한 가정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면서 북한의 식량수급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북한의 식량 또는 곡물 생산 관련 통계는 미국 농무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이하 USDA) 산하 해외농업국(Foreign Agricultural Service, FAS)이 발표하는 자료, 유엔 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이하 FAO)에서 발표하는 자료, 한국의 농촌진흥청에서 추정하여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자료 등이 있다.

먼저, 미국 농무부는 세계농업생산(World Agricultural Production) 발간을 통해 주요 식량작물에 대한 세계 주요 생산국의 재배면적, 단위, 생산량 등을 매월 발표하고 있다. 이 중 쌀, 옥수수 등 일부 품목에 대하여 북한의 생산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 자료는 북한을 대상으로 한 종합적인 식량수급 분석에는 적합하지 않다.

FAO는 북한 정부가 유엔에 제출한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농업 생산 관련 통계를 작성·발표하고 있다. FAO의 통계 작성 목적 중 하나가 식량 부족을 겪는 지역이나 국가에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현황 파악을 위한 정확한 통계자료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과거 북한이 제공한 자료가 부정확하거나 의도적으로 왜곡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 통계자료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성영상 분석, 현장조사 등을 통해 북한이 제공한 자료를 검증하고 보완하고 있다.

FAO의 북한 농업 생산 통계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제공된다. 하나는 FAOSTAT이라는 통계 시스템에서 확보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북한을

대상으로 식량사정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에서 작성되는 보고서<sup>5)</sup>와 리포트<sup>6)</sup>를 통해 제공된다. 북한의 식량수급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의 연구에서는 FAOSTAT보다는 보고서와 리포트를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북한을 대상으로 특정하고 있고, FAO와 WFP(World Food Programme, 세계식량계획) 합동조사단의 현장실사와 여러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작성됨에 따라 북한 농업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고 신뢰성에서 강화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도 이 자료를 활용하여 북한의 식량수급 상황을 분석한다.

한국의 농촌진흥청은 북한지역의 기상과 병충해 발생 및 비료수급 상황, 국내외 연구기관의 작황자료와 위성영상 분석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북한의 식량작물 생산량을 추정한다(농촌진흥청 보도자료, 2020년 12월 18일자). 이 추정 결과는 통계청에 제공되어 통계청 북한통계에서 연도별 북한의 식량생산 통계를 발표한다. 이 자료는 FAO 자료와 함께 북한 농업 및 식량 관련 많은 분석과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다.

북한의 식량수급 분석에 들어가기 앞서, 북한 식량생산에 대한 주요 통계인 FAO 자료(CFSAM 보고서 및 GIEWS 리포트)와 통계청 자료 간 차이점을 살펴보고자 한다.<sup>7)</sup> 북한 농업 관련 거의 모든 연구에서 이 두 가지 자료가 쓰이고 있지만 연구 목적과 특성에 맞는 자료의 활용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첫째, 식량작물 구성에 있어서 두 자료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 5) 보통 'Special Report: FAO/WFP Crop and Food Security Assessment Mission (CFSAM)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북한 작황 및 식량안보 평가 특별보고서)'라는 제목으로 발간되고 있음.
  - 6) 북한에 대한 특별 리포트는 조기경보시스템(Global Information and Early Warning System on Food and Agriculture, GIEWS)을 통하여 발간되고 있음.
  - 7) 이 부분은 최용호(2020), 북한 식량 수급 분석을 위한 통계 현황과 시사점, KDI 북한경제리뷰 2020년 12월호를 인용하였음.

FAO 발간물에서의 식량작물은 앞서 살펴본 식량품목과 거의 동일한 작물을 포함하고 있다. 차이가 존재한다면 잡곡과 기타 곡물에 포함되는 작물 종류가 다를 수 있는데, 이는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다. 반면 통계청(농촌진흥청 추정) 자료는 쌀, 옥수수, 서류, 맥류, 두류, 잡곡으로 식량작물을 분류하고 있는데, 이는 개별작물 단위가 아닌 류별로 분류한 것이어서 작물 구성이 정확히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판단하기 어렵다. 현재까지는 품목 구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그 구성에 따라 식량작물의 범위가 FAO 자료 등과 차이가 클 가능성도 있다.<sup>8)</sup>

둘째, 수확된 식량작물 집계 기간에 있어 두 자료는 차이가 있다. FAO 자료에서의 1년은 전년도 11월부터 당해연도 10월까지, 즉 유통연도(marketing year)이다. 이는 전년도 가을 수확량과 당해연도 봄 수확량을 집계한 것으로, 이 생산량은 해당 기간 소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반면, 통계청 자료는 당해연도 1월~10월 기간 생산된 식량을 집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연도별 식량 생산량은 해당연도 봄철 생산량과 가을철 생산량을 합한 것이다. 봄철 생산량은 그 해에 소비되지만 가을 수확량은 다음 해에 소비되기 때문에 이 자료를 활용하여 식량수급을 분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셋째, 식량으로 환산하는 데 있어 차이가 있다. 식량은 앞서 정의한 바와 같이 여러 작물로 구성되기 때문에 한 가지 품목으로 등치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두류(대두)와 서류(감자)는 곡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을 곡물과 등치시키기 위해서는 각 품목에 일정한 비율을 적용하여 곡물 상당치로 환산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대두되는 개념이 곡물환산율이다. 자료에 따라 그리고 연구에 따라 이 곡물환산율은 다르게 적용되고

8) 예를 들어, 통계청 통계의 경우 서류에 고구마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나, FAO 통계는 고구마를 포함하지 않음.

있어 항상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와는 별도로 작물의 생산 직후 상태와 소비하는 형태가 다른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작물별로 조곡에서 정곡으로 환산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쌀의 경우를 예로 들면, 조곡(벼)은 수확한 상태의 낱알을 말하며, 1차 도정을 통해 벼의 껍질만 벗긴 상태를 현미라고 하고, 다시 2차 도정을 통하여 현미를 정곡(흰 쌀)으로 가공하여 소비하게 된다(최용호, 2020, p.86). 벼에서 흰 쌀로 도정하는 과정에서 이처럼 필연적으로 무게가 줄어든다. 이 때문에 쌀 관련 통계에서는 정곡환산율이라는 개념이 적용된다. 쌀 이외에 다른 작물도 조곡 상태에서 정곡으로 도정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 작물별로 정해진 정곡환산율을 적용한다. 이 정곡환산율 또한 연구자와 분석에 따라 다른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FAO의 발간물에 제시된 연도별 북한의 식량 생산량(조곡 기준)은 <표 1-1>과 같다. 2010/11년 이후 북한의 식량 생산량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면서 2013/14년과 2014/15년에는 590만 톤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 이후에는 540만~570만 톤대에 머물다가 2018/2019년에는 약 485만 톤 수준으로 급감하였다. 2018/2019년 식량생산량이 급감한 이유에 대하여 FAO/WFP 보고서에서는 7~8월에 나타난 긴 가뭄과 이상고온 현상, 대북제재로 인한 연료, 전력, 농기자재 투입 감소의 영향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FAO한국협회, 2019, p.14).

2019/20년에는 2018/2019년과는 대조적인 양상이 나타난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최고의 실적을 기록하게 되는데, FAO(2021a, 2021b)에 나타난 정보로 분석해 보면 무려 685만 톤의 식량을 생산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2019/20년 685만 톤의 생산량은 2018/2019년보다 약 200만 톤, 이전 최고치를 기록한 2013/14년의 593만 톤보다 약 92만 톤이 많은 수치이다. 이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다소 무리가 있

다. 이 규모는 모든 생산 여건이 최상이었다고 하더라도 최근 북한의 역량을 감안했을 때 너무 과도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2020/21년에는 식량 생산량에 있어서 또다시 반전이 일어난다. 2020/21년 식량 생산량은 556만 톤으로, 이는 전년 대비 129만 톤이 감소한 수치이다. FAO(2021b)에 따르면, 식량작물 재배면적이 전년 대비 다소 증가하였으나 홍수와 태풍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어 전년 대비 생산량이 급감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2020년 초에 발생한 코로나19 사태도 북한 농업생산의 부진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국경봉쇄로 인하여 비료 등 필수 농기자재가 충분하게 수입되지 않아 생산성 악화에 상당하게 작용하였을 것이다.

〈표 4-1〉 FAO 북한 식량 생산량 통계

(단위: 천 톤)

구분	2010 /11	2011 /12	2012 /13	2013 /14	2014 /15	2015 /16	2016 /17	2017 /18	2018 /19	2019 /20	2020 /21
가을 수확량 (A)	4,440	4,750	5,031	5,267	5,347	4,778	5,412	5,105	4,546	6,420	5,095
벼	2,426	2,477	2,681	2,901	2,626	1,946	2,536	2,383	2,088	2,931	2,113
옥수수	1,683	1,857	2,040	2,002	2,349	2,288	2,195	2,200	1,876	2,566	2,214
기타 곡물	19	49	59	66	54	156	156	151	197	171	161
감자	158	121	84	135	158	168	222	148	249	435	377
대두	154	245	168	163	160	220	282	223	135	317	230
겨울·봄 수확량 (B)	380	224	399	366	269	448	332	404	307	428	466
밀·보리	119	71	103	77	36	133	55	83	57	144	146
감자	261	153	296	289	233	314	277	321	250	284	320
경사지 생산량 (C)	150	220	220	220	220	203	20	n/a	n/a	n/a	n/a

118 남북한 사회격차 완화를 위한 북한의 의식주 생활 지표 분석

구분	2010 /11	2011 /12	2012 /13	2013 /14	2014 /15	2015 /16	2016 /17	2017 /18	2018 /19	2019 /20	2020 /21
텃밭 생산량 (D)	75	75	75	75	75	n/a	n/a	n/a	n/a	n/a	n/a
합계 (A+B+ C+D)	5,045	5,269	5,725	5,928	5,911	5,429	5,764	5,510	4,853	6,848	5,561

- 주: 1. 모든 작물의 생산량은 조곡 기준.  
 2. 2019/20년의 통계는 FAO(2021g, 2021h)를 토대로 저자 추정.  
 자료: 각 연도 FAO/WFP CFSAM 보고서 및 FAO의 GIEWS 리포트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1) FAO 한국협회(2011-2013). 북한의 작황 및 식량안보평가 특별보고서  
 2) FAO 한국협회. (2019). 2019 FAO/WFP 북한 식량안보 긴급 평가보고서  
 3) FAO. (2015).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Outlook for Food Supply and Demand in 2014/15(November/October)  
 4) FAO GIEWS.: FAO. (2017)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Prolonged Dry Weather Threatens the 2017 Main Season Food Crop Production: FAO GIEWS.  
 5) FAO.(2018)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Food Supply and Demand Outlook in 2017/18(November/October): FAO GIEWS

한편, 농촌진흥청이 추정(통계청 발표)한 북한의 식량 생산량(정곡 기준)은 <표 4-2>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3년, 2014년, 2016년의 경우 비교적 양호한 기후조건 등으로 인하여 460만 톤이 넘는 생산량을 기록하였다. 반면에 2015년과 2018년은 극심한 가뭄의 영향으로 인해 450만 톤대의 생산량을 기록하였다. 2020년은 국제사회 대북제재, 코로나 사태, 수해의 이른바 3중고의 영향으로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가장 작은 규모의 생산량을 기록하였다.

〈표 4-2〉 통계청 북한 식량 생산량 통계

(단위: 천 톤)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쌀	2,037	2,101	2,156	2,016	2,224	2,192	2,205	2,240	2,020
옥수수	1,732	1,762	1,722	1,645	1,702	1,667	1,498	1,520	1,510
서류	560	582	558	502	550	532	544	570	540
맥류	187	176	174	164	174	145	154	150	160
두류	142	165	171	164	154	146	140	140	150
잡곡	18	21	22	21	19	19	17	20	20
합계	4,676	4,807	4,803	4,512	4,823	4,701	4,558	4,640	4,400

주: 모든 작물의 생산량은 정곡 기준.

자료: 통계청(KOSIS) 북한통계([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2\\_02&vwcd=MT\\_BUKHAN&parmTabId=M\\_02\\_02](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2_02&vwcd=MT_BUKHAN&parmTabId=M_02_02))에서 21.10.1. 인출

FAO 자료와 통계청 자료에 나타난 통계수치는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없다. 전술한 바와 같이 두 자료는 각기 다른 기준을 통계를 작성하는 데 있어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FAO에서는 전년도 가을 수확량과 당해연도 봄 수확량을 합산하고 있는 반면, 농촌진흥청(통계청) 자료는 당해연도 봄과 가을 수확량을 집계한 결과이다. 또한 〈표 4-1〉의 FAO 자료는 조곡 기준인 반면, 〈표 4-2〉의 통계청 자료는 정곡 기준이며, 곡물환산율과 정곡환산율의 대상 작물과 적용 비율도 차이가 있다. 정곡환산율의 경우 같은 벼에 대하여 FAO는 65~66%, 농촌진흥청은 72%를 적용하였다(최용호, 2020, p.88). FAO는 벼에 대해서만 정곡환산율을 적용한 반면, 농촌진흥청은 모든 식량작물에 정곡환산율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최용호, 2020, p.88). 곡물환산에 있어서 FAO는 대두에 120%를 적용한 반면, 농촌진흥청의 경우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알 수 없다(최용호, 2020, p.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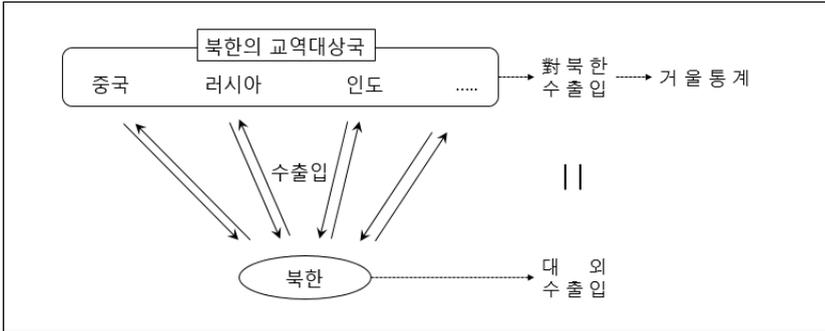
## 2. 북한의 식량 도입 현황

북한이 식량수급에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급 측면에서 북한 내부 생산만으로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도입이 필수적이다. 외부로부터의 도입은 다른 국가(예: 중국), 국제기구(예: WFP),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형태와 상업적으로 수입하는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통계상으로 외부 지원과 상업적 수입의 통계가 구분되어 각각 이용 가능한 것이 이상적일 것이나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다. 식량지원 통계는 과거에 WFP의 International Food Aid Information System (INTERFAIS)<sup>9)</sup>에서 제공해 왔다. 그러나 2012년 이후 국제사회로부터 북한에 식량이 지원된 물량에 대해서는 통계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상황을 하는 데 있어 활용성이 매우 떨어진다.

북한의 식량 수입 통계는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기 때문에 대안으로 국제무역 통계시스템에서 거울통계 개념을 활용하여 북한의 무역대상국 식량품목 수출을 분류·집계하는 방식으로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통계는 북한을 무역파트너로 하는 각 국가의 세관을 통과한 품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보통 대북 지원의 형태인지 상업적 수입의 형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대북 지원과 상업적 수입이 합산된 수치이기 때문에 도입량 추정치로 활용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최용호, 2020, p.89).

9) 이 자료에 대해서는 WFP. (2021c). Food Aid Information System (<https://www.wfp.org/fais>에서 2021. 10.24. 인출.)을 참조할 것.

[그림 4-1] 거울통계 개념도



자료: 저자 작성.

북한의 식량 수입 통계 작성을 위하여 거울통계 구축에 가용한 자료로는 UN, IMF, FAO, GTA(Global Trade Atlas), 한국무역협회(KIT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에서 제공하는 무역자료가 있는데, 자료별로 데이터 제공기간, 국가 포함 범위, HS단위, 데이터 수집방법 등에 차이가 있어 활용 전에 각 자료의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최용호, 2020, p.90).

북한의 식량 수입 현황 파악을 위해서는 HS코드로 분류된 품목에서 식량 품목을 구분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이 작업 과정에 따라서 통계 수치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곡물 그 자체로의 밀, 밀가루, 밀로 만든 식품(예: 국수, 빵)을 처리하는 문제, 무역액 기준이 아닌 물량으로 통계 산출이 가능한지 여부 등이 제기될 수 있다(최용호, 2020, p.90).

〈표 4-3〉은 UN Comtrade 자료에서 북한의 식량품목 수입 자료를 추출하여 정리한 것이다. 김정은 시대를 중심으로, 정권이 출범한 2012년에 북한은 약 65만 톤의 식량을 북한은 외부로부터 도입했다. 이후 그 규모는 급감하여 2016년에는 약 10만 톤만을 수입했다. 하지만 2017년부터 북한의 식량 수입량은 다시 늘고 있는데, 2018년에는 25만 7천 톤,

2019년에는 454만 4천 톤의 식량을 외부에서 확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2020년은 코로나 사태에 따른 국경봉쇄로 식량품목이 수입되지 않았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최근 5년(2015~2019년) 북한이 수입한 식량 품목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한 품목은 밀과 쌀이다. 밀(밀가루 포함)은 2015~2019년 평균 약 59.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쌀은 약 26.4%, 옥수수는 약 9.5% 순이다.

〈표 4-3〉 북한의 식량품목 수입 현황

(단위: 천 톤)

구분	식량 합계	쌀	옥수수	밀	보리	감자	대두
1995	341.4	97.2	44.5	154.3	3.8	0.0	41.7
1996	644.0	78.7	140.1	397.6	1.5	0.1	26.1
1997	1,251.4	167.0	685.5	315.5	8.1	0.6	74.7
1998	728.9	158.9	251.4	278.1	8.8	0.3	31.4
1999	407.1	104.2	172.4	73.3	6.4	5.3	45.4
2000	650.3	349.1	197.5	52.5	3.0	2.2	46.0
2001	1,636.1	598.7	924.8	61.9	2.0	2.6	46.1
2002	711.1	287.6	192.2	179.4	1.9	0.9	49.1
2003	615.2	218.0	143.9	179.1	27.7	2.3	44.2
2004	941.2	222.0	265.5	200.2	1.3	2.1	250.1
2005	640.7	153.3	267.5	170.9	1.6	2.6	45.0
2006	371.5	39.0	150.1	143.2	1.8	2.0	35.4
2007	588.8	293.0	71.2	179.5	1.1	0.7	43.4
2008	367.6	34.3	223.1	59.9	1.1	0.3	48.9
2009	377.0	79.4	134.7	135.7	1.2	0.0	25.9
2010	365.8	84.5	87.6	166.3	1.5	0.0	25.8
2011	482.7	93.3	148.4	214.1	0.4	0.2	26.3
2012	646.0	50.3	337.0	236.7	1.6	0.8	19.7
2013	365.2	49.6	105.7	187.9	1.7	4.4	15.9
2014	254.8	69.0	17.2	163.1	1.5	0.3	3.6
2015	105.0	17.1	9.9	66.3	1.2	0.8	9.7
2016	99.3	42.0	3.2	48.6	1.1	0.0	4.4
2017	170.2	35.9	35.7	95.7	1.3	0.1	1.4
2018	257.1	43.6	9.5	199.1	2.0	0.3	2.7
2019	454.2	161.7	46.2	241.5	2.6	0.3	1.9
2020	0	0	0	0	0	0	0

자료: UN Comtrade. UN Comtrade database. <http://comtrade.un.org>에서 21.10.1. 인출

### 3. 북한 식량 수요량 추정

다음으로, 북한의 식량 수요량을 추정한다. 추정방법에 있어서 식량을 소비 용도별로 구분하여 품목별 소요량을 추정하고 이를 합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FAO에서도 북한 식량수급 분석에서 이 방식을 따르고 있다. 기본적으로 다양한 추정자료와 가정을 토대로 분석하기 때문에 연구자에 따른 편차가 발생하기 쉽다(최용호, 2020, p.91).

북한에서 식량은 주민들의 식용, 가축사육을 위한 사료용, 작물재배를 위한 증자용으로 소비되며, 작물수확과정에서의 손실도 반영하여 소요량을 추정한다(최용호, 2020, p.91).<sup>10)</sup>

첫째, 연도별 식용으로 소요되는 식량의 물량은 인구 데이터에 품목별 식품수요량의 가정을 적용하여 추정할 수 있다. FAO 분석에서는 최근 식품 섭취량, 식량품목별 가용성 등 북한의 실정을 반영하여 해당연도에 대한 1인 평균 식량 소비량을 설정한다. 2019년 보고서에서는 2019년 1년 동안 1인 평균 175kg의 식량을 소비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는데, 이는 1인 1일 480g, 칼로리 기준으로는 1,700kcal에 해당하는 수준이며, 여기에 추가적으로 채소, 고기, 생선, 과일 등을 섭취하여 필요한 영양소와 칼로리를 보충한다고 가정하였다(최용호, 2020, p.91). 이를 2018년 당시 북한의 식량작물 생산 규모와 구성을 고려하여 환산하면, 식량품목별 1인당 소비량은 쌀 63kg, 옥수수 82kg, 밀·보리 8.5kg, 기타 곡물 6kg, 감자 10.5kg, 대두 5.4kg으로 구성할 수 있다(최용호, 2020, p.91). 이 식량 품목별 1인당 소비량을 마지막으로 북한 총 인구에 적용하여 식량으로 소요되는 식량의 총량을 산출한다.

10) FAO 발간물에서는 과거 비축량도 고려하였으나 최근에는 정보의 제약과 수급 상황 고려 등으로 비축이 없다고 가정하고 있음.

식량의 식용소요량 추정과정에서는 북한 주민의 식품 소비에 있어 식량의 비중에 대한 중요한 쟁점이 제기될 수 있다. FAO 분석에서는 성인 1인이 1,700kcal의 열량을 식량을 통해 섭취하고 나머지 열량은 식량 이외 식품(채소, 고기, 생선, 과일 등)을 통해 섭취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찬우(2019)는 FAO 분석이 설정한 식량의 비중이 식품 소비에 있어 과도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성인 1인 1일 필요열량을 2,130kcal로 볼 경우,<sup>11)</sup> FAO는 75%에 해당하는 열량을 식량에서 섭취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는데, 이는 북한의 현실과 다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최근 북한에서는 비식량품목의 생산이 늘고 있기 때문에 이 비식량 식품의 가용성 증가에 따라 식량 소요량이 실제로는 줄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식량의 비중을 예를 들어 65% 수준으로 고려할 경우 식량이 총량 기준 약 480만 톤 정도만 있으면 되어 식량 수급균형이 달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찬우(2019)의 주장이 현실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알려져 왔던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 부족’과는 정면으로 배치되게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보다 풍부한 정보, 조사, 분석 등이 이루어져서 후속 연구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식량작물은 일반적으로 가축 사료용으로도 소비된다. 가축 사료용 총량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각 연도에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와 규모를 파악한 후, 가축 종류별로 요구되는 곡물의 소요량을 적용한다. 연도별 FAO 발간물을 살펴보면, 가축 사료량 수치는 북한 농업성이 FAO에 제공한 필요 물량을 그대로 제시하고 있다. FAO 설명에 따르면, 북한 농업성은 그 시점 곡물 수확량에 따라 사료용으로 이용가능한 곡물의 종류와 규모를 산정하여 FAO/WFP 공동조사단에 제공했다고 한다. 하지만 식

11) 일반적인 성인 1인 1일 권장 칼로리는 남성 2,500~2700kcal, 여성의 경우는 2,000kcal임.

량 생산량과 사료용 소비량 사이에 상관관계는 크지 않다. 이에 따라 사료용 규모에는 곡물 수확량 외에도 축산정책, 먹거리 다양화 정책 등 강조하고 있는 정책적 조치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셋째, 다음 시기 작물재배의 종자로 사용하기 위해서도 생산된 식량작물의 일부가 소요된다. FAO 발간물에 따르면, 작물별 파종에 요구되는 단위면적(1ha)당 수량(kg)에 작물별 목표 식부면적을 적용하여 종자용 소요 총량을 추정하고 있다. 작물별로 단위면적당 필요수량(kg/ha)을 보면, 벼(97.5), 밀·보리(200), 기타 곡물(200), 대두(60)의 경우 적용 수치가 연도별로 같은 반면, 옥수수과 감자의 경우는 연도별로 다르다. 이는 종자용 수요 추정치에 대한 신뢰성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된다.

〈표 4-4〉 FAO 분석에 제시된 작물별 파종에 필요한 단위면적당 수량

(단위: kg/ha)

구분	2010/11	2011/12	2018/19
쌀	97.5	97.5	97.5
옥수수	45	100	51
밀·보리	200	200	200
기타 곡물	200	200	200
감자	625	500	500
대두	-	60	60

자료: 다음의 각 연도 FAO/WFP CFSAM 보고서 및 FAO의 GIEWS 리포트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 1) FAO, WFP. (2010, 2011, 2012, 2013). Special report
- 2) FAO/WFP crop and food security assessment mission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Rome: FAO, WFP. <https://www.fao.org/common-pages/search/en/?q=FAO%2FWFP%20crop%20and%20food%20security%20assessment%20mission%20to%20the%20Democratic%20People%27s%20Republic%20of%20Korea>에서 2021. 10.24. 인출.
- 3) FAO (2015)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Outlook for Food Supply and Demand in 2014/15(November/October). FAO GIEWS. <https://reliefweb.int/report/democratic-peoples-republic-korea/giews-update-democratic-peoples-republic-korea-outlook-food>에서 2021.10.24. 인출
- 4) FAO (2016)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Outlook for Food Supply and Demand in 2015/16(November/October). FAO GIEWS. <https://www.fao.org/3/i5572e/i5572e.pdf>에서 2021.10.24. 인출.

- 5) FAO (2017)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Prolonged Dry Weather Threatens the 2017 Main Season Food Crop Production. FAO GIEWS. <https://www.fao.org/3/i7544e/i7544e.pdf>에서 2021. 10. 25. 인출.
- 6) FAO (2018)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Food Supply and Demand Outlook in 2017/18(November/October). FAO GIEWS. <https://www.fao.org/documents/card/en/c/CA0363EN/>에서 2021. 10. 14. 인출.

넷째, 식량작물은 수확에서 소비에 이르는 과정에서 많은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식량 수요량 추정에 있어 수확 후 손실량을 반영한다. 이 같은 수확 후 손실(Post-Harvest Losses, PHL)이 북한에서는 연료, 전력, 농기계 및 부품 등 공급이 부족하여 적시에 곡물이 운반되거나 적절하게 저장·가공되지 못하여 발생한다. 또한 열악한 저장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도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북한 농업에서 수확 후 손실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이다. 양호한 기후 여건으로 생산량이 증대되어도 수확 후 손실로 상당한 양의 수확물을 잃고 있으며, 여기에는 다양한 원인이 작용한다. 대부분의 협동농장은 고정식 탈곡기를 보유하고 있다. 수확물은 탈곡장까지 운반되어야 하는데, 보통 달구지를 사용한다. 이 과정은 몇 일에서 몇 주까지 지연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아 손실율을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다. 협동농장에서 이동식 탈곡기를 보유하여 수확물 탈곡에 필요한 시간을 줄인다면 수확 후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다. FAO한국협회(2019)에서는 이동식 탈곡기 활용에 의하여 수확 후 손실을 최대 10%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최용호 외, 2021, p.137에서 재인용).

탈곡과정 이후 곡물은 건조과정을 거친 후 저장창고에 보관된다. 북한에서 곡물은 야외에 펼쳐 건조시키고 있으며, 저장시설은 온도와 습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건조나 저장과정에서는 온도와 습도를 관리하기 위한 에너지 사용이 매우 중요하다. FAO한국협회(2019)에 따르면, 감자의 경우 특히 온도와 습도에 민감한데, 저장시설 내 수확 후

손실이 최대 20%에 달한다고 한다(최용호 외, 2021, p.137에서 재인용).

가구 차원의 손실도 큰 부분을 차지한다. PDS 의존가구들은 한 달에 두 번 보름치의 식량을 분배받지만, 협동농장 가구들은 수확 후 한 두 차례에 걸쳐 1년치의 식량을 분배받는다. 가구 수준에서는 많은 양의 식량을 한꺼번에 저장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적절한 저장시설이 구비되어 있지 않아 상당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양강도 농가에서는 2톤 이상의 감자를 수령하여 다음 해 식량배급 전까지 저장하고 소비해야 하는데 이 중 상당량이 손실된다고 한다.

FAO 발간물에 따르면, 북한의 수확 후 손실 규모에 대한 추정에 큰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11년, 2012년, 2013년 FAO/WFP의 CFSAM 보고서에서는 이용되었던 과거 추정치가 상당한 편차를 나타냄에 따라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체계적인 조사의 실시를 여러 차례 권고하고 있고, 이에 따라 2014년에 평양농업대학 및 김일성종합대학이 FAO 및 UNDP와 협력하여 공동으로 쌀, 옥수수, 밀, 보리의 수확 후 손실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였는데,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2015년부터 쌀, 옥수수, 밀·보리·기타곡물에 대한 수확 후 손실률은 조정되었다(최용호, 2020, p.93). 그러나 2014년 연구에 감자와 대두의 수확 후 손실률 분석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 때문에 감자와 대두에 대해서는 과거 수치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별다른 설명없이 2019년 보고서에서 이전과 차이가 큰 손실률 수치가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는 전체 식량수급 분석에 있어서 수요량을 증가시킴에 따라 식량부족분의 규모가 커지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다.

〈표 4-5〉 FAO 분석에 적용된 수확 후 손실률

(단위: %)

구분	2010~2014	2015~2017	2018
쌀	15	15.56 또는 15.6	20~22
옥수수	15	17	
밀·보리	10	16.35 또는 16.4	
기타 곡물	10	16.35 또는 16.4	
감자	15	15	30
대두	5	5	10

주: 2019년 FAO/WFP 보고서는 곡물에 대하여 작물별로 구분하지 않고 손실율을 20~22%로 제시  
 자료: 각 연도 FAO/WFP CFSAM 보고서 및 FAO의 GIEWS 리포트.  
 1) FAO 한국협회(2011-2013). 북한의 작황 및 식량안보평가 특별보고서  
 2) FAO 한국협회(2019). 2019 FAO/WFP 북한 식량안보 긴급 평가보고서.p.  
 3) FAO(2015-2016).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Outlook for Food Supply and Demand in 2014/15(November/October) : FAO GIEWS.  
 4) FAO(2017)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Prolonged Dry Weather Threatens the 2017 Main Season Food Crop Production: FAO GIEWS.  
 5) FAO (2018)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Food Supply and Demand Outlook in 2017/18(November/October): FAO GIEWS.

#### 4. 북한 식량수급 평가

이제 위의 통계와 추정치를 토대로 전체적인 북한의 식량수급 상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생산 기간과 소비 기간이 동일해야 한다는 점에서 FAO 통계가 적합하므로 여기서는 FAO 통계의 생산량 및 수요량 추정치를 활용할 것이며, 외부 도입에 대해서는 앞에서 논의한 UN Comtrade 통계를 활용한다. 생산 측면에서 FAO 통계와 통계청 통계의 수치 차이가 크지 않아 둘 중 어느 자료를 사용하여도 결과에 큰 차이를 도출하지는 않지만, 생산된 식량이 소비되는 기간을 감안하면 FAO 통계를 활용하여 수급 분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표 1-6〉은 2010년대 북한의 식량수급 현황을 보여준다. 김정은 정권

이 출범하기 직전 연도인 2010/11년에는 약 38만 톤의 식량이 부족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0년 가을 생산량이 저조하였지만 2011년 봄 수확량이 많았고 외부 도입 규모도 비교적 커서 심각한 식량난은 겪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생산량이 증가하여 식량 사정이 점차 개선됨에 따라 2011/12년~2013/14년에는 수요와 공급 간 차이가 15만 톤이 채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 기간에는 생산량 증가 때문에 식량의 수입 규모도 큰 폭으로 줄었다. 전체적으로 북한은 이 때 식량수급에 거의 균형을 달성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14/15년부터는 다시 식량수급 상황이 악화하였다. 특히 2015년 가뭄으로 인해 가을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2015/16년 식량부족분은 거의 60만 톤에 달하였다. 2016/17년에는 다시 높은 생산량을 회복하면서 20만 톤 대의 식량이 부족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2018/19년에는 다시 생산 감소로 식량사정이 급격히 악화하여 약 85만 톤의 식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여름의 가뭄과 이상고온현상, 그리고 8월말 태풍 솔릭에 의한 피해로 가을 생산량이 급감하여 2019년 외부 도입을 대폭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식량수급 상황이 악화되었다. 이러한 정황은 북한 정권의 대응에서도 나타났는데, 2019년 초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가 국제사회에 식량 지원을 요청하면서 이례적으로 북한 당국이 식량난을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최용호, 2020, p.83).<sup>12)</sup>

하지만 바로 정반대로 국면이 반전되었다. 2019/20년에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 생산량이 급증한 결과로 김정은 시대 전체를 통틀어

12) 김성 대사의 식량지원 요청은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일주일여 앞둔 시점에 이루어졌음. 그는 북한의 식량난을 발생시킨 핵심 요인 중 하나가 대북 제재로 인한 필수 영농자재 반입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음. 이러한 점 때문에 식량지원 호소는 정상회담을 계기로 대북제재를 완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되기도 함.

식량사정이 가장 양호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김정은 위원장이 “전례없는 대풍”이라고 평가(지다겸, 2020)한 것이나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식량가격이 안정적이었다는 점이 근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다수의 전문가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는 모습이다.

2020/21년에는 또다시 식량사정이 급반전하며 김정은 시대를 통틀어 식량사정이 가장 악화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식량 공급량 대비 수요량을 분석한 결과 식량부족량이 무려 106만 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이전 가장 좋지 않았던 2018/19년 85만 톤보다 21만 톤이 큰 규모이다.

〈표 4-6〉 북한 식량수급 현황

(단위: 천 톤)

구분	2010 /11	2011 /12	2012 /13	2013 /14	2014 /15	2015 /16	2016 /17	2017 /18	2018 /19	2019 /20	2020 /21
총공급량 (A=B+C)	4,967	5,303	5,287	5,285	5,187	4,900	5,395	5,257	4,902	5,851	4,889
국내 총생산 (B)	4,484	4,657	4,922	5,030	5,082	4,801	5,225	5,000	4,448	5,851	4,889
가을 수확량	3,592	3,932	4,152	4,313	4,486	4,160	4,637	4,326	3,863	5,423	4,423
겨울·봄 수확량	667	500	475	422	301	363	310	396	307	428	466
경사지 생산량	150	150	220	220	220	203	203	203	203	203	203
텃밭 생산량	75	75	75	75	75	75	75	75	75	75	75
도입(수입 +지원) (C)	483	646	365	255	105	99	170	257	454	0	0
총수요량 (D)	5,351	5,396	5,429	5,370	5,489	5,495	5,608	5,524	5,755	5,854	5,952
식용	4,250	4,276	4,298	4,315	4,341	4,383	4,427	4,427	4,513	4,527	4,541
사료용	150	75	120	120	120	120	130	130	157	166	175
종자용	219	243	210	209	225	238	252	230	214	214	213

구분	2010 /11	2011 /12	2012 /13	2013 /14	2014 /15	2015 /16	2016 /17	2017 /18	2018 /19	2019 /20	2020 /21
수확후 손실	554	624	663	726	803	754	799	737	871	947	1,023
비축	177	178	137	0	0	0	0	0	0	0	0
수요-공급 (D-A)	384	93	142	85	302	595	213	267	853	3	1,063

자료: 각 연도 FAO/WFP CFSAM 보고서 및 FAO의 GIEWS 리포트(생산량과 수요량), UN Comtrade(도입량).

- 1) FAO한국협회. (2011-2013). **북한의 작황 및 식량안보평가 특별보고서**.
- 2) FAO한국협회. (2019). **2019 FAO/WFP 북한 식량안보 긴급 평가보고서**.
- 3) FAO. (2015).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Outlook for Food Supply and Demand in 2014/15(November/October)*. FAO GIEWS. <https://reliefweb.int/report/democratic-peoples-republic-korea/giews-update-democratic-peoples-republic-korea-outlook-food>.에서 2021.10.24. 인출.
- 4) FAO. (2016).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Outlook for Food Supply and Demand in 2015/16(November/October)*. FAO GIEWS. <https://www.fao.org/3/i5572e/i5572e.pdf>.에서 2021.10.24. 인출.
- 5) FAO. (2017.)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Prolonged Dry Weather Threatens the 2017 Main Season Food Crop Production*. FAO GIEWS. <https://www.fao.org/3/i7544e/i7544e.pdf>.에서 2021. 10. 25. 인출
- 6) FAO. (2018).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Food Supply and Demand Outlook in 2017/18(November/October)*. FAO GIEWS. <https://www.fao.org/documents/card/en/c/CA0363EN/>에서 2021. 10. 14. 인출.
- 7) UN Comtrade. (2021). *UN Comtrade database*. <http://comtrade.un.org>에서 21.10.1.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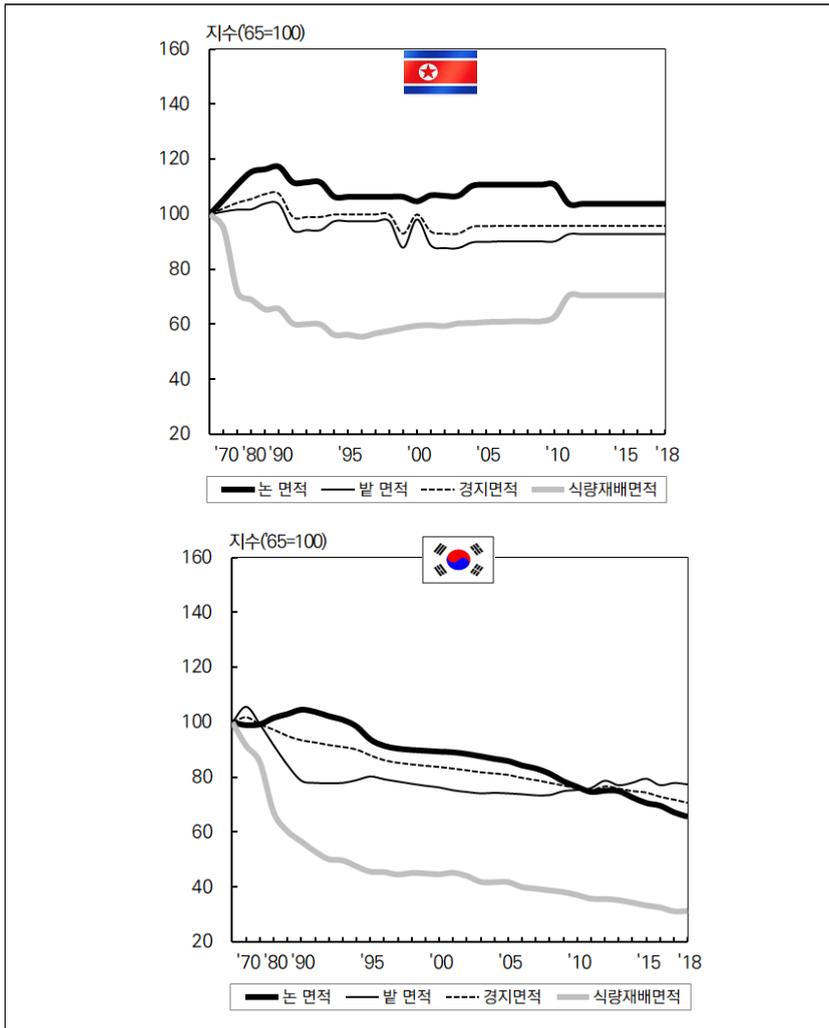
## 5. 북한 농업의 근본 문제

북한의 식량 부족 문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김정은 시대에서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한 근본 원인은 다음과 같이 크게 5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북한은 기본적으로 농업에 유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지 못하며, 특히 절대적으로 농지가 부족하다. 전체 국토의 15~17% 정도만이 농작

물 경작에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전체 농지 가운데 벼를 생산할 수 있는 논지 비중이 약 30% 정도여서 기본적인 면적이 크게 부족하다.

[그림 4-2] 남북의 경지면적 변화 추이



자료: 전형진 외. (2020). **평화시대 한반도 농업통합 중장기 로드맵 수립 연구**(1/5차년도), 나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p.29.

둘째, 가뭄, 홍수, 태풍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농업생산기반이 크게 훼손되고 있으나 실천적인 예방 및 복구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농산물 증산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가뭄이나 홍수 피해에 대비한 관개체계와 배수체계의 완비(수리화)가 요구된다. 하지만 산림 복구는 물론 수리시설 개선에 진전이 없어 해마다 자연재해에 큰 피해를 입고 있으며 피해 복구도 시급히 이루어지지 않아 여파가 상당하다.

셋째, 종자, 비료, 비닐 등 농자재, 각종 장비·설비, 전력 및 연료 등 농업 투입재 공급도 부족하다. 농업 투입재는 생산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양적으로 충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생산한 물자들은 질적인 면에서 매우 떨어져서 낮은 농업생산성의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중국산 수입 농업 투입재는 중국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요가 많지만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여기에는 대북제재와 코로나 사태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수급 불균형 상태에서 북한의 농업 투입재 분배 상황을 살펴보면, 곡창지대와 일부 특정 협동농장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4-7〉 2008~2018년 북한 비료 소비량

(단위: 천 톤)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비료	질소(N)	438	435	475	736	687	686	728	612	837	599	624
	인산(P)	7	3	11	6	21	18	19	8	12	11	4
	칼륨(K)	10	8	12	4	19	3	3	3	1	2	3
합계	456	446	499	746	727	707	750	623	850	612	631	

주: 1) 질소(N)은 황산암모늄 20.5% 비료 기준, 인산(P)은 과인산염(P205) 17% 비료 기준, 칼륨(K)은 KCI-염화칼륨(K2O) 48-62% 비료 기준.

2) 2008~2013년 자료는 1년을 8월~7월로 계산

자료: 북한 농업성 및 중앙통계국(CBS)에서 FAO에 보고한 자료로, 각 연도 FAO/WFP CFSAM 보고서 및 FAO의 GIEWS 리포트.를 참고함.

넷째, 농업기술의 보급도 지체되고 있다. 김일성 및 김정일 정권에서는 중공업 중심의 경제정책으로 인해, 김정은 정권에서는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경제제재 등으로 농업부문의 기계화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 대북제재가 강화되기 직전인 2016년까지 중국과의 교류협력 활성화로 농업기술 보급과 농업투자가 이루어졌다. 농업생산성이 향상되고 식량수급 상황도 개선되면서 북한 농업에 희망적인 비전이 보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2016~2017년 국제사회 대북제재가 강화되면서 중국산 농기자재 도입이 제한되었고 더 이상 농업기술의 확대 보급이 되지 않았다. 오히려 과거에 외부로부터 수입했거나 지원 받은 농기계가 수리부품이 부족하여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섯째, 농업생산 관련 제도 개혁과 정책 추진의 한계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농업개혁을 위한 주요 조치는 2012년 6·28방침(새경제관리체계), 2014년 5·30담화, 각 연도 신년사, 북한 언론보도 및 연구논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정은 집권 이후 경제관리체계 개혁으로 도출된 결과물인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은 경제 현실과 제도 사이 간극·괴리(중앙계획체계 약화 및 시장화 추세 강화)를 축소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평가될 수 있다.

김정은은 집권 직후인 2012년 초 경제관리 개선방안 마련을 지시하였다. 이에 구성된 상무조가 개선안을 마련하고 채택되었다. 이 안의 일부가 소위 2012년 6·28방침으로 우리에게 알려졌다. 이후 시범적·단계적 시행 및 법제화가 연이어 추진되었는데, 2012년 9월 상업부문에 새로운 제도가 최초 도입되었고, 2013년 농업부문에 실용적으로 적용되었다(최용호, 2021a, p.5). 이러한 실험단계를 거쳐 김정은은 2014년 5·30담화를 발표하였다. 5·30담화의 핵심은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도입하여 경제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후 사회주의기업

책임관리제 시행을 위한 각종 관련 법의 제·개정이 추진되었다(최용호, 2021a, p.5).

농업부문에 적용된 새로운 경제관리방식은 협동농장의 책임경영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이다. 이를 계기로 계획권, 재정운영권, 판매권 등이 확대되고, 포전담당책임제가 새로이 도입되었으며 분배제도가 개편되는 등 협동농장의 자율성과 경영권이 확대 부여되었다.

새로운 경제관리방식인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은 기본적으로 부문들 사이에 큰 차이는 없다. 다른 부문들과 마찬가지로 농업부문에든 경제주체의 자율성을 확대하면서 의무 달성을 요구하는 책임관리제를 강화하고 있다. 계획적 요소에 시장적 요소를 결합하는 방식이지만 종전보다 시장적 요소를 조금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경제운영시스템을 개편하였다. 즉, 농업부문의 계획 부분은 식량을 의미하므로 식량의 국가수매 목표는 의무적으로 달성하여야 하며, 그 외 초과 물량과 다른 품목 생산물에 대해서는 자율권을 부여하고 시장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최용호, 2021a, p.6).

하지만 분배방식은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도입에 의해 가장 크게 달라졌다. 포전담당책임제 도입으로 가족 중심의 영농활동을 가능케 하여 개인의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과거 현금분배 방식에서 새롭게 현물분배를 기본으로 하고 현금분배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분배방식에 변화를 가져왔다(최용호, 2021a, p.6). 특히 생산의욕 고취를 위하여 분배에 있어서 평균주의를 버리고 노동의 양과 질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 사회주의 분배원칙임을 강조하고 있다(최용호, 2021a, p.6).

그러나 여전히 생산수단의 사회주의적 공동소유를 옹호·고수하고 집단체제 원칙을 철저히 구현해야 한다는 사회주의 집단농업체제를 강조함에 따라 성과는 매우 제한적이다(최용호, 2021a, p.12). 특히 이 제도가

지속가능성을 가지는 데 있어서의 핵심은 국가가 생산에 필요한 투입재를 충분히 제공하고 합리적인 국가의 몫을 가져가는 것에 있다(최용호, 2021a, p.12). 하지만 현실에서는 국가 계획에 의한 농자재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반면, 국가계획에 의한 과도한 수매를 하고 있어 획기적인 식량 생산 증대는 나타나지 않았다(최용호, 2021a, p.12).

## 제2절 북한 식품 소비실태 분석

앞서 살펴본 북한의 저조한 농업 생산은 북한 주민의 식생활과 직결되어 있다. 하지만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외부로 알려진 정보가 많지 않아 북한 주민의 식품 소비와 영양 섭취에 대한 분석은 매우 제한적이다. 여기에서는 북한 식생활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제식량정책연구소의 세계기아지수, FAO의 관련 조사 내용,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북한이탈주민 대상 설문조사 등 세 가지 자료를 활용하여 간략하게 논의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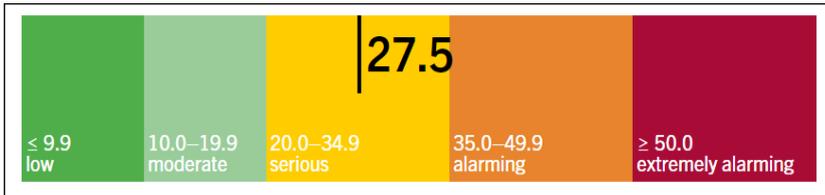
### 1. 국제식량정책연구소의 세계기아지수

세계기아지수(Global Hunger Index, GHI)는 전 세계적, 지역적, 국가적 차원에서 기아(hunger)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측정하고 지속적인 동향 추적을 위해 고안된 지표이다. 이 GHI는 국제식량정책연구소(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가 기아 퇴치의 진행 상황이나 부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매년 GHI 점수를 계산하여 국제적 민간지원단체인 Concern Worldwide and Welthungerhilfe와 함께

매년 발표하고 있다(Global Hunger Index, 2021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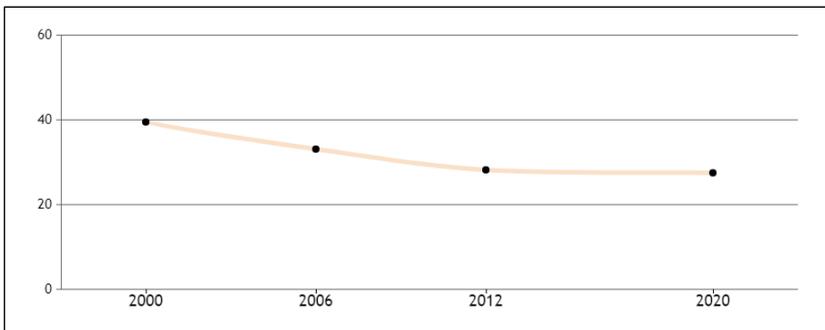
국제식량정책연구소의 '2020 세계기아지수'에서 북한에 대한 평가는 27.5점으로 '심각 혹은 그 이상' 단계이며, 이는 전체 107개국 중 96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북한에 대한 GHI 평가는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하고 있다. 2000년 39.5점, 2006년 33.1점, 2012년 28.2점, 2020년 27.5점으로 꾸준히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4-4] 참조).

[그림 4-3] 2020 북한의 GHI 평가



자료: Global Hunger Index. (2021b). *Global hunger index scores by 2020 GHI rank*. <https://www.globalhungerindex.org/north-korea.html>에서 21.09.19.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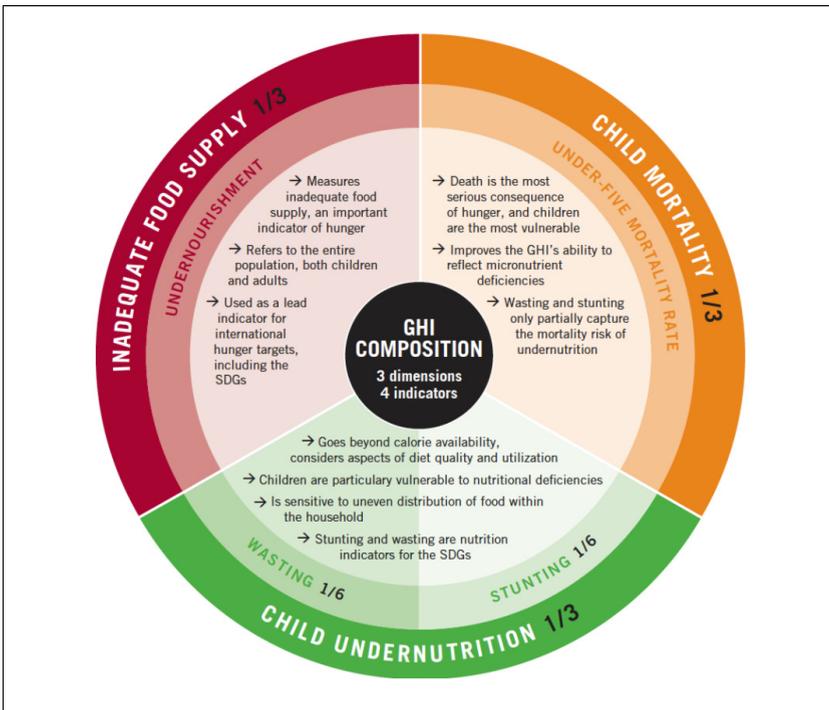
[그림 4-4] 북한의 GHI 추세



자료: Global Hunger Index. (2021b). *Global hunger index scores by 2020 GHI rank*. <https://www.globalhungerindex.org/north-korea.html>에서 21.09.19.인출

GHI는 3개의 차원과 4개의 세부 지수로 구성되어 있다. 3개의 차원은 부적절한 식량 공급의 정도, 아동 사망률, 어린이 영양실조의 정도이며, 각 영역은 GHI 종합적인 평가에 있어 동등한 비중을 차지한다. 각각의 차원을 대표하는 세부 지수는 부적절한 식량 공급의 정도에 대하여 영양 결핍(undernourishment)의 정도가, 아동 사망률에 대하여 아동 사망률 통계가, 그리고 아동 영양실조의 정도에 대하여 아동 쇠약 정도(child wasting)와 아동 성장발달 저해(child stunting) 정도가 활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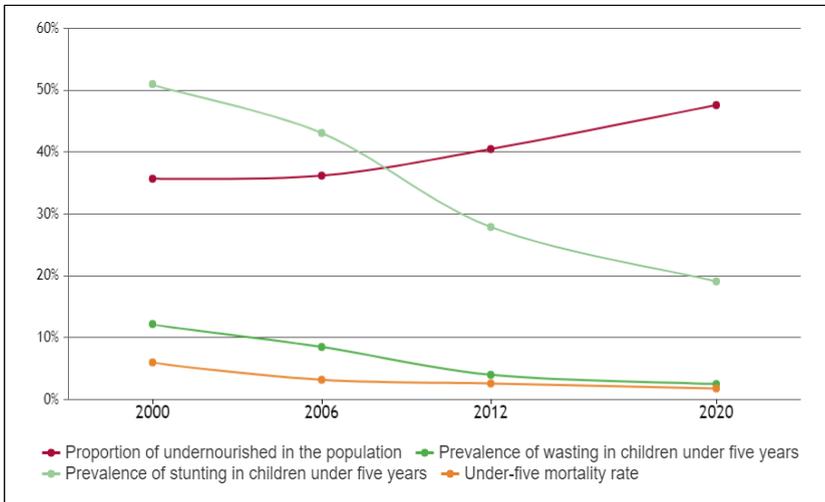
[그림 4-5] GHI 구성



자료: Global Hunger Index. (2021a). *COMPOSITION OF THE GLOBAL HUNGER INDEX*. <https://www.globalhungerindex.org/north-korea.html>에서 21.10.1.인출

북한에 대한 GHI 평가를 주요 세부 지표별로 살펴보면, 북한 5세 이하 어린이에 대한 지표들은 긍정적인 추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전체적인 영양부족에 대한 평가는 급격히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세 이하 어린이의 쇠약 정도(prevalence of wasting in children under five years)는 2000년 12.2%에서 2020년 2.5%로 하락했다. 마찬가지로, 5세 이하 어린이의 성장발달 저해 정도(prevalence of stunting in children under five years)는 2000년 51.0%에서 2020년 19.1%로 하락했다. 5세 이하 어린이의 사망률(under-five mortality rate) 또한 2000년 6.0%에서 2020년 1.8%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북한 전체에 대한 영양부족 인구 비중(proportion of under-nourished in the population)은 2000년 35.7%에서 2020년 47.6%로 꾸준히 상승하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4-6] 북한의 GHI 세부지표 추세



자료: Global Hunger Index. (2021c). *Trend for Indicator Values-Korea(DPR)*. <https://www.globalhungerindex.org/north-korea.html>에서 21.10.1.인출.

## 2. FAO의 식품분배시스템과 가구 수준 식품소비실태 분석

북한을 대상으로 한 FAO의 CFSAM 보고서는 최근 들어 매우 간헐적으로 작성되고 있지만, FAO와 WFP의 공동조사단이 일부 지역에 방문하여 식량 배급과 식품 소비에 대하여 현장조사한 결과를 포함하고 있다. 여기서는 가장 최근 자료인 FAO한국협회(2019)에 나타난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에서 공공배급제도(Public Distribution System, PDS)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주민은 식량 배급 측면에서 크게 두 유형으로 분류된다. 하나는 PDS에 의해 할당량을 공급받는 유형이며, 주로 가구의 가장이 노동자, 간부, 은퇴노인 등인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다른 하나는 가구 가장이 협동농장 또는 국영농장 종사자로 수확 후 할당되는 현물로 식량을 확보하는 유형이다. FAO와 WFP(2019)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북한 인구의 71.5%인 1,750만 명이 PDS에 의존하고 있으며, 610만 명의 협동농장 종사자와 80만 명의 국영농장 종사자 등 약 700만 명은 수확 후 할당을 통해 식량을 배분받고 있다(FAO & WFP, 2019, p.29).<sup>13)</sup>

두 가지 주요 식량 배급 경로 이외에, 가구 차원에서는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식량을 확보하고 있다. 개인 텃밭에서의 생산, 국영상점 및 농민 시장을 통한 구매, 주로 농촌 거주하는 친인척의 도움 등을 통하여 식량에 접근하고 있다. 생후 6개월 이후 어린이들은 탁아소에서 하루 3끼를 제공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PDS 상 식량 배급에 대한 조달, 집행 등의 주요 주체는 군(郡)이 담당하고 있다. 수매양정성이 한 달 앞서 설정한 월별 평균 배급할당량 목표

13) 협동농장의 수는 2,513개, 국영농장의 수는 707개로 명시되어 있음.

에 근거하여 군(郡)은 가용물량을 검토하고 배급계획을 수립하며, 부족 시 다른 군(郡)에서 조달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판단한다. 만약 필요한 월별 식량 물량이 부족한 상황이 되면, 우선적으로 같은 도(道) 내 다른 군(郡)으로부터 조달하고, 이것도 여의치 않으면 다른 도(道)로부터 조달하게 된다.

배급은 한 달에 2회 이루어진다. 매달 1~5일과 15~20일 기간에 공공식량배급소를 통해 배급된다. 배급 식량은 공공식량배급소에서 고정가격에 판매되며, 쌀은 1kg당 45원, 옥수수는 1kg당 25원으로 시장가격에 비해 1/100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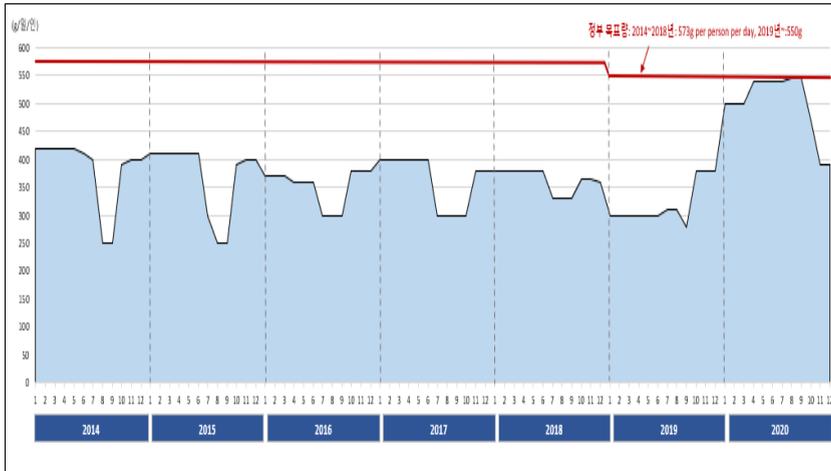
PDS 배급할당량은 연도별로 그리고 월별로 양과 구성이 다르다. 연도별로는 지난 가을 수확량의 규모에 따라 배급량이 변화하며, 매해 계절성이 나타나 5~9월 단경기에는 배급량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이 특징으로 나타난다.

최근까지 국가가 목표로 설정한 공식적인 PDS 배급량은 1인당 1일 573kg이었으나 2019년에 550kg으로 축소되었다. 그러나 실제 배급량은 목표 배급량에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다. 2018년 1월에는 1인당 1일 380kg이었고 동년 12월에는 1인당 1일 360kg이었으나, 2019년 1~4월에는 1인당 1일 300kg에 불과하였다. 이는 연초 기준 역대 최소치에 해당한다.

FAO와 WFP는 북한의 월평균 식량 배급량을 보고해왔다([그림 4-7] 참조).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14년에서 2018년까지의 식량 배급량은 정부의 목표 배급량인 570 g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양인 350~400 g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2019년에 더욱 악화되었다가 2019년 후반부터 갑자기 급증하여 2020년 4월부터 9월에는 정부 목표량인 550 g에 가까운 배급량을 보인다. 그러나 2020년 11월부터 다시 평년 수준으로 하

락하였다. 이렇게 배급되는 식량에는 쌀, 옥수수, 기타 곡류, 감자, 대두가 포함되는데, 공급량의 계산에 있어 감자는 25%, 대두는 120%의 환산 비율을 적용한다(권태진, 2021b).

[그림 4-7] 북한의 월평균 식량배급량 추이



자료: 2014~2018년은 FAO, WFP. (2019).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FAO/WFP Joint Rapid Food Security Assessment*; 2019~2020년은 WFP. (2021). *Household Food Security in the DPRK*. 각 자료로부터 인출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배급제 등급에 따라 배급 시 이러한 식량작물들의 구성 비율에 차이가 있다. 즉 쌀을 위주로 배급받는 계급이 있는가 하면 쌀보다 옥수수나 감자 위주의 배급을 받는 계급이 있다(권태진, 2021a).

한편 협동농장 참여가구의 배급량은 1인당 1일 600g이며, 지역에 따라 할당 횟수가 다른 것이 일반적이다. 양강도, 자강도, 함경북도 등 기온이 낮은 지역은 가을 수확이 끝난 11월에 연 1회 배급을 받으며, 그 외 2모작이 가능한 지역에서는 겨울·봄 작물 수확이 끝난 6월을 포함하여 연 2회 배급이 시행된다.

FAO·WFP 조사단은 북한 가구의 식량 할당량을 조사하여 식생활 실태를 분석하고 있다. 조사 기간은 2018년 11월과 2019년 4월로 두 차례 이루어졌다. 조사 결과를 보면, 먼저 시기적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2018년 11월에 비해 2019년 4월 식량 배급량은 전체적인 규모에서 감소하였다. 2018년 11월 조사 대상 가구들은 평균 1인당 1일 447g(평균 1인당 1일 1,528kcal에 해당)의 식량을 제공 받은 반면, 2019년 4월 조사 대상 가구들은 평균 1인당 1일 394g(평균 1인당 1일 1,393kcal에 해당)의 식량을 수령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표 4-8〉 가구 유형별 식량 배급량과 열량

구분	PDS 배급		수확 후 할당	
	가구 평균 배급량(g)	열량 (1인/1일/kcal)	가구 평균 배급량(g)	열량 (1인/1일/kcal)
2018년 11월	387	1,369	553	1,957
2019년 4월	306	1,080	647	2,285

자료: FAO 한국협회. (2019), 2019 FAO/WFP 북한 식량안보 긴급 평가보고서, p.32.

다음으로, 가구 유형별 차이도 발견할 수 있다. 협동농장 종사 가구가 PDS 의존가구에 비해 식량 배급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2018년 11월 PDS 의존가구는 평균 1인당 1일 387g(평균 1인당 1일 1,369kcal에 해당)의 식량을 수령한 반면, 협동농장 참여 가구는 평균 1인당 1일 553g(평균 1인당 1일 1,957kcal에 해당)의 식량을 받았다. 2019년 4월 PDS 의존가구는 평균 1인당 1일 306g(평균 1인당 1일 1,080kcal에 해당)의 식량을 수령한 반면, 협동농장 참여 가구는 PDS 의존가구의 2배가 넘는 평균 1인당 1일 647g(평균 1인당 1일 2,285kcal에 해당)의 식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019년 4월 기준, 협동농장 종사 가구의 식량 배급량은 열량(칼로리) 측면에서 1일 권장 섭취량 2,100kcal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반면

PDS 의존가구의 열량은 1일 권장 섭취량(2,100kcal)의 51.4%, 1일 최소 기초 필요량(1,800kcal)의 60.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배급 식량의 구성은 열량 함유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배급 식량품목의 지역적 차이로 인하여 섭취 열량의 차이도 나타나고 있다. 양강도 등 북한의 북부지역과 황해남북도 등 남부지역은 그 지역의 재배하는 식량품목에 따라 배급의 구성도 달라져 섭취하는 열량에도 차이가 발생한다. 양강도 PDS 식량 배급은 감자 80~90%와 쌀 또는 밀 10~20%로 구성된다. 감자의 열량은 100g당 77kcal 수준으로 옥수수나 쌀의 열량 100g당 360~365kcal 수준과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주민들은 다른 지역 주민들보다 더 낮은 열량을 섭취하고 있다.

〈표 4-9〉 지역별 식량 배급량과 열량

구분	PDS 배급		수확 후 할당	
	가구 평균 배급량(g)	열량 (1인/1일/kcal)	가구 평균 배급량(g)	열량 (1인/1일/kcal)
양강도	300	944	587	1,855
평안북도	300	1,089	629	2,201
평안남도	315	1,142	598	2,088
황해북도	321	1,168	788	2,864
황해남도	-	-	605	2,198
함경남도	287	1,043	-	-

자료: FAO 한국협회. (2019), 2019 FAO/WFP 북한 식량안보 긴급 평가보고서를 토대로 저자 작성.

또한 지역에 따라 그리고 개별 협동농장의 생산성에 따라 식량 생산량이 다르기 때문에 식량 배급량에서도 차이가 있다. 특히 협동농장 종사가구의 수확 후 할당량은 생산성이 낮거나 자연재해를 입은 지역의 경우 생산량이 작아 배급량도 작은 것으로 나타난다.

공식 배급 이외 식량 및 식품 접근은 국영상점과 농민시장 등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경우에 따라서는 농촌 거주 친지의 도움, 산야초 채취 등을 통하여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북한에서 국영상점은 식량 이외 식품을 제공하는 공급처 중 하나이다. 국영상점에서는 소금, 기름, 된장, 계란, 채소, 과일, 가공식품 등 다양한 식품을 판매하고 있다. 국영상점의 식품은 국가 보조로 운영되기 때문에 고정가격에 판매된다. 주민들은 발급된 쿠폰을 제시하고 현금을 지불하여 식품을 구매할 수 있다. 쿠폰에는 특정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수량 등이 명시되어 있다. 쿠폰은 인구 대비 공급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분배할 수 있는 방법이다.

북한에서 시장은 재화와 서비스를 거래할 수 있는 장소이며, 다양한 시장 유형 중 농민시장은 식품수급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주민 대부분은 개인 텃밭에서 생산·사육한 채소, 가축 등을 농민시장에서 판매하여 필요한 다른 재화를 구입하기 위한 현금을 확보한다. 농가의 약 1/3 가량이 시장에서 농산물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조사 대상 전체 가구 중 70% 이상이 식량 구매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농민시장에 간다고 한다. 단경기 기간(7~9월)에 있어서 시장은 식량 공급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단경기 기간에 PDS 식량 배급량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PDS 의존가구는 시장에서의 식량 구매를 통하여 부족분을 확보할 수 있다.

FAO·WFP 조사단은 식량안보 취약성 분석을 위해 가구 수준의 식량 접근성과 식단의 다양성을 평가하는 지표(FCS, Food Consumption Score)를 통하여 북한의 식량안보 상황과 주민의 농식품 소비 실태를 평가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2018년 11월과 2019년 4월 두 차례 북한의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식품소비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시기별 농식품 소비지표를 비교해 볼 때, 식품소비 상황이 현저히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019년 4월 기준으로 전체 조사 가구 중 7%만이 고단백질 식품과 과일 섭취가 가능하여 양호한 상태로 평가되었으며, 절대 다수인 93%는 매일 섭취하는 식품의 다양성과 영양소가 부족하여 열악하거나 경계선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2013년과 2018년 11월 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도 식품소비 상황이 현저히 악화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양호 또는 경계선에 있는 가구의 비중은 감소하고 열악으로 평가되는 가구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표 4-10〉 시기별 농식품 소비지표

구분	식품소비지표 평가		
	열악	경계	양호
2013년	34%	51%	16%
2018년 11월	37%	50%	13%
2019년 4월	46%	46%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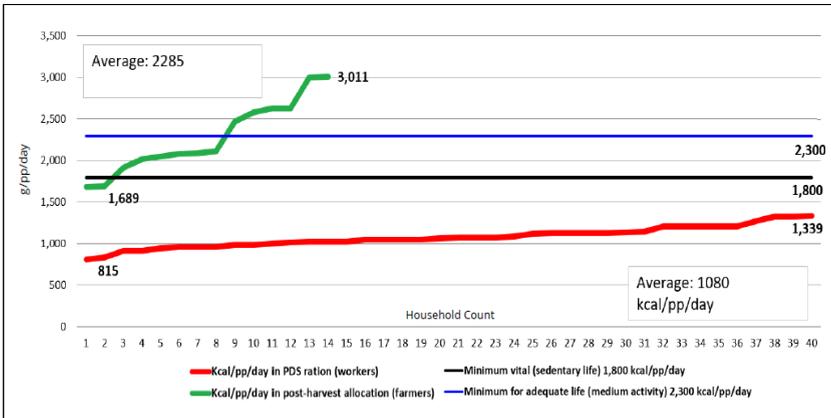
자료: FAO 한국협회. (2019), 2019 FAO/WFP 북한 식량안보 긴급 평가보고서.p.40.

식품소비에 대한 평가는 가구의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다. 협동농장 종사가구는 2018년 11월과 2019년 4월 조사에 각각 24%와 29%가 양호한 식품소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PDS 의존가구의 경우 2018년 11월에는 9%, 2019년 4월에는 양호한 식품소비를 하고 있는 가구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반면, 협동농장 종사가구 중 열악한 수준으로 식품소비를 하고 있는 가구 비중은 2018년 11월에 35%, 2019년 4월에는 29%로 나타난다. PDS 의존가구의 경우 2018년 11월에 37%, 2019년 4월에는 53%로 나타나고 있다. PDS 의존가구는 협동농장 종사가구보다 식품소비 수준이 열악하고 2018년 11월 대비 2019년 4월에

나타난 비중 변화가 대조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요컨대 북한 주민은 식량 배급에 의존하는 주민(약 70%)과 협동농장 농민(약 30%)으로 구분 가능하다. 협동농장 농민은 수확 직후 분배를 받기 때문에 식량 배급에 의존하는 주민에 비해 식량 공급이 안정적이다(김영훈, 2013). 이러한 까닭으로, FAO와 WFP가 2019년 실시한 북한 긴급 식품안정성 평가 보고서(FAO, WFP, 2019)에서는 식량배급 의존 주민과 협동농장 농민이 국가 배급으로부터 공급받는 식량으로부터 얻는 에너지량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그림 4-8).

[그림 4-8] 북한의 식량배급을 통한 공급 에너지량



자료: FAO, WFP. (2019).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FAO/WFP Joint Rapid Food Security Assessment*. p.31.

협동농장 농민의 경우, FAO에서 설정한 생존을 위해 필요한 최소 에너지(1,800 kcal)와 적절한 활동을 위해 필요한 최소 에너지(2,300 kcal)를 충족하는 에너지를 공급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식량배급제 의존 주민의 경우, 생존을 위해 필요한 최소 에너지에도 미치지 못하는 에너지를 공급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4-11〉 가구 유형별 농식품 소비지표

구분		식품소비지표 평가		
		열악	경계	양호
2018년 11월	PDS 의존가구	37%	54%	9%
	협동농장 가구	35%	41%	24%
2019년 4월	PDS 의존가구	53%	48%	0%
	협동농장 가구	29%	43%	29%

자료: FAO 한국협회. (2019), 2019 FAO/WFP 북한 식량안보 긴급 평가보고서.p.40.

식단의 질 측면에서 북한 가구의 식단의 다양성은 전반적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PDS 배급 또는 수확 후 할당을 받은 식량이 식단의 거의 전부이며, 나머지는 개인 텃밭에서 수확하거나 시장에서 구입한 채소류이고 과일, 축산물, 수산물 등은 특별한 날 이외에 소비되지 못하고 있다. 국경일이나 기념일, 가족 행사 등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과일, 축산물, 수산물 등이 국가로부터 제공되고 시장가격은 소득 수준에 비해 매우 높아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이다.

### 3.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북한이탈주민 설문조사·분석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북한사회변동조사는 조사년도 직전 해에 탈북하여 남한에 입국하여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에 응답한 결과로, 여기에는 식생활 실태 조사를 포함하고 있다.<sup>14)</sup> 북한 주민의 식생활 실태 및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하루 식사횟수, 주식의 구성, 고기 섭취 빈도, 식생활 종합평가 등의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14) 북한사회변동조사의 설계와 내용에 대해서는 김학재, 김병로, 정은미, 이종민, 박상민, 이해원... 최연경. (2021). 북한사회변동 2020.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pp.14-17을 참고할 것.

먼저, 하루 식사횟수부터 살펴보면, 2015년부터 하루 세끼의 식사를 했다는 응답률이 87%를 상회하였고 이 비중은 2019년까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전 연도 대비 2018년과 2019년에 하루 한끼 또는 한끼도 못 먹었다는 비중이 감소한 만큼 하루 두끼를 먹었다는 응답률이 상승하여 10%를 조금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4-12〉 하루 식사 횟수 추이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하루 세끼	92	108	111	126	124			
	(75.4)	(81.2)	(74.5)	(86.9)	(89.9)	(87.7)	(87.4)	(87.9)
하루 두끼	20	16	17	13	11			
	(16.4)	(12.0)	(11.4)	(9.0)	(8.0)	(7.7)	(11.5)	(10.3)
하루 한끼	6	9	19	5	2			
	(3.9)	(6.8)	(12.8)	(3.4)	(1.4)	(3.8)	(1.1)	(0.9)
한끼도 못 먹음	4	0	2	1	1			
	(3.3)	(0.0)	(1.3)	(0.7)	(0.7)	(0.8)	(0.0)	(0.9)
합계	122	133	149	145	138	132	87	116

주: ( ) 안은 비중(%)이며, 2017~2019년은 비중만 제시.

자료: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북한사회변동**.

북한사회변동조사는 식생활의 질적 조사를 위하여 주식의 구성에 대한 설문을 포함하고 있다.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거의 쌀이 주식이었다는 응답이 2012~2019년 모든 연도에서 가장 높았으며 2018년 대비 2019년에 크게 상승하였다. 반면, 강냉이가 대부분으로 구성된 경우는 2018년에 27.9%에서 2019년에는 14.6%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4-13〉 주식의 구성 추이

(단위: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거의 입쌀	45	49	61	89	83	69		
	(35.7)	(36.8)	(41.5)	(61.0)	(60.1)	(52.3)	(45.3)	(69.0)
입쌀 위주, 강냉이 섞음				20	11	17		
				(13.8)	(8.0)	(12.9)	(9.3)	(8.6)
입쌀과 강냉이 반반	31	34	24	13	14	22		
	(24.6)	(25.6)	(16.3)	(9.0)	(10.1)	(16.7)	(17.4)	(7.8)
강냉이 위주, 입쌀 섞음	17	20	18	8	14	8		
	(13.5)	(15.0)	(12.2)	(5.5)	(10.1)	(6.1)	(15.1)	(8.6)
거의 강냉이	33	30	44	15	16	16		
	(26.2)	(22.6)	(29.9)	(10.3)	(11.6)	(12.1)	(12.8)	(6.0)
합계	126	133	147	145	138	132		

주: ( ) 안은 비중(%)이며, 2018~2019년은 비중만 제시.  
 자료: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북한사회변동**.

식생활의 질적 조사를 위한 다른 설문으로 고기 섭취 횟수를 조사하고 있다. 주 1~2회와 월 1~2회가 응답률의 2/3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거의 매일과 주 1~2회 응답률은 각각 2012년 3.1%, 21.3%에서 2019년 15.5%, 46.6%로 상승하였고, 월 1~2회 이하의 응답 비중은 최근에 가까울수록 감소하는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4-14〉 고기 섭취 횟수 추이

(단위: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거의 매일	4	6	5	33	18	23	10	
	(3.1)	(4.5)	(3.4)	(22.6)	(13.0)	(17.4)	(11.5)	(15.5)
주 1~2회	27	31	37	45	52	49	29	
	(21.3)	(23.5)	(24.8)	(30.8)	(37.7)	(37.1)	(33.3)	(46.6)
월 1~2회	58	59	64	52	49	43	33	
	(45.7)	(44.7)	(43.0)	(35.6)	(35.5)	(32.6)	(37.9)	(30.2)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연 1~2회	34	36	41	15	17	12	13	
	(26.8)	(27.3)	(27.5)	(10.3)	(12.3)	(9.1)	(14.9)	(7.8)
거의 없음	2	0	2	1	1	4	1	
	(1.6)	(0.0)	(1.3)	(0.7)	(0.7)	(3.0)	(1.1)	(0.0)
무응답	2	0	0	0	1	1	1	
	(1.6)	(0.0)	(0.0)	(0.0)	(0.7)	(0.8)	(1.1)	
합계	127	132	149	146	138	132	87	

주: ( )안은 비중(%)이며, 2019년은 비중만 제시.

자료: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북한사회변동**.

또한 식생활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식품의 양적 접근과 다양성에 대한 설문조사도 시행하고 있다. 2015~2019년 기간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사정이 가장 좋지 않았고 2019년 사정은 가장 좋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2019년에 충분한 양적 섭취와 다양한 음식 섭취가 가능했다는 비중이 약 45%에 이르며, 양적으로 부족했다는 비중은 약 1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4-15〉 식생활 종합 실태 추이

(단위: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가족 모두 원하는 충분한 양과 다양한 종류의 음식 섭취	40.0	33.3	31.1	26.4	44.8
가족 모두 충분한 양이나 다양한 종류 음식 섭취 못함	41.4	51.4	51.5	47.1	41.4
가끔 먹을 것이 부족	17.2	12.3	12.1	17.2	10.3
자주 먹을 것이 부족	1.4	2.9	5.3	9.2	3.4

자료: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2016, 2017, 2018, 2019, 2020). **북한사회변동**.

### 제3절 코로나19 이후 북한 주민의 식품 소비의 변화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북한 주민의 식생활에도 큰 변화가 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2021년 4월, 김정은 위원장은 조선 노동당 제6차 세포 비서대회에서 ‘고난의 행군’을 결심했음을 언급했다. ‘고난의 행군’은 1996년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극심한 경제난 극복을 위하여 채택했던 구호로, 이후 2000년까지의 1990년대 중후반에 해당하는 고난의 행군 시기는 북한 역사에서 최악의 식량난을 겪었던 시기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고난의 행군을 언급한 것을 통해, 최근 북한의 식량 사정이 다시 악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북한 주민들의 식생활 또한 매우 불안정해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김정은 체제가 시작된 이후 발전적 모습을 보였던 북한 주민의 식생활은 2016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된 이후 다시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들기 시작했을 것이며, 2020년 1월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직후 이어진 북한 당국의 국경 폐쇄 조치에 따라 더욱 악화일로로 접어들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실제로 국경 봉쇄 이후 대부분의 대외교육이 중단되었다가 곧이어 5월 이후 중국으로부터의 식자재 수입이 일부 재개되긴 했었지만, 이후 8월부터 다시 봉쇄가 강화되어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인 2019년 대비 2020년의 복중무역은 80% 이상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다(국립통일교육원, 2021).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 따른 북한 주민의 최근의 식생활 현황을 보여주는 공식적, 정량적 자료는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므로, 관련한 언론 보도들의 내용을 통해 두드러진 북한 주민들의 최근의 식생활 현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sup>15)</sup>.

---

15) 이를 위하여, KBS 남북의 창(KBS NEWS, 2021, <https://news.kbs.co.kr/> 에서 2021.10.16. 검색하여 인출), MBC 통일전망대(MBC, 2021, <https://www.imbc.com/> 에서 2021.10.16. 검색하여 인출), 자유아시아방송(자유아

## 1. 수입 식재료 가격의 급등에 따른 주민들의 식품안정성 하락

국경 폐쇄 조치 이후, 식용유, 설탕, 밀가루, 조미료 등의 수입 식재료의 가격이 폭등하였고, 이러한 비싼 식재료를 구입할 여건이 안되는 계층의 주민들의 식품안정성(food security) 확보가 어려운 실태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식재료는 주민들의 섭취를 위한 식품으로서 식품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설탕이나 밀가루와 같은 재료의 경우, 집에서 사탕, 과자, 음료수 등을 만들어 장마당에 팔아 식량을 사기 위한 돈을 마련하기 위한 필수 재료이므로 식품안정성에의 간접적인 영향 또한 매우 크다. 여러 보도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수입상품이 장마당에서 급격히 줄어들면서 이를 소비하지 못하는 북한 주민들의 영양 부족 문제가 심각해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에서 주요 영양 공급원인 콩기름이 부족해지면서 육류를 먹지 못하는 북한 주민들의 건강 상의 문제가 염려되고 있다(손혜민, 2021.3.1.: 장슬기, 2021.9.8.).

공급부족은 가격의 폭등으로 이어져 일부 보도에 따르면 사탕가루(설탕)가 코로나 이전에 5,100원에서 2021년 2월 현재 50,000원으로, 콩기름이 1통(4.8kg)에 45,000원에서 150,000원으로, 밀가루가 kg 당 4,800원에서 30,000원으로 가격이 급등하였다(손혜민, 2021.3.1.).

---

시아방송. 2021, <https://www.rfa.org/korean> 에서 2021.10.16. 검색하여 인출), 데일리NK(테일리NK, 2021, <https://www.dailynk.com/> 에서 2021.10.16.에 검색하여 인출., 뉴스1(뉴스1, 2021, <https://www.news1.kr/> 에서 2021.10.16. 검색하여 인출.)에 보도된 북한 주민의 식생활 관련 방송 및 지면 기사를 수집하였다. 기사 수집 대상 기간은 2020년 1월 31일에 이루어진 북한의 국경 폐쇄 조치 이후인 2020년 2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로 한정하였다. 관련 보도들의 자료원은 북한 노동당 중앙 TV, 노동신문이 대부분이었고, 자유아시아방송의 경우 북한 주민을 취재원으로 하여 보도한 경우가 다수 있었다. 비슷한 시기의 기사들이 동일한 자료원(노동당 중앙 TV 뉴스, 노동신문 기사)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동일한 시기에 유사한 제목을 가진 기사들은 일부 수집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최종적으로 89건의 기사를 수집하여 북한 주민의 식생활 현황을 보여주는 내용을 하위 주제로 묶어 정리하였다. 세부 목록은 [부록 2]의 북한 주민의 식생활 관련 방송 및 지면 기사 목록 참고할 것.

## 2. 국경 봉쇄 이후 굶주림 문제 악화

만성적인 식량 부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제재와 국경 봉쇄 이후 국제사회로부터의 지원 및 수입이 급감함에 따라 북한 주민들의 굶주림 문제는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배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군대와 경제적 취약 계층에서 굶주림은 더욱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한 보도 내용을 보면 ‘10대 군인이 굶주림에 무장한 채 탈영했다’거나 ‘북한 회령 주민의 20~40%가 식량 공급을 포기하고 구매권을 양도했다’는 등 극한의 상황에 놓인 지역과 주민들이 부각되고 있다(문동희, 2021.3.16.; 데일리 NK, 2021.7.19.).

지난 1월 굶주림을 견디지 못한 북한 국경경비대원이 무장한 상태에서 탈영해 중국으로 건너간 뒤 붙잡힌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뒤늦게 전해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국경봉쇄마저 더해져 국경경비대 일탈이 계속되는 모양새다(중략) 소식통은 “공안이 조사를 마친 뒤 탈영병을 북한에 넘기려 하자 이들은 제발 돌려보내지 말라고 하소연했다”며 “이들은 조선(북한)으로 돌아가게 되면 자신들이 굶어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이들은 총살이나 다른 처벌을 받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다”면서 “아사에 대해 극심한 공포를 느끼는 점으로 보아 현재 북한군의 식량 사정이 최악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문동희, 2021.3.16.)

### 3. 축산 및 양어를 통한 단백질 급원 식품 확보를 위한 노력 증대

북한 주민들의 식생활에서 단백질 부족은 매우 만성적인 문제로 자리 잡아 왔다. 이러한 단백질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래 전부터 개인 및 협동 농장 단위에서의 토끼, 양, 염소 등의 초식 동물의 축산을 장려해 왔으며, 비교적 최근 들어서는 기업소 등에서의 양어 또한 적극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동신문의 보도를 통해 노력과 원가가 적게 드는 물고기 생산을 장려하고 초식동물을 키워 영양 공급을 늘리려는 북한 당국의 노력을 확인할 수 있다(이설, 2021.6.28.; 이설, 2021.8.7.; KBS 남북의 창, 2021.8.21.)

올해 예상되는 자연재해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식량난'을 우려하고 있는 북한이 다양한 먹거리 확보에 나서 주목된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8일 '양어를 전군 중적 운동으로 전개하자'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싣고 양어에 나선 각지를 소개했다. 신문은 강과 호수, 저수지가 많은 황해북도에서 노력과 원가를 적게 들이면서 물고기를 생산할 수 있는 그물우리양어장을 늘리고 있다고 전했다. (중략) 아울러 김정은 당 총비서가 지난 당 중앙위 8기 3차 전원회의에서 식량 문제 해결을 최우선, 최종대시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농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먹거리 확보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문은 협동농장에서도 양어를 더욱 힘있게 벌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재령군 내림협동농장의 양어분조는 해마다 물고기를 많이 길러 리 안의 탁아소와 유치원에 공급하고 있으며 수십만 마리의 새끼물고기를 자체로 생산해 군과 도 안의 여러 단위에 보내주고 있다고 한다(이설, 2021.6.28. 뉴스1).

‘인민의 식량 형편이 긴장해지고 있다’고 밝힌 북한은 7일 “풀과 고기를 바꿔야 한다”면서 초식 동물을 길러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자고 주문했다. 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풀과 고기를 바꾸라는 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축산 정책”이라며 “토끼, 양, 염소를 비롯한 풀먹는 집짐승 기르기를 적극 장려하고 끈기있게 내밀어야 축산물 생산을 늘려 인민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이설, 2021.8.7. 뉴스1).

#### 4. 식생활의 양극화 양상 확대

대다수의 북한 주민은 코로나19 이후 기본적인 식량을 포함한 식재료 획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일부 지역(평양)과 계층의 주민들은 가공식품, 외식 등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을 언론 보도를 통해 알 수 있다. 제한적이기는 하나, 비만, 다이어트(몸까기)와 같은 문제가 일부 계층에서의 사회적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인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TV는 지난 16일 아동방송 시간에 만화영화 ‘교통질서를 잘 지키자요-다리위에서’ 편을 방영했다. 북한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애니메이션에서 과체중인 아이를 부정적으로 그려 눈길을 끈다. 최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부쩍 살이 빠진 모습으로 등장한 가운데 북한 내부에서 건강한 몸에 대한 높아진 관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중략) 미국의 북한전문 매체 NK뉴스는 23일(현지시간) 최근 북한 매체에서 이같은 잘못된 식습관이나 체중에 대한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며, 북한이 식량 부족 국가로 알려져 있지만 상위층에서는 비만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선전매체 ‘내나라’는 최근 비만 치료를 받은 한 여성 사

례를 소개했다. “비만 때문에 고생이 많았다”는 27세의 이 평양 여성은 비만 치료에 뛰어나다는 고려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20일 만에 5kg을 감량했다. 조선중앙TV는 또 이달 초 아이들이 건강한 아침 식사를 하지 않으면 질병에 걸릴 수 있다고 경고하며 매일 아침 아이들에게 영양가 있는 다양한 생선과 채소를 먹여야 한다는 내용을 보도했다(양은하, 2021.8.25. 뉴스1).

평양을 비롯한 부유층이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육류 식당이 늘고 있고 (KBS, 2020.9.26.), 북한 내에서도 통조림을 비롯한 간편식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보도되기도 하였다(KBS 남북의 창, 2020.4.11.) 김치공장이 함흥에 문들 여는 등 2019년 한 해 동안 북한에 세워진 김치공장이 7개소에 이르고, 평양에만 있던 김치공장이 각 도의 행정 중심지에 들어서서 공장 김치가 대중화되고 있다고 한다(KBS 남북의 창, 2021.6.19.).





## 제5장

### 북한 주민의 식생활과 영양

제1절 북한 주민의 식품공급량과 영양공급량

제2절 북한 주민의 영양 상태

제3절 북한 주민의 최소식품소비 탐색



## 제 5 장 북한 주민의 식생활과 영양

북한 주민의 식생활과 영양 상태에 관한 관심은 해당 분야의 학자들뿐 아니라 일반 국민과 정치인 사이에서도 높은 편이다. 하지만 이러한 관심에 비해 관련한 자료나 정보는 그동안 매우 제한적이었다. 북한 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면접 연구와 UN 기구나 국제 NGO들의 관련 보고서들이 그나마 관련 현황 파악에 도움을 주는 주요 출처로 그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한반도의 정치적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후 남북한 주민의 생활 동질성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진정한 통일 국가로의 발전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남북한 주민의 이질화된 생활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동질성 회복을 위한 전략을 수립, 실행하는 것은 통일 준비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이다.

특히 이러한 생활 분야 중 식생활에 대한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통일을 대비한 준비를 하는 것은 의생활, 주생활 등 타 생활 분야와 비교하여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식생활은 개인과 집단의 영양 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영양 상태는 건강을 결정 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남북 주민의 식생활 차이는 영양 상태, 나아가 건강 상태의 차이로 이어지고, 통일 후 남북한 주민의 이러한 영양 및 건강 격차는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초래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의 걸림돌이 될 것이 자명하다.

이 장에서는 활용 가능한 다양한 국내외 보고서, 연구 결과, 언론 보도 등을 수집, 분석하여 북한 주민의 식생활 현황을 영양 상태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북한 주민의 식품과 영양 공급에 대해서 정량적인 자료를 중심

으로 분석·정리하고, 영유아, 가임기 여성 등 주요 대상의 영양 상태를 각각 살펴보았다. 영양 상태에 대한 가장 최근의 자료를 이용하여, 비슷한 시기의 남한 자료, 저소득국가의 평균 자료, 전 세계 국가의 평균 자료와 비교하였다. 또한, 과거의 자료도 수집하여 시기에 따른 변화를 추적하였다.

## 제1절 북한 주민의 식품공급량과 영양공급량

### 1. 북한의 식품수급표에 보고된 식품공급량과 영양공급량

식품수급표(Food Balance Sheet, FBS)는 특정 기간 동안 한 국가의 식품 공급 패턴에 대한 포괄적인 그림을 제시하는 자료이다(FAO, 2001). 식품수급표는 식품 품목(item)별 수급 상황과 1인 1일당 식품공급량 및 영양공급량 등을 제시하고 있어 식품수급 정책 및 영양정책의 주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160여 개국은 FAO의 권장 방식에 따라 자국의 식품수급표를 작성하고 있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 북한의 경우, 중앙통계국이 식품수급표를 작성하여 FAO에 제출하고 있다(권태진, 2021b). FAO는 이러한 세계 여러 나라의 식품수급표를 매년 업데이트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sup>1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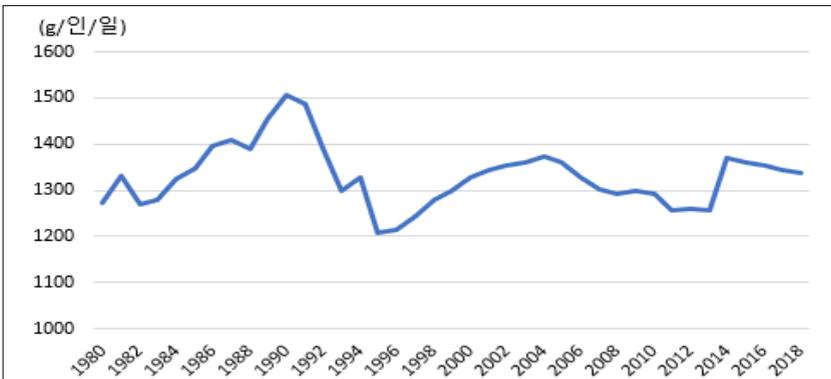
2021년 11월 기준으로 업데이트된 가장 최근의 식품수급표는 2018년 자료이며, 식품수급표는 쌀, 보리와 같은 주요 식량작물을 포함한 총 99개의 식품 품목별로 식품수급과 관련된 17개 요소(element)<sup>17)</sup>에 대한

16) 이 자료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할 것. FAO. (2021b). *Food Balances* (-2013, old methodology and population). <https://www.fao.org/faostat/en/#data/FBSH>에서 2021.10.23. 인출.

데이터를 제공한다. 북한의 경우 1961년부터 2018년까지의 식품수급표가 공개되어 있으며, 2018년 식품수급표의 경우 총 97개 식품 품목<sup>18)</sup>에 대한 데이터를 포함한다.

식품수급표를 통해 본 북한의 1인 1일당 식품공급량 추이는 [그림 5-1]과 같다. 북한의 식품공급량은 1980년부터 1990년까지는 대체적으로 증가하여 1990년에는 1,500 g을 상회하였으나, 이후 급격히 감소하여 1990년대 중반에는 1,200 g에 가까운 낮은 공급량을 보였다. 이후 증감을 반복하다가 2018년의 식품공급량은 1,338 g으로 보고되었다.

[그림 5-1] 북한의 1인 1일당 식품공급량 추이



주: FAO의 식품수급표에 제시되어 있는 1인 연간 식품공급량(kg/인/년)을 1인 1일당 식품공급량(g/인/일)으로 환산한 값임.

자료: 2000-2013년은 FAO. (2021b). Food Balances (-2013, old methodology and population). <https://www.fao.org/faostat/en/#data/FBSH>, 2014년-2018년은 FAO. (2021c). Food Balances (2014-). <https://www.fao.org/faostat/en/#data/FBS>를 참고하여 각 자료로부터 2021. 10. 23. 인출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17) 식품수급과 관련된 17개 요소는 다음과 같다. Domestic supply quantity, Export Quantity, Fat supply quantity (g/capita/day), Feed, Food, Food supply (kcal/capita/day), Food supply quantity (kg/capita/yr), Import Quantity, Losses, Other uses (non-food), Processed Production Quantity, Protein supply quantity (g/capita/day), Residuals, Seed, Stock Variation, Total Population - Both sexes, Tourist consump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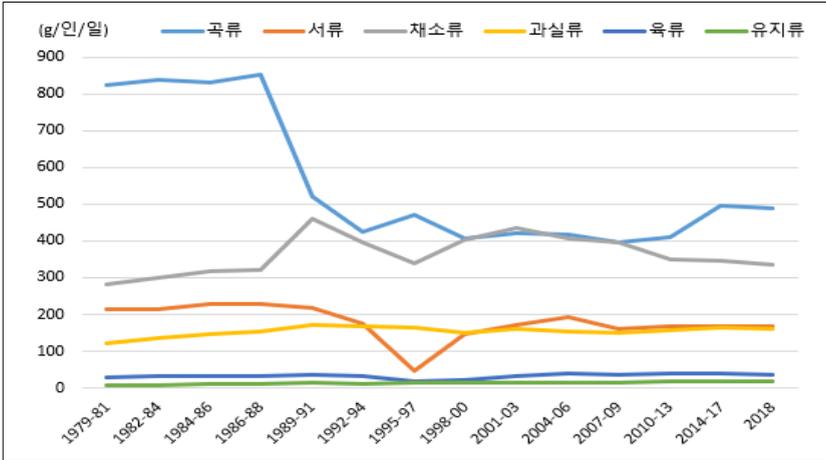
18) FAO 식품수급표의 총 99개 식품 품목 중, 정향(cloves)와 참마(yams) 제외.

북한의 1인 1일당 식품 공급량 추이를 식품군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그림 5-2 참조). FAO 식품수급표는 'items aggregated'<sup>19)</sup>라는 이름으로 식품군을 분류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식품군 분류와 차이가 있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FAO 식품수급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시한 세계 여러 나라의 식품군별 1인 1일당 식품공급량의 북한 자료를 이용하였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

곡류는 198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공급량이 크게 감소하였다가 2010년대 중반에 들어 500 g에 가깝게 회복되었다. 2018년 북한의 곡류 공급량은 490 g이었다. 서류와 채소류는 증감을 반복하다가 2010년대 이후에는 큰 변화없이 각각 100 g 중반 및 300 g 중반의 공급량을 보였다. 2018년 서류와 채소류의 공급량은 각각 168 g, 337 g이었다. 과실류, 육류, 유지류의 경우, 1980년부터 큰 증감 없이 일정한 수준의 공급량을 유지하고 있다. 2018년 과실류, 육류, 유지류 공급량은 각각 162g, 37g, 17g으로 보고되었다.

19) 여기서의 분류는 다음과 같음. Alcoholic Beverages, Animal Products, Animal fats, Aquatic Products, Other, Cereals-Excluding Beer, Eggs, Fish & Seafood, Fruits-Excluding Wine, Grand, Meat, Milk-Excluding Butter, Miscellaneous, Offals, Oilcrops, Pulses, Spices, Starchy Roots, Stimulants, Sugar & Sweeteners, Sugar Crops, Treenuts, Vegetable Oils, Vegetables, Vegetal Products

[그림 5-2] 북한의 식품군별 1인 1일당 식품공급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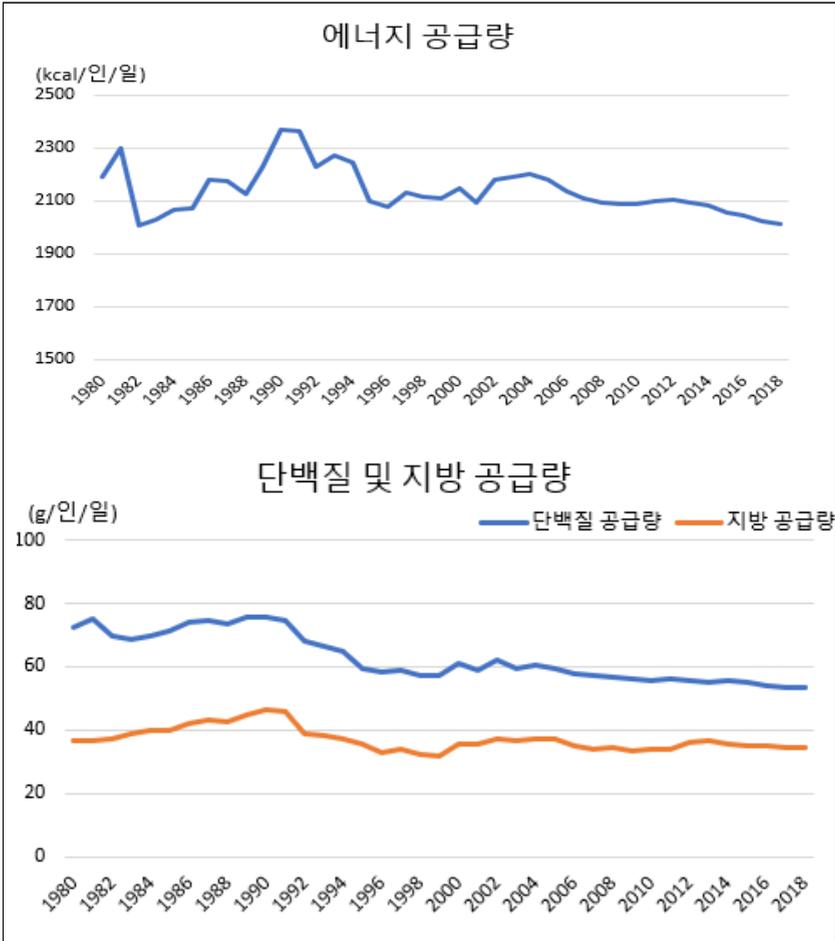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 2019 식품수급표로부터 인출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북한의 영양공급량, 즉 에너지, 단백질, 지방의 1인 1일당 공급량 추이는 [그림 5-3]과 같다. 에너지 공급량 추이는 당연히 식품공급량과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북한의 에너지 공급량은 1980년부터 1990년까지 증가하여 1990년에 2,400 kcal 가까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후 감소하여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증감을 반복하다가, 이후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특히, 2013년부터는 2,100 kcal 아래로 감소하여, 2018년에는 2,102 kcal로 보고되었다.

단백질 및 지방 공급량은 에너지 공급량과 비슷한 양상으로 변화하여 왔다. 두 영양소의 공급량은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반까지 가장 높았다가 이후 감소하였으며, 이전의 공급량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2018년 단백질 및 지방 공급량은 각각 53.3 g, 34.5 g으로 보고되었다.

[그림 5-3] 북한의 1인 1일당 에너지, 단백질, 지방 식품공급량 추이



자료: 2000-2013년은 FAO. (2021b). Food Balances (-2013, old methodology and population). <https://www.fao.org/faostat/en/#data/FBSH>. 2014년-2018년은 FAO. (2021c). Food Balances (2014-). <https://www.fao.org/faostat/en/#data/FBS>에서 2021.10.23. 인출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2. 북한의 식품수급표 분석으로 추정된 영양소별 공급량 및 주요 급원 식품

### 가. 분석 자료 및 분석 방법

FAO의 식품수급표는 식품 품목별 에너지/단백질/지방 공급량을 제공하고 있지만 그 외의 영양소에 대한 공급량은 제시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FAO의 식품수급표를 이용하여 2013년의 북한 식품공급량 및 영양소 주요 급원식품을 연구한 박혜립(2019)의 방법에 따라, 2018년 북한의 식품공급량에 따른 영양소 공급량과 주요 급원식품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북한의 FAO 식품수급표의 최신 자료인 2018년의 1인 연간 식품공급량(kg/인/년)자료를 이용하여 1인 1일당 식품공급량(g/인/일)을 산출하였다. 1인 연간 식품공급량 수치가 0이 아닌 전체 54개의 식품 품목 중, 1인 1일당 식품공급량 산출 시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까지 유효한 값을 가지면서 식품명을 특정할 수 있는 42개 식품 품목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예를 들어, 해바라기씨유(sunflowerseed oil)의 경우, 1인 1일당 식품공급량이 0.03 g으로 산출되어 최종 분석 대상 식품으로 선정하지 않았다. 영양소 분석에는 CAN-Pro 5.0 (Web ver.)(한국영양학회, 2015)을 이용하였다.

FAO의 식품수급표에는 식품 품목별 공급량만 제시되어 있고, 각 식품 품목에 포함된 개별 식품의 종류 및 이러한 식품별 공급량에 대한 정보는 없다. 그러나 영양소 분석을 위해서는 각 식품 품목에 포함시켜 분석할 개별 식품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식품과 그 가공품'으로 제시된 식품 품목의 경우 가공품을 제외한 원 식품만을 개별 식품으로 선정하였

다(예를 들어, rice and products에 대해서는 rice를 개별 식품으로 선정함). 다음으로 유사 식품들을 포함한 식품 품목의 경우, 통계청의 북한 통계포털의 '농림수산업 생산량(2018년)' 자료에서 생산량을 확인할 수 있는 식품을 기준으로 개별 식품을 선정하였다(예를 들어, fruits, others의 경우 배와 복숭아를 개별 식품으로 선정함)(통계청, 2021). 하나의 식품 품목에 여러 식품의 생산량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식품별 생산량에 따른 비율을 적용하여 식품별 공급량을 산출하였다.

최종적으로 북한과 남한의 영양소 공급량 분석에 적용한 식품 품목별 식품 및 1인 1일당 공급량은 <표 5-1>과 같다. 북한의 영양소 공급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식품 품목, 식품 품목별로 포함된 개별 식품, 개별 식품별 1인 1일당 공급량 비율을 북한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남한의 식품공급량을 함께 산출하였다. 1인 1일당 총 식품공급량은 북한이 1299.6g, 남한이 1877.1g으로 약 577g의 차이를 보였다. 식품 품목별 1인 1일당 공급량을 적용하여 17개 영양소<sup>20)</sup>의 1인 1일당 공급량을 산출하였다.

20) 2019 국민건강통계의 '영양소 섭취' 결과(엑셀파일)에 제시된 영양소 종류 및 순서를 따름(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2020).

〈표 5-1〉 분석에 적용한 식품 품목별 식품 및 남북한의 1인 1일당 공급량

식품 품목	분석에 적용한 식품		1인 1일당 식품공급량 (g/인/일)	
	식품 <sup>1)</sup>	공급량 적용 비율(% <sup>2)</sup>	북한	남한
Rice and products (쌀)	쌀	100.0	304.7	327.3
Maize and products (옥수수)	옥수수	100.0	121.6	40.1
Wheat and products (밀)	밀	100.0	53.3	140.7
Sorghum and products (수수)	수수	100.0	3.2	- <sup>3)</sup>
Barley and products (보리)	보리	100.0	1.5	2.4
Oats (귀리)	귀리	100.0	0.7	0.1
Potatoes and products (감자)	감자	100.0	131.3	29.3
Sweet Potatoes (고구마)	고구마	100.0	36.6	10.6
Beans (콩류)	대두	100.0	29.5	2.8
Soyabeans (대두)	대두	100.0	7.0	15.5
Nuts and products (견과류)	밤	100.0	1.6	7.5
Fruits, Other (기타 과일류)	배	54.9	81.9	56.0
	복숭아	45.1		
Apples and products (사과)	사과	100.0	76.1	4.8
Oranges, Mandarines (오렌지, 귤류)	오렌지	100.0	3.6	38.1
Bananas (바나나)	바나나	100.0	0.5	21.7
Pineapples and products (파인애플)	파인애플	100.0	0.1	5.1
Grapes and products- excl wine (포도- 와인 제외)	포도	100.0	0.1	12.1
Vegetables, Other (기타 채소류)	배추	30.0	321.8	452.1
	양배추	30.0		
	호박	6.4		
	오이	6.3		
	고추	4.3		
	파	8.0		
	마늘	6.2		
	수박	8.8		
Onions (양파)	양파	100.0	8.9	77.6
Tomatoes and products (토마토)	토마토	100.0	6.5	19.8
Pimento (피망)	피망	100.0	0.8	0.1
Meat, Other (기타 육류)	토끼고기	100.0	16.3	0.4
Pigmeat (돼지고기)	돼지고기	100.0	11.8	102.3

170 남북한 사회격차 완화를 위한 북한의 의식주 생활 지표 분석

〈표 5-1〉 분석에 적용한 식품 품목별 식품 및 남북한의 1인 1일당 공급량(계속)

식품 품목	분석에 적용한 식품		1인 1일당 식품공급량 (g/인/일)	
	식품 <sup>1)</sup>	공급량 적용 비율(%) <sup>2)</sup>	북한	남한
Poultry Meat (가금류)	닭고기	69.4	4.6	46.3
	오리고기	30.6		
Bovine Meat (소고기)	소고기	100.0	2.4	45.3
Mutton & goat Meat (양고기, 염소고기)	염소고기	93.1	1.7	0.5
	양고기	6.9		
Offals, Edible (부속고기, 식용내장)	돼지내장	100.0	1.6	13.5
Fats, Animals, Raw (동물성 지방, 생)	돼지기름	100.0	1.0	7.4
Milk- Excluding Butter (우유- 버터제외)	우유	100.0	8.1	29.5
Eggs (달걀)	달걀	100.0	12.4	35.4
Demersal Fish (저어류)	대구	93.8	14.2	53.1
	넙치	3.1		
	가자미	3.1		
Pelagic Fish (회유어류)	연어	50.0	1.7	40.2
	송어	50.0		
Freshwater Fish (민물생선)	잉어	100.0	1.6	4.8
Cephalopods (두족류)	오징어	33.4	0.8	19.4
	갑오징어	33.3		
	문어	33.3		
Soyabean Oil (콩기름)	콩기름	100.0	10.5	24.6
Maizegerm Oil (옥수수기름)	옥수수기름	100.0	2.8	0.1
Ricebran Oil (미강유)	미강유	100.0	1.4	1.0
Palm Oil (팜유)	팜유	100.0	0.7	10.0
Cottonseed Oil (면실유)	면실유	100.0	0.4	1.6
Beer (맥주)	맥주	100.0	4.7	114.3
Coffee and products (커피)	커피	100.0	1.1	4.7
Sugar- Raw Equivalent (설탕)	설탕	100.0	8.7	59.1
총 42개			1299.6	1877.1

주: 1) 유사 식품들을 포함한 식품 품목의 경우, 통계청의 북한통계포털의 '농림수산업 생산량 (2018년)' 자료에서 생산량을 확인할 수 있는 식품을 기준으로 개별 식품을 선정하였음.  
 2) 한 품목에 여러 식품이 해당되는 경우, 통계청 북한통계포털의 '농림수산업 생산량(2018년)' 자료의 식품별 생산량에 따른 비율을 적용하여 식품별 공급량을 산출하였음.  
 3) FAO 식품수급표의 남한 식품공급량 자료에는 없는 식품 품목임.  
 자료: 저자 작성. 1), 2)의 경우, 통계청. (2021). 북한통계포털. <https://kosis.kr/bukhan/> 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2021.09.19. 인출.)

## 나. 분석 결과 1: 남북한의 1인 1일당 영양소 공급량

FAO 식품수급표의 모든 식품 품목과 영양소 공급량 분석에 적용한 42개 식품 품목에 대한 총 식품 및 에너지/단백질/지방의 1인 1일당 공급량을 비교한 결과는 <표 5-2>와 같다. 식품공급량의 경우, FAO 식품수급표에서 1인 연간 식품공급량 수치가 제시된 전체 54개의 식품 품목 중, 42개 식품 품목만을 분석에 이용하였기 때문에 FAO 식품수급표보다 적은 식품공급량이 CAN-Pro를 이용한 영양소 분석에 활용되었다. 그럼에도 분석 결과와 FAO 식품수급표의 에너지, 단백질, 지방 공급량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에너지 공급량의 경우, FAO 식품수급표와 분석 결과가 비슷하였다. 단백질과 지방 공급량의 경우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그 원인은 최종 분석 대상에서 제외된 12개의 식품 품목<sup>21)</sup> 중, 단백질과 지방의 주요 급원인 동물성 식품 품목의 식품 공급량이 많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특히, 기타 바다생선류(marine fish, other)의 경우, 1인 1일당 식품공급량은 10.47 g으로 산출되었으나, 해당 식품 품목에 포함된 식품명을 특정할 수 없어 최종 분석 대상 식품에서 제외되었다. 이와 같이 제외된 12개 식품 품목 중, 주류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의 총 1인 1일당 식품공급량은 21.34 g이며, 이 중 절반 이상이 동물성 또는 유지 식품 품목으로부터의 식품공급량으로 파악된다.

21) 최종 분석 대상에서 제외된 식품 품목(12개): Beverage, alcoholic; Marine fish, other; Millet and products; Miscellaneous; Crustaceans; Molluscs, other; Sweeteners, other; groundnuts; Infant food; Sunflowerseed oil; Wine; Butter g,hee.

〈표 5-2〉 FAO 식품수급표와 Canpro 분석 결과의 주요 영양소 공급량 비교

구분		북한	남한	차이 (남한-북한)
식품공급량 <sup>1)</sup> (g/인/일)	FAO 식품수급표 <sup>2)</sup>	1338.2	2196.8	858.6
	Canpro 분석 결과 <sup>3)</sup>	1299.6	1877.1	577.5
에너지 공급량 (kcal/인/일)	FAO 식품수급표 <sup>2)</sup>	2012.0	3417.0	1405.0
	Canpro 분석 결과 <sup>3)</sup>	2227.1	3418.0	1190.9
단백질 공급량 (g/인/일)	FAO 식품수급표 <sup>2)</sup>	53.34	100.13	46.79
	Canpro 분석 결과 <sup>3)</sup>	69.2	125.3	56.1
지방 공급량 (g/인/일)	FAO 식품수급표 <sup>2)</sup>	34.48	110.99	76.51
	Canpro 분석 결과 <sup>3)</sup>	32.8	87.8	55.0

주: 1) FAO의 식품수급표에는 1인 연간 식품공급량(kg/인/년)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영양소 공급량 분석을 위해 1인 1일당 식품공급량(g/인/일)으로 환산한 값임.  
 2) FAO 식품수급표에 포함된 모든 식품 품목의 해당 영양소 공급량임.  
 3) FAO 식품수급표에 포함된 식품 품목 중, Canpro 분석에 이용한 42개 식품 품목의 해당 영양소 공급량 분석 결과임.  
 자료: 저자 작성.

식품 품목별 1인 1일당 식품공급량을 적용하여 산출한 17개 영양소별 1인 1일당 공급량은 〈표 5-3〉과 같다. 공급량과 함께, 남한 대비 북한의 영양소 공급량을 각 영양소별 비율(%)로 제시하였다. 전반적으로 모든 영양소에서 북한의 1인 1일당 영양소 공급량은 남한보다 낮았으며, 17개 중 12개 영양소는 남한 대비 70% 미만의 공급량을 보였다.

〈표 5-3〉 남북한의 1인 1일당 영양소 공급량

영양소	1인 1일당 공급량(g/인/일)에 따른 영양소 공급량(kcal/인/일)		남한 대비 북한의 비율 (%)
	북한	남한	
<b>급원별 에너지 섭취 비율</b>			
단백질 비율 (%)	12.5	14.8	84.30
지방 비율 (%)	13.3	23.4	57.03
탄수화물 비율 (%)	74.1	61.8	120.05
<b>영양소</b>			
에너지 (kca/day)	2227.1	3418.0	65.16
단백질 (g/day)	69.2	125.3	55.25
지방 (g/day)	32.8	87.8	37.38
콜레스테롤 (mg/day)	76.8	373.2	20.59
탄수화물 (g/day)	409.9	521.2	78.65
식이섬유 (g/day)	39.5	54.5	72.45
칼슘 (mg/day)	272.1	423.5	64.26
인 (mg/day)	1301.7	1987.2	65.51
나트륨 (mg/day)	317.9	546.5	58.17
칼륨 (mg/day)	3795.9	4439.9	85.49
철 (mg/day)	15.3	33.1	46.03
비타민 A (ug RAE/day)	156.7	258.7	60.57
티아민 (mg/day)	2.1	3.4	61.59
리보플라빈 (mg/day)	1.0	1.9	54.49
니아신 (mg/day)	15.7	26.9	58.46
엽산 (ug/day)	735.7	768.8	95.69
비타민 C (mg/day)	80.5	103.6	77.65

주: 영양소 종류 및 순서는 2019 국민건강통계의 ‘영양소 섭취’ 결과(엑셀파일)와 동일함.  
 자료: 저자 작성. 영양소의 종류 및 순서의 경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2020). 2019 국민건강통계. 국민건강영양조사 제8기 1차년도 (2019)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에 의한 에너지 공급 비율을 살펴보면, 북한은 74.1:12.5:13.3. 남한은 61.8:14.8:23.4로, 북한은 남한에 비해 단백질과 지방의 비율은 낮고 탄수화물 비율은 높았다. 특히 지방의 경우 남한의 약 60% 수준으로, 북한은 남한보다 지방으로부터 섭취하는 에너지의

비율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한국영양학회, 2020)의 에너지적정비율은 탄수화물 : 단백질 : 지방 = 55~65 : 7~20 : 15~30으로 제시되었다. 이와 비교했을 때, 북한의 에너지 공급 비율은 탄수화물은 높고 지방은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에너지의 1인 1일당 공급량의 경우, 북한은 2,227 kcal, 남한은 3,418 kcal로 1,000 kcal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FAO 식품수급표에 제시된 2018년 1인 1일당 에너지 공급량은 북한 2,012 kcal, 남한 3,417 kcal로 본 연구 결과와 비슷하게 남북한 간 1,000 kcal 이상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남북한 영양소 공급량에 차이가 큰 영양소로는 콜레스테롤(북한 76.8 mg, 남한 373.2 mg), 지방(북한 32.8g, 남한 87.8g), 철(북한 15.3 mg, 남한 33.1 mg) 등으로 나타났다.

#### 다. 분석 결과 2: 북한의 영양소별 주요 급원식품

북한의 영양소별 주요 급원식품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분석된 17개 영양소에 대해서, 각 영양소별 공급량이 많은 순서대로 주요 10가지 급원식품을 제시하였고 각 식품별 해당 영양소의 공급 비율(%)을 계산하였다. 예를 들어, 북한의 1일 1인당 에너지 공급량인 2227.1 kcal은 쌀(rice and products)로부터 1133.4 kcal, 밀(wheat and products)로부터 182.2 kcal, 대두 beans & soybeans)로부터 150.6 kcal, 옥수수(maize and products)로부터 132.5 kcal 등 다양한 급원식품으로부터 공급받는다.

전반적인 주요 급원식품을 살펴보면, 남한에 비해 북한은 식물성 식품으로부터 상당량의 영양소 공급량을 충족하고 있었다. 17개 영양소 중, 에너지를 비롯한 4개 영양소의 주요 급원식품 10가지 모두가 식물성 식

품이었으며, 우유와 달걀을 제외하면 7가지 영양소(에너지, 탄수화물, 식이섬유, 콜레스테롤, 비타민 A, 엽산, 칼슘)의 주요 급원식품이 모두 식물성 식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성 급원식품이 포함된 영양소의 경우에도 고기와 생선 등의 식품은 하위권에 머물렀다.

에너지 및 다량 영양소의 주요 급원식품을 <표 5-4>에 제시하였다. 에너지의 경우, 쌀(50.9%), 밀(8.2%), 콩류(6.8%) 등이 주요 급원식품으로, 10가지 주요 급원식품 모두 식물성 식품이었으며 곡류와 콩류 식품이 1~5위를 차지했다. 탄수화물의 경우, 쌀(60.9%), 밀(9.7%), 옥수수(6.9%) 등이 주요 급원식품으로, 곡류 식품으로부터의 공급량이 많았다.

단백질은 쌀(28.2%), 콩류(22.0%), 밀(10.2%) 등이 주요 급원식품이었다. 단백질의 10가지 주요 급원식품 중 동물성 식품은 기타 육류(5.1%), 저어류(4.0%), 돼지고기(3.0%)로 나타났다. 지방의 경우, 콩기름(32.1%)과 콩류(19.8%)에 의한 공급이 가장 많았다. 단백질과 비슷하게, 지방의 주요 급원식품 중 동물성 식품은 돼지고기(6.3%)를 비롯한 달걀(3.1%), 가금류(2.2%)의 세 가지뿐이었다. 식이섬유는 기타 채소류(12.5%), 밀(8.5%), 콩류(6.2%) 등의 순으로 공급량이 많았으며, 콜레스테롤은 달걀(63.7%)과 저어류(12.6%)에서 상당량을 공급받고 있었다.

<표 5-4> 북한의 영양소별 주요 10가지 급원식품: 열량 및 다량 영양소

순위	에너지		탄수화물		단백질	
	주요 급원식품	%	주요 급원식품	%	주요 급원식품	%
1	Rice and products (쌀)	50.9	Rice and products (쌀)	60.9	Rice and products (쌀)	28.2
2	Wheat and products (밀)	8.2	Wheat and products (밀)	9.7	Beans (콩류)	22.0
3	Beans (콩류)	6.8	Maize and products (옥수수)	6.9	Wheat and products (밀)	10.2
4	Maize and products (옥수수)	5.9	Vegetables, Other (기타 채소류)	5.0	Vegetables, Other (기타 채소류)	6.8
5	Soyabean Oil	4.4	Potatoes and	4.5	Maize and products	6.7

176 남북한 사회격차 완화를 위한 북한의 의식주 생활 지표 분석

순위	에너지		탄수화물		단백질	
	주요 급원식품	%	주요 급원식품	%	주요 급원식품	%
	(콩기름)		products (감자)		(옥수수)	
6	Vegetables, Other (기타 채소류)	4.1	Sweet Potatoes (고구마)	2.8	Meat, Other (기타 육류)	5.1
7	Potatoes and products (감자)	3.7	Fruits, Other (기타 과일류)	2.4	Potatoes and products (감자)	4.6
8	Sweet Potatoes (고구마)	2.2	Apples and products (사과)	2.1	Demersal Fish (저어류)	4.0
9	Fruits, Other (기타 과일류)	1.8	Sugar -Raw Equivalent (설탕)	2.1	Pigmeat (돼지고기)	3.0
10	Apples and products (사과)	1.7	Beans (콩류)	1.7	Eggs (달걀)	2.0
순위	지방		식이섬유		콜레스테롤	
	주요 급원식품	%	주요 급원식품	%	주요 급원식품	%
1	Soyabean Oil (콩기름)	32.1	Vegetables, Other (기타 채소류)	12.5	Eggs (달걀)	63.7
2	Beans (콩류)	19.8	Wheat and products (밀)	8.5	Demersal Fish (저어류)	12.6
3	Maize and products (옥수수)	8.5	Beans (콩류)	6.2	Offals, Edible (부속고기, 식용내장)	4.5
4	Pigmeat (돼지고기)	6.3	Maize and products (옥수수)	3.3	Pigmeat (돼지고기)	4.5
5	Rice and products (쌀)	4.6	Rice and products (쌀)	2.9	Poultry Meat (가금류)	3.9
6	Ricebran Oil (미강유)	4.2	Fruits, Other (기타 과일류)	1.2	Cephalopods (두족류)	2.2
7	Eggs (달걀)	3.1	Apples and products (사과)	1.1	Bovine Meat (소고기)	2.0
8	Fats, Animals, Raw (동물성 지방, 생)	3.1	Sweet Potatoes (고구마)	1.0	Freshwater Fish (민물생선)	1.5
9	Wheat and products (밀)	2.4	Potatoes and products (감자)	0.9	Fats, Animals, Raw (동물성 지방, 생)	1.3
10	Poultry Meat (가금류)	2.2	Soyabean Oil (콩기름)	0.7	Pelagic Fish (회유어류)	1.3

주: %는 공급량 중 각 식품의 비율을 산출한 결과임. 공급량 중 비율(%)= 특정식품으로부터의 영양소 공급량/전체 영양소의 공급량) × 100

자료: 저자 작성.

비타민을 살펴보면, 비타민 A와 C의 경우 기타 채소류(비타민 A: 67.6%, 비타민 C: 59.5%)가 가장 주요한 급원식품으로 조사되었다. 티

아민은 기타 채소류(16.8%), 감자(16.3%), 쌀(16.0%) 등이, 리보플라빈은 옥수수(16.9%), 기타채소류(16.6%) 등이 주요 급원식품이었다. 니아신은 쌀(29.1%), 옥수수(17.0%), 기타 채소류(10.5%) 등의 식품으로부터 공급량이 많았다. 엽산의 경우, 기타 채소류(38.1%)와 옥수수(33.9%)가 가장 주요한 급원식품으로 조사되었다(〈표 5-5〉 참조).

무기질의 경우, 칼슘은 기타 채소류(29.8%), 콩류(28.5%) 등에서 주로 공급받고 있었으며, 주요 급원식품 중 동물성 식품은 우유(3.1%)와 달걀(2.4%)뿐이었다. 인은 쌀(32.8%), 콩류(14.3%), 밀(11.9%) 등이, 나트륨은 쌀(63.3%), 기타 채소류(12.0%) 등이 주요한 급원식품으로 조사되었다. 칼륨의 경우 기타 채소류(21.0%)와 감자(16.8%), 쌀(13.1%) 등으로부터, 철의 경우 밀(18.2%), 콩류(17.9%), 옥수수(14.3%) 등으로부터 공급량이 많았다(〈표 5-6〉).

〈표 5-5〉 북한의 영양소별 주요 10가지 급원식품: 비타민

순위	비타민A		비타민 C		티아민	
	주요 급원식품	%	주요 급원식품	%	주요 급원식품	%
1	Vegetables, Other (기타 채소류)	67.6	Vegetables, Other (기타 채소류)	59.5	Vegetables, Other (기타 채소류)	16.8
2	Maize and products (옥수수)	10.1	Potatoes and products (감자)	13.1	Potatoes and products (감자)	16.3
3	Eggs (달걀)	6.9	Sweet Potatoes (고구마)	11.4	Rice and products (쌀)	16.0
4	Fruits, Other (기타 과일류)	5.0	Apples and products (사과)	5.7	Maize and products (옥수수)	13.3
5	Sweet Potatoes (고구마)	2.2	Fruits, Other (기타 과일류)	5.5	Wheat and products (밀)	13.2
6	Demersal Fish (저어류)	2.0	Oranges, Mandarines (오렌지, 귤류)	1.9	Fruits, Other (기타 과일류)	6.9
7	Wheat and products (밀)	1.6	Tomatoes and products (토마토)	1.0	Beans (콩류)	5.6
8	Milk-Excluding Butter (우유-버터제외)	1.4	Onions (양파)	0.9	Pigmeat (돼지고기)	4.4

순위	비타민A		비타민 C		티아민	
	주요 급원식품	%	주요 급원식품	%	주요 급원식품	%
9	Poultry Meat (가금류)	1.1	Pimento (피망)	0.5	Eggs (달걀)	1.2
10	Meat, Other (기타 육류)	0.6	Nuts and products (견과류)	0.2	Sweet Potatoes (고구마)	1.0
순위	리보플라빈		니아신		엽산	
	주요 급원식품	%	주요 급원식품	%	주요 급원식품	%
1	Maize and products (옥수수)	16.9	Rice and products (쌀)	29.1	Vegetables, Other (기타 채소류)	38.1
2	Vegetables, Other (기타 채소류)	16.6	Maize and products (옥수수)	17.0	Maize and products (옥수수)	33.9
3	Wheat and products (밀)	12.1	Vegetables, Other (기타 채소류)	10.5	Rice and products (쌀)	10.1
4	Rice and products (쌀)	12.1	Wheat and products (밀)	8.8	Potatoes and products (감자)	4.9
5	Eggs (달걀)	8.4	Meat, Other (기타 육류)	8.2	Sweet Potatoes (고구마)	4.2
6	Beans (콩류)	8.3	Beans (콩류)	7.0	Wheat and products (밀)	2.8
7	Potatoes and products (감자)	5.2	Pigmeat (돼지고기)	3.4	Eggs (달걀)	2.1
8	Apples and products (사과)	3.0	Potatoes and products (감자)	3.3	Apples and products (사과)	0.7
9	Demersal Fish (저어류)	2.3	Demersal Fish (저어류)	2.3	Fruits, Other (기타 과일류)	0.6
10	Pigmeat (돼지고기)	2.2	Fruits, Other (기타 과일류)	1.8	Meat, Other (기타 육류)	0.5

주: %는 공급량 중 각 식품의 비율을 산출한 결과임. 공급량 중 비율(%)= 특정식품으로부터의 영양소 공급량/전체 영양소의 공급량) × 100  
 자료: 저자 작성.

남북한의 동식물성 급원식품별 주요 영양소 공급량을 [그림 5-4]에 제시하였다. 제시된 단백질, 지방, 칼슘, 철의 경우, 다른 영양소에 비해 동물성 식품으로부터의 섭취가 용이한 영양소이다. 그러나 영양소별 급원식품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북한은 식물성 식품으로부터 해당 영양소 공급량의 대부분을 충족하고 있었다. 북한은 동물성 식품보다 식물성 식품으로부터 단백질과 지방은 4~5배, 칼슘과 철은 8~9배 가량 높은 공급량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6〉 북한의 영양소별 주요 10가지 급원식품: 무기질

순위	칼슘		인		나트륨	
	주요 급원식품	%	주요 급원식품	%	주요 급원식품	%
1	Vegetables, Other (기타 채소류)	29.8	Rice and products (쌀)	32.8	Rice and products (쌀)	63.3
2	Beans (콩류)	28.5	Beans (콩류)	14.3	Vegetables, Other (기타 채소류)	12.0
3	Maize and products (옥수수)	9.4	Wheat and products (밀)	11.9	Eggs (달걀)	5.2
4	Wheat and products (밀)	4.7	Maize and products (옥수수)	9.9	Wheat and products (밀)	3.4
5	Rice and products (쌀)	4.5	Vegetables, Other (기타 채소류)	8.4	Meat, Other (기타 육류)	2.9
6	Apples and products (사과)	3.6	Potatoes and products (감자)	6.4	Fruits, Other (기타 과일류)	2.4
7	Sweet potatoes (고구마)	3.2	Meat, Other (기타 육류)	2.9	Sweet Potatoes (고구마)	1.7
8	Milk - Excluding Butter (우유-버터제외)	3.1	Demersal Fish (저어류)	2.1	Milk-Excluding Butter (우유-버터제외)	1.4
9	Eggs (달걀)	2.4	Eggs (달걀)	1.8	Potatoes and products (감자)	1.2
10	Potatoes and products (감자)	1.9	Fruits, Other (기타 과일류)	1.6	Poultry Meat (가금류)	1.0
순위	칼륨		철			
	주요 급원식품	%	주요 급원식품	%		
1	Vegetables, Other (기타 채소류)	21.0	Wheat and products (밀)	18.2		
2	Potatoes and products (감자)	16.8	Beans (콩류)	17.9		
3	Rice and products (쌀)	13.1	Maize and products (옥수수)	14.3		
4	Beans (콩류)	12.1	Vegetables, Other (기타 채소류)	13.6		
5	Wheat and products (밀)	11.0	Rice and products (쌀)	8.0		
6	Maize and products (옥수수)	10.1	Apples and products (사과)	6.0		
7	Sweet potatoes (고구마)	4.1	Potatoes and products (감자)	5.2		
8	Fruits, Other (기타 과일류)	3.9	Bovine Meat (소고기)	4.6		
9	Apples and products (사과)	2.2	Meat, Other (기타 육류)	2.6		
10	Meat, Other (기타 육류)	1.5	Pigmeat (돼지고기)	1.6		

주: %는 공급량 중 각 식품의 비율을 산출한 결과임. 공급량 중 비율(%)= 특정식품으로부터의 영양소 공급량/전체 영양소의 공급량) × 100

자료: 저자 작성.

[그림 5-4] 남북한의 동식물성 급원식품별 주요 영양소 공급량



자료: Canpro 5.0의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제2절 북한 주민의 영양 상태

북한에는 아직 남한의 국민건강영양조사와 같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영양 상태 조사가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북한 주민의 영양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는 매우 제한적이지만, 주로 UN 산하의 국제기구에서 발표하는 영양 상태 관련 지표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FAO, WFP, UNICEF 등에서는 비정기적으로 북한 주민의 영양상태 관련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으며, 해당 보고서에는 북한 주민의 영양 상태 관련 지표값이 제시되어 있다. World Bank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러한 자료들로부터 취합한 데이터를 근거로 산출한 지표별 추정치를 제공한다.

특히, 영유아 및 가임기여성 대상 지표들은 주로 북한 당국 또는 UNICEF 등의 국제기구가 주기적으로 수행하는 영양조사(nutrition survey)와 다중지표군집조사(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를 통해 생산된다. 2021년 11월 기준으로 가장 최신의 자료는 2017년에 실시된 다중지표군집조사 보고서(DPRK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 UNICEF, 2018)로, 해당 보고서는 북한의 영양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영양 상태는 일반적으로 신체계측(A: anthropometry), 생화학적 검사(B: biochemical test), 임상 조사(C: clinical observation), 식이 조사(D: dietary evaluation)로 구분되는 ABCD법을 통해 평가할 수 있다. 북한 주민의 영양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관련 지표들은 <표 5-7>과 같다. 제시된 지표들은 앞선 영양 상태 평가방법에 따라 위와 같이 ABCD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대상에 따라 주민 전반, 영유아, 가임기 여성의 영양 상태 관련 지표로 분류할 수 있다.

〈표 5-7〉 북한 주민의 영양 상태 관련 지표

구분 대상	신체계측 지표 A. Anthropometric	생화학적 검사 지표 B. Biochemical	임상 조사 지표 C. Clinical	식사 조사 지표 D. Dietary	간접/혼합 지표
주민 전반	-	-	-	·에너지섭취부족 인구비율 ·식품불안정 인구비율 ·식품섭취불량 가구비율	·세계기아지수
영양아	·만성영양실조율 ·급성영양실조율 ·저체중률 ·과체중률	·빈혈 유병률	-	·완전모유수유율 ·최소 적정섭취/ 식이다양성/ 식이빈도 비율	·영아사망률 ·5세미만사망률
가임기 여성	·단백질에너지 영양실조율	·빈혈 유병률	-	·최소 식이다양성 비율	·저체중아출산율 ·모성사망비

자료: 윤지현. (2019c). 영양 및 식량안보. 북한 보건의료백서(2019년 개정판)에서 일부 내용 추가하여 저자 작성.

신체계측 지표로는 만성 영양실조율, 급성 영양실조율, 저체중률, 과체중률, 단백질에너지 영양실조율이 있고, 생화학적 검사 지표로는 빈혈 유병률이 있다. 식사 조사 지표로는 에너지섭취부족 인구비율, 식품불안정 인구비율, 식품섭취불량 가구비율, 완전모유수유율, 최소 적정섭취/식이다양성/식이빈도 비율이 있다.

영양 상태 평가방법에 따라 ABCD법으로 분류한 지표 외에, 영아 사망률, 5세미만 사망률, 저체중아출산율, 모성사망비 등은 영양상태를 보여주는 간접지표이다. 세계기아지수는 여러 영양 관련 직간접 지표를 이용하여 산출되는 혼합지표이다.

이 절에서는 이와 같은 영양 상태 관련 지표의 통시적, 공시적 비교를 통해 북한 주민의 영양 상태를 평가하였다. 각 지표별 북한의 추이를 살펴봄으로써 시간의 흐름에 따른 북한의 영양 상태를 통시적으로 평가하

였다. 또한 북한의 현황을 남한, 저소득 국가(low income countries), 저소득 식량부족국가(low income food deficit countries), 전 세계 국가 평균의 현황과 비교하여 세계적인 수준에서 북한의 영양 상태를 공식적으로 평가하였다.

저소득 국가란, World Bank에서는 매년 소득을 기준으로 국가를 분류하는 네 가지 그룹<sup>22)</sup> 중, 가장 소득이 낮은 그룹에 해당하는 국가이다. 2021년 기준으로, 2020년의 1인당 국민총소득(Gross National Income, GNI)이 1,045달러 이하인 국가를 저소득 국가로 분류하였다(World Bank, 2021a). 한편, FAO는 저소득 및 식량 부족을 기준으로 해당 국가가 동의할 경우에 저소득 식량부족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2021년 기준으로, 2019년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1,045달러 미만일 때 저소득으로 판단하며, 식량부족은 2017~2019년 3년 평균의 순 식품무역량(총 수입량-총 수출량)을 고려한다(FAO, 2021e). 저소득 국가 및 저소득 식량부족국가의 분류 기준은 매년 변화하지만, 2021년 기준으로 북한은 저소득 국가이자 저소득 식량부족국가 모두에 해당되는 국가이다.

이러한 통시적, 공시적 접근 방법은 저자가 집필한 선행 문헌(윤지현, 2019c)에서 먼저 도입된 바 있다. 본 원고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선행 문헌의 접근법을 따르되 가능한 통계자료들을 전부 업데이트하여 기술하고 논의하였다.

전반적으로, 여러 지표의 수치가 과거에 비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였다는 점에서 북한 주민의 영양 상태는 개선되고 있다. 특히 영유아를 포함한 취약계층의 영양불량률이 눈에 띄게 개선되어 저소득 국가 및 세계 평균과 비교하였을 때에도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

22) 각 그룹은 다음과 같음. High income countries, Low-middle income countries, Upper-middle income countries, Low income countries

나 남한과의 격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특히 에너지섭취부족 인구비율, 식품불안정 인구비율, 식품섭취불량 가구비율 등의 북한 주민 전반의 영양 상태 관련 지표 현황을 살펴보면 국제사회의 지원이 시급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북한 주민의 영양 상태는 전반적으로 과거에 비해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우려할만한 수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지표별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

## 1. 북한 주민의 전반적 영양 상태

북한 주민의 전반적 영양 상태는 에너지섭취부족 인구비율, 식품불안정 인구비율, 식품섭취불량 가구비율, 세계기아지수 등의 지표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 가. 에너지섭취부족 인구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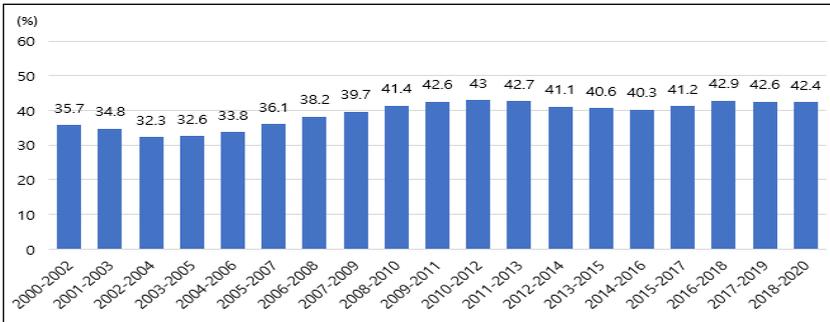
에너지섭취부족 인구비율(Prevalence of Undernourishment, PoU)은 전체 인구 중 '에너지 섭취 부족(undernourishment)' 상태에 있는 인구의 비율로, '인구 중 무작위로 한 사람을 뽑았을 때, 그 사람이 활력 있고 건강한 삶을 위한 필요량보다 적은 양의 에너지를 섭취할 확률'로 정의된다(FAO, 2016). 에너지섭취부족 인구비율은 FAO의 전통적인 기아 측정 지표로,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중 하나인 Zero hunger(goal 2)의 달성 정도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지표이기도 하다.

에너지섭취부족 인구비율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식품 가용성, 식품 소비 및 에너지 요구에 대한 국가 수준의 데이터가 필요하다. 에너지섭취부족 인구비율은 이러한 데이터를 근거로 식품섭취 분포와 관련된 인구특성(성별, 연령, 신장, 신체활동 수준)을 고려하여 개인의 일상적인 식이

에너지 섭취량이 최소 식이 에너지 요구량보다 낮을 누적 확률을 계산함으로써 추정된다(FAO, 2016). 국가 수준에서의 에너지섭취부족 인구비율은 일부 자료의 연간 정보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3년 동안의 평균값으로 추정, 보고되고 있다.

북한의 에너지섭취부족 인구비율은 2000년대 중반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8~2010년에 40%를 넘어섰고, 2010년대 중반 이후에는 42% 수준에서 정체하고 있다(그림 5-5) 참조). 가장 최근 보고된 북한의 에너지섭취부족 인구비율은 2018~2020년의 평균값으로 42.4%이다. 이는 세계 평균의 약 5배, 저소득국가 평균의 약 2.4배, 저소득 식량부족 국가 평균의 약 1.5배이다(〈표 5-8〉 참조).

[그림 5-5] 북한 에너지섭취부족 인구비율의 통시적 비교



주: 에너지섭취부족 인구비율은 3년 평균값으로 제시됨.

자료: FAO. (2021a). FAO statistics. <http://www.fao.org/faostat> 로부터 인출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2021.09.19. 인출).

〈표 5-8〉 북한 에너지섭취부족 인구비율의 공시적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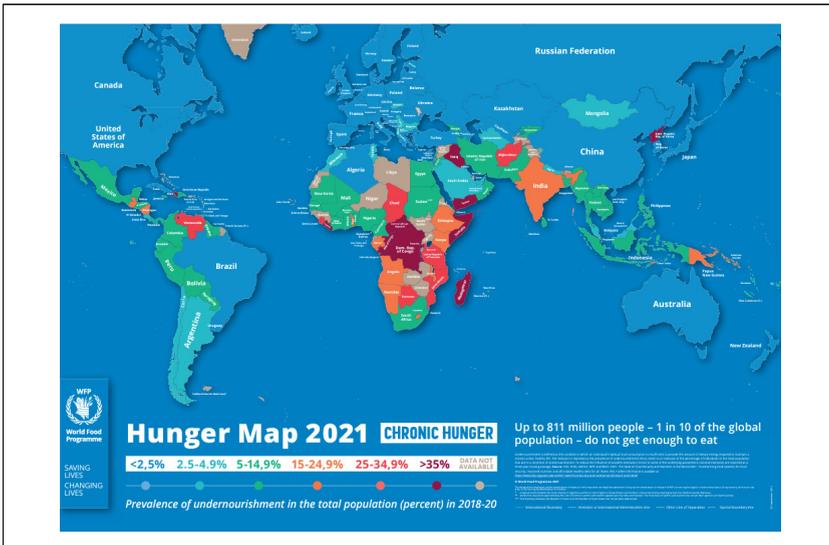
연도	지역 (%)				
	북한	남한	저소득 국가 평균	저소득 식량부족 국가 평균	세계 평균
2018-2020	42.4	<2.5	18	28.9	8.9

주: 에너지섭취부족 인구비율은 3년 평균값으로 제시됨.

자료: FAO. (2021a). FAO statistics. <http://www.fao.org/faostat> 로부터 인출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2021.09.19. 인출).

WFP의 기아지도(hunger map)는 에너지섭취부족 인구비율의 등급에 따라 색을 구분하여 국가별 기아수준을 가시적으로 보여준다. 2021년 기아지도의 경우, 국가별 2018-2020년의 평균 에너지섭취부족 인구비율을 수준에 따라 여섯 등급<sup>23)</sup>으로 분류하고 있다. 북한은 가장 높은 등급 (>35%)으로 분류된 11개국<sup>24)</sup> 중 하나이며, 동아시아에서 유일한 가장 높은 등급의 국가이다([그림 5-6] 참조).

[그림 5-6] WFP의 기아지도 2021



자료: WFP. (2021b). Hunger Map 2021

- 23) 여섯 등급은 다음과 같음. ① <2.5% ② 2.5~5% ③ 5%~14.9% ④ 15%~24.9% ⑤ 25%~34.9% ⑥ >35%
- 24) 11개국은 다음과 같음. Democratic Republic of Korea, Haiti, Republic of Congo,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Madagascar, Rwanda, Central African Republic, Yemen, Somalia, Liberia, Iraq,

## 나. 식품불안정 인구비율

식품불안정 인구비율(prevalence of food insecurity)은 식품불안정 상태에 있는 인구의 비율로, ‘식품불안정’이란 식품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 즉 정상적인 성장 및 발달과 활동적이고 건강한 삶을 위해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에 정기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는 상태로 정의된다<sup>25)</sup> (FAO, 2021d). 섭취하지 못할 식품불안정 인구비율은 에너지섭취 부족 인구비율과 함께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중 하나인 Zero hunger(goal 2)의 달성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활용된다.

식품불안정 인구비율은 식품불안정경험척도(Food Insecurity Experience Scale, FIES)를 기반으로 산출된다. 식품불안정경험척도는 8가지 식생활 관련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질문에 대한 원시점수를 국제 기준으로 변환하여 세계적인 수준에서의 식품불안정성을 평가한다. 식품불안정 인구비율은 일반적으로 중등도 또는 중증(moderate or severe)의 식품불안정과 중증(severe)의 식품불안정을 경험한 인구 비율의 추정치로 보고된다.

그러나 북한의 식품불안정 인구비율은 2019년의 FAO와 WFP 합동 긴급 식품안정성 보고서에서 40%의 단일 값으로 처음 보고되어(FAO & WFP, 2019) 산출 방식이나 해석에 의문이 남는다. 그러므로 이러한 북한의 식품불안정 인구비율을 다른 나라의 수치와 공식적으로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식품불안정 인구비율 수치는 북한 인구 중 40%가 식품불안정 상태에 놓여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북한에 인도적 식량지원을 호소하는 근거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다.

25) FAO에서는 식품불안정을 “A person is food insecure when they lack regular access to enough safe and nutritious food for normal growth and development and an active and healthy life”으로 정의하고 있다(FAO, 2021d).

#### 다. 식품섭취불량 가구비율

식품섭취불량 가구비율은 가구의 식이다양성을 평가하는 식품섭취점수가 불량에 해당하는 가구의 비율이다. 가구의 식이다양성은 식품섭취점수를 기준으로 불량(poor), 경계(borderline), 적정(acceptable)의 3등급으로 구분된다(WFP, 2008). 식품섭취불량 가구비율은 2011, 2012, 2013년 보고서에서 0점 이상 28점 이하는 불량, 28점 이상 42점 이하는 경계, 42점 초과는 적정을 기준으로 제시되었으나(FAO & WFP, 2011, 2012, 2013), 2018년 이후에는 0점 이상 21점 이하는 불량, 21.5점 이상 35점 이하는 경계, 35점 초과는 적정을 기준으로 제시되었다(WFP, 2021a).

식품섭취점수(Food Consumption Score, FCS)는 가구 수준에서의 식이 다양성을 평가하는 도구로, 식이 다양성, 식품섭취 빈도, 식품군별 상대적 영양 가중치를 고려한 종합 점수이다. WFP에서는 식품섭취점수를 '조사 전 7일 동안 가구가 소비하는 여러 식품군의 섭취 빈도를 사용하여 계산한 점수'로 정의하고 있다(WFP, 2008).

식품섭취점수의 산출은 여덟 가지 식품군에 대한 지난 일주일 동안의 섭취 빈도에 기반한다. <표 5-9>와 같이, 영양 밀도에 따라 각 식품군에 표준 가중치를 부여하고 식품군별 표준 가중치와 섭취 빈도를 곱한 후 합산하여 식품섭취점수를 산출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식품섭취점수는 지난 일주일간 여덟 가지 식품군을 한 번도 섭취하지 않은 0점부터, 모든 식품군을 매일 섭취한 114점까지로 산출될 수 있다(WFP, 2008).

〈표 5-9〉 식품섭취점수에서의 식품군별 가중치

	식품군	식품(예시)	가중치
1	주요작물(Main Staples)	옥수수, 쌀, 파스타, 빵, 시리얼 등	2
		카사바, 감자, 고구마 등	
2	두류(Pulses)	콩, 완두콩, 캐슈넛 등	3
3	채소(Vegetables)	채소, 잎채류 등	1
4	과일(Fruit)	과일	1
5	고기·생선(Meat and Fish)	소고기, 돼지고기, 생선, 달걀 등	4
6	우유(Milk)	우유와 유제품	4
7	설탕(Sugar)	설탕, 꿀 등	0.5
8	기름(Oil)	기름, 지방, 버터 등	0.5
9	조미료(Condiments)	차, 커피, 소금, 어유, 향신료 등	0

식품섭취점수(FCS)=(주요작물x2)+(두류x3)+채소+과일+(고기·생선x4)+(우유x4)+(설탕x0.5)+(기름x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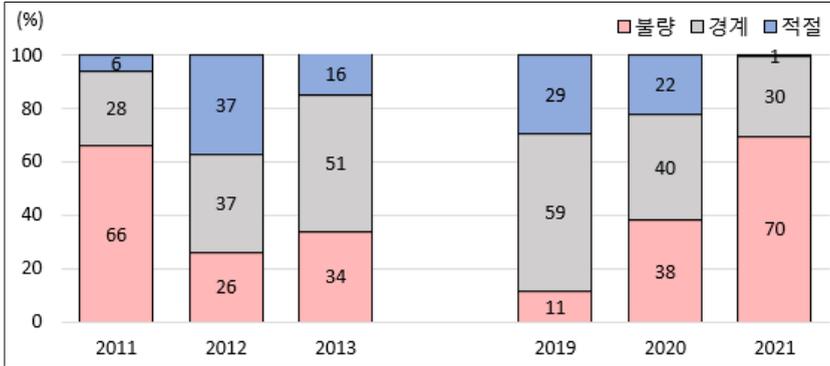
주: 식품군 및 가중치는 조사에 따라 변동됨.

자료: WFP. (2008). Food consumption analysis: Calculation and use of the food consumption score in food security analysis

북한의 식품섭취불량 가구비율은 WFP와 FAO에 의해 비정기적으로 보고되고 있다(그림 5-7) 참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용가능한 자료는 2011, 2012, 2013년 및 2019, 2020, 2021년의 데이터이다. 2021년 11월 기준, 가장 최신 자료인 WFP의 ‘Household Food Security in the DPRK’ 발표자료<sup>26)</sup>에 따르면(WFP, 2021a), 북한의 식품섭취불량 가구비율은 2019년 11%, 2020년 38%, 2021년 70%로 지난 2년간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는 2020년 1월 국경폐쇄 조치 이후 북한 주민 식생활이 매우 급속도로 악화되었음을 보여준다.

26) 주한미대사관에서 개최한 US Round Table의 발표자료(WFP 아시아지역본부장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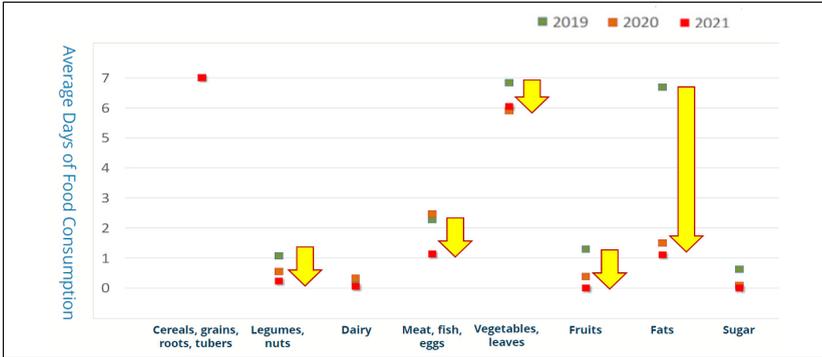
[그림 5-7] 북한 식품섭취불량 가구비율의 통시적 비교



주: 조사연도에 따라 조사 지역, 표본의 추출방법/수, 기준값에 차이가 있음.  
 자료: FAO and WFP. (2011, 2012, 2013). Crop and food security assessment mission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WFP. (2021a). Household food security in the DPRK로부터 인출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해당 발표자료에는 북한의 식품섭취점수 산출에 사용된 8가지 식품군 별 7일 동안의 섭취일수도 제시되어 있다[그림 5-8]. 최근 3년 동안 대부분의 식품군에 대한 섭취일수가 감소하였는데, 특히 지방(fats)의 경우, 4일 이상 크게 감소하였고, 8가지 식품군 중 곡류(cereals, grains, roots, tubers)와 채소류(vegetables, leaves)를 제외한 6가지 식품군의 섭취일수가 2일 미만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3년 동안 북한 가구의 식이 다양성이 매우 낮아졌음을 의미하며, 코로나19로 인한 영향도 있었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림 5-8] 식품섭취점수 산출에 활용된 북한 가구의 식품군별 섭취일수



자료: WFP. (2021a). Household food security in the DPRK.

## 라. 세계기아지수

세계기아지수(Global Hunger Index, GHI)는 세계, 지역, 국가 수준에서 기아를 종합적으로 측정 및 추적할 수 있도록 고안된 지표로 (Welthungerhilfe & Concern Worldwide, 2020), 여러 영양 관련 직간접 지표를 이용하여 산출된다. 세계기아지수는 세 가지 차원(불충분한 식품공급, 어린이 영양부족, 어린이 사망률)과 네 가지 지표(에너지섭취 부족 인구비율, 영유아 급성영양실조율, 영유아 만성영양실조율, 5세 미만 사망률)로 구성되는데, 네 가지 지표값이 0인 0점에서부터 모든 지표값이 최근 수십 년 동안 세계적으로 관찰된 가장 높은 수준임을 의미하는 100점까지로 산출된다(표 5-10). 세계기아지수를 기반으로 기아 수준의 심각도는 다음과 같이 5단계로 구분된다. Poor(9.9점 이하); Moderate(10.0점 이상 19.9점 이하); Serious(20.0점 이상 34.9점 이하); Alarming(35.0점 이상 49.9점 이하); Extremely alarming(50.0점 이상).

〈표 5-10〉 세계기아지수 산출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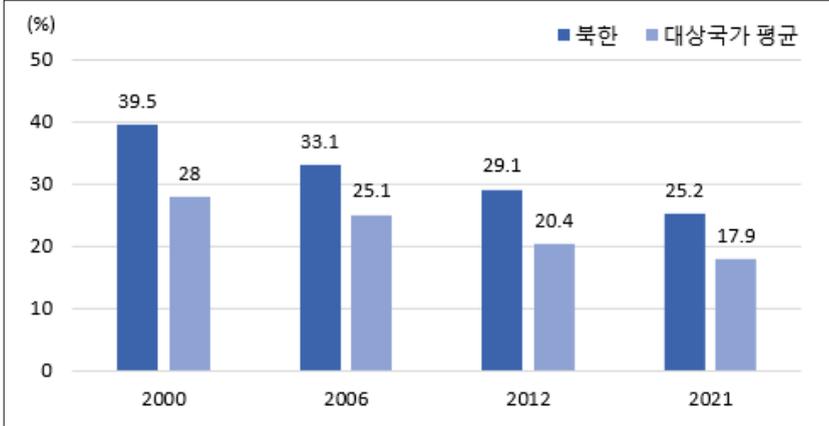
단계	내용
1	각국의 이용 가능한 자료로부터 지표 값 확정
	1) 에너지섭취부족 인구비율; 2) 영유아 급성영양실조율; 3) 영유아 만성영양실조율; 4) 5세미만 사망률
2	지표 값을 표준 점수로 계산
	각 지표별 1988년 이후의 최고값을 기준으로 한계값을 설정 후, 이를 이용하여 표준 점수 계산 (예) 에너지섭취부족 인구비율의 표준 점수 계산 - 1988년 이후의 에너지섭취부족 인구비율 최고값: 76.5% - 한계값: 80% (최고값보다 약간 높게 설정) - 지표값이 40%일 때, 표준 점수: $40/80 \times 100 = 50$
3	각 지표의 표준 점수를 합산
	각 지표별로 다음과 같은 비중을 두어 합산 1) 에너지섭취부족 인구비율:1/3; 2) 영유아 급성영양실조율:1/6; 3) 영유아 만성영양실조율:1/6; 4) 5세미만 사망률:1/3

자료: Welthungerhilfe and Concern Worldwide. (2021). Global Hunger Index. (2021b). Global hunger index scores by 2020 GHI rank. (<https://www.globalhungerindex.org/north-korea.html>에서 21.09.19.인출)의 내용을 번역하여 저자 작성.

세계기아지수는 대상 국가와 산출방법에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연도별 수치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지표이다. 대신 매년 세계기아지수를 산출할 때 통시적 비교가 가능하도록 설정한 기준연도의 수치를 함께 제시하고 있는데, 2021년에는 2000, 2006, 2012년을 비교를 위한 기준연도로 설정하였다.

2021년 북한의 세계기아지수는 25.2점으로, 심각도 5단계 중 3단계인 ‘심각’ 단계에 속한다. 기준연도별 북한의 세계기아지수는 2000년 39.5점에서 2021년 25.2점으로 꾸준히 감소하여 기아수준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20년 대상국가 전체의 기아지수 평균은 17.9점으로, 세계적인 수준에서 북한의 기아수준은 여전히 심각함을 알 수 있다[그림 5-10].

[그림 5-9] 북한 세계기아지수의 통시적, 공시적 비교



주: 대상국가는 매년 상이함. 2021년의 경우, 지수 산출이 가능한 116개국을 대상으로 세계기아지수를 산출함.

자료: Global Hunger Index. (2021b). global hunger index scores by 2021 GHI rank. <https://www.globalhungerindex.org/> 로부터 인출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2021.11.03. 인출).

## 2. 북한 영유아의 영양 상태

북한 영유아의 영양 상태는 영유아 만성 영양실조율, 급성 영양실조율, 저체중률, 과체중률, 빈혈유병률, 완전모유수유율 등의 지표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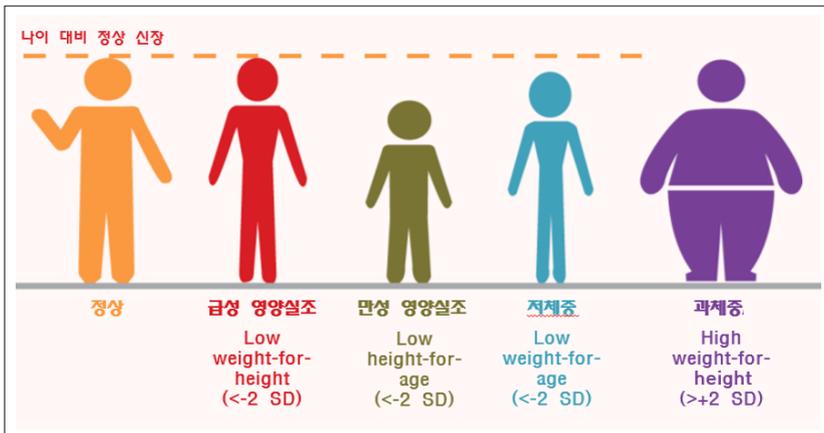
### 가. 영유아 만성 영양실조율, 급성 영양실조율, 저체중률, 과체중률

영유아 만성 영양실조율 및 급성 영양실조율과 저체중률은 영유아의 영양실조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만성영양실조(stunting)는 나이에 비해 키가 작은 상태로 ‘저신장’, ‘발육부진’이라고도 하며, 만성적이고 반복적인 영양실조의 결과이다. 급성영양실조(wasting)는 키에 비

해 너무 마른 상태로 ‘근소모’라고도 하며, 심각한 식량 부족 또는 질병으로부터 유발된다. 저체중(underweight)은 나이에 비해 몸무게가 적게 나가는 상태로, 급성과 만성 영양실조의 요소를 모두 포함할 수 있는 복합적인 영양실조이다. 과체중(overweight)은 키에 비해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영양과잉에 의한 영양불량의 형태이다.

이 네 지표는 WHO의 아동 성장 표준(WHO childgrowth standards) 데이터를 기준으로 [그림 5-10]과 같이 정의되며, 각 영양불량 상태에 해당하는 5세 미만 영유아의 비율(prevalence of stunting/wasting/underweight/overweight in children under 5 years of age)로 산출된다.

[그림 5-10] 영유아 만성영양실조, 급성영양실조, 저체중 및 과체중의 정의



주: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 SD)는 WHO 아동 성장 표준의 월령별 표준편차  
 자료: Harvard T.H. Chan School of Public Health - India Research Center. (2020).  
 Sanchar Brief #13: CNNS Data for Stunting, Wasting, Underweight을 저자 번역.

북한의 영유아 만성영양실조율, 급성영양실조율, 저체중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과거에 비해 매우 개선되었다([그림 5-11], <표 5-11> 참

조). 만성영양실조율은 고난의 행군 시기로 불리우는 북한의 경제위기 당시인 1998년에 62.3%의 높은 수치로 처음 보고되었다. 이후 2000년에는 45.2%, 가장 최근인 2017년에는 19.1%로 보고되어 절반 미만으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수치는 저소득국가 및 저소득 식량부족국가 평균보다는 낮고 세계 평균과는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남한과 비교 시, 남한의 약 9배에 가까운 높은 수준이며, 2018년에 WHO와 UNICEF에서 설정한 5단계 중 여전히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sup>27)</sup>.

북한의 급성영양실조율 역시 1998년에 60.6%의 높은 수치로 처음 보고되어, 2000년에는 10.4%, 2017년에는 1/4 수준인 2.5%까지 개선되었다. 이러한 수치는 저소득국가 및 저소득 식량부족국가, 세계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며, 남한과 비교했을 때에는 개선의 필요성이 있으나, 5단계의 ‘매우 낮음’과 ‘낮음’의 임계값에 해당한다<sup>28)</sup>.

북한 영유아의 저체중률 또한 1998년 15.6%로 보고된 이후 2000년에는 27.9%, 2017년에는 1/3 수준인 9.3%로 감소하여 저소득 국가와 세계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는 남한의 10배 이상이며, 5단계 중 ‘중간’ 수준에 포함되어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sup>29)</sup>. 반면 북한 영유아의 과체중률의 경우, 2009년 0%로 처음 보고된 이후 2017년에는 2.3%로 소폭 증가하였다. 이는 남한의 1/3, 세계 평균의 1/2 미만이며, 5단계 중 ‘매우 낮음’에 해당한다<sup>30)</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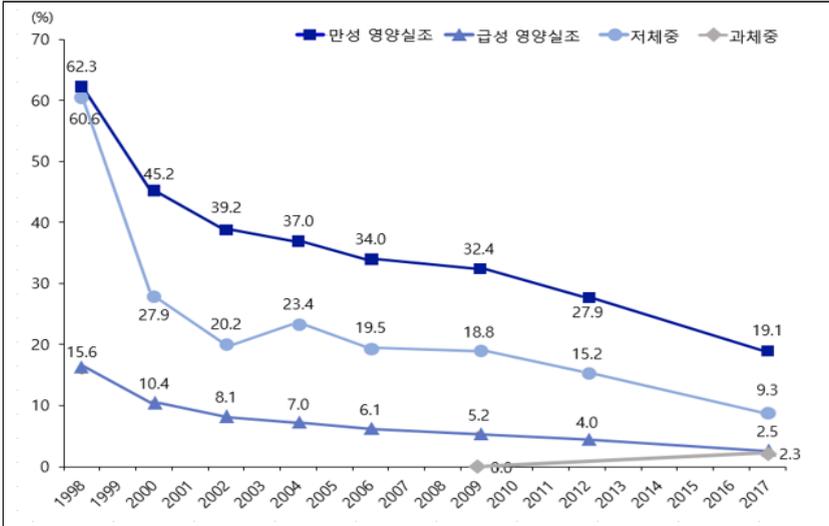
27) WHO/UNICEF의 영유아 만성영양실조율 기준: 5% 미만-매우 낮음; 5% 이상 10% 미만-낮음; 10% 이상 20% 미만-중간; 20% 이상 30% 미만-높음; 30% 이상-매우 높음.

28) WHO/UNICEF의 영유아 급성영양실조율 기준: 2.5% 미만-매우 낮음; 2.5% 이상 5% 미만-낮음; 5% 이상 10% 미만-중간; 10% 이상 15% 미만-높음; 15% 이상-매우 높음.

29) WHO/UNICEF의 영유아 저체중률 기준: 2.5% 미만-매우 낮음; 2.5% 이상 5% 미만-낮음; 5% 이상 10% 미만-중간; 10% 이상 15% 미만-높음; 15% 이상-매우 높음.

30) WHO/UNICEF의 영유아 과체중률 기준: 2.5% 미만-매우 낮음; 2.5% 이상 5% 미만-낮음; 5% 이상 10% 미만-중간; 10% 이상 15% 미만-높음; 15% 이상-매우 높음.

[그림 5-11] 북한 영유아 만성영양실조율, 급성영양실조율, 저체중률 및 과체중률의 통시적 비교



주: 조사연도에 따라 조사 지역이나 표본의 추출방법/수 등에 다소 차이가 있음.  
 자료: EU, UNICEF, WFP. (1998). Nutrition Survey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2000). Report of the Second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2000; DPRK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2003). Nutrition Assessment 2002 DPR Korea.; DPRK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2005). DPRK 2004 Nutrition Assessment Report of Survey Results. ; UNICEF. (2007). 2006 DPRK Nutrition Survey Results.; DPRK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and UNICEF. (2010). DPR Korea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2009, Final Report.; DPRK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2013).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Final Report of the National Nutrition Survey 2012.; DPRK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and UNICEF. (2018). DPR Korea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2017, Survey Findings Report로부터 인출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5-11〉 북한 영유아 만성영양실조율, 급성영양실조율, 저체중률 및 과체중률의 공식적 비교

%(기준연도)

지표 \ 지역	북한 <sup>1)</sup>	남한	저소득 국가 평균 <sup>2)</sup>	저소득 식량부족 국가 평균 <sup>3)</sup>	세계 평균 <sup>2)</sup>
만성 영양실조	19.1 (2017)	2.2 (2020) <sup>2)</sup>	34.6 (2020)	30.7 (2020)	22.0 (2020)
급성 영양실조	2.5 (2017)	0.7 (2017) <sup>4)</sup>	6.9 (2020)	10.6 (2020)	6.7 (2020)
저체중	9.3 (2017)	0.8 (2017) <sup>4)</sup>	18.9 (2020)	-	12.6 (2020)
과체중	2.3 (2017)	8.8 (2020) <sup>2)</sup>	3.7 (2020)	3.1 (2020)	5.7 (2020)

주: 4)의 경우, 국민건강영양조사 (2013-2017)와 2017 한국소아청소년표준성장도표의 원자료 데이터를 1)에 제시된 방법대로 분석한 값임.

자료: 1) DPRK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and UNICEF. (2018). DPR Korea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2017, Survey Findings Report. 2) World Bank. (2021b). World Bank Open Data. <https://data.worldbank.org/> 3) FAO. (2021a). FAO statistics. <http://www.fao.org/faostat> 4) 남소영, 윤지현, 이수경. (2021). 남북한 영유아의 영양 실태 비교로부터 인출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2021.09.19. 인출).

한편, 2021년 7월에 북한이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이행 상황을 보고한 'Voluntary National Review' 보고서를 통해 북한 영유아 영양실조율의 최신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VNR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영유아의 만성 영양실조율은 2015년에 27.9%, 2018년에 19.1%, 2020년에 17.4%이다. 또한 해당 보고서에는 과체중율과 급성영양실조율을 통합한 영양불량률(prevalence of malnutrition)이 2018년 4.8%, 2020년 4.5%로 제시되었다(〈표 5-12〉 참조,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21).

〈표 5-12〉 2021년 북한 VNR보고서의 영유아 만성 영양실조율 및 영양불량률

지표	% (기준연도)		
	2015	2018	2020
영유아 만성영양실조율 Prevalence of stunting among children under 5 (height for age <-2)	27.9	19.1	17.4
영유아 영양불량률 Prevalence of malnutrition among children under 5 (weight for height >+2 or <-2)	- (2012)	4.8 (2017)	4.5

자료: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21).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로부터 인출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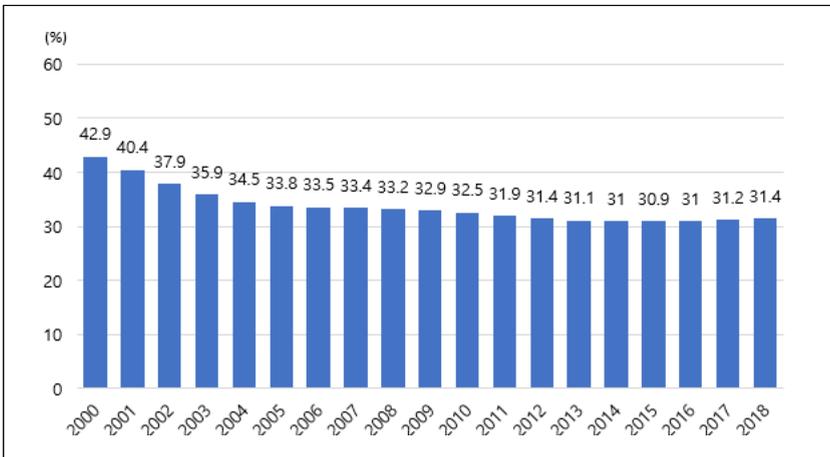
UNICEF가 WHO 등과 함께 매년 발간하는 ‘Levels and trends in child malnutrition’ 보고서는 세계 여러 나라의 영유아 영양불량 지표에 대한 추정치를 제시하고 있다(UNICEF, WHO, IBRD & World Bank, 2021). World Bank에서는 이러한 추정치를 연도별 데이터로 제공하는데, 만성 영양실조율과 과체중률은 2017년 이후 2018, 2019, 2020년 수치가 제시된 반면, 급성 영양실조율과 저체중률은 2017년 이후 업데이트되지 않고 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영유아 만성 영양실조율은 2018년 19.8%, 2019년 18.9%, 2020년 18.2%, 과체중률은 2018년 1.7%, 2019년 1.8%, 2020년 1.9%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2020년의 추정치는 2020년 이전의 가구조사 자료에 근거한 추정치임을 밝히고 있는 등 산출방법에 한계가 있다.

## 나. 영유아 빈혈 유병률

영유아 빈혈 유병률(prevalence of anemia in children under 5 years of age)은 헤모글로빈 농도가 11 g/dL 미만인 6-59개월 영유아의 비율로 정의된다. 철분 결핍이 빈혈의 가장 흔한 원인인기는 하지만, 영유아 빈혈의 경우에는 조산 및 저체중 출생, 너무 이른 우유 섭취, 감염·신장간 질환 등 여러 영양학적/비영양학적 원인에 의해 유발될 수 있다.

북한의 영유아 빈혈 유병률은 2000년대 초반에 42.9%로 시작하여 큰 폭으로 감소하다가 정체기를 겪었고, 2015년부터는 다시 소폭 증가하고 있다(그림 5-12) 참조). 가장 최근에 보고된 수치는 2018년 31.4%로, 북한 영유아의 세 명 중 한 명에 가까운 어린이가 빈혈 상태임을 의미한다. 이는 세계 및 저소득국가 평균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기는 하나, 여전히 남한의 2배 이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표 5-13〉 참조).

[그림 5-12] 북한 영유아 빈혈 유병률의 통시적 비교



자료: World Bank. (2021b). World Bank Open Data. <https://data.worldbank.org/>로부터 인출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2021.09.19. 인출).

〈표 5-13〉 북한 영유아 빈혈 유병률의 공시적 비교

		(%)		
연도 \ 지역	북한	남한	저소득 국가 평균	세계 평균
2019	31.6	15.0	59.1	3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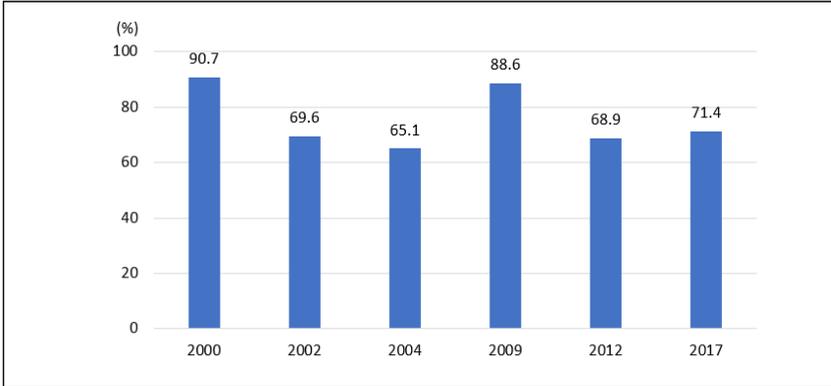
자료: World Bank. (2021b). World Bank Open Data. <https://data.worldbank.org/> 로부터 인출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2021.09.19. 인출).

#### 다. 완전모유수유율

완전모유수유율(prevalence of exclusive breastfeeding among infants 0-5 months of age)은 6개월 미만 영아 중 모유만을 섭취하는 영아의 비율이다. 모유는 생후 6개월 동안 신생아에게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포함하며, 모유수유는 아기뿐 아니라 엄마에게도 많은 건강상의 이점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모유수유는 설사나 폐렴과 같은 소아 질환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유년기와 청소년기의 과체중과 비만의 위험을 줄이는 등의 장기적인 이점을 준다. UNICEF와 WHO에서는 최초 6개월 동안 별도의 음식이나 유체, 물 없이 완전모유수유를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북한의 완전모유수유율은 2000년에 90.7%로 처음 보고된 이후 증감을 반복하다가 가장 최근인 2017년에는 71.4%로 보고되었다(〈그림 5-13〉 참조). 이러한 수치는 저소득 국가와 저소득 식량부족 국가, 세계 평균보다 높으며, 특히 남한과 비교했을 때에는 5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표 5-14〉 참조).

[그림 5-13] 북한 완전모유수유율의 통시적 비교



주: 조사연도에 따라 조사 지역이나 표본의 추출방법/수 등에 다소 차이가 있음.

자료: 다음 자료에서 인출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1) DPRK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2000). Report of the Second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2000.
- 2) DPRK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2003). Nutrition Assessment 2002 DPR Korea.
- 3) DPRK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2005). DPRK 2004 Nutrition Assessment Report of Survey Results.
- 4) DPRK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and UNICEF. (2010). DPR Korea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2009, Final Report.
- 5) DPRK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2013).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Final Report of the National Nutrition Survey 2012.
- 6) DPRK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and UNICEF. (2018). DPR Korea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2017, Survey Findings Report.

〈표 5-14〉 북한 완전모유수유율의 공시적 비교

% (기준연도)

지표 \ 지역	북한 <sup>1)</sup>	남한 <sup>2)</sup>	저소득 국가 평균 <sup>3)</sup>	저소득 식량부족 국가 평균 <sup>3)</sup>	세계 평균 <sup>3)</sup>
완전 모유수유율	71.4 (2017)	14.9 (2018)	54.4 (2019)	55.7 (2019)	44.0 (2019)

자료: 1) DPRK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and UNICEF. (2018). DPR Korea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2017, Survey Findings Report.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3) FAO. (2021a). FAO statistics. <http://www.fao.org/faostat>로부터 인출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2021.09.19. 인출).

## 라. 영유아 최소 식이빈도 비율, 최소 식이 다양성 비율, 최소 적정섭취 비율

UNICEF는 2021년에 영유아의 식이평가 관련 지표의 정의와 측정방법에 대한 보고서인 ‘indicators for assessing infant and young child feeding practices: definitions and measurement’를 발표하였다(UNICEF, 2021a). 이 보고서에서 영유아의 식이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한 총 17개 지표를 선정하였는데, 그 중 영유아 최소식이빈도(Minimum Meal Frequency, MMF)<sup>31)</sup>, 최소식이 다양성(Minimum Dietary Diversity, MDD)<sup>32)</sup>, 최소적정섭취(Minimum Acceptable Diet, MAD)의 비율<sup>33)</sup>은 MICS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해당 수치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세 지표에 대한 북한의 수치는 다음의 <표 5-15>와 같다. 북한 영유아의 2009년 최소 식이빈도 비율은 48.7%, 2012년 최소 식이 다양성 비율은 26.5%로 보고되었다. 이후 2017년 MICS 보고서에는 세 지표가 모두 보고되었는데, 최소 식이빈도 비율의 경우 75.0%, 최소 식이 다양성 비율의 경우 46.7%로 모두 과거에 비해 크게 개선되었다. 이 두 지표를

31) 최소 식이빈도 비율(prevalence of Minimum Meal Frequency, MMF)은 조사 전 날 고형, 반고형, 연성 식품을 최소 식이빈도 이상으로 섭취한 6~23개월 영유아의 비율, 이 때 최소 식이빈도는 하루동안 6~8개월 모유수유 영아의 경우 2번, 9~23개월 모유수유 영유아의 경우 3번의 고형, 반고형, 연성식품을 섭취하는 것을 의미함. 모유수유를 하지 않는 6~23개월 영유아의 경우, 하루동안 4번의 고형, 반고형, 연성식품을 섭취하는 것을 의미함.

32) 최소 식이 다양성 비율(prevalence of Minimum Dietary Diversity, MDD)은 조사 전 날 8개 식품군 중 5개 이상의 식품을 섭취한 6~23개월 영유아의 비율, 여기서 8개 식품군은 모유(breast milk), 곡류군(grains, roots, tubers and plantains), 콩 및 견과류(pulses, nuts and seeds), 유제품류(dairy products: milk, infant formula, yogurt, cheese), 육류군(flesh foods: meat, fish, poultry, organ meats), 난류(eggs), 비타민 A가 풍부한 과일 및 채소(vitamin-A rich fruits and vegetables), 그 외 과일 및 채소(other fruits and vegetables)임.

33) 최소 적정섭취 비율(prevalence of Minimum Acceptable Diet, MAD)은 조사 전 날 최소 적정식단을 섭취한 6~23개월 영유아의 비율로 이 때 최소 적정식단은 최소 식이 다양성과 최소 식이빈도를 모두 충족하는 식단으로, 모유수유를 하지 않는 영유아의 경우에는 최소 적정식단 외에도 추가로 2회 이상 분유를 섭취해야 함.

종합한 북한 영유아의 최소 적정섭취 비율은 28.6%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저소득국가 및 세계 평균과 비교할 때 높은 수준이기는 하나, 그럼에도 북한 영유아의 70% 이상이 최소한의 적정섭취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려할만한 상황이다(표 5-16).

〈표 5-15〉 북한 영유아 최소 식이빈도 비율, 최소 식이 다양성 비율, 최소 적정섭취 비율의 통시적 비교

(%)

연도 \ 지표	최소 식이빈도 비율	최소 식이 다양성 비율	최소 적정섭취 비율
2009	48.7	-	-
2012	-	26.5	-
2017	75	46.7	28.6

주: 조사연도에 따라 조사 지역이나 표본의 추출방법/수 등에 다소 차이가 있음.

자료: DPRK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and UNICEF. (2010). DPR Korea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2009, Final Report.; DPRK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2013).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Final Report of the National Nutrition Survey 2012.; DPRK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and UNICEF. (2018). DPR Korea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2017, Survey Findings Report.로부터 인출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5-16〉 북한 영유아 최소 식이빈도 비율, 최소 식이 다양성 비율, 최소 적정섭취 비율의 공시적 비교

(%)

지표 \ 지역	북한 <sup>1)</sup>	저소득 국가 평균 <sup>2)</sup>	세계 평균 <sup>2)</sup>
최소 식이빈도 비율	75	45.9	51.7
최소 식이 다양성 비율	46.7	20.3	28.9
최소 적정섭취 비율	28.6	12.4	18.1

주: 북한은 2017년, 저소득국가 및 세계 평균은 2014~2020년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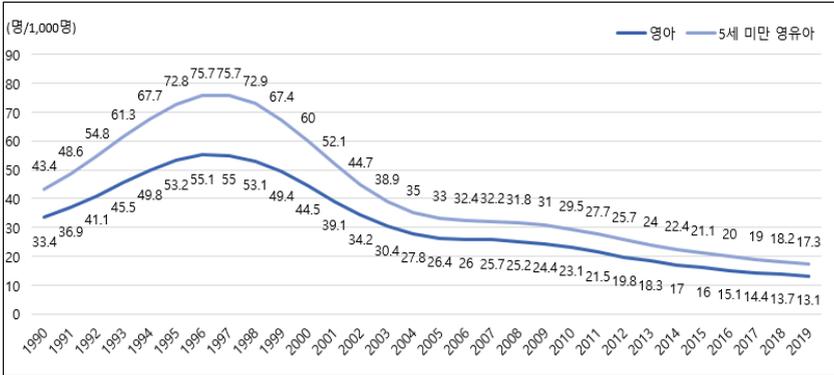
자료: 1) DPRK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and UNICEF. (2018). DPR Korea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2017, Survey Findings Report. 2) UNICEF. (2021b). Infant and young child feeding. <https://data.unicef.org/topic/nutrition/infant-and-young-child-feeding/> 로부터 2021.10.24. 인출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마. 영아 사망률, 5세 미만 사망률

영아 사망률(infant mortality rate, under 1 years of age)은 연간 전체 출생아 중에서 사망하는 1세 미만의 아동의 비율이다, 5세 미만 사망률(child mortality rate, under 5 years)은 아동이 5세 이전에 사망할 확률을 나타낸다. 영아 및 5세 미만 사망률은 국가 수준의 어린이 건강과 복지 상태를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로, 위생, 식수, 영양 등 공공보건에 대한 지원 결과의 평가에도 활용된다.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서는 2030년까지 영아 사망률은 1,000명당 12명으로, 5세미만 사망률은 1,000명당 25명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북한의 영아 사망률 및 5세 미만 사망률의 추이는 [그림 5-14]와 같다. 북한의 영아 및 5세 미만 사망률은 90년대 중반에 가장 높았다가 이후 꾸준히 감소하여 2019년에 영아 사망률의 경우 13.1명, 5세 미만 사망률의 경우 17.3명으로 나타났다. 2021년 발표된 ‘Voluntary National Review’ 보고서에서 북한의 영아 및 영유아 사망률은 2019년에 각각 7.7%와 16.8%로 보고되었다(〈표 5-17〉 참조,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21).

[그림 5-14] 북한 영아 및 5세미만 사망률의 통시적 비교



자료: World Bank. (2021a). World Bank Open Data. <https://data.worldbank.org/> 로부터 인출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2021.09.19. 인출).

<표 5-17> 2021년 북한 VNR보고서의 영아 및 영유아 사망률

지표	명 (기준연도)		
	2015	2018	2020
영아 사망률 (명/1,000명 생존출생) Neonatal mortality rate per 1,000 live births	9 (2014)	9 (2017)	7.7 (2019)
영유아 사망률 (명/1,000명 생존출생) Under-five mortality rate per 1,000 live births	17.7	16.9	16.8 (2019)

자료: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21).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로부터 인출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한편, 북한의 영아 및 5세 미만 사망률을 공식적으로 비교한 결과는 <표 5-18>과 같다. 두 지표 모두 저소득 국가 및 세계 평균과 비교 시 낮은 수준이지만, 남한과 비교하면 영아 및 5세 미만 사망률 모두 남한보다 5배 가량 높은 수치이다.

〈표 5-18〉 북한 영아 및 5세 미만 사망률의 공시적 비교

		2019년 기준 (%)		
지표 \ 지역	북한	남한	저소득 국가 평균	세계 평균
영아 사망률	13.1	2.7	47.9	28.2
5세 미만 사망률	17.3	3.2	67.6	37.7

자료: World Bank. (2021a). World Bank Open Data. <https://data.worldbank.org/> 로부터 인출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2021.09.19. 인출).

### 3. 북한 가임기 여성의 영양 상태

북한 가임기 여성의 영양 상태는 단백질에너지 영양실조율과 빈혈 유병률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 가. 가임기 여성 단백질에너지 영양실조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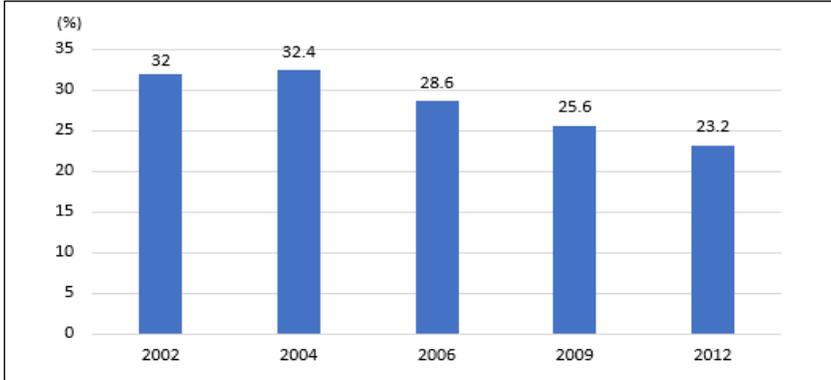
가임기 여성 단백질에너지 영양실조율(prevalence of maternal protein-energy malnutrition)은 상완위 둘레<sup>34)</sup>가 22.5 cm 미만인 15세 이상 49세 이하 가임기 여성의 비율을 의미한다. 단백질에너지 영양실조(Protein Energy Malnutrition, PEM)는 대개 미량 영양소의 결핍을 수반하는데, 에너지 결핍 영양실조인 마라스무스(Marasmus)와 단백질 결핍 영양실조인 콰시오카(Kwashiokor)로 대별되며, 두 상태가 공존하기도 한다.

북한의 가임기 여성 단백질에너지 영양실조율은 2002년에 32.0%에서 2012년에 23.2%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었으나(그림 5-15), 이후 최근

34) Middle Upper Arm Circumference (MUAC): 팔꿈치 위 팔뚝의 중간 둘레

자료는 보고된 바 없다.

[그림 5-15] 북한 가임기 여성 단백질에너지 영양실조율의 통시적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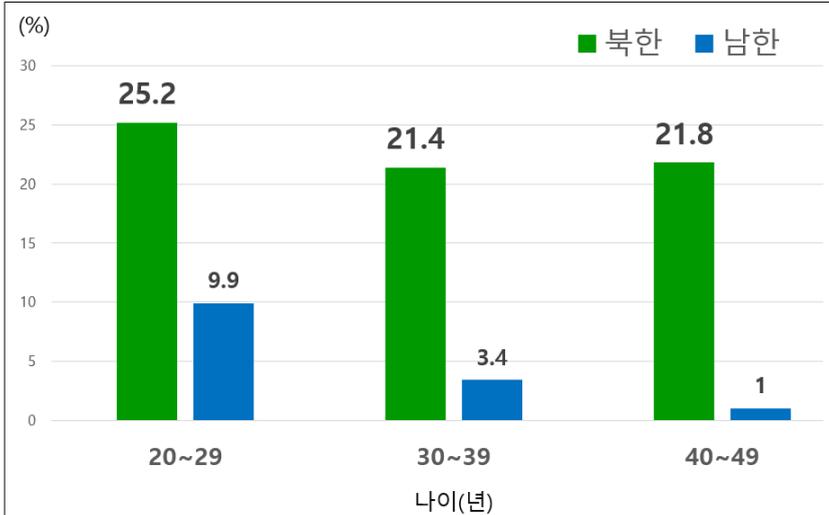


주: 조사연도에 따라 조사 지역이나 표본의 추출방법/수 등에 다소 차이가 있음.

자료: DPRK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2003). Nutrition Assessment 2002 DPR Korea.; DPRK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2005). DPRK 2004 Nutrition Assessment Report of Survey Results.; UNICEF. (2007). 2006 DPRK Nutrition Survey Results.; DPRK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and UNICEF. (2010). DPR Korea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2009, Final Report.; DPRK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2013).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Final Report of the National Nutrition Survey 2012.로부터 인출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남북한 가임기 여성의 영양 상태를 비교한 연구에 따르면(윤소윤, 권영혜, 윤지현, 2016), 북한의 단백질에너지 영양실조율은 남한(2010년 20대: 9.9%, 30대: 3.4%, 40대: 1% 미만)과 비교하였을 때, 연령에 따라 최소 2.5배에서 20배가 넘는 큰 격차를 보인다. 그러므로 북한 가임기 여성의 단백질 에너지 영양실조율은 우려할 수준으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5-16]).

[그림 5-16] 남북한 가임기 여성의 단백질에너지 영양실조율 비교(201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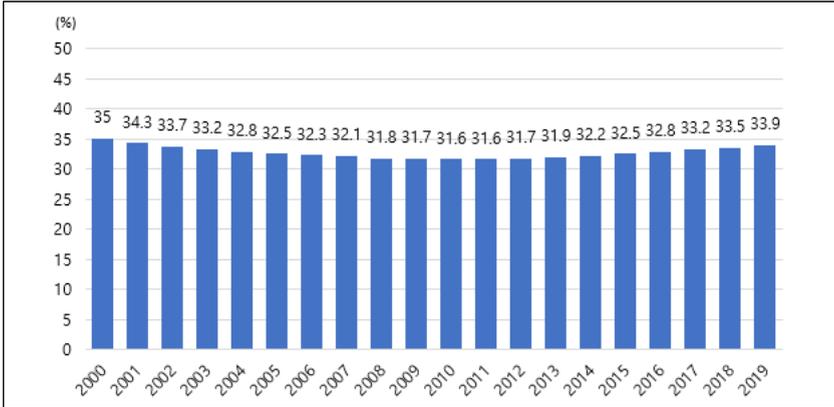
자료: 윤소윤, 권영혜, 윤지현. (2016). 남북한 가임기 여성의 영양상태 비교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나. 가임기 여성 빈혈 유병률

가임기 여성 빈혈 유병률(prevalence of anemia among women of reproductive age)은 15세 이상 49세 이하의 가임기 여성 중 빈혈인 여성의 비율을 의미한다. 빈혈(anemia)은 혈중 헤모글로빈 농도를 기준으로 진단되는데, 비임신 여성의 경우 혈중 헤모글로빈 농도가 12 g/dL 미만, 임산부의 경우 11 g/dL 미만을 기준으로 한다.

북한의 가임기 여성 빈혈 유병률은 2000년 35.0%에서 시작하여 2010년 31.6%로 꾸준히 감소하다가 이후 다시 증가하여 2019년에 33.9%로 보고되었다[그림 5-18]. 이러한 수치는 저소득국가 평균보다는 낮지만, 세계 평균보다는 높으며, 남한보다는 2.5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표 5-19>.

[그림 5-17] 북한 가임기 여성 빈혈 유병률의 통시적 비교



자료: World Bank. (2021a). World Bank Open Data. <https://data.worldbank.org/> 로부터 2021.09.19.인출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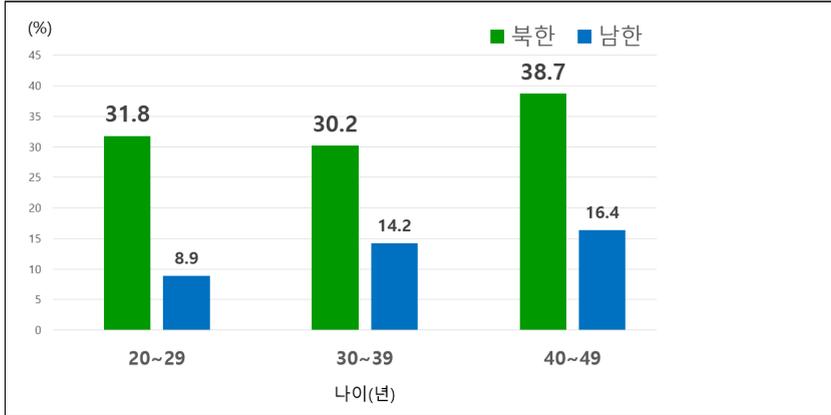
〈표 5-19〉 북한 가임기 여성 빈혈 유병률의 공시적 비교

연도	지역 (%)			
	북한	남한	저소득 국가 평균	세계 평균
2019	33.9	13.5	38.8	29.9

자료: FAO. (2021a). FAO statistics. <http://www.fao.org/faostat> 로부터 2021.09.19.인출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한편, 남북한 가임기 여성의 영양 상태를 비교한 연구에 따르면(윤소윤 외, 2016), 북한 가임기 여성의 빈혈 유병률은 남한(2012년 20대: 8.9%, 30대: 14.2%, 40대: 16.4%)과 비교하였을 때, 연령에 따라 2~3배 정도의 격차를 보인다([그림 5-18]).

[그림 5-18] 남북한 가임기 여성의 빈혈 유병률 (2012년)



자료: 윤소윤, 권영혜, 윤지현. (2016). 남북한 가임기 여성의 영양상태 비교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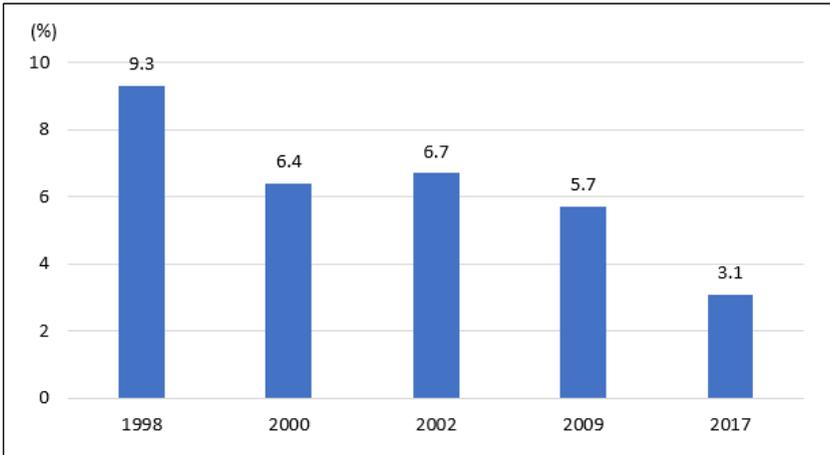
#### 다. 저체중아 출산율

저체중아 출산율(prevalence of low birthweight, LBW)은 출생 당시 체중이 2.5 kg 미만인 출생아 수를 전체 출생아의 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저체중아 출산율은 산모의 건강과 영양 상태를 반영하며 신생아 및 영아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지표이다. 저체중아 출산율은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모니터링 지표로도 사용되고 있다.

북한의 저체중아 출산율은 1998년에 9.3%에서 2017년에는 3.1%까지 감소하였다(그림 5-19 참조). 이러한 수치는 약 14%의 저체중아 출산율을 보이는 저소득국가 및 세계 평균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며, 남한보다도 낮은 수준이다(표 5-20). 남한의 2015년 저체중아 출산율은 5.8%로 북한 보다 약 1.9배 높다. 이는 남한의 결혼 및 출산 연령이 높아짐에 따른 고연령 산모의 증가, 난임 및 불임 시술에 따른 다태아 출산 증가 등이 그

원인으로 생각된다.

[그림 5-19] 북한 저체중아 출산율의 통시적 비교



주: 조사연도에 따라 조사 지역이나 표본의 추출방법/수 등에 다소 차이가 있음.

자료: EU, UNICEF, WFP. (1998). Nutrition Survey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2000). Report of the Second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2000.; DPRK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2003). Nutrition Assessment 2002 DPR Korea.; DPRK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and UNICEF. (2010). DPR Korea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2009, Final Report.; DPRK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and UNICEF. (2018). DPR Korea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2017, Survey Findings Report로부터 인출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5-20> 북한 저체중아 출산율의 공시적 비교

		% (기준연도)			
연도	지역	북한 <sup>1)</sup>	남한 <sup>2)</sup>	저소득 국가 평균 <sup>2)</sup>	세계 평균 <sup>2)</sup>
	저체중아 출산율	3.1 (2017)	5.8 (2015)	14.3 (2015)	14.6 (2015)

자료: 1) DPRK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and UNICEF. (2018). DPR Korea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2017, Survey Findings Report. 2) UNICEF and WHO. (2019). UNICEF-WHO low birthweight estimates: levels and trends 2000-2015.로부터 2021.09.19. 인출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라. 모성사망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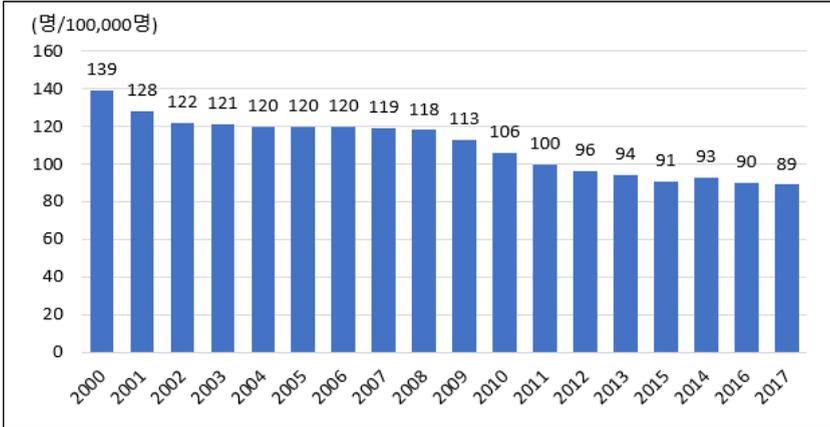
모성 사망비(Maternal Mortality Ratio per 100,000 live births, MMR)란, 임신 중 또는 임신 종료 후 42일 이내에 임신 관련 원인으로 사망한 여성의 수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모성 사망비는 임신 관련 위험을 비롯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모성의 영양 상태 및 관련 보건·의료 서비스와 빈부격차 등을 간접적으로 반영한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2030년까지 10만 명의 생존 출생 당 사망하는 여성의 수를 70명 미만으로 감소’시킬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북한의 모성 사망비는 꾸준히 감소하여 2000년 10만 명 당 139명에서 2017년 89명으로 약 36% 감소하였다(그림 5-20). 이러한 변화는 북한의 모성 건강과 모성 관련 보건·의료 서비스가 과거에 비해 개선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북한의 모성 사망비는 저소득 국가 및 세계 평균과 비교 시 낮은 수준이다(표 5-21). 2017년 기준으로, 북한의 모성 사망비에 비해 세계 평균은 약 2.4배, 저소득 국가 평균은 약 5배 이상 높았다.

한편, 2021년에 발표된 ‘Voluntary National Review’ 보고서에 서 북한의 모성 사망비는 10만 명 당 2015년에 58명, 2018년에 50.4명, 2019년에 49명으로 보고되었다(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21).

[그림 5-20] 북한 모성사망비의 통시적 비교



자료: World Bank. (2021a). World Bank Open Data. <https://data.worldbank.org/> 로부터 2021.09.19. 인출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5-21〉 북한 모성사망비의 공시적 비교

연도	지역 (%)			
	북한	남한	저소득 국가 평균	세계 평균
2017	89	11	460	211

자료: World Bank. (2021a). World Bank Open Data. <https://data.worldbank.org/> 로부터 2021.09.19. 인출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마. 가임기 여성 최소 식이다양성 비율

가임기 여성 최소 식이다양성(Minimum Dietary Diversity for Women, MDD-W)은 조사 전날 10개 식품군<sup>35)</sup> 중 5개 이상을 섭취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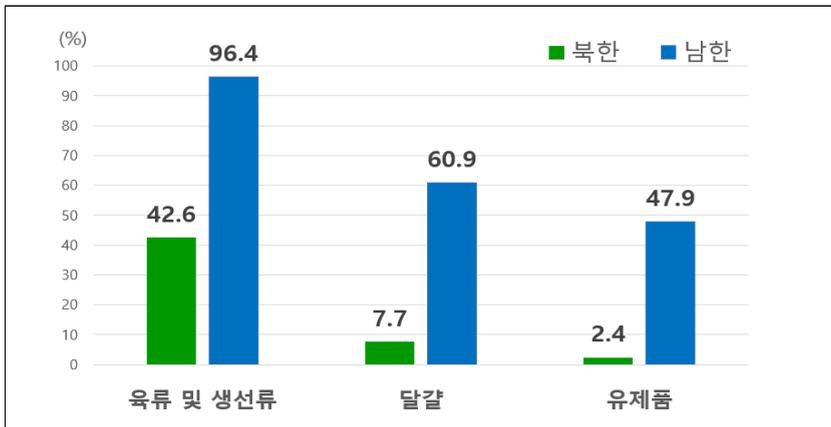
35) 10개 식품군은 다음과 같음. 곡류군(grains, roots, tubers and plantains), 콩 및 견과류(pulses, beans, peas and lentils), 견과류(nuts and seeds), 유제품류(milk and milk products), 육류군(meat, poultry and fish), 난류(eggs), 녹색 채소(darkgreen leafy vegetables), 기타 비타민 A가 풍부한 과일 및 채소(other vitamin-A rich fruits and vegetables), 그 외 채소(other vegetables), 그 외 과일(other fruits)

15세에서 49세 사이의 여성을 조사한 것으로, 해당 여성의 비율로 보고된다(FAO, 2021f). 이 지표는 식이 다양성과 미량 영양소의 적절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되었으며, FAO 등의 여러 국제기구에서 공동으로 매년 발간하는 ‘The State of Food Security and Nutrition in the World (SOFI)’ 보고서에도 소개되었다.

북한의 가임기 여성 최소 식이 다양성 비율은 2012년의 북한영양조사 보고서에서 49.6%로 처음 조사되었다. 이러한 수치는 북한 가임기 여성의 50% 이상이 최소한의 다양성이 보장된 식사를 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이후 더 이상의 수치는 보고되지 않은 상태이다.

한편, 남북한 가임기 여성의 식품 섭취율을 비교하였을 때, 2012년에 남한 가임기 여성은 북한 가임기 여성보다 육류 및 생선류는 2배 이상, 달걀은 8배 이상, 유제품은 무려 23배 이상 섭취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큰 차이를 보였다([그림 5-21] 참조, 윤소윤, 권영혜, 윤지현, 2016).

[그림 5-21] 남북한 가임기 여성의 육류 및 생선류, 달걀, 유제품 섭취율(2012년)



주: 조사 하루 전 해당 식품을 섭취한 비율  
 자료: 윤소윤, 권영혜, 윤지현. (2016). 남북한 가임기 여성의 영양상태 비교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제3절 북한 주민의 건강 유지를 위한 최소 식품소비 탐색

북한 주민의 건강 유지를 위한 최소 식품 소비를 제안하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에게 필요한 에너지추정량을 포함한 많은 기초 자료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대부분의 북한 자료는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공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북한 주민의 건강 유지를 위한 최소 식품 소비를 제안하는 과정에는 많은 가정이 따르고, 결과적으로 그 결과의 해석과 이용에도 제약이 적지 않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인정한 상태에서 접근 가능한 자료들을 이용하여 먼저 북한 주민의 에너지필요추정량을 산출하고, 다음으로 이를 충족하기 위한 최소 식품 소비를 제안하였다.

#### 1. 북한 주민의 에너지필요추정량

북한에는 남한의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Dietary Reference Intakes for Koreans, KDRI)과 같은 에너지 및 영양소 섭취량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보건복지부, 한국영양학회, 2020)의 설정 방법을 참고하여 북한 주민의 에너지필요추정량(Estimated Energy Requirement, EER)을 산출하였다.

에너지필요추정량은 하루 동안 필요한 에너지의 양(kcal)을 나타낸다. 북한 주민 전체의 평균 에너지필요추정량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인구구조(성·연령 집단별 인구 구성비율), 체위(성·연령 집단별 신장 및 체중 평균), 신체활동 수준(Physical Activity Level, PAL)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sup>36)</sup>

36) 에너지필요추정량(EER) =  $\alpha + \beta \times \text{연령(세)} + \text{PA} \times [\gamma \times \text{체중(kg)} + \delta \times \text{신장(m)}] \times \text{PA(physical activity coefficient)}$  = 신체활동단계별(비활동적, 저활동적, 활동적, 매우 활동적) 계수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산출한 ‘북한 인구 추계’의 2021년 데이터를 북한의 인구구조에 대한 자료로 활용하였다. 신체활동 수준의 경우, 미국 의학연구소(Institute of Medicine, IOM)에서 개발하여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의 설정에도 활용되고 있는 네 가지 신체활동 수준(비활동적, 저활동적, 활동적, 매우 활동적) 중, ‘저활동적’ 또는 ‘활동적’<sup>37)</sup> 수준인 것으로 북한 주민의 신체활동 수준을 가정하였다.

북한 주민 전체를 대표하는 성·연령 집단별 체위(신장 및 체중)에 대한 자료는 공개된 바 없다. 따라서 북한 주민의 체위 대신 해당하는 성·연령 집단별 남한 주민의 체위를 이용하여 북한 주민 전체의 평균 에너지필요 추정량을 산출하였다(시나리오 1). 따라서 이렇게 산출된 북한 주민 전체의 평균 에너지필요추정량은 실제보다 과대 추정된 것을 고려하여 해석, 활용되어야 한다.

일부 연령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북한 주민이 아닌 북한이탈주민의 자료인 한계를 가지고 있으나, 북한 주민의 체위 자료로 이용할 수 있는 수치를 공개하고 있는 보고서나 논문이 소수 발표되었다(표 1-10). 그러나 이러한 보고서나 논문에는 북한 주민의 에너지필요추정량 산출에 필요한 체위 값으로 이용할 수 있는 형태 또는 범위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북 하나재단이 2014년에 실시한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와 ‘탈북청소년 실태조사’의 원시 자료 중 2010년 이후 입국한 9세 이상 북한이탈주민 중 체위 자료가 있는 총 5,943명(남자 1,679명, 여자 4,264명)의 자료를 본 연구에 필요한 형태(입국 당시 성·연령 집단별 평균 연령, 신장, 체중)로 가공하여 제공 받아 활용하였다(시

37) 남한의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에서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의 일반적인 신체활동 수준을 ‘저활동적’으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에너지필요추정량을 산출하고 있다(보건복지부, 한국영양학회, 2020). 그러나 북한의 신체활동 수준을 고려하였을 때 ‘저활동적’ 또는 보다 높은 수준일 것으로 추정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저활동적’, ‘활동적’의 두 가지 수준 각각에 대한 에너지필요추정량을 산출하였음.

나리오 2).

〈표 5-22〉 북한 주민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체위 자료를 포함한 보고서 및 논문

자료		내용	기준 대상 (연도)
자료명	자료형태 (저자/기관명)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보고서 (남북 하나재단)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입국당시 및 현재의 신장 및 체중	15~60세 이상 (2014년)
탈북 청소년 실태조사	보고서 (남북 하나재단)	탈북 청소년의 남한 입국당시 및 현재의 신장 및 체중	10-18세 아동 (2018년)
남북한 영유아의 영양 실태 비교	논문 (남소영, 윤지현, 이수경)	2017 북한 다중지표군집조사(MICS) 보고서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북한 영유아의 월령 구간별 평균 신장 및 체중	0~59개월의 영유아 (2017년)
A century of trends in adult human height	논문 (NCD Risk Factor Collaboration)	전 세계 200개 국의 100년 동안의 신장 변화 (북한 자료 포함되어 있으나, 출처 모호함)	1896년 및 1996년 출생자 (2015년)
Height and weight difference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논문 (Daniel Schwekendiek)	2002년 북한 영양평가보고서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북한 영유아 및 가임기 여성의 평균 신장	0~59개월의 영유아 및 15~49세의 가임기 여성 (2002년)

자료: 저자 작성

남북 하나재단이 두 실태조사로부터 보유하고 있는 원시 자료에는 2010년 전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자료도 있었으나, 이러한 자료는 최근의 북한 주민의 체위 자료의 대체 자료로 쓰이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2010년부터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자료만을 요청하였다. 두 실태조사에 포함된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당시 연령은 만 8세 이상이었으므로 입국 당시 연령이 0~7세의 자료는 존재하지 않았고, 에너지 필요추정량의 산출과정에서 입국 당시 6~8세의 평균 신장과 체중이 필요하였으므로 8세만의 자료는 이용할 수 없어, 입국 당시 9세 이상의 자료만을 본 연구에 이용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북한 주민의 체위 자료의 대체 값으로 이용된 북한

이탈주민의 체위 자료에는 다음과 같이 매우 큰 한계가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 이용한 북한이탈주민의 체위 자료는 2021년 현재 북한 주민의 체위 자료와는 다를 가능성이 높다. 먼저 북한이탈주민들이 북한 주민을 대표할 수 없다는 근원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특히 북한 주민들의 탈북 전 거주지가 주로 국경지대인 경우가 많은데, 북한 아동의 실태 조사에서 보고된 바에 따르면 국경지대인 양강도, 자강도, 함경북도 지역 아동의 만성영양실조율이 가장 높았으므로(DPRK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 UNICEF, 2018), 주민 전체적으로도 이러한 양상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이 탈북 후 남한에 입국하기 전까지 수년에 걸쳐 타국에서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아 입국 당시의 체위가 탈북 당시의 체위와 많이 달라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본 연구에 이용된 체위자료는 2014년 이전에 입국한, 즉 2014년 전에 북한을 떠난 북한이탈주민의 자료라는 점 또한 2021년 현재의 북한 주민의 체위 자료로의 이용에 한계를 더한다.

둘째, 남북 하나재단에서 수집한 체위 자료는 실제 측정치가 아니라 북한이탈주민이 응답한 수치이므로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 입국 당시의 체위에 대하여 조사 당시인 2014년에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고, 실제 질문에 대하여 신장은 조금 높게, 체중은 좀 더 높거나 낮게 응답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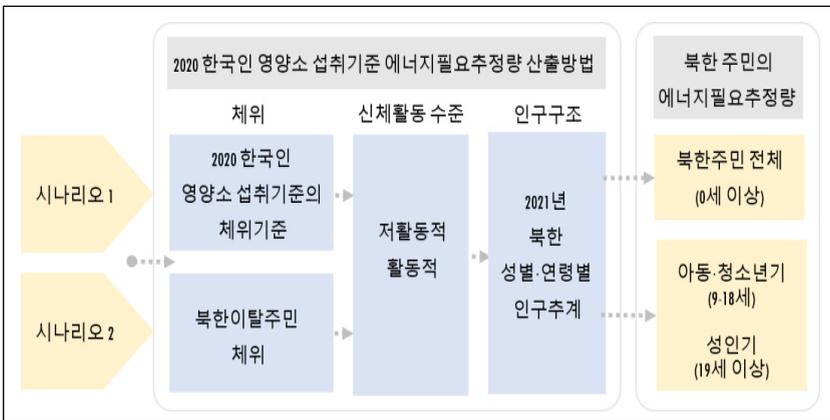
셋째, 본 연구에서는 성·연령 집단별 평균 신장과 체중 자료를 이용하였는데, 이 때 연령 집단 구분에 이용한 연령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두 실태조사의 원시 자료에 북한이탈주민의 생년만 있고 생월이 없어 입국년도에서 출생년도를 뺀 나이를 응답자의 나이로 이용하였기 때문이다.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입국 후 국정원 또는 하나원에서 측정한 자료가

이용 가능하다면 보다 신뢰성과 타당성이 높은 북한 주민의 에너지필요 추정량을 산출할 수 있을 것이다. 또는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최초로 실시한 건강검진 자료 중 체위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면 이 또한 북한 주민의 에너지필요추정량 산출에 이용할 북한 주민 체위의 대체값으로 유용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북한 주민의 체위 자료에 대한 한계에 기인하여 두 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북한 주민의 에너지필요추정량을 산출하였다(그림 1-8). 시나리오 1에서는 북한 주민과 남한 주민의 체위가 동일하다고 가정하여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에서 계산에 이용된 남한 주민의 체위 자료를 활용하였고, 시나리오 2에서는 북한 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체위가 동일하다는 가정 아래, 이용 가능한 북한이탈주민의 체위 자료를 활용하였다.

[그림 5-22] 북한 주민의 에너지필요추정량 산출 시나리오



자료: 저자 작성

시나리오에 따라 체위 자료를 이용하여 각 성·연령 집단별 에너지필요 추정량을 산출한 후, 성·연령 집단별 인구구성비율로 가중평균하여 대표

에너지필요추정량의 산출값을 제시하였다. 또한 해당 산출값을 100 kcal 단위로 반올림하여 대표 에너지필요추정량의 기준값을 최종적으로 제시하였다. 연령 구분은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에서 구분한 13개 연령 구분<sup>38)</sup>을 적용하였다.

시나리오 1의 경우,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의 체위 기준을 따랐으므로 모든 성·연령 집단별 에너지필요추정량 산출이 가능하였다. 따라서 26개 성·연령 집단별 인구구성 비율을 가중평균하여 북한 주민 전체(0세 이상)에 대한 대표 에너지필요추정량을 산출하였다.

시나리오 2의 경우, 앞서 언급한 자료의 한계로 인해 9세 이상의 16개 성·연령 집단에 대한 에너지필요추정량만을 산출하였다. 이후 16개 성·연령별 집단을 9-18세의 아동·청소년기와 19세 이상의 성인기로 나누어 각각에 대한 대표 에너지필요추정량을 산출하였다.

또한 남북한의 비교를 위해 동일한 방법으로 남한의 에너지필요추정량을 산출하였다. 남한의 에너지필요추정량 산출의 경우,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의 체위 기준 및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의 연령별 인구현황(2021년 10월 기준)을 이용하였다. 시나리오에 따라 산출된 북한 주민의 대표 에너지필요추정량과 비교하고자, 남한의 경우에도 남한 주민 전체(0세 이상), 아동·청소년기(9-18세), 성인기(19세 이상) 각각에 대하여 인구구성 비율을 반영한 대표 에너지필요추정량을 산출하였다.

시나리오 1에 따른 북한 주민의 에너지필요추정량 산출 결과, 북한 주민 전체(0세 이상)에게 필요한 대표 에너지필요추정량의 기준값은 신체 활동 수준에 따라 저활동적으로 가정한 경우 2,100 kcal, 활동적으로 가

38) 0-5개월, 6-11개월, 1-2세, 3-5세, 6-8세, 9-11세, 12-14세, 15-18세, 19-29세, 30-49세, 50-64세, 65-74세, 75세 이상

정한 경우 2,300 kcal로 산출되었다(〈표 5-23〉). 동일한 방법으로 산출한 남한 주민 전체에게 필요한 에너지추정량은 저활동적으로 가정한 경우 2,100 kcal, 활동적으로 가정한 경우 2,300 kcal로 북한과 동일하였다(〈표 5-24〉). 이와 같이 시나리오 1에 따라 산출한 남북한 주민 전체의 에너지필요추정량이 동일한 이유는 각 연령구분에 대한 남북한의 인구 구성비율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시나리오 2에 따른 북한 주민의 에너지필요추정량 산출 결과, 아동·청소년기(9-18세) 북한 주민에게 필요한 대표 에너지필요추정량의 기준값은 저활동적으로 가정한 경우 1,800 kcal, 활동적으로 가정한 경우 2,100 kcal로 산출되었다(〈표 5-24〉). 아동·청소년기(9-18세) 남한 주민에게 필요한 에너지추정량은 저활동적으로 가정한 경우 2,200 kcal, 활동적으로 가정한 경우 2,600 kcal로 북한보다 높았다. 성인기(19세 이상) 북한 주민의 경우, 대표 에너지필요추정량의 기준값이 저활동적으로 가정한 경우 2,100 kcal, 활동적으로 가정한 경우 2,300 kcal로 산출되었다. 아동·청소년기(9-18세) 남한 주민에게 필요한 에너지추정량은 저활동적으로 가정한 경우 2,200 kcal, 활동적으로 가정한 경우 2,500 kcal로 북한보다 높았다(〈표 5-25〉).

이와 같이 시나리오 2에 따라 산출한 북한 주민의 에너지필요추정량은 남한보다 낮았으며, 특히 성인기보다 아동·청소년기에서 에너지필요추정량의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인구구조의 차이에서 비롯된 부분도 있겠지만, 이보다 더 큰 원인은 남한과 북한 주민의 체위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아동·청소년기의 남북한 주민의 체위 격차가 성인기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에 따라 에너지필요추정량에도 남북간 400~500 kcal의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표 5-23〉 북한 주민의 에너지필요추정량 산출 결과: 시나리오 1

연령 구분 <sup>1)</sup>	북한 주민 체위 (2020 KDRIs 체위)				에너지필요추정량 [A] (kcal)				북한 인구구조 <sup>2)</sup> [B] (%)				[A] x [B] (kcal)			
	신장(cm)		체중(kg)		저활동성		활동성		인구구조 <sup>2)</sup> [B] (%)		저활동성		활동성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0-5개월	58.3	58.3	5.5	5.5	505	505	505	505	0.4	0.4	186	179	186	179		
6-11개월	70.3	70.3	8.4	8.4	670	670	670	670	0.4	0.4	247	238	247	238		
1-2세	85.8	85.8	11.7	11.7	961	961	961	961	1.4	1.4	1,359	1,306	1,359	1,306		
3-5세	105.4	105.4	17.6	17.6	1,467	1,378	1,652	1,552	2.1	2.0	3,009	2,717	3,387	3,060		
6-8세	124.6	123.5	25.6	25.0	1,719	1,568	1,954	1,778	2.0	1.9	3,396	2,980	3,860	3,380		
9-11세	141.7	142.1	37.4	36.6	2,069	1,816	2,365	2,070	1.9	1.9	3,987	3,370	4,558	3,841		
12-14세	161.2	156.6	52.7	48.7	2,544	2,021	2,916	2,314	2.0	1.9	5,001	3,828	5,732	4,381		
15-18세	172.4	160.3	64.5	53.8	2,797	2,013	3,224	2,318	2.7	2.6	7,641	5,291	8,806	6,093		
19-29세	174.6	161.4	68.9	55.8	2,696	2,085	2,981	2,340	8.6	8.3	23,276	17,204	25,740	19,300		
30-49세	173.2	159.8	67.8	54.7	2,520	1,954	2,802	2,205	14.2	13.8	35,860	26,918	39,871	30,374		
50-64세	168.9	156.6	64.5	52.5	2,270	1,784	2,541	2,028	9.7	10.2	22,061	18,261	24,697	20,761		
65-74세	166.2	152.9	62.4	50	2,097	1,641	2,362	1,878	2.4	3.4	4,998	5,640	5,628	6,453		
75세 이상	163.1	146.7	60.1	46.1	1,986	1,512	2,243	1,736	1.1	3.1	2,258	4,653	2,550	5,344		
계									48.9	51.1	113,278	92,584	126,622	104,711		
북한 주민 전체의 대표 에너지필요추정량 산출값 <sup>3)</sup>											2,059		2,313			
<b>북한 주민 전체의 대표 에너지필요추정량 기준값<sup>4)</sup></b>											2,100		2,300			

주: KDRIs: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1) 연령 구분은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에 따른 것임.

2)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2021년 북한의 인구 추계 자료로, 1993년 및 2008년 북한에서 실시한 인구일체조사(인구센서스) 결과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통계청 인구총조사 이래에서 1993~2008년의 과거 북한 인구를 추계한 결과임. 해당 자료에는 1세 단위의 추계인구를 제시하였으므로, 0-5개월과 6-11개월의 경우, 0세 인구 수를 반으로 나누어 추정하였음.

3) 각 성 연령 집단별 1인 1일 에너지필요추정량을 북한 주민의 인구구성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북한 주민 전체의 대표 에너지필요추정량 값임.

4) 대표 에너지필요추정량 산출값을 반올림한 100 kcal 단위의 대표 에너지필요추정량 기준값임.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에서는 비만유병률을 고려하여 100 kcal 단위로 제시하였으나 북한의 상황을 고려하여 100 kcal 단위로 반올림하였음.

자료: 연령 구분, 북한 주민 체위: 보건복지부, 한국영양학회. (2020). 2020 한국인 영양소섭취기준; 북한 인구구조: 통계청. (2021). 북한통계포털. <https://kosis.kr/bukhan/> 로 부터 2021.09.19. 인출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5-24〉 남한 주민의 에너지필요추정량 산출 결과: 시나리오 1 결과 비교를 위한 산출

연령 구분 <sup>1)</sup>	남한 국민 체위 (2020 KDRI's 체위)				에너지필요추정량 [A] (kcal)				남한 인구구조 <sup>2)</sup> [B] (%)				[A] x [B] (kcal)			
	신장(cm)		체중(kg)		저활동적		활동적		남		여		저활동적		활동적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0-5개월	58.3	58.3	5.5	5.5	505	505	505	505	0.1	0.1	0.1	0.1	64	61	64	61
6-11개월	70.3	70.3	8.4	8.4	670	670	670	670	0.1	0.1	0.1	0.1	85	80	85	80
1-2세	85.8	85.8	11.7	11.7	961	961	961	961	0.6	0.6	0.6	0.6	562	534	562	534
3-5세	105.4	105.4	17.6	17.6	1,467	1,378	1,652	1,552	1.1	1.1	1.1	1.1	1,640	1,464	1,846	1,648
6-8세	124.6	123.5	25.6	25.0	1,719	1,568	1,954	1,778	1.3	1.3	1.3	1.3	2,274	1,976	2,585	2,241
9-11세	141.7	142.1	37.4	36.6	2,069	1,816	2,365	2,070	1.4	1.4	1.4	1.4	2,957	2,454	3,380	2,797
12-14세	161.2	156.6	52.7	48.7	2,544	2,021	2,916	2,314	1.4	1.4	1.3	1.3	3,586	2,689	4,111	3,078
15-18세	172.4	160.3	64.5	53.8	2,797	2,013	3,224	2,318	1.9	1.9	1.7	1.7	5,199	3,485	5,991	4,013
19-29세	174.6	161.4	68.9	55.8	2,696	2,085	2,981	2,340	7.3	6.6	6.6	6.6	19,692	13,814	21,776	15,498
30-49세	173.2	159.8	67.8	54.7	2,520	1,954	2,802	2,205	14.8	14.1	14.1	14.1	37,229	27,526	41,393	31,060
50-64세	168.9	156.6	64.5	52.5	2,270	1,784	2,541	2,028	12.4	12.3	12.3	12.3	28,129	21,927	31,492	24,930
65-74세	166.2	152.9	62.4	50	2,097	1,641	2,362	1,878	4.7	5.2	5.2	5.2	9,860	8,472	11,104	9,694
75세 이상	163.1	146.7	60.1	46.1	1,986	1,512	2,243	1,736	2.7	4.4	4.4	4.4	5,390	6,714	6,088	7,711
계									49.9	50.1	50.1	50.1	116,667	91,195	130,477	103,344
남한 국민 전체의 대표 에너지필요추정량 산출값 <sup>3)</sup>																
남한 국민 전체의 대표 에너지필요추정량 기준값 <sup>4)</sup>																
주: KDRI's: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1) 연령 구분은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에 따른 것임.																
2)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의 연령별 연령별 인구현황(2021년 10월 기준) 자료임.																
3) 각 장 연령 집단별 1인 1일 에너지필요추정량을 남한 국민의 인구구성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남한 국민 전체의 대표 에너지필요추정량 값임.																
4) 대표 에너지필요추정량 산출값을 반올림한 100 kcal 단위의 대표 에너지필요추정량 기준값임.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에서는 비만유병률을 고려하여 100 kcal 단위로 절사하였으나 북한 주민의 대표 에너지필요추정량 기준값의 경우, 북한의 상황을 고려하여 100 kcal 단위로 반올림하였기에 동일하게 적용함.																
자료: 연령 구분, 남한 주민 체위: 보건복지부, 한국영양학회. (2020). 2020 한국인 영양소섭취기준; 남한 인구구조: 행정안전부. (2021).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의 연령별 인구현황 (2021년 10월 기준); 로부터 2021.09.19. 인출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주: KDRI's: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1) 연령 구분은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에 따른 것임.

2)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의 연령별 연령별 인구현황(2021년 10월 기준) 자료임.

3) 각 장 연령 집단별 1인 1일 에너지필요추정량을 남한 국민의 인구구성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남한 국민 전체의 대표 에너지필요추정량 값임.

4) 대표 에너지필요추정량 산출값을 반올림한 100 kcal 단위의 대표 에너지필요추정량 기준값임.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에서는 비만유병률을 고려하여 100 kcal 단위로 절사하였으나 북한 주민의 대표 에너지필요추정량 기준값의 경우, 북한의 상황을 고려하여 100 kcal 단위로 반올림하였기에 동일하게 적용함.

자료: 연령 구분, 남한 주민 체위: 보건복지부, 한국영양학회. (2020). 2020 한국인 영양소섭취기준; 남한 인구구조: 행정안전부. (2021).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의 연령별 인구현황 (2021년 10월 기준); 로부터 2021.09.19. 인출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5-25〉 북한 주민의 에너지필요추정량 산출 결과: 시나리오 2

연령 구분 (세) <sup>1)</sup>	북한 주민 체위 (북한이탈주민 체위) <sup>2)</sup>				에너지필요추정량 [A] (kcal)				북한 인구구조 [B] <sup>3)</sup> (%)				[A] x [B] (kcal)			
	신장(cm)		체중(kg)		저활동적		활동적		남		여		저활동적		활동적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9-11	124.3	126.3	27.7	27.6	1605	1544	1847	1762	14.8	14.3	23,787	22,031	27,375	25,147		
12-14	140.8	142.7	38.2	38.5	1886	1746	2184	2004	15.1	14.6	28,510	25,433	33,014	29,185		
15-18	151.5	150.6	46.4	44.7	2087	1821	2426	2099	21.0	20.2	43,856	36,809	50,976	42,430		
계									51.0	49.0	96,154	84,273	111,366	96,762		
아동·청소년기 북한 주민의 대표 에너지필요추정량 산출값 <sup>4)</sup>																
<b>아동·청소년기 북한 주민의 대표 에너지필요추정량 기준값<sup>5)</sup></b>																
19-29	165.1	155.5	57.2	50.3	2439	1977	2691	2,217	11.5	11.0	28,122	21,781	31,029	24,425		
30-49	167	155.5	61	52.3	2363	1891	2,625	2,134	19.0	18.4	44,902	34,791	49,881	39,258		
50-64	166	154.9	62.3	54.1	2232	1801	2,497	2,046	13.0	13.7	28,979	24,625	32,408	27,970		
65-74	165.8	153.4	59.9	51.4	2052	1662	2,311	1,901	3.2	4.6	6,532	7,627	7,356	8,725		
75-	165	153.2	59.6	52.7	1965	1610	2,223	1,851	1.5	4.1	2,984	6,619	3,375	7,609		
계									48.2	51.8	111,520	95,444	124,049	107,987		
성인기 북한 주민의 대표 에너지필요추정량 산출값 <sup>6)</sup>																
<b>성인기 북한 주민의 대표 에너지필요추정량 기준값<sup>6)</sup></b>																
										1,800			2,100			
										28,122	21,781	31,029	24,425			
										44,902	34,791	49,881	39,258			
										28,979	24,625	32,408	27,970			
										6,532	7,627	7,356	8,725			
										2,984	6,619	3,375	7,609			
										111,520	95,444	124,049	107,987			
										2,070			2,320			
										2,100			2,300			

주: 1) 연령 구분은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에 따른 것임.  
 2) 남북 하나재단 내부자료  
 3)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2021년 북한의 인구 추계 자료로, 1993년 및 2008년 북한에서 실시한 인구일체조사(인구센서스) 결과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통계청 인구총조사과에서 1993~2008년의 과거 북한 인구와 2009-2055년 장래 북한 인구를 추계한 결과임.  
 4) 각 상연령 집단별 1인 1일 에너지필요추정량을 북한 주민의 인구구성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아동·청소년기 및 성인기 북한 주민의 대표 에너지필요추정량 값임.  
 5) 대표 에너지필요추정량 산출값을 반올림한 100 kcal 단위의 대표 에너지필요추정량 기준값임.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에서는 비만유병률을 고려하여 100 kcal 단위로 절삭하였으나 북한의 상황을 고려하여 100 kcal 단위로 반올림하였음.  
 자료: 연령 구분: 보건복지부, 한국영양학회. (2020). 2020 한국인 영양소섭취기준; 북한 주민 체위: 남북 하나재단 내부자료; 북한 인구구조: 통계청. (2021). 북한통계포털. <https://kosis.kr/bukhan/> 로부터 2021.09.19. 인출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5-26〉 남한 주민의 에너지필요추정량 산출 결과: 시나리오 2 결과 비교를 위한 산출

연령 구분 (세) <sup>1)</sup>	남한 국민의 체위 (2020 KDRI's 체위)				에너지필요추정량 [A] (kcal)				남한 인구구조 [B] <sup>2)</sup> (%)				[A] x [B] (kcal)			
	신장(cm)		체중(kg)		저활동적		활동적		남		여		저활동적		활동적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9-11	141.7	142.1	37.4	36.6	2069	1816	2,365	2,070	15.4	14.1	31,789	25,595	36,339	29,174		
12-14	161.2	156.6	52.7	48.7	2544	2021	2,916	2,314	16.6	14.7	42,119	29,638	48,281	33,925		
15-18	172.4	160.3	64.5	53.8	2797	2013	3,224	2,318	20.6	18.7	57,707	37,631	66,500	43,338		
계									52.6	47.5	131,614	92,863	151,121	106,437		
아동·청소년기 남한 국민의 대표 에너지필요추정량 산출값 <sup>3)</sup>											2,245			2,576		
<b>아동·청소년기 남한 국민의 대표 에너지필요추정량 기준값<sup>4)</sup></b>											<b>2,200</b>			<b>2,600</b>		
19-29	174.6	161.4	68.9	55.8	2696	2085	2,981	2,340	12.7	12.2	34,263	25,455	37,890	28,556		
30-49	173.2	159.8	67.8	54.7	2520	1954	2,802	2,205	25.5	25.2	64,193	49,228	71,372	55,547		
50-64	168.9	156.6	64.5	52.5	2270	1784	2,541	2,028	8.8	10.2	19,870	18,265	22,244	20,766		
65-74	166.2	152.9	62.4	50	2097	1641	2,362	1,878	1.6	3.6	3,445	5,171	3,880	5,917		
75-	163.1	146.7	60.1	46.1	1986	1512	2,243	1,736	0.1	0.5	267	752	302	864		
계									48.7	51.3	122,038	98,870	135,688	111,649		
성인기 남한 국민의 대표 에너지필요추정량 산출값 <sup>5)</sup>											2,209			2,473		
<b>성인기 남한 국민의 대표 에너지필요추정량 기준값<sup>6)</sup></b>											<b>2,200</b>			<b>2,500</b>		

주: 1) 연령 구분은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에 따른 것임.  
 2)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의 연령별 인구현황 (2021년 10월 기준) 자료임.  
 3) 각 상연령 집단별 1인 1일 에너지필요추정량을 남한 국민의 인구구성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아동·청소년기 및 성인기 남한 국민의 대표 에너지필요추정량 값임.  
 4) 대표 에너지필요추정량 산출값을 반올림한 100 kcal 단위의 대표 에너지필요추정량 기준값임.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에서는 비만유병률을 고려하여 100 kcal 단위로 절삭하였으나 북한 주민의 대표 에너지필요추정량 기준값의 경우, 북한의 상황을 고려하여 100 kcal 단위로 반올림하였기에 동일하게 적용함.  
 자료: 연령 구분, 남한 주민 체위: 보건복지부, 한국영양학회 (2020). 2020 한국인 영양소섭취기준; 남한 인구구조: 행정안전부. (2021).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의 연령별 인구 현황(2021년 10월 기준)을 이용하여 자차 작성.

## 2. 북한 주민의 건강 유지를 위한 식품구성(안)

앞서 산출한 북한 주민의 에너지필요추정량을 충족하는 수준으로 북한 주민의 건강 유지를 위한 식품 소비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영양소 기준량을 바탕으로 식사계획을 설정하기 위한 다소비 식품목록, 1인 1회 분량 등의 자료가 필요하다. 북한에 대한 이러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보고서의 기준 활용 내용과 제한적이지만 가능한 북한 자료를 이용하여 북한 주민을 위한 식품 소비 구성안을 제안하였다.

현재 가장 최신의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은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이나, 기준 활용에 대한 내용은 2021년 11월 기준으로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므로(2021년 말 발표 예정), 본 연구에서는 ‘201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의 활용 내용을 참고하여 북한 주민을 위한 식품 소비 구성안을 제안하였다.

201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에서는 일반인을 위한 식단 작성 방법으로 권장식사패턴을 제안하였다(보건복지부, 한국영양학회, 2015). 성·연령별 집단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1,000~2,800 kcal 단위의 권장섭취패턴이 개발되었으며, 이 권장식사패턴을 활용하여 식품을 구성할 수 있다. 권장식사패턴은 1일 에너지필요량에 따른 6가지 식품군별 섭취횟수를 제시한다. 섭취횟수는 식품군별 1인 1회 분량을 기준으로 하며, 각 식품군별 대표식품과 대표영양가가 설정되어 있다.

식품군별 대표식품은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sup>39)</sup>를 이용하여 다빈도 식품을 선정하였고, 각 대표식품의 1인 1회 분량은 식품군의 에너지 함유량

39) 201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의 대표식품은 국민건강영양조사 제 4기 3차년도(2009년), 제 5기 1,2,3차년도(2010, 2011, 2012년), 제 6기 1차년도(2013년)자료를 통합 분석하여 도출함. (보건복지부, 한국영양학회, 2015).

을 일정하게 맞추는 방향으로 결정하였다(보건복지부, 한국영양학회, 2015). 예를 들어, 곡류의 1인 1회 분량 에너지는 300 kcal이며, 대표식품 중 하나인 식빵 1쪽(35 g)은 약 100 kcal이므로 0.3회에 해당한다.

식품군별 대표영양가는 각 대표식품의 영양소 함량을 바탕으로 해당 식품의 평균 섭취량을 고려한 가중치를 이용하여 산출된 값이다(표 1-15)(보건복지부, 한국영양학회, 2015).<sup>40)</sup> 예를 들어, 곡류군의 대표영양가는 곡류군의 대표식품(백미, 보리, 찹쌀, 감자 등) 각각의 영양소 함량에 남은 국민의 1인 하루 평균 섭취량을 곱하여 산출되었다.

보다 타당한 식품 소비 구성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대표영양가들은 북한 주민의 식품섭취 자료를 이용하여 만들어야 한다. 즉 북한 주민들이 주로 섭취하는 식품들과 이러한 식품들의 섭취량 가중치를 반영하여 만들어진 대표영양가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가 부재하므로 남은 자료를 이용하였음을 본 분석의 한계로 밝히는 바이다.

〈표 5-27〉 201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의 대표영양가표

영양소	식품군 (1인 1회분량 에너지)	곡류 (300 kcal)	고기·생선· 달걀·콩류 (100 kcal)	채소류 (15 kcal)	과일류 (50 kcal)	우유· 유제품류 (125 kcal)	유지· 당류 (45 kcal)
에너지 (kcal)		282.82	106.07	13.56	53.48	123.94	38.33
단백질 (g)		5.61	9.95	1.01	0.88	5.35	0.49
지방 (g)		1.89	6.41	0.17	0.3	4.67	2.08
탄수화물 (g)		59.63	1.34	3.09	13.76	15.16	4.6
식이섬유 (g)		1.81	0.44	1.35	1.3	0.31	0.04
칼슘 (mg)		17.52	35.21	25.93	9.72	205.65	5.85
인 (mg)		105.28	106.16	24.35	22.69	145.97	12.03

40) 대표영양소값 =  $\sum$ (1인 1회 분량 영양소값 x 각 식품의 가중치)  
 각 식품의 가중치 = 1인 1일 해당 식품 섭취분량의 평균값 /  $\sum$  1인 1일 해당식품 섭취분량의 평균값

영양소	식품군 (1인 1회분량 에너지)	곡류 (300 kcal)	고기·생선· 달걀·콩류 (100 kcal)	채소류 (15 kcal)	과일류 (50 kcal)	우유· 유제품류 (125 kcal)	유지· 당류 (45 kcal)
철 (mg)		1.03	1.2	0.63	0.92	0.55	0.14
나트륨 (mg)		103.89	105.65	195.43	8.32	109.79	5.95
칼륨 (mg)		178.03	125.07	152.57	196.56	247.03	84.23
비타민 A (μg RE <sup>1)</sup> )		1.94	22.25	72.69	80.38	44.88	0.28
티아민 (mg)		0.13	0.11	0.04	0.06	0.08	0
리보플라빈 (mg)		0.07	0.11	0.04	0.04	0.22	0.01
니아신 (mg)		1.27	1.61	0.36	0.43	0.33	0.69
비타민 C (mg)		2.83	0.3	10.76	21.44	3.16	0.01

주: 비타민 A의 RAE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부재로 기존의 RE로 제시하였으며, 2015년 대한민국 영양소 섭취기준에는 RAE로 제시되어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영양학회. (2015). 201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으로부터 인출한 데이터틀이  
 용하여 저자 작성.

본 연구에서는 권장식사패턴을 활용하여 앞서 산출한 에너지필요추정량에 따른 북한 주민의 건강 유지를 위한 식품 소비 구성을 제안하였다. 시나리오 1의 경우, 북한 주민과 남한 주민의 체위가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의 체위 기준을 이용하여 북한 주민의 에너지필요추정량을 산출하였기에, 실제 북한 주민에게 필요한 에너지량과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시나리오 2의 경우, 에너지필요추정량 산출에 북한이탈주민의 체위 자료를 이용하였으므로 어느 정도 실제 북한 주민의 체위를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보다 현실성 있는 자료를 이용해 에너지필요추정량을 산출한 시나리오 2의 결과에 따라, 아동·청소년기(9-18세)와 성인기(19세 이상)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식품 소비 구성을 제안하였다.

201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에서는 영유아·청소년의 성장기 특징을 반영하여 하루 우유 2컵을 섭취하는 권장식사패턴 A와 하루 우유 1컵을 섭취하는 권장식사패턴 B를 제시하였으므로(보건복지부, 한국영양학회,

2015), 본 연구에서도 연령에 따라 권장식사패턴을 구분하였다. 북한 주민의 에너지필요추정량 산출 결과에 따른 권장식사패턴은 다음의 <표 5-28>과 같다.

<표 5-28> 북한 주민의 에너지필요추정량 산출 결과에 따른 2015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의 권장식사패턴

	아동·청소년기 (9-18세)		성인기 (19세 이상)	
	저활동적	활동적	저활동적	활동적
에너지필요추정량 <sup>1)</sup> (kcal)	1,800	2,100	2,100	2,300
권장식사패턴 명칭 <sup>2)</sup>	1800A	2100A	2100B	2300B
곡류	3	3	3.5	4
고기·생선·달걀·콩류	3	4	4.5	5
채소류	6	8	8	8
과일류	1	2	2	2
우유·유제품류	2	2	1	1
유지·당류	5	6	5	6

- 주: 1) 본 연구에서 산출한 시나리오 2에 따른 북한 주민의 에너지필요추정량임. 제시된 값은 해당 연령을 대표하는 에너지필요추정량 산출값을 100 kcal 단위로 반올림한 기준값임.  
 2) 201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에 제시된 에너지필요추정량에 따른 권장식사패턴 명칭임. 영유아·청소년의 성장기 특징을 반영하여 하루 우유 2컵을 섭취하는 권장식사패턴 A와 하루 우유 1컵을 섭취하는 권장식사패턴 B으로 구분됨.  
 3) 식품군별 숫자는 에너지(kcal)를 충족하기 위한 식품군별 일일 권장 섭취횟수임.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영양학회. (2015). 201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으로부터 인출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권장식사패턴 즉, 식품군별 섭취횟수에 따라 북한 주민을 위한 식품 소비 구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201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에서 설정한 식품군별 대표식품은 <표5-29>와 같다. 이 식품군별 대표식품 중에서 북한의 주요 생산 및 소비 식품을 <표 5-30>과 같이 파악하였으며, 해당 식품을 이용하여 북한 주민을 위한 식품 소비 구성을 9세~18세와 19세 이상의 두 연령 집단별로 제안하였다.

〈표 5-29〉 201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의 식품군별 대표식품

식품군	201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의 식품군별 대표식품
곡류	백미, 보리, 찰쌀, 현미, 조, 수수, 기장, 팥, 옥수수, 쌀밥, 국수(말린 것), 국수(생면), 당면, 라면사리, 가래떡/백설기, 떡(팥소, 시루떡 등), 식빵, 빵(잼빵, 팔빵 등), 빵(기타), 시리얼, 감자, 고구마, 목, 밤, 밀가루, 전분, 빵가루, 부침가루, 튀김가루, 믹스, 과자(비스킷, 쿠키), 과자(스낵)
고기·생선·달걀·콩류	쇠고기(한우, 수입우), 돼지고기, 돼지고기(삼겹살), 닭고기, 오리고기, 햄, 소시지, 베이컨, 통조림햄, 고등어, 명태/동태, 조기, 꽁치, 갈치, 다랑어(참치), 바지락, 게, 굴, 오징어, 새우, 낙지, 멸치(건조), 오징어(말린 것), 새우(건조), 방어(말린 것), 명태(말린 것), 다랑어(참치통조림), 어묵, 게맛살, 어류젓, 달걀, 메추라기알, 대두, 완두콩, 강낭콩, 두부, 순두부, 두유, 땅콩, 아몬드, 호두, 잣, 해바라기씨, 호박씨
채소류	파, 양파, 당근, 풋고추, 무, 애호박, 오이, 콩나물, 시금치, 상추, 배추, 양배추, 깻잎, 피망, 부추, 토마토, 쪽갓, 무청, 붉은고추, 숙주나물, 고사리, 미나리, 배추김치, 깍두기, 단무지, 열무김치, 총각김치, 우엉, 마늘, 생강, 미역, 다시마, 김, 느타리버섯, 표고버섯, 양송이버섯, 팽이버섯
과일류	수박, 참외, 딸기, 사과, 굴, 배, 바나나, 감, 포도, 복숭아, 오렌지, 키위, 파인애플, 진포도, 대추(말린 것), 과일음료
우유·유제품류	우유, 치즈, 요구르트(호상), 요구르트(액상), 아이스크림
유지·당류	참기름, 콩기름, 커피프림, 들기름, 유채씨기름/채종유, 흰깨, 들깨, 버터, 포도씨유, 마요네즈, 커피믹스, 설탕, 물엿/조청, 꿀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영양학회. (2015). 201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으로부터 인출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5-30〉 201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의 대표 식품 중 북한 주요 생산 및 소비 식품

식품군	북한의 식품수급표를 이용한 영양소 공급량 분석에 적용한 식품 <sup>1)</sup>
곡류	백미, 보리, 수수, 옥수수, 감자, 고구마, 밤, 밀가루
고기·생선·달걀·콩류	쇠고기(한우, 수입우), 돼지고기, 돼지고기(삼겹살), 닭고기, 오리고기, 오징어(말린 것), 달걀, 대두
채소류	파, 양파, 풋고추, 애호박, 오이, 배추, 양배추, 피망, 토마토, 붉은고추, 마늘
과일류	수박, 사과, 배, 바나나, 포도, 복숭아, 오렌지, 파인애플
우유·유제품류	우유
유지·당류	콩기름, 설탕
식품군	북한의 다소비 식재료 목록에 해당하는 식품 <sup>2)</sup>
곡류	백미, 보리, 조, 수수, 기장, 팥, 옥수수, 국수(말린 것), 국수(생면), 당면, 라면사리, 감자, 고구마, 밤, 밀가루
고기·생선·달	쇠고기(한우, 수입우), 돼지고기, 돼지고기(삼겹살), 닭고기, 오리고기, 햄, 소

갈·콩류	시지, 고등어, 명태/동태, 갈치, 바지락, 게, 굴, 오징어, 새우, 낙지, 달걀, 메추라기알, 대두, 완두콩, 강낭콩, 두부, 순두부, 두유, 팥콩, 호두, 잣, 해바라기씨, 호박씨
채소류	파, 양파, 당근, 풋고추, 무, 애호박, 오이, 시금치, 배추, 양배추, 깻잎, 피망, 붉은고추, 고사리, 미나리, 우엉, 마늘, 생강, 미역, 다시마, 김, 느타리버섯, 표고버섯, 팽이버섯
과일류	수박, 참외, 딸기, 사과, 귤, 배, 바나나, 감, 포도, 복숭아, 오렌지, 건포도, 대추(말린 것)
우유·유제품류	우유, 치즈, 요구르트(액상)
유지·당류	참기름, 콩기름, 들기름, 들깨, 버터, 설탕, 물엿/조청, 꿀

주: 1) 본 연구에서 '북한의 식품수급표를 이용한 영양소 공급량 분석'에 적용한 식품.  
 2) 이수경, 윤지현, 남소영, 차수빈, 남영민.(2020). '북한 영유아를 위한 영양섭취기준 개발' 연구에서 조사한 북한 다소비 식재료 목록에 해당하는 식품.

권장식사패턴에 따른 북한 주민을 위한 식품 소비 구성안은 다음과 같다 <표 5-31, 32>. 식품 소비 구성안에는 에너지필요추정량을 충족하기 위한 식품군별 식품 및 분량이 제시되어 있다. 즉, 각 식품군별로 제시된 식품을 제시된 분량만큼 섭취한다면, 하루에 필요한 에너지량을 충족할 수 있다.

<표 5-31> 권장식사패턴에 따른 북한 주민을 위한 식품 소비 구성 제안: 아동·청소년기 (9-18세)

권장식사패턴 명칭	식품군				
	곡류 (3회)	고기·생선·달걀·콩류 (3회)	채소류 (6회)	과일류 (1회)	우유·유제품류 (2회)
1,800A (저활동적)	쌀밥(210g) 보리밥(210g) 국수(건 90g)	콩(20g) 달걀(60g) 돼지고기(60g)	양배추(70g) 애호박(70g) 오이(70g) 당근(70g) 무(70g) 토마토(70g)	사과(100g)	우유(200mL) 액상요구르트 (150mL)
권장식사패턴 명칭	식품군				
	곡류 (3회)	고기·생선·달걀·콩류 (4회)	채소류 (8회)	과일류 (2회)	우유·유제품류 (2회)
2,100A (활동적)	1,800 kcal 식품 소비 구성에 추가적으로 300 kcal 식품 소비 제안				
		+ 고등어(60g)	+ 시금치(70g)	+ 배(100g)	

232 남북한 사회격차 완화를 위한 북한의 의식주 생활 지표 분석

			콩나물(70g)		
--	--	--	----------	--	--

주: 1) 식품은 201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에 제시된 식품군별 대표식품 중, 북한의 식품 생산량, 다소비 식재료, 영양소별 주요 급원식품을 고려하여 선정함.  
 2) 각 식품의 분량은 201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에 제시된 각 식품군별 대표식품의 1인 1회 분량(g)임.  
 3) 유지·당류의 경우, 조리 시 소량씩 사용(201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에도 유지·당류의 경우 별도의 식품이나 식단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영양학회. (2015). 201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으로부터 인출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5-32〉 권장식사패턴에 따른 북한 주민을 위한 식품 소비 구성 제안: 성인기(19세 이상)

권장식사 패턴 명칭	식품군	곡류 (3.5회)	고기·생선·달걀·콩류 (4.5회)	채소류 (8회)	과일류 (2회)	우유·유제품류 (1회)
2,100B (저활동적)		쌀밥(210g) 보리밥(210g) 국수(건 90g) 고구마(120g) <sup>1)</sup>	콩(20g) 달걀(60g) 돼지고기(60g) 닭고기(60g) 고등어(30g) <sup>1)</sup>	배추김치(40g) 양배추(70g) 애호박(70g) 오이(70g) 꽃고추(70g) 양파(70g) 마늘(10g) 토마토(70g)	사과(100g) 배(100g)	우유(200ml)
권장식사 패턴 명칭	식품군	곡류 (4회)	고기·생선·달걀·콩류 (5회)	채소류 (8회)	과일류 (2회)	우유·유제품류 (1회)
2,300B (활동적)	2,100 kcal 식품 소비 구성에 추가적으로 200 kcal 식품 소비 제안					
		+ 옥수수(120g) <sup>1)</sup>	+ 두부(40g) <sup>1)</sup>			

주: 1) 0.5회 분량  
 2) 식품은 201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에 제시된 식품군별 대표식품 중, 북한의 식품 생산량, 다소비 식재료, 영양소별 주요 급원식품을 고려하여 선정함.  
 3) 별도의 번호가 없는 식품의 경우, 201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에 제시된 각 식품군별 대표식품의 1인 1회 분량(g)임. 201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에는 식품군별 1인 1회 분량이 1회 또는 0.3회 기준으로 제시되어 있어, 횟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비례식을 통해 식품 분량을 산출함(10g 단위로 반올림).  
 4) 유지·당류의 경우, 조리 시 소량씩 사용(201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에도 유지·당류의 경우 별도의 식품이나 식단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영양학회. (2015). 201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으로부터 인출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제2부

### 체제 전환국 사례 분석: 발틱 3국을 중심으로

제6장 체제전환국의 변화와 함의

제7장 체제전환 이후 발틱 3국의 사회문제와  
사회정책적 대응





## 제6장

### 체제전환국의 변화와 함의

제1절 체제전환 이후 정치적 변화와 성과

제2절 체제전환 이후 경제적 변화와 성과

제3절 체제전환 이후 사회적 변화와 성과

제4절 체제전환 이후 보건복지 변화와 성과

제5절 체제전환국의 성과와 한계



## 제 6 장 체제전환국의 변화와 함의

본 연구는 5개년에 걸친 다년연구로 기획되어 북한 주민의 생활실태를 분석하는 한편, 북한이 개혁·개방을 진행할 경우 나타날 사회적 변화를 저개발국가와 체제 전환국가들의 사례를 통해 유추하고자 하였다. 이에 매년 북한 주민 생활과 관련한 1부의 연구와 별도로 2부에서는 매해 유사한 유형의 국가군을 사례국가로 선정하여 분석하고 있다(p.14의 [그림 1-1] 참조).

2년차인 이번 연구부터 4년차까지는 사회주의 체제로부터 개방형 경제로 이행하고 있는 국가들을 지리적 유사성을 기준으로 묶어 차례로 연구할 예정이다. 체제 전환국 연구가 시작되는 올해에는 전반적인 체제 전환국을 유형별로 비교하고, 그 중 발틱3국의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장에서는 체제 전환 이후 각국의 정치·경제·사회적 성과를 지역 유형별로 파악하여 그 성과를 개괄적으로 비교하고자 한다. 사회주의 체제에서 개혁·개방을 통해 자본주의 경제체제로 이행한 국가들은 상당히 많다. 이들 국가들은 과거 구 소련연방이나 체코슬로바니아 등으로 묶여있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가까운 국가들은 사회정책의 전통이나 문화의 측면에서 공통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지리적으로 밀접하며 공유성이 높은 국가 그룹으로 비교하는 것은 향후 북한이 체제 전환이후 선택하는 경로가 어느 그룹에 가까운가를 보고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를 예상해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장에서 체제전환국은 6개 그룹으로 나누었다. 비셰그라드(Visegrad), 독립국가연합(CIS :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동남아시아

아 국가연합(ASEAN :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이하 아세안), 남동유럽 협력 프로세스(SEECP : South-East European Cooperation Process, 이하 남동유럽),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The Federal Republic of Yugoslavia, 이하 유고연방), 발틱 3국(Baltic States, 이하 발틱)의 6개로 구성하여 각 국가의 주요 지표들을 비교하였다. 여러 그룹에 중복되는 국가는 해당 국가의 대표적인 그룹에 포함시켰고, 각 그룹에서 체제전환을 하지 않은 국가는 제외하여 총 32개 국가의 분야별 지수를 조사하였다.

〈표 6-1〉 체제전환국 그룹별 국가

그룹명	국가명
비셰그라드 (Visegrad)	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독립국가연합 (CIS)	아프가니스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몽골, 러시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ASEAN)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남동유럽 협력 프로세스 (SEECP)	알바니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 (Yugoslavia)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크로아티아, 몬테네그로, 북 마케도니아, 세르비아, 슬로베니아
발틱 3국 (Baltic States)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 제1절 체제전환 이후 정치적 변화와 성과

### 1. 세계자유지수

#### 가. 측정 방법

미국의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는 전 세계 국가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 ‘시민권 자유’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를 개발하여 1972년부터 전 세계 210국을 대상으로 각국의 자유 수준을 조사하여 매년 발표하고 있다.

세계자유지수(Freedom in the World)를 측정하는 두 가지 요소는 ‘정치적 권리(Political Rights)’와 ‘시민의 자유(Civil Liberties)’이다. ‘정치적 권리’는 선거 과정(3문항), 정치적 다원주의와 참여(4문항), 정부 기능(3문항) 이렇게 세 가지 분류로 나누어 측정하고, ‘시민의 자유’는 표현 및 신념의 자유(4문항), 시민단체 권리(3문항), 법치(4문항), 개인 자유 및 인권(4문항) 이렇게 네 가지 분류로 나누어 측정한다. 각 문항은 0~4점 척도로 측정되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유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정치적 권리와 시민의 자유는 각각 1~7등급으로 판정되고, 두 요소의 등급을 평균 낸 값으로 1.0~2.5등급은 자유, 3.0~5.0 등급은 부분 자유, 5.5~7.0 등급은 부자유(억압)로 분류된다(김호월, 2020.9.17.).

#### 나. 그룹별 비교

자유 수준이 가장 높은 그룹은 발틱과 비셰그라드로 발틱은 1991년 2.5등급에서 2020년 1.3등급으로 상승선을 그리고 있고, 비셰그라드도 1990년 2.0등급에서 2020년 1.8등급으로 상승하였다. 다음으로 남동유

럽과 유고연방은 1990년대 3등급대로 부분 자유 국가였으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2등급대로 상승하여 자유 국가로 진입하였다. 다음으로 독립 국가연합과 아세안은 부자유(억압) 국가로 독립국가연합은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5등급대, 아세안은 6등급대에 머물러 있다.

〈표 6-2〉 그룹별 세계자유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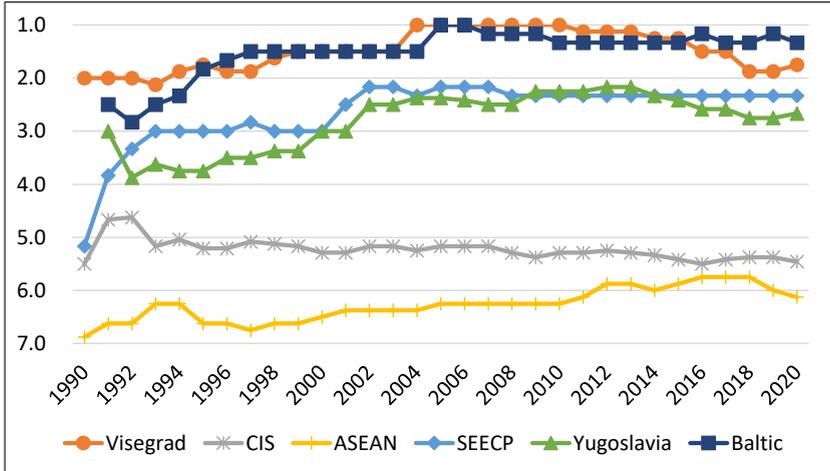
(단위: 등급)

그룹명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Visegrad	2.0	2.0	2.0	2.1	1.9	1.8	1.9	1.9	1.6	1.5	
CIS	5.5	4.7	4.6	5.2	5.0	5.2	5.2	5.1	5.1	5.2	
ASEAN	6.9	6.6	6.6	6.3	6.3	6.6	6.6	6.8	6.6	6.6	
SEEC	5.2	3.8	3.3	3.0	3.0	3.0	3.0	2.8	3.0	3.0	
Yugoslavia	-	3.0	3.9	3.6	3.8	3.8	3.5	3.5	3.4	3.4	
Baltic States	-	2.5	2.8	2.5	2.3	1.8	1.7	1.5	1.5	1.5	
그룹명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Visegrad	1.5	1.5	1.5	1.5	1.0	1.0	1.0	1.0	1.0	1.0	
CIS	5.3	5.3	5.2	5.2	5.3	5.2	5.2	5.2	5.3	5.4	
ASEAN	6.5	6.4	6.4	6.4	6.4	6.3	6.3	6.3	6.3	6.3	
SEEC	3.0	2.5	2.2	2.2	2.3	2.2	2.2	2.2	2.3	2.3	
Yugoslavia	3.0	3.0	2.5	2.5	2.4	2.4	2.4	2.5	2.5	2.3	
Baltic States	1.5	1.5	1.5	1.5	1.5	1.0	1.0	1.2	1.2	1.2	
그룹명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Visegrad	1.0	1.1	1.1	1.1	1.3	1.3	1.5	1.5	1.9	1.9	1.8
CIS	5.3	5.3	5.3	5.3	5.3	5.4	5.5	5.4	5.4	5.4	5.5
ASEAN	6.3	6.1	5.9	5.9	6.0	5.9	5.8	5.8	5.8	6.0	6.1
SEEC	2.3	2.3	2.3	2.3	2.3	2.3	2.3	2.3	2.3	2.3	2.3
Yugoslavia	2.3	2.3	2.2	2.2	2.3	2.4	2.6	2.6	2.8	2.8	2.7
Baltic States	1.3	1.3	1.3	1.3	1.3	1.3	1.2	1.3	1.3	1.2	1.3

주: '정치적 권리'의 등급과 '시민의 자유' 등급의 평균임.  
 자료: Freedom House, [Website] (n.d.). Country and Territory Ratings and Statuses, 1973-2021 . [https://freedomhouse.org/sites/default/files/2021-02/Country\\_and\\_Territory\\_Ratings\\_and\\_Statuses\\_FIW1973-2021.xlsx](https://freedomhouse.org/sites/default/files/2021-02/Country_and_Territory_Ratings_and_Statuses_FIW1973-2021.xlsx)에서 2021.09.26. 인출.

[그림 6-1] 그룹별 세계 자유 지수

(단위: 등급)



주: '정치적 권리'의 등급과 '시민의 자유' 등급의 평균임.

자료: Freedom House, (n.d.). Country and Territory Ratings and Statuses, 1973-2021 [Website. [https://freedomhouse.org/sites/default/files/2021-02/Country\\_and\\_Territory\\_Ratings\\_and\\_Statuses\\_FIW1973-2021.xlsx](https://freedomhouse.org/sites/default/files/2021-02/Country_and_Territory_Ratings_and_Statuses_FIW1973-2021.xlsx)에서 2021.09.26. 인출.

## 2. 민주주의 지수

### 가. 측정 방법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지(The Economist) 산하 연구기관인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는 전 세계 167개국을 대상으로 각국의 민주주의의 수준을 지수화하여 발표하고 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민주주의 지수 조사는 2년마다 실시되었고, 2010년 이후로는 매년 실시되고 있다.

민주주의 지수(Democracy Index)를 측정하는 다섯 가지 구성 요소는 '선거과정과 다원주의'(Electoral process and pluralism), '정부기

능(Functioning of government), '정치참여(Political participation)', '정치문화(Political culture)', '시민의 자유(Civil liberties)'이다. 국가별로 다섯 가지 구성 요소를 1부터 10까지의 지수로 계량화한 후, 이를 평균 낸 값이 각 국의 민주주의 지수이다. 10에 가까울수록 민주주의 수준이 높은 것이며, 분포를 보이며, 지수가 8.1~10.0인 국가는 '완전 민주주의(Full democracy)', 6.1~8.0인 국가는 '불완전 민주주의(Flawed democracy)', 4.1~6.0인 국가는 '혼합형 체제(Hybrid regime)', 4.0 이하는 '권위주의 체제(Authoritarian regimes)'로 분류된다(전진영, 김유정, 2020).

## 나. 그룹별 비교

민주주의 수준이 가장 높은 국가는 발틱과 비셰그라드로 2006년부터 현재까지 7점대를 유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남동유럽과 유고연방이 2006년부터 현재까지 6점대를 유지하며 발틱, 비셰그라드, 남동유럽, 유고연방은 불완전 민주주의로 분류된다. 마지막으로 독립국가연합과 아세안이 2006년부터 현재까지 3점대에 머무르며 권위주의 체제로 분류되고 있다.

〈표 6-3〉 그룹별 민주주의 지수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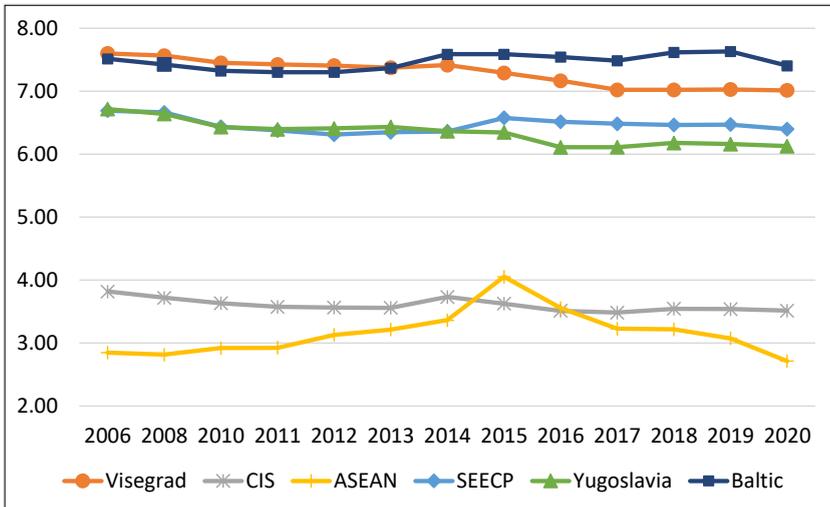
그룹명	2006	2008	2010	2011	2012	2013
Visegrad	7.60	7.57	7.45	7.43	7.41	7.37
CIS	3.82	3.72	3.63	3.58	3.56	3.56
ASEAN	2.85	2.82	2.92	2.93	3.13	3.22
SEECF	6.69	6.66	6.43	6.38	6.31	6.35
Yugoslavia	6.72	6.64	6.43	6.40	6.41	6.43
Baltic States	7.51	7.42	7.32	7.30	7.30	7.37

그룹명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Visegrad	7.42	7.29	7.17	7.02	7.02	7.03	7.01
CIS	3.73	3.63	3.51	3.49	3.55	3.54	3.51
ASEAN	3.36	4.05	3.56	3.23	3.22	3.08	2.71
SEECIP	6.36	6.58	6.51	6.48	6.46	6.47	6.40
Yugoslavia	6.36	6.35	6.11	6.11	6.18	6.16	6.13
Baltic States	7.59	7.59	7.54	7.48	7.62	7.63	7.40

주: 민주주의 지수는 2006년부터 측정된 지표로 2006년부터 2년간 조사되다가 2010년부터 매년 주기로 조사함  
 자료: 각 년도 Democracy index. [Website]. (n.d.). <https://www.eiu.com/>에서 2021.09.26. 인출한 자료로 재구성

[그림 6-2] 그룹별 민주주의 지수

(단위: 점)



주: 민주주의 지수는 2006년부터 측정된 지표로 2006년부터 2년간 조사되다가 2010년부터 매년 주기로 조사함.  
 자료: 각 년도 Democracy index. [Website]. (n.d.). <https://www.eiu.com/>에서 2021.09.26. 인출한 자료로 저자 재구성함.

## 제2절 체제전환 이후 경제적 변화와 성과

### 1. 경제자유지수

#### 가. 측정 방법

경제자유지수(Index of Economic Freedom)는 월스트리트 저널과 헤리티지 재단(The Heritage Foundation)에서 세계 각국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체계적으로 수치화 한 지수로 1995년을 시작으로 매년 초에 발표하고 있다.

이 지수는 각국의 재정상태, 정부의 금융규제정책, 무역 정책 등을 10여개의 세부 지수로 나누어 최고 1.0점, 최하 5.0점으로 평가 및 종합하여 산정한다. 세부 지수는 재산권(Property Rights), 사법적 효과성(Judicial Effectiveness), 정부 청렴성(Government Integrity), 세금 부담(Tax Burden), 정부 지출(Gov't Spending), 재정 건전성(Fiscal Health), 기업활동 자유도(Business Freedom), 노동의 자유도(Labor Freedom), 재정상 자유도(Monetary Freedom), 무역 자유도(Trade Freedom), 투자 자유도(Investment Freedom), 재정상 자유도(Financial Freedom)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경제적 자유가 높음을 나타내며, 각 국가는 80점 이상은 자유, 70~80점은 대체로 자유, 60~70점은 중간 자유, 50~60점은 대체로 부자유, 50점 미만은 억압으로 평가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지역협력팀, 2020.8.31.).

## 나. 그룹별 비교

경제자유지수가 가장 높은 그룹은 발틱으로 1990년대 후반에는 60점대이었으나 200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 70점대로 상승하며 대체로 자유인 국가로 평가되고 있다. 다음으로 경제자유지수가 높은 그룹은 비셰그라드로 1990년대 후반에는 60점대 초반이었으나 현재는 60점대 후반으로 상승하였고 중간자유로 평가된다. 그 외 그룹들은 1990년대 후반에 모두 50점 미만으로 경제자유지수가 억압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남동유럽은 2000년대 중반, 유고연방은 2010년, 독립국가연합은 작년에 60점을 넘으며 현재까지 중간자유로 평가되고 있다. 아세안은 본 지수가 조사된 1995년부터 현재까지 부자유 국가로 평가되고 있다.

〈표 6-4〉 그룹별 경제자유지수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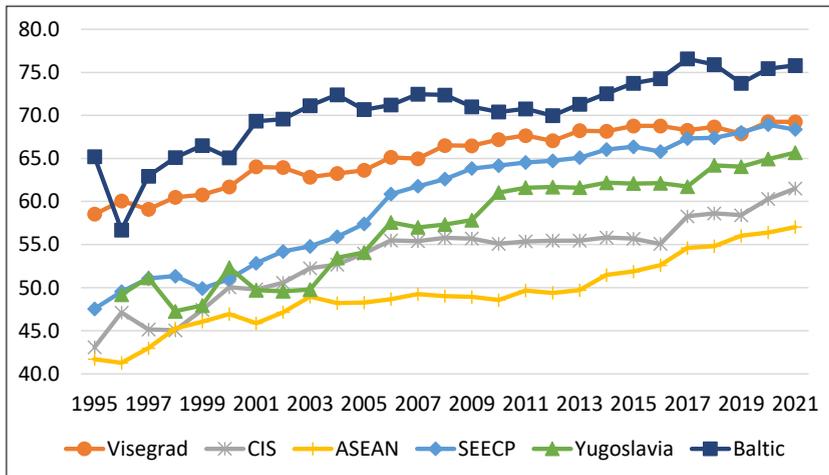
그룹명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Visegrad	58.5	60.1	59.1	60.5	60.8	61.7	64.0	64.0	62.8
CIS	43.1	47.1	45.2	45.0	47.4	50.1	49.8	50.6	52.3
ASEAN	41.7	41.3	43.0	45.3	46.1	46.9	45.9	47.2	49.0
SEEC	47.5	49.5	51.1	51.3	49.9	51.0	52.8	54.2	54.8
Yugoslavia	-	49.2	51.2	47.3	47.9	52.3	49.7	49.6	49.8
Baltic States	65.2	56.7	62.9	65.1	66.5	65.1	69.3	69.6	71.1
그룹명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Visegrad	63.3	63.6	65.1	65.0	66.5	66.5	67.2	67.7	67.1
CIS	52.7	54.0	55.5	55.4	55.8	55.7	55.1	55.4	55.4
ASEAN	48.2	48.3	48.7	49.3	49.0	48.9	48.6	49.7	49.4
SEEC	55.9	57.4	60.9	61.8	62.6	63.8	64.2	64.5	64.7
Yugoslavia	53.5	54.1	57.6	57.0	57.3	57.9	61.1	61.6	61.7
Baltic States	72.4	70.7	71.2	72.5	72.4	71.0	70.4	70.8	70.0

그룹명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Visegrad	68.2	68.2	68.8	68.8	68.3	68.7	67.9	69.3	69.3
CIS	55.5	55.8	55.7	55.1	58.3	58.6	58.4	60.3	61.5
ASEAN	49.7	51.5	51.9	52.6	54.6	54.8	56.0	56.4	57.0
SEEC	65.1	66.0	66.4	65.8	67.3	67.4	68.0	68.9	68.4
Yugoslavia	61.6	62.2	62.1	62.1	61.7	64.2	64.1	64.9	65.7
Baltic States	71.3	72.5	73.7	74.3	76.6	75.9	73.7	75.4	75.8

자료: Index of Economic Freedom [Website]. (n.d).  
<https://www.heritage.org/index/download> 에서 2021.09.26. 인출한 자료로 저자 작성

[그림 6-3] 그룹별 경제자유지수

(단위: 점)



자료: Index of Economic Freedom [Website]. (n.d).  
<https://www.heritage.org/index/download> 에서 2021.09.26. 인출한 자료로 저자 작성

## 2. 국내총생산(GDP) 및 경제성장률

국내총생산(명목GDP)이 가장 높은 그룹은 비셰그라드로 1990년초에는 독립국가연합보다 낮았으나 1990년 중반부터 역전하며 최근에는 2천

7백억 달러를 돌파했다. 두 번째로 국내총생산이 높은 그룹은 독립국가 연합으로 2013년 2천3백억 달러를 돌파하며 상승세였으나 2016년 1천3백9십억 달러로 하락하며 아직 이전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남동유럽 > 아세안 > 유고연방 > 발틱’ 순으로 발틱의 GDP 수준이 가장 낮은데, 이는 GDP와 생산가능인구수가 비례하는 만큼 발틱의 적은 생산가능인구수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측된다(손종철, 2014).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틱의 GDP가 2000년 83억 달러, 2010년 268억 달러, 2020년에는 401억 달러로 다른 그룹에 비해 적은 폭이지만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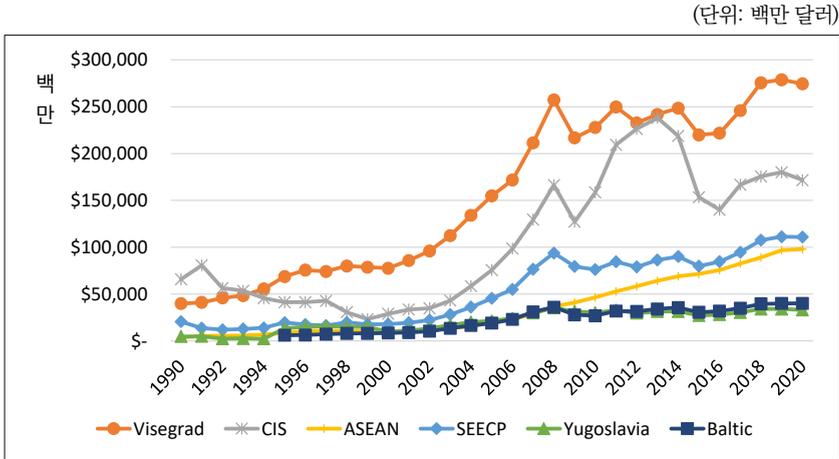
〈표 6-5〉 그룹별 국내총생산(명목GDP)

(단위: 백만 달러)

그룹명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Visegrad	39,818	41,097	45,842	48,389	55,496	68,676	75,541	74,135	80,014	78,683	
CIS	65,785	80,705	56,362	53,572	45,622	41,383	41,321	42,709	30,734	23,223	
ASEAN	3,669	5,321	5,497	5,681	6,874	8,647	10,013	10,678	10,537	10,324	
SEEC	20,552	13,681	12,041	12,793	13,884	19,604	17,477	16,383	19,757	17,597	
Yugoslavia	4,700	4,939	2,437	2,682	2,406	13,453	14,922	15,582	15,008	14,821	
Baltic	-	-	-	-	-	6,050	6,377	7,263	8,022	8,086	
그룹명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Visegrad	77,609	85,804	96,002	112,509	134,054	154,764	171,793	211,408	257,258	216,745	
CIS	29,022	33,566	34,784	43,064	58,545	75,700	98,527	129,414	166,373	127,317	
ASEAN	10,304	10,678	12,184	13,804	15,497	19,309	22,919	28,928	36,689	41,116	
SEEC	17,993	19,500	22,272	28,188	36,105	45,458	55,100	76,556	93,878	79,390	
Yugoslavia	9,844	11,252	13,226	16,971	20,083	21,501	24,139	29,841	35,258	31,552	
Baltic	8,389	8,949	10,392	13,470	16,391	19,052	22,904	31,049	35,975	27,817	
그룹명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Visegrad	227,783	249,687	232,598	241,741	248,448	219,847	221,757	245,827	275,566	278,793	274,321
CIS	158,506	209,292	226,360	238,045	218,776	153,329	139,936	166,701	175,532	180,063	171,576
ASEAN	46,455	52,817	58,330	64,142	68,954	71,493	75,637	82,489	89,109	96,775	97,943
SEEC	76,206	84,535	78,996	86,398	90,030	79,921	84,599	94,562	107,612	111,181	110,873
Yugoslavia	30,105	32,833	29,588	31,409	31,524	27,102	28,167	30,396	34,087	34,116	33,107
Baltic	26,894	31,768	31,482	34,077	35,546	30,569	31,777	34,970	39,571	40,056	40,141

자료: GDP(current US\$) [Website]. (n.d.).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에서 2021.09.12. 인출한 자료로 저자 작성.

[그림 6-4] 그룹별 국내총생산(명목GDP)



자료: GDP(current US\$) [Website]. (n.d.).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에서 2021.09.12. 인출한 자료로 저자 작성.

1인당 GDP가 가장 높은 그룹은 비셰그라드와 발틱이다. 특히 발틱의 경우 1990년 후반에 3천 달러로 다른 그룹들과 큰 차이가 없었으나 급격히 성장하며 2013년부터는 비셰그라드를 넘어섰고 2018년부터는 2만 달러에 접어들었다. 전체 GDP의 수준은 가장 낮으나 1인당 GDP의 수준은 가장 높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생활수준도 비교적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sup>41)</sup>

41)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할 것. KDI경제정보센터. (n.d.). 경제 성장. <https://eiec.kdi.re.kr/material/conceptList.do?depth01=00002000010000100009&idx=142>에서 2021. 10. 24. 인출.

〈표 6-6〉 그룹별 1인당 국내총생산(명목GD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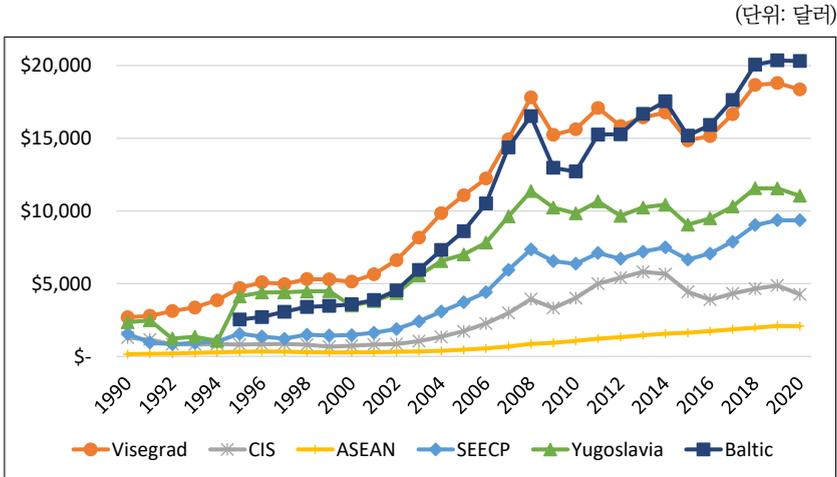
(단위: 달러)

그룹명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Visegrad	2,693	2,793	3,122	3,357	3,863	4,706	5,101	4,975	5,323	5,293	
CIS	1,300	1,164	839	827	852	821	840	862	802	671	
ASEAN	149	187	195	241	273	321	341	333	289	276	
SEEC	1,555	955	838	935	1,019	1,553	1,371	1,219	1,496	1,431	
Yugoslavia	2,354	2,478	1,225	1,352	1,057	4,133	4,398	4,409	4,471	4,477	
Baltic	-	-	-	-	-	2,542	2,711	3,063	3,408	3,469	
그룹명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Visegrad	5,142	5,655	6,614	8,163	9,847	11,085	12,233	14,931	17,808	15,241	
CIS	735	816	854	1,041	1,347	1,732	2,268	2,984	3,945	3,323	
ASEAN	279	286	312	348	389	463	553	690	858	936	
SEEC	1,469	1,626	1,879	2,415	3,086	3,731	4,418	5,947	7,357	6,550	
Yugoslavia	3,485	3,804	4,353	5,556	6,559	7,007	7,820	9,630	11,356	10,232	
Baltic	3,576	3,869	4,539	5,947	7,326	8,612	10,521	14,373	16,531	12,968	
그룹명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Visegrad	15,629	17,082	15,850	16,444	16,776	14,857	15,155	16,653	18,666	18,798	18,369
CIS	4,014	5,002	5,410	5,817	5,670	4,438	3,904	4,333	4,659	4,876	4,260
ASEAN	1,066	1,212	1,326	1,462	1,566	1,632	1,732	1,858	1,975	2,095	2,082
SEEC	6,374	7,115	6,717	7,205	7,500	6,659	7,074	7,891	9,037	9,358	9,362
Yugoslavia	9,844	10,667	9,663	10,243	10,433	9,057	9,492	10,305	11,563	11,558	11,047
Baltic	12,717	15,259	15,275	16,675	17,544	15,185	15,917	17,632	20,059	20,356	20,310

자료: GDP per capita (current US\$) [Website]. (n.d.).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에서 2021.09.12. 인출한 자료로 저자 작성.

[그림 6-5] 그룹별 1인당 국내총생산(명목GDP)



자료: GDP per capita (current US\$) [Website]. (n.d).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에서 2021.09.12. 인출한 자료로 저자 작성.

경제성장률이 가장 높은 그룹은 아세안으로 인구의 60%가 35세 이하의 젊은 층이며, 2017년 기준 중산층 인구가 10년간 2배 증가하는 등 내수시장 확대가 지속되었기 때문이다.<sup>42)</sup> 이외의 그룹들은 1990년대에 모두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2007~2008년 세계 금융 위기로 인해 2009년 모든 그룹의 경제성장률이 급락하는 사태가 일어났었다(강유덕, 2020.9.7.). 특히 발틱의 경우 2009년에 -14.5%로 경제위기를 겪었으나 2년 만에 6.6%로 아세안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최근에는 아세안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3~4%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였으나 2020년 코로나19라는 팬데믹(Pandemic) 상황으로 인해 아세안을 포함하여 모두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였다(김용훈, 2021.1.3.).

42)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할 것. 아세안 개요. [Website]. (n.d.). <https://www.asean-korea.org/kor/ASEAN/overview.asp>에서 2021.10.25. 인출.

〈표 6-7〉 그룹별 경제성장률(실질GD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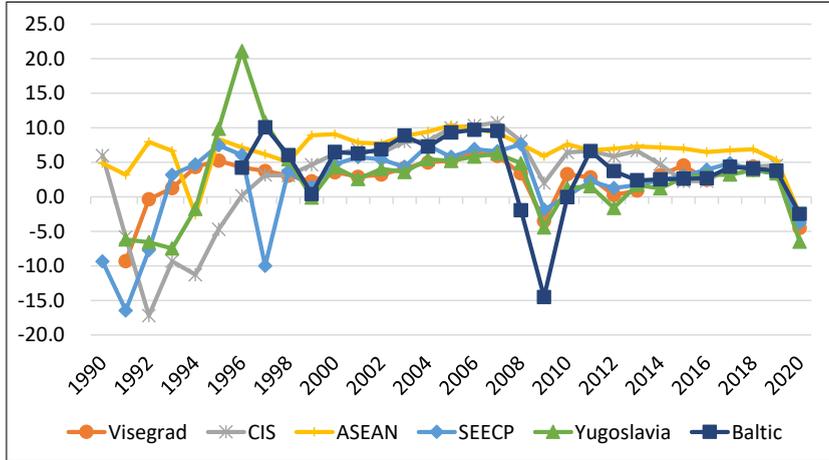
(단위: 전년도 대비 %)

그룹명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Visegrad	-	-9.3	-0.4	1.3	4.3	5.2	4.3	3.7	3.1	2.3	
CIS	6.0	-5.8	-17.2	-9.3	-11.3	-4.7	0.2	3.1	3.1	4.6	
ASEAN	4.9	3.2	8.0	6.7	-2.6	8.4	7.2	6.2	5.1	8.9	
SEEC	-9.3	-16.5	-7.7	3.2	4.7	7.5	6.0	10.0	3.7	1.4	
Yugoslavia		-6.2	-6.6	-7.5	-1.8	9.8	21.1	10.9	5.5	-0.1	
Baltic States	-	-	-	-	-	-	4.2	10.1	6.0	0.4	
그룹명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Visegrad	3.6	2.9	3.2	4.2	5.0	5.2	6.4	5.9	3.4	-3.5	
CIS	6.3	6.8	6.3	8.0	8.1	10.0	10.3	10.8	8.1	2.0	
ASEAN	9.1	7.9	7.7	8.8	9.4	10.4	9.9	9.2	7.6	5.9	
SEEC	4.7	5.8	5.4	4.3	7.5	5.8	6.9	6.6	7.6	-1.8	
Yugoslavia	4.3	2.6	4.0	3.6	5.5	5.2	5.8	6.3	4.9	-4.5	
Baltic States	6.5	6.3	6.9	8.9	7.3	9.3	9.7	9.6	-1.9	-14.5	
그룹명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Visegrad	3.3	2.8	0.3	0.9	3.1	4.6	2.5	4.3	4.4	3.5	-4.5
CIS	6.4	6.6	5.9	6.7	4.7	2.2	2.3	4.3	4.4	4.6	-3.2
ASEAN	7.6	6.7	7.0	7.3	7.2	7.0	6.5	6.7	6.9	5.3	-2.4
SEEC	0.1	2.3	1.3	1.7	2.4	3.1	3.9	4.9	3.9	3.3	-3.8
Yugoslavia	1.3	1.5	-1.6	1.7	1.2	2.8	3.2	3.2	3.9	3.4	-6.5
Baltic States	-0.0	6.6	3.7	2.4	2.5	2.6	2.7	4.3	4.1	3.8	-2.5

자료: GDP growth (annual %) [Website]. (n.d.).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에서 2021.09.12. 인출한 자료로 저자 작성.

[그림 6-6] 그룹별 경제성장률(실질GDP)

(단위: 전년도 대비 %)



자료: GDP growth (annual %) [Website]. (n.d.).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에서 2021.09.12. 인출한 자료로 저자 작성.

1인당 경제성장률은 전체 경제성장률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2000년대에 세계 금융 위기 전까지 발틱의 1인당 경제성장률이 10% 내외로 아세안 9% 내외 보다 높았다는 점이 눈여겨 볼만하다.

<표 6-8> 그룹별 1인당 경제성장률(실질GDP)

(단위: 전년도 대비 %)

그룹명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Visegrad	-	-9.4	-0.5	1.1	4.2	5.2	4.3	3.8	3.1	2.3
CIS	3.8	-7.0	-18.0	-9.9	-11.6	-5.1	-0.3	2.7	2.7	4.2
ASEAN	2.6	1.1	5.8	4.7	-4.6	6.1	5.1	4.2	3.2	7.1
SEECP	-9.3	-15.8	-6.9	3.7	5.1	7.9	6.6	-9.5	4.2	1.9
Yugoslavia	-	-6.0	-6.3	-7.3	-1.6	11.5	22.0	11.2	5.5	-0.1
Baltic States	-	-	-	-	-	-	5.4	11.1	7.0	0.8

그룹명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Visegrad	4.0	3.1	3.4	4.3	5.0	5.3	6.3	5.8	3.2	-3.6
CIS	5.8	6.4	5.9	7.1	7.2	9.1	9.4	9.8	7.0	0.8
ASEAN	7.4	6.3	6.3	7.5	8.1	9.0	8.6	7.9	6.3	4.6
SEEC	5.2	7.3	6.9	5.0	8.1	6.5	7.6	7.7	8.8	-1.1
Yugoslavia	4.4	3.1	3.9	3.5	5.4	5.2	5.8	6.2	4.9	-4.5
Baltic States	6.9	7.3	7.8	9.7	8.3	10.5	10.8	10.5	-1.2	-1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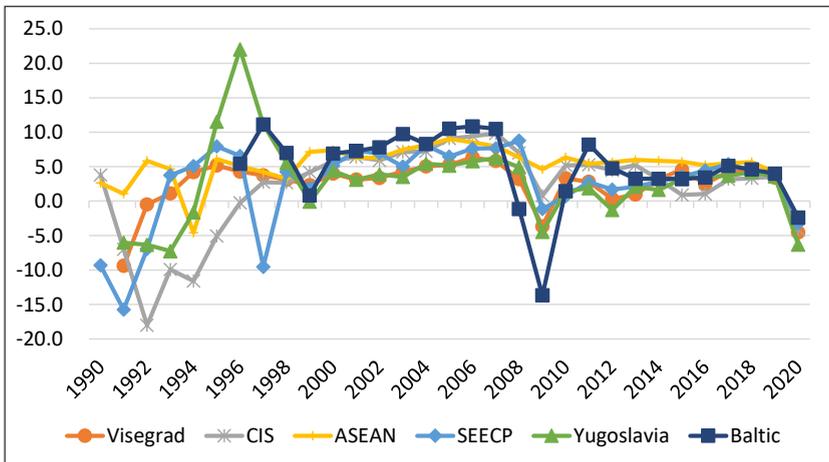
  

그룹명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Visegrad	3.3	2.8	0.3	1.0	3.2	4.6	2.5	4.3	4.3	3.4	-4.5
CIS	5.2	5.3	4.5	5.2	3.2	0.9	1.0	3.2	3.3	3.5	-4.1
ASEAN	6.3	5.4	5.6	6.0	5.8	5.7	5.2	5.5	5.7	4.1	-3.5
SEEC	0.7	2.7	1.7	2.1	2.8	3.5	4.4	5.4	4.4	3.9	-3.2
Yugoslavia	1.4	1.9	-1.3	2.1	1.6	3.3	3.6	3.7	4.2	3.6	-6.3
Baltic States	1.4	8.2	4.8	3.2	3.2	3.2	3.4	5.1	4.6	4.0	-2.4

자료: GDP per capita growth (annual %) [Website]. (n.d.).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에서 2021.09.12. 인출한 자료로 저자 작성.

[그림 6-7] 그룹별 1인당 경제성장률(실질GDP)

(단위: 전년도 대비 %)



자료: GDP per capita growth (annual %) [Website]. (n.d.).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에서 2021.09.12. 인출한 자료로 저자 작성.

### 3. 1인당 국민총소득(GNI)

1인당 GNI가 가장 높은 그룹은 비셰그라드와 발틱이다. 1인당 GDP와 마찬가지로 비셰그라드와 발틱이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급격히 성장하였고, 2013년부터는 발틱(\$16,187)이 비셰그라드(\$16,138)를 넘어섰으며, 머지않아 1인당 GNI가 2만 달러를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6-9〉 그룹별 1인당 국민총소득(GN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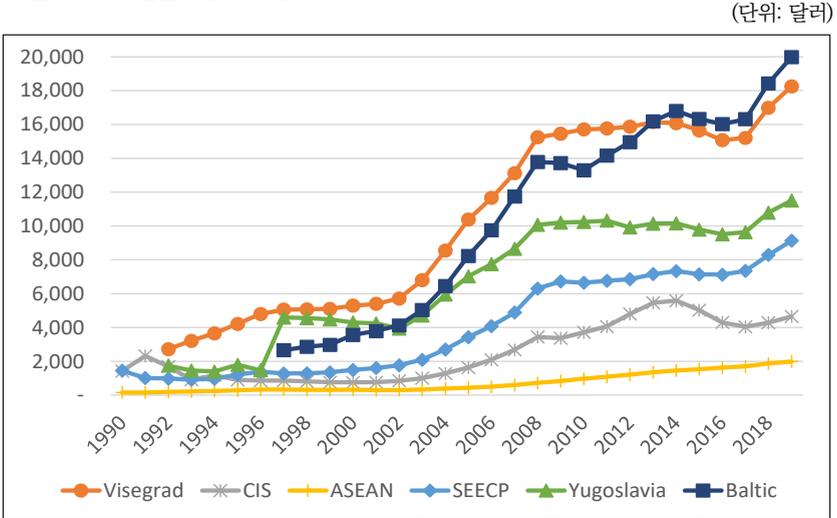
(단위: 달러)

그룹명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Visegrad	-	-	2,720	3,213	3,653	4,215	4,800	5,053	5,075	5,103	
CIS	1,430	2,320	1,691	918	1,175	898	853	860	817	761	
ASEAN	160	160	190	220	250	283	333	340	313	317	
SEEC	1,450	1,015	987	920	963	1,217	1,373	1,283	1,293	1,347	
Yugoslavia	-	-	1,750	1,460	1,400	1,790	1,475	4,594	4,552	4,484	
Baltic	-	-	-	-	-	-	-	2,660	2,860	2,980	
그룹명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Visegrad	5,290	5,393	5,715	6,800	8,545	10,383	11,658	13,118	15,243	15,455	
CIS	752	766	845	1,007	1,283	1,634	2,089	2,677	3,442	3,367	
ASEAN	330	293	303	335	395	445	505	603	728	833	
SEEC	1,490	1,603	1,763	2,090	2,707	3,433	4,083	4,887	6,300	6,723	
Yugoslavia	4,298	4,240	3,933	4,708	5,938	7,020	7,745	8,652	10,072	10,210	
Baltic	3,563	3,787	4,123	5,033	6,450	8,230	9,743	11,747	13,790	13,720	
그룹명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Visegrad	15,708	15,760	15,865	16,138	16,083	15,650	15,070	15,208	16,995	18,253	16,985
CIS	3,711	4,062	4,795	5,458	5,582	5,020	4,298	4,046	4,284	4,653	4,273
ASEAN	975	1,090	1,215	1,355	1,463	1,540	1,623	1,700	1,873	1,993	1,973
SEEC	6,647	6,760	6,853	7,150	7,327	7,147	7,123	7,347	8,283	9,133	9,107
Yugoslavia	10,240	10,315	9,917	10,145	10,155	9,793	9,508	9,637	10,793	11,503	8,260
Baltic	13,297	14,160	14,960	16,187	16,797	16,320	16,027	16,307	18,427	19,987	-

자료: GNI per capita, Atlas method (current US\$) [Website]. (n.d.).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에서 2021.09.13. 인출한 자료로 저자 작성.

[그림 6-8] 그룹별 1인당 국민총소득(GNI)



자료: GNI per capita, Atlas method (current US\$) [Website]. (n.d).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에서 2021.09.13. 인출한 자료로 저자 작성.

#### 4. 공적개발원조(ODA)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는 국제개발협력 활동 중 일부로, 중앙 및 지방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제공하는 원조이다.<sup>43)</sup>

ODA 공여국들의 대표적인 협의체인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는 DAC 회원국들의 ODA 공여 규모를 파악하고자 GNI에 대비하여 그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 참고로 2019년 DAC 회원국의 GNI 대비 ODA 규모 평균은 0.38%이고, 유엔이 제시한 ODA 목표치인 GNI대비 0.7%를 넘어서는 회원국은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43) 개발협력과 공적개발원조 개념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할 것. 개발협력. [Website]. (n.d).  
[https://www.mofa.go.kr/www/wpge/m\\_3816/contents.do](https://www.mofa.go.kr/www/wpge/m_3816/contents.do)에서 2021.10.25. 인출.

스웨덴,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들이다(DAC 회원국 지원현황. n. d.).

본 연구에서는 체제전환국들의 ODA 영향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수혜 경험이 있는 그룹들의 GNI 대비 ODA 수혜율과 공여 경험이 있는 그룹들의 GNI 대비 공여율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먼저, GNI 대비 ODA 수혜율을 살펴보면 1990년대에는 남동유럽이 가장 높았고 독립국가연합, 아세안, 남동유럽, 유고연방 모두 10% 내외의 수혜율을 보였다. 2000년대에는 독립국가연합과 아세안이 6% 내외, 남동유럽과 유고연방이 4% 내외의 수혜율을 보였다. 2010년대에는 독립국가연합, 아세안, 남동유럽, 유고연방 모두 2% 내외의 수혜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각 그룹들의 경제가 발전하면서 GNI가 상승하여 상대적으로 ODA 수혜율이 차지하는 부분이 감소한 것으로 예상된다(<표 6-10>참조).

<표 6-10> 그룹별 GNI 대비 ODA 수혜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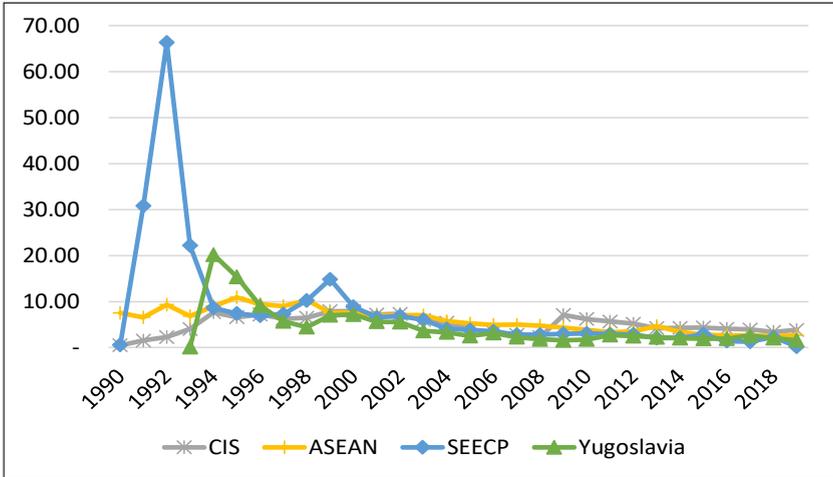
그룹명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CIS	0.52	1.53	2.28	4.05	7.66	6.61	7.19	6.24	6.48	7.93
ASEAN	7.54	6.55	9.31	6.83	9.02	10.92	9.43	9.01	10.36	7.58
SEEC	0.55	30.80	66.38	22.20	8.61	7.41	6.93	7.29	10.25	14.85
Yugoslavia	-	-	-	0.13	20.21	15.41	9.11	5.72	4.46	7.01
그룹명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CIS	7.95	7.20	7.34	5.96	5.43	3.88	3.31	2.75	2.27	7.09
ASEAN	7.65	7.03	7.05	7.05	5.73	5.24	4.97	5.00	4.77	4.36
SEEC	8.86	6.60	6.87	6.04	4.09	3.83	3.54	2.81	2.82	3.01
Yugoslavia	7.20	5.61	5.53	3.64	3.31	2.53	3.15	2.27	1.79	1.58
그룹명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CIS	6.22	5.70	5.20	4.21	4.28	4.36	4.10	3.95	3.42	3.83
ASEAN	3.84	3.37	3.52	4.69	3.40	2.79	2.64	2.66	2.54	2.66
SEEC	3.09	2.94	2.86	2.08	2.11	2.91	1.42	1.29	2.28	0.19
Yugoslavia	1.76	2.72	2.47	2.24	2.06	1.90	1.97	2.58	2.05	1.60

주: 비세그라드와 발틱은 해당 자료가 없어 제외함  
 자료: Net ODA received (% of GNI) [Website]. (n.d.).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에서 2021.09.13. 인출한 자료로 저자 작성.

[그림 6-9] 그룹별 GNI 대비 ODA 수혜율

(단위: %)



주: 비세그라드와 발틱은 해당 자료가 없어 제외함.  
 자료: Net ODA received (% of GNI) [Website]. (n.d).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에서 2021.09.13. 인출한 자료로 저자 작성.

독립국가연합, 아세안, 남동유럽, 유고연방의 1인당 ODA 수혜액을 살펴보면 남동유럽과 유고연방이 가장 많았고, 2011년을 기점으로 남동유럽은 수혜액이 적어지는 반면 유고연방은 수혜액이 많아지고 있다. 다음으로는 독립국가연합의 수혜액이 많고, 아세안과 함께 꾸준히 1인당 수혜액이 상승하고 있다.

<표 6-11> 그룹별 1인당 ODA 수혜액

(단위: 달러)

그룹명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CIS	7.93	15.44	8.43	14.65	24.47	26.81	29.29	26.25	26.71	29.10
ASEAN	8.90	10.50	15.67	17.25	21.35	28.09	24.57	22.33	20.72	21.62
SEEC	3.36	101.61	126.16	83.87	50.85	56.65	71.54	53.44	85.90	157.03
Yugoslavia	0.00	0.00	1.85	9.45	46.58	78.99	79.41	75.40	80.04	146.24

258 남북한 사회격차 완화를 위한 북한의 의식주 생활 지표 분석

그룹명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CIS	29.90	31.78	40.40	40.02	44.15	40.14	42.83	56.24	57.08	65.08
ASEAN	23.29	21.41	22.61	25.30	23.61	24.81	27.71	33.95	39.34	37.81
SEEC	102.90	87.75	100.74	114.92	99.42	104.63	108.28	103.92	123.79	122.00
Yugoslavia	121.39	122.89	147.48	98.02	105.32	72.07	109.03	96.75	96.69	75.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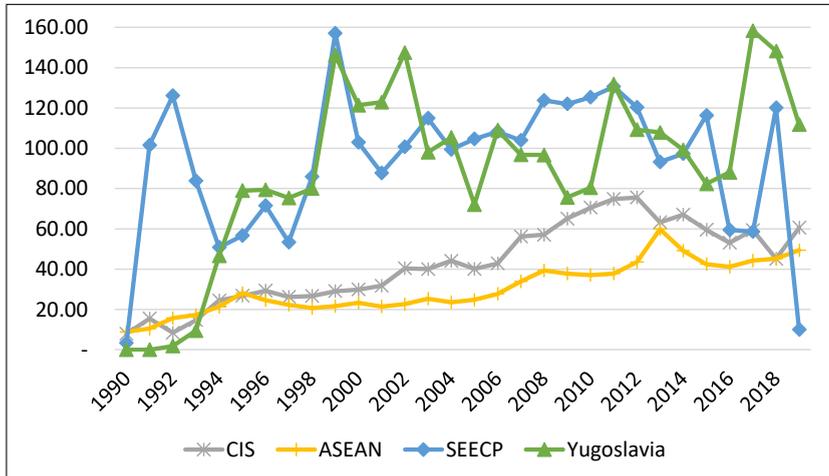
  

그룹명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CIS	70.52	74.81	75.58	63.29	67.02	59.52	53.12	59.34	45.15	60.55
ASEAN	37.09	37.78	43.50	59.86	49.11	42.50	41.14	44.23	45.17	49.40
SEEC	125.32	130.62	120.38	93.25	97.32	116.35	59.47	58.59	120.12	9.95
Yugoslavia	80.42	131.74	109.22	107.91	99.21	82.37	88.07	158.38	148.27	111.70

주: 비세그라드와 발틱은 해당 자료가 없어 제외함  
 자료: Net ODA received per capita (current US\$) [Website]. (n.d.).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에서 2021.09.13. 인출한 자료로 저자 작성.

[그림 6-10] 그룹별 1인당 ODA 수혜액

(단위: 달러)



주: 비세그라드와 발틱은 해당 자료가 없어 제외함  
 자료: Net ODA received per capita (current US\$) [Website]. (n.d.).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에서 2021.09.13. 인출한 자료로 저자 작성.

ODA 공여 경험이 없는 아세안을 제외하고, 각 그룹별 데이터가 있는 2010년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2015년 독립국가연합의 공여 규모가 십억 달러를 넘어서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비셰그라드는 2004년 1억 달러, 2013년 2억 달러, 2016년 3억 달러, 작년에는 4억 달러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 외에 남동유럽, 유고연방, 발틱도 공여 규모는 작지만 꾸준히 공여 수준을 높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12〉 그룹별 ODA 공여 규모

(단위: 백만 달러)

그룹명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Visegrad	17.06	11.02	0.55	60.70	68.15	-	-	-	31.73	28.17	
CIS	-	-	-	-	-	-	-	-	-	-	
SEECF	-	-	-	-	-	-	-	-	-	-	
Yugoslavia	-	-	-	-	-	-	-	-	-	-	
Baltic	-	-	-	-	-	-	-	-	0.39	0.93	
그룹명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Visegrad	34.30	45.22	40.72	59.60	106.37	148.30	187.75	171.12	170.10	183.65	
CIS	-	-	-	-	-	-	-	-	-	-	
SEECF	-	-	-	-	-	-	-	-	117.42	150.78	
Yugoslavia	-	-	-	-	-	39.78	48.94	52.97	60.09	63.44	
Baltic	1.46	2.61	3.19	2.34	11.88	17.85	23.17	29.43	29.08	26.25	
그룹명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Visegrad	184.21	195.59	197.79	208.81	205.61	239.49	339.30	326.69	363.89	378.40	409.23
CIS	425.83	395.03	339.31	506.54	700.13	1,377.86	1,588.72	1,239.47	1,007.15	1,227.39	-
SEECF	75.79	97.96	86.14	86.01	122.42	103.00	141.03	144.30	155.64	159.77	189.56
Yugoslavia	55.43	55.98	56.12	56.31	56.08	68.30	87.25	78.62	81.00	87.74	86.23
Baltic	25.60	30.80	32.79	33.83	34.43	39.83	48.85	47.44	48.18	50.17	51.20

자료: Net ODA [Website]. (n.d.). <https://data.oecd.org/>에서 2021.09.13. 인출한 자료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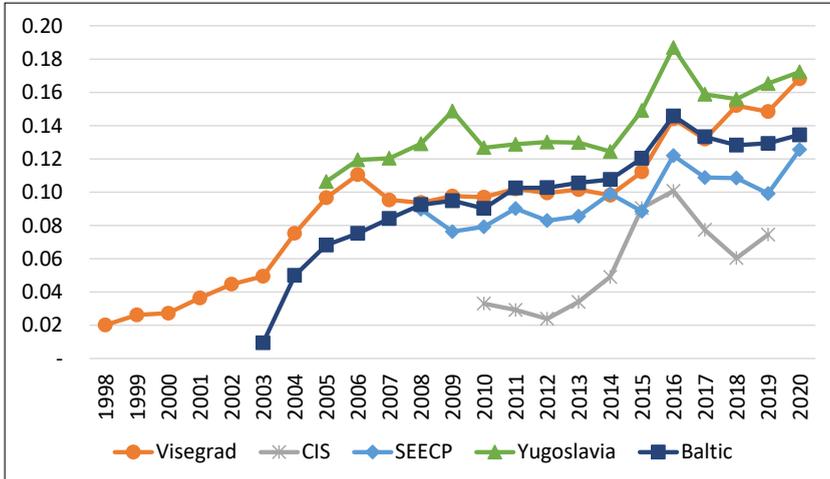


그룹명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Visegrad	0.11	0.10	0.09	0.10	0.10	0.10	0.10	0.10
CIS	-	-	-	-	0.03	0.03	0.02	0.03
SEEC	-	-	0.09	0.08	0.08	0.09	0.08	0.09
Yugoslavia	0.12	0.12	0.13	0.15	0.13	0.13	0.13	0.13
Baltic	0.08	0.08	0.09	0.09	0.09	0.10	0.10	0.11
그룹명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Visegrad	0.10	0.11	0.14	0.13	0.15	0.15	0.17	
CIS	0.05	0.09	0.10	0.08	0.06	0.07	-	
SEEC	0.10	0.09	0.12	0.11	0.11	0.10	0.13	
Yugoslavia	0.12	0.15	0.19	0.16	0.16	0.17	0.17	
Baltic	0.11	0.12	0.15	0.13	0.13	0.13	0.13	

주: GNI 대비 ODA 공여율은 순ODA에서 명목GNI를 나눈 것으로 1에 가까울수록 공여국의 국민총소득 대비 ODA 지원규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함  
 자료: Net ODA provided, total (% of GNI) [Website]. (n.d.).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에서 2021.09.13. 인출한 자료로 저자 작성.

[그림 6-12] 그룹별 GNI 대비 ODA 공여율 비교

(단위: %)



주: GNI 대비 ODA 공여율은 순ODA에서 명목GNI를 나눈 것으로 1에 가까울수록 공여국의 국민총소득 대비 ODA 지원규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함  
 자료: Net ODA provided, total (% of GNI) [Website]. (n.d.).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에서 2021.09.13. 인출한 자료로 저자 작성.

## 5. 수출입 규모

GDP 대비 수출입 비율이 가장 높은 그룹은 비셰그라드와 발틱이다. 발틱은 1996년에, 비셰그라드는 2000년에 처음 100%를 넘었고, 2014년부터는 비셰그라드의 수출입 비율이 150%를 넘어선 반면 발틱은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EU와 러시아 간 상호 경제제재로 인해 발틱 3국의 대러 수출 감소 등의 영향이 있었기 때문이다(외교부, 2018. p.22). 이외의 그룹들은 2000년대에 ‘독립국가연합 > 유고연방 > 아세안 > 남동유럽’ 순으로 수출입 비율이 높았다가 2009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에는 ‘아세안 > 유고연방 > 남동유럽 > 독립국가연합’ 순으로 수출입 비율이 바뀌었다.

〈표 6-14〉 그룹별 GDP 대비 수출입 비율

(단위: %)

그룹명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Visegrad	60.3	72.5	89.0	81.5	80.1	78.5	80.4	86.9	87.7	87.9
CIS	71.2	79.3	109.1	107.4	98.7	100.1	98.0	96.4	87.3	91.2
ASEAN	58.6	52.6	58.9	55.9	68.9	71.0	75.2	79.5	85.6	92.3
SEECF	50.7	52.6	90.9	71.9	65.2	53.1	63.8	65.0	59.7	66.4
Yugoslavia	58.7	46.4	102.4	96.4	92.1	66.7	71.1	75.7	81.3	76.0
Baltic	-	-	-	-	-	99.4	105.4	113.3	112.5	99.6
그룹명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Visegrad	101.3	102.5	97.8	101.5	112.0	116.8	129.6	133.1	131.2	117.3
CIS	102.4	94.5	94.9	98.9	101.1	97.3	97.2	100.0	101.1	88.7
ASEAN	73.3	73.2	76.0	77.1	83.5	84.9	91.3	93.1	92.4	79.2
SEECF	63.2	65.8	65.8	67.4	73.6	76.6	82.3	90.1	89.1	75.4
Yugoslavia	79.0	86.2	84.1	84.6	90.6	94.9	99.9	102.6	104.4	85.1
Baltic	97.1	102.2	102.3	101.9	109.3	118.0	120.5	115.4	118.3	10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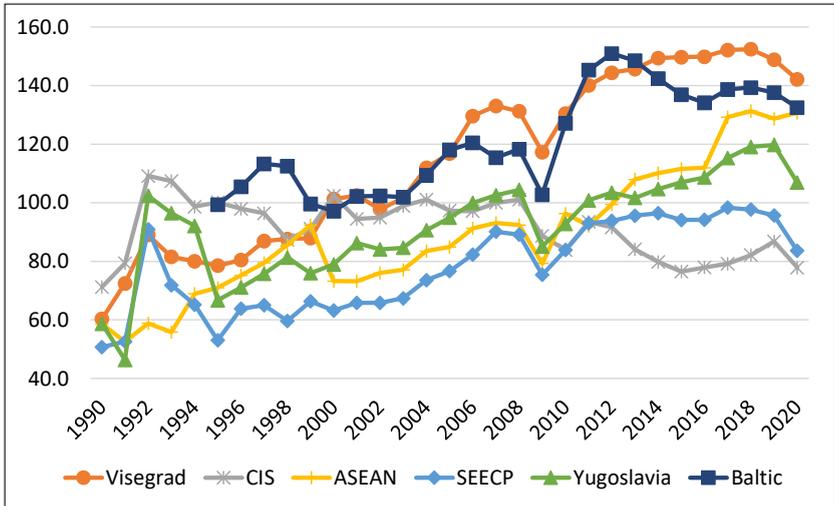
그룹명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Visegrad	130.5	140.1	144.4	145.6	149.4	149.7	149.9	152.1	152.4	148.8	142.1
CIS	83.9	93.5	91.6	84.1	79.8	76.5	77.9	79.2	82.1	86.8	77.9
ASEAN	96.3	92.1	99.4	108.0	110.1	111.6	111.9	129.2	131.3	128.7	130.7
SEEC	83.9	93.0	93.8	95.6	96.4	94.1	94.2	98.3	97.7	95.7	83.6
Yugoslavia	92.8	100.8	103.4	101.7	104.7	107.0	108.6	115.3	119.1	119.7	106.9
Baltic	127.1	145.3	151.0	148.5	142.4	136.9	134.2	138.7	139.3	137.6	132.5

주: GDP 대비 수출입비율 = ((수출 총액 + 수입 총액 + 국외수취요소소득 + 국외지급요소소득) ÷ 명목GDP) × 100.

자료: Trade (% of GDP) [Website]. (n.d.).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에서 2021.09.14. 인출한 자료로 저자 작성.

[그림 6-13] 그룹별 GDP 대비 수출입 비율

(단위: %)



주: GDP 대비 수출입비율 = ((수출 총액 + 수입 총액 + 국외수취요소소득 + 국외지급요소소득) ÷ 명목GDP) × 100.

자료: Trade (% of GDP) [Website]. (n.d.).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에서 2021.09.14. 인출한 자료로 저자 작성.

## 6. 소비자물가지수 및 상승률(인플레이션)

그룹별 소비자물가지수를 살펴보면 비셰그라드, 남동유럽, 유고연방, 발틱은 1990년대 후반에 50~60 내외, 2000년대 중반에 70~80 내외, 2010년대 이후에는 110 내외로 비슷한 소비자물가지수 상승을 보이고 있다. 반면, 독립국가연합과 아세안은 1990년대 후반에 30 내외, 2000년대 50~60 내외로 다른 그룹들보다 천천히 소비자물가지수가 오르다가 2010년을 기점으로 소비자물가지수가 급상승하여 독립국가연합은 2019년에 200을, 아세안은 150을 넘어섰다.

〈표 6-15〉 그룹별 소비자물가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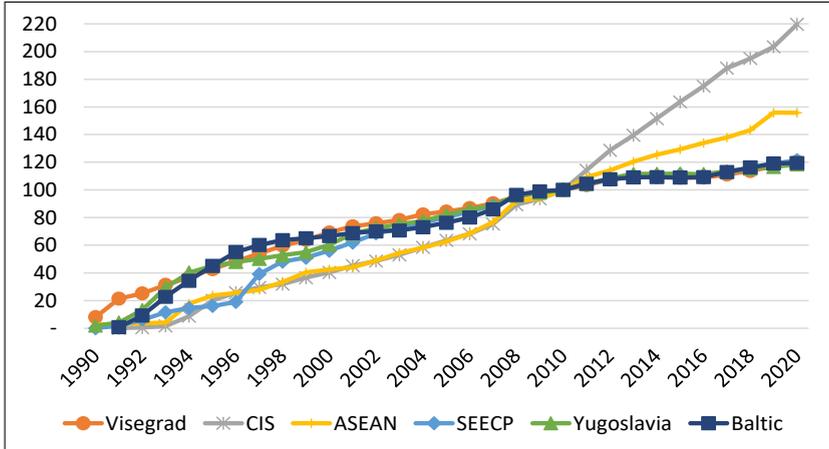
그룹명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Visegrad	8.1	21.4	25.2	31.4	36.7	42.8	48.4	53.9	59.7	63.8	
CIS	-	0.0	0.5	1.7	8.7	20.2	25.7	29.6	31.9	36.6	
ASEAN	2.7	3.2	3.6	4.2	17.7	23.8	25.5	27.7	33.5	40.5	
SEEC	0.0	1.9	6.2	11.6	14.7	16.1	19.0	39.2	48.2	51.0	
Yugoslavia	1.9	4.1	13.3	29.4	40.3	45.1	47.9	50.1	52.8	55.0	
Baltic	-	0.8	9.2	22.8	34.4	45.2	55.1	60.2	63.8	65.1	
그룹명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Visegrad	69.3	73.7	75.9	78.4	82.3	84.4	87.0	90.3	95.1	97.6	
CIS	40.4	45.2	48.6	53.1	58.4	63.5	68.3	75.3	89.3	93.5	
ASEAN	42.6	44.2	49.1	54.5	58.2	62.7	68.3	76.7	92.1	93.7	
SEEC	56.1	62.0	68.5	71.9	76.3	80.2	84.3	88.7	95.5	98.8	
Yugoslavia	60.5	68.3	72.4	75.1	77.6	82.0	85.8	88.7	95.8	97.9	
Baltic	66.7	68.8	70.1	70.7	73.1	76.3	80.0	86.0	96.4	99.0	
그룹명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Visegrad	100.0	103.5	107.7	109.2	109.2	108.9	108.9	111.1	113.7	116.9	120.3
CIS	100.0	114.3	128.6	139.5	151.6	163.6	175.0	188.0	195.0	203.5	219.7
ASEAN	100.0	109.2	114.2	120.4	125.5	129.3	133.9	137.9	143.2	155.9	155.8
SEEC	100.0	104.5	107.4	109.8	110.3	111.3	110.3	112.3	115.9	119.1	121.4
Yugoslavia	100.0	104.4	108.4	111.5	111.6	111.8	111.4	113.4	115.5	116.6	118.4
Baltic	100.0	104.5	107.7	109.1	109.3	108.9	109.3	113.0	116.3	119.1	119.5

주: 2010년을 100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값임

자료: Consumer price index (2010 = 100) [Website]. (n.d.).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에서 2021.09.14. 인출한 자료로 저자 작성.

[그림 6-14] 그룹별 소비자물가지수



주: 2010년을 100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값임  
 자료: Consumer price index (2010 = 100) [Website]. (n.d).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에서 2021.09.14. 인출한 자료로 저자 작성.

그룹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로 살펴 보면 1990년대 초반에는 독립국가연합과 유고연방의 급격한 상승률 변화가 있었고, 2000년대에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안정되는가 싶었으나 2007~2008년 세계 금융 위기로 인해 모든 그룹의 소비자물가가 상승하였다. 2010년대에는 독립국가연합 7% 내외, 아세안 4% 내외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계속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6-16〉 그룹별 소비자물가상승률

(단위: %)

그룹명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Visegrad	298.1	55.8	22.7	25.9	18.8	18.8	14.4	12.0	10.8	7.5
CIS	-	-	508.1	1,014.8	1,430.9	242.9	35.1	23.2	17.9	58.0
ASEAN	26.6	22.9	15.9	19.0	15.4	14.7	10.5	17.1	41.1	37.9
SEECP	23.8	284.5	176.2	137.7	85.1	34.0	57.7	415.4	32.8	16.3
Yugoslavia	526.0	118.5	417.5	765.9	85.0	29.1	28.1	9.3	11.2	12.8
Baltic	-	-	986.2	203.1	51.9	31.1	21.8	9.3	6.0	2.1

그룹명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Visegrad	8.9	6.6	3.1	3.5	5.1	2.6	3.1	4.0	5.3	2.7
CIS	33.2	17.5	9.8	10.2	9.1	9.0	7.7	10.3	18.8	5.1
ASEAN	5.6	7.0	18.7	14.1	6.7	7.8	10.0	13.9	20.6	1.9
SEEC	18.7	15.0	12.0	6.0	6.8	5.5	5.4	5.4	7.9	3.5
Yugoslavia	22.8	28.1	7.7	4.5	4.1	5.6	4.9	3.5	8.1	2.3
Baltic	2.6	3.2	1.9	1.0	3.5	4.5	4.9	7.5	12.2	2.6

그룹명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Visegrad	2.5	3.5	4.0	1.4	0.0	-0.2	-0.0	2.0	2.3	2.8	2.9
CIS	7.0	14.3	10.7	7.3	7.3	7.0	6.2	5.6	3.4	3.9	4.2
ASEAN	6.7	9.2	4.4	5.4	4.3	3.1	3.6	3.0	3.7	5.0	4.2
SEEC	1.4	4.5	2.8	2.3	0.4	0.9	-0.9	1.8	3.2	2.8	2.0
Yugoslavia	2.2	4.4	3.8	2.8	0.0	0.1	-0.4	1.7	1.8	1.0	0.3
Baltic	1.1	4.5	3.1	1.3	0.2	-0.4	0.4	3.4	2.9	2.5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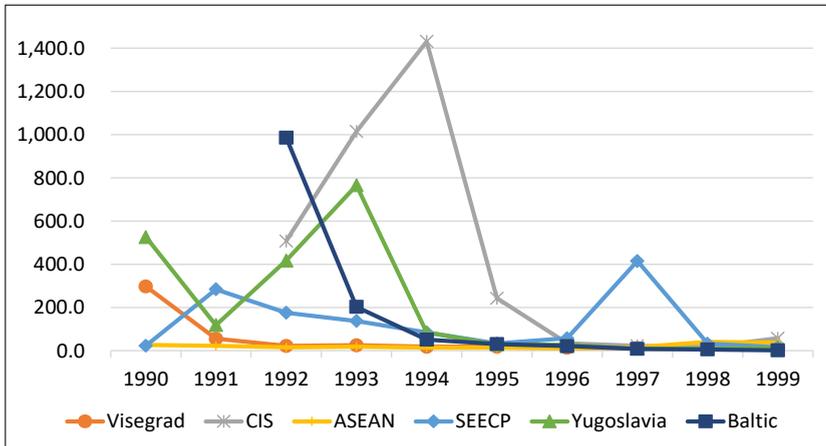
주: 소비자물가상승률 = (당해년도 연간소비자물가지수 ÷ 직전 연간소비자물가지수) - 1) × 100

자료: Inflation, consumer prices (annual %) [Website]. (n.d).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에서 2021.09.14. 인출한 자료로 저자 작성.

[그림 6-15] 그룹별 소비자물가상승률(1990~1999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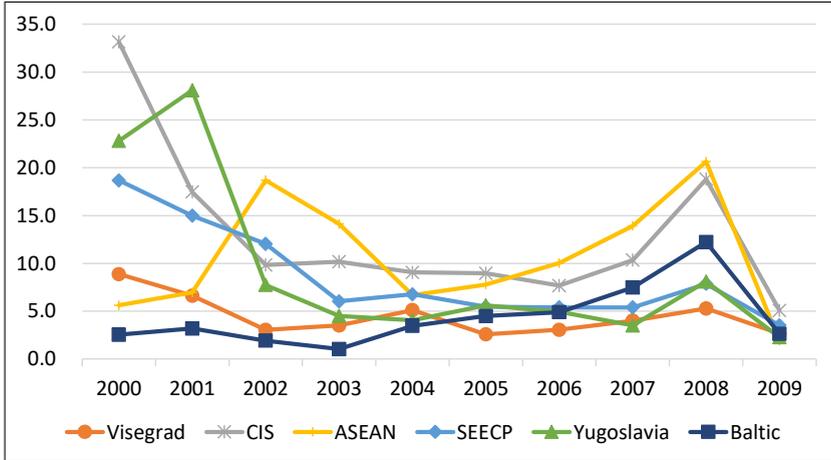
주: 소비자물가상승률 = (당해년도 연간소비자물가지수 ÷ 직전 연간소비자물가지수) - 1) × 100

자료: Inflation, consumer prices (annual %) [Website]. (n.d).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에서 2021.09.14. 인출한 자료로 저자 작성.

[그림 6-16] 그룹별 소비자물가상승률(2000~200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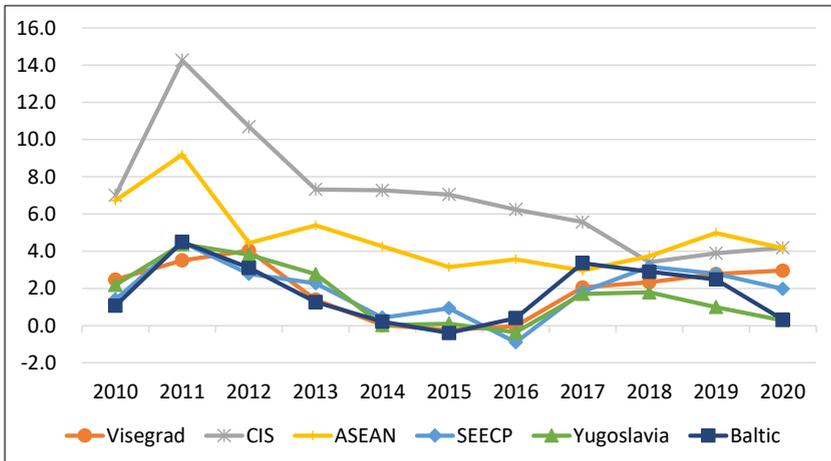
(단위: %)



주: 소비자물가상승률 =  $(\text{당해년도 연간소비자물가지수} \div \text{직전 연간소비자물가지수} - 1) \times 100$   
 자료: Inflation, consumer prices (annual %) [Website]. (n.d).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에서 2021.09.14. 인출한 자료로 저자 작성.

[그림 6-17] 그룹별 소비자물가상승률(2010~2020년)

(단위: %)



주: 소비자물가상승률 =  $(\text{당해년도 연간소비자물가지수} \div \text{직전 연간소비자물가지수} - 1) \times 100$   
 자료: Inflation, consumer prices (annual %) [Website]. (n.d).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에서 2021.09.14. 인출한 자료로 저자 작성.

## 7. 지하경제

지하경제(underground economy)란 공식 GDP에 포함되지 않는 경제활동으로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밀수, 마약 거래 등 행위 자체가 불법인 활동이다. 둘째, 수리공을 부르지 않고 직접 짐수리를 하는 등 시장 거래를 통하지 않는 활동이다. 셋째, 합법적인 경제활동을 하면서도 조세나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소득 탈루, 위장 계약 등을 통해 거래를 은폐하거나 축소해서 신고하는 것이다. 광범위한 개념의 지하경제는 위 세 가지 경제활동을 모두 포함하지만, 우리 정부가 '양성화'하고자 하는 지하경제의 개념은 주로 셋째 경우를 의미한다.

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가 큰 그룹은 '독립국가연합 > 아세안 > 남동유럽 > 유고연방 > 발틱 > 비셰그라드'순으로, 발틱의 경우 GDP가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지하경제 규모가 작은 것은 발틱의 지하경제가 비교적 가장 양성화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6-17〉 그룹별 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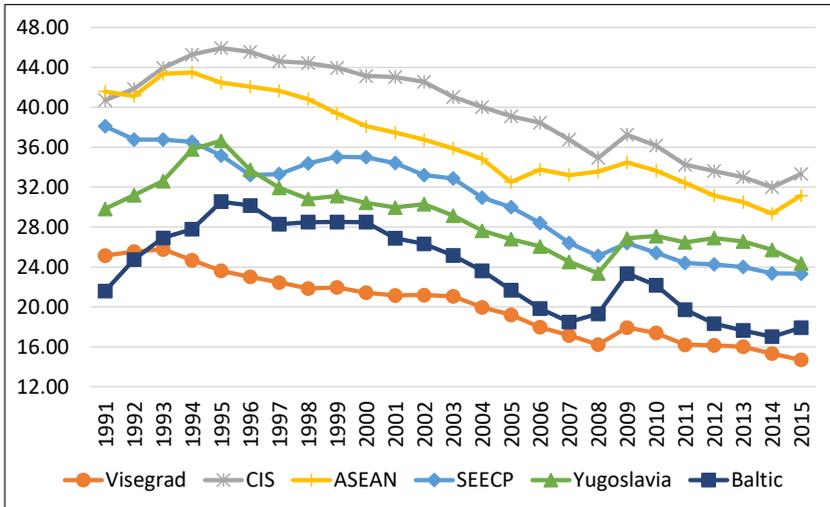
그룹명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Visegrad	25.15	25.55	25.78	24.69	23.61	23.02	22.46	21.85
CIS	40.71	41.86	43.95	45.29	45.94	45.56	44.61	44.45
ASEAN	41.59	41.13	43.35	43.50	42.48	42.07	41.66	40.82
SEEC	38.11	36.77	36.77	36.54	35.17	33.21	33.32	34.39
Yugoslavia	29.83	31.21	32.61	35.79	36.65	33.73	31.95	30.83
Baltic	21.59	24.75	26.93	27.78	30.55	30.17	28.29	28.50
그룹명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Visegrad	21.96	21.43	21.16	21.18	21.07	19.96	19.20	17.97
CIS	43.98	43.15	43.03	42.55	41.05	40.03	39.11	38.46
ASEAN	39.39	38.13	37.49	36.76	35.89	34.85	32.51	33.76
SEEC	35.03	35.00	34.43	33.21	32.88	30.96	30.00	28.41
Yugoslavia	31.12	30.43	29.97	30.30	29.16	27.64	26.79	26.07
Baltic	28.51	28.50	26.88	26.32	25.16	23.63	21.69	19.84

그룹명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Visegrad	17.15	16.23	17.93	17.39	16.21	16.15	16.01	15.32	14.70
CIS	36.78	34.93	37.26	36.17	34.25	33.61	33.02	32.00	33.32
ASEAN	33.20	33.57	34.48	33.66	32.43	31.16	30.51	29.35	31.16
SEEC	26.42	25.11	26.41	25.43	24.40	24.26	24.01	23.37	23.33
Yugoslavia	24.52	23.37	26.88	27.11	26.47	26.91	26.56	25.72	24.35
Baltic	18.49	19.32	23.35	22.18	19.73	18.33	17.65	17.02	17.92

자료: Medina, L., & Schneider, M. F. (2018). *Shadow economies around the world: what did we learn over the last 20 years?* International Monetary Fund. pp.61-76을 토대로 재구성

[그림 6-18] 그룹별 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

(단위: %)



자료: Medina, L., & Schneider, M. F. (2018). *Shadow economies around the world: what did we learn over the last 20 years?* International Monetary Fund. pp.61-76을 토대로 재구성

### 8. 경제활동인구 및 참가율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 및 구직을 하고 있는 경제활동인구는 ‘아세안 > 독립국가연합 > 비세그라드 > 남동유럽 > 유고연방 > 발틱’ 순으로 많았다. 아세안의 경제활동인구가 큰 폭으로 늘어나는 반면, 그 외에 나머지 그룹들은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해 점차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표 6-18〉 그룹별 경제활동인구(전체)

(단위: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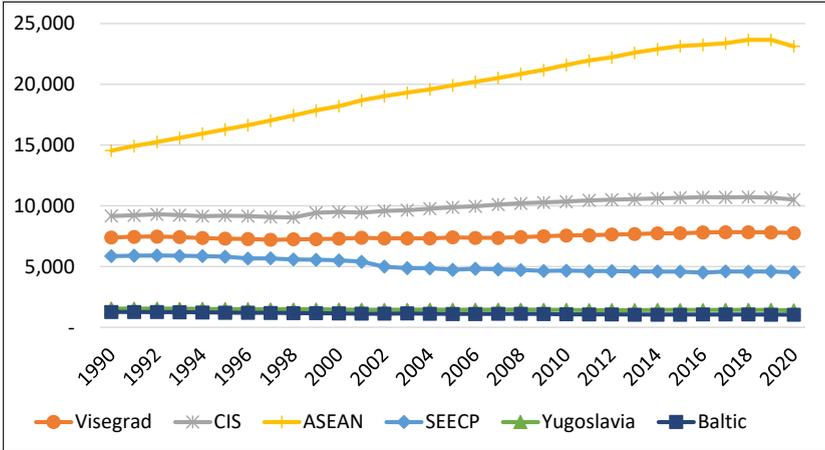
그룹명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Visegrad	7,392	7,455	7,472	7,425	7,357	7,304	7,271	7,215	7,245	7,260	
CIS	9,170	9,217	9,304	9,234	9,156	9,186	9,162	9,081	9,050	9,423	
ASEAN	14,552	14,918	15,245	15,579	15,933	16,286	16,634	17,024	17,440	17,846	
SEECF	5,868	5,895	5,916	5,889	5,864	5,820	5,675	5,680	5,595	5,564	
Yugoslavia	1,546	1,550	1,545	1,540	1,534	1,509	1,495	1,487	1,484	1,483	
Baltic	1,273	1,266	1,261	1,250	1,236	1,220	1,206	1,198	1,179	1,169	
그룹명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Visegrad	7,305	7,372	7,322	7,327	7,317	7,412	7,368	7,363	7,427	7,503	
CIS	9,501	9,443	9,584	9,640	9,764	9,885	9,965	10,104	10,210	10,276	
ASEAN	18,199	18,677	19,014	19,307	19,585	19,908	20,205	20,516	20,849	21,173	
SEECF	5,513	5,409	5,000	4,872	4,861	4,736	4,817	4,777	4,719	4,651	
Yugoslavia	1,473	1,457	1,453	1,451	1,464	1,462	1,457	1,468	1,467	1,453	
Baltic	1,151	1,135	1,133	1,153	1,124	1,107	1,108	1,113	1,120	1,106	
그룹명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Visegrad	7,565	7,585	7,645	7,679	7,741	7,752	7,804	7,835	7,832	7,815	7,760
CIS	10,351	10,449	10,499	10,544	10,606	10,667	10,713	10,699	10,714	10,680	10,515
ASEAN	21,588	21,948	22,218	22,596	22,884	23,141	23,240	23,363	23,656	23,652	23,122
SEECF	4,670	4,628	4,628	4,595	4,605	4,584	4,515	4,604	4,594	4,605	4,536
Yugoslavia	1,441	1,425	1,424	1,424	1,440	1,431	1,431	1,438	1,438	1,440	1,405
Baltic	1,084	1,073	1,070	1,058	1,054	1,055	1,062	1,059	1,060	1,053	1,049

주: 경제활동인구란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 기간 동안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기 위하여 노동을 제공한 사람과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취업자와 실업자를 포함함  
 자료: Labor force population rate, total [Website]. (n.d.)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에서 2021.09.14. 인출한 자료로 저자 작성.

[그림 6-19] 그룹별 경제활동인구수(전체)

(단위: 천 명)



주: 경제활동인구란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 기간 동안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기 위하여 노동을 제공한 사람과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취업자와 실업자를 포함함  
 자료: Labor force population rate, total [Website]. (n.d).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에서 2021.09.14. 인출한 자료로 저자 작성.

그룹별 경제활동인구 중 남성의 비율을 살펴보면, 유고연방과 독립국가연합이 가장 높고 2009년 세계 금융 위기를 기점으로 독립국가연합 연합은 남성의 비중이 늘어나고 유고연방은 줄어드는 추세이다. 이는 세계 금융 위기 이후 가계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남성 중심의 소비가 가구에서 맞벌이 가구로 바뀌고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비율이 높아졌음을 시사한다. 유고연방과 독립국가연합 다음으로 남성 경제활동인구가 높은 그룹은 ‘남동유럽 > 비셰그라드 > 아세안 > 발틱’ 순으로 나타났다.

〈표 6-19〉 그룹별 경제활동인구 성비(남성)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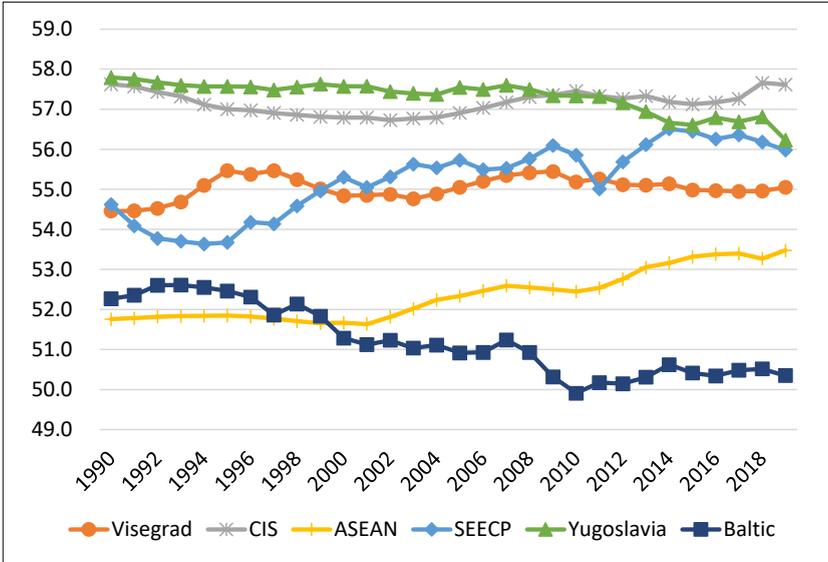
그룹명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Visegrad	54.5	54.5	54.5	54.7	55.1	55.5	55.4	55.5	55.2	55.0
CIS	57.6	57.6	57.4	57.3	57.1	57.0	57.0	56.9	56.9	56.8
ASEAN	51.8	51.8	51.8	51.8	51.8	51.8	51.8	51.8	51.7	51.7
SEEC	54.6	54.1	53.8	53.7	53.6	53.7	54.2	54.1	54.6	55.0
Yugoslavia	57.8	57.8	57.7	57.6	57.6	57.6	57.6	57.5	57.6	57.6
Baltic	52.3	52.4	52.6	52.6	52.6	52.5	52.3	51.9	52.1	51.8
그룹명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Visegrad	54.8	54.9	54.9	54.8	54.9	55.1	55.2	55.3	55.4	55.4
CIS	56.8	56.8	56.7	56.8	56.8	56.9	57.0	57.2	57.3	57.4
ASEAN	51.7	51.6	51.8	52.0	52.2	52.3	52.5	52.6	52.5	52.5
SEEC	55.3	55.0	55.3	55.6	55.5	55.7	55.5	55.5	55.8	56.1
Yugoslavia	57.6	57.6	57.4	57.4	57.4	57.5	57.5	57.6	57.5	57.3
Baltic	51.3	51.1	51.2	51.0	51.1	50.9	50.9	51.2	50.9	50.3
그룹명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Visegrad	55.2	55.3	55.1	55.1	55.1	55.0	55.0	54.9	55.0	55.1
CIS	57.5	57.3	57.3	57.3	57.2	57.1	57.2	57.3	57.7	57.6
ASEAN	52.4	52.5	52.8	53.1	53.2	53.3	53.4	53.4	53.3	53.5
SEEC	55.9	55.0	55.7	56.1	56.5	56.4	56.3	56.4	56.2	56.0
Yugoslavia	57.3	57.3	57.2	56.9	56.7	56.6	56.8	56.7	56.8	56.2
Baltic	49.9	50.2	50.1	50.3	50.6	50.4	50.3	50.5	50.5	50.3

주: 경제활동인구란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 기간 동안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기 위하여 노동을 제공한 사람과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취업자와 실업자를 포함함  
 자료: Labor force, total [Website]. (n.d.).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에서 2021.09.14. 인출한 자료로 저자 작성.

Labor force, female (% of total labor force) [Website]. (n.d.).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에서 2021.09.14. 인출한 자료로 저자 작성.

[그림 6-20] 그룹별 경제활동인구 성비(남성)

(단위: %)



주: 경제활동인구란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 기간 동안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기 위하여 노동을 제공한 사람과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취업자와 실업자를 포함함  
 자료: Labor force, total [Website]. (n.d.).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에서 2021.09.14. 인출한 자료로 저자 작성.  
 Labor force, female (% of total labor force) [Website]. (n.d.).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에서 2021.09.14. 인출한 자료로 저자 작성.

그룹별 경제활동인구 중 여성의 비율을 살펴보면, 남성과 반대로 ‘발틱 > 아세안 > 비셰그라드 > 남동유럽 > 유고연방 > 독립국가연합’ 순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인구가 많다.

경제활동참가인구가 많을수록 인구 1인당 소득수준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발틱 그룹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인구가 가장 많은 부분은 앞서 1인당 GDP가 높은 이유를 짐작케 한다.

$$\text{인구 1인당 GDP} = \text{근로자 1인당 GDP} \times \frac{\text{총 근로자 수}}{\text{총 인구 수}}$$

〈표 6-20〉 그룹별 경제활동인구 성비(여성)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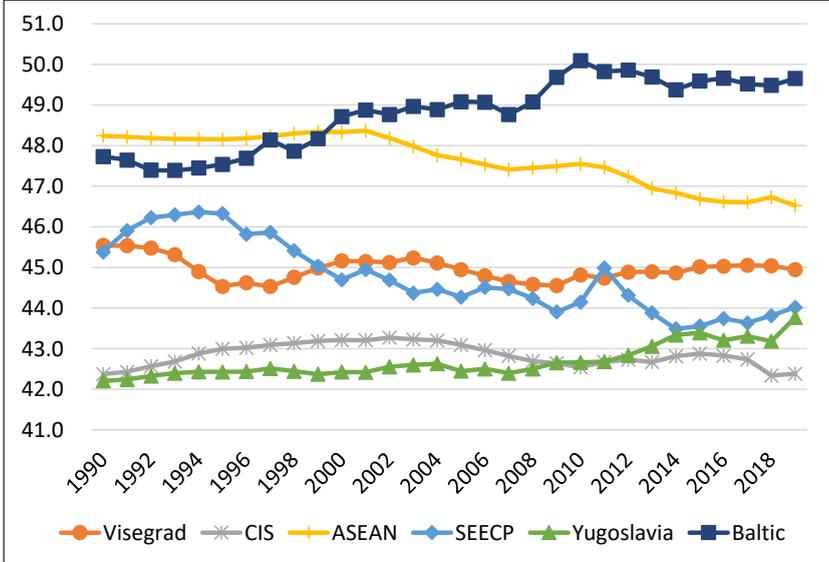
그룹명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Visegrad	45.5	45.5	45.5	45.3	44.9	44.5	44.6	44.5	44.8	45.0
CIS	42.4	42.4	42.6	42.7	42.9	43.0	43.0	43.1	43.1	43.2
ASEAN	48.2	48.2	48.2	48.2	48.2	48.2	48.2	48.2	48.3	48.3
SEEC	45.4	45.9	46.2	46.3	46.4	46.3	45.8	45.9	45.4	45.0
Yugoslavia	42.2	42.2	42.3	42.4	42.4	42.4	42.4	42.5	42.4	42.4
Baltic	47.7	47.6	47.4	47.4	47.4	47.5	47.7	48.1	47.9	48.2
그룹명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Visegrad	45.2	45.1	45.1	45.2	45.1	44.9	44.8	44.7	44.6	44.6
CIS	43.2	43.2	43.3	43.2	43.2	43.1	43.0	42.8	42.7	42.6
ASEAN	48.3	48.4	48.2	48.0	47.8	47.7	47.5	47.4	47.5	47.5
SEEC	44.7	45.0	44.7	44.4	44.5	44.3	44.5	44.5	44.2	43.9
Yugoslavia	42.4	42.4	42.6	42.6	42.6	42.5	42.5	42.4	42.5	42.7
Baltic	48.7	48.9	48.8	49.0	48.9	49.1	49.1	48.8	49.1	49.7
그룹명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Visegrad	44.8	44.7	44.9	44.9	44.9	45.0	45.0	45.1	45.0	44.9
CIS	42.5	42.7	42.7	42.7	42.8	42.9	42.8	42.7	42.3	42.4
ASEAN	47.6	47.5	47.2	46.9	46.8	46.7	46.6	46.6	46.7	46.5
SEEC	44.1	45.0	44.3	43.9	43.5	43.6	43.7	43.6	43.8	44.0
Yugoslavia	42.7	42.7	42.8	43.1	43.3	43.4	43.2	43.3	43.2	43.8
Baltic	50.1	49.8	49.9	49.7	49.4	49.6	49.7	49.5	49.5	49.7

주: 경제활동인구란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 기간 동안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기 위하여 노동력을 제공한 사람과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취업자와 실업자를 포함함  
 자료: Labor force, total [Website]. (n.d.).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에서 2021.09.14. 인출한 자료로 저자 작성.

Labor force, female (% of total labor force) [Website]. (n.d.).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에서 2021.09.14. 인출한 자료로 저자 작성.

[그림 6-21] 그룹별 경제활동인구 성비(여성)

(단위: %)



주: 경제활동인구란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 기간 동안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기 위하여 노동을 제공한 사람과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취업자와 실업자를 포함함  
 자료: Labor force, total [Website]. (n.d.).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에서 2021.09.14. 인출한 자료로 저자 작성.

Labor force, female (% of total labor force) [Website]. (n.d.).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에서 2021.09.14. 인출한 자료로 저자 작성.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 및 구직을 하고 있는 경제활동참가율은 ‘아세안 > 발틱 > 독립국가연합 > 비셰그라드 > 남동유럽 > 유고연방’ 순으로 많았다. 발틱이 인구수가 적어 경제활동인구수도 하위권임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참가율이 상위권이라는 점은 1인당 GDP 및 1인당 GNI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이유를 나타낸다.

〈표 6-21〉 그룹별 경제활동참가율(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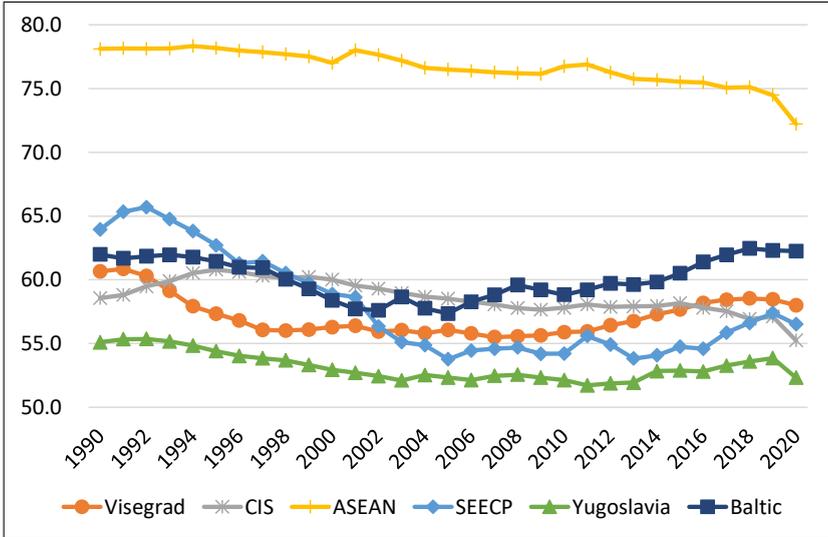
(단위: %)

그룹명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Visegrad	60.7	60.9	60.3	59.1	57.9	57.3	56.8	56.1	56.0	56.1	
CIS	58.6	58.8	59.5	59.9	60.5	60.8	60.6	60.3	60.1	60.2	
ASEAN	78.1	78.2	78.1	78.1	78.3	78.2	78.0	77.9	77.7	77.5	
SEEC	63.9	65.3	65.7	64.8	63.8	62.7	61.3	61.5	60.5	59.7	
Yugoslavia	55.1	55.3	55.4	55.2	54.8	54.4	54.0	53.8	53.7	53.3	
Baltic	62.0	61.7	61.8	62.0	61.8	61.4	61.0	60.9	60.1	59.3	
그룹명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Visegrad	56.3	56.4	55.9	56.0	55.8	56.1	55.8	55.5	55.6	55.6	
CIS	60.0	59.5	59.3	59.0	58.7	58.5	58.3	58.1	57.8	57.7	
ASEAN	77.0	78.0	77.7	77.2	76.6	76.5	76.4	76.3	76.2	76.1	
SEEC	58.9	58.6	56.3	55.1	54.9	53.8	54.4	54.6	54.7	54.2	
Yugoslavia	52.9	52.7	52.4	52.1	52.5	52.3	52.1	52.5	52.6	52.3	
Baltic	58.4	57.7	57.6	58.7	57.8	57.4	58.3	58.8	59.6	59.2	
그룹명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Visegrad	55.9	55.9	56.4	56.8	57.3	57.7	58.2	58.4	58.5	58.5	58.0
CIS	57.8	58.1	57.9	57.9	57.9	58.2	57.8	57.5	56.9	57.1	55.2
ASEAN	76.8	76.9	76.3	75.8	75.7	75.5	75.5	75.1	75.1	74.5	72.2
SEEC	54.2	55.6	54.9	53.8	54.1	54.7	54.6	55.9	56.6	57.4	56.5
Yugoslavia	52.1	51.7	51.9	51.9	52.8	52.9	52.8	53.3	53.6	53.9	52.3
Baltic	58.8	59.2	59.7	59.6	59.8	60.5	61.4	62.0	62.5	62.3	62.3

주: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15세 이상 인구) × 100  
 자료: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total (% of total population ages 15+) (modeled ILO estimate) [Website]. (n.d.).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에서 2021.09.14. 인출한 자료로 저자 작성.

[그림 6-22] 그룹별 경제활동참가율(전체)

(단위: %)



주: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15세 이상 인구) × 100

자료: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total (% of total population ages 15+) (modeled ILO estimate) [Website]. (n.d.).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에서 2021.09.14. 인출한 자료로 저자 작성.

만 15세 이상 전체 남성인구 중 남성 경제활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아세안 > 독립국가연합 > 발틱 > 비셰그라드 > 남동유럽 > 유고 연방’ 순으로 많았다. 전반적으로 2000년대 초반까지는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줄어들다가 2009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다시 높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6-22〉 그룹별 남성 경제활동참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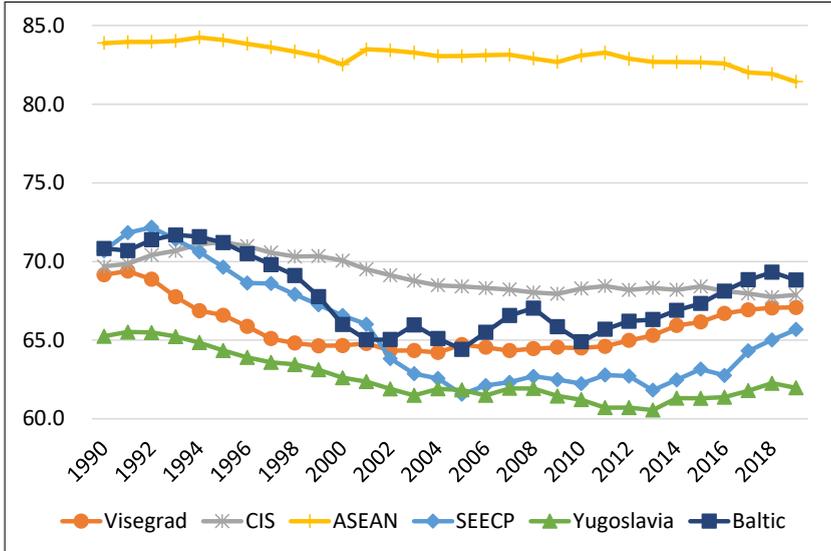
(단위: %)

그룹명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Visegrad	69.2	69.4	68.9	67.8	66.9	66.6	65.9	65.1	64.8	64.6
CIS	69.7	69.9	70.4	70.7	71.1	71.2	71.0	70.6	70.3	70.3
ASEAN	83.9	84.0	84.0	84.0	84.2	84.1	83.8	83.6	83.3	83.0
SEEC	70.7	71.8	72.2	71.4	70.6	69.6	68.6	68.6	67.9	67.2
Yugoslavia	65.2	65.5	65.5	65.2	64.8	64.3	63.9	63.6	63.4	63.1
Baltic	70.8	70.7	71.4	71.7	71.6	71.2	70.5	69.8	69.1	67.8
그룹명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Visegrad	64.7	64.8	64.3	64.3	64.2	64.7	64.5	64.3	64.5	64.5
CIS	70.1	69.5	69.1	68.8	68.5	68.4	68.3	68.2	68.0	67.9
ASEAN	82.5	83.5	83.4	83.3	83.1	83.1	83.1	83.1	82.9	82.7
SEEC	66.6	66.0	63.8	62.9	62.6	61.6	62.1	62.3	62.7	62.5
Yugoslavia	62.6	62.4	61.9	61.5	61.9	61.8	61.5	61.9	61.9	61.5
Baltic	66.0	65.0	65.0	66.0	65.1	64.4	65.5	66.6	67.0	65.9
그룹명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Visegrad	64.5	64.6	65.0	65.3	65.9	66.2	66.7	66.9	67.0	67.1
CIS	68.3	68.4	68.2	68.3	68.2	68.4	68.1	68.0	67.7	67.9
ASEAN	83.1	83.3	82.9	82.7	82.7	82.7	82.6	82.0	81.9	81.4
SEEC	62.2	62.8	62.7	61.8	62.5	63.2	62.8	64.3	65.0	65.7
Yugoslavia	61.2	60.7	60.7	60.6	61.3	61.3	61.4	61.8	62.3	62.0
Baltic	64.9	65.7	66.2	66.3	66.9	67.3	68.1	68.8	69.3	68.8

주: 경제활동참가율의 성비는 전체 경제활동참가인구의 성비가 아닌 각 성별의 만 15세 인구 중 경제활동참가인구를 측정하는 것임(ex. 만 15세 이상의 남성 중 경제활동참가 남성의 비율)  
 자료: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male (% of male population ages 15+) (modeled ILO estimate) [Website]. (n.d.).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에서 2021.09.14. 인출한 자료로 저자 작성.

[그림 6-23] 그룹별 남성 경제활동참가율

(단위: %)



주: 경제활동참가율의 성비는 전체 경제활동참가인구의 성비가 아닌 각 성별의 만 15세 인구 중 경제활동참가인구를 측정하는 것임(ex. 만 15세 이상의 남성 중 경제활동참가 남성의 비율)  
 자료: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male (% of male population ages 15+) (modeled ILO estimate) [Website]. (n.d.).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에서 2021.09.14. 인출한 자료로 저자 작성.

만 15세 이상 전체 여성인구 중 여성 경제활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아세안 > 발틱 > 남동유럽≠, 독립국가연합 > 남동유럽 > 유고연방’ 순으로 많았다.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2000년대 중반까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아지다가 2009년부터 다시 높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6-23〉 그룹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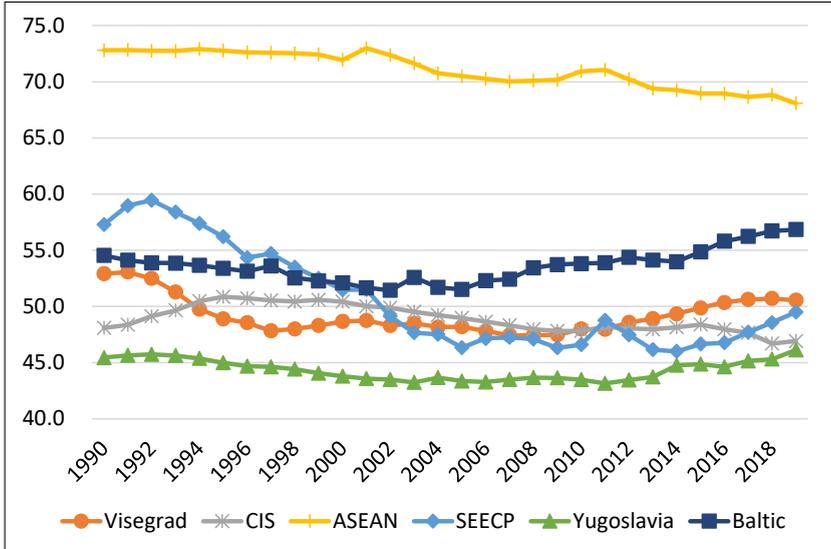
(단위: %)

그룹명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Visegrad	52.9	53.1	52.5	51.3	49.8	48.9	48.6	47.8	48.0	48.3
CIS	48.1	48.4	49.1	49.7	50.5	50.9	50.7	50.5	50.4	50.6
ASEAN	72.8	72.8	72.8	72.7	72.9	72.8	72.6	72.6	72.5	72.4
SEEC	57.3	59.0	59.4	58.4	57.4	56.2	54.3	54.7	53.5	52.5
Yugoslavia	45.4	45.6	45.7	45.6	45.4	45.0	44.7	44.6	44.4	44.1
Baltic	54.5	54.1	53.9	53.9	53.7	53.4	53.1	53.6	52.5	52.3
그룹명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Visegrad	48.7	48.7	48.3	48.5	48.2	48.2	47.8	47.4	47.4	47.5
CIS	50.4	50.0	49.9	49.5	49.2	49.0	48.6	48.3	48.0	47.8
ASEAN	72.0	73.0	72.4	71.6	70.8	70.5	70.3	70.0	70.1	70.2
SEEC	51.5	51.5	49.1	47.7	47.5	46.3	47.1	47.2	47.1	46.3
Yugoslavia	43.8	43.6	43.5	43.2	43.7	43.4	43.3	43.5	43.7	43.6
Baltic	52.1	51.7	51.4	52.6	51.7	51.5	52.3	52.4	53.4	53.7
그룹명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Visegrad	48.0	48.0	48.6	48.9	49.3	49.9	50.4	50.6	50.7	50.6
CIS	47.8	48.2	48.0	48.0	48.1	48.4	48.0	47.6	46.7	46.9
ASEAN	70.9	71.1	70.2	69.4	69.3	69.0	68.9	68.7	68.8	68.1
SEEC	46.6	48.8	47.5	46.2	46.0	46.7	46.8	47.7	48.6	49.5
Yugoslavia	43.5	43.2	43.4	43.7	44.8	44.9	44.6	45.1	45.3	46.1
Baltic	53.8	53.9	54.4	54.1	54.0	54.9	55.8	56.2	56.7	56.8

주: 경제활동참가율의 성비는 전체 경제활동참가인구의 성비가 아닌 각 성별의 만 15세 인구 중 경제활동참가인구를 측정하는 것임(ex. 만 15세 이상의 여성 중 경제활동참가 여성의 비율)  
 자료: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female (% of female population ages 15+) (modeled ILO estimate) [Website]. (n.d.).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에서 2021.09.14. 인출한 자료로 저자 작성.

[그림 6-24] 그룹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단위: %)



주: 경제활동참가율의 성비는 전체 경제활동참가인구의 성비가 아닌 각 성별의 만 15세 인구 중 경제활동참가인구를 측정하는 것임(ex. 만 15세 이상의 여성 중 경제활동참가 여성의 비율)  
 자료: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female (% of female population ages 15+) (modeled ILO estimate) [Website]. (n.d.).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에서 2021.09.14. 인출한 자료로 저자 작성.

## 9. 고용률

생산가능인구(만 15세 이상 인구) 중 실제 취업하여 근로하고 있는 비율인 고용률을 살펴보면 아세안이 가장 높고, 유고연방이 가장 낮다. 다른 그룹들의 경우 1990년대 후반까지는 고용률이 낮다가 2000년초부터 다시 고용률이 높아지고 있으며 최근 5년간은 ‘발틱 > 비세그라드 > 독립국가연합 > 남동유럽’ 순으로 고용률이 높다.

〈표 6-24〉 그룹별 고용률(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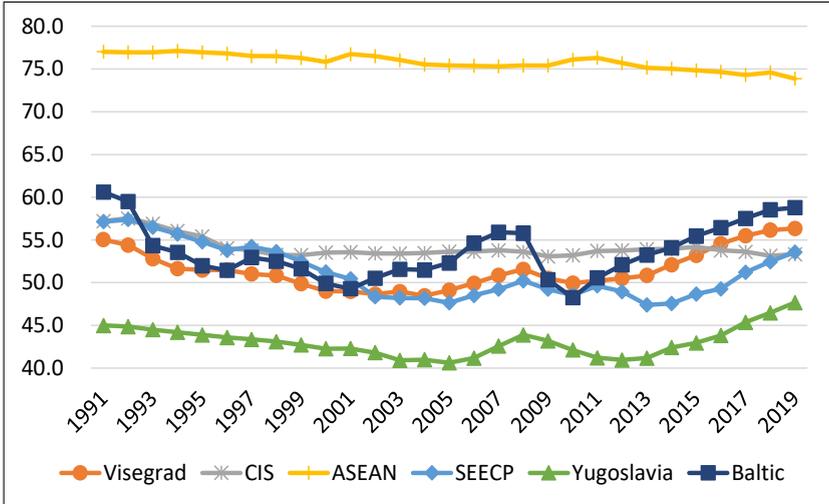
(단위: %)

그룹명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Visegrad	55.0	54.4	52.8	51.6	51.5	51.5	51.0	50.8	49.9	49.0
CIS	57.2	57.5	56.9	56.0	55.4	54.0	53.8	53.3	53.2	53.5
ASEAN	77.0	77.0	76.9	77.1	77.0	76.8	76.5	76.5	76.3	75.8
SEEC	57.1	57.4	56.5	55.7	54.8	53.8	54.2	53.6	52.5	51.3
Yugoslavia	45.0	44.9	44.5	44.2	43.9	43.6	43.4	43.1	42.7	42.3
Baltic	60.6	59.5	54.3	53.6	52.0	51.4	52.9	52.5	51.6	49.9
그룹명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Visegrad	49.0	48.7	49.0	48.5	49.1	49.9	50.9	51.6	50.5	50.0
CIS	53.6	53.4	53.4	53.5	53.6	53.6	53.8	53.6	53.1	53.2
ASEAN	76.7	76.5	76.0	75.5	75.4	75.4	75.3	75.4	75.4	76.1
SEEC	50.5	48.4	48.2	48.2	47.7	48.5	49.2	50.2	49.2	48.6
Yugoslavia	42.3	41.8	40.9	41.0	40.6	41.2	42.6	43.9	43.2	42.1
Baltic	49.3	50.5	51.6	51.5	52.3	54.6	55.9	55.8	50.4	48.2
그룹명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Visegrad	50.2	50.5	50.8	52.1	53.2	54.6	55.5	56.1	56.4	55.5
CIS	53.7	53.8	53.9	54.0	54.2	53.8	53.6	53.1	53.3	51.2
ASEAN	76.3	75.7	75.1	75.0	74.8	74.7	74.3	74.6	73.9	71.3
SEEC	49.6	49.0	47.4	47.6	48.7	49.3	51.2	52.5	53.6	52.3
Yugoslavia	41.2	41.0	41.2	42.4	43.0	43.8	45.4	46.5	47.7	46.1
Baltic	50.6	52.1	53.2	54.1	55.4	56.4	57.5	58.5	58.8	57.5

주: 고용률 = (15세 이상 취업자수 ÷ 15세 이상 인구) × 100  
 자료: Employment to population ratio, 15+, total (%) (modeled ILO estimate) [Website].  
 (n.d.).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에서 2021.09.14. 인출한 자료로 저자 작성.

[그림 6-25] 그룹별 고용률(전체) 비교

(단위: %)



주: 고용률 = (15세 이상 취업자수 ÷ 15세 이상 인구) × 100  
 자료: Employment to population ratio, 15+, total (%) (modeled ILO estimate) [Website].  
 (n.d.).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에서 2021.09.14. 인출한 자료로 저자 작성.

남성의 고용률을 살펴보면 ‘아세안 > 독립국가연합 > 발틱 ≒ 비셰그라드 > 남동유럽 > 유고연방’ 순으로 높다.

[표 6-25] 그룹별 고용률(남성)

(단위: %)

그룹명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Visegrad	62.8	62.1	60.7	59.9	60.1	60.1	59.7	59.3	57.8	56.7
CIS	67.7	67.8	66.9	65.7	64.9	63.4	63.2	62.4	62.4	62.6
ASEAN	82.7	82.8	82.8	83.1	82.9	82.7	82.3	82.1	81.9	81.4
SEEC	62.5	62.8	62.3	61.7	61.0	60.3	60.5	60.1	59.0	57.7
Yugoslavia	54.2	53.9	53.4	53.2	53.1	52.7	52.3	52.0	51.4	51.0
Baltic	69.1	68.2	62.4	61.9	60.1	59.4	60.4	59.6	58.4	55.4

그룹명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Visegrad	56.6	56.3	56.6	56.2	57.3	58.4	59.5	60.3	58.9	57.8
CIS	62.6	62.4	62.2	62.3	62.6	62.7	63.0	63.0	62.5	62.8
ASEAN	82.3	82.3	82.2	82.0	82.0	82.1	82.1	82.0	81.8	82.4
SEEC	56.6	54.6	54.9	54.6	54.4	55.2	56.1	57.5	56.9	55.8
Yugoslavia	51.0	50.2	49.0	49.3	49.0	49.4	50.8	52.1	51.0	49.6
Baltic	54.7	56.5	57.9	57.9	58.5	61.2	63.0	62.5	53.8	5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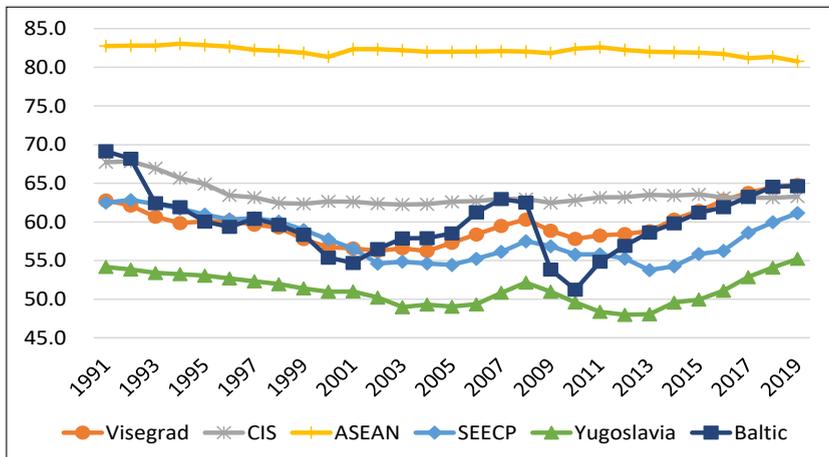
  

그룹명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Visegrad	58.2	58.4	58.8	60.3	61.4	62.8	63.8	64.5	64.8
CIS	63.2	63.2	63.5	63.4	63.6	63.1	63.1	63.1	63.3
ASEAN	82.6	82.3	82.0	82.0	81.9	81.7	81.2	81.4	80.8
SEEC	55.8	55.3	53.8	54.3	55.9	56.3	58.6	60.0	61.1
Yugoslavia	48.4	48.0	48.1	49.6	50.0	51.1	52.9	54.1	55.2
Baltic	54.9	56.9	58.6	59.8	61.2	61.9	63.2	64.6	64.6

주: 남성 고용률 = (15세 이상 남성 취업자수 ÷ 15세 이상 남성 인구) × 100  
 자료: Employment to population ratio, 15+, male (%) (modeled ILO estimate) [Website].  
 (n.d.).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에서 2021.09.14. 인출한 자료로 저자 작성.

[그림 6-26] 그룹별 고용률(남성)

(단위: %)



주: 남성 고용률 = (15세 이상 남성 취업자수 ÷ 15세 이상 남성 인구) × 100  
 자료: Employment to population ratio, 15+, male (%) (modeled ILO estimate) [Website].  
 (n.d.).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에서 2021.09.14. 인출한 자료로 저자 작성.

여성의 고용률을 살펴보면 ‘아세안 > 발틱 > 독립국가연합 > 비셰그라드, 남동유럽 > 유고연방’ 순으로 높다.

〈표 6-26〉 그룹별 고용률(여성)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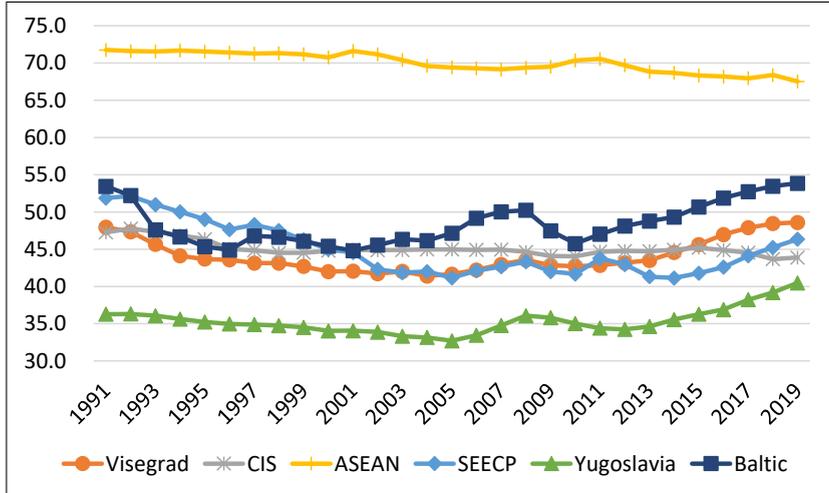
그룹명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Visegrad	47.9	47.4	45.6	44.1	43.7	43.6	43.1	43.1	42.7	42.0
CIS	47.3	47.8	47.3	46.9	46.4	45.0	44.8	44.5	44.5	44.8
ASEAN	71.8	71.6	71.5	71.7	71.5	71.4	71.3	71.3	71.2	70.8
SEECF	51.9	52.1	51.0	50.0	49.0	47.6	48.3	47.5	46.3	45.0
Yugoslavia	36.3	36.3	36.1	35.6	35.2	35.0	34.9	34.7	34.5	34.0
Baltic	53.4	52.2	47.6	46.6	45.3	44.9	46.8	46.6	46.1	45.4
그룹명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Visegrad	42.1	41.7	42.0	41.4	41.7	42.2	43.0	43.6	42.8	42.7
CIS	44.9	44.9	44.9	45.0	45.0	44.9	44.9	44.6	44.1	44.1
ASEAN	71.6	71.2	70.4	69.6	69.4	69.3	69.1	69.4	69.5	70.3
SEECF	44.5	42.3	41.8	42.0	41.2	42.1	42.7	43.3	42.0	41.7
Yugoslavia	34.1	33.9	33.3	33.2	32.7	33.4	34.8	36.1	35.8	35.0
Baltic	44.8	45.6	46.3	46.2	47.2	49.2	50.0	50.2	47.5	45.8
그룹명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Visegrad	42.8	43.2	43.5	44.6	45.6	47.0	47.9	48.5	48.6	
CIS	44.7	44.8	44.7	44.9	45.2	44.9	44.5	43.7	43.9	
ASEAN	70.5	69.7	68.8	68.7	68.3	68.2	68.0	68.4	67.5	
SEECF	43.8	43.0	41.3	41.1	41.8	42.6	44.1	45.3	46.4	
Yugoslavia	34.4	34.3	34.6	35.6	36.3	36.9	38.2	39.2	40.5	
Baltic	47.0	48.1	48.8	49.3	50.7	51.9	52.7	53.5	53.9	

주: 여성 고용률 = (15세 이상 여성 취업자수 ÷ 15세 이상 여성인구) × 100

자료: Employment to population ratio, 15+, female (%) (modeled ILO estimate) [Website]. (n.d.).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에서 2021.09.14. 인출한 자료로 저자 작성.

[그림 6-27] 그룹별 고용률(여성)

(단위: %)



주: 여성 고용률 = (15세 이상 여성 취업자수 ÷ 15세 이상 여성인구) × 100  
 자료: Employment to population ratio, 15+, female (%) (modeled ILO estimate) [Website]. (n.d.).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에서 2021.09.14. 인출한 자료로 저자 작성.

### 가. 실업률

만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 비율인 실업률을 살펴보면 취업률과 반대로 유고연방이 가장 높고, 아세안이 가장 낮다. 다른 그룹들의 경우 1990년대 후반까지는 실업률이 높다가 2000년초부터 실업률이 낮아지고 있으며 최근 5년간은 ‘남동유럽 > 발틱 > 독립국가연합 > 비셰그라드’ 순으로 실업률이 낮다. 특히 발틱의 경우 2009년 세계 금융 위기의 영향으로 2008년 6.3% 이었던 실업률이 2009년 15%, 2010년 2010년 18%로 2~3배로 늘어나 그야말로 경제악화의 직격탄을 맞았었다.

〈표 6-27〉 그룹별 실업률(전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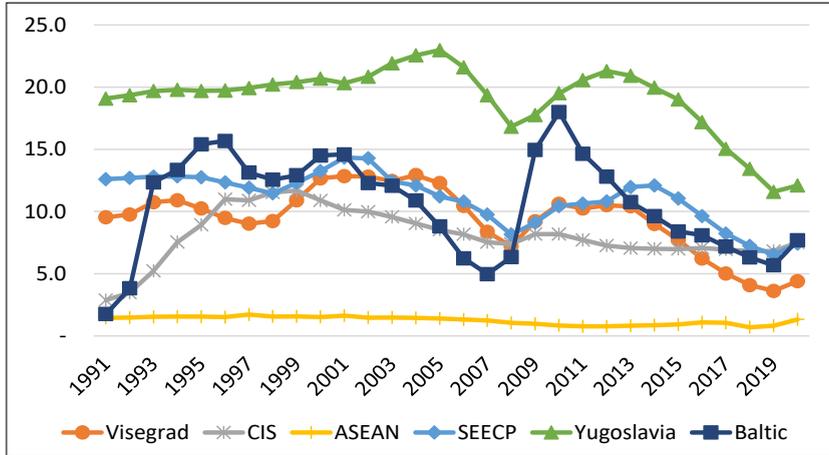
그룹명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Visegrad	9.5	9.8	10.8	10.9	10.3	9.5	9.0	9.2	10.9	12.7
CIS	2.9	3.5	5.2	7.5	8.9	11.0	10.9	11.5	11.7	10.9
ASEAN	1.5	1.5	1.5	1.5	1.5	1.5	1.7	1.6	1.6	1.5
SEEC	12.6	12.7	12.8	12.8	12.8	12.3	11.9	11.5	12.3	13.3
Yugoslavia	19.1	19.4	19.7	19.8	19.7	19.7	19.9	20.2	20.4	20.7
Baltic	1.8	3.8	12.3	13.4	15.4	15.7	13.1	12.6	12.9	14.5
그룹명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Visegrad	12.9	12.8	12.5	12.9	12.3	10.5	8.4	7.2	9.2	10.6
CIS	10.1	10.0	9.6	9.0	8.5	8.2	7.5	7.4	8.2	8.2
ASEAN	1.6	1.5	1.5	1.4	1.4	1.3	1.3	1.0	1.0	0.8
SEEC	14.3	14.3	12.4	12.1	11.2	10.8	9.8	8.2	9.1	10.4
Yugoslavia	20.3	20.8	21.9	22.6	23.0	21.6	19.4	16.8	17.8	19.5
Baltic	14.6	12.3	12.1	10.9	8.8	6.2	5.0	6.3	15.0	18.0
그룹명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Visegrad	10.2	10.5	10.4	9.0	7.7	6.2	5.0	4.1	3.6	4.4
CIS	7.7	7.3	7.1	7.0	7.0	7.1	7.0	6.8	6.8	7.5
ASEAN	0.8	0.8	0.8	0.9	0.9	1.1	1.1	0.7	0.8	1.3
SEEC	10.6	10.8	12.0	12.1	11.0	9.6	8.2	7.2	6.5	7.4
Yugoslavia	20.6	21.3	20.9	20.0	19.0	17.2	15.0	13.4	11.6	12.1
Baltic	14.6	12.8	10.8	9.6	8.4	8.1	7.2	6.3	5.7	7.7

주: 실업률 = (만 15세 이상 실업자수 ÷ 만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 100

자료: Unemployment, total (% of total labor force) (modeled ILO estimate) [Website].  
(n.d.).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에서 2021.09.14. 인출한 자료로 저자 작성.

[그림 6-28] 그룹별 실업률(전체)

(단위: %)



주: 실업률 = (만 15세 이상 실업자수 ÷ 만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 100  
 자료: Unemployment, total (% of total labor force) (modeled ILO estimate) [Website].  
 (n.d.).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에서 2021.09.14. 인출한 자료로 저자 작성.

남성 실업률을 살펴보면, ‘유고연방 > 발틱 > 남동유럽 > 비셰그라드 > 독립국가연합 > 아세안’ 순으로 높다. 2009년에는 발틱의 남성 실업률이 18.2%로 유고연방의 남성 실업률(16.9%) 보다 높으나 이후 빠르게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6-28> 그룹별 실업률(남성)

(단위: %)

그룹명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Visegrad	9.6	9.8	10.6	10.6	9.9	8.9	8.5	8.6	10.6	12.1
CIS	3.0	3.7	5.3	7.7	8.9	10.7	10.5	11.3	11.4	10.6
ASEAN	1.5	1.4	1.5	1.4	1.4	1.4	1.7	1.5	1.4	1.4
SEECP	13.0	13.0	12.9	12.7	12.6	12.2	11.9	11.6	12.4	13.5
Yugoslavia	17.5	18.0	18.3	18.0	17.7	17.7	17.9	18.3	18.8	18.8
Baltic	2.2	4.5	13.0	13.5	15.7	15.8	13.5	13.7	13.9	16.1

그룹명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Visegrad	12.5	12.4	12.0	12.3	11.4	9.5	7.6	6.5	8.8	10.4
CIS	10.0	9.8	9.6	9.1	8.6	8.3	7.7	7.5	8.2	8.2
ASEAN	1.4	1.3	1.3	1.3	1.3	1.3	1.3	1.1	1.0	0.8
SEEC	14.7	14.6	12.6	12.5	11.4	10.9	9.8	8.2	9.0	10.4
Yugoslavia	18.5	19.1	20.4	20.6	20.9	19.8	18.0	15.7	16.9	18.9
Baltic	15.9	13.1	12.3	11.0	9.1	6.5	5.4	6.7	18.2	2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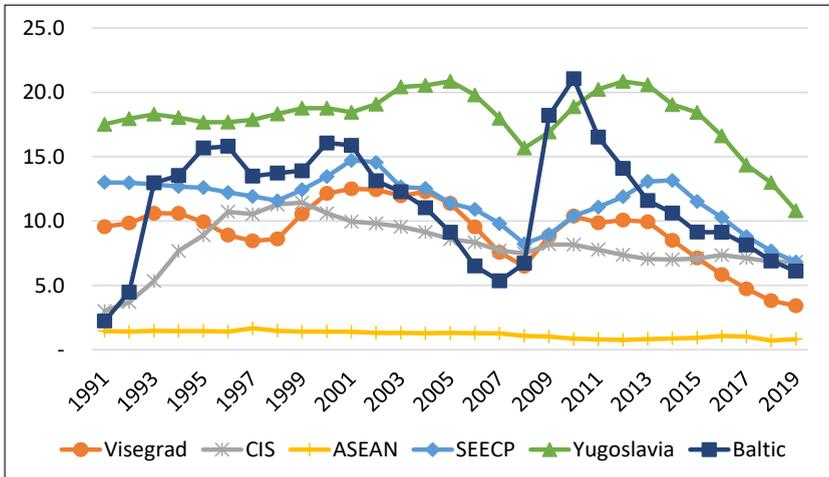
  

그룹명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Visegrad	9.9	10.1	9.9	8.5	7.1	5.8	4.7	3.8	3.4
CIS	7.8	7.4	7.0	7.0	7.1	7.4	7.1	6.8	6.8
ASEAN	0.8	0.8	0.8	0.9	0.9	1.1	1.0	0.7	0.8
SEEC	11.1	11.9	13.1	13.2	11.5	10.3	8.8	7.7	6.8
Yugoslavia	20.2	20.9	20.6	19.1	18.4	16.6	14.4	13.0	10.8
Baltic	16.5	14.1	11.6	10.6	9.1	9.1	8.1	6.9	6.1

자료: Unemployment, male (% of male labor force) (modeled ILO estimate) [Website]. (n.d.).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에서 2021.09.14. 인출한 자료로 저자 작성.

[그림 6-29] 그룹별 실업률(남성)

(단위: %)



자료: Unemployment, male (% of male labor force) (modeled ILO estimate) [Website]. (n.d.).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에서 2021.09.14. 인출한 자료로 저자 작성.

여성 실업률을 살펴보면, ‘유고연방 > 발틱 > 남동유럽 > 비셰그라드 > 독립국가연합 > 아세안’ 순으로 높게 나타난다. 유고연방과 남동유럽의 경우 1990년대 초반에 여성 실업률이 급격히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유고연방과 아세안은 전반적으로 여성 실업률이 남성 실업률 보다 높은 편이다. 그 외 그룹들은 남성 실업률과 비슷하거나 낮다.

〈표 6-29〉 그룹별 고용률(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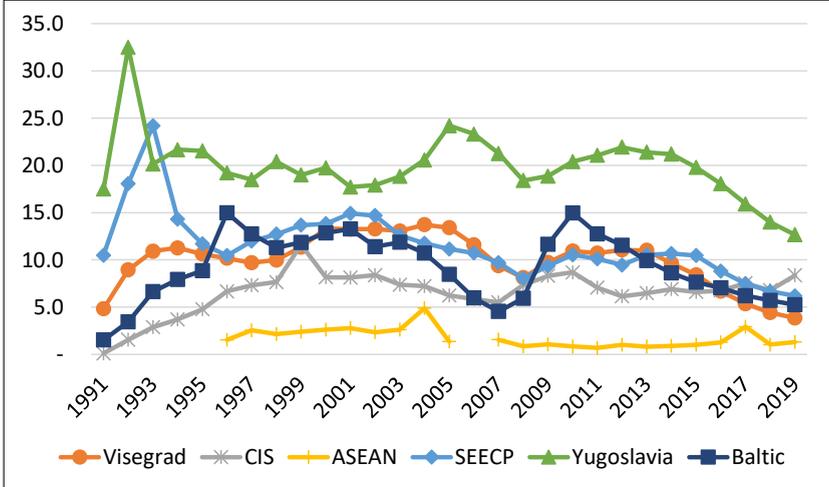
(단위: %)

그룹명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Visegrad	4.8	9.0	10.9	11.3	10.6	10.2	9.7	10.0	11.4	13.3
CIS	0.1	1.6	2.9	3.7	4.8	6.7	7.3	7.7	11.6	8.2
ASEAN	-	-	-	-	-	1.5	2.6	2.2	2.4	2.6
SEEC	10.5	18.1	24.2	14.3	11.7	10.5	12.0	12.7	13.7	13.8
Yugoslavia	17.5	32.5	20.2	21.7	21.5	19.2	18.5	20.4	19.0	19.8
Baltic	1.5	3.5	6.6	7.9	8.9	15.0	12.8	11.3	11.9	12.9
그룹명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Visegrad	13.3	13.3	13.1	13.7	13.4	11.6	9.4	8.1	9.7	10.9
CIS	8.1	8.4	7.4	7.2	6.3	5.9	5.5	7.4	8.3	8.7
ASEAN	2.8	2.3	2.6	4.9	1.4	-	1.6	0.9	1.1	0.8
SEEC	14.9	14.7	12.6	11.8	11.2	10.7	9.7	8.1	9.4	10.5
Yugoslavia	17.7	17.9	18.8	20.6	24.2	23.3	21.3	18.4	18.9	20.4
Baltic	13.3	11.4	11.9	10.7	8.5	6.0	4.6	6.0	11.7	15.0
그룹명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Visegrad	10.7	11.1	11.0	9.6	8.4	6.7	5.4	4.4	3.9	
CIS	7.1	6.2	6.5	6.9	6.6	6.8	7.5	6.8	8.4	
ASEAN	0.7	1.0	0.8	0.9	1.0	1.3	2.9	1.0	1.3	
SEEC	10.1	9.5	10.5	10.7	10.5	8.8	7.5	6.7	6.2	
Yugoslavia	21.1	21.9	21.4	21.2	19.8	18.1	15.9	14.0	12.7	
Baltic	12.8	11.5	9.9	8.6	7.6	7.0	6.2	5.7	5.3	

자료: Unemployment, female (% of female labor force) (modeled ILO estimate) [Website]. (n.d.).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에서 2021.09.14. 인출한 자료로 저자 작성.

[그림 6-30] 그룹별 실업률(여성)

(단위: %)



자료: Unemployment, female (% of female labor force) (modeled ILO estimate) [Website]. (n.d.).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에서 2021.09.14. 인출한 자료로 저자 작성.

### 제3절 체제전환 이후 사회적 변화와 성과

#### 1. 인구수

그룹별 인구수를 살펴보면 ‘아세안 > 독립국가연합 > 비셰그라드 > 남동유럽 > 유고연방 > 발틱’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6-30〉 그룹별 인구수(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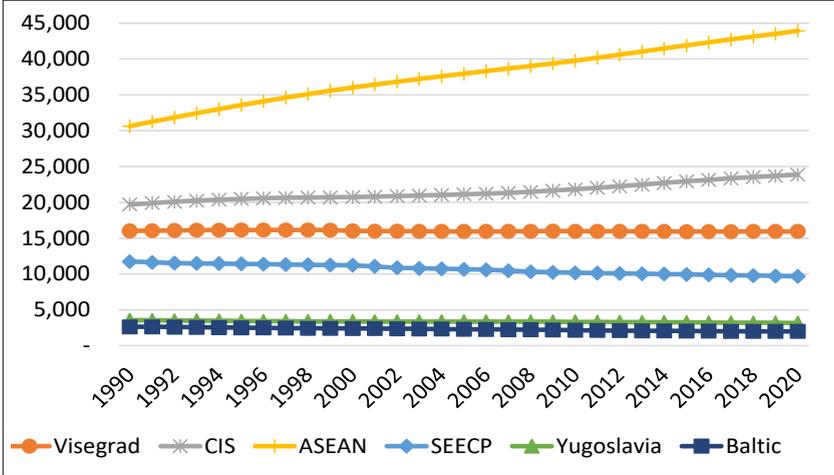
(단위: 천 명)

그룹명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Visegrad	16,029	16,058	16,089	16,119	16,141	16,153	16,156	16,157	16,154	16,144	
CIS	19,720	19,910	20,091	20,254	20,389	20,497	20,578	20,635	20,677	20,705	
ASEAN	30,640	31,249	31,852	32,445	33,022	33,579	34,114	34,627	35,118	35,585	
SEECF	11,736	11,633	11,527	11,488	11,460	11,426	11,383	11,338	11,298	11,264	
Yugoslavia	3,571	3,542	3,508	3,494	3,484	3,443	3,421	3,410	3,406	3,402	
Baltic	2,643	2,639	2,616	2,580	2,547	2,517	2,491	2,469	2,449	2,435	
그룹명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Visegrad	16,028	16,008	15,991	15,975	15,965	15,959	15,956	15,962	15,982	16,001	
CIS	20,747	20,805	20,874	20,956	21,048	21,137	21,226	21,333	21,476	21,640	
ASEAN	36,027	36,446	36,842	37,221	37,589	37,952	38,311	38,666	39,026	39,396	
SEECF	11,234	11,067	10,873	10,796	10,732	10,663	10,596	10,466	10,326	10,246	
Yugoslavia	3,394	3,367	3,369	3,368	3,367	3,365	3,362	3,359	3,353	3,348	
Baltic	2,421	2,399	2,378	2,358	2,334	2,305	2,278	2,257	2,238	2,213	
그룹명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Visegrad	15,977	15,982	15,975	15,965	15,956	15,950	15,945	15,949	15,957	15,966	15,965
CIS	21,832	22,043	22,251	22,477	22,709	22,935	23,152	23,352	23,534	23,712	23,879
ASEAN	39,782	40,188	40,610	41,043	41,477	41,905	42,324	42,736	43,141	43,541	43,936
SEECF	10,185	10,134	10,088	10,048	10,007	9,958	9,902	9,846	9,788	9,734	9,684
Yugoslavia	3,339	3,320	3,304	3,287	3,269	3,249	3,231	3,211	3,196	3,184	3,174
Baltic	2,175	2,138	2,115	2,096	2,080	2,066	2,048	2,029	2,017	2,012	2,009

자료: Population, total [Website]. (n.d.).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에서 2021. 10.04. 인출한 자료로 저자 작성.

[그림 6-31] 그룹별 인구수(전체)

(단위: 천 명)



자료: Population, total [Website]. (n.d.).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에서 2021.10.04. 인출한 자료로 저자 작성.

그룹별 인구 중 남성의 비율을 살펴보면 ‘남동유럽 > 유고연방 ≒ 아세안 > 독립국가연합 > 비셰그라드 > 발틱’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발틱을 제외한 그룹들은 모두 남성의 비율이 49% 내외이고, 발틱은 46.5% 내외로 다른 그룹들보다 남성의 비율이 현저히 낮은 편이다.

〈표 6-31〉 그룹별 인구 성비(남성)

(단위: %)

그룹명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Visegrad	48.5	48.5	48.5	48.5	48.4	48.4	48.4	48.4	48.4	48.3
CIS	48.7	48.8	48.8	48.8	48.8	48.8	48.8	48.8	48.8	48.8
ASEAN	49.1	49.1	49.1	49.1	49.1	49.1	49.1	49.1	49.1	49.1
SEECP	49.9	49.8	49.6	49.4	49.2	49.1	49.1	49.2	49.3	49.4
Yugoslavia	49.3	49.3	49.3	49.3	49.2	49.2	49.2	49.2	49.1	49.1
Baltic	46.9	46.9	46.8	46.7	46.6	46.5	46.5	46.4	46.5	46.5

294 남북한 사회격차 완화를 위한 북한의 의식주 생활 지표 분석

그룹명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Visegrad	48.3	48.3	48.3	48.3	48.3	48.3	48.3	48.3	48.3	48.3
CIS	48.8	48.8	48.8	48.8	48.8	48.8	48.8	48.8	48.8	48.8
ASEAN	49.1	49.1	49.0	49.0	49.0	49.0	49.0	49.0	49.0	49.0
SEEC	49.4	49.4	49.4	49.3	49.3	49.2	49.2	49.2	49.2	49.2
Yugoslavia	49.1	49.1	49.1	49.1	49.1	49.1	49.1	49.1	49.1	49.2
Baltic	46.5	46.4	46.4	46.4	46.3	46.3	46.2	46.2	46.2	4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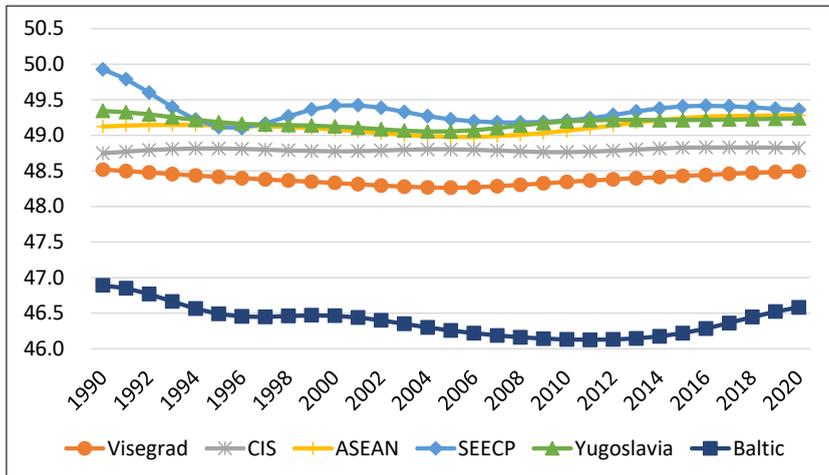
  

그룹명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Visegrad	48.3	48.4	48.4	48.4	48.4	48.4	48.4	48.5	48.5	48.5	48.5
CIS	48.8	48.8	48.8	48.8	48.8	48.8	48.8	48.8	48.8	48.8	48.8
ASEAN	49.1	49.1	49.1	49.2	49.2	49.2	49.3	49.3	49.3	49.3	49.3
SEEC	49.2	49.2	49.3	49.3	49.4	49.4	49.4	49.4	49.4	49.4	49.4
Yugoslavia	49.2	49.2	49.2	49.2	49.2	49.2	49.2	49.2	49.2	49.2	49.2
Baltic	46.1	46.1	46.1	46.1	46.2	46.2	46.3	46.4	46.4	46.5	46.6

자료: Population, male (% of total population) [Website]. (n.d.)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에서 2021.10.04. 인출한 자료로 저자 작성.

[그림 6-32] 그룹별 인구 성비(남성)

(단위: %)



자료: Population, male (% of total population) [Website]. (n.d.)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에서 2021.10.04. 인출한 자료로 저자 작성.

그룹별 인구 중 여성의 비율을 살펴보면 ‘발틱 > 비셰그라드 > 독립국가연합 > 아세안 > 유고연방 > 남동유럽’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발틱을 제외한 그룹들은 모두 여성의 비율이 51% 내외이고, 발틱은 53.5% 내외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표 6-32〉 그룹별 인구 성비(여성)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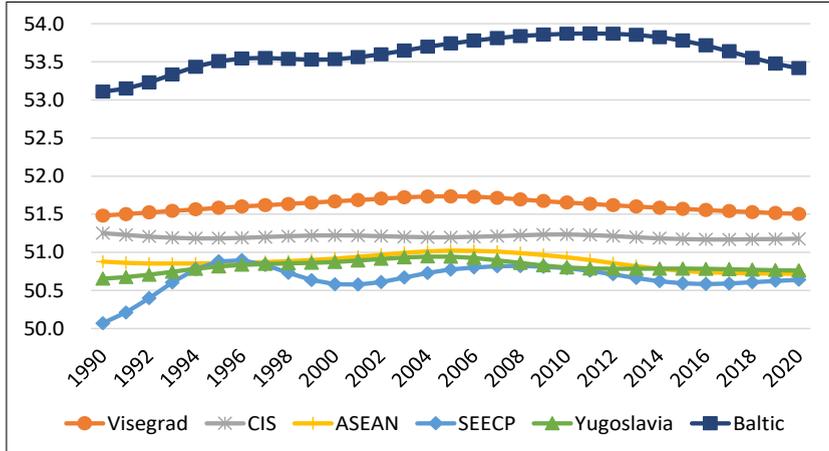
그룹명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Visegrad	51.5	51.5	51.5	51.5	51.6	51.6	51.6	51.6	51.6	51.7	
CIS	51.3	51.2	51.2	51.2	51.2	51.2	51.2	51.2	51.2	51.2	
ASEAN	50.9	50.9	50.9	50.9	50.9	50.9	50.9	50.9	50.9	50.9	
SEEC	50.1	50.2	50.4	50.6	50.8	50.9	50.9	50.8	50.7	50.6	
Yugoslavia	50.7	50.7	50.7	50.7	50.8	50.8	50.8	50.8	50.9	50.9	
Baltic	53.1	53.1	53.2	53.3	53.4	53.5	53.5	53.6	53.5	53.5	
그룹명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Visegrad	51.7	51.7	51.7	51.7	51.7	51.7	51.7	51.7	51.7	51.7	
CIS	51.2	51.2	51.2	51.2	51.2	51.2	51.2	51.2	51.2	51.2	
ASEAN	50.9	50.9	51.0	51.0	51.0	51.0	51.0	51.0	51.0	51.0	
SEEC	50.6	50.6	50.6	50.7	50.7	50.8	50.8	50.8	50.8	50.8	
Yugoslavia	50.9	50.9	50.9	50.9	50.9	50.9	50.9	50.9	50.9	50.8	
Baltic	53.5	53.6	53.6	53.6	53.7	53.7	53.8	53.8	53.8	53.9	
그룹명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Visegrad	51.7	51.6	51.6	51.6	51.6	51.6	51.6	51.5	51.5	51.5	51.5
CIS	51.2	51.2	51.2	51.2	51.2	51.2	51.2	51.2	51.2	51.2	51.2
ASEAN	50.9	50.9	50.9	50.8	50.8	50.8	50.7	50.7	50.7	50.7	50.7
SEEC	50.8	50.8	50.7	50.7	50.6	50.6	50.6	50.6	50.6	50.6	50.6
Yugoslavia	50.8	50.8	50.8	50.8	50.8	50.8	50.8	50.8	50.8	50.8	50.8
Baltic	53.9	53.9	53.9	53.9	53.8	53.8	53.7	53.6	53.6	53.5	53.4

자료: Population, female (% of total population) [Website]. (n.d.).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에서 2021.10.04. 인출한 자료로 저자 작성.

[그림 6-33] 그룹별 인구 성비(여성)

(단위: %)



자료: Population, female (% of total population) [Website]. (n.d).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에서 2021.10.04. 인출한 자료로 저자 작성.

## 2. 세대별 인구 비율

그룹별 0~14세 인구 비율을 살펴보면 '아세안 > 독립국가연합 > 남동유럽 > 유고연방 > 비셰그라드 > 발틱'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아세안의 청소년 비율이 다른 그룹들의 약 2배라는 점에서 생산활동인구가 많아 앞으로 경제발전이 꾸준히 높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표 6-33> 그룹별 0~14세 인구 비율

(단위: %)

그룹명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Visegrad	23.1	22.8	22.3	21.7	21.2	20.6	20.1	19.6	19.1	18.6
CIS	35.0	35.0	34.9	34.7	34.5	34.2	33.7	33.3	32.8	32.3
ASEAN	40.9	40.8	40.8	40.8	40.7	40.4	40.0	39.5	38.8	38.0
SEEC	25.6	25.5	25.1	24.7	24.2	23.8	23.2	22.8	22.4	22.0
Yugoslavia	23.3	23.0	22.6	22.3	21.9	21.5	21.1	20.8	20.4	20.1
Baltic	22.1	22.0	21.9	21.6	21.4	21.0	20.5	20.0	19.6	19.1

그룹명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Visegrad	18.1	17.6	17.1	16.7	16.3	15.9	15.7	15.4	15.2	15.0
CIS	31.6	30.8	30.0	29.2	28.4	27.7	27.2	26.8	26.4	26.2
ASEAN	37.3	36.5	35.8	35.2	34.6	33.9	33.3	32.6	32.0	31.4
SEEC	21.5	21.0	20.4	19.7	19.1	18.6	18.2	17.9	17.6	17.4
Yugoslavia	19.7	19.4	19.0	18.5	18.1	17.8	17.4	17.2	17.0	16.8
Baltic	18.5	17.8	17.2	16.6	16.0	15.5	15.3	15.0	14.8	1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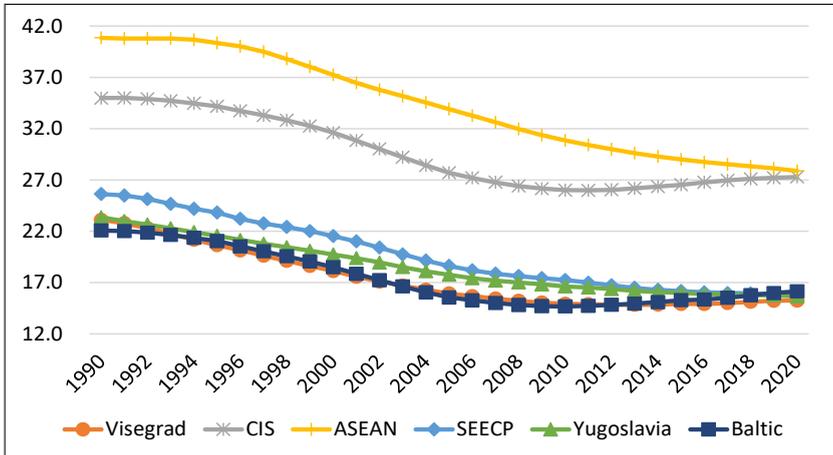
  

그룹명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Visegrad	14.9	14.9	14.8	14.8	14.8	14.9	14.9	15.0	15.1	15.2	15.2
CIS	26.0	26.0	26.0	26.2	26.4	26.5	26.8	27.0	27.1	27.2	27.3
ASEAN	30.9	30.4	30.0	29.6	29.3	29.0	28.7	28.5	28.3	28.1	27.9
SEEC	17.2	17.0	16.7	16.5	16.3	16.2	16.0	16.0	15.9	15.9	15.8
Yugoslavia	16.6	16.5	16.4	16.2	16.1	16.0	15.9	15.8	15.8	15.7	15.7
Baltic	14.7	14.7	14.8	14.9	15.1	15.3	15.3	15.5	15.7	16.0	16.1

자료: Population ages 0-14 (% of total population) [Website]. (n.d.).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에서 2021.10.04. 인출한 자료로 저자 작성.

[그림 6-34] 그룹별 0~14세 인구 비율

(단위: %)



자료: Population ages 0-14 (% of total population) [Website]. (n.d.).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에서 2021.10.04. 인출한 자료로 저자 작성.

그룹별 15~64세 인구 비율을 살펴보면 2005년까지는 ‘비셰그라드 > 유고연방 > 발틱 > 남동유럽 > 독립국가연합 > 아세안’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2007년부터는 ‘비셰그라드 > 유고연방 > 남동유럽 > 발틱 > 독립국가연합 > 아세안’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독립국가연합과 아세안의 생산가능인구가 급증하는 것과 반대로 다른 그룹들의 경우 감소 추세에 있어 경제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표 6-34〉 그룹별 15~64세 인구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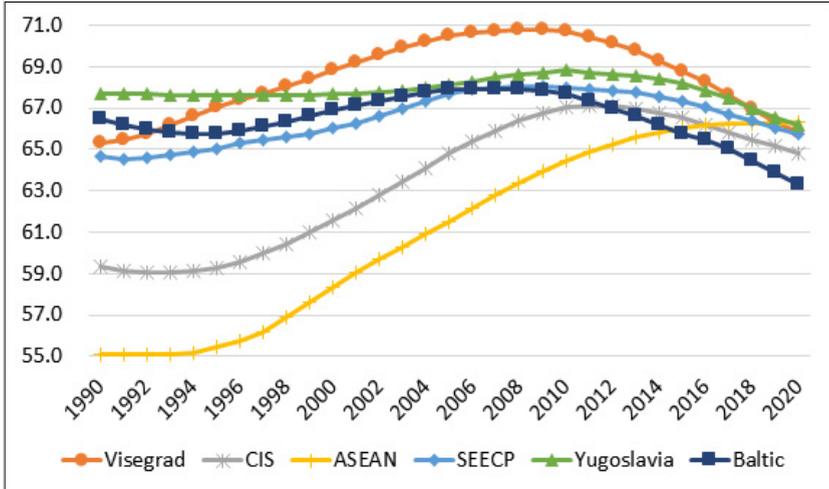
그룹명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Visegrad	65.3	65.4	65.8	66.2	66.6	67.1	67.4	67.7	68.1	68.4	
CIS	59.3	59.1	59.0	59.0	59.1	59.3	59.6	60.0	60.4	61.0	
ASEAN	55.1	55.1	55.1	55.1	55.2	55.4	55.7	56.2	56.9	57.6	
SEECF	64.7	64.5	64.6	64.7	64.9	65.0	65.3	65.5	65.6	65.8	
Yugoslavia	67.7	67.7	67.7	67.6	67.6	67.6	67.6	67.6	67.6	67.6	
Baltic	66.5	66.2	66.0	65.8	65.8	65.8	65.9	66.1	66.3	66.6	
그룹명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Visegrad	68.8	69.2	69.6	69.9	70.2	70.5	70.6	70.7	70.8	70.8	
CIS	61.5	62.2	62.8	63.4	64.1	64.8	65.4	65.9	66.4	66.8	
ASEAN	58.4	59.1	59.7	60.3	60.9	61.5	62.1	62.8	63.4	64.0	
SEECF	66.1	66.3	66.6	67.0	67.4	67.7	67.9	68.0	68.0	68.0	
Yugoslavia	67.7	67.7	67.7	67.8	68.0	68.1	68.3	68.5	68.6	68.7	
Baltic	66.9	67.1	67.3	67.5	67.7	67.9	67.9	67.9	67.9	67.8	
그룹명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Visegrad	70.7	70.4	70.1	69.7	69.3	68.8	68.2	67.6	66.9	66.3	65.8
CIS	67.0	67.1	67.1	67.0	66.8	66.5	66.2	65.8	65.5	65.2	64.8
ASEAN	64.5	64.9	65.3	65.6	65.9	66.0	66.2	66.2	66.2	66.3	66.3
SEECF	68.0	67.9	67.9	67.7	67.6	67.3	67.0	66.7	66.4	66.0	65.7
Yugoslavia	68.8	68.7	68.6	68.6	68.4	68.2	67.9	67.4	67.0	66.5	66.1
Baltic	67.7	67.3	67.0	66.6	66.2	65.7	65.4	65.0	64.5	63.9	63.3

자료: Population ages 15-64 (% of total population) [Website]. (n.d.).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에서 2021.10.04. 인출한 자료로 저자 작성.

[그림 6-35] 그룹별 15~64세 인구 비율

(단위: %)



자료: Population ages 15-64 (% of total population) [Website]. (n.d).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에서 2021.10.04. 인출한 자료로 저자 작성.

그룹별 65세 인구 비율을 살펴보면 ‘발틱 > 비셰그라드 > 남동유럽 > 유고연방 > 독립국가연합 > 아세안’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발틱의 경우 다른 그룹들보다 고령화 비율이 현저히 높은 편이다.

<표 6-35> 그룹별 65세 이상 인구 비율

(단위: %)

그룹명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Visegrad	11.6	11.8	12.0	12.1	12.2	12.3	12.5	12.7	12.8	13.0
CIS	5.7	5.9	6.1	6.3	6.4	6.5	6.7	6.7	6.7	6.8
ASEAN	4.0	4.1	4.1	4.1	4.2	4.2	4.2	4.3	4.3	4.4
SEECF	9.7	10.0	10.3	10.6	10.9	11.2	11.5	11.8	12.0	12.2
Yugoslavia	9.0	9.3	9.7	10.1	10.5	10.9	11.2	11.6	11.9	12.3
Baltic	11.5	11.8	12.2	12.5	12.9	13.2	13.6	13.9	14.1	14.4

300 남북한 사회격차 완화를 위한 북한의 의식주 생활 지표 분석

그룹명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Visegrad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9	14.0	14.2
CIS	6.8	7.0	7.2	7.4	7.5	7.5	7.4	7.3	7.2	7.1
ASEAN	4.4	4.4	4.5	4.5	4.5	4.6	4.6	4.6	4.6	4.7
SEEC	12.4	12.7	13.0	13.3	13.5	13.7	13.9	14.1	14.3	14.5
Yugoslavia	12.6	13.0	13.3	13.7	13.9	14.1	14.3	14.4	14.4	14.5
Baltic	14.6	15.1	15.5	15.9	16.2	16.5	16.8	17.1	17.3	1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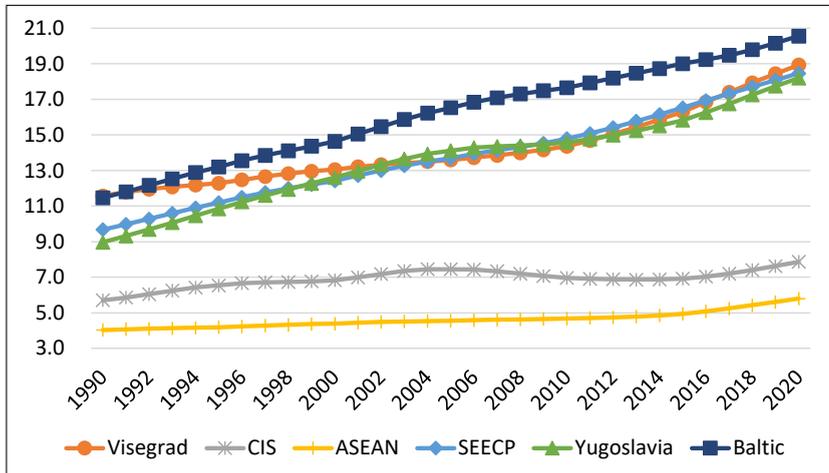
  

그룹명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Visegrad	14.4	14.7	15.0	15.4	15.9	16.3	16.9	17.4	17.9	18.4	18.9
CIS	7.0	6.9	6.9	6.9	6.9	6.9	7.0	7.2	7.4	7.6	7.9
ASEAN	4.7	4.7	4.7	4.8	4.9	4.9	5.1	5.2	5.4	5.6	5.8
SEEC	14.8	15.1	15.4	15.8	16.2	16.5	16.9	17.3	17.7	18.1	18.5
Yugoslavia	14.6	14.8	15.0	15.2	15.5	15.8	16.3	16.7	17.3	17.7	18.2
Baltic	17.7	17.9	18.2	18.5	18.7	19.0	19.2	19.5	19.8	20.2	20.6

자료: Population ages 65 and above (% of total population) [Website]. (n.d).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에서 2021.10.04. 인출한 자료로 저자 작성.

[그림 6-36] 그룹별 65세 이상 인구 비율

(단위: %)



자료: Population ages 65 and above (% of total population) [Website]. (n.d).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에서 2021.10.04. 인출한 자료로 저자 작성.

### 3. 합계출산율

합계출산율은 가임여성(15~49세)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다. 그룹별 합계출산율을 살펴보면 2009년까지는 ‘아세안 > 독립국가연합 > 남동유럽 > 유고연방 > 발틱 > 비셰그라드’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2011년부터는 ‘독립국가연합 > 아세안 > 남동유럽 > 발틱 > 비셰그라드 > 유고연방’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아세안과 독립국가연합 외의 4개 그룹들은 1.5명 내외로 저출산 상황을 겪고 있다.

〈표 6-36〉 그룹별 합계출산율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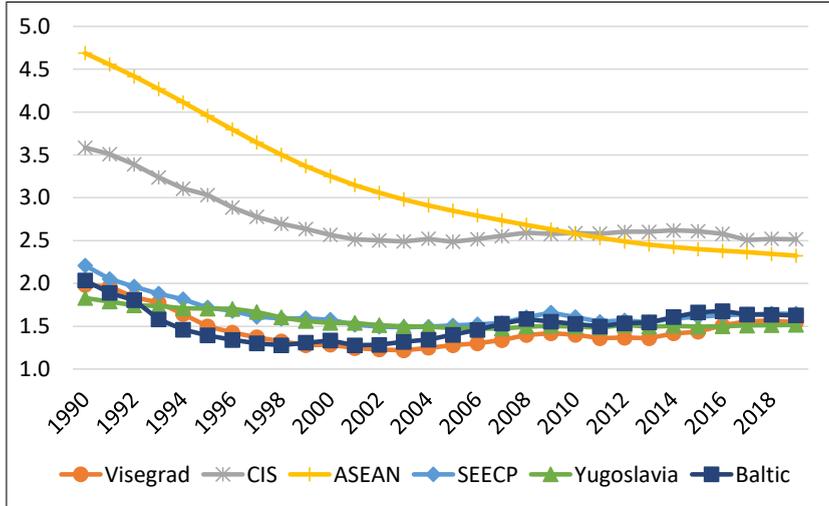
그룹명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Visegrad	2.0	2.0	1.8	1.8	1.6	1.5	1.4	1.4	1.3	1.3
CIS	3.6	3.5	3.4	3.2	3.1	3.0	2.9	2.8	2.7	2.6
ASEAN	4.7	4.6	4.4	4.3	4.1	4.0	3.8	3.6	3.5	3.4
SEECF	2.2	2.1	2.0	1.9	1.8	1.7	1.7	1.6	1.6	1.6
Yugoslavia	1.8	1.8	1.7	1.7	1.7	1.7	1.7	1.7	1.6	1.6
Baltic	2.0	1.9	1.8	1.6	1.5	1.4	1.3	1.3	1.3	1.3
그룹명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Visegrad	1.3	1.2	1.2	1.2	1.2	1.3	1.3	1.3	1.4	1.4
CIS	2.6	2.5	2.5	2.5	2.5	2.5	2.5	2.6	2.6	2.6
ASEAN	3.3	3.1	3.1	3.0	2.9	2.8	2.8	2.7	2.7	2.6
SEECF	1.6	1.5	1.5	1.5	1.5	1.5	1.5	1.5	1.6	1.7
Yugoslavia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Baltic	1.3	1.3	1.3	1.3	1.3	1.4	1.5	1.5	1.6	1.6
그룹명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Visegrad	1.4	1.4	1.4	1.4	1.4	1.4	1.5	1.6	1.6	1.5
CIS	2.6	2.6	2.6	2.6	2.6	2.6	2.6	2.5	2.5	2.5
ASEAN	2.6	2.5	2.5	2.5	2.4	2.4	2.4	2.4	2.3	2.3
SEECF	1.6	1.6	1.6	1.5	1.6	1.6	1.6	1.6	1.6	1.6
Yugoslavia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Baltic	1.5	1.5	1.5	1.5	1.6	1.7	1.7	1.6	1.6	1.6

주: 가임여성(15~49세)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낸 지표 자료: Fertility rate, total (births per woman) [Website]. (n.d).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에서 2021.10.04. 인출한 자료로 저자 작성.

[그림 6-37] 그룹별 합계출산율

(단위: 명)



주: 가임여성(15~49세)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낸 지표  
 자료: Fertility rate, total (births per woman) [Website]. (n.d).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에서 2021.10.04. 인출한 자료로 저자 작성.

#### 4. 사망률

그룹별 사망률을 살펴보면 ‘발틱 > 남동유럽 > 유고연방 > 비셰그라드 > 독립국가연합 > 아세안’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발틱의 경우 1년에 1,000명당 13명 정도 사망하고 있는데, 노인의 비율이 높아 사망률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예상된다.

〈표 6-37〉 그룹별 조사망률

(단위: %)

그룹명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Visegrad	11.8	11.8	11.6	11.5	11.3	11.3	11.1	11.0	11.0	11.1
CIS	9.4	9.5	9.7	10.1	10.2	10.1	9.8	9.7	9.5	9.5
ASEAN	11.0	10.8	10.5	10.3	10.1	9.9	9.6	9.4	9.2	8.9
SEEC	9.7	9.9	10.1	10.2	10.4	10.6	11.0	11.1	10.8	10.5
Yugoslavia	8.5	9.3	8.9	9.0	9.0	9.6	9.8	9.9	10.0	10.1
Baltic	12.1	12.3	12.6	14.0	14.8	14.2	13.1	12.9	13.2	12.8
그룹명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Visegrad	10.8	10.7	10.7	10.9	10.7	10.9	10.7	10.8	10.8	10.8
CIS	9.6	9.5	9.6	9.6	9.4	9.5	9.4	9.2	9.1	8.9
ASEAN	8.7	8.5	8.3	8.1	7.9	7.7	7.6	7.5	7.4	7.2
SEEC	10.5	10.5	10.9	10.9	10.8	11.1	11.2	11.2	11.3	11.3
Yugoslavia	10.1	10.0	10.2	10.4	10.4	10.6	10.5	10.6	10.7	10.7
Baltic	12.6	13.0	13.1	13.1	13.1	13.5	13.8	14.0	13.5	13.1
그룹명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Visegrad	10.8	10.7	10.8	10.8	10.6	11.1	10.8	11.1	11.2	11.1
CIS	8.8	8.7	8.5	8.3	8.2	8.1	8.1	8.0	7.9	7.9
ASEAN	7.1	7.1	7.0	6.9	6.8	6.8	6.8	6.7	6.7	6.7
SEEC	11.5	11.4	11.6	11.3	11.7	12.0	11.9	12.2	12.3	12.3
Yugoslavia	10.8	10.8	10.9	10.9	10.9	11.3	11.1	11.5	11.5	11.5
Baltic	13.3	13.0	13.2	13.3	13.3	13.5	13.5	13.6	13.7	1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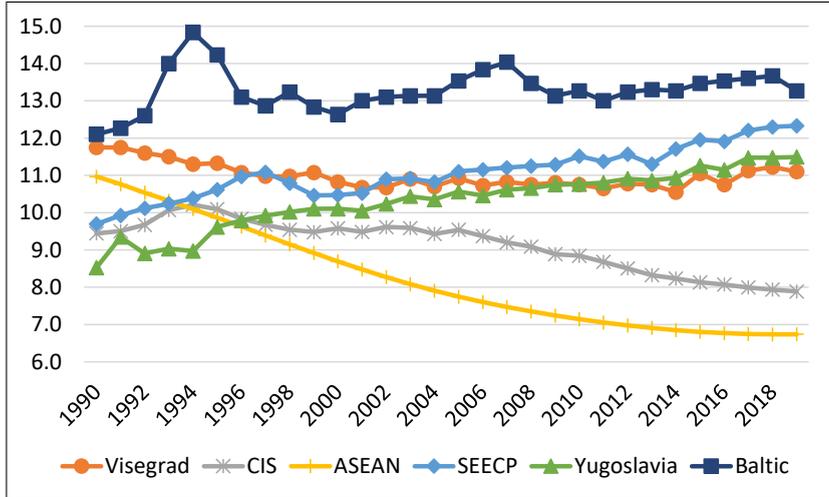
주: 조사망률 = (1년 간의 총 사망자수 / 당해연도의 연앙인구) × 1,000

자료: Death rate, crude (per 1,000 people) [Website]. (n.d.).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에서 2021.10.04. 인출한 자료로 저자 작성.

[그림 6-38] 그룹별 조사망률

(단위: %)



주: 조사망률 = (1년 간의 총 사망자수 / 당해연도의 연앙인구) × 1,000  
 자료: Death rate, crude (per 1,000 people) [Website]. (n.d.).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에서 2021.10.04. 인출한 자료로 저자 작성.

그룹별 신생아 사망률을 살펴보면 ‘아세안 > 독립국가연합 > 남동유럽 > 유고연방 > 발틱 > 비셰그라드’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아세안과 독립국가연합의 출생율이 높은 만큼 신생아 사망률도 높은 것으로 추측되나, 신생아 사망률의 경우 보건의료 영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신생아 사망률 감소를 위해 아세안과 독립국가연합 그룹에 보건의료 관련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6-38〉 그룹별 신생아 사망률

(단위: %)

그룹명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Visegrad	13.3	12.9	12.3	11.6	10.9	10.2	9.5	8.9	8.3	7.8
CIS	56.3	55.7	55.5	55.2	54.7	53.8	52.6	51.0	49.1	47.0
ASEAN	77.1	75.5	73.9	72.4	71.0	69.6	68.2	66.8	65.1	63.2
SEEC	24.8	24.1	23.7	23.3	22.8	22.4	21.9	21.5	20.8	19.8
Yugoslavia	17.9	16.8	16.2	15.4	14.3	13.1	12.1	11.3	10.7	10.2
Baltic	13.0	13.7	14.3	14.5	14.1	13.3	12.5	11.7	10.9	10.2
그룹명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Visegrad	7.4	7.0	6.7	6.3	6.1	5.8	5.6	5.4	5.1	4.9
CIS	44.7	42.4	40.1	37.9	35.8	33.9	32.1	30.4	28.9	27.5
ASEAN	60.9	58.3	55.4	52.9	50.5	48.3	46.3	44.4	43.6	40.7
SEEC	18.8	18.0	17.3	16.6	15.8	14.8	13.7	12.7	11.8	11.1
Yugoslavia	9.7	9.3	8.9	8.5	8.1	7.8	7.4	6.9	6.5	6.2
Baltic	9.6	9.0	8.5	8.0	7.6	7.2	6.7	6.3	5.8	5.4
그룹명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Visegrad	4.7	4.5	4.4	4.3	4.1	4.0	3.9	3.7	3.6	3.5
CIS	26.1	24.9	23.8	22.7	21.7	20.8	20.0	19.3	18.6	18.0
ASEAN	39.0	37.3	35.7	34.3	33.0	31.8	30.7	29.6	28.7	27.7
SEEC	10.5	9.9	9.3	8.7	8.1	7.6	7.3	7.1	6.9	6.6
Yugoslavia	5.8	5.6	5.4	5.4	5.4	5.3	5.0	4.6	4.1	3.8
Baltic	5.0	4.6	4.3	4.0	3.7	3.6	3.4	3.1	2.9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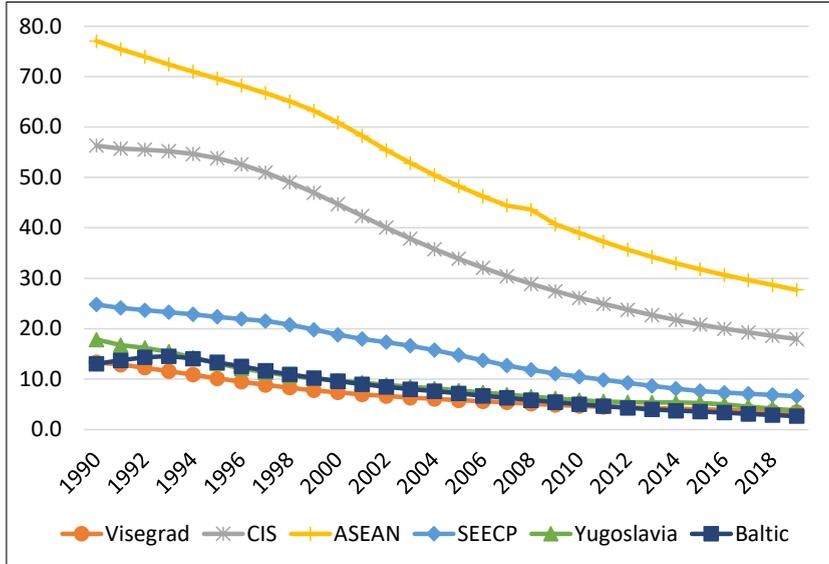
주: 영아사망률 = (당해연도 0세 사망아수/당해연도 연간출생아수)\*1,000

자료: Mortality rate, infant (per 1,000 live births) [Website]. (n.d.).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에서 2021.10.04. 인출한 자료로 저자 작성.

[그림 6-39] 그룹별 신생아 사망률

(단위: %)



주: 영아사망률 = (당해연도 0세 사망아수/당해연도 연간출생아수)\*1,000  
 자료: Mortality rate, infant (per 1,000 live births) [Website]. (n.d).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에서 2021.10.04. 인출한 자료로 저자 작성.

## 5. 자살률

그룹별 자살률을 살펴보면 ‘발틱 > 비셰그라드 > 유고연방 > 독립국가 연합 > 남동유럽 > 아세안’ 순으로 높게 나타난다. 발틱의 경우 2000년대 중반부터 2010년 중반까지 약 10년간 인구 10만 명당 25명이 자살하고, 최근에도 인구 10만 명당 20명이 자살하는 등 다른 그룹들에 비해 자살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표 6-39〉 그룹별 자살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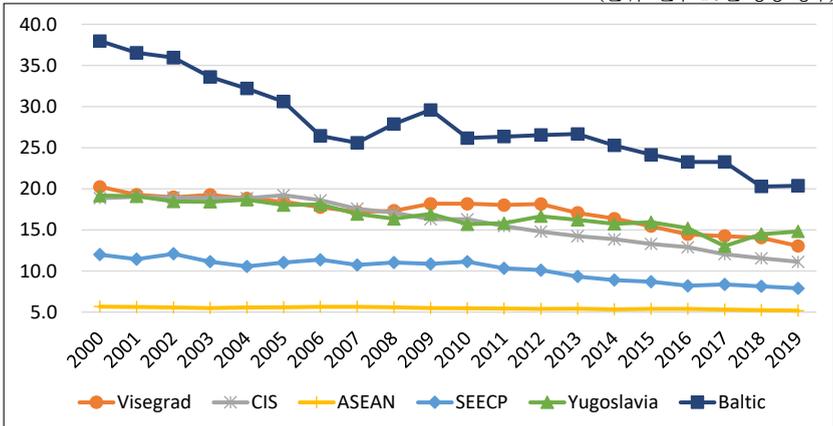
(단위: 인구 10만 명당 명수)

그룹명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Visegrad	20.2	19.3	19.0	19.3	18.8	18.4	17.8	17.2	17.3	18.2
CIS	18.8	19.0	18.9	18.9	18.9	19.2	18.6	17.6	17.1	16.3
ASEAN	5.7	5.6	5.6	5.5	5.6	5.6	5.7	5.7	5.6	5.5
SEEC	12.0	11.4	12.1	11.1	10.6	11.0	11.4	10.7	11.0	10.9
Yugoslavia	19.2	19.1	18.5	18.4	18.7	18.0	18.1	16.9	16.4	16.9
Baltic	38.0	36.5	35.9	33.6	32.2	30.6	26.4	25.6	27.9	29.6
그룹명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Visegrad	18.2	18.0	18.2	17.1	16.4	15.5	14.5	14.3	14.1	13.1
CIS	16.3	15.5	14.8	14.2	13.9	13.3	12.9	12.1	11.6	11.1
ASEAN	5.5	5.5	5.4	5.4	5.4	5.4	5.4	5.3	5.3	5.2
SEEC	11.1	10.3	10.1	9.3	8.9	8.7	8.2	8.4	8.1	7.9
Yugoslavia	15.7	15.8	16.7	16.2	15.7	15.9	15.2	13.0	14.5	14.8
Baltic	26.2	26.3	26.5	26.7	25.3	24.1	23.3	23.3	20.3	20.4

주: 자살률 = (자살로 인한 사망자수 ÷ 주민등록연앙인구) × 100,000  
 자료: Suicide mortality rate (per 100,000 population) [Website]. (n.d).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에서 2021.10.04. 인출한 자료로 저자 작성.

[그림 6-40] 그룹별 자살률

(단위: 인구 10만 명당 명수)



주: 자살률 = (자살로 인한 사망자수 ÷ 주민등록연앙인구) × 100,000  
 자료: Suicide mortality rate (per 100,000 population) [Website]. (n.d).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에서 2021.10.04. 인출한 자료로 저자 작성.

## 6. 기대수명

그룹별 기대수명을 살펴보면 '유고연방 > 비셰그라드 > 남동유럽 > 발틱 > 독립국가연합 > 아세안' 순으로 높게 나타난다. 2019년 기준으로 유고연방, 비셰그라드, 남동유럽, 발틱이 76년 내외이고, 독립국가연합과 아세안이 70년 내외이다.

〈표 6-40〉 그룹별 기대수명(전체)

(단위: 년)

그룹명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Visegrad	70.6	70.7	71.1	71.5	71.6	71.8	72.2	72.5	72.7	72.8
CIS	64.6	64.5	64.3	63.9	63.8	63.8	64.2	64.5	64.8	65.2
ASEAN	58.6	58.9	59.3	59.6	60.0	60.4	60.8	61.2	61.6	62.1
SEECF	71.1	71.0	71.0	70.9	70.9	70.9	70.8	70.7	71.4	71.8
Yugoslavia	72.4	72.3	72.3	72.3	72.5	72.8	73.1	73.1	73.4	73.6
Baltic	70.0	69.6	69.2	67.8	66.9	67.6	69.5	70.0	69.9	70.5
그룹명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Visegrad	73.3	73.8	73.9	73.9	74.3	74.4	74.7	74.8	75.2	75.4
CIS	65.4	65.7	65.8	66.1	66.5	66.7	67.1	67.5	67.9	68.4
ASEAN	62.6	63.1	63.6	64.1	64.6	65.1	65.6	66.0	66.5	66.9
SEECF	72.3	72.4	72.5	72.7	73.1	73.2	73.4	73.6	73.8	74.3
Yugoslavia	73.5	74.0	74.1	74.3	74.6	74.8	75.1	75.3	75.5	75.7
Baltic	70.9	70.9	71.2	71.5	72.0	71.7	71.5	71.6	72.7	73.6
그룹명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Visegrad	75.7	76.3	76.5	76.8	77.3	77.0	77.5	77.4	77.5	77.6
CIS	68.7	69.1	69.5	69.9	70.3	70.6	70.8	71.1	71.3	71.5
ASEAN	67.3	67.7	68.0	68.4	68.7	69.0	69.3	69.6	69.8	70.1
SEECF	74.5	75.2	75.3	75.8	75.7	75.9	76.1	76.2	76.3	76.3
Yugoslavia	76.0	76.3	76.5	76.7	77.0	77.0	77.3	77.3	77.5	77.6
Baltic	74.1	74.5	74.7	75.0	75.2	75.5	75.6	76.1	76.2	7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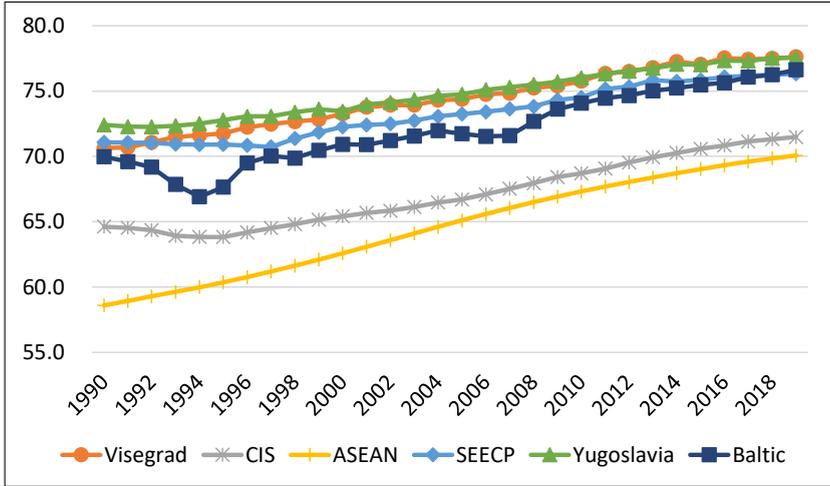
주: 0세의 출생자가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임. 평균수명 또는 0세의 기대여명이라고도 함.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오래 살 것인가를 나타냄.

자료: Life expectancy at birth, total (years) [Website]. (n.d).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에서 2021.10.04. 인출한 자료로 저자 작성.

[그림 6-41] 그룹별 기대수명(전체)

(단위: 년)



주: 0세의 출생자가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임. 평균수명 또는 0세의 기대여명이라고도 함.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오래 살 것인가를 나타냄.  
 자료: Life expectancy at birth, total (years) [Website]. (n.d).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에서 2021.10.04. 인출한 자료로 저자 작성.

그룹별 남성의 기대수명을 살펴보면 ‘유고연방 > 비세그라드 > 남동유럽 > 발틱 > 독립국가연합 > 아세안’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2019년 기준 그룹별 남성의 기대수명 수준은 유고연방, 비세그라드, 남동유럽, 발틱은 73.9년 정도이고, 독립국가연합과 아세안은 67.7년 정도이다.

〈표 6-41〉 그룹별 기대수명(남성)

(단위: 년)

그룹명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Visegrad	66.5	66.5	66.9	67.4	67.5	67.7	68.3	68.6	68.7	68.9
CIS	61.1	60.9	60.7	60.1	59.9	59.9	60.3	60.7	61.1	61.5
ASEAN	55.7	56.0	56.3	56.7	57.0	57.4	57.8	58.2	58.7	59.2
SEEC	68.0	68.0	67.9	67.6	67.5	67.5	67.4	67.4	68.0	68.6
Yugoslavia	69.2	69.1	68.8	68.9	69.1	69.5	69.8	70.0	70.3	70.6
Baltic	65.0	64.4	63.6	62.0	60.7	61.5	63.9	64.5	64.4	65.2
그룹명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Visegrad	69.4	70.0	70.2	70.2	70.6	70.6	71.0	71.1	71.5	71.8
CIS	61.7	62.0	62.1	62.4	62.7	62.9	63.3	63.7	64.2	64.7
ASEAN	59.6	60.1	60.7	61.2	61.7	62.2	62.7	63.1	63.6	64.0
SEEC	69.0	69.2	69.3	69.5	69.9	70.0	70.2	70.5	70.7	71.1
Yugoslavia	70.5	71.0	71.2	71.4	71.7	71.9	72.3	72.5	72.7	73.0
Baltic	65.6	65.3	65.6	66.1	66.6	66.1	66.1	66.0	67.4	68.5
그룹명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Visegrad	72.2	72.7	73.0	73.3	73.8	73.7	74.1	74.1	74.1	74.4
CIS	65.0	65.4	65.9	66.3	66.7	67.0	67.3	67.7	67.8	68.0
ASEAN	64.4	64.8	65.2	65.5	65.9	66.2	66.5	66.8	67.0	67.3
SEEC	71.3	72.0	72.3	72.8	72.7	72.9	73.1	73.2	73.3	73.4
Yugoslavia	73.4	73.7	73.9	74.1	74.5	74.4	74.7	74.8	74.9	75.0
Baltic	69.1	69.4	69.6	70.2	70.2	70.7	70.9	71.4	71.7	7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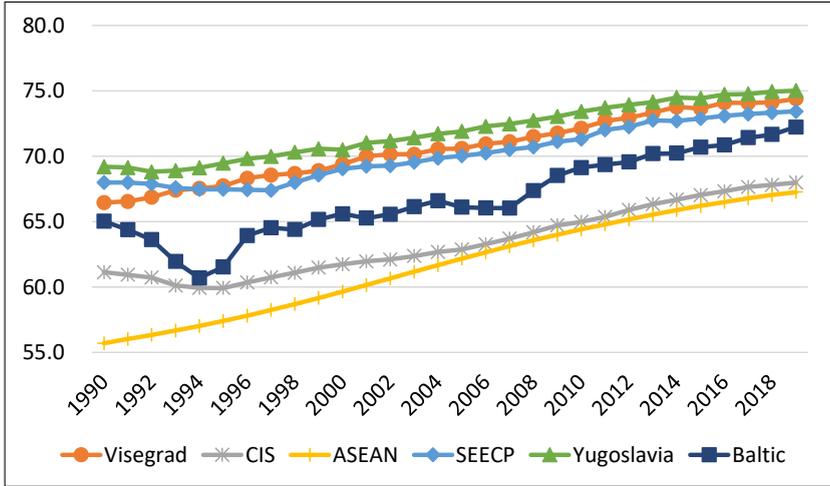
주: 0세의 남성 출생자가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임. 평균수명 또는 0세의 기대여명이라고도 함. 남성들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오래 살 것인지를 나타냄.

자료: Life expectancy at birth, male (years) [Website]. (n.d.).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에서 2021.10.04. 인출한 자료로 저자 작성.

[그림 6-42] 그룹별 기대수명(남성)

(단위: 년)



주: 0세의 남성 출생자가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인. 평균수명 또는 0세의 기대여명이라고도 함. 남성들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오래 살 것인지들 나타냄.  
 자료: Life expectancy at birth, male (years) [Website]. (n.d).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에서 2021.10.04. 인출한 자료로 저자 작성.

그룹별 여성의 기대수명을 살펴보면 ‘비세그라드 > 발틱 > 유고연방 > 남동유럽 > 독립국가연합 > 아세안’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룹별 여성 기대수명 수준은 2019년 기준 유고연방, 비세그라드, 남동유럽, 발틱은 81년 정도이고, 독립국가연합은 75년, 아세안은 63년 정도이다. 발틱의 경우 노인의 비율 및 여성의 기대수명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여성 노인의 비율이 높아 총인구 중 여성의 성비가 높음을 짐작할 수 있다.

〈표 6-42〉 그룹별 기대수명(여성)

(단위: 년)

그룹명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Visegrad	75.0	75.0	75.5	75.8	75.9	76.0	76.3	76.6	76.8	77.0
CIS	68.2	68.1	68.0	67.8	67.8	67.8	68.1	68.4	68.7	68.9
ASEAN	61.5	61.9	62.2	62.6	63.0	63.3	63.7	64.2	64.6	65.0
SEEC	74.4	74.3	74.4	74.5	74.6	74.6	74.4	74.3	74.9	75.3
Yugoslavia	75.7	75.5	75.8	75.9	76.0	76.2	76.4	76.2	76.5	76.7
Baltic	75.2	75.1	75.0	74.0	73.4	74.1	75.4	75.8	75.6	76.0
그룹명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Visegrad	77.3	77.7	77.9	77.9	78.2	78.3	78.7	78.8	79.2	79.2
CIS	69.2	69.5	69.7	70.0	70.4	70.7	71.1	71.5	71.8	72.2
ASEAN	65.5	66.0	66.5	67.0	67.5	68.0	68.5	68.9	69.4	69.8
SEEC	75.7	75.8	75.9	76.2	76.5	76.7	76.8	77.0	77.2	77.7
Yugoslavia	76.5	77.0	77.1	77.3	77.6	77.7	78.0	78.2	78.3	78.4
Baltic	76.5	76.8	77.1	77.2	77.6	77.6	77.3	77.4	78.2	78.9
그룹명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Visegrad	79.5	80.2	80.2	80.4	80.9	80.6	81.1	81.0	81.0	81.0
CIS	72.5	72.9	73.3	73.6	73.9	74.2	74.4	74.7	74.8	75.0
ASEAN	70.1	70.5	70.8	71.2	71.5	71.8	72.1	72.3	72.6	72.8
SEEC	77.9	78.5	78.6	79.1	78.9	79.0	79.2	79.2	79.3	79.3
Yugoslavia	78.7	79.0	79.2	79.4	79.6	79.6	80.0	79.9	80.1	80.2
Baltic	79.2	79.8	80.0	80.1	80.5	80.5	80.6	80.9	81.0	8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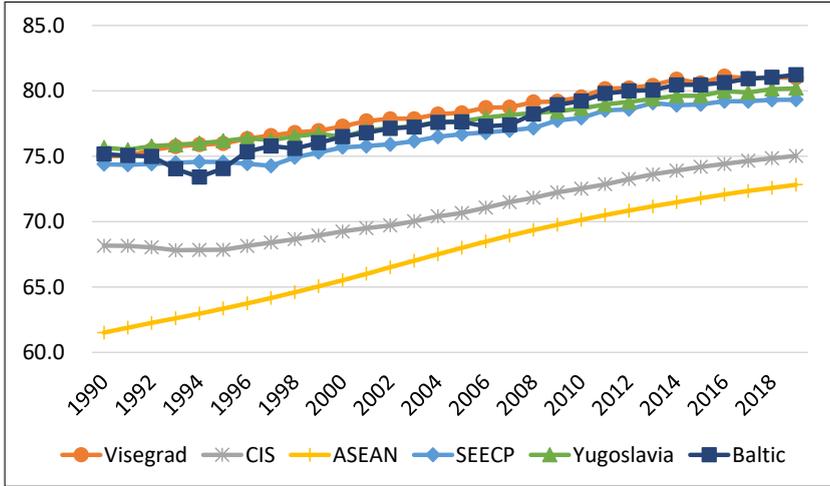
주: 0세의 여성 출생자가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임. 평균수명 또는 0세의 기대여명이라고도 함. 여성들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오래 살 것인지를 나타냄.

자료: Life expectancy at birth, female (years) [Website]. (n.d.).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에서 2021.10.04. 인출한 자료로 저자 작성.

[그림 6-43] 그룹별 기대수명(여성)

(단위: 년)



주: 0세의 여성 출생자가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임. 평균수명 또는 0세의 기대여명이라고도 함. 여성들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오래 살 것인지를 나타냄.  
 자료: Life expectancy at birth, female (years) [Website]. (n.d).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에서 2021.10.04. 인출한 자료로 저자 작성.

## 7. 노령화 지수 및 노년부양비

노령화 지수는 아동인구 대비 노인인구 비율로 그룹별 노령화 지수를 살펴보면 ‘발틱 > 비세그라드 > 남동유럽 > 유고연방 > 독립국가연합 > 아세안’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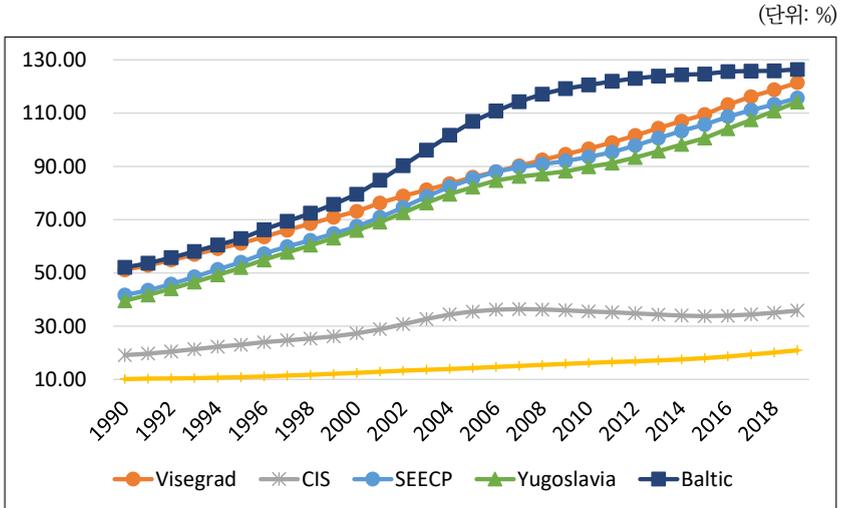
〈표 6-43〉 그룹별 노령화 지수

(단위: %)

그룹명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Visegrad	51.17	52.86	54.82	56.97	59.09	61.07	63.55	66.07	68.54	70.91
CIS	19.09	19.66	20.46	21.38	22.26	23.02	23.97	24.70	25.35	26.16
ASEAN	10.13	10.28	10.39	10.50	10.64	10.85	11.09	11.39	11.75	12.11
SEEC	41.73	43.49	45.78	48.51	51.34	53.99	57.21	59.92	62.26	64.70
Yugoslavia	39.55	41.71	44.04	46.55	49.22	51.98	54.89	57.68	60.38	63.12
Baltic	52.04	53.68	55.70	58.02	60.47	62.87	66.24	69.38	72.44	75.77
그룹명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Visegrad	73.13	76.28	78.89	81.18	83.49	85.97	88.02	90.20	92.42	94.56
CIS	27.27	28.86	30.74	32.72	34.39	35.48	36.19	36.42	36.28	35.94
ASEAN	12.45	12.91	13.29	13.63	13.96	14.30	14.67	15.07	15.48	15.86
SEEC	67.48	70.84	74.61	78.64	82.40	85.42	88.01	89.73	90.88	92.03
Yugoslavia	65.98	69.10	72.60	76.25	79.57	82.19	84.68	86.18	87.11	88.18
Baltic	79.58	84.80	90.31	96.06	101.71	106.90	110.78	114.28	117.16	119.25
그룹명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Visegrad	96.61	98.98	101.61	104.35	107.02	109.50	113.23	116.21	118.77	121.46
CIS	35.53	35.23	34.81	34.35	33.96	33.76	33.94	34.38	35.05	35.87
ASEAN	16.19	16.52	16.83	17.14	17.51	17.99	18.64	19.35	20.12	20.95
SEEC	93.56	95.35	97.79	100.58	103.29	105.72	108.71	111.13	113.28	115.67
Yugoslavia	89.81	91.24	93.27	95.71	98.21	100.65	104.14	107.52	110.81	114.21
Baltic	120.60	121.95	123.03	123.85	124.43	124.68	125.64	125.81	125.90	126.44

주: 노령화 지수 = 고령인구(65세 이상) ÷ 유소년인구(14세 이하) × 100  
 자료: Population ages 0-14 (% of total population) [Website]. (n.d).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에서 2021.10.04. 인출한 자료로 저자 작성.  
 Population ages 65 and above (% of total population) [Website]. (n.d).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에서 2021.10.04. 인출한 자료로 저자 작성.

[그림 6-44] 그룹별 노령화 지수



주: 노령화 지수 = 고령인구(65세 이상) ÷ 유소년인구(14세 이하)×100  
 자료: Population ages 0-14 (% of total population) [Website]. (n.d).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에서 2021.10.04. 인출한 자료로 저자 작성.  
 Population ages 65 and above (% of total population) [Website]. (n.d).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에서 2021.10.04. 인출한 자료로 저자 작성.

노년 부양비는 생산연령인구(15~64세) 100명이 부양해야 할 고령인구(65세 이상)의 비율이다. 그룹별 노년 부양비를 살펴보면 ‘발틱 > 남동유럽 > 비셰그라드 > 유고연방 > 아세안 > 독립국가연합’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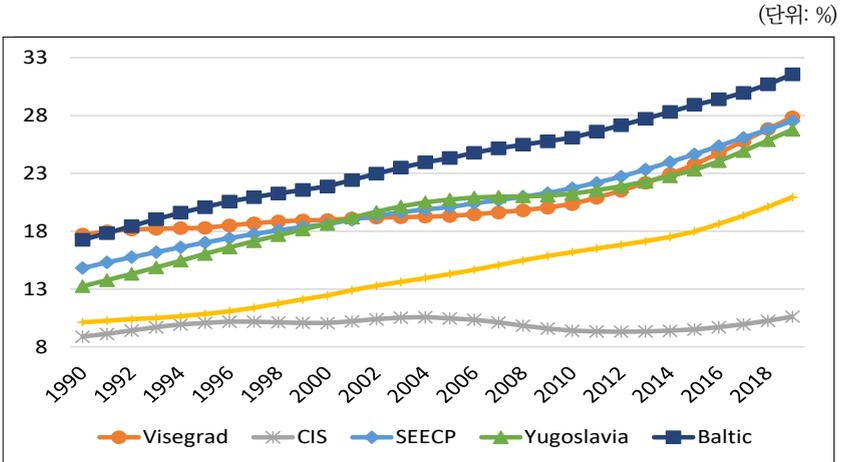
〈표 6-44〉 그룹별 노년 부양비

(단위: %)

그룹명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Visegrad	17.71	18.00	18.16	18.23	18.27	18.30	18.50	18.69	18.84	18.94
CIS	8.90	9.13	9.42	9.71	9.94	10.08	10.19	10.19	10.13	10.08
ASEAN	7.29	7.35	7.40	7.44	7.47	7.49	7.52	7.54	7.53	7.50
SEEC	14.82	15.31	15.76	16.19	16.61	17.02	17.41	17.76	18.09	18.38
Yugoslavia	13.25	13.77	14.32	14.88	15.46	16.05	16.60	17.14	17.66	18.16
Baltic	17.26	17.84	18.44	19.05	19.61	20.08	20.57	20.95	21.27	21.57
그룹명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Visegrad	18.97	19.10	19.18	19.22	19.26	19.32	19.47	19.63	19.82	20.05
CIS	10.07	10.21	10.39	10.54	10.58	10.47	10.35	10.12	9.84	9.59
ASEAN	7.44	7.45	7.44	7.41	7.38	7.32	7.30	7.27	7.24	7.21
SEEC	18.61	19.00	19.35	19.65	19.90	20.09	20.42	20.70	20.98	21.31
Yugoslavia	18.64	19.17	19.68	20.15	20.51	20.74	20.92	20.99	21.01	21.08
Baltic	21.89	22.43	22.98	23.50	23.96	24.34	24.80	25.17	25.49	25.79
그룹명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Visegrad	20.35	20.90	21.50	22.19	22.94	23.77	24.75	25.79	26.84	27.86
CIS	9.40	9.34	9.32	9.34	9.40	9.50	9.71	9.96	10.26	10.61
ASEAN	7.18	7.19	7.21	7.24	7.31	7.43	7.63	7.87	8.13	8.41
SEEC	21.73	22.19	22.73	23.34	23.99	24.66	25.37	26.09	26.81	27.52
Yugoslavia	21.24	21.54	21.89	22.29	22.75	23.31	24.06	24.93	25.86	26.78
Baltic	26.09	26.62	27.17	27.74	28.32	28.93	29.40	29.97	30.71	31.57

주: 노년 부양비 = 고령인구(65세 이상) ÷ 생산연령인구(15~64세) × 100  
 자료: Population ages 15-64 (% of total population) [Website]. (n.d).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에서 2021.10.04. 인출한 자료로 저자 작성.  
 Population ages 65 and above (% of total population) [Website]. (n.d).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에서 2021.10.04. 인출한 자료로 저자 작성.

[그림 6-45] 그룹별 노년 부양비



주: 노년 부양비 = 고령인구(65세 이상) ÷ 생산연령인구(15~64세) × 100

자료: Population ages 15-64 (% of total population) [Website]. (n.d).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에서 2021.10.04. 인출한 자료로 저자 작성.

Population ages 65 and above (% of total population) [Website]. (n.d).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에서 2021.10.04. 인출한 자료로 저자 작성.

## 8. 지니계수

### 가. 측정 방법

지니계수(Gini Coefficient)는 이탈리아 통계학자인 지니(Corrado Gini)가 소득 불평등 정도를 계량화한 지표로서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고 다른 국가 간의 비교가 용이하다는 측면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지니계수의 원리는 다음과 같다. 인구의 누적비율과 소득의 누적 점유율 사이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로렌츠 곡선은 소득분배가 완전히 평등하다면 기울기가 1인 대각선의 형태가 될 것이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현실의 소득분포가 완전 평등에서 멀어질수록 로렌츠 곡선은 대각선에서 떨어진 곡선의 형태를 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대각선과 로렌츠 곡선 사이의

면적을 A, 로렌츠 곡선 하방의 면적을 B라고 하면, 지니계수는  $A/(A+B)$ 라는 공식을 통해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완전 평등하다면 0(A의 값이 0이므로), 완전 불평등한 상태라면 1이 될 것(B의 값이 0이므로)이다. 이를 통해서 서로 다른 사회들 간의 불평등의 정도를 비교할 수도 있다.

#### 나. 그룹별 비교<sup>44)</sup>

2010년대 중반부터의 세전(시장 소득) 기준 지니계수를 살펴보면, ‘남동유럽 > 발틱 > 유고연방 > 독립국가연합 > 비셰그라드’ 순으로 높다.

〈표 6-45〉 그룹별 지니계수(세전: 시장 소득)

그룹명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Visegrad	0.442	-	-	-	-	-	0.472	-
CIS	-	-	-	-	-	-	-	-
SEEC	-	-	-	-	-	-	-	-
Yugoslavia	-	-	-	-	-	-	-	-
Baltic	-	-	-	-	-	-	-	-
그룹명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Visegrad	0.466	0.483	0.467	0.456	0.448	0.453	0.454	0.450
CIS	-	-	-	-	0.486	-	0.481	-
SEEC	-	-	-	-	-	-	-	-
Yugoslavia	0.456	0.452	0.444	0.434	0.426	0.452	0.456	0.461
Baltic	0.515	0.500	0.479	0.472	0.489	0.515	0.521	0.511
그룹명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Visegrad	0.458	0.468	0.453	0.452	0.447	0.435	0.423	-
CIS	-	-	-	-	0.446	0.434	-	-
SEEC	0.503	0.511	0.514	0.529	0.523	0.524	0.525	-
Yugoslavia	0.463	0.464	0.459	0.456	0.450	0.445	0.443	-
Baltic	0.516	0.505	0.501	0.486	0.481	0.479	0.474	0.470

주: 1990~2011년까지는 기존의 소득 정의로 측정된 값을, 2012년부터는 새로운 소득 정의로 측정된 값을 사용함  
 자료: Income inequality [Website]. (n.d.). <https://data.oecd.org/>에서 2021.10.15. 인출한 자료로 저자 작성.

44) 아세안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지니계수 자료가 미비하여 제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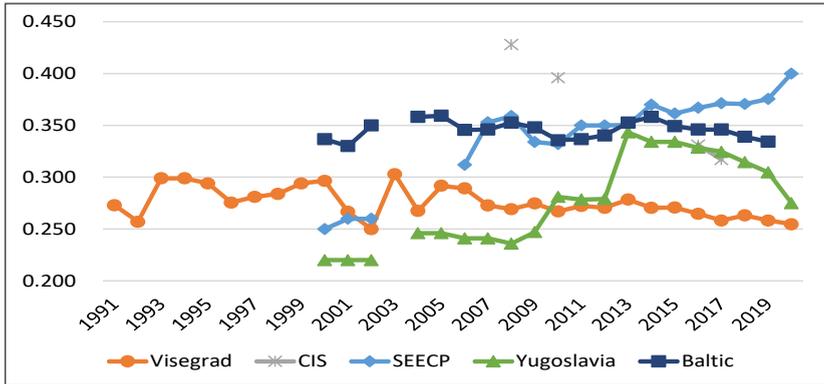
320 남북한 사회격차 완화를 위한 북한의 의식주 생활 지표 분석

그룹명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Visegrad	0.267	0.250	0.303	0.268	0.292	0.289	0.273	0.269	0.275	0.267
CIS	-	-	-	-	-	-	-	0.428	-	0.396
SEECP	0.260	0.260	-	-	-	0.312	0.353	0.359	0.334	0.332
Yugoslavia	0.220	0.220	-	0.246	0.246	0.241	0.241	0.236	0.247	0.281
Baltic	0.330	0.350	-	0.358	0.359	0.346	0.346	0.353	0.348	0.336
그룹명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Visegrad	0.272	0.271	0.279	0.271	0.271	0.265	0.258	0.263	0.258	0.255
CIS	-	-	-	-	-	0.331	0.317	-	-	-
SEECP	0.350	0.350	0.351	0.370	0.362	0.367	0.371	0.371	0.376	0.400
Yugoslavia	0.279	0.279	0.343	0.334	0.334	0.328	0.325	0.315	0.305	0.275
Baltic	0.337	0.340	0.353	0.358	0.349	0.346	0.346	0.339	0.334	0.328

- 주: 1)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루마니아는 OECD 자료이고, OECD 자료에 없는 국가 및 특정연도는 EURO stat 자료를 참고함  
 2) OECD 자료의 경우 1990~2011년까지는 기존의 소득 정의로 측정된 값을, 2012년부터는 새로운 소득 정의로 측정된 값을 사용함

자료: Income inequality [Website]. (n.d.). <https://data.oecd.org/>에서 2021.10.15. 인출;  
 Gini coefficient of equivalised disposable income - EU-SILC survey [Website]. (n.d.). <https://ec.europa.eu/eurostat/>에서 2021.10.15. 인출한 자료로 저자 작성.

[그림 6-47] 그룹별 지니계수(세후: 가처분 소득)



- 주: 1)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루마니아는 OECD 자료이고, OECD 자료에 없는 국가 및 특정연도는 EURO stat 자료를 참고함  
 2) OECD 자료의 경우 1990~2011년까지는 기존의 소득 정의로 측정된 값을, 2012년부터는 새로운 소득 정의로 측정된 값을 사용함

자료: Income inequality [Website]. (n.d.). <https://data.oecd.org/>에서 2021.10.15. 인출;  
 Gini coefficient of equivalised disposable income - EU-SILC survey [Website]. (n.d.). <https://ec.europa.eu/eurostat/>에서 2021.10.15. 인출한 자료로 저자 작성.

세전·세후 지니계수 개선율은 세금을 떼기 전 시장소득의 지니계수와 소득재분배 이후 가처분소득의 지니계수를 비교하여 산출하는 것으로 개선도가 높으면 조세와 복지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룹별 지니계수 개선도를 살펴보면, ‘유고연방 > 비셰그라드 > 남동유럽 > 발틱 > 독립국가연합’ 순으로 나타났다. 독립국가연합의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사실상 비교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발틱의 지니계수가 그룹 중 두 번째로 높으면서 개선도면에서도 가장 적은 편에 속한다. 즉 소득재분배가 비교적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해결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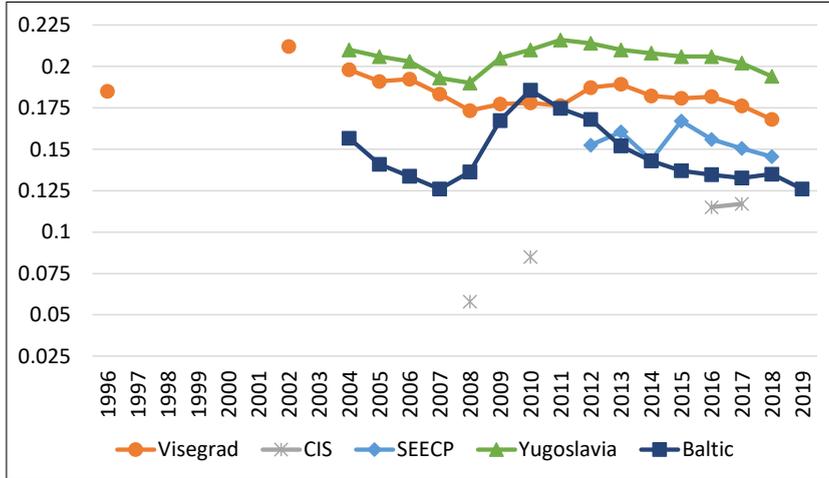
〈표 6-47〉 그룹별 지니계수 개선도(세전-세후)

그룹명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Visegrad	0.185	-	-	-	-	-	0.212	-
CIS	-	-	-	-	-	-	-	-
SEEC	-	-	-	-	-	-	-	-
Yugoslavia	-	-	-	-	-	-	-	-
Baltic	-	-	-	-	-	-	-	-
그룹명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Visegrad	0.198	0.191	0.192	0.183	0.13	0.177	0.178	0.176
CIS	-	-	-	-	0.05	-	0.085	-
SEEC	-	-	-	-	-	-	-	-
Yugoslavia	0.210	0.206	0.203	0.193	0.19.0	0.205	0.210	0.216
Baltic	0.157	0.141	0.134	0.126	0.136	0.167	0.186	0.175
그룹명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Visegrad	0.187	0.189	0.182	0.181	0.182	0.176	0.168	-
CIS	-	-	-	-	0.115	0.117	-	-
SEEC	0.153	0.161	0.144	0.167	0.156	0.151	0.146	-
Yugoslavia	0.214	0.210	0.208	0.206	0.206	0.202	0.194	-
Baltic	0.168	0.152	0.143	0.137	0.135	0.133	0.135	0.126

주: 지니계수 개선율 = 세전 - 세후

자료: Income inequality [Website]. (n.d.). <https://data.oecd.org/>; Gini coefficient of equivalised disposable income - EU-SILC survey [Website]. (n.d.). <https://ec.europa.eu/eurostat>에서 각각 2021.10.15. 인출한 자료로 저자 작성.

[그림 6-48] 그룹별 지니계수 개선도(세후-세전)



주: 지니계수 개선율 = 세전 - 세후  
 자료: Income inequality [Website]. (n.d.). <https://data.oecd.org/>; Gini coefficient of equivalised disposable income - EU-SILC survey [Website]. (n.d.). <https://ec.europa.eu/eurostat>에서 각각 2021.10.15. 인출한 자료로 저자 작성.

## 9. 하루 \$1.9 빈곤율

빈곤 추정치의 국제적 비교는 국가마다 빈곤에 대한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국가 간 일관된 비교가 어렵다. 이에 따라 세계은행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에서 빈곤이 의미하는 바에 기반을 두고 극빈을 측정하는 것을 목표로, 1990년 세계 개발 보고서(World Development Report) 부터 하루 \$1.9(약 2천 200원)를 국제 빈곤선으로 채택하였다. 하루 \$1.9 빈곤율은 2011년 국제 물가 기준으로 하루 \$1.90 미만으로 생활하는 인구의 비율이고, 국제 간 비교가 가능하다.

그룹별로 하루 \$1.9 빈곤율을 살펴보면, 아세안은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빈곤율이 가장 높고, 독립국가연합은 두 번째로 빈곤율이 높았으나

2000년대 중반부터 빈곤율이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는 ‘유고연방 > 남동유럽 > 독립국가연합 > 발틱 > 비셰그라드’ 순으로 빈곤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48〉 그룹별 하루 \$1.9 빈곤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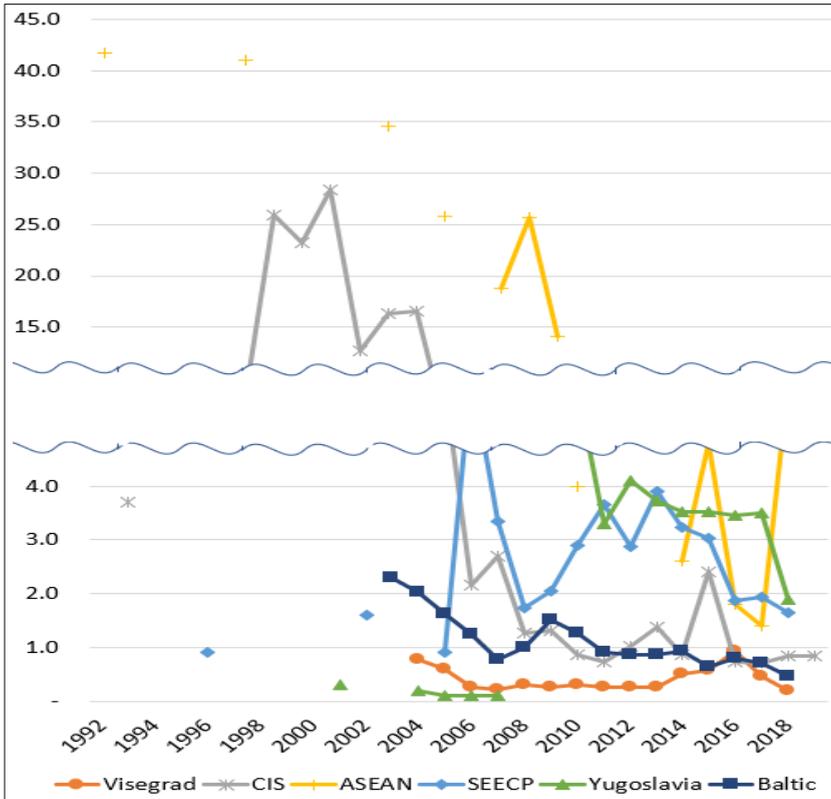
(단위: %)

그룹명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Visegrad	-	-	-	-	-	-	-	-	-	
CIS	-	3.7	-	9.6	5.4	8.5	25.9	23.2	28.4	
ASEAN	41.7	-	-	-	-	41.1	-	-	-	
SEEC	-	-	-	-	0.9	-	-	-	-	
Yugoslavia	-	-	-	-	-	-	-	-	-	
Baltic	-	-	-	-	-	-	-	-	-	
그룹명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Visegrad	-	-	-	0.8	0.6	0.3	0.2	0.3	0.3	
CIS	12.8	16.4	16.6	5.7	5.9	2.2	2.7	1.3	1.3	
ASEAN	-	34.6	-	25.8	-	18.8	25.7	14.1	-	
SEEC	-	1.6	-	-	0.9	6.1	3.4	1.7	2.1	
Yugoslavia	0.3	-	-	0.2	0.1	0.1	0.1	-	5.4	
Baltic	-	-	2.3	2.0	1.6	1.2	0.8	1.0	1.5	
그룹명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Visegrad	0.3	0.3	0.3	0.3	0.5	0.6	0.9	0.5	0.2	-
CIS	0.9	0.7	1.0	1.4	0.9	2.4	0.7	0.7	0.8	0.9
ASEAN	4.0	-	8.6	-	2.6	4.8	1.8	1.4	5.9	-
SEEC	2.9	3.7	2.9	3.9	3.2	3.0	1.9	1.9	1.7	-
Yugoslavia	5.8	3.3	4.1	3.7	3.5	3.5	3.5	3.5	1.9	-
Baltic	1.3	0.9	0.9	0.9	0.9	0.6	0.8	0.7	0.5	-

자료: Poverty headcount ratio at \$1.90 a day (2011 PPP) (% of population) [Website]. (n. d.).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에서 2021.09.14. 인출한 자료로 저자 작성.

[그림 6-49] 그룹별 하루 \$1.9 빈곤율

(단위: %)



자료: Poverty headcount ratio at \$1.90 a day (2011 PPP) (% of population) [Website]. (n. d.).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에서 2021.09.14. 인출한 자료로 저자 작성.

## 10. 상대적 빈곤율

소득불평등 지표로 지니계수 뿐만 아니라 상대적 빈곤율도 자주 사용된다. 상대적 빈곤율은 중위소득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의 비율을 말하는데, 이는 곧 빈곤가구의 규모를 나타낸다. 그러나 상대적 빈곤율의 경우 국가별 중위소득의 수준이 상이하므로 상대적 빈곤율이 높다고 하

여 해당 국가의 경제적 수준이 낮다고 볼 수 없다.

그룹별 상대적 빈곤율을 살펴보면 ‘남동유럽 > 발틱 > 독립국가연합 > 유고연방 > 비셰그라드’ 순서로 높게 나타난다. 지니계수의 수준이 ‘남동유럽 > 발틱 > 유고연방 > 독립국가연합 > 비셰그라드’ 순서로 높았던 것과 비교했을 때 남동유럽과 발틱의 소득불평등 정도가 비교적 높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표 6-49〉 그룹별 상대적 빈곤율(전체)

(단위: %)

그룹명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Visegrad	7.1	8.4	7.6	7.1	7.4	7.7	8.1	8.1
CIS	-	-	-	-	-	-	-	14.6
SEEC	-	-	18.4	16.8	16.3	15.6	15.9	16.5
Yugoslavia	7.9	7.1	7.4	7.9	7.9	8.3	9.1	8.6
Baltic	14.0	16.1	14.1	15.9	16.9	14.6	13.0	12.8
그룹명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Visegrad	8.2	8.4	8.5	8.6	8.0	7.6	7.9	
CIS	-	-	-	-	12.7	11.5	-	
SEEC	16.0	17.1	17.7	18.1	17.5	17.1	17.1	
Yugoslavia	9.5	9.5	9.3	9.2	8.6	8.5	7.5	
Baltic	13.8	14.2	15.9	16.2	16.4	16.6	1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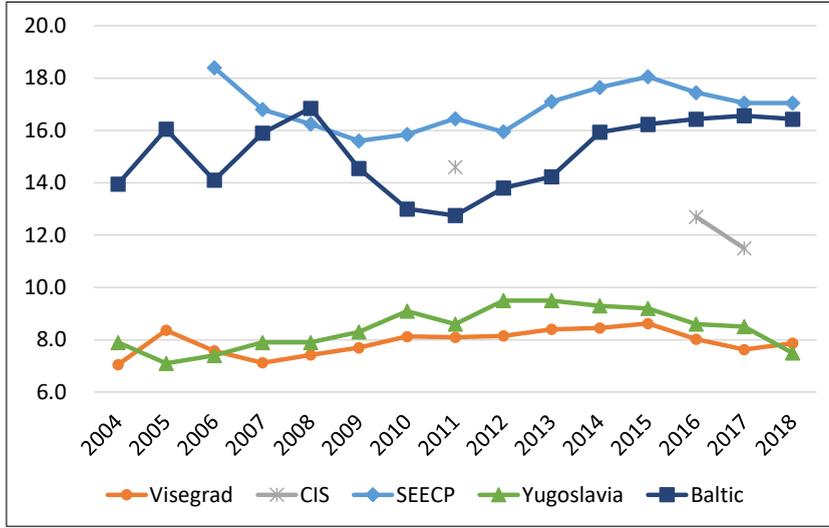
주: 1) 상대적 빈곤율은 균등화 중위소득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의 비율임.

2) 처분가능소득 기준임.

자료: Poverty rate (indicator) [Website]. (n.d.). <https://data.oecd.org/>에서 2021.10.01. 인출한 자료로 저자 작성.

[그림 6-50] 그룹별 상대적 빈곤율(전체)

(단위: %)



주: 1) 상대적 빈곤율은 균등화 중위소득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의 비율임.  
 2) 처분가능소득 기준임.

자료: Poverty rate (indicator) [Website]. (n.d.). <https://data.oecd.org/>에서 2021.10.01. 인출한 자료로 저자 작성.

그룹별 만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상대적 빈곤율을 살펴보면 ‘발틱 > 남동유럽 > 유고연방 ≒ 독립국가연합 > 비셰그라드’ 순서로 높게 나타난다.

<표 6-50> 그룹별 상대적 빈곤율(노인)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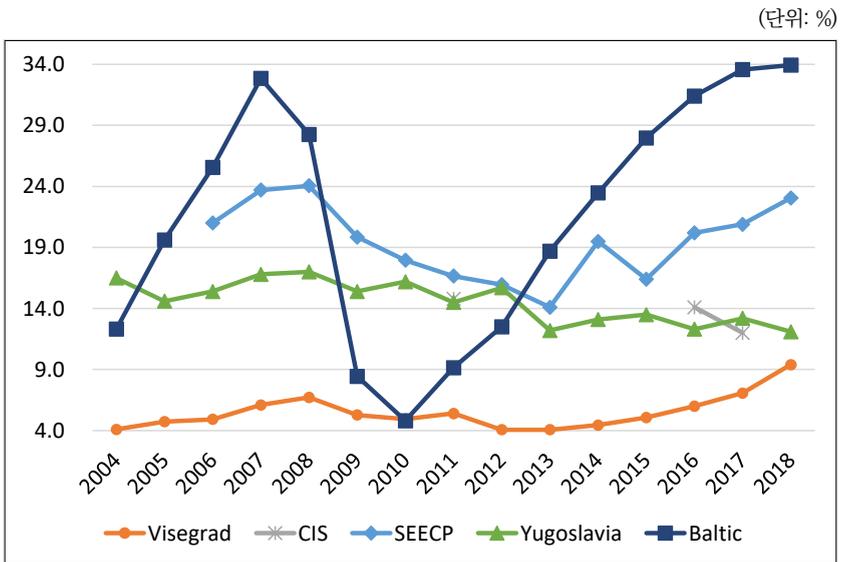
그룹명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Visegrad	4.1	4.7	4.9	6.1	6.7	5.3	5.0	5.4
CIS	-	-	-	-	-	-	-	14.8
SEECP	-	-	21.0	23.7	24.1	19.9	18.0	16.7
Yugoslavia	16.5	14.6	15.4	16.8	17.0	15.4	16.2	14.5
Baltic	12.3	19.6	25.6	32.9	28.3	8.5	4.8	9.2

그룹명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Visegrad	4.1	4.1	4.5	5.1	6.0	7.1	9.4
CIS	-	-	-	-	14.1	12.0	-
SEEC	16.0	14.1	19.5	16.4	20.2	20.9	23.1
Yugoslavia	15.7	12.2	13.1	13.5	12.3	13.2	12.1
Baltic	12.5	18.7	23.5	28.0	31.4	33.6	33.9

주: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상대적 빈곤율(%) =  $\frac{\text{균등화 소득이 빈곤선 이하인 65세 이상 인구수}}{\text{65세 이상의 총인구수}} \times 100$

자료: Poverty rate (indicator) [Website]. (n.d.). <https://data.oecd.org>에서 2021.10.01. 인출한 자료로 저자 작성.

[그림 6-51] 그룹별 상대적 빈곤율(노인)



주: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상대적 빈곤율(%) =  $\frac{\text{균등화 소득이 빈곤선 이하인 65세 이상 인구수}}{\text{65세 이상의 총인구수}} \times 100$

자료: Poverty rate (indicator) [Website]. (n.d.). <https://data.oecd.org>에서 2021.10.01. 인출한 자료로 저자 작성.

## 제4절 체제전환 이후 보건복지 변화와 성과

### 1. 연금지출<sup>45)</sup>

그룹별 GDP 대비 연금지출 비율을 살펴보면 ‘유고연방’ > 비셰그라드 > 남동유럽 > 발틱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발틱의 노령화 지수와 노년 부양비가 그룹 중 가장 높으나 GDP 대비 연금지출이 가장 낮다는 점에서 발틱이 노인들의 소득을 보장할 만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인지 또는 연금액이 적은 것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표 6-51〉 그룹별 GDP 대비 연금지출 비율

(단위: %)

그룹명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Visegrad	4.7	4.9	4.9	5.0	6.0	9.0	9.4	9.4	
SEEC	-	-	-	-	-	6.1	6.2	6.7	
Yugoslavia	-	10.7	10.6	10.7	10.7	10.8	10.9	11.1	
Baltic	-	6.5	7.9	8.4	8.7	7.9	7.2	6.9	
그룹명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Visegrad	9.4	9.3	9.3	9.2	9.2	9.5	10.0	9.9	
SEEC	6.2	6.2	6.8	6.6	6.4	7.0	8.6	9.1	
Yugoslavia	10.6	10.3	10.2	10.1	9.6	10.1	11.2	11.2	
Baltic	6.6	6.4	6.1	5.9	5.7	6.6	8.9	9.0	
그룹명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Visegrad	9.8	9.6	9.7	9.5	9.3	9.1	8.9	8.9	8.9
SEEC	8.7	8.4	8.5	8.5	8.3	8.1	8.0	7.9	7.7
Yugoslavia	11.1	11.5	11.0	11.5	10.2	9.9	9.6	9.7	9.9
Baltic	8.0	7.8	7.6	7.5	7.5	7.4	7.2	7.4	7.4

주: 아시아 국가들의 연금지출 자료를 ADB에서 확인하였으나 대부분 공공연금 밖에 없고 연금지출 달러의 기준이 불명확하여 사용하지 못함. 이로 인해 아세안 그룹은 제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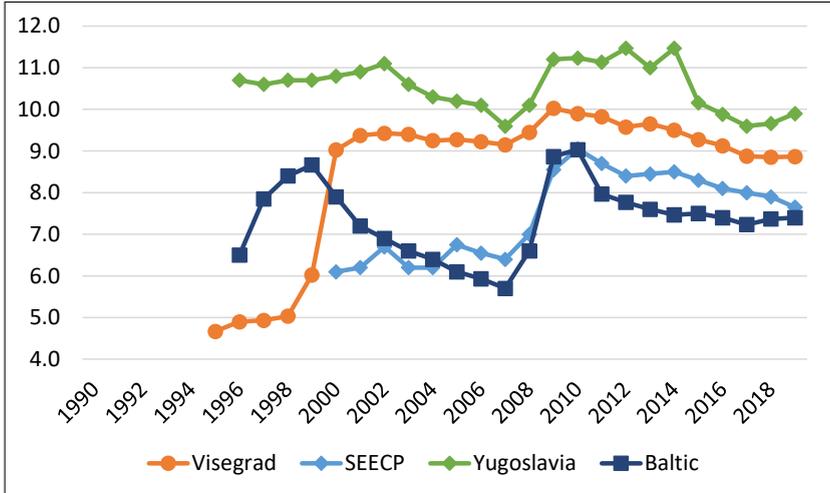
자료: Pensions (spr\_exp\_pens) [Website]. (n.d.).

<https://ec.europa.eu/eurostat/data/database>에서 2021.10.05. 인출한 자료로 저자 작성.

45) 아세안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연금지출 자료가 미비하여 제외함.

[그림 6-52] 그룹별 GDP 대비 연금지출 비율

(단위: %)



주: 아시아 국가들의 연금지출 자료를 ADB에서 확인하였으나 대부분 공공연금 밖에 없고 연금지출 달러의 기준이 불명확하여 사용하지 못함. 이로 인해 아세안 그룹은 제외됨.  
 자료: Pensions (spr\_exp\_pens) [Website]. (n.d.).  
<https://ec.europa.eu/eurostat/data/database>에서 2021.10.05. 인출한 자료로 저자 작성.

비교하기에 자료가 미비한 독립국가연합과 남동유럽을 제외하고 그룹별 GDP 대비 공공 연금지출 비율을 살펴보면 ‘유고연방 > 비셰그라드 > 발틱’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6-52〉 그룹별 GDP 대비 공공 연금지출 비율

(단위: %)

그룹명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Visegrad	5.29	6.88	7.68	7.59	7.46	7.06	7.12	7.45	7.38
CIS	-	-	-	-	-	-	-	-	-
SEECP	6.75	-	-	-	-	-	-	-	-
Yugoslavia	-	-	-	-	-	-	10.21	10.28	10.37
Baltic	-	-	-	-	-	-	5.83	7.20	7.71

330 남북한 사회격차 완화를 위한 북한의 의식주 생활 지표 분석

그룹명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Visegrad	7.54	7.75	7.99	8.24	8.16	8.01	8.07	8.08	8.02
CIS	-	4.50	-	-	-	-	-	-	-
SEEC	-	7.10	-	-	-	-	-	-	-
Yugoslavia	10.25	10.35	10.52	10.78	10.13	9.97	9.76	9.87	9.51
Baltic	7.88	7.24	6.63	6.36	5.99	5.76	5.48	5.33	5.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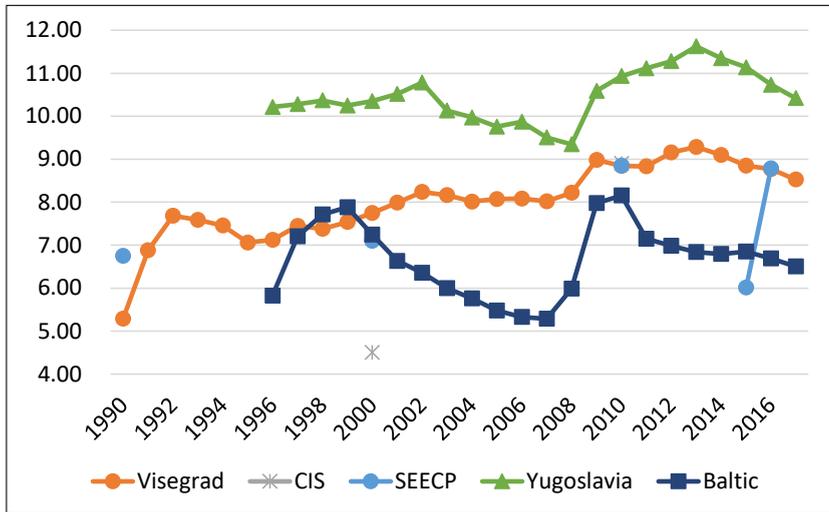
  

그룹명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Visegrad	8.22	8.98	8.84	8.83	9.15	9.28	9.10	8.85	8.77	8.53
CIS	-	-	8.90	-	-	-	-	-	-	-
SEEC	-	-	8.85	-	-	-	-	6.01	8.79	-
Yugoslavia	9.34	10.59	10.93	11.12	11.28	11.63	11.35	11.14	10.73	10.42
Baltic	5.98	7.98	8.15	7.15	6.98	6.84	6.79	6.85	6.69	6.50

자료: Pension spending (indicator) [Website]. (n.d.). <https://data.oecd.org/>에서 2021.10.05. 인출한 자료로 저자 작성.

[그림 6-53] 그룹별 GDP 대비 공공 연금지출 비율

(단위: %)



자료: Pension spending (indicator) [Website]. (n.d.). <https://data.oecd.org/>에서 2021.10.05. 인출한 자료로 저자 작성.

그룹별 GDP 대비 개인 연금지출 비율을 살펴보면 2010년까지는 ‘발틱 > 비셰그라드 > 남동유럽 > 유고연방’ 순으로 높았고, 2010년 이후에는 ‘발틱 > 유고연방 > 비셰그라드 > 남동유럽’ 순으로 높았다. 발틱의 개인 연금지출 비율은 평균 0.8%로 다른 그룹들이 0.3% 내외인 것과 비교하여 현저히 높은 편이다.

〈표 6-53〉 그룹별 GDP 대비 개인 연금지출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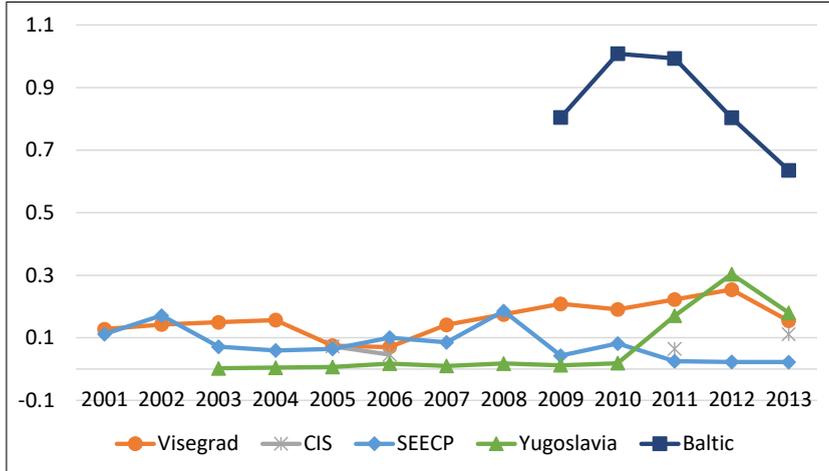
그룹명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Visegrad	0.13	0.14	0.15	0.16	0.08	0.07	
CIS	-	-	-	-	0.07	0.05	
SEECF	0.11	0.17	0.07	0.06	0.06	0.10	
Yugoslavia	-	-	0.00	0.00	0.01	0.02	
Baltic	-	-	-	-	-	-	
그룹명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Visegrad	0.14	0.17	0.21	0.19	0.22	0.25	0.15
CIS	-	-	-	-	0.06	-	0.11
SEECF	0.09	0.19	0.04	0.08	0.03	0.02	0.02
Yugoslavia	0.01	0.02	0.01	0.02	0.17	0.30	0.18
Baltic	-	-	0.80	1.01	0.99	0.80	0.64

주: 개인연금지출은 퇴직후 사적연금제도 가입자(또는 피부양자)에 대한 연금 지불액을 의미함.  
모든 유형의 연금이 포함되며(기업연금과 개인연금, 의무가입연금 및 자율가입연금, 적립식 연금 및 비적립식연금), 공공 및 민간 부문 근로자 모두를 포함함.

자료: Pension spending (indicator) [Website]. (n.d.). <https://data.oecd.org/>에서 2021.10.05. 인출한 자료로 저자 작성.

[그림 6-54] 그룹별 GDP 대비 개인 연금지출 비율

(단위: %)



주: 개인연금지출은 퇴직후 사적연금제도 가입자(또는 피부양자)에 대한 연금 지불액을 의미함. 모든 유형의 연금이 포함되며(기업연금과 개인연금, 의무가입연금 및 자의가입연금, 적립식 연금 및 비적립식연금), 공공 및 민간 부문 근로자 모두를 포함함.  
 자료: Pension spending (indicator) [Website]. (n.d.). <https://data.oecd.org/>에서 2021.10.05. 인출한 자료로 저자 작성.

## 2. 연금대체율<sup>46)</sup>

연금대체율은 퇴직 전 소득과 현재 수급하고 있는 연금을 비교했을 때 기존의 소득을 얼마나 대체하는 지를 나타낸다. 연금대체율은 총 대체율과 순 대체율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총 대체율은 연금제도를 설계하는데 있어 명확한 지표를 제공하는 반면, 순 대체율은 근로자 시와 비교하여 은퇴 시 가처분소득을 반영하므로 개인에게 더욱 중요하다.

순 대체율은 개인의 순 연금수급액을 순 은퇴 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하며, 근로자와 연금수급자가 납부하는 개인 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

46) 연금대체율은 OECD 자료를 사용하였는데, 남동유럽의 경우 OECD 회원국이 없다보니 자료가 없어 해당 부분에서는 비교하지 못하였다.

금을 고려한다. 그렇지 않으면 순 대체율의 정의 및 측정값은 총 대체율과 동일하다.

그룹별 총 대체율을 살펴보면 ‘아세안 > 독립국가연합 > 비셰그라드 > 발틱 > 유고연방’ 순으로 높게 나타난다.

〈표 6-54〉 그룹별 퇴직 전 소득 대비 총(Gross) 연금대체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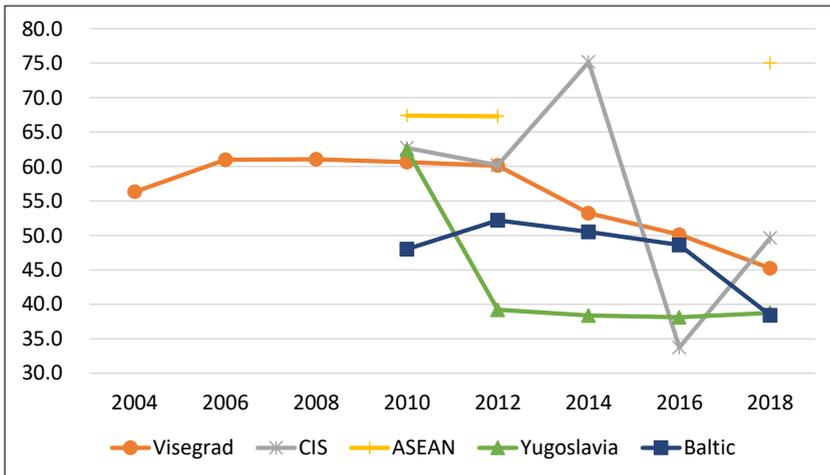
(단위: %)

그룹명	2004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Visegrad	56.3	61.0	61.1	60.6	60.1	53.2	50.1	45.2
CIS	-	-	-	62.7	60.2	75.2	33.7	49.6
ASEAN	-	-	-	67.4	67.3	-	-	75.0
Yugoslavia	-	-	-	62.4	39.2	38.4	38.1	38.8
Baltic	-	-	-	48.0	52.2	50.5	48.6	38.4

자료: OECD(2005; 2007; 2009; 2011; 2013; 2015; 2017; 2019). *Pension at a Glance*를 토대로 저자 작성.

〔그림 6-55〕 그룹별 퇴직 전 소득 대비 총(Gross) 연금대체율

(단위: %)



자료: OECD(2005; 2007; 2009; 2011; 2013; 2015; 2017; 2019). *Pension at a Glance*를 토대로 저자 작성.

그룹별 순 대체율을 살펴보면 총 대체율과 마찬가지로 ‘비셰그라드 > 아세안 > 독립국가연합 > 발틱 > 유고연방’ 순으로 높게 나타난다.

〈표 6-55〉 그룹별 퇴직 전 소득 대비 순(Net) 연금대체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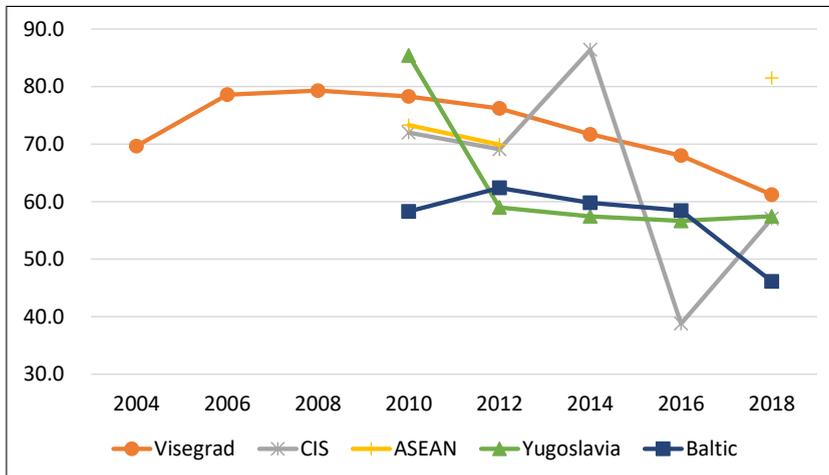
(단위: %)

그룹명	2004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Visegrad	69.7	78.6	79.3	78.3	76.2	71.7	68.0	61.2
CIS	-	-	-	72.0	69.1	86.4	38.8	57.0
ASEAN	-	-	-	73.3	69.9	-	-	81.5
Yugoslavia	-	-	-	85.4	59.0	57.4	56.7	57.5
Baltic	-	-	-	58.3	62.4	59.8	58.4	46.1

자료: OECD(2005; 2007; 2009; 2011; 2013; 2015; 2017; 2019). *Pension at a Glance*를 토대로 저자 작성.

〔그림 6-56〕 그룹별 퇴직 전 소득 대비 순(Net) 연금대체율

(단위: %)



자료: OECD(2005; 2007; 2009; 2011; 2013; 2015; 2017; 2019). *Pension at a Glance*를 토대로 저자 작성.

순 대체율에서 총 대체율을 뺀 연금대체율 개선도를 그룹별로 살펴보면 ‘유고연방 > 비셰그라드 > 독립국가연합 > 발틱 > 아세안’ 순으로 높게 나타난다.

〈표 6-56〉 그룹별 퇴직 전 소득 대비 연금대체율 개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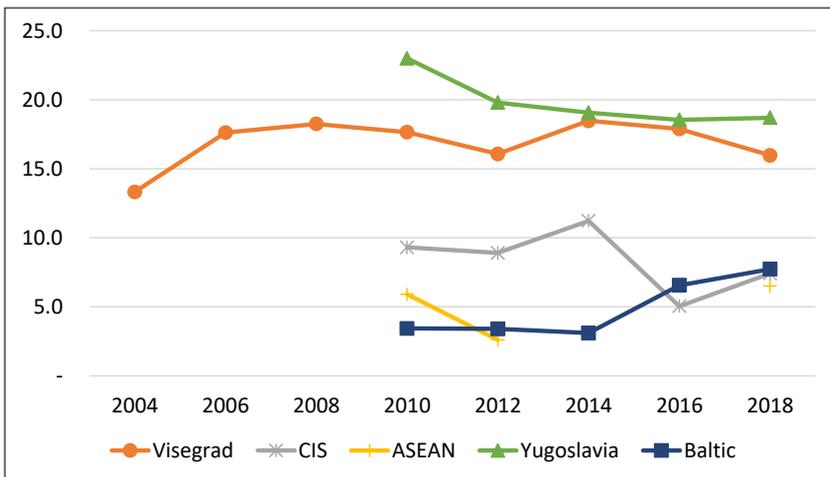
(단위: %)

그룹명	2004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Visegrad	13.3	17.6	18.3	17.7	16.1	18.5	17.9	16.0
CIS	-	-	-	9.3	8.9	11.2	5.0	7.4
ASEAN	-	-	-	5.9	2.6	-	-	6.5
Yugoslavia	-	-	-	23.0	19.8	19.1	18.5	18.7
Baltic	-	-	-	3.4	3.4	3.1	6.6	7.7

주: 연금대체율 개선도 = 순(Net) 대체율 - 총(Gross) 대체율  
 자료: OECD(2005; 2007; 2009; 2011; 2013; 2015; 2017; 2019). *Pension at a Glance*를 토대로 저자 작성.

〔그림 6-57〕 그룹별 퇴직 전 소득 대비 연금대체율 개선도(총연금대체율-순연금대체율)

(단위: %)



주: 연금대체율 개선도 = 순(Net) 대체율 - 총(Gross) 대체율  
 자료: OECD(2005; 2007; 2009; 2011; 2013; 2015; 2017; 2019). *Pension at a Glance*를 토대로 저자 작성.

### 3. 사회복지지출 규모

그룹별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을 살펴보면 ‘유고연방 > 비셰그라드 > 발틱 > 남동유럽 > 독립국가연합 > 아세안’ 순으로 높게 나타난다.

〈표 6-57〉 그룹별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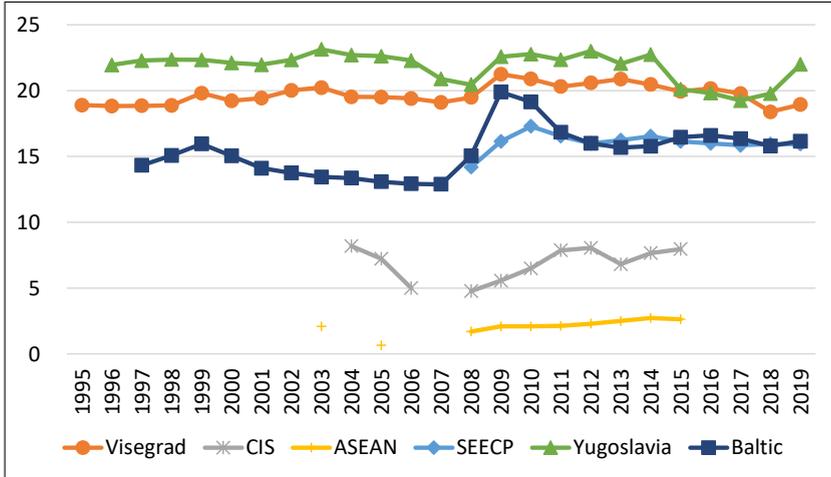
그룹명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Visegrad	18.9	18.8	18.9	18.9	19.8	19.2	19.4	20.0	
CIS	-	-	-	-	-	-	-	-	
ASEAN	-	-	-	-	-	-	-	-	
SEEC	-	-	-	-	-	-	-	-	
Yugoslavia	-	22.0	22.3	22.4	22.3	22.1	22.0	22.3	
Baltic	-	-	14.3	15.1	16.0	15.1	14.1	13.8	
그룹명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Visegrad	20.2	19.5	19.5	19.4	19.1	19.5	21.3	20.9	
CIS	-	8.2	7.2	5.0	-	4.8	5.6	6.5	
ASEAN	2.1	-	0.7	-	-	1.7	2.1	2.1	
SEEC	-	-	-	-	-	14.2	16.2	17.3	
Yugoslavia	23.1	22.7	22.6	22.3	20.9	20.5	22.6	22.8	
Baltic	13.4	13.4	13.1	12.9	12.9	15.1	19.9	19.2	
그룹명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Visegrad	20.3	20.6	20.9	20.5	19.9	20.2	19.8	18.4	19.0
CIS	7.9	8.1	6.8	7.7	8.0	-	-	-	-
ASEAN	2.1	2.3	2.5	2.7	2.6	-	-	-	-
SEEC	16.6	16.0	16.3	16.6	16.2	16.0	15.9	16.0	16.0
Yugoslavia	22.4	23.0	22.1	22.7	20.1	19.8	19.3	19.8	22.0
Baltic	16.8	16.0	15.7	15.8	16.5	16.6	16.4	15.8	16.2

주: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에서 비셰그라드와 발틱 국가들, 슬로베니아는 OECD 자료이고, 그 외 유럽국가들은 Euro stat 자료, 아시아 국가들은 ADB 자료임.

자료: Social Expenditure(Public) [Website]. (n.d.).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SOCX\\_AGG](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SOCX_AGG); Social Expenditure(Private) [Website]. (n.d.).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SOCX\\_AGG](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SOCX_AGG); Expenditure: main results (spr\_exp\_sum) [Website]. (n.d.). <https://ec.europa.eu/eurostat/data/database>; Total Social Protection Expenditure, as % of GDP [Website]. (n.d.). <https://spi.adb.org/spidmz/>에서 각각 2021.10.09. 인출한 자료로 저자 작성.

[그림 6-58] 그룹별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

(단위: %)



주: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에서 비셰그라드와 발틱 국가들, 슬로베니아는 OECD 자료이고, 그 외 유럽국가들은 Euro stat 자료, 아시아 국가들은 ADB 자료임.

자료: Social Expenditure(Public) [Website]. (n.d.).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SOCX\\_AGG](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SOCX_AGG); Social Expenditure(Private) [Website]. (n.d.).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SOCX\\_AGG](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SOCX_AGG); Expenditure: main results (spr\_exp\_sum) [Website]. (n.d.). <https://ec.europa.eu/eurostat/data/database>; Total Social Protection Expenditure, as % of GDP [Website]. (n.d.). <https://spi.adb.org/spidmz/>에서 각각 2021.10.09. 인출한 자료로 저자 작성.

그룹별 GDP 대비 공공부문 사회복지지출을 살펴보면 ‘유고연방 > 비셰그라드 > 발틱 > 남동유럽 > 독립국가연합 > 아세안’ 순으로 높게 나타난다.

〈표 6-58〉 그룹별 GDP 대비 공공부문 사회복지지출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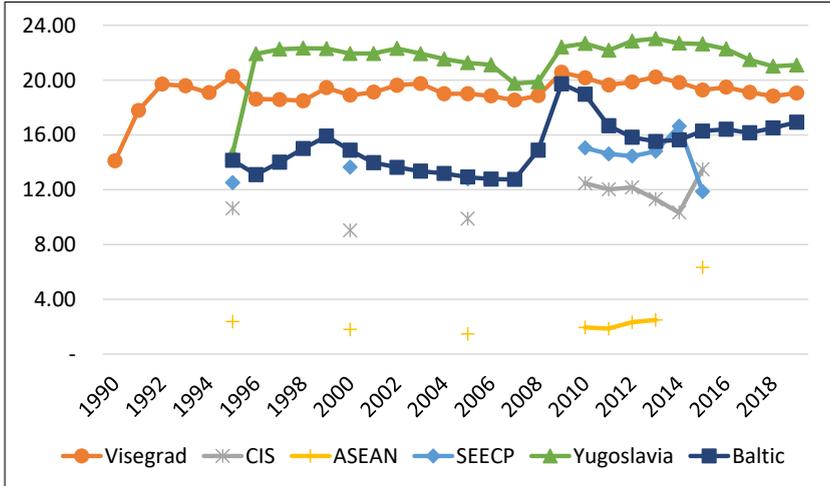
그룹명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Visegrad	14.12	17.79	19.71	19.59	19.09	20.28	18.62	18.59	18.50	19.45
CIS	-	-	-	-	-	10.65	-	-	-	-
ASEAN	-	-	-	-	-	9.14	-	-	-	-
SEECF	-	-	-	-	-	12.52	-	-	-	-
Yugoslavia	-	-	-	-	-	14.63	21.93	22.27	22.34	22.32
Baltic	-	-	-	-	-	14.16	13.11	14.02	15.00	15.92
그룹명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Visegrad	18.91	19.13	19.63	19.76	19.01	19.01	18.86	18.55	18.87	20.57
CIS	9.04	-	-	-	-	9.90	-	-	-	-
ASEAN	1.82	-	-	-	-	1.48	-	-	-	-
SEECF	13.66	-	-	-	-	12.79	-	-	-	-
Yugoslavia	21.94	21.95	22.32	21.94	21.55	21.27	21.13	19.76	19.88	22.43
Baltic	14.89	13.99	13.64	13.36	13.20	12.93	12.79	12.76	14.89	19.74
그룹명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Visegrad	20.18	19.65	19.86	20.24	19.84	19.29	19.49	19.12	18.83	19.07
CIS	12.48	12.04	12.17	11.32	10.33	13.50	-	-	-	-
ASEAN	1.95	1.86	2.33	2.50	-	6.33	-	-	-	-
SEECF	15.06	14.62	14.46	14.82	16.65	11.87	-	-	-	-
Yugoslavia	22.69	22.18	22.86	23.03	22.70	22.65	22.29	21.50	21.02	21.11
Baltic	18.98	16.68	15.83	15.53	15.64	16.29	16.41	16.16	16.52	16.94

주: 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는 OECD 자료이고, 그 외의 국가는 ILO에서 집계한 자료임.

자료: Social Expenditure(Public) [Website]. (n.d.).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SOEX\\_AGG](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SOEX_AGG); Public social protection expenditure, 1995 to latest available year (percentage of GDP) [Website]. (n.d.). <http://www.social-protection.org/gimi/gess/RessourceDownload.action?ressource.ressourceId=54614>에서 각각 2021.10.09. 인출한 자료로 저자 작성.

[그림 6-59] 그룹별 GDP 대비 공공부문 사회복지지출 비율

(단위: %)



주: 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는 OECD 자료이고, 그 외의 국가는 ILO에서 집계한 자료임.

자료: Social Expenditure(Public) [Website]. (n.d.).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SOEX\\_AGG](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SOEX_AGG); Public social protection expenditure, 1995 to latest available year (percentage of GDP) [Website]. (n.d.). <http://www.social-protection.org/gimi/gess/RessourceDownload.action?ressource.ressourceId=54614>에서 각각 2021.10.09. 인출한 자료로 저자 작성.

그룹별 GDP 대비 법정민간부문 사회복지지출을 살펴보면 ‘유고연방 > 비셰그라드 > 발틱’ 순으로 높게 나타난다.

〈표 6-59〉 그룹별 GDP 대비 법정민간부문 사회복지지출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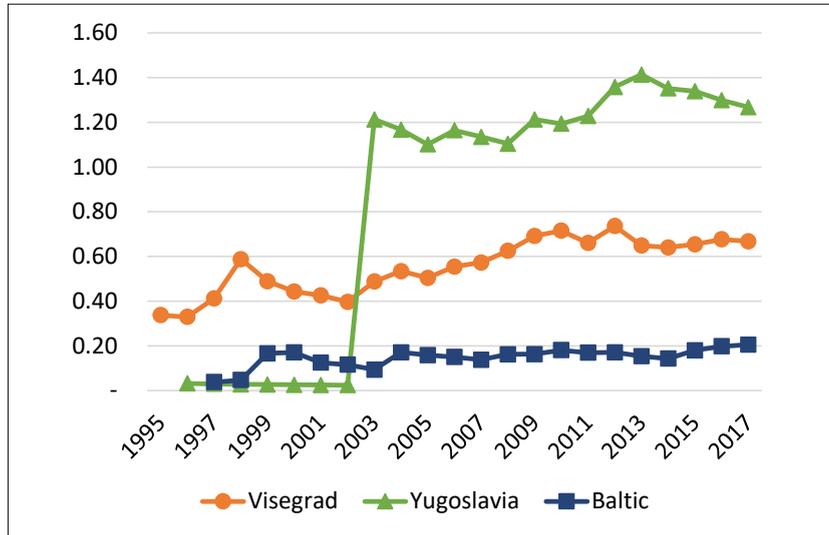
(단위: %)

그룹명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Visegrad	0.34	0.33	0.41	0.59	0.49	0.44	0.43	0.40
Yugoslavia	-	0.03	0.03	0.03	0.03	0.03	0.03	0.02
Baltic	-	-	0.04	0.05	0.17	0.17	0.13	0.12
그룹명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Visegrad	0.49	0.53	0.50	0.55	0.57	0.63	0.69	0.72
Yugoslavia	1.21	1.17	1.10	1.16	1.14	1.10	1.21	1.19
Baltic	0.09	0.17	0.16	0.15	0.14	0.16	0.16	0.18
그룹명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Visegrad	0.66	0.74	0.65	0.64	0.65	0.68	0.67	
Yugoslavia	1.23	1.36	1.41	1.35	1.34	1.30	1.27	
Baltic	0.17	0.17	0.15	0.14	0.18	0.20	0.21	

자료: Social Expenditure(Private) [Website]. (n.d.).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SOCX\\_AGG](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SOCX_AGG)에서 2021.10.09. 인출한 자료로 저자 작성.

〔그림 6-60〕 그룹별 GDP 대비 법정민간부문 사회복지지출 비율

(단위: %)



자료: Social Expenditure(Private) [Website]. (n.d.).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SOCX\\_AGG](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SOCX_AGG)에서 2021.10.09. 인출한 자료로 저자 작성.

그룹별 1인당 사회복지지출비용을 살펴보면 ‘유고연방 > 비셰그라드 > 발틱 > 남동유럽 > 독립국가연합 > 아세안’ 순으로 높게 나타난다.

〈표 6-60〉 그룹별 1인당 사회복지지출 비용

(단위: \$)

그룹명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Visegrad	882.3	973.7	947.2	1,030.4	1,039.3	983.4	1,091.8	1,313.7	
CIS	-	-	-	-	-	-	-	-	
ASEAN	-	-	-	-	-	-	-	-	
SEEC	-	-	-	-	-	-	-	-	
Yugoslavia	-	2,374.7	2,331.1	2,500.0	2,558.9	2,256.6	2,302.9	2,631.5	
Baltic	-	-	384.2	448.1	579.8	535.8	543.1	621.2	
그룹명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Visegrad	1,633.3	1,900.0	2,141.0	2,340.3	2,820.3	3,422.2	3,211.3	3,238.0	
CIS	-	74.3	36.9	123.7	-	98.8	105.6	144.0	
ASEAN	10.1	-	3.1	-	-	18.3	23.6	26.2	
SEEC	-	-	-	-	-	1,248.8	1,255.0	1,301.2	
Yugoslavia	3,437.3	3,915.0	4,094.9	4,385.1	4,971.1	3,454.9	3,438.9	3,341.6	
Baltic	798.0	980.1	1,126.7	1,355.2	1,836.4	2,481.0	2,573.4	2,425.4	
그룹명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Visegrad	3,451.1	3,244.1	3,417.8	3,421.1	2,949.2	3,034.2	3,276.7	3,430.3	3,060.4
CIS	243.1	274.9	238.8	262.0	239.5	-	-	-	-
ASEAN	29.6	36.4	43.4	50.1	52.6	-	-	-	-
SEEC	1,399.5	1,269.5	1,385.0	1,462.9	1,279.2	1,353.8	1,503.9	1,726.6	1,801.8
Yugoslavia	3,572.0	3,282.0	3,438.9	3,445.4	2,356.9	2,206.4	2,324.2	2,965.5	4,508.4
Baltic	2,563.4	2,442.6	2,615.8	2,774.1	2,510.2	2,656.3	2,898.9	3,179.9	3,29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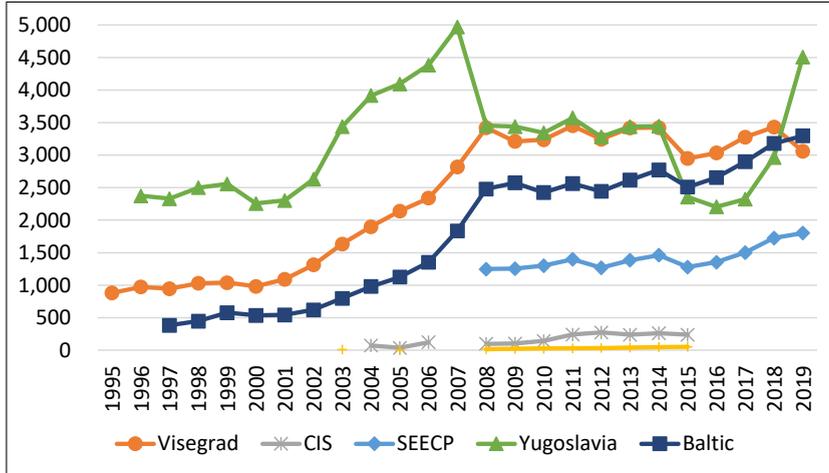
주: 1)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에서 비셰그라드와 발틱 국가들, 슬로베니아는 OECD 자료이고, 그 외 유럽국가들은 Euro stat 자료, 아시아 국가들은 ADB 자료임.

2) 세계은행의 국가별 GDP와 인구수 자료를 가지고 1인당 사회복지지출 계산함.

자료: Social Expenditure(Public) [Website]. (n.d.).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SOCX\\_AGG](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SOCX_AGG); Social Expenditure(Private) [Website]. (n.d.).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SOCX\\_AGG](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SOCX_AGG); Expenditure: main results (spr\_exp\_sum) [Website]. (n.d.). <https://ec.europa.eu/eurostat/data/database>; Total Social Protection Expenditure, as % of GDP [Website]. (n.d.). <https://spi.adb.org/spidmz/>에서 각각 2021.10.09. 인출한 자료로 저자 작성.

[그림 6-61] 그룹별 1인당 사회복지지출 비용

(단위: \$)



주: 1)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에서 비세그라드와 발틱 국가들, 슬로베니아는 OECD 자료이고, 그 외 유럽국가들은 Euro stat 자료, 아시아 국가들은 ADB 자료임.  
 2) 세계은행의 국가별 GDP와 인구수 자료를 가지고 1인당 사회복지지출 계산함.  
 자료: Social Expenditure(Public) [Website]. (n.d.).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SOCX\\_AGG](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SOCX_AGG); Social Expenditure(Private) [Website]. (n.d.).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SOCX\\_AGG](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SOCX_AGG); Expenditure: main results (spr\_exp\_sum) [Website]. (n.d.). <https://ec.europa.eu/eurostat/data/database>; Total Social Protection Expenditure, as % of GDP [Website]. (n.d.). <https://spi.adb.org/spidmz/>에서 각각 2021.10.09. 인출한 자료로 저자 작성.

#### 4. 국민부담률

조세부담률은 국내총생산(GDP)에서 조세(국세+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며 정부가 국민에게 어느 정도의 조세를 징수하는가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조세부담률이 국민의 조세부담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이기는 하나 국민들이 강제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연금 및 사회보험의 부담은 나타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OECD에서는 미래에 보장급부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모든 강제적인 납부액으로 정의되는 사회보장기여금(social security contributions)을 일종의 조세

로 분류하여 국민부담률을 산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부담률이란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조세부담률+사회보장부담률)이다. 국민들은 강제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의 사회보장기여금을 세금과 비슷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국민부담률이 실제 국민들이 체감하는 부담의 수준을 더 정확히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그룹별 GDP 대비 국민부담률을 살펴보면 '비셰그라드 > 유고연방 > 발틱 > 남동유럽 > 독립국가연합 > 아세안' 순으로 높게 나타난다.

〈표 6-61〉 그룹별 GDP 대비 국민부담률

(단위: %)

그룹명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Visegrad	-	39.3	40.3	40.4	38.2	37.8	36.9	35.9	35.3	35.3
CIS	-	15.8	16.0	16.3	13.6	18.2	18.9	20.4	19.9	19.1
ASEAN	6.2	5.6	5.0	4.7	9.3	9.3	9.6	8.9	8.0	7.6
SEEC	33.2	32.0	30.2	27.0	26.7	21.4	20.6	21.5	24.6	21.5
Yugoslavia	-	-	26.7	28.5	33.9	37.1	36.6	35.6	32.5	32.2
Baltic	-	-	-	-	-	30.8	30.1	31.7	32.6	31.8
그룹명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Visegrad	34.4	33.9	34.1	34.1	33.8	33.8	33.3	34.3	34.0	32.8
CIS	19.0	19.8	18.5	18.4	18.5	19.7	21.0	22.1	22.9	20.6
ASEAN	8.7	8.7	8.5	9.4	9.7	9.8	10.4	11.0	11.4	11.2
SEEC	26.0	25.1	25.7	26.9	27.2	27.1	27.4	27.8	27.4	25.7
Yugoslavia	31.5	30.8	29.6	30.1	29.7	31.2	32.0	34.5	34.2	32.9
Baltic	30.3	29.3	29.3	29.0	29.2	29.0	29.8	29.8	29.9	31.1
그룹명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Visegrad	32.2	32.6	33.4	33.8	33.8	34.3	35.0	35.3	35.5	35.2
CIS	20.4	21.1	21.3	21.5	21.2	20.6	20.2	20.3	21.3	22.4
ASEAN	11.6	11.6	11.3	12.1	12.6	12.7	12.8	12.8	13.1	11.6
SEEC	25.5	25.5	25.7	25.9	26.5	26.7	26.8	26.9	27.3	22.7
Yugoslavia	32.6	32.2	32.6	30.4	31.0	30.9	31.2	31.3	31.7	29.7
Baltic	30.0	28.9	29.2	29.2	29.7	30.6	31.4	31.1	31.4	3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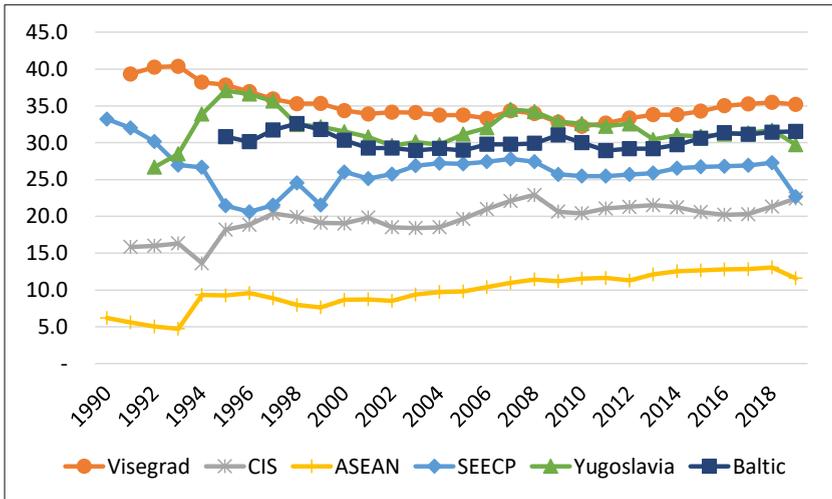
344 남북한 사회격차 완화를 위한 북한의 의식주 생활 지표 분석

- 주: 1) 국민부담률 = 조세부담률(조세/GDP) + 사회보장부담률(사회보장기여금/GDP)
- 2)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불가리아, 카자흐스탄, 라오스, 몽골, 베트남의 국민부담률은 OECD 자료이고, OECD 자료에서 없는 연도는 IMF 자료의 조세부담률과 사회보장부담률을 더한 값임
- 3) 리투아니아 1997~1999년, 2003년의 국민부담률은 OECD 자료임

자료: Total tax revenue (excluding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as percentage of GDP, 1990-2019 [Website]. (n.d). [https://www.oecd-ilibrary.org/taxation/total-tax-revenue-excluding-social-security-contributions-as-percentage-of-gdp-1990-2019\\_c437f0d8-en](https://www.oecd-ilibrary.org/taxation/total-tax-revenue-excluding-social-security-contributions-as-percentage-of-gdp-1990-2019_c437f0d8-en); Tax Revenue in Percent of GDP [Website]. (n.d.). <https://data.imf.org/>; Social Contributions in Percent of GDP [Website]. (n.d.). <https://data.imf.org/>에서 각각 2021.10.09. 인출한 자료로 저자 작성.

[그림 6-62] 그룹별 GDP 대비 국민부담률

(단위: %)



- 주: 1) 국민부담률 = 조세부담률(조세/GDP) + 사회보장부담률(사회보장기여금/GDP)
- 2)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불가리아, 카자흐스탄, 라오스, 몽골, 베트남의 국민부담률은 OECD 자료이고, OECD 자료에서 없는 연도는 IMF 자료의 조세부담률과 사회보장부담률을 더한 값임
- 3) 리투아니아 1997~1999년, 2003년의 국민부담률은 OECD 자료임

자료: Total tax revenue (excluding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as percentage of GDP, 1990-2019 [Website]. (n.d). [https://www.oecd-ilibrary.org/taxation/total-tax-revenue-excluding-social-security-contributions-as-percentage-of-gdp-1990-2019\\_c437f0d8-en](https://www.oecd-ilibrary.org/taxation/total-tax-revenue-excluding-social-security-contributions-as-percentage-of-gdp-1990-2019_c437f0d8-en); Tax Revenue in Percent of GDP [Website]. (n.d.). <https://data.imf.org/>; Social Contributions in Percent of GDP [Website]. (n.d.). <https://data.imf.org/>에서 각각 2021.10.09. 인출한 자료로 저자 작성.

## 5. 의료비 지출

그룹별 경상의료비 대비 정부 의료비 비율을 살펴보면 ‘비셰그라드 > 유고연방 > 발틱 > 남동유럽 > 독립국가연합 > 아세안’ 순으로 높게 나타난다.

〈표 6-62〉 그룹별 경상의료비 대비 정부 의료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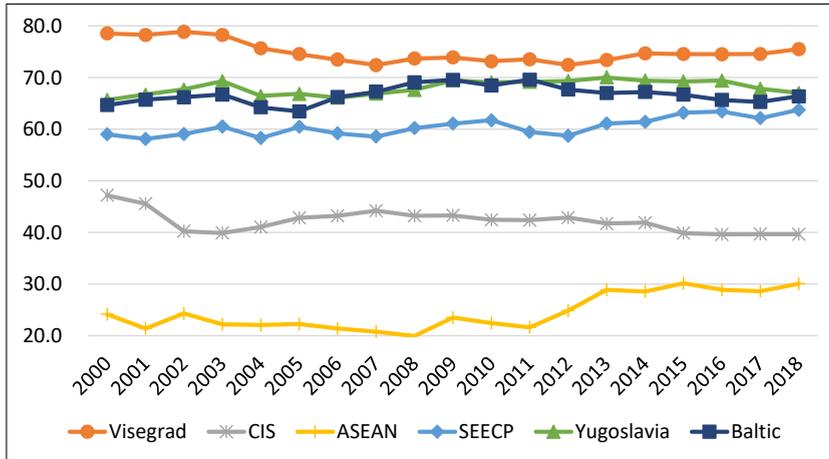
(단위: %)

그룹명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Visegrad	78.6	78.3	78.9	78.3	75.7	74.6	73.5	72.4	73.7	73.9
CIS	47.2	45.6	40.3	39.9	41.1	42.8	43.3	44.2	43.3	43.3
ASEAN	24.2	21.4	24.3	22.2	22.1	22.3	21.4	20.8	20.0	23.5
SEECP	59.0	58.1	59.1	60.5	58.3	60.5	59.2	58.6	60.2	61.1
Yugoslavia	65.7	66.7	67.7	69.3	66.5	66.8	66.1	66.9	67.6	69.4
Baltic	64.7	65.7	66.2	66.7	64.2	63.5	66.2	67.3	69.1	69.6
그룹명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Visegrad	73.2	73.6	72.5	73.4	74.7	74.6	74.5	74.6	75.5	
CIS	42.5	42.4	42.9	41.7	41.9	39.9	39.6	39.7	39.7	
ASEAN	22.5	21.6	24.9	28.9	28.6	30.2	28.9	28.6	30.1	
SEECP	61.8	59.5	58.7	61.1	61.4	63.2	63.4	62.2	63.8	
Yugoslavia	69.1	69.2	69.4	70.0	69.4	69.3	69.4	67.8	67.0	
Baltic	68.5	69.6	67.7	67.0	67.2	66.7	65.7	65.3	66.4	

자료: Domestic general government health expenditure (% of current health expenditure) [Website]. (n.d.).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에서 2021.10.09. 인출한 자료로 저자 작성.

[그림 6-63] 그룹별 경상의료비 대비 정부 의료비 비율

(단위: %)



자료: Domestic general government health expenditure (% of current health expenditure) [Website]. (n.d.).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에서 2021.10.09. 인출한 자료로 저자 작성.

그룹별 경상의료비 대비 민간 의료비 비율을 살펴보면 정부 의료비 비율과 반대로 ‘아세안 > 독립국가연합 > 남동유럽 > 발틱 > 유고연방 > 비셰그라드’ 순으로 높게 나타난다.

<표 6-63> 그룹별 경상의료비 대비 민간 의료비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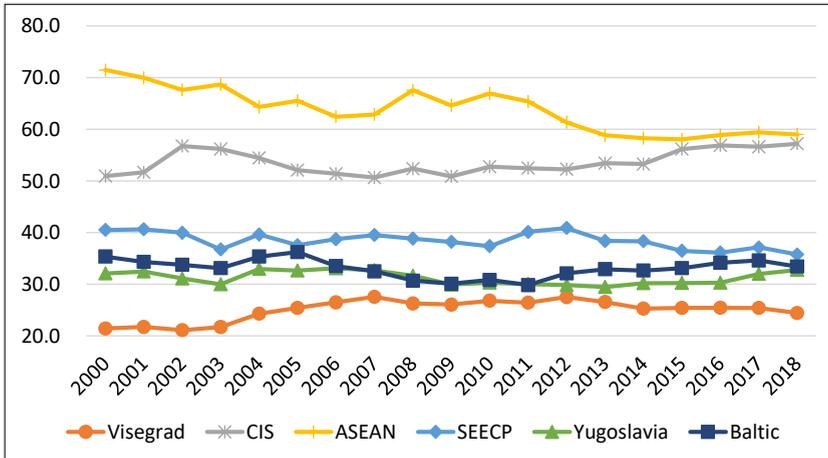
그룹명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Visegrad	21.4	21.7	21.1	21.7	24.3	25.4	26.5	27.6	26.3	26.1
CIS	51.0	51.7	56.8	56.2	54.5	52.1	51.4	50.7	52.4	50.9
ASEAN	71.5	70.0	67.6	68.7	64.4	65.5	62.4	62.9	67.6	64.6
SEECP	40.5	40.7	40.0	36.7	39.6	37.6	38.7	39.5	38.8	38.2
Yugoslavia	32.1	32.5	31.1	30.0	33.0	32.7	33.1	32.7	31.7	29.9
Baltic	35.4	34.3	33.8	33.1	35.4	36.2	33.5	32.5	30.7	30.1

그룹명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Visegrad	26.8	26.4	27.5	26.6	25.3	25.4	25.5	25.4	24.5
CIS	52.8	52.5	52.3	53.5	53.3	56.2	56.9	56.6	57.2
ASEAN	67.0	65.4	61.4	58.9	58.3	58.1	58.9	59.4	59.0
SEECF	37.4	40.1	40.9	38.4	38.3	36.5	36.2	37.2	35.8
Yugoslavia	30.3	30.0	29.9	29.5	30.2	30.3	30.3	32.0	32.8
Baltic	30.8	29.9	32.1	32.9	32.7	33.1	34.2	34.6	33.4

자료: Domestic private health expenditure (% of current health expenditure) [Website]. (n.d.).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에서 2021.10.09. 인출한 자료로 저자 작성.

[그림 6-64] 그룹별 경상의료비 대비 민간 의료비 비율

(단위: %)



자료: Domestic private health expenditure (% of current health expenditure) [Website]. (n.d.).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에서 2021.10.09. 인출한 자료로 저자 작성.

그룹별 경상의료비 대비 본인 부담 지출 비율을 살펴보면 민간 의료비 비율과 동일하게 ‘아세안 > 독립국가연합 > 남동유럽 > 발틱 > 유고연방 > 비셰그라드’ 순으로 높게 나타난다.

〈표 6-64〉 그룹별 경상의료비 대비 본인 부담 지출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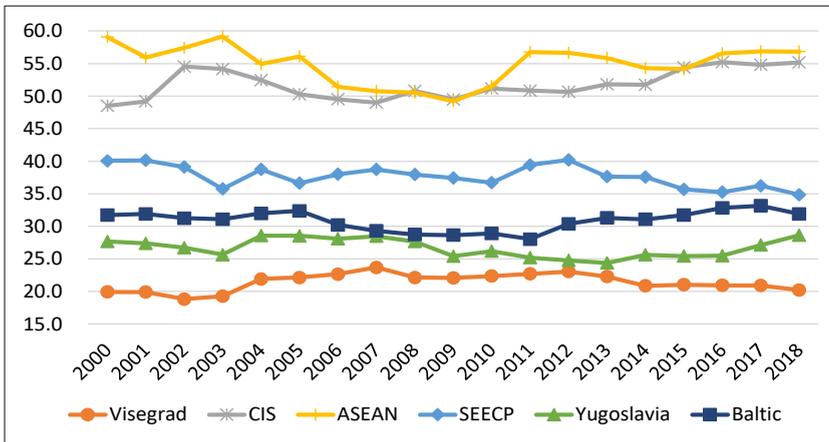
(단위: %)

그룹명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Visegrad	19.9	19.9	18.8	19.3	21.9	22.1	22.6	23.7	22.1	22.1
CIS	48.5	49.2	54.6	54.2	52.5	50.3	49.5	49.0	50.8	49.5
ASEAN	59.1	55.9	57.4	59.2	54.9	56.1	51.4	50.8	50.5	49.2
SEEC	40.1	40.1	39.1	35.7	38.7	36.6	38.0	38.7	38.0	37.4
Yugoslavia	27.7	27.4	26.7	25.6	28.6	28.5	28.1	28.5	27.6	25.4
Baltic	31.7	31.9	31.2	31.1	32.0	32.4	30.2	29.3	28.7	28.6
그룹명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Visegrad	22.3	22.7	23.0	22.3	20.9	21.0	20.9	20.9	20.2	
CIS	51.2	50.8	50.6	51.8	51.7	54.4	55.2	54.8	55.2	
ASEAN	51.5	56.8	56.6	55.9	54.3	54.2	56.6	56.9	56.9	
SEEC	36.7	39.4	40.2	37.6	37.6	35.7	35.3	36.2	34.9	
Yugoslavia	26.2	25.2	24.8	24.4	25.6	25.4	25.5	27.1	28.6	
Baltic	28.9	28.0	30.4	31.3	31.1	31.7	32.8	33.2	31.9	

자료: Out-of-pocket expenditure (% of current health expenditure) [Website]. (n.d).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에서 2021.10.09. 인출한 자료로 저자 작성.

〔그림 6-65〕 그룹별 경상의료비 대비 본인 부담 지출 비율

(단위: %)



자료: Out-of-pocket expenditure (% of current health expenditure) [Website]. (n.d).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에서 2021.10.09. 인출한 자료로 저자 작성.

## 6. 병상수 및 의사수

그룹별 병상수를 살펴보면 1990년대에는 발틱과 독립국가연합이 가장 많았고, 2000년대부터는 발틱과 비셰그라드가 인구 1,000명당 병상수 8개로 가장 많았다. 2010년대에는 ‘남동유럽 > 비셰그라드 > 발틱 > 독립국가연합 > 유고연방 > 아세안’ 순으로 높게 나타난다.

〈표 6-65〉 그룹별 병상 수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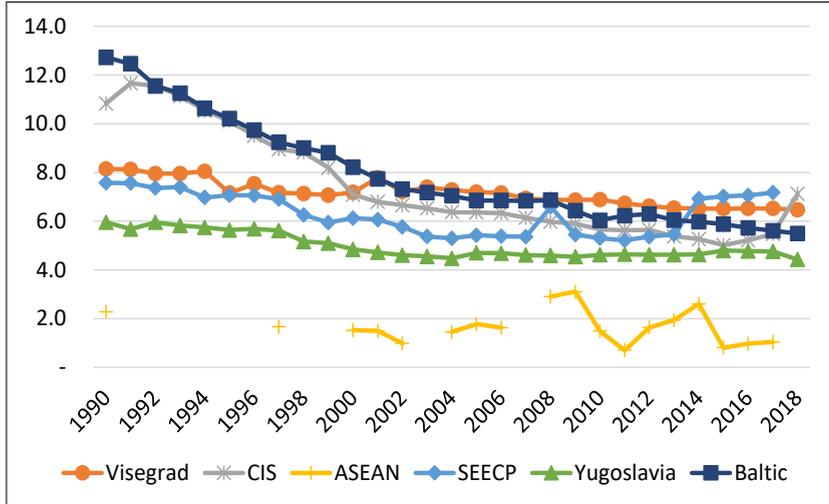
그룹명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Visegrad	8.1	8.1	8.0	8.0	8.0	7.2	7.5	7.2	7.1	7.1
CIS	10.8	11.7	11.5	11.2	10.5	10.1	9.5	9.0	8.8	8.2
ASEAN	2.3	-	-	-	-	-	-	1.7	-	-
SEEC	7.6	7.6	7.4	7.4	7.0	7.1	7.1	6.9	6.3	5.9
Yugoslavia	6.0	5.7	5.9	5.8	5.7	5.6	5.7	5.6	5.2	5.1
Baltic	12.7	12.5	11.6	11.3	10.6	10.2	9.7	9.2	9.0	8.8
그룹명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Visegrad	7.2	7.8	7.2	7.4	7.3	7.2	7.2	6.9	6.9	6.9
CIS	7.1	6.8	6.7	6.5	6.4	6.4	6.3	6.1	6.0	5.9
ASEAN	1.5	1.5	1.0	-	1.5	1.8	1.6	-	2.9	3.1
SEEC	6.1	6.1	5.8	5.4	5.3	5.4	5.4	5.4	6.6	5.5
Yugoslavia	4.8	4.7	4.6	4.6	4.5	4.7	4.7	4.6	4.6	4.5
Baltic	8.2	7.7	7.3	7.2	7.0	6.9	6.9	6.8	6.9	6.4
그룹명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Visegrad	6.9	6.7	6.6	6.5	6.5	6.5	6.5	6.5	6.5	
CIS	5.7	5.6	5.6	5.4	5.3	5.0	5.2	5.5	7.1	
ASEAN	1.5	0.7	1.6	1.9	2.6	0.8	1.0	1.0	-	
SEEC	5.3	5.2	5.4	5.5	6.9	7.0	7.1	7.2	-	
Yugoslavia	4.6	4.6	4.6	4.6	4.6	4.8	4.8	4.8	4.4	
Baltic	6.0	6.2	6.3	6.0	6.0	5.9	5.7	5.6	5.5	

자료: Hospital beds (per 1,000 people) [Website]. (n.d.).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에서 2021.10.09. 인출한 자료로 저자 작성.

[그림 6-66] 그룹별 병상 수

(단위: %)



자료: Hospital beds (per 1,000 people) [Website]. (n.d).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에서 2021.10.09. 인출한 자료로 저자 작성.

그룹별 의사수를 살펴보면 ‘발틱 > 비셰그라드 > 남동유럽 > 독립국가 연합 > 유고연방 > 아세안’ 순으로 높게 나타난다.

<표 6-66> 그룹별 의사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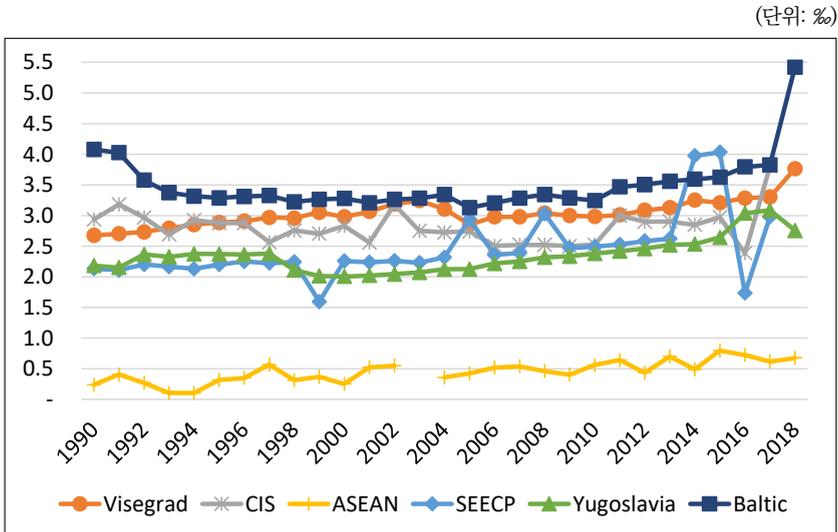
(단위: %)

그룹명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Visegrad	2.7	2.7	2.7	2.8	2.9	2.9	2.9	3.0	3.0	3.1
CIS	2.9	3.2	3.0	2.7	2.9	2.9	2.9	2.6	2.8	2.7
ASEAN	0.2	0.4	0.3	0.1	0.1	0.3	0.3	0.6	0.3	0.4
SEECP	2.1	2.1	2.2	2.2	2.1	2.2	2.3	2.2	2.2	1.6
Yugoslavia	2.2	2.2	2.4	2.3	2.4	2.4	2.4	2.4	2.1	2.0
Baltic	4.1	4.0	3.6	3.4	3.3	3.3	3.3	3.3	3.2	3.3

그룹명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Visegrad	3.0	3.1	3.2	3.2	3.1	2.9	3.0	3.0	3.0	3.0
CIS	2.8	2.6	3.2	2.8	2.7	2.7	2.5	2.5	2.5	2.5
ASEAN	0.3	0.5	0.6	-	0.4	0.4	0.5	0.5	0.5	0.4
SEECP	2.3	2.2	2.3	2.2	2.3	2.9	2.4	2.4	3.0	2.5
Yugoslavia	2.0	2.0	2.0	2.1	2.1	2.1	2.2	2.3	2.3	2.3
Baltic	3.3	3.2	3.3	3.3	3.3	3.1	3.2	3.3	3.3	3.3
그룹명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Visegrad	3.0	3.0	3.1	3.1	3.3	3.2	3.3	3.3	3.8	
CIS	2.5	3.0	2.9	2.9	2.8	3.0	2.4	3.8	-	
ASEAN	0.6	0.6	0.4	0.7	0.5	0.8	0.7	0.6	0.7	
SEECP	2.5	2.5	2.6	2.6	4.0	4.0	1.7	3.0	-	
Yugoslavia	2.4	2.4	2.5	2.5	2.5	2.6	3.0	3.1	2.8	
Baltic	3.2	3.5	3.5	3.6	3.6	3.6	3.8	3.8	5.4	

자료: Physicians (per 1,000 people) [Website]. (n.d.).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에서 2021.10.09. 인출한 자료로 저자 작성.

[그림 6-67] 그룹별 의사 수



자료: Physicians (per 1,000 people) [Website]. (n.d.).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에서 2021.10.09. 인출한 자료로 저자 작성.

그룹별 의사 1인당 병상수를 살펴보면 ‘아세안 > 독립국가연합 > 남동유럽 > 비셰그라드 > 유고연방 > 발틱’ 순으로 높게 나타난다.

〈표 6-67〉 그룹별 의사 1인당 병상 수

(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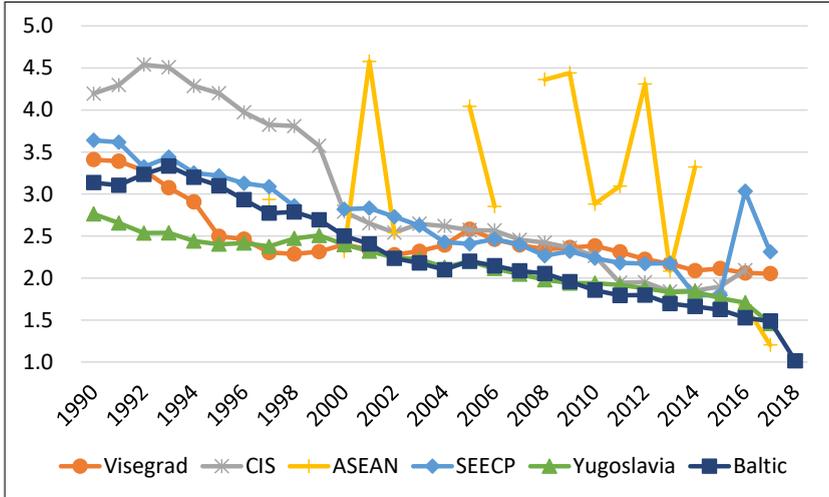
그룹명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Visegrad	3.4	3.4	3.3	3.1	2.9	2.5	2.5	2.3	2.3	2.3
CIS	4.2	4.3	4.5	4.5	4.3	4.2	4.0	3.8	3.8	3.6
ASEAN	9.5	-	-	-	-	-	-	2.9	-	-
SEECF	3.6	3.6	3.3	3.4	3.3	3.2	3.1	3.1	2.9	-
Yugoslavia	2.8	2.7	2.5	2.5	2.4	2.4	2.4	2.4	2.5	2.5
Baltic	3.1	3.1	3.2	3.3	3.2	3.1	2.9	2.8	2.8	2.7
그룹명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Visegrad	2.4	2.3	2.3	2.3	2.4	2.6	2.5	2.4	2.3	2.4
CIS	2.8	2.7	2.5	2.6	2.6	2.6	2.6	2.5	2.4	2.4
ASEAN	2.3	4.6	2.5	-	-	4.0	2.9	-	4.4	4.4
SEECF	2.8	2.8	2.7	2.6	2.4	2.4	2.5	2.4	2.3	2.3
Yugoslavia	2.4	2.3	2.2	2.2	2.1	2.2	2.1	2.0	2.0	1.9
Baltic	2.5	2.4	2.2	2.2	2.1	2.2	2.1	2.1	2.1	2.0
그룹명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Visegrad	2.4	2.3	2.2	2.2	2.1	2.1	2.1	2.1	1.8	
CIS	2.3	1.9	2.0	1.8	1.9	1.9	2.1	-	-	
ASEAN	2.9	3.1	4.3	2.1	3.3	-	1.7	1.2	-	
SEECF	2.2	2.2	2.2	2.2	1.8	1.8	3.0	2.3	-	
Yugoslavia	1.9	1.9	1.9	1.8	1.8	1.8	1.7	1.5	-	
Baltic	1.9	1.8	1.8	1.7	1.7	1.6	1.5	1.5	1.0	

자료: Physicians (per 1,000 people) [Website]. (n.d.).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 Hospital beds (per 1,000 people) [Website]. (n.d.).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에서 각각 2021.10.09. 인출한 자료로 저자 작성.

[그림 6-68] 그룹별 의사 1인당 병상 수

(단위: 개)



자료: Physicians (per 1,000 people) [Website]. (n.d).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 Hospital beds (per 1,000 people) [Website].  
 (n.d).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에서 각각 2021.10.09. 인출한 자료로 저  
 자 작성.

## 7. 국민 1인당 연간 진료 횟수<sup>47)</sup>

그룹별 국민 1인당 연간 진료 횟수를 살펴보면 ‘독립국가연합 > 비셰그라드 > 발틱 > 유고연방’ 순으로 나타난다.

47) 국민 1인당 연간 진료 횟수는 OECD 자료를 사용하였는데, 남동유럽 및 아세안의 경우 OECD 회원국이 없으므로 자료가 없어 해당 부분에서는 비교하지 못하였다.

〈표 6-68〉 그룹별 국민 1인당 연간 진료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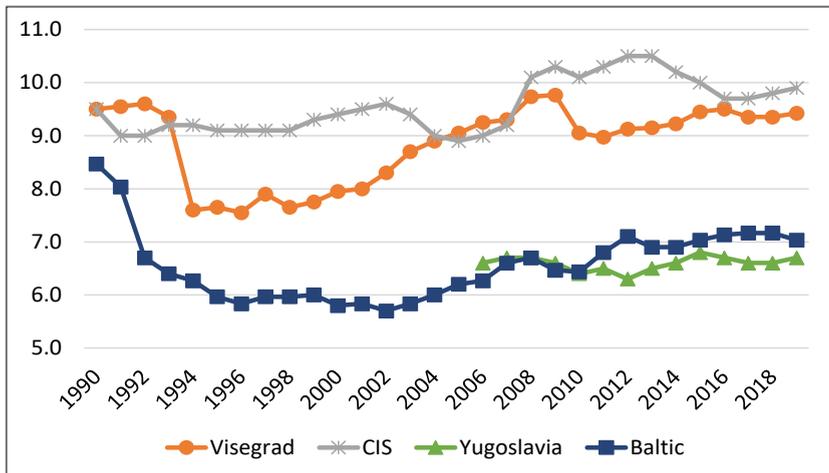
(단위: 회)

그룹명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Visegrad	9.5	9.6	9.6	9.4	7.6	7.7	7.6	7.9	7.7	7.8
CIS	9.5	9.0	9.0	9.2	9.2	9.1	9.1	9.1	9.1	9.3
Yugoslavia	-	-	-	-	-	-	-	-	-	-
Baltic	8.5	8.0	6.7	6.4	6.3	6.0	5.8	6.0	6.0	6.0
그룹명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Visegrad	8.0	8.0	8.3	8.7	8.9	9.1	9.3	9.3	9.7	9.8
CIS	9.4	9.5	9.6	9.4	9.0	8.9	9.0	9.2	10.1	10.3
Yugoslavia	-	-	-	-	-	-	6.6	6.7	6.7	6.6
Baltic	5.8	5.8	5.7	5.8	6.0	6.2	6.3	6.6	6.7	6.5
그룹명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Visegrad	9.1	9.0	9.1	9.2	9.2	9.5	9.5	9.4	9.4	9.4
CIS	10.1	10.3	10.5	10.5	10.2	10.0	9.7	9.7	9.8	9.9
Yugoslavia	6.4	6.5	6.3	6.5	6.6	6.8	6.7	6.6	6.6	6.7
Baltic	6.4	6.8	7.1	6.9	6.9	7.0	7.1	7.2	7.2	7.0

자료: Doctors consultations (in all settings) [Website]. (n.d.). <https://data.oecd.org/>에서 2021.10.09. 인출한 자료로 저자 작성.

〔그림 6-69〕 그룹별 국민 1인당 연간 진료 횟수

(단위: 회)



자료: Doctors consultations (in all settings) [Website]. (n.d.). <https://data.oecd.org/>에서 2021.10.09. 인출한 자료로 저자 작성.

## 제5절 체제전환국의 성과와 한계

이상의 정치, 경제, 사회 부문, 보건복지 지표에서의 그룹별 순위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정치 부문은 자유와 민주주의 측면에서 발틱과 비셰그라드가 상위권, 남동유럽과 유고연방이 중위권, 독립국가연합과 아세안이 하위권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경제 부문에서 경제수준(GDP, GNI, 수출입규모)에서는 정치 지표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발틱과 비셰그라드가 상위권, 남동유럽과 유고연방이 중위권, 독립국가연합과 아세안이 하위권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 지하경제,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지표에서는 독립국가연합과 아세안이 상위권, 남동유럽과 유고연방이 중위권, 발틱과 비셰그라드가 하위권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지니계수와 빈곤율 부문에서는 남동유럽과 발틱이 상위권, 유고연방과 독립국가연합이 중위권, 비셰그라드가 하위권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회 부문에서는 그룹별 특징이 두드러졌는데 연금 및 사회복지지출에 있어서 유고연방과 비셰그라드가 상위권, 발틱과 남동유럽이 중위권, 아세안과 독립국가연합이 하위권으로 나타났다. 정치, 경제, 사회 지표에서의 그룹별 순위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6-69〉 정치, 경제, 사회 지표에서의 그룹별 순위

번호	지표명	구분	그룹별 순위
<b>정치</b>			
1	세계자유지수		발틱 ≒ 비셰그라드 > 남동유럽 ≒ 유고연방 > 독립국가연합 > 아세안
2	민주주의 지수		발틱 > 비셰그라드 > 남동유럽 > 유고연방 > 독립국가연합 > 아세안

356 남북한 사회격차 완화를 위한 북한의 의식주 생활 지표 분석

번호	지표명	구분	그룹별 순위
<b>경제</b>			
3	경제자유지수		발틱 > 비셰그라드 > 남동유럽 > 유고연방 > 독립국가연합 > 아세안
4	국내총생산	전체 명목GDP	비셰그라드 > 독립국가연합 > 남동유럽 > 아세안 > 유고연방 > 발틱
		1인당 명목GDP	발틱 > 비셰그라드 > 유고연방 > 남동유럽 > 독립국가연합 > 아세안
5	경제성장률	전체 실질GDP	아세안 > 독립국가연합 > 발틱 > 남동유럽 > 비셰그라드 > 유고연방
		1인당 실질GDP	아세안 > 발틱 > 남동유럽 > 비셰그라드 > 독립국가연합 > 유고연방
6	1인당 국민총소득(GNI)		발틱 > 비셰그라드 > 유고연방 > 남동유럽 > 독립국가연합 > 아세안
7	공적개발원조(ODA)	수혜율	독립국가연합 > 아세안 > 남동유럽 > 유고연방
		1인당 수혜액	남동유럽 > 유고연방 > 독립국가연합 > 아세안
		공여 규모	독립국가연합 > 비셰그라드 > 남동유럽 > 유고연방 > 발틱
		공여율	유고연방 > 비셰그라드 > 발틱 > 남동유럽 > 독립국가연합
8	수출입 규모		비셰그라드 > 발틱 > 아세안 > 유고연방 > 남동유럽 > 독립국가연합
9	소비자물가지수		독립국가연합 > 아세안 > 유고연방 > 남동유럽 > 발틱 > 비셰그라드
10	소비자물가상승률		독립국가연합 > 아세안 > 남동유럽 > 발틱 > 비셰그라드 > 유고연방
11	지하경제		독립국가연합 > 아세안 > 남동유럽 > 유고연방 > 발틱 > 비셰그라드
12	경제활동인구	전체	아세안 > 독립국가연합 > 비셰그라드 > 남동유럽 > 유고연방 > 발틱
		남성	독립국가연합 > 유고연방 > 남동유럽 > 비셰그라드 > 아세안 > 발틱
		여성	발틱 > 아세안 > 비셰그라드 > 남동유럽 > 유고연방 > 독립국가연합
13	경제활동참가율	전체	아세안 > 발틱 > 독립국가연합 > 비셰그라드 > 남동유럽 > 유고연방
		남성	아세안 > 독립국가연합 > 발틱 > 비셰그라드 > 남동유럽 > 유고연방

번호	지표명	구분	그룹별 순위
		여성	아세안 > 발틱 > 남동유럽 ≒ 독립국가연합 > 남동유럽 > 유고연방
14	고용률	전체	아세안 > 발틱 > 비세그라드 > 독립국가연합 > 남동유럽 > 유고연방
		남성	아세안 > 독립국가연합 > 발틱 ≒ 비세그라드 > 남동유럽 > 유고연방
		여성	아세안 > 발틱 > 독립국가연합 > 비세그라드, 남동유럽 > 유고연방
15	실업률	전체	유고연방 > 남동유럽 > 발틱 > 독립국가연합 > 비세그라드 > 아세안
		남성	유고연방 > 발틱 > 남동유럽 > 비세그라드 > 독립국가연합 > 아세안
		여성	유고연방 > 발틱 ≒ 남동유럽 ≒ 비세그라드 > 독립국가연합 > 아세안
16	지니계수	세전(시장소득)	남동유럽 > 발틱 > 유고연방 > 독립국가연합 > 비세그라드
		세후(가처분소득)	남동유럽 > 발틱 > 유고연방 > 독립국가연합 > 비세그라드
		개선도(세전-세후)	유고연방 > 비세그라드 > 남동유럽 > 발틱 > 독립국가연합
17	하루 \$1.9 빈곤율		아세안 > 유고연방 > 남동유럽 > 독립국가연합 > 발틱 > 비세그라드
	상대적 빈곤율	상대적 빈곤율(전체)	남동유럽 > 발틱 > 독립국가연합 > 유고연방 > 비세그라드
		상대적 빈곤율(노인)	발틱 > 남동유럽 > 유고연방 ≒ 독립국가연합 > 비세그라드
<b>사회</b>			
18	인구수	전체	아세안 > 독립국가연합 > 비세그라드 > 남동유럽 > 유고연방 > 발틱
		남성	남동유럽 > 유고연방 ≒ 아세안 > 독립국가연합 > 비세그라드 > 발틱
		여성	발틱 > 비세그라드 > 독립국가연합 > 아세안 ≒ 유고연방 > 남동유럽
19	세대별 인구비	0~14세	아세안 > 독립국가연합 > 남동유럽 > 유고연방 > 비세그라드 ≒ 발틱
		15~64세	- 2005년까지 : 비세그라드 > 유고연방 > 발틱 > 남동유럽 > 독립국가연합 > 아세안

358 남북한 사회격차 완화를 위한 북한의 의식주 생활 지표 분석

번호	지표명	구분	그룹별 순위
			- 2007년부터 : 비셰그라드 > 유고연방 > 남동유럽 > 발틱 > 독립국가연합 > 아세안
		65세 이상 (고령화율)	발틱 > 비셰그라드 > 남동유럽 > 유고연방 > 독립국가연합 > 아세안
20	합계출산율		- 2009년까지 : 아세안 > 독립국가연합 > 남동유럽 > 유고연방 > 발틱 > 비셰그라드 - 2011년부터 : 독립국가연합 > 아세안 > 남동유럽 > 발틱 > 비셰그라드 > 유고연방
21	사망률	조사망률	발틱 > 남동유럽 > 유고연방 > 비셰그라드 > 독립국가연합 > 아세안
		신생아 사망률	아세안 > 독립국가연합 > 남동유럽 > 유고연방 > 발틱 > 비셰그라드
22	자살률		발틱 > 비셰그라드 > 유고연방 > 독립국가연합 > 남동유럽 > 아세안
23	기대수명	전체	유고연방 > 비셰그라드 > 남동유럽 > 발틱 > 독립국가연합 > 아세안
		남성	유고연방 > 비셰그라드 > 남동유럽 > 발틱 > 독립국가연합 > 아세안
		여성	비셰그라드 > 발틱 > 유고연방 > 남동유럽 > 독립국가연합 > 아세안
24	노령화 지수		발틱 > 비셰그라드 > 남동유럽 > 유고연방 > 독립국가연합 > 아세안
25	노년 부양비		발틱 > 남동유럽 > 비셰그라드 > 유고연방 > 아세안 > 독립국가연합
26	연금지출 규모	연금지출	유고연방 > 비셰그라드 > 남동유럽 > 발틱
		공공 연금지출	유고연방 > 비셰그라드 > 발틱
		개인 연금지출	- 2010년까지 : 발틱 > 비셰그라드 > 남동유럽 > 유고연방 - 2010년 이후 : 발틱 > 유고연방 > 비셰그라드 > 남동유럽
27	연금대체율	총 대체율	아세안 > 독립국가연합 > 비셰그라드 > 발틱 > 유고연방
		순 대체율	비셰그라드 > 아세안 > 독립국가연합 > 발틱 > 유고연방
		대체율 개선도 (순 대체율-총대체율)	유고연방 > 비셰그라드 > 독립국가연합 > 발틱 > 아세안

번호	지표명	구분	그룹별 순위
28	사회복지지출 규모	사회복지지출	유고연방 > 비셰그라드 > 발틱 > 남동유럽 > 독립국가연합 > 아세안
		공공부문	유고연방 > 비셰그라드 > 발틱 > 남동유럽 > 독립국가연합 > 아세안
		법정민간부문	유고연방 > 비셰그라드 > 발틱
		1인당 사회복지지출 비용	유고연방 > 비셰그라드 > 발틱 > 남동유럽 > 독립국가연합 > 아세안
29	국민부담률		비셰그라드 > 유고연방 > 발틱 > 남동유럽 > 독립국가연합 > 아세안
30	의료비 지출	정부	비셰그라드 > 유고연방 > 발틱 > 남동유럽 > 독립국가연합 > 아세안
		민간	아세안 > 독립국가연합 > 남동유럽 > 발틱 > 유고연방 > 비셰그라드
		본인 부담	아세안 > 독립국가연합 > 남동유럽 > 발틱 > 유고연방 > 비셰그라드
31	의료 인프라	병상수	- 1990년대 : 발틱 > 독립국가연합 > 비셰그라드 > 남동유럽 > 유고연방 > 아세안 - 2000년대 : 발틱 > 비셰그라드 > 독립국가연합 > 남동유럽 > 유고연방 > 아세안 - 2010년대 : 남동유럽 > 비셰그라드 > 발틱 > 독립국가연합 > 유고연방 > 아세안
		의사수	발틱 > 비셰그라드 > 남동유럽 > 독립국가연합 > 유고연방 > 아세안
		의사 1인당 병상수	아세안 > 독립국가연합 > 남동유럽 > 비셰그라드 > 유고연방 > 발틱
		국민 1인당 연간 진료 횟수	독립국가연합 > 비셰그라드 > 발틱 > 유고연방
32	건강 지표	알코올 소비량	발틱 > 비셰그라드 > 남동유럽 > 유고연방 > 독립국가연합 > 아세안
		흡연율	아세안 > 유고연방 > 남동유럽 > 발틱 > 비셰그라드 > 독립국가연합
33	세계혁신지수		발틱 > 비셰그라드 > 유고연방 > 남동유럽 > 독립국가연합 > 아세안
34	대인신뢰도	믿을 수 있다	아세안 > 발틱 > 독립국가연합 > 비셰그라드 > 남동유럽 > 유고연방

360 남북한 사회격차 완화를 위한 북한의 의식주 생활 지표 분석

번호	지표명	구분	그룹별 순위
		조심해야 한다	독립국가연합 > 유고연방 > 발틱 > 비셰그라드 > 남동유럽 > 아세안
35	노동환경 지표	노조 조직률	- 2000년대 중반까지 : 유고연방 > 비셰그라드 > 발틱 - 2000년대 중반부터 : 독립국가연합 > 유고연방 > 남동유럽 > 비셰그라드 > 발틱 > 아세안
		단체협약적용률	- 2000년대 말까지 : 유고연방 > 비셰그라드 > 발틱 - 2010년대부터 : 유고연방 > 독립국가연합 > 비셰그라드 > 남동유럽 > 발틱 > 아세안

자료: 6장의 분석 내용을 토대로 저자가 재구성하여 작성



## 제7장

### 체제전환 이후 발틱 3국의 사회문제와 사회정책적 대응

제1절 체제전환 이후 발틱 3국의 사회문제

제2절 체제전환 이후 발틱 3국의 사회정책적 대응

제3절 발틱 3국 사례의 함의



## 제 7 장

# 체제전환 이후 발틱 3국의 사회문제와 사회정책적 대응

### 제1절 체제전환 이후 발틱 3국의 사회문제

#### 1. 체제전환 이후 경제사회적 상황과 사회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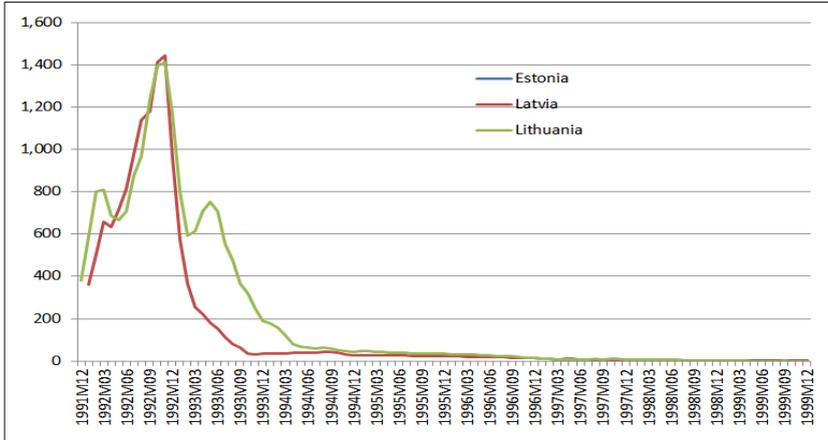
##### 가. 경제 상황

###### 1)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

1991년 사회주의 체제로부터의 독립 후 발틱 3국의 체제전환 과정은 짧은 시간 안에 급진적으로 진행되었다. 체제전환 이후 시장경제의 도입이 삶의 질을 높여줄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1995년까지 극심한 경기 불안정(민기채, 2014, p.177)과 침체를 겪으면서 연평균 성장률이 -10%를 넘는 경제후퇴를 경험했다(이선필, 2012, p.333). 특히 인플레이션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 에스토니아는 통화독립 이전에 계속해서 쓰던 루블화가 인플레이션 전반에 영향을 미쳐 1992년에 1,069%까지 치솟았다가 1994년에 다시 48%로 떨어졌고(Mongardini, 2001, p.304), 리투아니아도 1,000% 이상, 라트비아도 950% 이상 상승했다가 1994년에 40~70%로 감소했다(Cornelius, 1995, p.448).

[그림 7-1] 발틱 3국의 인플레이션: GDP deflator(1991~1999)

(단위: %)



주: 에스토니아는 1999년부터 제공됨.  
 자료: IMF cross-country indexes, (n.d.). Consumer Price Index (CPI) [Website].  
<https://data.imf.org/regular.aspx?key=61015892>. [2021. 09. 09. 인출].

체제전환 이후 경제적 혼란은 1990년대 중반까지 계속되었지만 1992년 발틱 국가 모두 IMF와 World Bank 등의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여 구제 금융을 받았다(Bazbauers, 2012, p.1). 또한 1990년대 후반부터 발틱 3국이 EU 가입(3국 모두 2004년에 가입완료)<sup>48)</sup>을 희망하면서 유럽연합은 코펜하겐 가입기준을 맞출 수 있도록 ‘가입사전전략’을 통해서, 2000년~2002년 사이 에스토니아에 5억 9천 1백만 유로, 라트비아에 5억 4천 7백만 유로, 리투아니아에 5억 2천 9백만 유로가 지원되면서 발틱 3국은 경제적 혼란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었다(이선필,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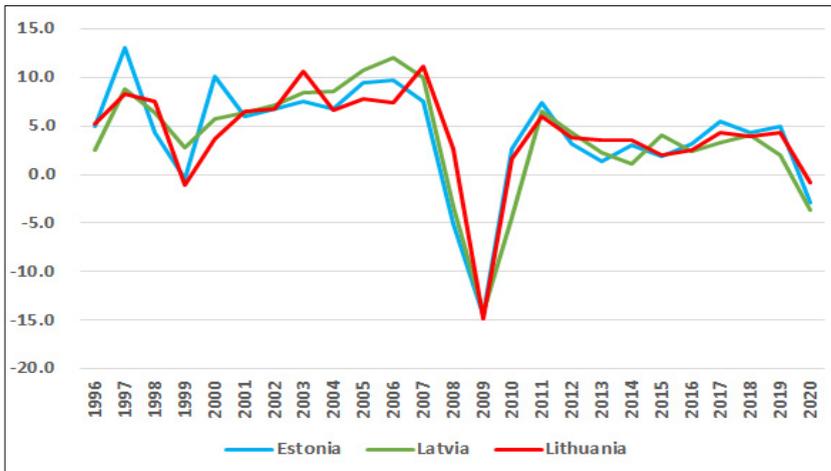
48) 발틱 3국의 국제기구 가입년도

	ILO	NATO	EU	OECD
에스토니아	1992년	2004년 3월	2004년 5월	2010년
라트비아	1991년	2004년 3월	2004년 5월	2016년
리투아니아	1991년	2004년 3월	2004년 5월	2018년

p.333). 이후 발틱 3국은 계속해서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구조 조정을 실행해 나가면서 국제 사회에 경제를 더욱 개방했고(OECD, 2003, p.7), 2000년을 기점으로 급격한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Aidukaite, 2006, p.259).

[그림 7-2] 발틱 3국의 경제성장률(1996년~2020년)

(단위: %)



자료: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Website]. (n.d).

<https://databank.worldbank.org/indicator/NY.GDP.MKTP.KD.ZG/1ff4a498/Popular-Indicators>[2021. 09. 15. 인출].

한편 경제 상황이 개선되면서 체제전환 이후 야기되었던 여러 가지 사회문제들은 경제성장과 함께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다(Paas, Hinnosaar, Masso, & Schumann, 2004a, p.20). 그러나 현실의 상황은 다소 달랐다. 노동시장의 상황은 불안정해져 실업이 증가했으며, 사회적 불평등이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이로 인하여 일반적인 생활수준은 서구 국가들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Roots & Ainsarr, 2011, p.70).

## 2) 무역규모 축소 및 전환

발틱 3국은 소련으로부터 독립을 했지만, 체제전환 직전과 직후에는 소련의 경제체제와 여전히 매우 밀접한 연결이 되어 있었다.<sup>49)</sup> 중앙유럽과 동유럽 국가들에 비해 발틱 3국은 자체적인 은행 시스템, 통화 시스템이 없었고, 대외 무역 자립도가 낮았다. 발틱 3국의 이 모든 경제 활동은 소련의 수도인 모스크바에서 중앙으로 조정되었다. 특히 발틱 3국은 러시아의 북서부 지역의 식량을 생산하면서 산업구조상 농업에 상당히 특화되어 있었고, 제조업과 에너지 분야의 생산 확대를 위해 노력했다(Roots & Ainsarr, 2011, p.75).

발틱 3국의 무역 규모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소련으로부터의 독립으로 구소련 및 CIS 국가와의 무역 규모가 대폭 감소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고용의 변화가 올 수 밖에 없었다. 또한 1998년 러시아 금융위기 이후 발틱 3국은 소련과 CIS 국가들에 수출이 줄어들게 되어 무역수지 적자를 큰 폭으로 경험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는 추후 EU 국가와의 무역을 확대하게 되면서 충격을 완화할 수 있게 되었다(OECD, 2003, p.17).

49) 발틱 3국과 소련과의 연계는 독립 과정에서의 소련과의 관계와 발틱 3국내의 러시아계 의 비율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다. 독립과정에서 리투아니아는 독립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더욱 노골적인 반소련 노선을 취하였고, 에스토니아 역시 러시아계와 타협을 거부한 채 독자적인 독립과 체제이행을 단행하였다. 반면 라트비아에서는 러시아계 인구비중이 높아 이들의 저항을 우려하여 보다 온건한 노선을 선택하였다. 독립직전인 1989년에 발틱계 주민의 비율은 에스토니아 62%, 리투아니아 80%, 라트비아 52%였고, 산업계 내 현지인 고용자 비율은 리투아니아 71%, 에스토니아 43%, 라트비아 38% 수준이었다(손동기, 송병준, 2021, p.135,153).

〈표 7-1〉 체제전환 이후 국가별 무역현황(GDP대비)

(단위: %)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1995	2000	2001	1995	2000	2001	1995	2000	2001
수출, 총계	47	63	60	29	26	26	43	34	38
EU 국가	26	48	42	13	17	16	14	16	18
CIS 국가	10	2	3	11	2	3	19	5	8
에스토니아	-	-	-	1	1	1	1	1	1
라트비아	3	4	4	-	-	-	4	5	5
리투아니아	2	2	2	2	2	1	-	-	-
그 외	5	6	10	4	4	5	4	6	6
수입, 총계	67	85	78	41	45	46	58	48	53
EU 국가	45	53	44	20	23	24	23	21	23
CIS 국가	12	9	9	12	8	7	21	15	16
에스토니아	-	-	-	2	3	3	1	1	1
라트비아	1	2	2	-	-	-	1	1	1
리투아니아	1	1	2	2	3	na	-	-	-
그 외	8	19	22	5	11	12	12	11	13

자료: OECD. (2003) *Labour market and social policies in the Baltic countries*. p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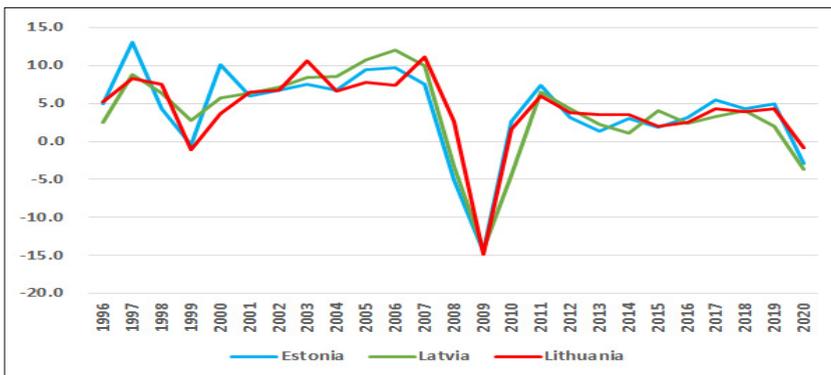
### 3) 국영기업의 구조조정 및 민영화 그리고 실업

독립 후 발틱 3국의 경제 자유화 정책은 실업 문제를 심화시켰다. 가격 자유화와 함께 생산 보조금이 폐지되었고, 이에 따른 생산 비용의 상승은 공급 감소를 야기하여 실업률을 심화시켰다. 체제전환 이후 국영기업의 민영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해고 조기퇴직 등), 기업구조 조정 과정에서의 대량 해고, 경제 불안정으로 인한 생산 감소(최장호, 권을, 최유정, 이대은, 2020, p.53)등으로 인하여 실업률이 급격하게 상승하였다. 산업 구조적 측면에서 소련과의 관계로 인해 화학 및 중공업의 감축이 필요불가결 해지면서 고용률 하락, 특히 남성의 고용률이 하락했다(OECD, 2003, p.17). 또한 계획경제 체제하에서 여성들이 주로 종사했던 비대한

공공 분야가 개혁 이후 축소됐고, 더불어 공공 보육 서비스 또한 상당한 수준으로 후퇴하는 등 여성의 고용률 역시 하락하였다(신윤정, 2017, p.101).

[그림 7-3] 발틱 3국의 실업률(1991년-2019년)

(단위: %)



자료: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Website]. (n.d).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SL.UEM.TOTL.ZS?locations=EE-LV-LT>.  
 [2021. 09. 15. 인출].

사회주의 시대에 정부의 계획 하에 노동자들의 고용이 보장되면서, 고용을 통한 필수적인 사회보장 혜택이 제공되었고, 성별에 관계없이 노동 참여율이 높았다. 그러나 소련 체제의 노동 정책은 노동력에 대한 과잉 요구, 낮은 노동 생산성, 왜곡된 임금 구조를 만들어냈고 궁극적으로 경제적 비효율성을 자아냈다. 1970~80년대에 계획경제 체제에서 가격 자유화와 의사결정의 분산 등을 시도했으나 미미한 결과만 남았고, 결국 체제전환 직후 발틱 3국의 노동시장 차원에서 실업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하였다. 급격한 체제전환 직후 생산량의 감소와 높은 인플레이션을 겪고 국영기업들이 해고와 조기퇴직 등의 형태로 인력 구조조정을 하면서 실업률은 치솟았고, 동시에 임금격차가 벌어졌으며, 일자리를 잃은 사람의

상당수가 빈곤층으로 전락했다(Cornelius, 1995, p.458).

자유시장 경제 체제 내에서 노동 시장은 노동자의 생산성이 가장 높은 일자리로의 이동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적절한 경제 인프라가 없는 상황에서 나타난 경제구조 개편은 결국 수많은 실업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야기했다. 국유재산의 민영화 과정으로 민간이 일자리를 창출하여 실업자들을 새로운 일자리로 이동하도록 촉진하는 과정이 예상되었지만, 현실은 국가 부문이 노동력을 방출하는 속도와 민간 부문이 노동력을 흡수하는 속도 사이의 간극(Cornelius, 1995, p.461)이 컸다.

#### (1) 체제전환 직후 나타난 실업의 특징

##### ① 산업 구조별 고용 상황 및 정체된 노동력 흐름

OECD(2003, p155)는 1999년~2000년 발틱 3국의 노동력 이동(고용상태, 실업상태, 노동력 상태)과 노동력의 경제부문간 이동성을 파악한 바 있다. 다음의 표를 통해 체제전환 10년 이 지난 시점의 발틱 3국의 산업 구조와 종사자의 분포를 살펴볼 수 있다. 발틱 3국은 2000년 기준 에스토니아 32.7%, 라트비아 28.6%, 리투아니아 27.7%로 모두 서비스 산업 종사자가 가장 많았고, 제조업 및 건설, 농업 순이었다. 그러나 실업상태이거나 아예 비경제활동 상태(구직포기, 육아, 조기은퇴 등을 포함하여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경우)인 사람이 에스토니아 46.0%, 라트비아 51.3%, 리투아니아 47.8%로 상당히 높았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1999년에 실업상태였던 사람이 2000년에도 계속 실업 상태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즉 장기 실업의 경향이 보이고 있다. 이는 실업이나 구직활동 포기자의 경우 실업의 경험이 잦고, 일자리 자체가 적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370 남북한 사회격차 완화를 위한 북한의 의식주 생활 지표 분석

〈표 7-2〉 에스토니아의 산업분야별, 실업상태, 비활성상태 연간 노동력 이동(1999년~2000년)  
(단위: %)

	A	I	S	U	O	1999
A	87.0	2.6	1.8	3.4	5.4	4.5
I	0.2	84.3	3.6	6.7	5.2	19.1
S	0.1	0.9	90.6	4.8	3.6	32.4
U	1.9	10.0	16.1	65.2	6.9	7.8
O	0.4	1.1	3.7	2.7	92.0	36.1
2000	4.3	17.7	32.7	9.1	36.2	

주: A=농업(수렵, 임업, 어업포함); I=제조업 및 건축업; S=서비스업; U=실업상태; O=구직 포기자. 에스토니아 조사 참여자: 연령 15-74.  
자료: OECD. (2003) Labour market and social policies in the Baltic countries, p.157에서 저자가 수정하여 정리.

〈표 7-3〉 라트비아의 산업분야별, 실업상태, 비활성상태 연간 노동력 이동(1999년~2000년)  
(단위: %)

	A	I	S	U	O	1999
A	73.4	4.3	6.7	4.7	11.0	8.6
I	0.9	86.6	3.6	4.5	4.5	13.0
S	0.7	1.5	89.3	3.3	5.1	28.6
U	4.7	10.5	15.2	48.3	21.3	8.2
O	1.2	1.6	3.3	1.7	92.2	41.6
2000	7.0	13.0	28.6	8.1	43.2	

주: A=농업(수렵, 임업, 어업포함); I=제조업 및 건축업; S=서비스업; U=실업상태; O=구직 포기자. 에스토니아 조사 참여자: 연령 15-74.  
자료: OECD(2003) Labour market and social policies in the Baltic countries, p.158에서 저자가 수정하여 정리.

〈표 7-4〉 리투아니아의 산업분야별, 실업상태, 비활성상태 연간 노동력 이동(1999년~2000년)  
(단위: %)

	A	I	S	U	O	1999
A	76.9	2.7	2.7	4.4	13.2	11.7
I	1.0	79.4	6.5	8.5	4.6	14.7
S	0.7	2.8	87.2	5.7	3.5	28.9
U	9.3	5.9	20.3	46.6	17.8	6.3
O	2.9	1.5	2.8	4.3	88.5	38.4
2000	11.0	13.6	27.7	9.0	3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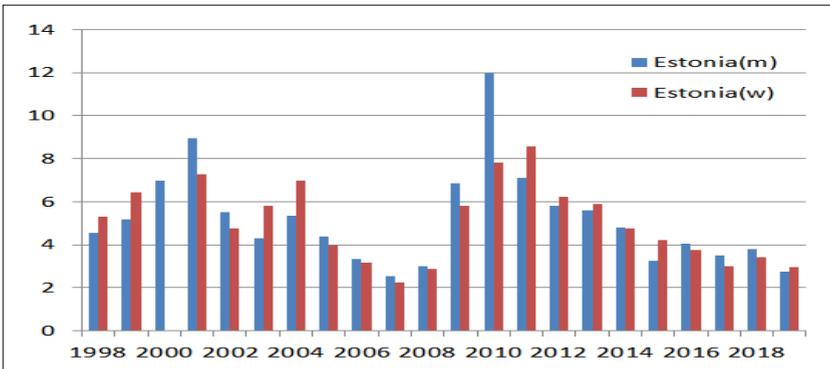
주: A=농업(수렵, 임업, 어업포함); I=제조업 및 건축업; S=서비스업; U=실업상태; O=구직 포기자. 에스토니아 조사 참여자: 연령 15-74.  
자료: OECD(2003) Labour market and social policies in the Baltic countries, p158에서 저자가 수정하여 정리.

② 교육수준과 성별의 차이

발틱 3국은 일반적으로 교육 성취도가 꽤 높다. 아래의 표는 발틱 3국의 고학력(advanced education)자의 실업률을 성별로 비교한 표이다. OECD(2003, p.145)의 노동력연구에 따르면 발틱 국가 인구집단의 실업의 특성을 노동시장에 새롭게 진입한 집단, 저학력 집단, 미혼의 남성, 소수민족으로 설명하고 있다. 발틱 3국은 평균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OECD, 2003,p.164), 고학력자의 실업률은 2009년 경제 위기 이전을 기준으로 대체로 남성의 실업률이 여성보다 높은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림 7-4] 에스토니아의 성별 고학력 실업률(1998년~2019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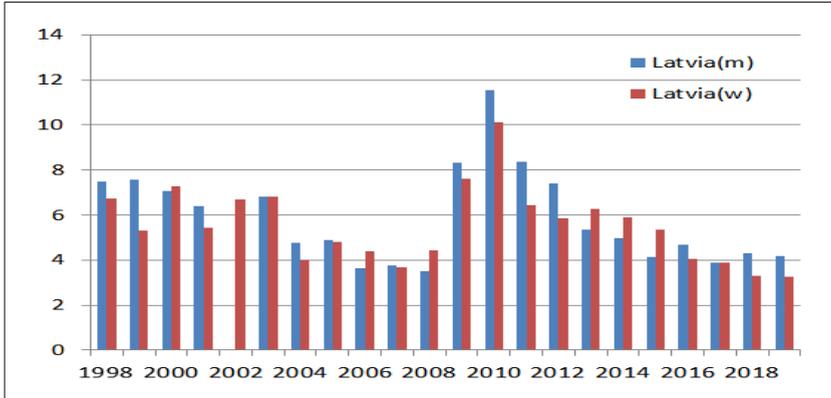


자료: the World Bank Data [Website]. (n.d.).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SL.UEM.ADVN.ZS?locations=EE> [2021. 09. 15. 인출].

[그림 7-5] 라트비아의 성별 고학력 실업률(1998년-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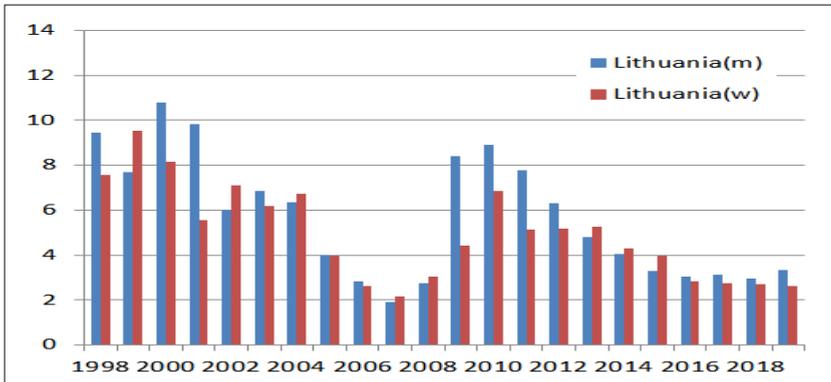
(단위: %)



자료: the World Bank Data [Website]. (n.d).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SL.UEM.ADVN.ZS?locations=LV> [2021. 09. 15. 인출].

[그림 7-6] 리투아니아의 성별 고학력 실업률(1998년-2019년)

(단위: %)



자료: the World Bank Data [Website]. (n.d).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SL.UEM.ADVN.ZS?locations=LT> [2021. 09. 15. 인출].

### ③ 실업률의 연령별·지역별 차이

2001년에 실시된 실업률 조사에 따르면, 15세-64세 연령의 실업률이 에스토니아는 12%, 라트비아에서 13%, 리투아니아에서 18%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라트비아와 리투아니아 고용률에 포함된 사람들이 15%가 농업 등의 1차 산업 종사자로 밝혀져 있는데 이들은 대개 평균보다 훨씬 낮은 소득을 가진 '생계형 농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실 이들은 농업으로 간신히 생계를 이어나가는 정도의 사람들로서 사실상 '숨겨진 실업'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의 노동은 국가 경제의 생산성에도 거의 기여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이들의 소득이 너무 낮고, 사회보험제도에 기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들에 대한 고용, 소득, 의료 정책에 대한 지원이 어려운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OECD, 2003, p.20).

발틱 3국에서 실업률의 지역적 편차도 상당하다. 특히 도시와 농촌 지역 간의 차이가 두드러지는데, 이로 인해 농촌의 인구가 도시로 이동하거나 다른 유럽국가로 이민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SGI, 2015). 일자리를 찾아 다른 지역으로 떠나면서 자녀들을 조부모에게 맡기고 떠나는 경우가 있어, 이 경우 빈곤의 확대와 노인 돌봄의 문제 등 다른 형태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기도 했다(SGI, 2019, p.20).

## 나. 사회상황

발틱 3국이 독립하기 전까지 소련 전역과 동유럽에 걸쳐 광범위하고 유사한 복지정책이 운영되었다. 당 국가 기구인 노멘클라투라는 식품, 주택, 교통, 기초 생필품에 대한 높은 보조금 제공, 고용 보장, 보건 및 교육

제공, 근로자 간의 적은 임금차이 보장 등을 제공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완전 고용’을 지향하는 사회주의 체계의 전통은 훗날 발틱 국가들이 독립을 한 후에도 남아 ‘실업’이라는 새로운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설계하는데 소극적이게 만들었다. 비록 근로자의 임금이 평균임금에 비해 양호한 편이었지만, 당과 국가 관료들은 숨겨진 특혜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 국민들은 저렴한 임대료와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주거비에 대한 높은 보조금을 지급받았지만, 가장 후한 보조금을 받는 쪽이 부유층인 경향이 있었다. 의료 서비스는 비록 무료였지만, 건강에 대한 예방적 접근에서는 비효율적이고 낙후되어 있었다. 또한 의사에게 뇌물과 선물을 지불할 경우 더 빨리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Deacon, 2000, p.147). 이러한 현상은 체제전환 이후에도 발틱 국가의 건강 정책의 주요한 특징과 문제점으로 남아있다(Ainsaar & Stankunien, 2011, p.61).

### 1) 빈곤문제의 인식

발틱 국가들의 빈곤문제는 체제전환 이후에 새롭게 나타난 현상이 아니고, 소련으로부터 독립하기 이전부터 경제난, 국가재정의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야기되었던 현상이었다(Simai, 2006, p.11). 그러나 실업이나 빈곤을 공식화 하지 않았던 사회주의 체제의 유산에 영향을 받은 탓에 발틱 3국은 실업과 빈곤의 존재를 인식하는데 시간이 걸렸고, 1990년대 후반이 되어서야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빈곤 감소 전략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다(Paas, Hinnosaar, Masso, & Orsolya, 2004b, p.20).

2000년대 초반 국제기구 특히, EU 가입을 준비하면서 발틱 3국은 세계 속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인지하게 되었다. 다음의 표는 체제전환 직후 경제적 혼란 시기의 발트 국가들의 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를 나타낸 것이다. 1997년 발틱 3국의 지니계수 평균은 3.3이었고, 이

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높은 수준이다.

전문가 인터뷰에서도 확인되는데, “일률과세로 인해 초래된 결과 중 하나가 에스토니아의 높은 불평등과 높은 지니계수이다. 낮고 균일한 조세 제도를 갖고 있다면 재분배 기제가 작동하지 않아, 불평등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Raul Eamets, 2021.10.14.).

또한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에서 소득별 가구 분포에서 최상위 십분위와 하위 십분위 사이의 비율로 측정된 불평등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7-5〉 발틱 3국의 소득불평등: 지니계수 및 십분위 비교(1988년~2000년)

	1988	1996	1997	1998	1999	2000
A. Gini index for household expenditure (consumption expenditure per person equivalent)						
에스토니아	0.23	na	0.34	0.35	0.35	0.36
라트비아	0.23	0.30	0.31	0.32	0.33	0.34
리투아니아	0.23	0.32	0.32	0.31	0.34	0.34
B. 상위 십분위 수와 하위 십분위 수						
에스토니아	4.4	9.4	12.5	11.9	8.9	13.2
라트비아	4.2	na	9.9	8.9	70.4	na
리투아니아	4.1	8.3	8.5	8	8.1	7.9

주: OECD 동등성 척도(1 : 0.7 : 0.5)가 일반적으로 적용됨  
 자료: OECD. (2003) Labour market and social policies in the Baltic countries, p.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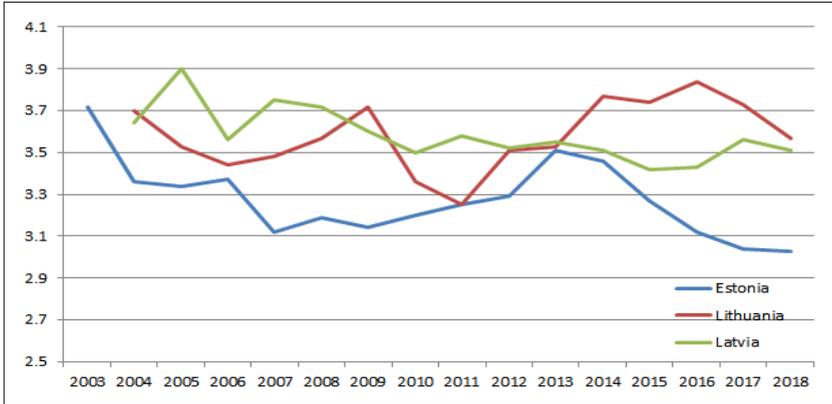
〈표 7-6〉 국가들의 소득불평등의 정도

Gini index	상위 십분위/ 하위 십분위	중앙 및 동유럽 1996-98	CIS 와 중국 1996-98	시장경제 국가 1991-1997
0.200- 0.249	4.0-4.6		Belarus	Japan
0.250- 0.299	5.0-6.3	Czech R., Hungary, Bulgaria, Croatia, Slovenia		Norway, Sweden, Finland, Belgium, Luxemburg, Italy
0.300- 0.328	5.1-7.2		Ukraine	France, Germany
0.329- 0.349	7.7-9.0	Latvia, Lithuania, Poland		Canada, Greece, Netherlands
0.350- 0.380	9.1-10.0	Estonia	Kazakhstan	Portugal
	10.1-12.7		Georgia	UK, Australia
0.400- 0.450	11.7-17.0		Moldova, Kyrgyz R., Armenia, China	US
0.480- 0.520			Russia	Mexico

주: 이 결과는 1인당 소득을 나타낸다. 주는 2000년과 2001년 측정함. 주는 World Development Indicators의 2000년과 2001년 주를 결합한 것임  
 자료: OECD(2003) Labour market and social policies in the Baltic countries, p.31.

다음의 그래프는 발틱 3국의 20년간의 지니계수의 변화이다. 대체로 에스토니아가 3국 중에 지니계수가 낮은 편이고, 특히 2009년 경기 침체를 회복한 이후 빠른 속도로 지니계수가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리투아니아는 경기 침체 이후 지니계수가 가파르게 상승했다.

[그림 7-7] 발틱 3국의 지니계수(2003년-2019년)



자료: the World Bank Data [Website]. (n.d.).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SI.POV.GINI?locations=EE-LT-LV> [2021. 09. 15. 인출].

발틱 3국의 불평등한 소득은 부분적으로 낮은 고용의 결과이지만, 고용 인구의 소득도 낮은 수준이었다. 발틱 3국은 이러한 이유로 공공부조 급여의 수준이 평균임금보다 높아서는 안 되었고, 이는 극빈을 해소하는 정도의 수준이었다(OECD, 2003, p.128).

## 2) 발틱 국가들의 생활 수준 50)

여기에서는 발틱 국가들의 생활 수준이 체제 전환 전후 어떠한지를 파악하기 위해 Strathclyde대학 공공정책 연구 센터가 수행한 총 15개의 체제전환 국가의 개인과 가정의 생활 양상과 관련된 연구 중 6,136명의 발틱 국민들이 참여한 연구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연금 수급자들

50) 이 소절에서 별도의 인용이 없는 내용은 Rose. (1995) Pensioners, Gender and Poverty in the Baltic States, Internal Discussion Paper, the world bank 를 참고하여 재구성 및 정리함.

의 성별과 가구 구성에 따라 경제적인 상황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비공식 경제로부터 자원을 얻는 수준을 알아보고 있다. 비록 이 연구가 연금수급자의 생활을 살펴보고 있지만, 체제전환 직후 발틱 국민들의 생활수준 전반을 가늠할 수 있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연구에 참여한 연금 수급자들의 특징은 첫째, 정년연령이 낮고(남자 60세, 여자 55세) 조기퇴직으로 연금기금 청구액을 늘리고 있다. 둘째, 연금을 제외하고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예금액이 매우 적다. 연금액이 많지 않아 구매력이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의 상품이 부족해 구매력을 높일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그나마 저축금을 가지고 있던 개인도 체제전환 초기 인플레이션의 발생으로 저축의 가치가 사라졌다. 시장에서 상품이 부족하고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특히 가난한 사람들은 대부분 비경제적 활동을 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비경제적 활동은 생활비의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식비와 주택관리비 등의 원자재 값과 관련이 있는데, 대다수의 가정들은 자신의 집 주변에서 농업을 통해 음식을 재배하고, 스스로 또는 지인을 통해 짐수리를 하는 등의 행태를 말한다(Rose, 1995).

OECD(2003, p.133) 연구에서도 체제전환 직후 공공부조제도를 설계하기 위해서 생존을 위한 최소식품바구니를 설정하면서 식품이 차지하는 비용을 높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가구 구성은 부부가구, 다세대 가구, 유족이면서 다세대 가구원이 가구, 독거노인 등이었다. 이들 가구 중 연금수급자 노인 부부가 포함된 다세대 가족이 물질적인 상황이 가장 좋았고, 독거가구의 상황이 가장 좋지 않았다. 앞서 비경제적 활동을 통해 음식 및 주거비 또는 의복비를 시장에서 해결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서술한 바 있는데, 이 연구에서도 이러한 특징이 잘 나타났다. 따라서 물질적 상황을 잘 살펴보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구입해야

하는 소비재의 소유권 여부를 알아볼 필요가 있었다. 그것은 컬러텔레비전, 자동차, 전화기를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묻는 것이었다.

〈표 7-7〉 가구별 소비재 소유여부

(단위: %)

	독거	부부	일하는 연금수급	다세대	연금수급자 없는
컬러TV	44	64	71	80	81
자동차	8	27	30	39	44
전화기	51	60	64	78	63

자료: Rose. (1995) Pensioners, Gender and Poverty in the Baltic States, Internal Discussion Paper, the world bank, p.16 참고하여 자료 재구성.

다세대 가구는 연금수급자가 없는 가구와 물질적 수준이 거의 같으며 자녀와 함께 사는 연금수급자가 취업 연금수급자보다 물질적으로 좀 더 나은 수준일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체제전환기에 많은 국민들이 재정 상황의 궁핍을 경험했다는 것이고, 가구 구성에 따라 재정 상황이 다르겠지만 발틱 국민들은 체제전환 전후에 다수의 사람들이 그럭저럭 버티며 사는 정도였다는 사실이다. “얼마나 자주 음식, 난방, 전기, 필수 의복, 자동차, 아이들을 위한 소비를 포기해야 했나?” 라는 문항에 대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7-8〉 가구별 생활필수품 부재 현황

(단위: %)

		독거	부부	일하는 연금수급	다세대	연금수급자 없는
음식	자주 있다	44	39	26	25	20
	거의 없다	12	14	15	22	22
의복	자주 있다	41	45	36	34	25
	거의 없다	10	15	16	16	20
난방	자주 있다	13	13	11	9	7
	거의 없다	11	13	15	11	12

자료: Rose. (1995) Pensioners, Gender and Poverty in the Baltic States, Internal Discussion Paper, the world bank, p.19 참고하여 자료 재구성.

경제 규모가 워낙에 작았고, 체제가 전환되는 과도기의 불안정한 경제 환경 안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험을 회피하며 생활 수준에 맞추어 소비와 자원의 균형을 맞추는 소비행태를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옷을 더 오래 수선하고 입고, 난방비를 줄이기 위해 실내 온도를 줄이거나, 값싼 음식을 먹거나 집에서 재배한 음식만 먹는 것이 그것이다. 연구를 통해 재정적 궁핍이 가장 심각한 가구로 아이가 있는 가구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은 임금 또는 연금에 의한 가구소득, 비공식활동(자급자족경제활동), 지하경제를 통한 경제활동 등 세 가지 형태의 경제활동을 통해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었다.

### 3) 인구문제

체제전환은 발틱 3국의 경제적, 사회적, 인구학적인 변화를 초래했다. 이는 특히 인구재생산과 인구가동(이민)의 중대한 변화를 불가피하게 야기했다. “1990년대의 총 인구유출은 약 150,000명인데 이는 에스토니아 전체 인구를 고려하였을 때 상당히 큰 숫자이다”(Raul Eamets, 2021.10.14.) 2004년 EU 가입 이후 이민자는 급증했고, 특히 2009년 경기침체기 이후 그 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1991년 이후 사망률이 급증했고, 출생률은 급감했다(Berzins & Zvidrins, 2011, p.41). 아래의 표를 통해 2000년과 2010년 사이 인구변화율을 볼 수 있다. 10년 만에 발틱 3국의 인구는 모두 감소했고, 특히 라트비아와 리투아니아는 모두 5%이상 감소했다.

〈표 7-9〉 발틱 3국의 인구 변화(2000년~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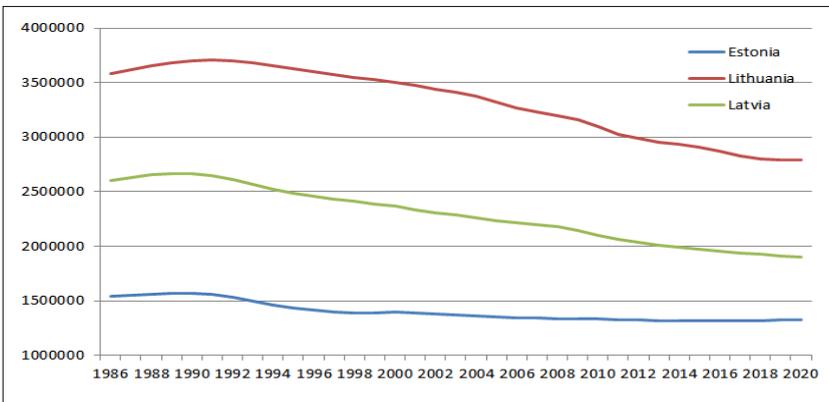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2010년 인구 (백만)	EU 대비(%)		인구변화율 (%)
		인구	영토	
에스토니아	1.34	0.27	1.0	-2.3
라트비아	2.25	0.45	1.5	-5.6
리투아니아	3.33	0.66	1.5	-5.2
폴란드	38.17	7.62	7.1	-1.3
슬로베니아	2.05	0.41	0.5	3.0
불가리아	7.56	1.51	2.5	-7.7

자료: Berzins and Zvidrins. (2011). Depopulation in the baltic, *Lithuanian Journal of Statistics*. 50(1), p.40을 참고하여 저자가 재구성.

[그림 7-8] 발틱 3국의 총인구수의 변화(1986년~2020년)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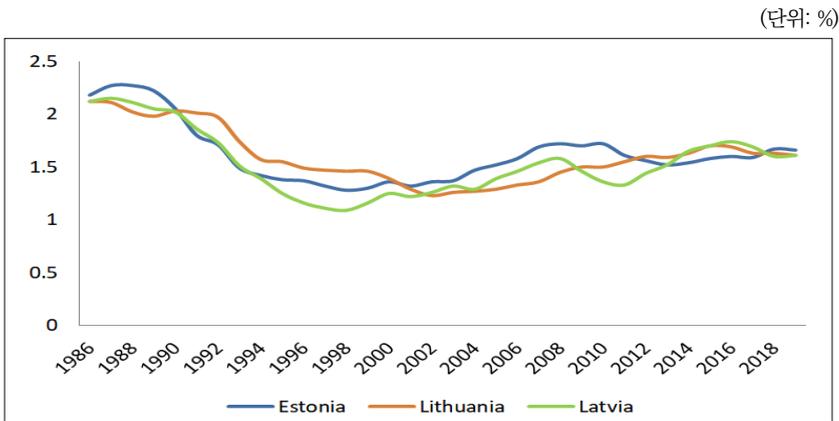
자료: the World Bank Data [Website]. (n.d.).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SP.POP.TOTL?locations=EE-LT-LV>에서 2021. 09. 15. 인출.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는 20세기 초부터 낮은 출산율을 보여 구소련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두 나라였다. 게다가 급격한 체제전환으로 사람들은 생활수준의 하락을 경험했고, 도덕적인 붕괴도 지켜보게 되었다. 유치원에 대한 국가 지원은 감소했고 유아용품 보조금은 없어졌다. 절대적

이고 상대적인 결혼 건수는 1990년대 내내 급격히 감소하였고, 출산이 늦어졌다(Berzins & Zvidrins, 2011, p.42). 1990년 발틱 3국 모두 합계출산율이 2.0을 상회했으나, 2000년에 평균 1.4로 감소했다. 특히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에서 체제전환 직후 5년간의 출산율은 세계 2차 대전 기간과 맞먹는 감소세를 보였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출산 지원 정책이 나타났지만 셋째 아이에 대한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Ainsaar & Stankunien, 2011, p.61).

[그림 7-9] 발틱 3국의 출산율(1985~2019)



자료: World Development Indicator [Website]. (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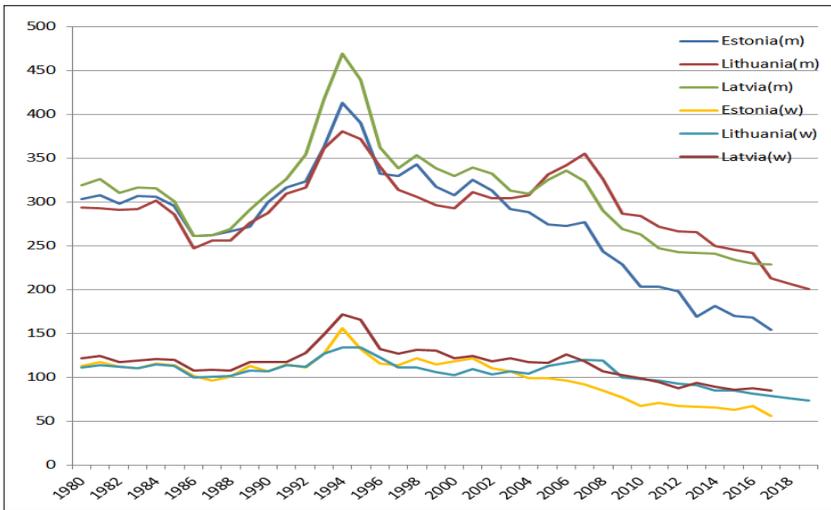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SP.DYN.CBRT.IN=EE-LT-LV>에서 2021. 09. 15. 인출.

사망률의 상승은 탈사회주의 국가들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난 현상이었는데 혼란스러운 상황과 변화에 많은 사람들이 적응하지 못하고, 국가들의 의료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이었다(Berzins & Zvidrins, 2011, p.43). 특히 악화된 경제상황과 대량 실업 상황에서 남성의 취약성이 더욱 드러났는데 이는 추가적인 스트레스와 알코올 중독을 유발하는 행동을 야기하는 등 체제전환의 상황에 남성이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

으로 나타났다(Ainsaar & Stankunien, 2011, p.46). 실제 이러한 알코올 의존 행동은 체제전환 이전부터 나타난 현상이기도 하다. “1990년대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알코올 소비량과 흡연량이 높았다. 당시 실업률이 높고, 사회의 구조적 변화가 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혼란의 시기를 겪었다”(Raul Eamets, 2021.10.14.).

[그림 7-10] 발틱 3국의 성별 사망률(1000명 당)(1980년~2020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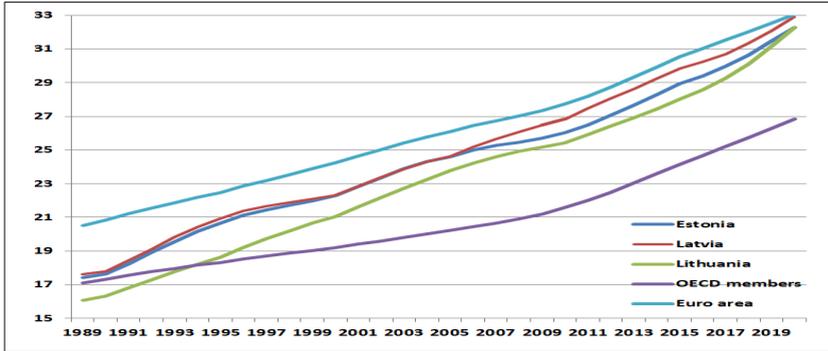
자료: World Development Indicator [Website]. (n.d.).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SP.DYN.CDRT.IN?locations=EE-LV-LT>에서 2021. 09. 15. 인출.

한편 혼란스러운 사회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대수명은 향상되어 서구 수준으로 빠르게 수렴되었다(Ainsaar & Stankunien, 2011, p.46).

[그림 7-11] 발틱 3국의 기대수명(1985~2019)

(단위: 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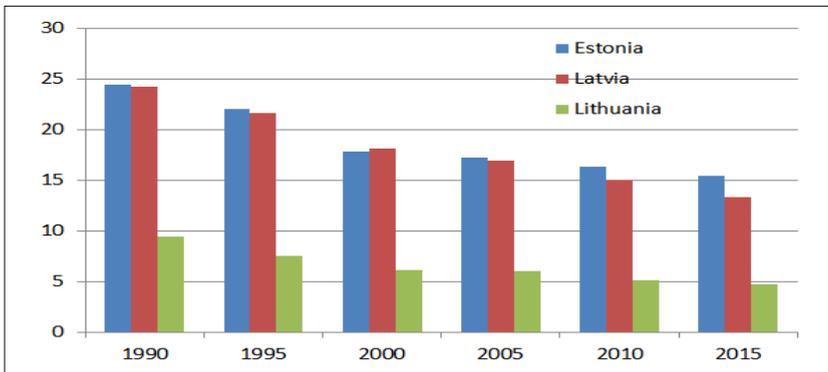
자료: World Development Indicator [Website]. (n.d.).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SP.DYN.LE00.IN?locations=EE-LV-LT>에서 2021. 09. 15. 인출.

라트비아를 필두로 발틱 3국의 고령화 수준과 추세는 세계적이라고 할 수 있다. 고령화 과정은 출생률 감소와 함께 주로 젊은 노동계층의 이민으로 인해 가속화되었다(Berzins & Zvidrins, 2011, p.47).

[그림 7-12] 발틱 3국의 이민율(1990년~2015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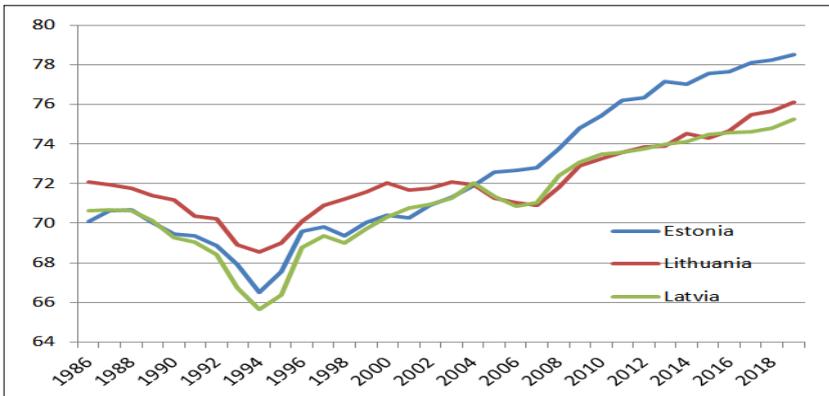


자료: World Development Indicator [Website]. (n.d.).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SM.POP.NETM?locations=EE-LV-LT>에서 2021. 09. 15. 인출.

젊은 노동인구의 이민과 기대수명의 증가는 인구의 고령화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노인부양비에 영향을 미친다. 아래에서 1990년대 초 체제 전환 시기와 2009년 경기 침체 시기 이후로 발틱 3국의 노인부양비의 기울기가 크게 움직인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 이 시기에 젊은 노동자층의 이민이 증가했던 것과 연관해 볼 수 있다.

[그림 7-13] 발틱 3국의 노인부양비(1986년-2019년)



자료: World Development Indicator [Website]. (n.d).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SP.POP.DPND.OL?locations=EE-LV-LT>에서 2021. 09. 15. 인출.

## 제2절 체제전환 이후 발틱 3국의 사회정책적 대응

### 1. 빈곤정책

체제전환 직후 빈곤과 실업 상황이 발생하고 악화되어 소득불평등이 증가하였고, 이로 인한 제반 사회 문제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게 되었다. 발틱 국가들의 빈곤 완화 정책 개발의 최초 동인(動因)은 유엔개발계획(UNDP), 세계은행(World Bank), ILO(국제노동기구), 유럽연합(EU) 등 국제기구의 요구에 의한 것이었다. 특히 유럽연합(EU)은 국가 간 빈곤 감소를 목표로 삼은 정책(2001-2010)을 전략적인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의 목표를 강조했다(Paas et al, 2004b, p29). 사회주의 시절의 공공부조 정책에서 자산조사의 전통은 없었으며, 또한 최소소득보장의 원칙도 거의 없었다. 대신에 장애인 가족 등 취약계층에 대한 범주별 지원이 제공되기는 하였다(OECD, 2003, p.124). 그러나 체제전환 이후 앞서 서술한 대로 국제기구들의 권고 사항과 부족한 재정상황으로 발틱 국가의 빈곤 정책은 모두 자산조사를 통하여 가장 취약한 인구 집단에 혜택을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방법을 택하게 되었다.

#### 가. 빈곤 정책의 목표 설정

발틱 3국은 2000년대 초 빈곤정책을 시작하면서 빈곤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설정하여 실행하고자 하였다. 먼저 이들 국가들이 설정한 '빈곤'의 의미와 빈곤정책에 설정된 목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다음과 같다.

〈표 7-10〉 발틱 3국의 빈곤 정의와 빈곤감소 목표

국가명	내용	
에스토니아	정의	사회적 관점에서 빈곤은 사회경제적 조건의 문제이다. 빈곤은 특정 인구 집단의 물질적 자원이 부족하고 사회경제적 참여를 위한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조건이다.
	목표	- 국민의 물질적 자원의 증가 - 지역사회가 제공하는 기회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정책(지역-노동-사회정책 등)에의 참여보장. - 지역사회 자원의 수직적 재분배(사회정책, 세금 정책) - 인적 자원(문화, 교육, 및 보건 정책)의 개발 - 여론 형성 및 동원(정보 및 미디어 정책)
라트비아	정의	빈곤은 물질적, 문화적, 사회적 자원이 부족해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목표	2015년까지 - 저소득층 인구가 전체 인구의 10%를 넘지 않도록 한다. - 빈곤층과 저소득층의 총 합이 인구의 25%를 초과하지 않게 한다.
리투아니아	정의	빈곤은 자유롭고, 길고, 건강하고, 창조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기회, 즉 존중 받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한다.
	목표	- 2003년까지 극빈층이 없도록 한다. 식량이 부족하거나 잠자리가 없는 극 빈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2005년까지 빈곤취약계층(한부모 가정, 대가족, 실업자, 농부 등)을 20% 미만으로 줄인다.

자료: UNDP. (2000) Poverty Reduction in Estonia, Latvia, and Lithuania, Riga, pp. 36-38을. 참고하여 저자가 재구성.

라트비아와 리투아니아의 빈곤 감소 전략은 소득이 매우 낮은 사람들의 수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시간을 정하고 있고, 에스토니아는 빈곤 감소 전략의 대상 그룹에 주목하고 있다.

## 나. 빈곤지표의 개발<sup>51)</sup>

발틱 3국은 빈곤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먼저 빈곤지표를 개발하였다. 에스토니아는 빈곤선을 계산하는데 가구원의 최소 생계수단(mini-

51) 본 소절의 내용은 Paas T, Hinnosaar M, Masso J, Orsolya S. (2004b) Social protection systems in the Baltic States of Tartu Economics and Business Working Paper No. 26-2004, p26-27을 참고로 저자가 정리함.

mum means of subsistence: MMS)을 시작점으로 보고 있다. 이는 최소한의 식비, 주거비용, 최소한의 의복구입, 교통비, 교육비 등이 포함된다. 2001년 월 1306EEK(약 84유로)로 계산이 되었고, 이 중 식비로 약 50%가 책정되었다. 상대적 빈곤선은 국민 1인당 국민소득의 60%였고, 같은 해에 1,499EEK(약 41유로)이었다.

라트비아는 2003년까지 공식적인 빈곤선이 없었다. 라트비아 정부는 1994년 위기최저생계지표 (crisis subsistence minimum indicator: CSM)로 월 38.24LVL(약 59유로)을 책정하여 2000년대 초반까지 변동 없이 유지했다. 라트비아 정부에서 2001년 조사한 월 최소생계비용은 86.93LVL(약 133유로)이었다. 라트비아의 사회부조 수급조건은 위기최저생계지표의 75%가 넘지 않을 때, 저축이 200VLV(약 305유로)을 초과하지 않을 때, 자산의 가치가 3000LVL(약 4577유로) 이하인 경우, 친척 등 음식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등이었다.

리투아니아의 절대빈곤선은 곧 최저생계수준(a minimal subsistence level-MSL)이었다. 이는 1990년 가을에 채택되어 사회적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가정에 지원되고 있었다. 리투아니아 통계청에서 제시하는 상대적 빈곤선은 평균 소비 지출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이었고,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구, 실업자가 포함된 가구, 저학력자, 농부 및 농촌 거주자 등이 빈곤 취약계층으로 나타났다.

#### 다. 빈곤자 선별의 어려움

발틱 국가에서는 공공부조 수급 자격을 위해 노동력 상태와 근로소득을 평가하도록 결정했다. 이를 위해서는 소득 신고를 위한 체계와 소득평가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야 했지만, 발틱 국가들 특히

저소득층에 널리 퍼져있는 비공식 규모의 경제활동(자급자족활동)과 소위 봉투임금으로 불리는 신고가 되지 않거나 실제보다 낮은 근로임금을 신고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따라서 소득파악을 위한 정보 부족의 결과로 빈곤정책의 실행 초기에는 결국 개인보다는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범주적’ 급여기준을 당분간 계속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라트비아에서 더욱 흔하게 나타났다.

빈곤정책은 중앙정부에서 직접 정책을 운영한 에스토니아를 제외하고, 리투아니아와 라트비아에서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운영하였다. 지방 정부는 주민들 중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식별하는 데 능숙하고, 즉시 지불을 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Rose, 1995, p.24). 그러나 체제전환 이후 발틱 3국에서 빈곤정책을 지방정부에서 수행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다. 빈곤정책의 주 집행 기관을 지방정부로 이양하기 전에 2000년에 시범적으로 최소소득보장 측정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수급 조건으로 주거비용을 지불한 후 1인당 소득이 월 21LVL 미만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했지만 측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현실적으로 지방정부의 재정상황에 따라 빈곤정책을 집행하는데 차이가 있었고, 때에 따라 일부 부유한 자치단체들은 중앙 정부가 제시한 기준을 거부하기도 했다. 또는 재정상황에 따라 재량권을 발동하여 난방비 등을 빈곤층에 추가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었다(OECD, 2003, p.132-133).

이러한 과정을 통해 2000년대 초 제정된 발틱 3국의 빈곤정책의 명칭과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7-11〉 발틱 3국의 최초 빈곤정책의 명칭과 내용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명칭	poor family social assistance benefits	poor family social assistance benefits	social assistance benefits for low-income households.
급여 기간	제한이 없음.	가족구성원이 근로여부에 따라 평균금액이 증감하고, 만약 다른 사회복지급여를 받고 있다면 3개월로 제한.	급여는 6개월간 지급되며,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실업보험료와 공공부조를 12개월 동안만복합해서 받을 수 있음

자료: Paas T, Hinnosaar M, Masso J, Orsolya, S. (2004b) Social protection systems in the Baltic States of Tartu Economics and Business Working Paper No. 26-2004, p.45 저자가 재구성함.

2000년대 초 시작된 발틱 3국의 빈곤완화 정책의 효과는 낮다. 왜냐하면 발틱 3국의 공공부조액은 평균임금액이나 최저임금 보다 낮게 책정하고 있으면서 지급되는 급여자체가 너무 적어 실제로 빈곤가구에 경제적인 도움이 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기 때문이다(OECD, 2003, p.125).

〈표 7-12〉 발틱 3국의 최저임금과 평균임금의 변화(1995~2011)

구분	국가	1995	1999	2003	2005	2007	2009	2011
최저임금(유로)	EE	30.0	79.9	138.0	171.9	230.1	278.0	278.0
	LV	40.6	79.9	109.3	114.9	171.4	255.1	283.2
	LT	25.8	100.8	124.5	144.8	173.8	231.7	231.7
평균임금(유로)	EE	158.5	283.8	429.7	516.0	724.5	784.0	830.8
	LV	130.5	225.4	299.7	353.3	567.8	653.3	656.9
	LT	91.9	231.5	310.8	369.6	522.0	595.5	592.5
평균임금대비 최저임금비율(%)	EE	18.9	28.2	32.1	33.3	31.8	35.5	33.5
	LV	31.1	35.5	36.5	32.5	30.2	39.0	43.1
	LT	28.1	43.6	40.1	39.2	33.3	38.9	39.1
시간당 최저임금(유로)	EE	0.17	0.47	0.82	1.02	1.73	1.73	1.73
시간당 평균임금(유로)	EE	0.94	1.69	2.53	3.03	3.5	4.80	5.04

주: EE:에스토니아, LV: 라트비아, LT: 리투아니아

자료: Masso, J., Espenbergm K., Masso, A., Mierina, I., Philips, K., (2012) Growing inequalities and its impacts in the Baltics. Country report for the Baltic states: Estonia, Latvia, Lithuania, p.110에서 인용

## 2. 실업정책

### 가. 실업부조, 실업보험

발틱 국가의 실업정책의 시작은 1991년 3개국 모두에 도입된 실업부조(Unemployment Assistance: UA)로부터였다(Paas et al, 2004b, p.39). 실업부조의 일반적인 특징이 자산조사를 통해 급여를 지급하는 것인데, 발틱 국가들의 최초의 사회부조는 자산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최소 금액이 지급되었다는 점이 특이한 점이다(Paas et al, 2004b, p.40).

이후 실업부조가 라트비아(1997년)와 리투아니아(1996년)에서 실업보험(Unemployment Insurance: UI)제도로 대체되었고, 에스토니아에서는 실업보험제도가 2002년에 도입(기여기간이 요구되어 실제 급여 지급은 2003년부터 시작)되었지만, 기존의 실업부조는 폐기되지 않고 함께 공존하고 있다(Masso, Espenberg, Masso, Mierina, & Philips, 2012, p.121). 다시 말하면 에스토니아에서는 실업보험이 2층 체계로 이루어져서, 1층의 재원은 실업보험기금에서 나오고, 2층의 재원은 정부 예산에서 조달되는데, 비록 자격요건이 되지 않아 실업보험을 받을 수 없게 될지라도 자산조사를 통해 2층 기금을 통해 실업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Aidukaite, 2006, p.263).

한편 라트비아와 리투아니아가 실업부조를 실업보험으로 대체했다고 하더라도, 두 나라에서는 실업보험에 대한 많은 예외 사항을 마련해 두었다. 예를 들어, 취학 전 자녀를 둔 여성, 교도소에서 석방된 여성 등은 고용의 기회가 없어 실업보험의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실업보험 적용 예외규정을 두어 최소 수준의 급여를 제공하고 있다(Paas et al, 2004b, p.40). 2000년대 초반에는 예외 규정이 더욱 늘어

서 장애인 가족을 돌보거나, 군복무 중이거나, 교도소에 수감된 경우, 직업학교 및 고등 교육 기관 학생, 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는 국가 사회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었다(Aidukaite, 2006, p.263). 이는 사회보험제도의 연대적 성격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7-13〉 발틱 3국의 실업급여(2000년대 초반)

급여의 종류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부조	보험	보험	보험
급여율	정액급여	이전 임금 기준 1-100일 : 50% 101-360일 : 40%	평균기여지급 급여 기준 1-3개월 : 50-65% 4-6개월 : 37.75-48.75% 7-9개월 : 25-32.5%	보험기록 길이에 따라 최소 급여와 최대 급여 사이의 보험 기록이 다름
평균급여액 (유로)	26	-	80	50
최대급여액 (유로)	26	528 (전년도 전국 평균임금의 150%)	444	70 (최저생계수준의 2배)
최저급여액 (유로)	26		-	38 (국가지원임금)
평균급여액 (유로)	352		282	277
평균임금 대비 평균 급여비율	7.3%	-	28.5%	17.9%
지급기간	180일	360일	270일	180일
급여자격	실업 전 12개월 안에 180일 동안 근무 기록	등록 전 2년 안에 1년 이상 근무 기록	실업 등록 전 1회 이상 보험에 기여하고, 12개월 안에 9개월 이상 근무기록	지난 3년 중 최소 24개월 동안 사회보험에 기여하고, 근무 기록

급여의 종류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부조	보험	보험	보험
재원	피보험인과 고용주는 비용부담하지 않고 정부에서 모든 비용을 부담.	피보험인: 급여와 수당의 0.5-2% 고용주: 급여지급총액의 0.25-1%	피보험인과 고용주: 급여총액의: 1.90% 정부: 현역 군인과 18개월 미만 돌보는 개인에게 급여지급	피보험인 부담 없고, 고용주가 급여총액의 1.5% 내면 이는 실업기금으로 이전됨. 만약 적자시 정부 예산에서 할당

자료: European Commission. (2021a). Your social security rights in Estonia, p.41-44;  
 European Commission. (2021b). Your social security rights in Latvia, p.51-54;  
 European Commission. (2021c). Your social security rights in Lithuania, p. 37-40  
 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에스토니아에서는 실업보험에 대한 최소 기여 기록 요건이 엄격히 적용되며,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실업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다. 에스토니아의 실업보험 자격조건은 매우 엄격하였는데, “1990년대 EU 국가에서는 실업보험이 일반적이지만, 에스토니아에서는 실업보험 기간, 지급조건 등이 매우 엄격하며 까다로웠다”(Raul Eamets, 2021.10.14). 적극적인 구직활동은 발틱 3국 모두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 중 하나이다. 여기에는 현지 노동 사무소에 실업자로 등록하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것이 포함된다. 이는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에서 그리고 리투아니아에서 등록 시 최소 30일마다 노동 사무소를 방문하는 것을 의미한다. 당사자가 적절한 일자리 제안을 거절할 경우 급여 지급이 종료될 수도 있었다. 급여율은 과거 소득, 고용 기록, 연령, 자녀의 존재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 실업보험 제도에서는 급여가 종전 소득의 비율로 설정돼 실업 기간에 따라 줄어든다. 리투아니아 보험급여는 이전 소득과 관련이 없고, 일정 노동기간 요건이 갖춰져야 하며, 최대 급여는 25년 이상 고용된 경우에 지급된다(Paas et al, 2004b, pp.40-44).

### 3.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1990년대 노동시장 정책은 적극적이지 못하였다. “1990년대에는 변화가 매우 적는데, 국가가 제공하는 실업급여와 몇몇 훈련 프로그램 정도로 에스토니아의 1990년대 노동시장정책은 매우 빈약했다”(Raul Eamets, 2021.10.14.).

EU 가입을 위해 2000년대부터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실질적으로 도입되었다. OECD의 경험에 따르면, 실업보험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취업 상담과 구직 지원을 제공하는 공공 고용 서비스(PES)의 역량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보험을 도입한 이후 라트비아와 리투아니아의 공공고용서비스 사무소의 네트워크가 잘 짜여져 있었고, 이를 이용하여 일자리 상담 및 일자리 클럽 운영에 사용되어지고 있었다(OECD, 2003, pp.8-9). 1997년 EU는 ‘유럽고용전략’을 채택하였는데, EU 가입을 준비하고 있던 발트의 국가들도 이를 기반으로 국가 고용 실천 계획을 구상했다. 유럽고용전략이 구상한 핵심 목표는 ‘모든 실업자가 12개월의 실업 또는 6개월의 실업에 도달하기 전에 훈련, 재교육, 근로태도, 일자리 또는 기타 고용 가능한 조치를 5년 이내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당시 OECD에서 제안한 일자리 전략과 거의 동일한 정책적 우려와 제안을 하고 있었는데, 유럽고용전략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ALMP)에 더 중점을 두고 있었다(OECD, 2003, p.56). 2004년에는 ALMP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에스토니아에서 0.23%, 라트비아에서 GDP의 0.46%, 리투아니아에서 GDP의 0.22%였다(Masso et al, 2012, p.121).

〈표 7-14〉 발틱 3국의 적극적 노동시장에 대한 GDP 대비 지출비율(2001년)

(단위: %)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ALMP	0.06	0.14	0.12
Job clubs	-	0.007	0.004
직업훈련	0.05	0.08	0.05
공공근로	-	0.05	0.04
고용지원금	0.004	-	0.02
창업지원금	0.005	-	-
고용사무소운영	0.02	na	0.09
실업급여	0.13	0.5	0.15
합계	0.22	0.6	0.36

주: 라트비아의 실업급여비율은 2000년

자료: OECD. (2003). Labour Market and Social Policies in the Baltic Countries, p.78 참고하여 저자가 재구성.

## 4. 연금정책

### 가. 3층 체계 연금제도 도입

1940년에서 1990년 사이에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의 연금 제도는 1956년 소비에트 연방 연금법에 기초했다. 국가 예산으로 지급된 이 연금제도 수급의 자격은 고용에 기초했기 때문에 자영업자나 농업종사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었지만, 1965년에 농민들을 위한 국가연금이 설립되었다. 이후 두 개의 연금은 통합되어 운영되었는데, 모두 국가 예산으로 조달되었다. 완전고용을 목표로 했던 사회주의의 전통에서 어떤 이유로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없었으나, 매달 정액의 형태로 사회부조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연금은 정액으로 책정되고 급여의 차이가 별로 없었다(Aidukaite, 2006, p.260). 1991년 체제전환 이후에도 여전히 소련의 연금법을 따랐

던 발틱 3국은 독립 이전에 연금에 기여했던 많은 노인들에 대해 최소연금액 이상의 수준으로 보장을 했고, 이에 따라 노인들의 빈곤상황에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현재의 노동인구인 젊은 세대들은 노인 부양에 대한 부담을 크게 안게 되었고, 또한 연금제도에 대한 신뢰를 보이지 않았다(OECD, 2003, p.9). 발틱 3국은 체제전환 이후 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고용의 감소, 출산율 감소, 기대수명의 증가, 이민자의 폭등으로 인한 노동인구 감소로 인해 급속하게 고령화 사회로 이행될 것이라 예상되었다(Aidukaite, 2013, p.97). 한편, 세계 여러 나라들은 1990년대 중반까지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국제노동기구가 공히 향후 5~10년에 걸쳐 조금씩 정년퇴직 연령을 올리라는 압력을 받고 있었다. 많은 경우 상당수의 조기 퇴직이 실업의 대안으로 작용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조기퇴직을 희망하고 있었고, 소련시대부터 적용되어 온 이른 정년(남성: 60세, 여성: 55세)은 연금 재정에 부담을 더 줄 뿐이었다(Deacon, 2000, p.153). 특히 세계은행은 선진국의 연금 시스템 분석에 기초하여 부과방식의 연금제도와 기금 제도의 조합을 추천했다(Paas et al, 2004b, 34p). 결국 발틱 3국은 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개혁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 나. 개혁의 결과

### 1) 정년 연장

증가하는 고령화 인구로 연금제도가 엄청난 압박을 받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 인구의 비율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충분한 노동력 공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틱 3국은 모두 정년을 높였다. 2008~2016년까지 라트비아와 에스토니아는 각각 남성 62.5세, 여

성 60세, 리투아니아는 남성 62.5세, 여성 60세로 정년을 연장하는 조치를 취했다(Aidukaite, 2006, p.261).

## 2) 3층 체계 도입

발틱 3국은 모두 3층 체계 연금 방식으로의 전환을 채택했다. 1층 체계는 모든 노인에게 소득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공적인 연금체계로서, 강제적이고, 국가가 운영하며, 기금방식이 아니고, 근로를 통한 연금보험에 대한 기여 또는 노동 소득에 대한 세금(부과 방식: PAYG)을 기반으로 운영된다(Paas et al, 2013). 소련 시절 은퇴했거나 연금기여기간이 충분하지 않거나 또는 아예 근로 기록이 없는 경우에도 이전의 기여금이나 시민권(거주권)을 근거로 정액 연금 혜택을 제공한다(Aidukaite, 2006, p.260). 에스토니아와 리투아니아에서 이러한 혜택은 최소 노령연금과 같으며, 에스토니아는 추가로 이러한 혜택을 받는 수급자가 연금을 신청하기 전에 최소 5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라트비아의 경우 5년 자격요건 기간 외에 신청자의 연령이 정상 연금수급 가능연령을 5년 초과해야 하며, 이 경우에도 급여액은 사회보장국가급여 수준에 불과하다(Rajevska & Rajevsk, 2014, p.194). 1층 체계는 은퇴자들의 연금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따라서 자금 조달에 대한 가장 큰 부담을 안고 있다(Aidukaite, 2004). 1층 체계는 에스토니아에서 1993년, 라트비아에서 1996년, 리투아니아에서 1995년에 도입되었다. 특히 라트비아는 세계에서 최초로 NDC(명목확정기여) 방식을 적용했는데, 연금을 명목상의 개인 계정에 기록하는 방식이다. 비슷한 시기에 같은 방식을 도입한 스웨덴, 이탈리아가 특정 연령에만 적용한 데 반해 라트비아는 적용 즉시 모든 연령에 이를 적용했다. 라트비아에서는 평생소득이나 장수의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균일한 보험수리 공식을 적용하게 되면서 연금액이 양

극화되었고, 이로부터 실질적인 재분배 기능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Rajevska & Rajevsk, 2014, p.187). 2층 체계는 의무적으로 연금을 기여하고 동시에 이를 민간영역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체계인데 (Rajevska & Rajevsk, 2014, p.188), 2층 체계는 라트비아에서 2001년, 에스토니아에서 2002년, 리투아니아에서 2004년에 도입되었다 (Aidukaite, 2011, p.72). 3층 체계는 자발적인 민간 연금 제도로, 발틱 국가 모두 3층 체계에 대해 상당한 세금 혜택을 제공해 국민들이 더 많이 참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Paas et al, 2004b, p.34). 라트비아와 에스토니아에서 1998년에, 리투아니아에서는 2004년에서야 도입되었다.

〈표 7-15〉 발틱 3국의 3층 체계 도입 시기 및 내용

국가	1층 체계	2층 체계	3층 체계
에스토니아	국가운영 부과방식연금 (state-managed pay-as-you-go pension scheme) 2000년 4월	민간운영의 강제가입 적립식연금 (privately-managed mandatory funded pension scheme) 2002년 7월	민간운영의 임의가입적립식 연금(privately-managed voluntary funded pension scheme) 1998년 8월 1일
라트비아	명목확정기여 방식(NDC) (notional defined contribution pay-as-you-go pension scheme) 1996년 1월	강제가입-적립식 연금 (The state mandatory funded pension scheme) 2001년 7월	민간운영의 임의가입적립식 연금 (privately-managed voluntary funded pension scheme) 1998년 7월
리투아니아	국가운영 부과방식연금 (state-managed pay-as-you-go pension scheme) 1995년 4월	강제가입-적립식 연금 (The state mandatory funded pension scheme) 2004년 1월	민간운영의 임의가입적립식 연금(privately-managed voluntary funded pension scheme) 2000년 1월

자료: Paas, T., Hinnosaar, M., Masso, J., Szirko, o. (2004b) Social protection systems in the Baltic States of Tartu Economics and Business Working Paper No. 26-2004, p.35 참고하여 저자가 정리.

2층 체계가 오직 노령연금만을 목표로 한다면, 1층과 3층 체계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과 관련이 있다(Aidukaite, 2011, p.72). 2층과 3층 체계를 통해 연금 시스템에 대한 개인의 관심과 책임을 증가시키고 불리한 인구 통계 개발로 인한 연금 대체율 감소를 방지하도록 설계가 되었다. 한편, 2층과 3층 체계의 도입은 복지제도 내에서의 사적 책임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Aidukaite, 2006, p.262). 발틱 3국의 연금체계의 특징이 있는데, 1990년대 후반 세계은행의 권고에 따라 발틱 국가들은 3층 체계 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2층과 3층 체계를 중남미 방식으로 개혁하였다. 고용주나 노조가 투자 책임자를 임명하여 고용주나 노조의 선택에 기초하는 OECD 방식과 다르게, 중남미 방식은 피보험자들이 직접 투자 관리자를 선택하는 것이다(Masso et al, 2012, p.119). 그러나 개혁 초기 발틱 시장의 민간 연금제도의 시장은 작고 금융 인프라가 낙후되어 있었고, 일반 피보험자들이 3층 체계까지 가입할 수 있는 소득의 여유가 없었다(Deacon, 2000, p.154). 대신에 2층, 3층의 연금체계가 시행되면서 고소득층은 민간보험을 통해 생활수준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었다(Aidukaite, 2011, p.72).

### 3) 전환비용

2층 체계는 사회보험의 기여금은 국가의 특별예산에서 연기금으로 실제 전입이 이뤄지며, 피보험자는 전입할 때마다 일정 수량의 주식을 취득한다. 전환된 연기금은 민간연기금 운용회사에서 기여금을 다른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참여자의 기여금에서 연간 총자산가치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공제한다. 퇴직 시 피보험자의 기여금에 발생이자를 더한 적립자본은 위에 기술한 규칙에 따라 연금으로 추가 전환하거나, 보험회사로부터 종신연금보험에 가입하여 매월 급여로 전환하여 수령한다

(Rajevska & Rajevsk, 2014, p.188). 이 전환비용은 노동자의 참여가 많고, 2층 체계에 대한 기여가 클수록 비용이 높아진다(Paas et al, 2004b, p.37).

〈표 7-16〉 발틱 3국의 2층 체계 도입에 따른 전환비용

(단위: %)

	2005	2010	2015	2020
에스토니아	0.6	0.75	0.83	0.83
라트비아	0.5	2	2	2
리투아니아	1	0.8	0.5	0.6

주: GDP 대비 연간비용

자료: Casey. (2004). Pension reform in the Baltic States: Convergence with “Europe” or with “the world”, p.37에서 인용하여 저자가 재구성함.

## 5. 건강정책

### 가. 체제전환 직후 발틱 3국의 상황

발틱 3국의 보건의료 체계는 독립 회복 이후에도 소련의 중앙집권적이고 국유화된 의료체계<sup>52)</sup>였던, 세마스코 모델<sup>53)</sup>을 물려받아 ‘병원(치료중

52) 전 국민에게 무상의료를 제공하고 있었던 소련의 보건의료 체계는 북미 및 서구 유럽 국가들과 달리 공공보건 및 질병예방을 위한 정책설계를 할 수 있는 자원이 없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1977년 세계보건기구(WHO)의 세계 보건 총회와, 1978년 알마-아타 일차보건의료회의(Alma-Ata Conference on Primary Health Care)에서 질병 치료에 초점을 맞추던 기존의 의료 체제에서 건강관리를 통한 질병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되면서 북미와 서유럽국가들은 이에 따라 국가차원의 보건정책을 수립했다. 한편 소련도 국제기구의 일차보건의료의 확대 선언에 지지를 보냈으나 서구에서 이를 다양한 학제(역학, 보건행정 등)와 연결하여 협의하고, 의학 교육의 변화를 주었던 것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즉, 세계적인 추세를 따르기 위해 소련의 보건 계획 및 정책은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들의 협업이 아닌, 의학대학 교수진이나 전통적으로 질병치료 지향적 훈련을 받은 의사들에게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책임이 지어진 것이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공중 보건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었고, 또한 공공보건에 대한 교육을 할 학교나 수 업내용이 존재하지 않았다. 소련이 공공보건 및 질병예방을 위한 정책 설계를 할 수 없었던 또 다른 이유는 건강통계와 이에 관한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취약집단과

십)’을 기반으로 하는 접근방식에만 중점을 두었고, 정책 예산 및 행정 시스템을 중앙집권적으로 운영하면서 비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Aidukaite, 2013, p.100). 이에 세 나라는 1990년대 이후 공통적으로 의료 서비스의 효율성과 질을 높이기 위해 보건의료 체계의 개혁을 단행했다. 사회주의 시대 보건의료의 현황은 자원, 인프라, 의료진 부족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었기 때문이다.

“1990년대 보건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여러 개혁을 시도하였지만 아무것도 개혁되지 못하였고, 여전히 문제이다. 그 중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의료진 부족 문제인데, 의사, 특히 간호사들의 임금이 낮아서 문제가 되고 있으며, 그들이 서유럽으로 이민하는 본질적 이유이다”(Olga Rajevska, 2021.10.07.)

보건의료 개혁을 통해 의료 시설의 현대화, 의료용품 및 약제의 안정적인 수급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공공보건의 발전에 많은 노력을 쏟았는데, 공공보건 전문가 양성 및 건강 정보 시스템 개발을 위해 WHO 등 국제기구의 여러 프로젝트를 통해 다른 국가들로부터 필요한 훈련과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국제연구 네트워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Kalnins, 1995, p.181). 또한 ‘병원’ 중심의 의료체계를 개혁하면서 병원의 과잉수용을 줄이기 위해 병원과 병상을 줄여 장기요양시설로 전환하거나 외래진료를 더욱 확대하는데 자원을 활용했으며, 동시에 현대적인 병원 시설과 의료기술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졌다(Marzena, Jacek, &

---

질병 분포에 관한 건강 통계와 정보는 보건 정책의 개발과 효과적인 정책 집행을 위한 자원 배치에 필수적이지만, 소련 사회 내부에서 공적으로 사회조사는 진행될 수 없었으므로 건강 관련 데이터를 정확하게 수집할 수 없었다. 있다고 해도 국제사회에서 데이터에 대한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Kalnins, 1995, p.179).

- 53) 마르크스와 레닌의 해석에 기초하여, 소련 모델은 건강서비스의 보편적 특성, 공공 자원 조달, 공공 보건에 대한 완전한 국가(당사자) 통제, 모두를 위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완전한 접근, 공공 급여와 의료 인력에 대한 교육을 국가가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Kozłowska & Sikorski, 2020, p.9)

Alicja, 2021, p.3). 발틱 3국은 보건의료정책을 유사한 방향으로 변화시켜나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공통적인 면과 함께 몇몇 핵심적인 면에서는 차이를 보이게 되었다.

### 1) 의료 재정 개혁<sup>54)</sup>

1990년 5월 에스토니아 정부는 ‘보험 기반 의료(insurance-based medicine)’의 시행을 결정하고, 다음해 6월 ‘에스토니아 건강보험법’을 제정하면서, 체계적인 국민건강보험 제도가 만들어졌다. 이 제도로 국민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재 및 상해관련 처리, 임신과 출산 관련 혜택과 비용 등의 지불에 관한 재정기반이 설립되었다. 같은 해에 의료 서비스 조직에 대한 규정이 채택되었고, 이 규정은 오늘날 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1991년 에스토니아에는 22개의 지역 의료보험기금이, 1994년에는 17개로 감소하였고, 정부, 근로자, 고용주 대표로 참여한 15인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강보험 이사회 역할을 하는 중앙 건강보험 기금이 설립되었다. 의료 금융의 통합은 2002년 모든 보험 가입자에게 동등한 의료 보증을 제공하고자 에스토니아 의료 보험 기금과 지방정부 예산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선택했고, 이후 1998년에 정부 예산에서 중앙재정으로 이동하였다. 그러나 이 방식은 계속해서 구체적인 자금원과 예산의 규모를 결합하는데 사용되었고 8개의 지역 의료보험 기금은 시스템을 관리하는 데 사용되었다.

라트비아의 의료 지출은 다른 형태의 사회 지출(연금, 실업급여)과 결합되어 있지만, 2005년에 단일 국민건강보험청을 통해 사회세를 기반으

54) Marzena, T. Jacek, K & Alicja, D. (2021) Financing Healthcare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an Countries: How Far Are We from Universal Health Coverage? 의 p.3-11를 참고하여 저자가 재구성.

로 의료비를 균일하게 조달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리투아니아 또한 1990년대 초에 다양한 자료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시스템을 시작했다. 의료 기관은 지역 예산과 국가 예산에서 자금을 조달 받았고 의약품 비용은 주 사회보험기금위원회(SOdRA)를 통해 자금을 조달받았다. 1997년, 리투아니아는 전국을 중심으로 의료보험 제도를 도입했다. 당초 비교적 적은 보험금(임금의 3%)을 사용하여 조달된 환자기금과 10개 지역기금은 귀속소득세(imputed income tax)를 기준으로 국가 예산에서 보충되었다. 2003년 이후, 지역기금은 5개가 되었으며, SODRA가 징수하는 사회세 규모는 국회에서 1년 단위로 결정되고 있다.

에스토니아에서는 가용 자금 규모가 불충분하더라도 정치적 사건이 의료 재정 결정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의료 시스템은 단기적으로 미래에 대한 안정성과 명확성을 누려왔다. 반면에 라트비아와 리투아니아에서는 자금 조달 계획이 종종 변경되었으며 의료에 제공되는 자금 수준은 정치적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결정된다(Aaviksoo & Sikkut, 2011, p.59).

발틱 3국의 GDP 대비 의료 지출비율과 1인당 총 보건 지출은 꾸준히 증가해 왔다(Aaviksoo & Sikkut, 2011, p.59). 2012년부터 2020년까지 EU회원국 중 발틱 3국은 의료비지출 비율이 가장 많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기준으로 EU 평균은 9.87%, 에스토니아는 6.66%, 라트비아는 6.57%, 리투아니아는 6.57%로 발틱 3국의 의료비 지출은 여전히 EU 평균보다 낮다(Eurostat current healthcare expenditure relative to GDP 2018., n. d.). 발틱 3국의 건강정책은 공공부문이 보건의료 서비스를 관리하고 상당부분 예산을 조달할 책임도 가지고 있다. 건강정책에서의 지방 정부의 역할 및 책임은 발틱 3국에서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는데,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의 지방정부는 저소득층의 보건 서비스

스 이용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 리투아니아에서는 지방 정부가 좀 더 큰 역할을 하는데, 병원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가정의(GP)의 재정지원을 맡고 있다.

## 2) 보건의료 서비스 비용 지불 방법<sup>55)</sup>

발틱 3국에서 보건의료 부분의 공공부문 지출이 높고, 거의 보편적인 의료정책을 펴고 있지만, 세 나라 모두 긴 대기 시간(waiting list)이 문제가 되고 있고, 일반 국민들은 공공의료체계 안에서 민간 의료보험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자기부담금(out-of-pocket: OOP)을 지불하고 있다. 이 자기부담금은 소련 시절부터 이어져 오던 현상이었는데, 체제전환 이후에도 계속해서 주요한 서비스 지불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다. 높은 수준의 자기부담금이 발틱 3국의 의료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의료 시스템의 연대 기반 재분배가 감소하고,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도 줄어들고 있다. 에스토니아에서 2009년 민간부분 의료비 지출의 97%(총 의료비 지출의 10%)가 자기부담금이었지만,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은 매우 낮았다(Eurostat, n.d.)

## 3) 의료 기반 시설 형태의 변화 그리고 부족한 의료 전문가

고령인구의 증가로 기존의 병원들은 장기요양병원으로 전환되었다. 또한 대규모 의료 시설에서 규모를 줄여 지역사회 중심의 시설들로 의료시설의 형태를 변화시켜나갔다(Marzena et al, 2021, p.3).

---

55) 이 소절의 내용은 Eurostat. (n.d.). current healthcare expenditure relative to GDP 2018. [https://ec.europa.eu/eurostat/statistics-explained/index.php?title=Healthcare\\_expenditure\\_statistics](https://ec.europa.eu/eurostat/statistics-explained/index.php?title=Healthcare_expenditure_statistics)에서 2021년 9월 30일 인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재구성 및 정리함.

1990년대 이 후 전문 의료진을 양성하기 위한 의료개혁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의학 관련 전문가가 많이 배출이 되지만 의료 전문가의 수가 부족한 현상이 나타났다. “가장 최악의 상황이 되었을 때, 많은 병원들이 닫게 되고, 의사들은 직업을 바꾸기도 하였다”(Olga Rajevska, 2021.10.07.) 특히 간호사 인력의 부족현상이 두드러졌는데 2008년에 리투아니아와 에스토니아는 의사 1인당 평균 2.0명의 간호사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라트비아의 의사 1인당 평균 간호사 수는 1.8명이었는데 세 나라 모두의 목표수준은 의사 1인당 3명이다. 그 이유는 2004년 발틱 3국이 EU에 가입하게 되면서 많은 의료 전문 인력들이 서유럽으로 떠나면서 나타나게 된 현상이다. 이에 발틱 3국은 전문 의료인들에 대한 임금을 빠르게 인상시키면서 이들에 대한 이민을 다소 억제시킬 수 있었지만, 2009년 경제 위기와 이와 관련된 임금삭감은 다시금 전문 의료인들의 이민을 막기에 역부족이었다.

#### 4) 일차진료체계와 가정의(GP)

에스토니아에서 다른 발틱 국가들에 비해 더 확실하고 빠르게 일차 진료 체계의 발전을 이루었는데 이는 가정의(家庭醫)(GP)가 중심이 되어 외래진료(ambulatory care)제도가 잘 운영되었기 때문이다. 1997년 이래로, 인두제(capitation fees)<sup>56)</sup>의 도입은 에스토니아 건강보험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인두제의 도입은 가정의들에게 전문가로서의 위엄을 드높이게 했을 뿐만 아니라 가정의의 재정적인 자립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만들었다. 또한 발틱 3국의 의료 시스템은 인두제 기반의 자금 조

56) 인두제(capitation)는 서비스마다 일정액을 지불하는 행위별수가제와 달리 일정기간동안 서비스 기관에 등록된 서비스 대상자 1인당 일정액을 지불하는 서비스로 지불체계 방식의 한 유형이다(김찬우, 2005, p.108).

달에 훨씬 덜 증점을 두었다(Aaviksoo & Sikkut, 2011, p.63).

### 5) 건강보험 사각지대

건강보험 미가입자는 일부 공중보건 프로그램이나 응급의료 서비스에만 접근할 수 있어 의료서비스 접근성에 제약이 생긴다. 그러나 라트비아와 리투아니아는 건강서비스 정책이 고용상태와는 엄격한 관련이 없기 때문에 거주민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는다. 그러나 라트비아에서 이 권리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은 대부분 환자의 즉시 지불 능력(out-of-pockets)<sup>57)</sup>에 달려 있으며, 이는 의료 서비스의 가용성이 응급 의료로 제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6) 발틱 3국 인구의 건강상태

발틱 3국의 기대수명은 증가하고 있으나, EU 국가 중 특히 근로 연령 남성의 질병 사망률이 높은 편이다. 아래의 그림은 2016년 EU국가들의 특정질병 사망률을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발틱 3국은 암 사망률에서 EU 국가들 중 최상위권에 속하고, 심장질환과 뇌질환에서 리투아니아와 라트비아와의 남성들이 압도적으로 높은 사망률을 보이고 있다. 그 원인은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알코올 소비는 사망률과도 연관되었다. 남성이 여성보다 10년 정도 빠르게 사망하는데, 이는 그들의 행동, 건강, 도움 요청, 특정 습관, 음주, 흡연, 운전 습관, 정신건강 문제 등에서 기인한 것이다”(Eg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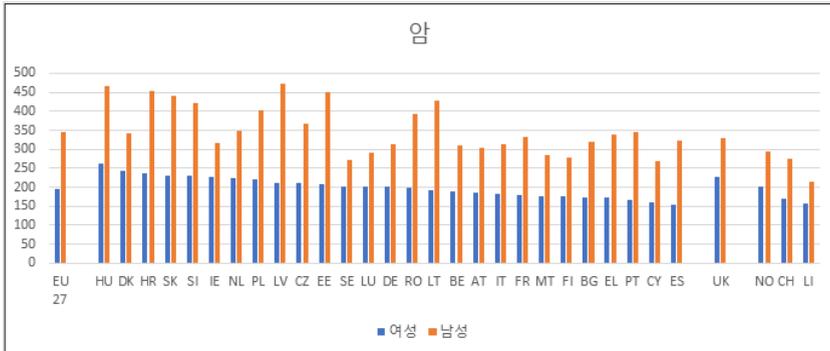
---

57) 건강 관련 지출이 건강보험을 통해서 지불되지 않고, 개인이 직접 분담하여 지불한 비용, 자가 치료 등으로 지불한 비용을 의미한다. (OECD홈페이지: Glossary of statistical terms: Definition of 'out-of-pocket expenditure by households health: <https://stats.oecd.org/glossary/detail.asp?ID=1967>, 2021년 10월 1일 인출)

Sumskiene, 2021.10.29.). 남성에 비해 여성의 숫자는 적지만, 여타의 EU 국가들과 비교하면 역시 사망률이 높다.

[그림 7-14] 발틱 3국의 성별 암 사망률(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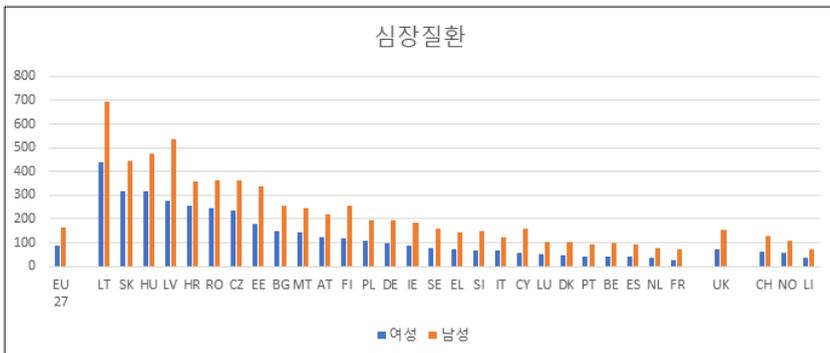
(단위: %)



자료: Eurostat, (n.d.). Health Perception-cause of death. [Website].  
<https://ec.europa.eu/eurostat/cache/infographs/womenmen/bloc-1c.html?lang=en>에서 2021. 09. 02. 인출.

[그림 7-15] 발틱 3국의 성별 심장질환 사망률(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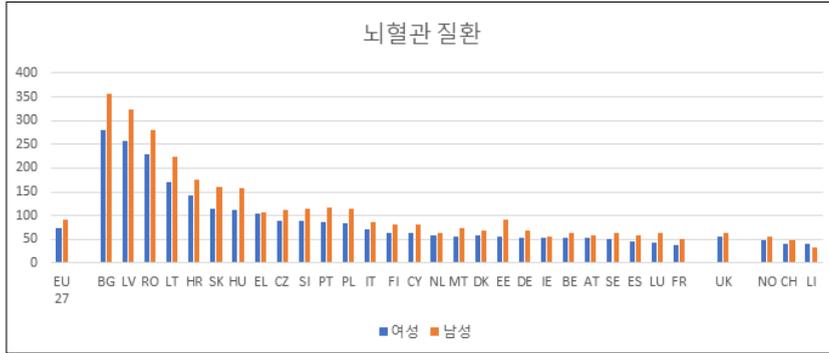
(단위: %)



자료: Eurostat, (n.d.). Health Perception-cause of death. [Website].  
<https://ec.europa.eu/eurostat/cache/infographs/womenmen/bloc-1c.html?lang=en>에서 2021. 09. 02. 인출.

[그림 7-16] 발틱 3국의 성별 뇌혈관 질환 사망률(2016년)

(단위: %)



자료: Eurostat, Health Perception-cause of death. [Website]. (n.d.).  
[https://ec.europa.eu/eurostat/web/products-datasets/-/sdg\\_03\\_40](https://ec.europa.eu/eurostat/web/products-datasets/-/sdg_03_40)에서 2021. 09. 02. 인출.

여러 연구들에서 심혈관 질환 등이 높은 이유를 과도한 업무 환경 등을 들고 있는데, 발틱 3국의 높은 술 소비량도 어느 정도 연관이 되리라 짐작된다. 리투아니아는 세계에서 주류 소비량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로, 2015년 주류 소비량은 15세 이상 1인당 14L에 달했다. 국회는 2017년 주류에 대한 소비세 인상, 법정 음주 연령 상향 조정(18세에서 20세로), 주류 판매시간의 제한, 주류 광고 금지를 내용으로 주류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비록 부결되긴 했으나 국회 의사 결정 과정에서 일부 추가 규제 조치(투명하지 않은 포장에 알코올 음료 운송 및 보관 의무화, 공공 행사 중 알코올 소비 제한 지역 도입 포함)가 제안되기도 하였다 (SGI 2019, p.22).

### 7) 상병수당

상병수당(sickness benefits)은 사회보험 기여와 시민권(거주)을 기준으로 급여의 자격조건을 갖춘다. 상병수당과 관련된 모든 재원에 대해서,

에스토니아는 건강 보험 기금(Estonian Health Insurance Fund), 라트비아는 국가사회보험기관(State Social Insurance Agency (SSIA), 리투아니아는 국가사회보험기금(the State Social Insurance Fund)에서 자금을 조달한다. 상병수당은 질병이 발생한 첫날부터 완전한 재활을 하거나, 영구적인 장애를 가진 것으로 선언될 때까지 급여가 지급되었는데, 근로 기록에 따라 최저 및 최고 소득의 상한선을 가지고 일정 기간 근로를 한 사람에게 지급되었다(Aidukaite, 2006, pp.264-265).

〈표 7-17〉 발틱 3국의 상병수당 급여 내용(2001년)

	대체율	급여기간	대기기간
리투아니아	임금대체율 85%	90일 이하, 영구장애 확진 이 후 평생 동안	없음
라트비아	전국평균급여의 80%	근로불능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52주 이하, 근로불능상태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경우 3년 동안 72주 이하 사용	1일
에스토니아	평균임금대체율 80%	연속적으로 182일, 결핵의 경우 연속적으로 240일 이하	1일

자료: Aidukaite(2006), The formation of social insurance institutions of the Baltic States in the post-socialist era,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0958-9287; Vol 16(3): p.265 자료를 저자가 정리함.

위의 표는 2001년을 기준으로 한 질병보험의 대체율과 지급기간에 관한 것이다. 대체율은 세 나라 모두 높은 편이고, 라트비아에서 지급기간이 가장 길고, 리투아니아는 대기 기간이 필요하지 않다.

사실상 소련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가며 큰 변화 없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Aidukaite, 2006, p.264) 상병수당의 최근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래의 표는 2018년 기준의 상병수당의 보장기준이다.

〈표 7-18〉 발틱 3국의 상병수당 보장기준(2018년 기준)

국가명	의료 보장	상병 수당	적용 대상	보장 방식	보장 수준	유급 병가	대기 기간	최대 보장기간
에스토니아	건보	건보	직장, 지역	정률	70%	4-8일	9일	6개월
라트비아	연금	연금	직장, 지역, 14세 이하 자녀	정률	80%	2-10일	10일	52주(3년)14일 (입원21일)
리투아니아	건보	상병	직장, 지역, 피부양자	정률	80%	2일	2일	1년, 7,14,120일

자료: 임승지, 이용갑, 이정면 (2021), 외국의 상병수당제도에 관한 비교 연구, p.74를 저자가 발틱 3국만 발췌함.

에스토니아와 리투아니아의 의료보장은 건강보험을 통해 이루어지고 라트비아는 같은 사회보험체계이지만 연금을 통해 귀속되어 있다. 리투아니아는 별도의 상병보험을 두고 있고, 별도의 보험요율을 책정해 두고 있는데, 리투아니아의 상병수당에 대한 보험료율은 직장 근로자의 경우 고용주가 3.6%로 모두 부담하고, 지역가입자인 자영업자는 본인이 상병보험을 3.6% 부담한다(임승지 외, 2021, p.70). 에스토니아와 달리 라트비아는 피보험자 자신뿐만 아니라 14세 이하의 자녀가 아픈 경우에도 상병급여를 사용할 수 있으며, 리투아니아는 피부양자가 아픈 경우까지도 상병급여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리투아니아는 유급병가 기간이 다른 발틱 국가들에 비해 짧지만, 급여를 수급하기까지의 대기기간이 없고, 급여의 최대보장기간이 가장 길다.

## 6. 가족정책

### 가. 발틱 3국의 가족정책 특징과 2009년 경제 위기 전후의 상황

발틱 3국은 1990년대와 2000년대에 걸쳐 유럽에서 가장 빠른 인구 감소를 경험했는데, 출생률 감소, 노인 인구의 증대, 증가하는 이민 등이 그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Navickė, 2020, p.143). 이러한 인구학적 상황은 발틱 국가들로 하여금 가족 정책에 더 많은 정치적 관심을 기울이도록 동기를 부여했고(Ainsaar, 2019, p.59), 그 결과 1996년 에스토니아에서 인구부 장관직(The cabinet post of Minister of Population Affairs)이, 2002년에는 라트비아에서 아동 가족부(Ministry of Children and Family Affairs)가 설치되었고, 그 결과 전반적으로 가족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자체가 매우 관대한 수준으로 집행되고 있다(The Social Policy Archive for SHARE, 2014; The Social Policy Archive for SHARE, 2015; SGI, 2020a, 2020b, 2020c). 그러나 이러한 제도 도입은 20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대부분의 제도적 수단은 2000년대에 도입되었다. 2003년에 ‘부모임금(Parent salary)’이 도입되었으며, 대부분은 여성에게 지급되었다”(Raul Eamets, 2021.10.14.). 에스토니아뿐만 아니라 라트비아도 마찬가지였다. “독립 이후 경제적 빈곤과 함께 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하였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가족문제는 개인적인 문제라고 인지하고 국가 지원 및 고려가 부족하였다”(Olga Rajevska, 2021.10.07.)

Ainsarr & Riisalu(2014, pp.68-70)에 따르면 국가는 출산촉진정책(pronatalism)의 일환으로 아동의 출생 후 1~2년간 지원을 집중하거나,

또는 아동의 복지(wellbeing, 또는 아동이 있는 가족에 대한 지원)에 중점을 둔 정책으로 자녀의 출생에 대한 지원은 약하게 하고, 아동 및 청소년기를 더 지원하거나 때로는 장년의 자녀를 더 지원하는 등의 두 가지 방향으로 가족 정책을 시행한다고 분석했다. 발틱 3국은 출산휴가, 출생수당, 육아 휴직 등이 관대하여 출산촉진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동시에 아동수당을 청소년기 전 기간에 걸쳐(학교에 다니면 20대 초반까지도 지원)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어 아동의 복지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Ainsarr(2019, p.72)는 발틱 3국의 가족 지원 정책이 출산율 증가에 영향을 미쳤음을 실증적으로 증명하면서, 인구압력가설(demographic pressure hypothesis)과 다르게 더 높은 출산율의 결과를 얻게 된 국가들은 가족정책을 더 강력하게 지원하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즉, 출산 성공을 촉진하는 나라는 긍정적인 출산과 정책 형성 과정 사이의 상호적인 연관성을 만들면서, 아이를 가진 가족을 계속해서 지원하는 더 강한 정치적 동기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2009년 세계적인 경제 위기에 발틱 3국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는데, 이 시기에 아동이 있는 가정의 빈곤율이 눈에 띄게 높아졌다. 그러나 경제 위기로 긴축 재정을 집행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비록 지원 규모를 축소하긴 했으나 발틱 3국들은 기존의 가족정책(특히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기초를 변화시키지는 않았다. 따라서 자녀가 있는 가정에 지속적으로 가족정책을 통해 지원하면서 점차 빈곤율이 감소하게 되었고, 이어서 출산율이 상승되는 결과도 얻게 되었다.

## 나. 2009년 경제 위기 전 후의 발틱 3국 각각의 상황<sup>58)</sup>

세계 경제 위기 시기였던 2009년부터 2014년까지는 발틱 3국의 가족 정책에 주목할 만한 시기였다. 위기 상황에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각각의 국가들이 가족정책에 대하여 어떤 대응을 했는지를 살펴보고 이들 국가의 가족정책의 성격을 알아보려고 한다.

### 1) 에스토니아

2009년의 경제 위기, 예정된 지방 선거 등으로 인해 연립정당 간의 정치적 긴장감이 심했고, 사회민주당이 집권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이후 내각이 교체되면서 인구부 장관실이 폐지되고, 지방선거에서도 가족 관련 공약이 신중하게 제안되었고 이는 2014년까지 계속되었다. 2014년에 사회민주당이 주도하는 연립정부가 수립되면서 다시 가족 정책이 의제로 부상하게 되었고, 이 때 보편적 아동 수당을 10년 만에 증액하게 되었다. 이외에도 출산휴가 중 14일을 아버지가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부모급여, 3자녀 이상 가족에 대한 다양한 혜택 추가, 전업주부에 대한 연금보험계수 인상 등의 가족정책이 연립내각 안에서 합의되었다.

에스토니아는 보편적 가족정책의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부터 제1여당인 자유당(Liberal Party)이 아동수당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지지했고, 실행에 옮기려 했으나 연립 여당과 여론의 거센 반대로 실제로 입법화 하지는 못했다. 아울러 자유당은 가족 정책에 미온적인 태도를 유지하면서, 특히 첫째와 둘째 아이

58) 본 소절의 내용은, Ainsarr, M. (2019). Economic crisis, families, and family policy in the Baltic states, 2009-2014, *Journal of Baltic Studies*, 50(1), pp.66~70의 내용을 참고하였음.

에 대한 아동수당(월 19유로)의 비율에 차이를 두지 않았다. 2009년 이후 자유당이 다시 제1여당이 되었을 때 경제 위기로 인한 정부의 재정 상황을 이유로 다시 한 번 선별적인 아동수당 제도를 추진하려는 시도를 했고, 이는 상대적 빈곤선을 기준으로 빈곤가정의 아동을 선별하는 방법으로 추진되었다. 이는 여론이 부정적이었으므로 완전히 시행되지는 못했고, 보편적 혜택의 성격은 유지하면서 그 위에 선별방식을 추가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선별적인 아동수당 지급의 경제적인 편익이 실제로 증명되지 않았고, 주도적인 자유주의 정당의 이데올로기와 더 연관된 것으로 밝혀져 2018년에 여론의 어떤 항의도 없이 선별적인 아동수당 지급이 완전히 폐기되기에 이르렀다.

## 2) 라트비아

2009년 에스토니아처럼 라트비아의 아동가족부도 폐지되었지만, 2011년 인구 문제가 다시 한 번 정치적 의제로 부상하게 되면서, 총리 산하에 라트비아 인구위원회(the Council on Demographic Affairs)가 설립되었다. 또한 라트비아 정부는 ‘국가가족정책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웠다.

경기침체는 발틱 3국 중 라트비아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고, 이는 가족 정책에도 영향을 미쳤다. 경기 침체 시기 가족의 둘째 이상의 아이에 대한 아동 수당은 일시적으로 감소되었고, 출산 휴가, 배우자 육아휴직, 부모급여(parental benefit)의 최대한도가 낮아졌으며, 자격요건이 제한되었다. 이러한 가족지원의 축소 및 제한은 출산율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Abolina & Zvidrins, 2014, p.4).

2013년부터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한 정책들이 시행되기 시작했는데, 사립유치원 비용 일부 지원(사립유치원에 입학하지 못한 아동에 대한 지

원 차원에서), 보육에 대한 국가 지원, 무상급식, 아이 돌보미 고용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 3) 리투아니아

경기 불황 기간 동안 나타난 국가 재정 상황의 악화는 리투아니아 가족 정책의 주된 담론이었다. 실제로 이 기간 동안 리투아니아의 가족 정책은 가장 극심한 변동을 겪었다.

경기침체시기 가족정책의 재정적 변화에 대한 연구에서 소득의 감소와 실업률의 증가는 더 많은 빈곤아동을 양산하면서, 이에 영향을 받아 가족 정책에도 변화가 이어졌다. 2008년에 육아휴직 자격 기간이 2년으로 연장되고, 85%~100%까지 소득대체수준이 되었다. 그 결과 2007년에 비해 2008년 출생 당(per birth) 육아휴직 급여의 합계가 3배 이상, 2009년에는 4배 이상이 되었다. 이러한 재정 상황이 계속되자 육아휴직 정책의 축소가 다시 이루어졌다. 2010년 초 1차로 소득대체율이 75~90%로 감소했고, 같은 해 7월에 추가 인하를 단행하여 소득대체율이 40~70% 수준으로 대폭 감소하게 되었다. 그러다 2011년부터 다시 육아휴직급여가 확대되었다. 부모는 육아휴직을 1년(소득대체율은 이전 순수입의 100%) 또는 2년 동안(부모 중 한 사람이 1년차에 70%, 2년차에 40%)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원한다면 무급으로 추가 1년을 더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Gavelis & Visockas, 2013, p.148).

2009년 이전에는 가족의 소득에 상관없이 아동수당이 지급되었고, 3자녀 이상 가정의 아동급여 수급 연령을 21세까지 연장하였으며 급여액을 증가시켰다. 그러다가 2009년에 제정된 임시법을 통해 아동수당을 자산조사를 실시하여 지급하도록 했고, 그 결과 전국적인 아동수당 지급액이 2009년에 비해 3.7배, 2011년에는 2010년에 비해 37% 감소했다.

## 7. 장기요양정책

### 가. 발틱 3국의 독립 직후 장기요양제도의 성격<sup>59)</sup>

체제전환 직후 발틱 3국의 사회서비스 체계는 사회주의 시절의 제도적 영향을 받고 있었다. 당시 돌봄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공적 장기요양 제공기관의 수가 매우 적었고, 좋은 품질을 제공하는 대형 기관들의 서비스를 소득이 낮았던 개인이 구입하기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다. 발틱 3국의 법률(에스토니아 헌법 27조, 라트비아 민법 118조, 리투아니아 공화국 헌법)<sup>60)</sup>에는 배우자 또는 성인 자녀가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보살핌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이 있다. 즉, 노인 돌봄을 가능한 한 개인과 가족의 책임으로 남겨두고, 돌봄을 제공할 가족이나 친인척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공공기관이 제공하도록 한 것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이 부재했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노인요양 문제인데 이는 의료 문제가 아닌 사회의 문제이다. 요양원에 들어가기 위한 대기리스트가 길다는 것이 문제이다”(Egle Sumskiene, 2021.10.29.)

노인요양에 대한 가족 책임을 강조하면서, 사회적 돌봄에 관심이 부족했다고 할 수 있다.

체제전환 이후 가정 내에서 노인의 돌봄을 제공하던 가족 구성원의 노동시장 참여가 증가하면서 ‘돌봄의 틈(carer gap)’이 발생했고 이를 해결

59) 본 소절의 내용은 OECD (2003). Labour Market and Social Policies in the Baltic Countries, p.109-122를 토대로 저자가 수정·정리함.

60) 각 국의 헌법은 유럽 돌봄 협회(euro carer) 홈페이지에서 에스토니아(<https://eurocarers.org/country-profiles/estonia/>), 라트비아(<https://eurocarers.org/country-profiles/latvia/>), 리투아니아(<https://eurocarers.org/country-profiles/lithuania/>)의 해당 내용을 참고할 것.

하기 위해, 돌봄을 시장에서 구매하게 되면서 돌봄 서비스 시장이 생성되었다. 무료로 제공되던 돌봄 서비스가 체제전환 이후 시장에서 구입해야 하는 재화가 되면서 가족의 재정적 부담이 늘었다. 이 문제에 대해 발틱 3국은 경제가 활성화 되고 있었던 체제전환 초기의 사회적 분위기에 기대어, 노동 참여로 소득이 상승하게 되면 가족의 돌봄 서비스 비용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이라 예상하면서 시장에서 원활하게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제도 운영의 틀과 규제를 개발하는 방향으로 사회서비스 정책을 설계하기 시작하였다.

〈표 7-19〉 노인에게 제공된 장기요양 관련 서비스 구조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1990년대 초	2000년	1990년대 초	2000년	1990년대 초	2000년
사회복지 시설의 수	22	96	42	62	11	93
거주자의 수	1492	3276	4657	4709	2224	4348
주택 크기의 평균	68	34	111	76	202	47
자택서비스	0	4503	0	6818	0	4237
자택 : 기관	0	1.4:1	0	1.4:1	0	1:1

참고: “1990년대 초” = 리투아니아: 1991년, 에스토니아: 1993년, 라트비아: 1994년  
 자료: OECD (2003). Labour market and social policies in the Baltic countries, p.120.

위의 표를 보면 1990년대 초반에 비해 2000년의 발틱 3국의 요양시설이 양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요양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 인구에 비해 시설이 부족하여, 일반 병원에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이 입원하면서, 의료비 지출이 과다해졌다. 왜냐하면 사회주의 시절부터 이어져 온 노인요양 시설들이 대체로 규모가 큰 시설들이 많았고, 체제전환 이후 새로 생겨난 곳들에 비해서 시설이나 인력을 잘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노인들이 이 시설에 입소하길 바라고 한번 입소하면 기

관을 나가는 경우가 매우 적었기 때문이다.<sup>61)</sup> 유럽지역개발기금(ERDF)이 유럽 각국에 요양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면서 발틱 3국은 돌봄 서비스에 대한 변화를 시도하였다(WHO, 2018, p.79). 대표적인 것이 돌봄 서비스를 대규모 요양 시설보다 소규모의 지역사회 내 시설이나 가정 내 돌봄으로 이동시키는 것이었다. 지역사회에서 서비스를 받는 것이 비록 대규모 시설에 비해 설비나 인력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진 않았지만, 노인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바로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상대적으로 장점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2000년대 초반 사회복지사 및 간호사들의 가정방문요양서비스가 환영받게 되었다. 만약 외딴 지역에 살고 있어서 주간보호센터를 방문할 수 없거나 가정방문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가족이나 이웃이 집에서 노인을 돌볼 수 있게 했고, 이를 위한 현금지원으로 요양급여를 지급했는데, 대개는 교통이 불편한 곳에서 많이 받았다. 에스토니아에서는 지방정부 소유의 사회복지주택에서 입주한 노인들에 대해 요양서비스를 제공했다.

체제전환 이후 발틱 3국의 사회 서비스는 지방자치 단체에서 재량을 가지고 운영했다. 즉, 지방자치 단체는 의무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하지만, 그들의 제도 집행 의지, 예산의 할당 등에 따라 지역마다 서비스 제공의 수준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었다. 앞서 언급한 가정방문요양서비스에서도 이러한 차이가 발생했는데, 지방정부에 따라 사회복지사와 간호사들이 가정을 방문하게 될 때 지출하는 경비에 대한 지원 내역이 달랐다. 이처럼 체제전환 직후의 지방정부의 재정 상황이 그리 풍족하지 않아 장기요양제도의 개발 및 실행이 더디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장기요양서비스의 수급자격에 대한 판단은 지방정부 내의 특별위원회

61) 발틱 3국에서 장기요양이용자들이 병원에 입원하는 이유는 주거지에서 충분히 난방을 할 수 없기 때문인 경우가 많았고, 따라서 겨울에 많이 발생했다(OECD, 2003, p.117).

에서 결정하는데, 이때 사회복지사의 판단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판단요건에서 수급권 청구자의 개인적인 욕구도 반영이 되지만, 대개는 성인 자녀가 없거나 빈곤한 미망인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의 전문가적 판단이 중요했던 것이다.

장기요양서비스의 집행은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지방정부는 지방세 수입과 중앙 정부로부터 이전된 재정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했다. 요양시설 이용자들은 보통 시설 이용료의 일부를 부담하는데, 라트비아는 이용자 부담금을 소련 시절부터 유지해온 대로 개인연금(individual pensions)의 85% 수준으로 규정했다. 리투아니아에서는 연금의 80%로 규정했고, 지방 정부에 따라 추가적인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더 부과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자신의 거주지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는 이용자들은 이용료에 대한 자기부담금이 거의 없었다. 리투아니아의 경우, 제공되는 기본 필수 서비스 외에 추가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비용도 개인의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하는 방식을 택했으나, 실제로 이러한 서비스를 요청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왜냐하면 주거지에서 요양 서비스를 받는 노인들의 성인 자녀나 친인척이 인근에 살면서 도움을 주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에스토니아 지방정부는 돌봄서비스 외에 간호서비스를 보완하여 제공했는데, 이때 의료 인력이나 의료서비스를 구입하면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의료시설에서 제공되는 것과 동일한 경우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충당하기도 했다. 에스토니아와 리투아니아에서 장기요양서비스는 사실상 건강보험체계 내의 의료시설에서도 제공되었다. 만약 의료 시설에서 장기요양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리투아니아에서는 최대 4개월 동안의 서비스 이용에 비용이 지불되었고, 에스토니아에서는 1개월 후, 2개월 째 최저임금(minimum wage)의 80% 수준으로 비용을

지불하여 이용할 수 있었고, 리투아니아에서는 2주 동안만 비용이 지원되었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노인이 요양시설이나 자택으로 이동하기 전에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게 되는(acute hospital care) 경우, 또는 시설이 부족하여 입소대기를 하는 경우, 병원에 입원하게 된다. 이때 대부분은 입원 기간이 길어지거나 퇴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의 병상은 정체(blocking beds)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리투아니아는 일부 지방정부에서 요양서비스를 제공했지만, 실제로 중앙정부가 공적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주체로 여러 개의 대규모 요양시설을 운영하였다. 2000년에 정부 운영시설에 50%, 지방정부 운영시설에 40%, NGO가 운영하는 시설에 10% 거주하고 있었다. 리투아니아 정부는 계속해서 지방정부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점진적으로 권리를 이전해나가면서 NGO가 서비스 제공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했다. 라트비아의 경우 규모가 있는 요양 시설은 대부분 지방정부로 권한이 이양되었고, 수도인 리가에서는 시설의 40%가 NGO에서 운영되고 있었다. 에스토니아에서도 큰 규모의 시설은 지방정부가 주로 담당하고 작은 규모의 시설은 NGO가 운영했는데,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공적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였고, 실제로 민간 공급자의 참여는 매우 적었다. 왜냐하면 민간 조직이 노인요양서비스 제공자로서 계약을 하면서, 계약 성사에 대한 '불확실성'에 부담을 느끼거나, 요양 시설을 건축하는 등의 물리적인 투자에 적극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중앙 및 지방 정부에서는 NGO 뿐만 아니라 영리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2000년 이후, 발틱 3국은 장기요양 서비스 품질 표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국가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였다. 에스토니아 사회보장부에서 국가 가이드라인으로서 2000년에 발간한 '사회서비스 개발 보고서(Social Service Development Paper)'에 따르면, 정형화된 수급자격을

명시하고, 지역 간의 서비스 내용 및 제공 격차 완화에 대하여 권고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는 요양서비스에 대한 지방정부의 재량과 권한이 커지고 있었지만, 리투아니아는 대규모 요양시설을 운영 및 지원하면서 중앙정부의 역할이 크게 작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리투아니아에서 노인요양서비스 표준화 작업 및 서비스 제공 규정 등은 사회보장 노동부에서 직접 다루었다.

### 제3절 발틱 3국 사례의 함의

이 장에서는 체제전환 이후 발틱 3국에서 부각된 사회문제와 사회정책적 대응이 어떠한지를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에 따르면, 발틱 3국에서는 빈곤, 실업, 노동시장, 연금, 건강, 아동가족, 장기요양의 전 분야에 걸쳐 사회문제를 겪었고, 그에 대한 사회정책적 대응 노력을 해왔다고 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첫째, 체제전환 이후 발틱3국의 사회문제와 사회정책적 대응을 요약하고, 둘째, 체제전환 이후 발틱3국의 사회문제의 원인과 사회정책에서의 주요 행위자를 파악하고, 셋째, 체제전환 이후 발틱 3국의 사회문제와 사회정책적 대응과정에서 찾을 수 있는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체제전환 이후 발틱 3국의 사회문제와 사회정책적 대응에 대한 주요 연구결과를 해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체제전환 이전과 체제전환 이후(초기 10년)의 변화 비교를 통해 해석의 깊이를 더하고자 한다. 첫째, 빈곤의 경우, 체제전환 이전에 겪었던 사회문제는 프로파간다 뒤에 숨겨진 빈곤의 보편화이다. 이에 대한 사회정책적 대응은 실질적으로 부재하였다. 체제전환 이후에는 빈곤의 외부화(공식적 인정)에 따른 빈곤층의

급격한 증가, 소수의 노멘클라투라의 경제적 이권개입으로 불평등 심화, 빈곤선의 부재 등이 사회문제로 떠올랐는데 이에 대한 사회정책적 대응으로 1990년 체제전환 직후 빈곤 정책이 도입된다.

둘째, 실업의 경우, 체제전환 이전에 겪었던 사회문제는 완전고용 하의 은폐된 실업이며 빈곤과 마찬가지로 이에 대한 대응은 실질적으로 부재하였다. 체제전환 이후에 실업의 외부화(공식적 인정)에 따른 실업자의 폭발적 증가, 비경제활동 인구의 증가, 장기실업자의 증가와 일을 원하지 않는 인구 출현 등이 사회문제로 떠오르자 각 국은 실업부조(1991년)와 실업보험(1996년~2002년)을 도입하게 된다.

셋째, 노동시장의 경우, 체제전환 이전에는 강한 직업배치와 약한 직업 훈련이 특징이었으며, 주요 사회정책은 직업배치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체제전환 이후에 등장한 사회문제는 시장에서의 경쟁력 있는 노동력의 부족, 노동시장정책의 실질적 부재, 낮은 ALMP 지출 등이 문제가 되어 1990년대 후반부터 ALMP를 도입하게 된다.

넷째, 연금의 경우, 체제전환 이전에는 급여수준에서의 낮은 평균주의를 특징으로 한 단일한 국가연금제도를 갖고 있었다. 체제전환 이후 노인 빈곤의 심화가 나타나자 연금확대개혁(1993년~1996년)과 다층체제로의 개혁(2001년~2004년)을 통해 이를 완화하려고 하였다.

다섯째, 건강의 경우, 체제전환 이전에 이미 의료 전달체계 붕괴와 의료인프라 부족의 문제를 겪었고, 세마스코 보건의료모델은 이에 대안이 되지 못했다. 체제전환 이후에 의료 인프라 및 의료진의 해외이주, 높은 알코올 소비, 흡연을 증가 등이 나타나면서 NHS에서 NHI로 전환(1990년 체제전환 직후)과 주류 소비량 억제 정책이 전개된다.

다섯째, 아동가족의 경우, 비대한 서비스와 부재한 현금이전을 특징으로 하며 보편적 보육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다 체제전환 이후에 등장한 급

격한 출생을 하락, 가족구성의 어려움, 민간보육 및 교육시장 확대로 인한 격차 발생으로 아동수당과 민간 보육시설에 대한 정부지원 정책이 나타났다.

여섯째, 장기요양의 경우, 체제전환 이전에 겪었던 사회문제는 시설부족과 돌봄 책임의 가족전가이며 부분적으로만 요양시설서비스가 제공되었다. 체제전환이후 가족이 돌봄 서비스 비용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이라 예상하면서 시장에서 원활하게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제도 운영의 틀과 규제를 개발하는 방향으로 사회서비스 정책을 설계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지방정부 중심의 노인요양서비스 체계를 갖추어나가게 된다.

사회문제의 심각성은 한정된 자원의 투입 판단 시, 중요한 결정근거가 될 수 있다. 먼저 체제전환 이전 발틱3국의 사회문제의 심각성 정도를 볼 때, 빈곤문제가 가장 심각했다고 할 수 있으며, 실업, 노동시장, 건강, 아동가족, 장기요양 분야가 중간 정도의 심각성이라면, 연금 분야는 상대적으로 덜 심각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음으로 체제전환 이후 발틱 3국에서 사회문제의 심각성 정도를 볼 때, 빈곤과 함께 실업과 노동시장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었으며, 건강, 아동가족, 장기요양 분야가 중간 정도의 심각성이라면, 연금 분야는 체제전환 이후에도 관대한 개혁을 통해 상대적으로 덜 심각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발틱 3국의 체제 전환 과정의 사회문제와 사회정책적 대응의 변화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7-20>과 같다.

〈표 7-20〉 체제전환 이후 발틱3국의 사회문제와 사회정책적 대응

구분	체제전환 이전			체제전환 이후 (초기 10년)		
	사회문제	심각성	사회정책	사회문제	심각성	사회정책
빈곤	프로파간다 뒤에 숨겨진 빈곤의 보편화	●	실질적으로 부재	· 빈곤의 외부화 (공식적 인정)에 따른 빈곤층의 급격한 증가 · 소수의 노멘클라투라의 경제적 이권개입으로 불평등 심화 · 빈곤선의 부재	●	· 빈곤 정책 도입 (1990년 체제전환 직후)
실업	완전고용 하의 은폐된 실업	◎	실질적으로 부재	· 실업의 외부화 (공식적 인정)에 따른 실업자의 폭발적 증가 · 비경제활동 인구의 증가 · 장기실업자의 증가와 일을 원하지 않는 인구 출현	●	· 실업부조(1991년) + 실업보험(1996년~2002년)
노동시장	강한 직업배치 약한 직업훈련	◎	직업배치	· 시장에서의 경쟁력있는 노동력의 부족 · 노동시장정책의 실질적 부재 · 낮은 ALMP 지출	●	· ALMP(1990년대 후반부터 도입)
연금	급여수준에서의 낮은 평균주의	○	단일한 국가연금	· 노인빈곤 심화	○	· 연금확대개혁(1993년~1996년) · 다층체계의 개혁은 2000년대 초반(2001년~2004년)
건강	전달체계 붕괴와 의료인프라 부족	◎	세마스코	· 의료 인프라 및 의료진의 해외이주 · 높은 알코올 소비, 흡연율 증가	◎	· NHS에서 NHI로 전환(1990년 체제전환 직후) · 주류 소비량 억제 정책
아동	비대한 서비스	◎	보편적	· 급격한 출생율	◎	· 아동수당

구분	체제전환 이전			체제전환 이후 (초기 10년)		
	사회문제	심각성	사회정책	사회문제	심각성	사회정책
가족	스 부재한 현금		보육서비스	하락 · 가족구성의 어려움 · 민간보육 및 교육시장 확대로 격차 발생		· 민간 보육시설 정부지원
장기 요양	시설 부족과 돌봄책임의 가족전가	◎	요양시설 서비스	· 요양시설 인프라 부족과 낙후 · 본인부담금으로 인한 구매력 부족 현상	◎	· 민간 장기요양 시설 정부지원

주: 사회문제의 심각성 정도 ● 강, ◎ 중, ○ 약  
자료: 저자 작성

그렇다면 체제전환 이후 발틱3국의 사회문제의 원인은 무엇이었으며, 그 해결과정에서 도입된 사회정책적 대응에 대한 주요 행위자는 누구였을까? 이를 파악하기 위해 각국의 체제 전환과정을 목격한 전문가들과의 화상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사례가 적어 이들의 구술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한계가 있지만 접근이 어려운 국가의 경험자 진술로서의 의의는 분명하여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사회문제의 원인은 다양할 수 있지만, 7가지의 사회정책에서 제기되는 공통된 원인으로는 재원, 인프라, 아이디어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이때 아이디어란 정책결정능력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한다.

사회문제의 원인으로 재원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고려할 수 있는 분야는 빈곤, 실업, 연금, 아동가족이며, 인프라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고려할 수 있는 분야는 건강과 장기요양이라고 할 수 있고, 아이디어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고려할 수 있는 분야는 노동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정책 도입에서의 주요 행위자는 국내 행위자보다는 외부 행위자라고 평가할 수 있다. 국제기구가 표준을 마련하고, 정부가 화답하는 구조

였던 것이다. 국제기구들이 마련한 표준에 부합한 정책 기획과 집행 의지를 정부에서 표출할 때서야 비로소 사회정책은 활용되었던 것이다. 그 과정에서 국내 행위자들은 주요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노멘클라투라는 주민들의 삶의 조건 개선을 위한 사회정책 분야가 아닌, 본인들의 이권을 챙기고자 경제 분야에서의 주요 행위자였을 뿐이었다. 일부 시민단체가 아동가족 분야에서, 노동조합이 노동시장 분야에서 정책 도입을 위한 캠페인 내지 목소리는 있었으나, 그 외 사회정책 도입과정에서 주요한 행위자는 아니었다.



# 제8장

## 결론

제1절 연구의 주요 결과

제2절 북한 주민의 영양 개선을 위한 남북 교류·  
협력에서의 정책적 시사점

제3절 체제 전환국 사례의 시사점



## 제 8 장    결론

### 제1절 연구의 주요 결과

#### 1. 북한 경제와 가계소비의 최근 경향

김정은 시대 북한은 종합시장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시장경제 원리를 내부체제로 용인 흡수하면서, 가계의 자생력 증가와 국영기업소의 생산력 확대를 도모해 왔다. 북한은 2014년부터 ‘사회주의 기업책임 관리제’를 도입하며 국영 기업소에게 일정한 자율권을 부여했고, 협동농장도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생산의 자율성과 인센티브를 보장받고 있다. 국영 부문의 생산이 증가하면서 일반 주민들의 자본이나 노동이 국영 부문으로 수용되는 기회도 늘어났다. 새로운 내수시장이 등장하고, 소비시장이 발달함으로써 북한 주민들과 경제주체들의 생산 활동에도 커다란 변화가 발생했다. 북한 내부 생산력 증대에 따라 대중무역이 크게 증가했고, 이는 다시 새로운 자금과 원부자재로 투입되어 북한 내부 생산력이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개선됐다.

전반적인 생산증가로 인해 북한 주민들의 가계소득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가계 소득은 소속 직장에서 주어지는 임금과 현물공급 등 공식소득과 가계별 개인 활동을 통해 얻어지는 비공식 소득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국영 부문의 생산증가 및 인센티브 확대로 가계 공식소득이 증가했으며, 시장화 발달 과정에서 가계 비공식 소득도 크게 증가했다. 종합시장 등장 이후 소비재 시장 뿐 아니라 서비스, 노동, 금융, 부동산

부문 등이 발달하면서 가계의 소득창출 기회가 늘어났다.

그러나 유엔의 대북제재가 강화된 것에 COVID-19로 인한 대중무역 차단 조치가 이어지면서 북한 경제는 소폭 침체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다만 북한은 COVID-19 확산을 겪지 않고 있으며, 북한 내부에서 이동과 경제활동 등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북한은 대중무역이라는 변수를 제외하면 내수시장에서의 변화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 가계의 소비는 김정일 시대와 비교할 때 큰 폭의 성장과 변화를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북한 가계는 절대 빈곤 상황에서 벗어나 나름의 경제활동을 기반으로 소득과 자산을 늘려가고 있으며, 이는 소비 패턴을 통해 확인됐다. 다만 이 변화는 고르게 나타나기 보다는 사회적으로 불균등하게 실현되고 있어 북한 내 계층간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2. 북한 주민의 의식주 생활

김정은 시대에 북한의 가계는 과거에 비해 다양한 항목에서,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이는 북한 가계의 소득 증가, 특히 비공식 소득 증가에서 기인하는 결과이다. 북한 주민들은 일상적으로 시장을 통해 식량을 소비하고 있는데, 시장 가격은 일정한 추세를 보인다. 전년도 수확량, 국가배급의 유무, 지역 간 물류 이동 등 변수가 시장 가격에 반영되고 있지만, 시장 가격 자체는 일정한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기본 식량 외에도 부식, 식음료 등에서 북한 주민의 소비수준이 김정일 시대와 비교할 때 큰 폭으로 개선됐다. 육류 및 육가공 소비와 수산물 소비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의류 등 생활필수품에서도 수요가 증가하고 소비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전통적인 국가공급 대상들이 모두 시장에서 거래되면서 주민들의 선택해야 할 폭이 넓어졌다. 중국산 수입품이 크게 증가했으며, 북한 내부 생산품도 늘어나게 되면서 다양한 품질과 가격으로 유통되고 있다.

주거와 관련된 부분에서 변화도 두드러진다. 주택을 건설하고 보수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으면서 가계별로 주거 상황을 개선하고 있으며, 가구나 가전제품 수요도 과거에 비해 높아졌다.

가계 소비 중에 교통과 관련한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개인 경제활동이 증가했음을 시사한다. 과거 국영철도 중심의 대중교통이 ‘씨비차’로 불리는 버스, 승합차, 승용차, 화물차, 오토바이 등의 민간제공 대중교통으로 크게 확대되었다. 사람과 물류의 이동이 증가함과 동시에 통신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여 많은 사람이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다, 디지털 미디어 기기의 사용도 북한 사회의 변화를 나타낸다.

### 3. 북한 주민의 식량소비와 식생활

본 연구에서는 북한 주민의 생활 수준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노력으로, 농업 생산의 한계에 따른 식량 부족 문제와 최근 식생활 수준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2000년대 평균 423만 톤에 머무르던 북한의 식량 생산량은 2010년대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466만 톤 규모로 상승하였다.<sup>62)</sup>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포전담당책임제와 농장책임관리제로 대표되는 농업개혁을 통하여 농산물 증산을 유도하는 한편, 중국과의 무역과 투자협력 활성화를 통하여 농업투입재가 공급되면서 거둔 성과이다.

62) 최용호(2021), 북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과 농업부문 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러한 추세와 함께 북한 주민의 전반적인 식생활 수준도 점진적으로 향상되어 왔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의 결과를 살펴보면 식품에 대한 접근성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모두 개선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sup>63)</sup> 또한 중국으로부터 수입품목 중 농식품 품목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다도 쌀, 옥수수 등 전통적인 식량품목에서 밀가루, 설탕, 콩기름 등으로 비중이 옮겨가고 있어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가 남아 있고 그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먼저, 앞서 식량수급 동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 주민의 식량난은 현재진행형이며, 식량 생산에 있어서 연도별 편차가 상당하다. 특히 최근 들어 이 식량 생산량의 변동성은 더욱 커진 양상이다. 여기에는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데에서 오는 영향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더불어 2020년 초에 발생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북한 국경이 봉쇄되면서 농업생산에 필수적인 기자재는 물론 지원 물품까지 북한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이로 인한 여파가 크고 심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북한 당국 차원에서는 식량 생산에 사활을 걸고 증산을 독려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영농물자에 대한 국가적 지원 강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농촌동원, 퇴비과제 등으로 주민들의 부담만 가중될 뿐이다.

다음으로, 식생활 측면에서 몇 가지 우려가 제기된다. 앞서 살펴본 식생활 실태 분석에 따르면, 지역적, 계절적, 직업적, 계층적 차이로 인해 식량 접근성이 크게 다를 수 있었다. 서남부 곡창지대 주민과 발농사 위주의 동북부 지역은 배급되는 식량의 양과 구성이 다르다. 또한 6, 7월부터 식량작물을 수확하여 분배가 이루어지는 시점까지 식량사정은 상

63) 다만 조사대상의 북한이탈주민은 출신 지역이나 계층적인 측면을 감안했을 때 대표성이 크다고 볼 수는 없음.

대적으로 급격히 어려워지는데, 이러한 현상은 매년 반복되고 있다. 한편, PDS에 의존하는 가구는 협동농장 또는 국영농장 종사가구에 비해 배급량 자체가 적을 뿐만 아니라 식량 확보 방법이 제한적이어서 더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국제사회의 식량지원에 의존해 왔던 장애인, 임산부, 노인, 어린이 등 취약계층은 대북 지원활동이 지연 또는 중단되면서 큰 어려움에 봉착했을 가능성이 크다.

식량 접근성 이외에 균형적인 영양 섭취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최근 식량 생산이 부진함에 따라 많은 주민은 끼니 수를 줄이거나 쌀 대신 옥수수나 감자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식량 부족의 어려움에 대처하고 있다. 채소, 과일, 고기 등 부식의 접근성이 기본적으로 좋지 않은데다 기초 식량 자체의 접근성까지 떨어지면서 필요한 열량과 필수 영양소 확보가 더 힘들어진 것이다. 우리를 포함한 국제사회가 북한 식생활에 관심을 가질 때 단순히 식량의 양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질적인 측면도 고려가 필요하다.

이러한 북한의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어도 단기적으로 북한 외부로부터의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의 팬데믹 상황을 감안할 때 북한의 국경봉쇄가 풀리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진정 되는대로 코로나 방역협력과 함께 당장 시급한 식량과 농기자재를 지원하여 인도적 위기를 해소하고 농업생산이 감소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 4. 북한 주민의 영양 상태

먼저 북한 주민 전반의 영양 상태 지표 현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북한의 에너지섭취부족 인구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8-2020년 42.4%, 식품불안정 인구비율은 2019년 40%로 보고되었다. 이는 북한

인구 중 약 40%가 필요한 만큼의 에너지를 섭취하지 못하거나 식품불안정 상태에 놓여있음을 의미한다. 식품섭취불량 가구비율의 경우, 2019년 11%, 2020년 38%, 2021년 70%로 가파르게 증가하여 최근 3년동안 북한의 가구 식이다양성이 매우 악화되었음을 보여준다. 북한의 세계기아지수는 꾸준히 개선되고 있기는 하나 2020년 27.5점으로 여전히 심각 단계에 속한다.

북한 영유아의 영양 상태 관련 지표의 현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영유아 만성영양실조율, 급성영양실조율, 저체중률은 꾸준히 개선되어 2017년에 각각 19.1%, 2.5%, 9.3%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수치는 세계 및 저소득 국가 평균과 비교 시 양호한 수준으로 판단되며 과체중률 또한 2017년 2.5%의 매우 양호한 수준이다. 영유아 빈혈 유병률은 2018년 31.4%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수치는 세계 및 저소득국가 평균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기는 하나, 북한 영유아 세 명 중 한 명에 가까운 어린이가 빈혈 상태인 것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북한의 완전모유수유율은 2017년 71.4%로, 양호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영유아의 식이적절성을 평가하는 지표인 영유아 최소 식이빈도, 최소 식이다양성, 최소 적정섭취 비율은 2017년에 각각 75%, 46.7%, 28.6%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수치는 저소득국가 및 세계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기는 하나, 북한 영유아의 70% 이상이 최소한의 적정섭취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임을 고려하면 개선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영아 및 5세 미만 사망률은 꾸준히 개선되어 2019년에 각각 13.1%, 17.3%로 보고되었다.

북한 가임기 여성의 영양 상태 관련 지표 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임기 여성 단백질에너지 영양실조율은 2012년 23.2%로, 북한 가임기 여성 다섯명 중 한명 이상이 영양실조 상태로 나타났다. 빈혈 유병률 또한 2010년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 33.9%로 세계 평균보다 높은 수

준이다. 저체중아 출산율의 경우, 2017년 3.1%로 남한보다도 낮은 매우 양호한 수준이다. 모성사망비는 2017년 10만 명당 89명으로 저소득 국가 및 세계 평균과 비교 시 낮은 수준이다. 가임기 여성 최소 식이다양성 비율은 2017년 49.6%로, 북한 가임기 여성의 절반 이상이 최소한의 다양성이 보장된 식사를 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2021년 7월에 북한이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이행 상황을 보고한 'Voluntary National Review' 보고서에는 영양 상태 관련 지표의 현황이 제시되어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북한의 영유아 만성 영양실조율은 17.4%, 영양불량률은 4.5%로 나타났다. 2019년 영아 및 영유아 사망률은 각각 1,000명 생존출생 당 7.7명, 16.8명으로 보고되었으며, 모성 사망비는 100,000명 생존출생 당 49명으로 보고되었다. 전반적으로 북한이 보고한 VNR보고서의 영양 상태 관련 지표 현황은 동일 시점의 국제기구 자료에 비해 다소 긍정적인 경향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영양 상태가 과거에 비해 개선되고 있음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전반적인 자료들을 종합해 볼 때, 여러 지표의 수치가 과거에 비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였다는 점에서 북한 주민의 영양 상태는 개선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취약계층의 영양불량률이 눈에 띄게 개선되어 저소득 국가 및 세계 평균과 비교하였을 때에도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남한과의 격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특히 북한 주민 전반의 영양 상태 관련 지표를 살펴보면, 국제사회의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북한 주민의 영양 상태는 전반적으로 과거에 비해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우려할만한 수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 제2절 북한 주민의 영양 개선을 위한 남북 교류·협력에서의 정책적 시사점

남북 간의 교류협력은 남북 관계의 정치적 부침에 따라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에 이에 대한 전망과 계획을 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를 뒤집어서 생각하면, 정치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부지불식 간에 남북 간의 교류협력이 신속히 재개될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시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북한 주민의 식생활 및 영양 상태 개선을 위한 남북 교류·협력의 과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북한 주민의 식생활과 영양 상태를 개선하여 남북 간의 영양 및 건강 격차를 줄이는 노력은 매우 중요하고도 긴급한 과제이다. 그러나 1995년부터 시작되어 약 10여 년간 활발히 진행되었던 남북교류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부터 급격히 축소되기 시작하여 현재는 거의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다. 2014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독일 드레스덴 선언과 2018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교류가 재개되는 듯 하였으나 이 또한 지속적인 교류협력의 성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이러한 장기적 노력과 함께 보다 단기적으로는 국제기구나 남한 정부의 성공적인 영양개선 프로그램을 북한에 적용하기 위한 교류협력도 고려해 볼 것을 제안한다. 유니세프의 지역사회기반 대응법(Community-based management of acute malnutrition, CMAM)이 중단되지 않도록 기금을 지원하고, 남한의 임산부와 영유아 대상 영양개선 프로그램인 영양플러스 사업이 북한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민간단체를 통한 교류협력을 추진해 보는 것을 제안한다(남소영 외, 2021)

또한 이러한 남북교류가 가능해지는 날이 오면, 북한의 영양분야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개발할 것을 제안한다. 북한에는 의사, 간호사 등의 보건의료 인력은 양성되고 있지만, 영양사 제도는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윤지현, 2018). 당장 영양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운영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북한의 대학에 식품영양학과를 만들고 남한의 대학과 교류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 볼 것을 제안한다.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제도가 확립되기 전이라면 의료 인력 양성 교육과정의 일부로 영양학을 교육할 수 있도록 의료계의 교류협력 방안에 합류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

남북교류가 상대적으로 활발하던 시절의 남북교류의 주체는 주로 대북지원 민간단체들이었다. 지금도 여러 대북지원 민간단체들은 이러한 주체로서의 역할을 언제든지 수행하기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북한과의 관계 지속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 및 지자체는 이러한 민간단체들이 고사하거나 대북 관련 사업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단기적 성과 목표 창출이 아닌 장기적 투자 관점에서 대북지원민간단체를 지원할 것을 제안한다.

예전의 북한의 식생활 및 영양 개선과 관련한 교류협력을 들여다보면 몇 가지 문제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할 수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지역적 편중이었다. 북한은 지역간 식생활 및 영양 격차가 매우 큰 국가 중의 하나인데(고혜진, 2020), 그동안의 교류 또한 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편중되어 진행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향후 남북관계가 개선되어 새로운 교류협력의 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이러한 지역적 편중을 지양하고 되도록 영양 실태가 취약한 지역(양강도, 함경북도 등)의 식생활 및 영양 상태를 개선하여 지역간 영양 격차 해소를 위한 교류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향후 식생활 및 영양 분야의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는 이러한 자료들을 다학제적으로 생산하고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북한에는 식품영양학이라는 학문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영양사 제도 또한 없는 상태이기에 향후 남북교류협력이 가능해졌을 때 남한의 식품영양학자들이 북한의 교류협력 파트너를 선택하기가 용이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다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남한의 학자 풀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보건의료적 접근은 의료계와 함께, 식량 생산적 접근은 농축산계와 함께 정기적인 포럼이나 워크숍 등을 개최하면서 남북교류협력의 장이 열릴 날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 제3절 체제 전환국 사례의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발틱 3국을 사례로 하여 체제 전환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사회문제와 사회정책적 대응을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에 따르면, 발틱 3국에서는 빈곤, 실업, 노동시장, 연금, 건강, 아동가족, 장기요양의 전 분야에 걸쳐 사회문제를 겪었고, 그에 대한 사회정책적 대응 노력을 해왔다고 할 수 있다. 사회문제의 심각성은 한정된 자원의 투입 판단 시, 중요한 결정근거가 될 수 있다. 먼저 체제전환 이전 발틱3국의 사회문제의 심각성 정도를 볼 때, 빈곤문제가 가장 심각했다고 할 수 있으며, 실업, 노동시장, 건강, 아동가족, 장기요양 분야가 중간 정도의 심각성이라면, 연금 분야는 상대적으로 덜 심각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음으로 체제전환 이후 발틱3국의 사회문제의 심각성 정도를 볼 때, 빈곤과 함께 실업과 노동시장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었으며, 건강, 아동가족, 장기요양 분야가 중간 정도의 심각성이라면, 연금 분야는 체제전환 이후에도 관대한 개혁을 통해 상대적으로 덜 심각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발틱3국의 경험은 북한의 체제 전환과정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날 수 있다. 체제전환 이후 발틱3국의 사회문제와 사회정책적 대응과정에서 찾을 수 있는 시사점을 바탕으로 보건복지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추진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빈곤과 관련해서 현재 북한의 시장화는 향후 북한 내 계층화, 사회격차 확대로 이어져 빈곤의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기구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생활·빈곤 조사, 북한 최저생계 기준선 설정, 무의무탁노인, 아동, 장애인 등에 대한 현물 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다. 북한이 개혁·개방을 본격화하지 않는 한 빈곤 문제를 공식적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SDGs 이행차원에서 기아의 문제, 영유아 영양의 문제 등으로 우회하려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필요하다. 이 분야에서의 주요 행위자는 국제식량농업기구(FAO), UNICEF 등의 국제기구, 보건복지부, 시민·사회단체가 될 수 있다.

둘째, 실업 및 노동시장과 관련하여 북한 내 노동인력의 질적 향상을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이 가능하다. 빈곤과 마찬가지로 실업은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에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따라서 우선 국제기구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노동시장 현황 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 남한의 직업 교육훈련 학교의 평양 설립,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고용훈련 및 직업창출을 고려할 수 있다. 북한 정부는 4차 산업혁명 등 지식산업기술의 확산을 이른바 ‘단숨에 도약’할 수 있는 환경으로 생각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대북제재 문제를 우회할 수 있다면 제3국을 통한 기술협력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건강 분야에서는 다양한 인도주의 차원의 교류·협력이 가능하며 아직까지 한계는 있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이 꾸준히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들이 있다. 가장 최근에는 여의도순복음교회가 중단된 평양심장병원 건

립과 관련하여 UN의 대북제재 면제를 승인받은 것으로 알려지기도 하였다. 구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과제로는 국제기구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보건의료·모자보건 실태 조사, 남북 보건의료기술 및 인력 교류협력을 위한 기구 설립, 지역별 병원 설립 및 현대화 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 건강과 연결된 장기요양 영역에서도 북한의 고령화 추세를 감안하면 남한의 요양식사와 기술을 이전하는 것을 매개로 한 교류·협력이 가능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필요성이 적지만 체제 전환에 나설 경우 중요하게 부각될 문제는 연금, 의료보장 시스템의 문제이다. 발틱 3국의 경우에도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현금급여의 필요성이 낮아서 비현실적이었던 연금을, 체제 개혁이후 현실화하기 위해 사회보험 방식의 연금을 도입·확대해야 했다. 의료에 있어서도 NHS에서 NHI로의 전환은 대부분의 체제 전환 국가들에서 나타난다. 베트남의 경우에도 사회보험 방식의 건강보험을 도입하여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와 건강보험 관리 시스템에 대한 교류·협력을 진행했다. 서구 방식의 사회보험은 보다 엄격한 보험수리적인 원칙과 대규모 기금의 운영 기술, 급여 지급을 위한 관리시스템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북한의 체제 전환이 가시화될 경우 이 영역에서 남한의 경험과 기술이 북한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분야를 남북한 교류협력에서의 주요 의제로서 선정할 것이냐는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체제전환국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그리고 현재의 북한 실태를 고려할 때, 빈곤, 실업, 노동시장, 건강 분야의 추진과제들이 핵심 이슈가 될 수 있다. 아동가족 및 장기요양 분야도 상대적으로 중요한 의제이며, 연금 분야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 영역들은 북한의 체제 변화가 구체화되고 가속화될 때 중요한

문제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8-1〉 체제전환 이후 발틱3국의 사회문제와 사회정책적 대응과정에서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시사점

구분	남북교류 협력에의 시사점		
	추진 과제	주요 행위자	주요 의제
빈곤	· 국제기구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빈곤 조사 · 북한 최저생계 기준선 설정 · 무의무탁노인, 아동, 장애인 등에 대한 현물지원	국제기구, 보건복지부, 시민단체	●
실업	· 국제기구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은폐된 실업 조사 · 비공식노동의 규모 파악 · 실업부조제도 도입	국제기구, 고용노동부, 노동조합	●
노동시장	· 국제기구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노동시장 조사 · 남한의 직업 교육훈련 학교의 평양 설립 · 4차 산업혁명 대응 직업창출	국제기구, 고용노동부, 중소기업부, 노동조합	●
연금	· 국제기구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연금 실태 조사 · 무의무탁 노인 조사 · 노인 사회참여 활동 지원	국제기구, 보건복지부, 시민단체	○
건강	· 국제기구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보건의료·모자보건 실태 조사 · 남북 보건의료기술 및 인력 교류협력을 위한 대학 설립 · 지역별 병원 설립	국제기구, 보건복지부, 시민단체	●
아동가족	· 국제기구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아동가족 여성 실태 조사 · 출생율 등 인구총조사 · 보육원 설립	국제기구, 여성가족부, 시민단체	◎
장기요양	· 국제기구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장기요양 노인 및 장애인 실태 조사 · 장기요양 인프라 조사 · 요양시설 설립	국제기구, 보건복지부, 시민단체	◎

주: 남북한 교류협력에서의 주요 의제 ● 강, ◎ 중, ○ 약  
자료: 저자 작성





〈국문자료〉

- 강유덕. (2020. 9. 7). [ISSUE&INSIGHT] 한국판 뉴딜의 경제사적 의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https://www.nrc.re.kr/board.es?mid=a10301000000&bid=0008&act=view&list\\_no=171586&otp\\_id=](https://www.nrc.re.kr/board.es?mid=a10301000000&bid=0008&act=view&list_no=171586&otp_id=)에서 2021.10.25. 인출.
- 개발협력. [Website]. (n.d.). [https://www.mofa.go.kr/www/wpge/m\\_3816/contents.do](https://www.mofa.go.kr/www/wpge/m_3816/contents.do)에서 2021.10.25. 인출.
- 고혜진. (2020). 북한의 지역 간 기아 수준 격차와 남북한 교류·협력의 시사점. **보건복지포럼**. 2020년 7월호.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국립통일교육원. (2021). **2021 북한 이해**. 서울: 국립통일교육원.
- 권태진. (2021a). 식량 작물 환산 비율에 대한 개인 간 커뮤니케이션 (2021. 11. 11 온라인)
- 권태진. (2021b). 북한의 농업 및 식량 상황: 2020년 동향과 2021년 전망. **KDI 북한경제리뷰**, 23(5), 37-44.
- 김서연. (2021.4.7.). 북한, 제6차 세포비서대회 개막...김정은 개회사.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266180>에서 2021.09.17. 인출.
- 김서연. (2021.4.29.). [데일리 북한] 청년동맹 대회 개막...“주체적 청년운동 추동 계기”.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290474>에서 2021.09.17. 인출.
- 김석진. (2021). 북한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은 왜 실패했을까?. 통일연구원 온라인시리즈 21-06, 02. <https://www.kinu.or.kr/www/jsp/prg/api/dlV.jsp?menuIdx=351&category=53&thisPage=1&searchField&searchText&biblioId=1549093>에서 2021.08.06. 인출
- 김소영. (2019). 북한 농업부문의 시장화:협동농장과 ‘장마당’을 중심으로. **KDI 북한경제리뷰**, 2019년 10월호, 69.
- 김영훈. (2013). 최근 북한 주민의 식량소비 및 영양 상황. **KREI 북한농업동향**,

15(1). 나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용훈. (2021. 1. 3). 팬데믹 터널 뚫고…“2분기 경제 급반등” [2021 한국경제 대진단].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101031816440991>에서 2021.09.01. 인출.

김정근. (2021.1.13.). 김정은 “5개년 경제계획 반드시 수행”…8차 당 대회 폐막 (종합).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179048>에서 2021. 09.17. 인출.

김찬우(2005) 미국 장기요양제도의 변천과 케어 메니지먼트의 등장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26(0).

김학재, 김병로, 정은미, 이종민, 박상민, 이해원.... 최연정. (2021). **북한사회변동 2020**.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김호철. (2020. 9. 17). 자유국가 지수 평가(1), “OECD 국가 중 최하위권 국가로 평가...” 충격!!!. **교육앤시민**. <http://www.edunctn.com/news/article.html?no=16644>에서 2021.09.17. 인출.

나혜운. (2021.1.9.). 김정은, 새 ‘경제발전 5개년 계획’ 발표…‘정면 돌파전 2.0’ 시행한다.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175673>에서 2021.09.17. 인출.

남북하나재단. (2015). **2014 탈북청소년 실태조사**. 서울: 남북하나재단.

남북하나재단. (2019). **2018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서울: 남북하나재단.

남소영, 윤지현, 이수경. (2021). 남북한 영유아의 영양 실태 비교.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54(3), 239-246.

농촌진흥청 보도자료(2020. 12. 18.). 북한, 올해 식량작물 440만 톤 생산…전년대비 24만 톤 감소.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27919>에서 2021.03.15. 인출.

뉴스1. (2021). <https://www.news1.kr/> 에서 2021.10.16. 인출.

대한민국 ODA. (n.d.). **DAC 회원국 지원현황**. [https://www.odakorea.go.kr/ODAPage\\_2018/category01/L04\\_S01\\_01.jsp](https://www.odakorea.go.kr/ODAPage_2018/category01/L04_S01_01.jsp)에서 2021. 10. 25. 인출.

- 문동희. (2020.7.26.). 북한 “코로나 의심 탈북자 南서 개성으로…특급 경보 발령”. **데일리NK**. <https://www.dailynk.com/%EB%B6%81%ED%95%9C-%EC%BD%94%EB%A1%9C%EB%82%98-%EC%9D%98%EC%8B%AC-%ED%83%88%EB%B6%81%EC%9E%90-%E5%8D%97%EC%84%9C-%EA%B7%80%ED%99%98%ED%8A%B9%EA%B8%89-%EA%B2%BD%EB%B3%B4-%EB%B0%9C%EB%A0%B9/> 에서 2021.09.17. 인출.
- 문동희. (2021.03.16.). 北 10대 군인 굶주림에 무장한채 탈북… “軍 식량문제 심각한 듯”. **데일리NK**, <https://www.dailynk.com/> 로부터 인출.
- 민기채. (2014) 리투아니아 사회복지정책의 특징에 관한 연구, **동유럽발칸연구**, 38(4), 163-199.
- 박석삼. (2004). 북한경제의 구조와 변화.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금융경제총서 제9호**, 15-68. 서울: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 박수윤. (2020.2.23.) 북한, 코로나19 확산에 “남조선 발병 주시…수입품 소독해야”(종합).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223007151504>에서 2021.09.17. 인출.
- 박혜림. (2019). 북한의 식품공급량 및 영양소 주요 급원식품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임상보건융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2020). **2019 국민건강통계. 국민건강영양조사 제8기 1차년도 (2019)**. 세종: 보건복지부, 청주: 질병관리청.
- 보건복지부, 한국영양학회. (2015). **201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세종: 보건복지부, 서울: 한국영양학회.
- 보건복지부, 한국영양학회. (2020). **2020 한국인 영양소섭취기준**. 세종: 보건복지부, 서울: 한국영양학회.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4). **북한사회변동 2012-2013: 시장화, 소득분화, 불평등**. 서울: 서울대학교통일평화연구원.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5). **북한사회변동 2014: 시장화, 불평등, 경제개혁**. 서울: 서울대학교통일평화연구원.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6). **북한사회변동 2015: 시장화, 정보화, 사회**

- 분화.** 서울: 서울대학교통일평화연구원.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7). **북한사회변동 2016: 시장화, 정보화, 사회**
- 분화.** 서울: 서울대학교통일평화연구원.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8). **북한사회변동 2017: 시장화, 정보화, 사회**
- 분화, 사회보장.** 서울: 서울대학교통일평화연구원.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9). **북한사회변동 2018: 시장화, 정보화, 사회**
- 분화, 사회보장.** 서울: 서울대학교통일평화연구원.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20). **북한사회변동 2019: 시장화, 정보화, 사회**
- 분화, 보건.** 서울: 서울대학교통일평화연구원.  
손동기, 송병준. (2021). 발틱 3국의 독립과 체제전환: 동인, 과정 및 함의, **동유럽발칸연구**, 45(1), pp135-160.
- 손중철. (2014).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 인구고령화와 자본 이동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경제분석**, 20(4), 39-76.
- 손혜민. (2021.03.01.). [북한의 코로나 그림자] ① 자취 갖춘 수입상품. **자유아시아방송**, <https://www.rfa.org/korean> 로부터 인출.
- 신운정(2017), 동유럽 국가의 저출산 및 가족정책 현황 및 시사점, **보건복지포럼**, 243권, pp101-112,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양문수. (2017). 김정은 집권 이후 개정 법령을 통해 본 ‘우리식경제관리방법’, **통일정책연구**, 26(2), 87-88.
- 양은하. (2021.8.21.). “그러니까 똥똥하지”…북한TV 만화영화, 어린이 비만 경제(식량난에도 상위층은 비만이 문제). **뉴스1**.
- 외교부. (2018). **발트 3국 개황**, 대한민국 외교부
- 외교부. (n.d.). **개발협력**. [https://www.mofa.go.kr/www/wpge/m\\_3816 / contents.do](https://www.mofa.go.kr/www/wpge/m_3816/contents.do)에서 2021. 10. 25. 인출.
- 유럽 돌봄 협회(euro carer) 홈페이지. <https://eurocarers.org/country-profiles/estonia/>, <https://eurocarers.org/country-profiles/latvia/>, <https://eurocarers.org/country-profiles/lithuania/>에서 2021년 9월 27일 인출.

- 윤소윤, 권영혜, 윤지현. (2016). 남북한 가임기 여성의 영양상태 비교. **대한지역 사회영양학회지**, 21(3), 265-273.
- 윤지현. (2018). 북한 이해: 식품영양학적 접근. 국민영양(2018. 8&9).
- 윤지현. (2019a). 북한이탈주민의 식생활적응과정 및 식생활교육 현황 조사. [2018 통일기반구축사업 미출판 자료]
- 윤지현. (2019b). 북한 주민의 식량권과 건강권. **대한민국 인권 근현대사 2권**.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윤지현. (2019c). 영양 및 식량안보. **2019년 개정판 북한 보건의료 백서**. 서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통일의학센터.
- 윤진. (2021.11.18.). 코로나19 확진자 '0명' 북한 ...'백신' 제안하면 어떤 선택 할까?. **KBS NEWS**.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28456>에서 2021.11.20.인출.
- 이석. (2016). 북한의 실제 취업률과 소득은 얼마나 될까?. **KDI FOCUS**. 통권 제78호. KDI 4.
- 이선필. (2012) 유럽연합 가입 이후 발트 3국의 여론 변화에 관한 연구, **동유럽 연구**, 32, 325-348.
- 이설. (2021.06.28.). 먹거리 문제 해결 급한 북한 “양어를 전군중적으로”. **뉴스 1**, <https://www.news1.kr/> 로부터 인출.
- 이설. (2021.08.07.). 먹거리 문제 시급한 북한 “풀과 고기 바꾸자” 가축 기르기 강조. **뉴스1**, <https://www.news1.kr/> 로부터 인출.
- 이수경, 윤지현, 남소영, 차수빈, 남영민. (2020). **북한 영유아의 영양소 섭취기준 설정을 위한 기초연구**. 남북과학기술교류협력 최종보고서. 인천: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 이순형, 진미정, 나종연, 이유리, 윤지현, 김희정, 최윤정, 윤소윤. (2020).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 둘러보기: 북한이탈주민에게 전해 들은 북한의 생활문화**, 파워북.
- 이찬우. (2019). **북한경제와 협동하자**, 서울: 시대의 창.
- 임승지, 이용갑, 이정면. (2021). 외국의 상병수당제도에 관한 비교 연구, **보건사**

- 회연구**, 41(1), 61-80,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장슬기. (2021.09.08). 국경봉쇄 길어지자 수입 식품 씨 말라...중국산 콩기름값 천정부지. **데일리NK**, <https://www.dailynk.com/> 로부터 인출.
- 전국경제인연합회 지역협력팀. (2020. 8. 31.). 한국 경제자유지수 장단기 추이 분석. **전국경제인연합회 보도자료**. <http://www.fki.or.kr/>에서 인출.
- 전진영, 김유정. (2020). OECD 국가의 민주주의 지수 비교 및 시사점. **국제통계 동향과 분석**, (12), 1-7.
- 전형진, 김영훈, 최용호, 홍초운, 이슬아, 한석호. (2020). **평화시대 한반도 농업 통합 증장기 로드맵 수립 연구(1/5차년도)**, 나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정빛나. (2020.2.9.). 북한 신종코로나 방역, '경제 총참모부' 국가계획위가 총괄.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2090008400504>에서 2021.09.17. 인출.
- 지다점. (2020). “북 김정은 위원장 “전례 없는 풍년”...국제기구 평가와 달라”, **V OA뉴스**. <https://www.voakorea.com/a/5229919.html>에서 2021.05.06. 인출.
- 최용호, 김영훈, 김태후, 이슬아, 권태진, 이찬호. (2021). **평화시대 한반도 농업 통합 증장기 로드맵 수립 연구(2/5차년도)**, 나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최용호. (2020), 북한 식량 수급 분석을 위한 통계 현황과 시사점, **KDI 북한경제 리뷰**, 2020년 12월호.
- 최용호. (2021a). 북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과 농업부문 시사점, **KREI현안 분석**, 83, 나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최용호. (2021b). 북한 식량 수급 분석을 위한 통계 현황과 시사점. **KDI 북한경제 리뷰**, 22(12). 나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최장호, 권을, 최유정, 이대은. (2020). **체제 전환 과정에서의 인구 구조 변화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 통계청(KOSIS) 북한통계([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2\\_02&vwcd=MT\\_BUKHAN&parmTabId=M\\_02\\_02](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2_02&vwcd=MT_BUKHAN&parmTabId=M_02_02))에서 21.10.1. 인출

- 통계청. (2021). 북한통계포털. <https://kosis.kr/bukhan/> 에서 2021.09.19. 인출.
- 통일교육원. (2019). **2020 북한이해**. 서울: 통일교육원 연구개발과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 **2019 식품수급표**. 나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국영양학회. (2015). CAN-Pro 5.0 (Web ver.). [소프트웨어]. 서울: 한국영양학회
- 한-아세안 센터. (n.d.). **아세안 개요**. <https://www.aseankorea.org/kor/ASEAN/overview.asp>에서 2021. 10. 25. 인출.
- 행정안전부. (2021).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의 연령별 인구현황 (2021년 10월 기준).
- 홍민, 차문석, 정은이, 김혁. (2016). **북한 전국 시장정보: 공식시장 현황을 중심으로**. KINU 연구총서 16-24.
- 홍제환. (2017). **김정은 정권 5년의 북한경제: 경제정책을 중심으로**. KINU 연구총서 17-18, 33. 서울: 통일연구원.
- DAC 회원국 지원현황. [Website]. (n.d.). [https://www.odakorea.go.kr/ODAPage\\_2018/category01/L04\\_S01\\_01.jsp](https://www.odakorea.go.kr/ODAPage_2018/category01/L04_S01_01.jsp)에서 2021.10.25. 인출.
- FAO한국협회. (2011). **(FAO/WFP) 북한의 작황 및 식량안보평가 특별보고서 2011**. 안양: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한국협회.
- FAO한국협회. (2012). **(FAO/WFP) 북한의 작황 및 식량안보평가 특별보고서 2012**. 안양: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한국협회.
- FAO한국협회. (2013). **(FAO/WFP) 북한의 작황 및 식량안보평가 특별보고서 2013**. 안양: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한국협회.
- FAO한국협회. (2019). **2019 FAO/WFP 북한 식량안보 긴급 평가보고서**. 안양: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한국협회.
- KBS NEWS. (2021). <https://news.kbs.co.kr/> 에서 2021.10.16. 인출.
- KBS 남북의 창. (2021. 08.21). [요즘 북한은] 공장에서 돼지 생산…北 양돈 현

주소는?

KBS 남북의 창. (2021.06.19.). [요즘 북한은] 북한의 반년 식량... 공장 김치가 대세.

KDI경제정보센터. (n.d.). **경제 성장**. <https://eiec.kdi.re.kr/material/conceptList.do?depth01=00002000010000100009&idx=142>에서 2021. 10. 24. 인출.

MBC 통일전망대. (2020). 북한이 궁금해? 2020.04.11. 방송.

MBC 통일전망대. (2020). 육류 식당 증가(부유층 사이 외식 문화 발달), 고기 요리법 다양성 증가. 2020.09.26. 방송.

MBC. (2021). <https://www.imbc.com/> 에서 2021.10.16. 인출.

NK투자개발. (2021a). **북한 가계 생계비 조사**. NK투자개발내부자료.

NK투자개발. (2021b). **북한 산업별 시장화 현황**. NK투자개발내부자료.

NK투자개발. (2021c). **북한의 코로나-19 대응과 교통 물류 현황**. NK투자개발 내부자료.

#### 〈북한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격법. (1999.8.19.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955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노동정량법. (2015.2.11.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54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농장법. (2015.6.25.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55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노동법. (2015.6.30.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66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상업법. (2010.5.18.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850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2016.6.29.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회의에서 수정보충)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의약품관리법. (1998.12.10.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51호)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보건법. (2021.4.3.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303호)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정법. (2015.4.8.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57호)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편의봉사법. (2014.12.24.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94호)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 (2015.7.22.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78호)

#### 〈외국어 자료〉

- Aaviksoo A , Sikkut R (2011) Health care policy in the Baltic countries from 1990 to 2010, Estonian Human Development Report 2010/2011: Baltic Way(s) of Human Development: Twenty Years On. *Tallinn: Eesti Koostöögu*, 58-65.
- Abolina L & Zvidrins P. (2014) “Changes in Family Policy in Latvia.” Paper presented at *the European Population Conference*, Budapest, Hungary. 25-28 June, 2014.
- ADB. (2021). *Total Social Protection Expenditure, as % of GDP [Data]*. <https://spi.adb.org/spidmz/에서> 2021. 10. 9. 인출.
- Aidukaite, J. (2004). The Emergence of the Post-socialist Welfare State: The Case of the Baltic States: Estonia, Latvia and Lithuania. Stockholm: *Södertörns Högskola*. Dissertation no 1.
- Aidukaite, J. (2006). The formation of social insurance institutions of the Baltic States in the post-socialist era,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0958-9287. 16(3): 259-270.
- Aidukaite, J. (2011). The “Baltic welfare state” after 20 years of transiti

- on, The Great Dispersion: Estonian Human Development Report 2010/2011: Baltic Way(s) of Human Development: Twenty Years On. *Tallinn: Eesti Koostöögu*, 70-74.
- Aidukaite, J. (2013). Social Policy Changes in the three baltic states over the last decade(2000-2012), *Ekonomika*. Vol. 92(3)
- Ainsaar, M. (2019). Economic crisis, families, and family policy in the Baltic states, 2009-2014, *Journal of Baltic Studies*, 50(1), 59-77.
- Ainsaar, M., & Riisalu, H. (2014). Towards pronatalism-baltic family policy pronatalism-baltic family policy in european comparison in 2012 and 2010, *Baltic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3).
- Ainsaar, M., & Stankunien, V. (2011). Demographic costs of transition and the future of the Baltic states, Estonian Human Development Report 2010/2011: Baltic Way(s) of Human Development: Twenty Years On. *Tallinn: Eesti Koostöögu*.
- Bazbauers, A. (2012). The world bank group in the baltic states: transition, accession, crisis, *International Journal of Arts & Sciences*, 5(6), 1.
- Berzins, A& Zvidrins, P. (2011). Depopulation in the Baltic States, *Lithuanian Journal of Statistics*. 50(1), pp39-48
- Casey, H.B. (2004) Pension reform in the Baltic States: Convergence with “Europe” or with “the world”?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Review*, Vol. 57, 1/2004.
- Consumer price index (2010 = 100) [Website]. (n.d.).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에서 2021.09.14. 인출.
- Cornelius, K.(1995) Unemployment during Transition: The Experience in the Baltic Countries, *Communist Economies & Economic Transformation*, Vol. 7, No. 4, 1995.
- Deacon, B.(2000) Eastern European welfare states: the impact of the

- politics of globalization,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Vol 10 (2): 146-161.
- Death rate, crude (per 1,000 people) [Website]. (n.d.).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에서 2021.10.04. 인출.
- Democracy index. [Website]. (n.d.). <https://www.eiu.com/>에서 2021.09.26. 인출.
-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21).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Pyongyang: DPRK.
- Doctors consultations (in all settings) [Website]. (n.d.). <https://data.oecd.org/>에서 2021.10.09. 인출.
- Domestic general government health expenditure (% of current health expenditure) [Website]. (n.d.).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에서 2021.10.09. 인출.
- Domestic private health expenditure (% of current health expenditure) [Website]. (n.d.).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에서 2021.10.09. 인출.
- DPRK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UNICEF. (2010). *DPR Korea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2009*, final report. Pyongyang: DPRK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New York: UNICEF.
- DPRK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UNICEF. (2018). *DPR Korea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2017*, survey findings report. Pyongyang: DPRK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New York: UNICEF.
- DPRK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2000). *Report of the second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2000*. Pyongyang: DPRK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 DPRK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2003). *Nutrition assessment 2002*

- DPR Korea*. Pyongyang: DPRK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 DPRK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2005). *DPRK 2004 nutrition assessment report of survey results*. Pyongyang: DPRK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 DPRK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2013).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final report of the national nutrition survey 2012*. Pyongyang: DPRK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 EIU. (2021). Democracy index [Data]. <https://www.eiu.com/>에서 2021. 9. 26. 인출.
- Employment to population ratio, 15+, female (%) (modeled ILO estimate) [Website]. (n.d.).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에서 2021.09.14. 인출.
- Employment to population ratio, 15+, male (%) (modeled ILO estimate) [Website]. (n.d.).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에서 2021.09.14. 인출.
- Employment to population ratio, 15+, total (%) (modeled ILO estimate) [Website]. (n.d.).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에서 2021.09.14. 인출.
- EU, UNICEF, & WFP. (1998). *Nutrition survey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Brussels: EU, New York: UNICEF, Rome: WFP.
- European Commission. (2021a). *Your social security rights in Estonia*.
- European Commission. (2021b). *Your social security rights in Latvia*.
- European Commission. (2021c). *Your social security rights in Lithuania*.
- Eurostat. (n. d.) current healthcare expenditure relative to GDP 2018. [https://ec.europa.eu/eurostat/statistics-explained/index.php?title=Healthcare\\_expenditure\\_statistics](https://ec.europa.eu/eurostat/statistics-explained/index.php?title=Healthcare_expenditure_statistics)에서 2021년 09월 30일 인출.
- Eurostat. (2021). Expenditure: main results (spr\_exp\_sum) [Data]. <http>

- s://ec.europa.eu/eurostat/data/database에서 2021. 10. 9. 인출.
- Eurostat. (2021). Gini coefficient of equivalised disposable income - EU-SILC survey [Data]. <https://ec.europa.eu/eurostat>에서 2021. 10. 15. 인출.
- Eurostat. (2021). Pensions (spr\_exp\_pens) [Data]. <https://ec.europa.eu/eurostat/data/database>에서 2021. 10. 5. 인출.
- Eurostat, (n.d.). Health Perception-cause of death. [Website]. <https://ec.europa.eu/eurostat/cache/infographs/womenmen/bloc-1c.html?lang=en>에서 2021. 09. 02. 인출.
- Expenditure: main results (spr\_exp\_sum) [Website]. (n.d). <https://ec.europa.eu/eurostat/data/database>에서 2021.10.09.인출.
- FAO. (2001). *Food balance sheets. a handbook*. Rome: FAO.
- FAO. (2015).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Outlook for Food Supply and Demand in 2014/15(November/October)*. FAO GIEWS.
- FAO. (2016). *Goal 2 end hunger, achieve food security and improved nutrition and promote sustainable agriculture*. Rome: FAO.
- FAO. (2017).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Prolonged Dry Weather Threatens the 2017 Main Season Food Crop Production*. FAO GIEWS.
- FAO. (2018).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Food Supply and Demand Outlook in 2017/18(November/October)*. FAO GIEWS.
- FAO. (2021a). FAO statistics. <http://www.fao.org/faostat>에서 2021.09. 19. 인출.
- FAO. (2021b). Food Balances (-2013, old methodology and population). <https://www.fao.org/faostat/en/#data/FBSH>에서 2021.10.23. 인출.

- FAO. (2021c). Food Balances (2014-). <https://www.fao.org/faostat/en/#data/FBS>에서 2021.10.23. 인출.
- FAO. (2021d). Hunger and food insecurity. <https://www.fao.org/hunger/en/> 에서 2021.11.14. 인출.
- FAO. (2021e). Low-Income Food-Deficit Countries (LIFDCs) - List updated June 2021. <https://www.fao.org/countryprofiles/lifdc/en/>에서 2021.11.16. 인출.
- FAO. (2021f). *Minimum dietary diversity for women*. Rome: FAO.
- FAO. (2021g). *Agricultural Production Situation in DPR Korea: 2020*. FAO Office in DPR Korea.
- FAO. (2021h).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Food Supply and Demand Outlook in 2020/21*(November/October). FAO GIEWS.
- FAO & WFP. (2010, 2011, 2012, 2013). *Special report: FAO/WFP crop and food security assessment mission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Rome: FAO, WFP.
- FAO & WFP. (2015, 2016, 2018, 2021).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food supply and demand outlook*. Rome: FAO, WFP.
- FAO & WFP. (2019).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 K): FAO/WFP joint rapid food security assessment*. Rome: FAO, WFP.
- FAO, IFAD, UNICEF, WFP, & WHO. (2021). *The state of food security and nutrition in the world 2021*. Rome: FAO, IFAD, WFP, New York: UNICEF, Geneva: WHO.
- Freedom House. (n.d.). *Country and Territory Ratings and Statuses, 1973-2021 [Data]*. [https://freedomhouse.org/sites/default/files/2021-02/Country\\_and\\_Territory\\_Ratings\\_and\\_Statuses\\_FIW1973-](https://freedomhouse.org/sites/default/files/2021-02/Country_and_Territory_Ratings_and_Statuses_FIW1973-)

- 2021.xlsx에서 2021. 9.26. 인출.
- Fertility rate, total (births per woman) [Website]. (n.d.).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에서 2021.10.04. 인출.
- Gavelis, V., & Visockas, E. (2013). Family Policy and Its Realization Trends in Lithuania for 2005–2012. *Ekonomika*, vol 92 (3), 141–165.
- GDP growth (annual %) [Website]. (n.d.).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에서 2021.09.12. 인출.
- GDP(current US\$) [Website]. (n.d.).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에서 2021.09.12. 인출.
- GDP per capita (current US\$) [Website]. (n.d.).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에서 2021.09.12. 인출.
- GDP per capita growth (annual %) [Website]. (n.d.).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에서 2021.09.12. 인출.
- Gini coefficient of equivalised disposable income - EU-SILC survey [Website]. (n.d.). <https://ec.europa.eu/eurostat>에서 2021.10.15. 인출.
- Global Hunger Index. (2021a). *COMPOSITION OF THE GLOBAL HUNGER INDEX*. <https://www.globalhungerindex.org/north-korea.htm>에서 2021.10.1. 인출.
- Global Hunger Index. (2021b). *Global hunger index scores by 2020 GHI rank*. <https://www.globalhungerindex.org/north-korea.htm>에서 2021.09.19. 인출.
- Global Hunger Index. (2021c). *Trend for Indicator Values-Korea(DPR)*. <https://www.globalhungerindex.org/north-korea.htm>에서 2021.10.1. 인출.
- GNI per capita, Atlas method (current US\$) [Website]. (n.d.).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에서 2021.09.13. 인출.
-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21).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Pyongyang: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Glossary of statistical terms: Definition of 'out-of-pocket expenditure by households health. (n. d.). <https://stats.oecd.org/glossary/detail.asp?ID=1967>에서 2021.10. 1. 인출.

Harvard T.H. Chan School of Public Health. India Research Center. (2020). *Sanchar brief #13: CNNS data for stunting, wasting, underweight.* Mumbai: Harvard T.H. Chan School of Public Health. India Research Center.

Hospital beds (per 1,000 people) [Website]. (n.d.).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에서 2021.10.09. 인출.

IMF cross-country indexes, (n.d.). Consumer Price Index (CPI) [Website]. <https://data.imf.org/regular.aspx?key=61015892>.에서 2021. 09. 09. 인출.

Income inequality [Website]. (n.d.). <https://data.oecd.org/>에서 2021. 09.09. 인출.

Index of Economic Freedom [Website]. (n.d.). <https://www.heritage.org/index/download>에서 2021.09.26. 인출.

Inflation, consumer prices (annual %) [Website]. (n.d.).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에서 2021.09.14. 인출.

Kalnins, I. (1995). Public health in Latvia, Lithuania and Estonia, *Journal of Baltic Studies*, 26(3), Special Issue: Health Care in the Baltic (Fall 1995), 179-184.

Kozłowska, U. & Sikorski, T. (2020) The Implementation of the Soviet Healthcare Model in 'People's Democracy' Countries—the Case of Post-war Poland (1944-1953), *Social History of Medicine*,

- Oxford University Press.
-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female (% of female population ages 15+) (modeled ILO estimate) [Website]. (n.d.).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에서 2021.09.14. 인출.
-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male (% of male population ages 15+) (modeled ILO estimate) [Website]. (n.d.).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에서 2021.09.14. 인출.
-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total (% of total population ages 15+) (modeled ILO estimate) [Website]. (n.d.).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에서 2021.09.14. 인출.
- Life expectancy at birth, female (years) [Website]. (n.d.).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에서 2021.10.04. 인출.
- Life expectancy at birth, male (years) [Website]. (n.d.).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에서 2021.10.04. 인출.
- Life expectancy at birth, total (years) [Website]. (n.d.).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에서 2021.10.04. 인출.
- Marzena, T. Jacek, K & Alicja, D. (2021) Financing Healthcare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an Countries: How Far Are We from Universal Health Coverage?.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8(4), 1382.
- Masso, J., Espenberg K., Masso, A., Mierina, I., & Philips, K. (2012). Growing inequalities and its impacts in the Baltics. *Country report for the Baltic states: Estonia, Latvia, Lithuania*, Brussels, Belgium: European Union.
- Medina, L., & Schneider, M. F. (2018). *Shadow economies around the world: what did we learn over the last 20 years?*. Washington, D. C.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 Mongardini, J. (2001). Successful transition: Estonia establishes itself

- as market economy in position for accession to European Union, *IMF Survey*, 30(18). IMF.
- Mortality rate, infant (per 1,000 live births) [Website]. (n.d.).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에서 2021.10.04. 인출.
- Navickè J (2020) Factors behind the changes in income distribution in the Baltics: income, policy, demography, *Journal of Baltic Studies*, 51:2, 137-157.
- Net ODA [Website]. (n.d.). <https://data.oecd.org/>에서 2021.09.13. 인출.
- Net ODA provided, total (% of GNI) [Website]. (n.d.).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에서 2021.09.13. 인출.
- Net ODA received (% of GNI) [Website]. (n.d.).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에서 2021.09.13. 인출.
- Net ODA received per capita (current US\$) [Website]. (n.d.).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에서 2021.09.13. 인출.
- NCD Risk Factor Collaboration. (2016). A century of trends in adult human height. *eLife*, 2016(5), e13410.
- O'Connor, J. & Bankauskaite, V. (2008). Public health development in the Baltic countries (1992-2005): from problems to policy, *European Journal of Public Health*, 18(6), 586-592.
- OECD. (2003) *Labour Market and Social Policies in the Baltic Countries*. Paris: OECD Publishing.
- OECD. (2011) *Help Wanted? Providing and Paying for Long-Term Care*. Paris: OECD Publishing.
- OECD. (2019) *The OECD Tax-benefit model for Lithuania-Description of policy rules for 2019*. Paris: OECD Publishing.
- OECD. (2005). *Pensions at a Glance 2005: Public Policies across OECD Countries*. Paris: OECD Publishing.
- OECD. (2007). *Pensions at a Glance 2007: Public Policies across OECD*

- Countries*. Paris: OECD Publishing.
- OECD. (2009). *Pensions at a Glance 2009: Retirement-Income Systems in OECD Countries*. Paris: OECD Publishing.
- OECD. (2013). *Pensions at a Glance 2013: OECD and G20 Indicators*. Paris: OECD Publishing.
- OECD. (2015). *Pensions at a Glance 2015: OECD and G20 Indicators*. Paris: OECD Publishing.
- OECD. (2017). *Pensions at a Glance 2017: OECD and G20 Indicators*. Paris: OECD Publishing.
- OECD. (2019). *Pensions at a Glance 2019: OECD and G20 Indicators*. Paris: OECD Publishing.
- Out-of-pocket expenditure (% of current health expenditure) [Website]. (n.d.).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에서 2021.10.09. 인출.
- Paas, T., Hinnosaar, M., Masso, J., & Orsolya, S. (2004b). Social protection systems in the Baltic States, *Tartu Economics and Business Working Paper*, No. 26-2004, p.87 Posted: 4 Nov 2004.
- Paas, T., Hinnosaar, M., Masso, J., & Schumann, C. (2004a). *Income Inequality, Poverty and Unemployment as Main Social Consequences of Transition Processes in the Baltic States, Strategy of EMU enlargement-Background*. International Security Department, The Knowledge Institute, Warsaw 2004.
- Pensions (spr\_exp\_pens) [Website]. (n.d.). <https://ec.europa.eu/eurostat/data/database>에서 2021.10.05. 인출.
- Pension spending (indicator) [Website]. (n.d.). <https://data.oecd.org/>에서 2021.10.05. 인출.
- Physicians (per 1,000 people) [Website]. (n.d.).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에서 2021.10.09. 인출.

Population ages 0-14 (% of total population) [Website]. (n.d.).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에서 2021.10.04. 인출.

Population ages 65 and above (% of total population) [Website]. (n.d.).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에서 2021.10.04. 인출.

Population ages 15-64 (% of total population) [Website]. (n.d.).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에서 2021.10.04. 인출.

Population ages 65 and above (% of total population) [Website]. (n.d.).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에서 2021.10.04. 인출.

Population female (% of total population) [Website]. (n.d.).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에서 2021.10.04. 인출.

Population male (% of total population) [Website]. (n.d.).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에서 2021.10.04. 인출.

Population total. [Website]. (n.d.).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에서 2021.10.04. 인출.

Poverty headcount ratio at \$1.90 a day (2011 PPP) (% of population) [Website]. (n.d.).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에서 2021.09.14. 인출.

Poverty rate (indicator) [Website]. (n.d.). <https://data.oecd.org/>에서 2021.10.01. 인출.

Pölluste, K. , Kasiulevičius, V., Veide, S., Kringos, D. S., Boerma, W., & Lember, M. (2013). Primary care in Baltic countries: a comparison of progress and present systems. *Health Policy*, 109(2), p.122-130.

Public social protection expenditure, 1995 to latest available year (percentage of GDP) [Website]. (n.d.). <http://www.social-protection.org/gimi/gess/RessourceDownload.action?ressource.ressourceId=54614>에서 2021.10.09. 인출.

Rajevska, O. (2014) Latvian pension system: calibration by crisis, *New Challenges of Economic and Business Development - 2014*, In

- International scientific conference “New Challenges of economic and business development”: conference proceedings. 8-10.
- Rajevska, O., & Rajevsk, F. (2014). Notional Defined Contribution pension scheme experience in Latvia: some lessons, *Studia Humanistyczne AGH*, Vol 13(4), AGH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 Roots, A., & Ainsaar, M. (2011). Social policy, the labour market and the subjective well-being of the population, introduction, *Baltic Way(s) of Human Development: Twenty Years On*, Estonian Human Development Report, Tallinn, Estonian Cooperation Council, *Social Consequences of Neoliberal Economic Crisis and Austerity Policy in the Baltic States*.
- Rose, R. (1995). *Pensioners, Gender and Poverty in the Baltic States, Internal Discussion Paper*. The World Bank.
- Schwekendiek, D. (2009). Height and weight difference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J Biosoc Sci*, 41(1), 51-55.
- SGI. (2015). 2015 Estonia Report, Sustainable Governance Indicators 2015, BertelsmannStiftung, [https://www.sgi-network.org/docs/2015/country/SGI2015\\_Estonia.pdf](https://www.sgi-network.org/docs/2015/country/SGI2015_Estonia.pdf).에서 2021. 08. 05. 인출.
- SGI. (2019). 2019 Lithuanian Report, Sustainable Governance Indicators 2019, BertelsmannStiftung, [https://www.sgi-network.org/docs/2019/country/SGI2019\\_Lithuania.pdf](https://www.sgi-network.org/docs/2019/country/SGI2019_Lithuania.pdf)에서 2021. 08. 05. 인출.
- SGI. (2020a). 2020 Estonia Report, Sustainable Governance Indicators 2020, BertelsmannStiftung, [https://www.sgi-network.org/docs/2020/country/SGI2020\\_Estonia.pdf](https://www.sgi-network.org/docs/2020/country/SGI2020_Estonia.pdf)에서 2021. 08. 05. 인출.
- SGI. (2020b). 2020 Latvia Report, Sustainable Governance Indicators 2020, BertelsmannStiftung, <https://www.sgi-network.org/docs/>

- 2020/country/SGI2020\_Latvia.pdf에서 2021. 08. 05. 인출.
- SGI. (2020c). 2020 Lithuania Report, Sustainable Governance Indicators 2020, BertelsmannStiftung, [https://www.sgi-network.org/docs/2020/country/SGI2020\\_Lithuania.pdf](https://www.sgi-network.org/docs/2020/country/SGI2020_Lithuania.pdf)에서 2021. 08. 05. 인출.
- Social Contributions in Percent of GDP [Website]. (n.d.). <https://data.imf.org/>에서 2021.10.09. 인출.
- Social Expenditure(Public) [Website]. (n.d.).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SOCX\\_AGG](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SOCX_AGG). 2021.10.09. 인출.
- Social Expenditure(Private) [Website]. (n.d.).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SOCX\\_AGG](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SOCX_AGG). 2021.10.09. 인출.
- Simai, M. (2006). *Poverty and Inequality in Eastern Europe and the CIS Transition Economies*, DESA Working Paper No. 17, UN/DESA Working Papers, UN.
- SPLASH-db.eu (2015): Policy: “Family Policies: Latvia” <https://splash-db.eu/policydescription/family-policies-latvia-2015>에서 2021년 8월 16일 인출.
- Suicide mortality rate (per 100,000 population) [Website]. (n.d.).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에서 2021.10.04. 인출.
- Tambor, M., Klich J., & Domaga Ł a, A.(2021). Financing Healthcare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an Countries: How Far Are We from Universal Health Coverage?.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2021, 18(4).
- Tax Revenue in Percent of GDP [Website]. (n.d.). <https://data.imf.org/>에서 2021.10.09. 인출.
- The Heritage Foundation. (2021). *Index of Economic Freedom [Data]*. <https://www.heritage.org/index/download> 2021. 9. 26. 인출.
- The Social Policy Archive for SHARE (SPLASH). (2014). Family Policies: Estonia. <https://splash-db.eu/policydescription/family-policies->

- estonia-2014/ 에서 2021년 9월 28일 인출.
- The Social Policy Archive for SHARE (SPLASH). (2015). Family Policies: Latvia. <https://splash-db.eu/policydescription/family-policies-latvia-2015/>에서 2021년 9월 28일 인출.
- the World Bank Data [Website]. (n.d.).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SL.UEM.ADVN.ZS?locations=EE>에서 2021. 09. 15. 인출.
- Total Social Protection Expenditure, as % of GDP [Website]. (n.d). <https://spi.adb.org/spidmz/>에서 2021.10.09. 인출.
- Total tax revenue (excluding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as percentage of GDP, 1990-2019 [Website]. (n.d). [https://www.oecd-ilibrary.org/taxation/total-tax-revenue-excluding-social-security-contributions-as-percentage-of-gdp-1990-2019\\_c437f0d8-en](https://www.oecd-ilibrary.org/taxation/total-tax-revenue-excluding-social-security-contributions-as-percentage-of-gdp-1990-2019_c437f0d8-en)에서 2021.10.09. 인출.
- Trade (% of GDP) [Website]. (n.d.).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에서 2021.09.14. 인출.
- UN Comtrade. (2021). *UN Comtrade database*. <http://comtrade.un.org>에서 21.10.1. 인출.
- Unemployment, female (% of female labor force) (modeled ILO estimate) [Website]. (n.d.).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에서 2021. 09.14. 인출.
- Unemployment, male (% of male labor force) (modeled ILO estimate) [Website]. (n.d.).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에서 2021. 09.14. 인출.
- Unemployment, total (% of total labor force) (modeled ILO estimate) [Website]. (n.d.).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에서 2021. 09.14. 인출.
- UNICEF. (2007). *2006 DPRK nutrition survey results*. New York: UNICEF.
- UNICEF. (2021a). *Indicators for assessing infant and young child*

*feeding practices: definitions and measurement methods.*

Geneva: UNICEF.

UNICEF. (2021b). Infant and young child feeding. <https://data.unicef.org/topic/nutrition/infant-and-young-child-feeding/> 에서 2021. 10.24. 인출.

UNICEF, WHO (2019). *UNICEF-WHO low birthweight estimates: levels and trends 2000-2015*. New York: UNICEF., Geneva: WHO.

UNICEF, WHO, IBRD, World Bank. (2021). *Levels and trends in child malnutrition: key findings of the 2021 edition of the joint child malnutrition estimates*. New York: UNICEF, Geneva: WHO, Washington, D.C.: IBRD, Washington, D.C.: World Bank.

UNDP. (2000). *Poverty Reduction in Estonia, Latvia, and Lithuania, Riga*.

Welthungerhilfe, Concern Worldwide. (2020). *Global hunger index 2020*. Bonn: Welthungerhilfe, Dublin: Concern Worldwide.

WFP. (2008). *Food consumption analysis: calculation and use of the food consumption score in food security analysis*. Rome: WFP.

WFP. (2021a). *Household food security in the DPRK*. Rome: WFP.

WFP. (2021b). *Hunger map 2021*. Rome: WFP.

WFP. (2021c). *Food Aid Information System*. <https://www.wfp.org/fais> 에서 2021. 10.24. 인출.

WHO. (2018). Estonia: health system review 2018, *Health Systems in Transition*, 20(1), Regional Office for Europe. [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340584088\\_Latvia\\_Health\\_system\\_review\\_Health\\_Systems\\_in\\_Transition\\_2019](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340584088_Latvia_Health_system_review_Health_Systems_in_Transition_2019)[2021. 08. 25. ]

World Agricultural Production. [Website] (2021). [https://apps.fas.usda.gov/psdonline/app/index.html#/app/home/stats\\_ByCountry](https://apps.fas.usda.gov/psdonline/app/index.html#/app/home/stats_ByCountry)에서 2021.09.20. 인출.

World Bank. (2021a). <https://www.worldbank.org/en/home>에서 2021.

11.15. 인출.

World Bank. (2021b). World Bank Open Data.

<https://data.worldbank.org/> 에서 2021.09.19. 인출.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Website]. (n.d.). [https://databank.](https://databank.worldbank.org/indicator/NY.GDP.MKTP.KD.ZG/1ff4a498/Popular-Indicators)

[worldbank.org/indicator/NY.GDP.MKTP.KD.ZG/1ff4a498/Popular-Indicators](https://databank.worldbank.org/indicator/NY.GDP.MKTP.KD.ZG/1ff4a498/Popular-Indicators)에서 2021. 09. 15. 인출.

〈인터뷰 자료〉

Egle Sumsiene. Interview. 2021.10.29.

Olga Rajevska. Interview. 2021.10.07.

Raul Eamets. Interview. 2021.10.14.





## [부록 1] 북한 내부 소식통의 특성

이름	성별	연령	거주지	소속/직업
김**	남	40대	혜산	국가 행정
리**	남	50대	원산	국영기업소
최**	여	50대	평양	장사
한**	남	40대	신의주	운수업
현**	여	40대	평성	장사
채**	남	50대	순천	국영기업소

자료: 저자 작성.



자료원	자료정보	자료 생성일	해당부분	내용	링크
KBS 남북의 창		2021-08-21	전체	축산업 발전을 위한 돼지 공장 설립 및 양돈 산업 육성으로 식량난 극복 의지, 평양의 옥상 녹화 사업(첫발의 기능)	<a href="https://news.kbs.co.kr/news/view.do?news=1385">https://news.kbs.co.kr/news/view.do?news=1385</a>
KBS 남북의 창		2021-08-14	02:40~05:00	식량난 해소를 위한 풀베기 전투(내년 농사 거름 확보)	<a href="https://news.kbs.co.kr/news/view.do?news=6190">https://news.kbs.co.kr/news/view.do?news=6190</a>
KBS 남북의 창		2021-07-03	전체	식량난 속 다이어트 유행(영양과 지방의 양극화), 부유층을 위한 다이어트 약 개발	<a href="https://news.kbs.co.kr/news/view.do?news=4573">https://news.kbs.co.kr/news/view.do?news=4573</a>
KBS 남북의 창		2021-06-26	00:00~02:30	어름칠 북한 대표 보양식 재료 미꾸라지	<a href="https://news.kbs.co.kr/news/view.do?news=9020">https://news.kbs.co.kr/news/view.do?news=9020</a>
KBS 남북의 창		2021-06-19	00:00~2:35	공장김치의 대중화	<a href="https://news.kbs.co.kr/news/view.do?news=3554">https://news.kbs.co.kr/news/view.do?news=3554</a>
KBS 남북의 창		2021-05-01	00:00~02:00	북한 매체가 소개한 평양 맛집(페스트푸드, 고기쟁반국수, 진달래 화전)	<a href="https://news.kbs.co.kr/news/view.do?news=3811">https://news.kbs.co.kr/news/view.do?news=3811</a>
KBS 남북의 창		2021-04-10	00:00~02:10	영양상태 개선을 위해 아파트, 공장, 기업소에서도 가축 기름	<a href="https://news.kbs.co.kr/news/view.do?news=9487">https://news.kbs.co.kr/news/view.do?news=9487</a>
KBS 남북의 창		2021-01-16	00:00~02:00	북한 토양은 유기질 함량 낮아 작물 성장 어려움, 퇴비 생산에 집중	<a href="https://news.kbs.co.kr/news/view.do?news=6252">https://news.kbs.co.kr/news/view.do?news=6252</a>
KBS 남북의 창		2020-12-16	전체	북한의 동자날 팔죽 만드는 법, 부유층을 위한 칠색 송어 양식	<a href="https://news.kbs.co.kr/news/view.do?news=6991">https://news.kbs.co.kr/news/view.do?news=6991</a>
KBS 남북의 창		2020-12-12	00:00~02:40	은실 채소 생산 권장, 스마트팜 구축에 관심	<a href="https://news.kbs.co.kr/news/view.do?news=9881">https://news.kbs.co.kr/news/view.do?news=9881</a>
KBS 남북의 창		2020-11-21	00:00~01:50	북한의 김장법(남한과의 차이)	<a href="https://news.kbs.co.kr/news/view.do?news=8163">https://news.kbs.co.kr/news/view.do?news=8163</a>
KBS 남북의 창		2020-11-07	00:00~02:10	천내감, 일부는 풋감으로 만들고 나머지는 음에 저장해 겨울 내내 먹음	<a href="https://news.kbs.co.kr/news/view.do?news=2960">https://news.kbs.co.kr/news/view.do?news=2960</a>
KBS 남북의 창		2020-10-10	전체	비료 배양으로 사과나무 영양상태 개선하여 생산량 증대, 칠갑산어, 생선 통조림 등 식생활의 변화	<a href="https://news.kbs.co.kr/news/view.do?news=2339">https://news.kbs.co.kr/news/view.do?news=2339</a>
KBS 남북의 창		2020-09-19	00:00~02:00	비료, 의약품에 지령이 성본 참가. (각각 퇴비, 인체용 혈전 용해제)	<a href="https://news.kbs.co.kr/news/view.do?news=8238">https://news.kbs.co.kr/news/view.do?news=8238</a>
KBS 남북의 창		2020-09-19	06:20~12:00	북한식 진통 주사형 조리법	<a href="https://news.kbs.co.kr/news/view.do?news=8211">https://news.kbs.co.kr/news/view.do?news=8211</a>
KBS 남북의 창		2020-07-18	00:00~02:00	평양 시민 생활 보장 지시로 칠폰 복숭아 평양에 전달 강조	<a href="https://news.kbs.co.kr/news/view.do?news=7125">https://news.kbs.co.kr/news/view.do?news=7125</a>
KBS 남북의 창		2020-05-16	00:00~02:30	모내기 시작, 과학 영농 적극 권장	<a href="https://news.kbs.co.kr/news/view.do?news=7756">https://news.kbs.co.kr/news/view.do?news=7756</a>
KBS 남북의 창		2020-04-25	00:00~02:20	김치 섭취로 코로나19 예방 효과 주장	<a href="https://news.kbs.co.kr/news/view.do?news=2777">https://news.kbs.co.kr/news/view.do?news=2777</a>
KBS 남북의 창		2020-04-18	00:00~02:20	공장 내 남는 에너지로 축산, 양어, 아채 농사까지 점업	<a href="https://news.kbs.co.kr/news/view.do?news=7900">https://news.kbs.co.kr/news/view.do?news=7900</a>
MBC 통일방담	974회	2021-10-02	15:00~	먹는 문제 해결하겠다 언급, 농업에 사활을 걸	<a href="http://dlvod.inbs.com/Template/View?bId=100086710098210000">http://dlvod.inbs.com/Template/View?bId=100086710098210000</a>

자료원	자료정보	자료 생성일	해당부분	내용	링크
MBC 통일전망대	969회	2021-08-21	13:00~24:00	설탕 및 식용유 부족으로 인한 가격 인상, 설탕 대체제로 스테비아 생산증	<a href="http://playvod.links.com/Template/VodView?bid=10088471097710000">http://playvod.links.com/Template/VodView?bid=10088471097710000</a>
MBC 통일전망대	968회	2021-08-14	14:00~	소금 부족, 지역별로 큰 소금 가격차, 냉장고가 거의 없어 채소, 수산물 등 모두 질어서 섭취	<a href="http://playvod.links.com/Template/VodView?bid=10088471095910000">http://playvod.links.com/Template/VodView?bid=10088471095910000</a>
MBC 통일전망대	962회	2021-06-26	03:00~06:00	각종 식재료에 설탕 대체제 스테비아 사용, 단백초/애국플 재배 강력	<a href="http://playvod.links.com/Template/VodView?bid=10088471097710000">http://playvod.links.com/Template/VodView?bid=10088471097710000</a>
MBC 통일전망대	962회	2021-06-26	12:30~24:40	임소장이 주된 단백질 공급원, 북한 타이소에서 영양식품 섭취 빈도 적음	<a href="http://playvod.links.com/Template/VodView?bid=10088471097710000">http://playvod.links.com/Template/VodView?bid=10088471097710000</a>
MBC 통일전망대	956회	2021-05-15	00:00~06:00	비농사에 필요한 비료 자체 생산 여러 번 실패, 주요 식재료의 가격이 조급씩 인상	<a href="http://playvod.links.com/Template/VodView?bid=10088471096410000">http://playvod.links.com/Template/VodView?bid=10088471096410000</a>
MBC 통일전망대	956회	2021-05-15	06:00~09:30	단백질 공급원으로 토끼 고기 사용	<a href="http://playvod.links.com/Template/VodView?bid=10088471096410000">http://playvod.links.com/Template/VodView?bid=10088471096410000</a>
MBC 통일전망대	942회	2021-01-30	04:00~06:00	북한의 특수성을 고려해 이해해야 할 건강 상식들	<a href="http://playvod.links.com/Template/VodView?bid=10088471095910000">http://playvod.links.com/Template/VodView?bid=10088471095910000</a>
MBC 통일전망대	938회	2021-01-02	23:00~24:00	비료 부족 심각(기름 확보를 위해 전투)	<a href="http://playvod.links.com/Template/VodView?bid=10088471094610000">http://playvod.links.com/Template/VodView?bid=10088471094610000</a>
MBC 통일전망대	934회	2020-12-05	07:30~09:00	시장 불안정으로 인한 물가 폭등으로 조미료, 설탕 가격 5~6배 이상 폭등	<a href="http://playvod.links.com/Template/VodView?bid=10088471094210000">http://playvod.links.com/Template/VodView?bid=10088471094210000</a>
MBC 통일전망대	934회	2020-12-05	10:00~10:30	방역을 이유로 지방 도시 수시로 봉쇄(이로 활동, 소금 생산 중단), 중국의 쌀 지원도 거부	<a href="http://playvod.links.com/Template/VodView?bid=10088471094210000">http://playvod.links.com/Template/VodView?bid=10088471094210000</a>
MBC 통일전망대	934회	2020-12-05	28:00~30:00	북한 여성의 산후 영양식(태만, 메밀, 말죽)	<a href="http://playvod.links.com/Template/VodView?bid=10088471094210000">http://playvod.links.com/Template/VodView?bid=10088471094210000</a>
MBC 통일전망대	933회	2020-11-28	00:00~03:40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 대체식량 확보에 총력	<a href="http://playvod.links.com/Template/VodView?bid=10088471094110000">http://playvod.links.com/Template/VodView?bid=10088471094110000</a>
MBC 통일전망대	930회	2020-11-07	04:30~06:00	식량대응으로 활용이 좋아 감나무를 많이 심음, 과학적 재배법으로 기름채소 자황 좋은	<a href="http://playvod.links.com/Template/VodView?bid=10088471095810000">http://playvod.links.com/Template/VodView?bid=10088471095810000</a>
MBC 통일전망대	925회	2020-09-26	23:30~24:50	부식 생산 증가, 육류 식량 증가(부유층 사이 외식 문화 발달), 고기 요리만 다양성 증가, 오리/양 위주로 공급 및 소비	<a href="http://playvod.links.com/Template/VodView?bid=10088471093310000">http://playvod.links.com/Template/VodView?bid=10088471093310000</a>
MBC 통일전망대	925회	2020-09-26	24:50~30:00	기업마다 양어장 설치(양장 시스템 부실), 옥수수/쌀 수입 감소, 밀가루/콩기름/설탕 수입 증가, 가공식품 종류 다양성 증가	<a href="http://playvod.links.com/Template/VodView?bid=10088471093310000">http://playvod.links.com/Template/VodView?bid=10088471093310000</a>
MBC 통일전망대	924회	2020-09-19	23:00~31:00	태풍으로 인한 식량난, 코로나19로 인해 중국으로부터 곡물수입량 상당량 감소	<a href="http://playvod.links.com/Template/VodView?bid=10088471093210000">http://playvod.links.com/Template/VodView?bid=10088471093210000</a>
MBC 통일전망대	920회	2020-08-22	06:15~08:00	홍수 피해로 인한 곡물 부족	<a href="http://playvod.links.com/Template/VodView?bid=10088471092810000">http://playvod.links.com/Template/VodView?bid=10088471092810000</a>

자료원	자료정보	자료 생성일	해당부분	내용	링크
MBC 통일전망대	916회	2020-07-18	02:50~04:45	평양 시민 생활 보장을 위한 은정차 집중 조영	<a href="https://phvod.infb.com/Template/VoohView?bId=100884710925100000">https://phvod.infb.com/Template/VoohView?bId=100884710925100000</a>
MBC 통일전망대	914회	2020-07-04	20:15~26:30	어블췌 시중뵤 사고 맑음, 남정고기가 잘 없음(있어도 24시간 가동안함), 김치물, 냉정고 없이 췌고기 보관법	<a href="https://phvod.infb.com/Template/VoohView?bId=100884710922100000">https://phvod.infb.com/Template/VoohView?bId=100884710922100000</a>
MBC 통일전망대	914회	2020-07-04	29:00~30:10	즐거는 여름 반전(농쟁이망이), 신갓물김치, 참나물김치	<a href="https://phvod.infb.com/Template/VoohView?bId=100884710922100000">https://phvod.infb.com/Template/VoohView?bId=100884710922100000</a>
MBC 통일전망대	907회	2020-05-16	27:40~28:50	북한 수채 케이크 판매 인기	<a href="https://phvod.infb.com/Template/VoohView?bId=100884710991510000">https://phvod.infb.com/Template/VoohView?bId=100884710991510000</a>
MBC 통일전망대	901회	2020-04-11	20:00~25:00	코로나19 이후 통조림 인기, 포장 반찬 구매 증가, 인기 배달 음식 자랑면/카레	<a href="https://phvod.infb.com/Template/VoohView?bId=100884710991010000">https://phvod.infb.com/Template/VoohView?bId=100884710991010000</a>
MBC 통일전망대	897회	2020-03-07	26:20~27:10	평양시 맵고 짙고 자극적인 반찬 섭취, 국 선호	<a href="https://phvod.infb.com/Template/VoohView?bId=100884710991010000">https://phvod.infb.com/Template/VoohView?bId=100884710991010000</a>
MBC 통일전망대	896회	2020-02-29	07:20~11:10	국경봉쇄로 인한 식량 수급 불안(식량난)	<a href="https://phvod.infb.com/Template/VoohView?bId=100884710991010000">https://phvod.infb.com/Template/VoohView?bId=100884710991010000</a>
MBC 통일전망대	893회	2020-02-08	07:00~09:00	북한 생필품(밀가루, 콩기름, 쌀) 가격 급등세	<a href="https://phvod.infb.com/Template/VoohView?bId=100884710991010000">https://phvod.infb.com/Template/VoohView?bId=100884710991010000</a>
뉴스1	노동신문	2021-10-08		이묘작 작극 권장으로 알곡 생산량 증대 박차	<a href="https://www.news1.kr/articles/?4459753">https://www.news1.kr/articles/?4459753</a>
뉴스1	노동신문	2021-09-22		[데일리 북한] 가을결이 기세 몰려 본격적으로...분발 촉구	<a href="https://www.news1.kr/articles/?4446467">https://www.news1.kr/articles/?4446467</a>
뉴스1	노동신문	2021-09-18		"옥수수 많이 수확하자"...식량난 속 '가을결이' 본격화하는 북한	<a href="https://www.news1.kr/articles/?439007">https://www.news1.kr/articles/?439007</a>
뉴스1	노동신문	2021-09-05		[데일리 북한] 가을 수확철 앞두고 '농사' 역량 집중 주문	<a href="https://www.news1.kr/articles/?422783">https://www.news1.kr/articles/?422783</a>
뉴스1	노동신문	2021-08-29		[노동신문 사전] 빨간 사과가 평양으로...주민들 향한 '과일 복지'	<a href="https://www.news1.kr/articles/?417191">https://www.news1.kr/articles/?417191</a>
뉴스1	노동신문	2021-08-25		"그러니까 통통하지"...북한TV 민화영화, 어린이 비만 경계	<a href="https://www.news1.kr/articles/?412797">https://www.news1.kr/articles/?412797</a>
뉴스1	노동신문	2021-08-07		[식량난에도 상위층은 비만이 문제] 막거리 문제 시급한 북한 '콜과' 고기 바꾸자' 가족 기르기 강조	<a href="https://www.news1.kr/articles/?4096578">https://www.news1.kr/articles/?4096578</a>
뉴스1	노동신문	2021-07-23		노동신문 "고깃배 많이 만들어야"...식량 문제 해결 모색(식량난으로 인해 수산업도 모색)	<a href="https://www.news1.kr/articles/?4881364">https://www.news1.kr/articles/?4881364</a>
뉴스1	노동신문	2021-07-22		오이냉국, 소금물, 시이다"...북한의 폭염 대응 식이요법	<a href="https://www.news1.kr/articles/?4879905">https://www.news1.kr/articles/?4879905</a>
뉴스1	노동신문	2021-07-14		북한 '국물생선 10번째 최자, 작년엔 113만 더 감소' 시인(총합)	<a href="https://www.news1.kr/articles/?4871631">https://www.news1.kr/articles/?4871631</a>
뉴스1	노동신문	2021-07-11		"육이는 최종대 정족"...북한 각지사 '영양식품' 공급 분투	<a href="https://www.news1.kr/articles/?4867664">https://www.news1.kr/articles/?4867664</a>
뉴스1	노동신문	2021-07-05		'식량 문제 긴급' 북한, 국장지대 황남의 '사명' 주문	<a href="https://www.news1.kr/articles/?4860541">https://www.news1.kr/articles/?4860541</a>
뉴스1	노동신문	2021-06-28		[데일리 북한] 식량난 해결에 총력...농업과 양어를 균중적으로	<a href="https://www.news1.kr/articles/?4852986">https://www.news1.kr/articles/?4852986</a>
뉴스1	노동신문	2021-06-28		막거리 문제 해결 급한 북한 '양어를 전근중적으로'	<a href="https://www.news1.kr/articles/?4852859">https://www.news1.kr/articles/?4852859</a>
뉴스1	노동신문	2021-06-28		북한, 농업 성과에 초집중...'국가적 역량 총동원'	<a href="https://www.news1.kr/articles/?4852712">https://www.news1.kr/articles/?4852712</a>

자료원	자료정보	자료 생성일	해당부분	내용	링크
뉴스1	노동신문	2021-06-25		하반기 식량 문제 강조한 북한, 각지 농업 성과 '선진진'	<a href="https://www.news1.kr/articles/74849799">https://www.news1.kr/articles/74849799</a>
뉴스1	노동신문	2021-06-15		농업 소식 꼼꼼히 전하는 북한 '쌀도 담을 밭을 일님 언어야'	<a href="https://www.news1.kr/articles/74839545">https://www.news1.kr/articles/74839545</a>
뉴스1	노동신문	2021-06-13		공산품 개발에 힘쓰는 북한... '김 가공제품 15배 늘어' 선진 (가공식품의 종류와 양 증가)	<a href="https://www.news1.kr/articles/74836887">https://www.news1.kr/articles/74836887</a>
뉴스1	노동신문	2020-10-06		남씨 예비하며 곡식의 쥐기 수확 강조	<a href="https://www.news1.kr/articles/74453242">https://www.news1.kr/articles/74453242</a>
뉴스1	노동신문	2020-09-27		연일 '황금들녘' 조명하는 북한... '가을권이' 박차로 성과 강조	<a href="https://www.news1.kr/articles/74444112">https://www.news1.kr/articles/74444112</a>
자유아시아방송	노동신문	2021-09-20		"북, 올해 농사 결속으로, '식량문제 해결의 돌파구' 마련 촉구" (가장 절박한 과업은 농사를 잘 지어 인민들의 식량문제 해결)	<a href="https://www.rfi.org/finance/weekly_prog/amf/reiew-rosing/cor-ri-09202021090846.html">https://www.rfi.org/finance/weekly_prog/amf/reiew-rosing/cor-ri-09202021090846.html</a>
자유아시아방송	주민 소식통	2021-07-12		북, 여맹 조직원들에 돼지고기 바치라 강요(평양시민도 먹기 힘들어진 돼지고기)	<a href="https://www.rfi.org/korean/fin_focus/nc-1-e-07122021090511.html">https://www.rfi.org/korean/fin_focus/nc-1-e-07122021090511.html</a>
자유아시아방송	주민 소식통	2021-06-03		북, 부화에 실패한 달걀을 영양보약으로 판매	<a href="https://www.rfi.org/korean/fin_focus/nc-1-m-06032021088545.html">https://www.rfi.org/korean/fin_focus/nc-1-m-06032021088545.html</a>
자유아시아방송	주민 소식통	2021-05-21		"주민 이동통제로 북한지역 간 물가 큰 차이"	<a href="https://www.rfi.org/korean/fin_focus/nc-1-m-052120210883029.html">https://www.rfi.org/korean/fin_focus/nc-1-m-052120210883029.html</a>
자유아시아방송	주민 소식통	2021-05-19		북, 실패로 끝난 토끼사육 재차 강조	<a href="https://www.rfi.org/finance/fin_focus/nc-1-m-05192021088514.html">https://www.rfi.org/finance/fin_focus/nc-1-m-05192021088514.html</a>
자유아시아방송	주민 소식통	2021-05-07		북, 퇴비생산 위해 농민에 소변 바치라 지시	<a href="https://www.rfi.org/korean/fin_focus/nc-1-p-05072021082888.html">https://www.rfi.org/korean/fin_focus/nc-1-p-05072021082888.html</a>
자유아시아방송	주민 소식통	2021-03-01		[북한의 코로나 그림자] ①자취 감춘 수입상품(코로나 전후 10대 품목 가격 변동표)	<a href="https://www.rfi.org/korean/fin_focus/nc-1-m-03012021090004.html">https://www.rfi.org/korean/fin_focus/nc-1-m-03012021090004.html</a>
자유아시아방송	주민 소식통	2021-02-24		북, 식품가격 급등으로 식당 음식값 크게 올라	<a href="https://www.rfi.org/korean/fin_focus/nc-1-e-02242021092659.html">https://www.rfi.org/korean/fin_focus/nc-1-e-02242021092659.html</a>
자유아시아방송	주민 소식통	2021-01-13		북, 코로나로 아로금지해 수산물가격 급등	<a href="https://www.rfi.org/finance/fin_focus/nc-1-m-011320210883000.html">https://www.rfi.org/finance/fin_focus/nc-1-m-011320210883000.html</a>
자유아시아방송	주민 소식통	2020-12-18		북, 도루북 풍어로 주민 식량난에 도움	<a href="https://www.rfi.org/korean/fin_focus/nc-1-e-12192020862242.html">https://www.rfi.org/korean/fin_focus/nc-1-e-12192020862242.html</a>
자유아시아방송	노동신문	2020-11-25		"북, 농업근로자 '내년 농사차비에 전력' 촉구"(쌀 생산과 공급 실패)	<a href="https://www.rfi.org/korean/weekly_prog/amf/reiew-rosing/cor-ri-11252020091557.html">https://www.rfi.org/korean/weekly_prog/amf/reiew-rosing/cor-ri-11252020091557.html</a>
자유아시아방송	주민 소식통	2020-11-11		북 당국의 식량값: 강제동결로 식량사재기 현상	<a href="https://www.rfi.org/korean/fin_focus/nc-1-e-1111202007310.html">https://www.rfi.org/korean/fin_focus/nc-1-e-1111202007310.html</a>
자유아시아방송	주민 소식통	2020-11-10		북, 식량부족 해결 위해 식량절약투쟁 시작 (관용상제에 알곡을 재로로 상차림 금지, 밀주 제조 금지)	<a href="https://www.rfi.org/korean/fin_focus/nc-1-m-11102020071036.html">https://www.rfi.org/korean/fin_focus/nc-1-m-11102020071036.html</a>
자유아시아방송	주민 소식통	2020-11-02		북 주민, 채소 품귀로 감장 임두 못 내	<a href="https://www.rfi.org/finance/fin_focus/nc-1-e-1102202007014.html">https://www.rfi.org/finance/fin_focus/nc-1-e-1102202007014.html</a>
자유아시아방송	노동신문	2020-07-16		평양 주민 사료값은 '빙수의 대변신...'쌀 대신 수박·딸기"	<a href="https://www.news1.kr/articles/73966594">https://www.news1.kr/articles/73966594</a>

### [부록 3] 발틱 3국 체제 전환 관계자 인터뷰의 주요 내용

#### 1. 에스토니아 - Professor Raul Eamets (University of Tartu, Estonia) (2021.10.14.)

Q1. 체제전환 이후 정치(서구식 민주주의, 노멘클라투라 청산 등), 경제(경제개방성, 국제기구의 영향, 경제불평등, 지하경제 등), 사회(빈곤율, 출산율, 사회적 신뢰 등) 부문에서 어떠한 변화를 겪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A1. 90년대 초반(개혁 직후) 경제 변화에 대해 논의 가능. 에스토니아는 다양한 정책 선택을 하였고 이는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다른 특별한(unique) 방식을 선택함. 첫째, 에스토니아는 통화지원제도(currency support system)를 통화제도(monetary system)의 일환으로 도입하였고, 이는 영국의 식민지인 홍콩과 비슷하게 통화지원제도를 적용함. 이 시기 이 방법은 다소 특이한 방식이었는데 통화지원제도란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수립할 권한이 없음. 왜냐하면 환율은 고정되어있고(exchange rate has been fixed), 통화공급이 중앙은행(central bank reserve)에 의해 결정됨(money supply is determined by central bank reserve). 둘째, 국가 예산수지를 맞추춤(we introduced balanced state budget). 에스토니아는 국가 부채가 없고 정부 부채가 아주 낮는데 이는 예산 수지를 맞추기 때문임. 에스토니아는 세관 및 관세가 없고 아주 낮고 균일한 조세제도인 개방적 국제경제정책을 갖고있어 매우 독특하며 비례적인 소득세를 적용함(we have very open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which we have no custom, no tariff, very low & flat tax system which is very unique as well to have proportional in-

come tax). 이는 사회정책적 관점에서는 이는 정부가 재분배를 위한 방법이 많지 않다는 것을 의미함: 세금이 낮다는 것은 재분배할 방법이 적다는 것을 의미. 균일세 제도(tax system)로 인해 초래된 결과 중 하나로 나타난 것이 에스토니아의 높은 불평등이다. 낮고 균일한 조세제도를 갖고 있다면 재분배할 방법이 없어 사람간 불평등이 증가하고 에스토니아의 지니계수가 높음. 통화지원제도(currency support system), 국가 예산 수지 맞춤(balanced state budget), 개방형 경제(open economy), 균일한 조세제도(flat tax system), 농촌에 대한 지원금 부재(no subsidies to agriculture) 등이 에스토니아의 경제가 아주 진보적(liberal)이게하고 외부요인으로 인한 영향에 노출됨. → 이러한 방식은 동시대에 다른 동유럽국가에서 찾아볼 수 없었음. 또한 에스토니아는 아주 빠르게 민영화(privatization)를 도입함. 독일의 민영화 방식을 도입하였고, 이러한 정책의 조합(combination of policies)이 에스토니아 성장을 성공시킴. 독립시기(90년대 초반)의 경제 발전에 기여함. 에스토니아는 소득수준, 임금, 및 기타 측면에서 탈사회주의(post-socialist) 국가 중 가장 성공적인 국가 중 하나이다(Estonia is one of the most successful country among post-socialist countries in terms of income level and wages and other things). 처음에는(체제전환/독립 이후) 어려웠지만 오늘날의 결과는 비교적 좋다.

Q2. 체제 전환 이후 어떠한 사회문제(빈곤, 실업, 연금, 건강, 보육, 돌봄 등)가 발생하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대적으로 심각한 사회문제와 덜 심각한 사회문제가 무엇이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A2. 에스토니아에 실업보험 및 연금 개혁이 비교적 늦게 도입됨. 90년대에는 부과방식(pay-as-you-go system) 연금제도만 있었고, 아주

낮고 엄격한 실업급여(very low and strict unemployment benefit)이 있었음. 실업급여는 어느 보험제도(insurance policy)와도 연관되지 않음. 이에 실업보험(unemployment insurance)은 2000년대 초반에서야 도입됨. EU 국가에서는 실업보험이 일반적이지만, 에스토니아에서는 아직 아주 엄격하며(실업보험 기간 등에 대해), 지급조건 등이 까다로움. 3층 연금제도(3-pillar pension system)는 2003년에 도입되고 2020년에 중단됨. → 3층 연금제도는 17년 동안만 존재함.

Q3. 체제 전환 이후 발생한 사회문제에 대한 대응으로서 어떠한 사회복지정책을 시행하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대표할만한 사회복지정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A3. 에스토니아의 사회복지정책을 하나로 통합할 수 없음. 이는 다양한 사회복지정책의 복합적인 부분( combination of different social policy)임.

[노동시장정책] 소극적 노동시장정책(passive labor market policy)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y)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매우 낮았음. 에스토니아를 다른 유럽국가와 비교하였을 때, 에스토니아는 노동시장정책에 아주 적은 돈(예산)을 들였으며, 이는 아주 한정되고 관대하지 않음. 대부분의 노동시장정책의 변화는 2000년대에 들어와서 생겼고, 90년대에는 변화 아주 적음. 국가실업급여 정도이며 몇몇 훈련(trianing)정도임. 에스토니아의 대부분의 노동시장정책은 EU를 가입하면서 생겼는데 이는 EU의 자금지원(fund)가 가능하게하였고, 이 자금지원이 노동시장정책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 및 방법을 제시하게함. 그래서 에스토니아의 90년대 노동시장정책은 아주 빈약함.

[연금] 연금도 비슷함. 90년대에는 3층 연금제도(3-pillar pension system)이 없고 부과방식의 연금만 있었음. 이에 연금수준이 아주 낮고 1종류의 연금제도만 있었음.

[아동] 아동 관련하여서도 한가지의 수당만 있었음. 아동수당 수준이 아주 낮았고, 이 또한 2003년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

[이민] 이민 관련하여서는 90년대에는 이민 정책이라고 할것이 없었음 이는 단순한데, 당시 에스토니아는 사람들이 이주하러 오는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로 이주를 하는 나라였음. 이민정책이 필요한 때는 사람들이 해당 국가로 이주를 하게될 때에 이민정책을 세우게 됨. 90년대 에스토니아는 사람들이 에스토니아를 떠나는 시기였고, 사람들이 에스토니아로 들어오게된 시기는 2000년이고, 에스토니아가 EU가입 이후 이주가 더욱 자유로왔음(more free movement). 90년대의 이민은 에스토니아가 아주 많은 사람들을 잃었는데, 이 사람들은 대부분 서쪽이 아닌 동쪽으로 이주함. 이에 대한 주된 이유는 러시아 군이 1994년에 떠나면서 소련군대(Soviet Troops) 및 관련 군 관련 기업(military related enterprises)들이 함께 에스토니아를 떠났고, 지역이 맞다면 약 67,000명이 1993년~1994년에 러시아로 이주함. 에스토니아는 사람이 이주하러오는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로 이주하는 시기였기에, 90년대의 이민정책을 논할 수 없음.

Q4. 체제전환의 충격으로 출생률이 낮아졌습니다.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실시한 정책들은 무엇이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A4. 대부분의 제도의 수단이 2000년대에 도입됨. 2003년에 “부모임금(Parent salary)”이 도입되고 이의 대부분은 여성에게 지급되었는데, 이는 1.5년 동안 집에 있게 되는 여성에게 그 전에 받던 임금을 받게되는 것(who stood at home for 1.5 years got the pre-

vious salary). 이는 비교적 큰 인센티브였는데 특히 고임금여성 (high paid women)이 아이를 출산하고 집에 있는 기간동안 1.5년간 출산 전 임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마지막은 2017년 도입된 셋째아동수당(3rd child allowance)임. 이는 셋째 아이에 대해서 아동수당이 급격히 증가함. 90년대에는 급격한 출산율 감소가 있었는데, 이는 경제적 이유 때문임. 90년대 이전(1988-1989) 평균 출산율은 1년에 24,000~25,000명이었는데, 1992년~1993년 이후 반이 줄어 약 1년에 12,000~13,000명 수준이었음.

Q5. 1) 체제전환 이후 나타났던 의료시설의 부족(노인 요양 및 의료시설 포함)을 어떤 정책으로 대처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2) 체제전환 이후 알코올 소비량이 늘어났습니다. 알코올 소비량의 증가 배경은 무엇이며,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3) 발틱 3국은 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유럽연합 국가들 중 최상위권입니다. 그 배경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A5. 높은 알코올 소비 및 많은 흡연과 같이 건강하지 않은 삶 방식은 심장 질환 및 다른 질병의 원인이 됨. 이러한 부분은 에스토니아 많은 인구의 문제이기도 한데, 천천히 변화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communist 국가들 같이 알코올 소비량이 높고 특히 이는 90년대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임. → 실업률이 높고, 사회구조 변화가 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혼란의 시기였음. 이에 삶을 조금이라도 좋게 만들기 위해 알코올을 찾게되고 이 시기 알코올 소비가 높았음. 에스토니아의 알코올 소비는 아직도 높지만 그래도 많이 개선됨. 오늘날은 다른 문제가 있는데 젊은 세대에서는 알코올이 아닌 마약으로 문제가 바뀜.

Q6. 6. 서유럽 등으로 이주한 젊은 세대들이 다시 본국으로 얼마나 돌아오고 있는지,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유인하는 정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A6. 2015년 처음으로 이주 균형(migration balance)이 상승(positive) 됨. 2015년부터 에스토니아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에스토니아를 떠나는 사람들 보다 많게 됨. 이주자를 살펴보면 50%는 귀환이주(return migration)임. 이 사람들은 에스토니아를 떠났다가 다시 에스토니아로 돌아온 사람임. 숫자로 비교해 보았을 때, 90년대의 총 인구유출(outflow)은 약 150,000명인데 이는 에스토니아 전체 인구를 고려하였을 때 상당히 큰 숫자임. 유출인구 중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앞서 말한바와 같이 약 60,000~70,000명은 러시아(동쪽)으로 이주한 전 소련사람들로 돌아오지 않음. 대부분의 귀환이주(return migration)은 핀란드로부터 왔는데, 90년대로 보면 -150,000명으로 유출(outflow)이고, 이 시기 유입(inflow)은 거의 없음. 2000년과 2011년의 인구 센서스(population census)는 -75,000명으로 이중 30,000명 감소분은 출산율 감소로 인한 부분이며, 나머지 45,000명 감소는 타국으로 이주한 인구로 인한 감소임. 많은 사회주의자들은 사람들은 근처 북유럽(스칸디나비아)국가로 이주함 특히 핀란드로 이주함. 이에 2015년 이후를 살펴보면 핀란드로 이주한 많은 사회주의자들이 다시 에스토니아로 돌아오고, 다른 EU국가에서도 돌아옴. 이에 에스토니아로 이주하는 인구의 50%는 귀환이주(return migration)이고, 25%는 구 소련(formal soviet union) 국가 중 특히 우크라이나(Ukraine) 및 러시아(Russia)에서 이주하며, 20%는 EU에서 오고, 5%는 구 소련 국가도 아니고 EU도 아닌 제3국에서의 이주임. 이에 오늘날에는 귀환이주가 있지만, 90년대에는 볼 수 없었음.

Q 7. CIS가 아닌 EU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A 7. 이는 당연한 선택이었는데, 에스토니아는 20-30년대에 독립하였고, 많은 발틱 국가는 20세기 초반에 독립함. 하지만 1940년에 발틱 국가는 다시 러시아 및 소련에 점령되고, 전쟁 다시 발생, 이후 소련이 전쟁에 승리하면서 발틱 국가는 다시 소련에 병합됨. 이에 에스토니아의 선택은 당연한 이유가 다시 독립될 기회가 있다면 에스토니아의 경제 및 사회문화를 보면 동쪽(East) 문화보다는 EU문화에 더욱 가까움. 또한 이러한 내용은 에스토니아 사람들 사이에서도 어느 쪽을 선택하는지에 대한 더 이상의 논의 필요없는 부분임. 국민투표(referendum)에서도 과반수 이상이 EU선택 의견을 나타냄. 러시아 소수민족(Russian minority)은 구소련을 선택하는 것을 선호하였으나, 강한 의견(dominating opinion)은 EU에 가입하는 의견이었으며, 러시아인 대 에스토니아인의 비율은 30 대 70 이었음. 에스토니아 사람들은 자신들을 유럽국의 소속이라고 생각하지 동쪽(East)국가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지 않음.

Q 8. 발틱 3국의 복지제도는 사회주의를 경험하였던 국가들과 비교할 때,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비셰그라드, CIS, 유고슬라비아 등)

A 8. 다른 발틱 국가의 복지정책에 대해 잘 알지는 못함. 비셰그라드 국가와 발틱국을 비교해보면 에스토니아는 쇼크테라피(shock therapy)를 사용하는데 우리는 변화를 빠르게 진행함.(예) 전체 민간화 등, total privatization and so on.) 반면에 폴란드를 제외한 비셰그라드 국가는 경제구조 및 사회정책에서 변화가 천천히 이루어진다(moderate change). 예를들어 헝가리는 개혁을 이미 80년대 초반부터 시작함. 에스토니아의 변화/개혁은 비교적 빠르고 급진적임.

Q 9. 발틱 3국간의 경제정책 또는 사회정책에 관한 협력이나 협약 등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발틱 3국은 독립과정에서도 3국간의 연대가 중요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1989년 5월에 결성된 발틱의회(Baltic Asembly)가 같은 해 8월에 발틱의 길(Baltic way)이라고 불리는 평화적 저항 운동을 성사시키는 것이라든지, 3국간의 연대를 통한 EU가입과 NATO가입을 위한 발틱해 이사회(BBS: Council of Baltic Sea States) 결성 등이 있습니다)

A 9. 몇몇 협력 및 협약이 있음. 언급된바와 같이 발틱의회(Baltic Assembly) 및 발틱국가의 대통령 미팅 등 종종 있음. 그러나 흥미로운 부분은 이웃국가 비교 및 협력을 논의할 때 보면, 협력 및 협약을 할 때 이웃 국가끼리 문제없이 가능하지만, 특히 90년대 보면 외국인 본투자, 국제기업의 투자를 원할때에는 서로 경쟁자(competitor)가 됨. 발틱 3국 모두 EU가입국이고 EU내에서의 협력은 모두 있지만, 외부투자 등의 부분에서는 경쟁자가 됨.

Q 10. 체제전환 이후 사회를 주도하는 주된 세력이 누구(노멘클라투라, 시민단체, 노동조합, 정부관료 등)이며, 그 배경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A 10. 정치정당이 변화(개혁)을 가져옴. 에스토니아에서는 기업 관리자 뿐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기업을 구매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함(It means it was not privatized to the company managers & firms, but everybody had an access to buy the firm.) 이 경우, 에스토니아는 러시아 및 라트비아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예방(피하다)할 수 있음. 이를 올리가드라 하는데, 올리가드는 독자적으로 경제적 및 정치적 권력이 있는 것을 뜻함. 경제력과 정치력을 합치는 것임. 에스토니아는 올리가드가 없음. 이 뜻은 경제력과 정치력 별도임. 정당의 자유선거(Free election) 진행. 이사마(Isamaa) 정당의

경우 정치개혁을 이끌었고, 대중으로부터 많은 지지 얻었으며 젊은 정당임. 시민단체 및 NGO는 90년대 약했고, 노동조합은 90년대에 도 약하고 아직도 약함. 노멘클라투라는 몇몇 전 고위급 관료(high officials)는 사업을 시작하고 성공적이었지만 이에 정치적인 영향 없음. → 경제적 권력과 정치적 권력이 공존하지 않음. 에스토니아는 민주주의가 당연한(정상적인) 부분이었으며, 특별한 점은 공산주의당(communist party)는 권력을 단번에 완전히 잃음. 구소련 국가를 보면 어떤 형태의 공산주의당을 유지하나 에스토니아의 경우 공산주의당 없음. 에스토니아의 정치 상황(political landscape)을 살펴보면 우익(right-handed) 또는 중도(middle)이며 좌익(left) 또는 공산주의 성향(communist view) 없음. 이러한 정치적 상황은 사회정책과도 중요하게 맞물리는데, 좌익 관점이라면 사회정책이 필요없음. 우익의 시장기반 관점인 경우 이에 따른 사회정책 필요. 사회정책이 스칸디나비아 국가같이 자비롭지 않음.

Q 11. 발틱 3국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이 체제전환 된다면, 어떠한 사회문제가 예상되며, 그 해결을 위해 어떠한 사회복지정책을 준비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A 11. 북한의 체제가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에 따라 다름 → 혁명적일지 혹은 서서히 이루어질지. 북한 체제변화는 마치 러시아의 체제변화를 논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봄. 예를들어 푸틴이 자발적으로 본인의 권력을 버릴 것인가? 아닐 것임. 그렇다면 북한의 지도자가 자신의 권력을 자발적으로 내려놓을 것인가? 아닐 것 이라 생각함. 북한의 체제변화가 평화롭게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음. 체제전환을 위해 어떠한 권력/힘(power)이 필요할 텐데 이 권력이 민주주의적(democratic)인 힘일지 군사기반 권력일지(military based pow-

er)일지. 만약 체제전환이 젊은 세대가 기성세대를 밀어내는 방식이라면 에스토니아의 경험이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의미 없음.

Q 12. 에스토니아 정부에서 사회보험기금을 독립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국가 예산으로 편입한 배경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보험기금을 국가 예산으로 편입한다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지, 사회보험 제도 운영에서 부정적 영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A 12. 예산 운영방식 변경에 대해 깊은 경제적 의미 있는 것 아니라고 생각됨. 그저 예산구조를 변경하여 예산의 사용을 보여주는 것 뿐이라고 생각함. 예산지출에 대해 영향이 없고 그저 기술적 이슈(technical issue)이지 예산 기금 또는 예산의 사용처에 의미 없다고 봄. 전체 정부 예산 주머니이지 사회보험기금 자체에 변화 없다고 봄. 다만, 문제로 볼 수 있는 것은 현재 사회조세제도(social tax system)가 더 이상 충분하지 않음. 사회보험기금 또는 사회비용을 어떻게 충당할지가 문제임. 이 기금의 수입이 무엇인지가 중요하지 예산이 독립적인지 혹은 정부예산에 편입되었는지 등 어디에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음(It is issue that where the income is coming. Where it is located whether independent or inside of general budget does not matter at all for me). 사회보험기금의 자원이 문제인데 인구 감소로 장기적으로 보면 사회조세 또한 감소할 예정.

Q 13. 3층 다층노후소득보장 체계를 제도화 한 이후에도, 연금 급여액이 적어 노후빈곤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금액이 왜 이렇게 낮은지 그리고 연금의 노후빈곤문제 해결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A 13. 3층 다층노후소득보장이 현재는 변경됨. 2003년 도입된 때랑 다

름. 문제는 정치적 영향으로 인해 연금 개혁 필요가 명확해짐. 문제는 초기부터 두 번째 층에서의 수익률을 보면 OECD 국가중에서 가장 낮았음. 에스토니아의 연금기금의 수익률 아주 낮음. 이 이유중 하나로는 행정비용이 굉장히 높고 연금기금을 투자하는 선택지가 한정적임. 기금을 주식이나 국제적(stocks & international share)으로 투자할 수 없었음. → 결과로 기금에 대한 아주 낮은 수익률 나옴. 이에 따라 정권의 의지로 개혁 의견이 있었고 첫 번째 층을 통해 연금을 지급하고 두 번째 층은 자발적 기여로 만드는 의견 냄. 150,000명 사람들이 연금 수령을 하였고, 1인당 평균 7,000-8,000유로로 전체 약 1,300,000,000유로가 연금기금에서 인출됨. 빈곤율을 보면 아동 및 실업자의 빈곤이 높음. 노인빈곤이 높지 않음. 이는 소득분배를 연령 코호트로 보았을 때임. 따라서 빈곤문제는 연금수급자의 문제가 아닌 오히려 젊은 가족의 문제라고 봄.

- Q 14. 2016년 말 에스토니아의 진보적 정당이 정권이 집권하였습니다. 12년간 집권했던 신자유주의개혁당(neoliberal reform party) 대신 중도좌파당(the Center party)의 집권 뒤, 복지재정 또는 복지제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A 14. 이사마 정당(Isamaa party)은 우측 보수(right-wing conservative party) 정당, 에크레 정당은 보수 국가주의(conservative nationalist party) 정당-우측 대중주의당이라고도 불림(right-wing populist party), 중앙당(central party)으로 다른 우측 정당보다는 좌측임. 2016년 이후 “진보적 정당”을 말하는 것이라면 에크레 정당을 의미하는 것 같음. 2016년에 강한 정책변화가 있었음. ① 연금개혁 - 2번째 층의 자발적 기여, ② 이 정당은 이사마 정당과 거의 동일한데 세 번째 아동을 위한 아동수당(이사마 정당이 도

입) 또한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짐. ③ 정치적 환경 변화로 정부 예산에 대해 수지를 맞추지 않아도 됨(no balance budget). → 화폐의 가치 낮고, 쉽고 저렴하게 대출(loan)을 받을 수 있으며, 에스토니아 정부 국채가 낮아 삶을 조금 더 개선시키기 위해 정부가 더 많은 국채를 사용해 인프라 구축 등 할 수 있도록 함. 결국 이에, 그동안 개혁을 추진한 국가 예산 수지를 꼭 맞추고, 세금이 낮아야 하던 정당과 아주 다르게 조금 더 공격적인(aggresive) 방식으로 경제 및 사회 이슈에 지출이 필요하다면 지출할 수 있도록 함.

Q 15. 에스토니아의 외국기업 유무는 어떠한가? 외국기업과 자국기업의 소득, 수당(benefit)의 격차는 있는지.

A 15. 에스토니아 내 외국기업이 있는데 이 이유는 노동임금이 스칸디나비아 국가에 비해 낮기 때문임. 그러나 지금은 지난 10~15년에 비해 임금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낮은 비용에 익숙했던 많은 대기업들이 에스토니아를 떠남. 에스토니아에서의 가격경쟁력이 없어져 오히려 우크라이나 혹은 더 동쪽 국가, 중국, 베트남 등으로 감. 이에 현재는 많은 외국기업이 에스토니아 떠남. 그러나 에스토니아에 아직 남아있는 외국기업은 본국에서 적용하는 수준(임금, 수당)으로 에스토니아에도 적용하여 운영. 임금은 외국기업이 조금 더 높는데 이는 업무자체가 전문가 중심 업무임(expert oriented). 그러나 비슷한 수준의 사회수당이 적용되는지는 잘 모르겠음. 왜냐하면 외국기업이 에스토니아로 온 이유는 본국에서 이러한 사회수당을 피하기 위함(예 스웨덴에서 사회수당 지급하지 않기 위해 에스토니아에서 운영→비용절감 위해). 1990~2000년대 에스토니아가 헝가리 다음으로 FTI 외국자본투자가 높은 국가였던 것으로 알고있음. 또한 안정적인 경제정책으로 인해(환율 등) 외국기업들에 유리함. 추가로 금융제도

(banking system)를 보면 에스토니아의 95% 금융제도가 스웨덴과 핀란드것임. 대부분의 모든 것이 외국기업임. 그러나 어쨌든 모든 것을 저렴하게 유지하기 위해 기업들이 에스토니아를 떠나고 있음.

Q 16. 노동조합의 조합 조직 정도와 영향력은 강한가?

A 16. 에스토니아의 노동조합은 약함. 1990년대 후반~2000년대 보면 노동조합이 강한 영역(sectors) 또는 산업(industries)이 아주 적음. 공공에서는 보건의료와 교육부분이 강한데, 교사 노동조합이 비교적 강함. 그리고 에너지 생산(energy production), 광업(mining), 운송(transportation) 분야의 노동조합 강함. 몇몇 영역은 노동조합 자체가 없는 분야도 있음(예를 들어 건설 분야). 에스토니아의 노동조합밀도(union density)가 EU국 중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임. 단체협약 수준도 비교적 아주 낮은 수준임. 대부분의 협상은 기업 수준(firm level)에서 이루어짐. 현재 상황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때때로 단체협약이 존재했던 분야로는 운송(transportation)은 산업 수준에서(industry level) 존재했었고, 의료(healthcare) 및 교사(teacher)은 국가 수준(state level)에서 존재했었음.

## 2. 라트비아 – Professor Olga Rajevska (University of Latvia) (2021.10.07.)

Q 1. 체제전환 이후 정치(서구식 민주주의, 노멘클라투라 청산 등), 경제(경제개방성, 국제기구의 영향, 경제불평등, 지하경제 등), 사회(빈곤율, 출산율, 사회적 신뢰 등) 부문에서 어떠한 변화를 겪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A 1. 정치변화 – 노멘클라투라 청산은 아님. 노멘클라투라는 국가주의적

중심인 사람들로 독립기간에 권력이 있던 사람들임. 또한 노멘클라투라였던 사람들은 이 기간에 사업도 변창함. → 이러한 요인들이 결국 높은 수준의 부패를 초래함.

서구식 민주주의: 1990년대를 지배하던 엘리트들은 두 분류로 나뉘는데 노멘클라투라였던 사람들(former Nomenclatura)과 라트비아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people from exile) - 대부분 미국 및 캐나다에서 돌아옴. 라트비아 사람들이 망명(exile)했던 국가: 미국, 캐나다, 스웨덴, 호주, 뉴질랜드 등 (세계2차대전 기간 동안 혹은 그 이후 떠남). 미국&캐나다로 떠났다가 온 사람들은 진보적(liberal)이고 자유시장중심(free-market oriented) 기반으로 이들이 라트비아 정치&사회에 권력(power) 있을 때 사회경제적으로 큰 변화 겪음. 미국 및 캐나다로부터의 강한 영향은 국제통화기금 &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기구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아주 진보적인 정치 사상을 지지하는 귀환 이주를 통해서도 있음. 개방경제 공표(declare) 이후 IMF & WB가 아주 중요했음. 왜냐하면 그들이 개혁을 위한 재정지원함(providing money) → 그들이 개혁을 형성함(shaped the reform). 재정지원과 함께 지원된 자문단 및 위원회 등은 개혁을 위해 취해야할 정치경제사회 분야에서의 몇몇 특정 발전 단계를 명시함. 경제적으로 가장 큰 개혁은 dismantling economic enterprises → nationalist들, 큰 공장형 기업을 가진 러시아어 사용하는 고용주(occupants)로 불리는 사람들이 개혁으로 인해 사업을 닫게 되면서 라트비아에서 떠나게 됨. 이는 라트비아를 더욱 라트비아로 만들기 위함. 결국 크고 성공한 경제적 기업/사업은 모두 경쟁은 가능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원이 없어짐에 따라 없어지고(dis-mantle) 의도적으로 탈산업화(de-industrialized)하게 됨. → 이러

한 과정의 배경은 의도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라트비아를 떠나게 만들기 위함. 90년대 초반에 러시아어 사용 인구에 대한 대규모 이민이 있었음. 이들의 대부분의 목적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벨로루시아)로 떠나게 됨. 라트비아에서 직장을 찾기 어려웠고, 몇 년간 시민권을 신청할 자격이 없어졌고(시민권 관련 법이 없었고, 시민권을 취득할 방법이 없었음), 정치적으로 힘이 없고, 경제적 기회가 부재하여 결국 많은 사람들이 라트비아를 떠남. 또한 소련군(soviet army) 가족들도 이민을 하게 됨. 전체 이민자 중 소련군 관련 가족 및 군 보다는 사업 및 경제에 종사했던 사람들의 비중이 더 높음.

경제불평등: 정치 엘리트들의 관점으로는 죄(sin)으로 여겨지지 않고 오히려 긍정적인 자극으로 새로운 기업을 구축하는 등의 관점으로 경제 불평등이 장기간 지속되고 현재도 불평등이 지속되며 EU회원국 중 소득불평등 및 자산불평등이 가장 높은 국가중 하나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언급되지 않음. → 왜냐하면 이는 평등주의에서부터 멀어지는 강한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 소련 시대 때, 평등주의로 인해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불평등이 보이지 않는. → 따라서 불평등 증가가 긍정적으로 인식되고, 여전히 몇몇 정치 엘리트들에게는 불평등이 라트비아의 경제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걸 이해하지 못함.

지하경제: 기존체제 무너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구직을 하였고, 아직 법률체도가 설립되지 않아 일반 경제보다 회색경제(grey economy) / 지하경제 발전이 될 수 밖에 없었음. 이러한 비과세의 회색경제 외에도 범죄 관련 부분도 넘쳐남.

사회보험: 사회보험 기반의 사회정책, 사회부조, 사회지원제도 등 구조화됨. 소련(Soviet) 시대에는 유니테리언(unitarian) 체제로 적용됨.

이러한 unitarian이 아직도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의료보험에는 적용되어 현재까지 의료보험은 사회보험 기반이 아님. 의료 이외 사회 지원제도인 실업, 장애, 노령, 모성&부성 관련 제도는 사회보험체계 기반임.

빈곤: 급격한 빈곤

출산율: 90년대 후반(97~99년) 출산율 증가. 근데 독립 이후 경제적 빈곤(economic impoverishment)과 함께 출산율 급격히 저하. 지속적으로 줄어들었고, 지난 10년부터 가족정책이 활발하게 됨. 아동수당, 모성수당(child benefit, maternity benefit)이 증가하는 등 정부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느낌. 이로 인해 다시 출산율 조금씩 오르기 시작하여 현재는 심각한 상황은 아님. 그러나 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가족문제는 개인적인 문제라고 인지하고 국가 지원 및 고민 없었음.

신뢰: 처음 독립 시점에서는 본인의 국가가 생긴다는 점에서 신뢰가 높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낮아짐

혁신: 어떤 분야(경제, 정치, 고용, 가족 등)에 대한 혁신을 물어보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분야에서 모두에게 변화가 있었고, 이 시기 모든 것이 스트레스가 많은(stressful) 시기임.

Q 1-2. 사회개혁(Social revolution) 이전에 비스마르크형 연금이 있었는지?

A 1-2. 첫 번째 독립국가 기간(1920-1940) : 연금제도는 비스마르크 방식에 기반함, 그러나 라트비아 인구가 이때는 대부분 시골지역 인구였음(rural area population) → 낮은 산업화로 농부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이 연금제도로 보장되는 인구 많지 않았음. 소련이 붕괴(Soviet Union collapsed) 된 이후 경제 영역이 많이 체계화(or-

ganized)되고 대상인구 확대 되었음. 또한 전쟁 전의 연금제도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새로운 연금제도가 도입됨.

1st pension law(연금법) = new pension law 1991년 도입됨(USSR로 해방되기 전).

새로운 연금법은 USSR 전 시대와 비슷하였지만 더 관대(generous)함 → 그 이유는 독립하고 경제적으로 더 발전될 것이라 생각하여 연금 확대를 추진. 이는 소비에트와 동일한 연금체제로 defined benefit과 낮은 수급연령임(여성 55세, 남성 60세). 그러나 1년도 안되어 이 법이 아주 비현실적이라고 깨닫게 됨. 또한 hyperinflation 이 1990년대 초반에 있었음. 연금은 두 종류로 정액연금(flat pension) & 일정 금액을 고려한 부분이 있는데, NDC 도입 배경은 연금 flat하게 하려는 것이 아닌 연금이 기여금에 비례하도록 하여 세금내고 다양한 경제에서 일하고, 급여 신고하여 총 급여에서 기여금이 나타나도록 함.

Q 2. 체체전환 이후 어떠한 사회문제(빈곤, 실업, 연금, 건강, 보육, 돌봄 등)가 발생하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대적으로 심각한 사회문제와 덜 심각한 사회문제가 무엇이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A 2. 모든 사회문제가 나타남. 90년대초반 실업률 20%로 아주 높았음. 연금수령액 인플레이션으로 아주 높았고 그래서 낮추는 방법 적용하였고 90년대 보건의료문제 해결하려 노력하였고 여러 개혁을 시도하였지만 아무것도 안됐으며, 아직도 문제임: 그중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의료진 부족(의사, 특히 간호사들의 임금이 낮아서 문제고 그래서 서유럽으로 이민 많이 감→EU가 EU 국가 간 노동이동의 자유화 된 이후 의료진 유출 많아짐). 90년대 초반만 해도 의료진 많이 있었지만 급격한 under financing으로 기존 체제가 무너지고 새로운 제도 정

착에 시간 걸림. 기대수명 감소, 암 사망률, 심장병 사망률 등 증가: 소비엿 기간보다 높고 90년대에 계속 높았음. 2000년대 들어오면서 개선되고 있음. 아동: 독립기간때 아동돌봄기관이 soviet 때 부터와 도 동일하게 유지됨. 심각한 문제 아니라고 봄. 젊고 아기 있는 부부를 위한 재정지원 적었음. 보육시설이 남아있지만 모든 부모가 이를 위한 재정적 여유 있지 않음. 가장 심각한 문제는 빈곤, 실업, 보건의료 분야였으며, 덜 심각한 문제는 아동문제라고 평가함.

Q 3. 체제전환 이후 발생한 사회문제에 대한 대응으로서 어떠한 사회복지정책을 시행하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대표할만한 사회복지정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A 3. social budget이 일반예산에서부터 분리되고 social agency가 설립됨→사회기금 징수 및 지출 담당. social agency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WB에서 고강도 트레이닝 받음→이는 WB의 가장 긍정적인 액션 중 하나로 연금체계, 기여의 개별화, IT시스템 등에 대한 트레이닝 실시함. 가장 주요한 개혁은 연금개혁으로 NDC기반 개별화하였고, 보건의료분야에서는 장기간 적절한 개혁이 없었지만 일반의 (GP) 제도 구축. 가장 대표적인 사회정책개혁은 (직후) 사회보험(social insurance)로의 변경, (독립 10년 뒤) 사회복지(social assistance) 개혁.

Q 4. 체제전환의 충격으로 출생률이 낮아졌습니다.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실시한 정책들은 무엇이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A 4. 가장 큰 이유: 빈곤(impovertishment), 그리고 아무것도 시행되지 않음. 정책이 출산률을 높이도록 장려하지만 체제전환 이후 첫 20년간 실질적으로 적용된 정책 적음. 현재는 현금지원(출산률 높이기 위해 둘째, 셋째 등 자녀에게 더 많은 현금 지원), 무상급식, 무료 교통

비, 신규 유치원 개원, 유치원 수용인원마감으로 유치원 등원 어려울 경우 민간 내니 비용 지원 등 제공. 많은 정책들이 에스토니아에서부터 가져왔으며, 많은 정치인들 에스토니아 정책을 롤 모델로 삼아서 적용함(에스토니아가 비슷한 사회변화를 먼저 겪고 이에 대한 정책을 시행하였기에)

Q 5-1 체제전환 이후 나타났던 의료시설의 부족(노인 요양 및 의료시설 포함)을 어떤 정책으로 대처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A 5-1. 체제전환 바로 직후에는 의료시설 부족현상이 나타나지 않음. 다만 재정지원 부족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병원, 클리닉, 의사들을 유지할 수 없게 됨. 이로 인해 의료붕괴 시작. 가장 최악의 상황이 되었을 때 많은 병원들 닫게 되고 의사들 직업 바꾸게 됨. 이로 인해 민간 병원 기업이 높은 국가 중 하나가 되고 자기부담금이 높은 국가가 됨.  
→ 이로인해 고용주가 제공하는 의료보험이 대중화됨

Q 5-2. 체제전환 이후 알코올 소비량이 늘어났습니다. 알코올 소비량의 증가 배경은 무엇이며,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A 5-2. 스트레스가 높은 상황이 나타남에 따라 알코올 소비량 늘음: 빈곤, 실업, 불확실성, 알코올에 대한 쉬운 접근성 등이 원인으로 판단됨. 1990년에는 알코올을 하루 언제든지 팔 수 있었으며 이에 대한 제한(restriction) 없고 어디서든 구매 가능하였음→알코올 소비량 증가 초래

Q 5-3. 발틱 3국은 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유럽연합 국가들 중 최상위권입니다. 그 배경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A 5-3. 사망률 높은 이유는 자금부족(의료비 지출의 어려움, 적절한 시기에 진단 어렵고, 현대의학에 대한 비용지출 어려움) 및 낮은 의료접근

성(특히 농촌 지역)이 원인이라고 생각함.

Q 5-4. 발틱3국의 진료대기시간이 상당히 깁니다. 진료대기시간이 긴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의료진 부족? / 시설의 도시 집중화? / 의료비의 자기부담금이 많아서? /기타)

A 5-4. 의료진 부족, 시설의 도시집중화, 높은 본인부담금 모두 진료대기 시간이 긴 이유임

Q 6. 서유럽 등으로 이주한 젊은 세대들이 다시 본국으로 얼마나 돌아오고 있는지,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유인하는 정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A 6. 본국으로 돌아오는 젊은세대 아주 적음 예를들어 100,000명이 이주하였다면 약 100명만 돌아옴. 돌아오지 않는 이유는 급여가 낮고, 적절한 주거 제공이 어려움(사회주택 없고, 대부분이 민간주택으로 정부 주택지원 없음). 이에 최근 정부가 주거지원으로 청년층의 주거 모기지의 첫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적용하였지만 젊은층의 주거비 지원 많지 않음. 요즘 돌아오는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 가족과 함께하기 위해 돌아오거나, 브렉시트로 인해 영국에서 거주하지 않게 되는 경우 돌아옴(이 이유들에 대해서는 외부 자료로 확인되었지 라트비아 정부 데이터 없음).

Q 7. CIS가 아닌 EU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A 7. CIS를 선택하는 가능성은 염두에 두지도 않았고, 유럽으로 선택하는 방향으로 strong movement 있었음. 독립을 얻었고, 정치적으로 또한 통치국(occupator)에 다시 속할 이유 없었음. 이러한 유럽에 대한 movement는 일반 대중과 엘리트들에서 있었으며, 많은 정치 엘리트들은 서유럽에서 왔고, 서구국가에 oriented 됨.

Q 8. 발틱 3국의 복지제도는 사회주의를 경험하였던 국가들과 비교할

때,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비셰그라드, CIS, 유고슬라비아 등)

A 8. 비셰그라드는 경제를 폐지하지 않음: 이로 인해 높은 수준의 경제 발전을 유지하였고, 사회제도에 대한 더 많은 자금을 갖고 있도록 함. 국가 내 있는 엘리트들로 인해(이민 엘리트가 아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개인적으로 비셰그라드 국가에 대한 지식 많지 않음. CIS 국가들은 높은 불평등이 나타남. CIS, 라트비아, 발틱 비교하였을 때, CIS는 아직도 은퇴연령이 낮음. 발틱국이 잘한 것 중 하나는 은퇴연령이 높아짐. 최근 러시아에서도 은퇴연령 높이기 시작. 아직 근로할 수 인구에 대해 연금에 너무 많은 예산 들어감. 유고슬라비아에 대해 아는 부분 없음. 비셰그라드 국가와 발틱 국 공통점은 모두 EU 회원국(모두 같은 해 가입함, 2004년). 사회정책은 각국의 개인 정책이 있겠지만, 연금, 노동시장, 실업정책 등 EU의 백서 및 정책 방향 기반으로 비슷한 방향을 추구함.

Q 9. 발틱 3국간의 경제정책 또는 사회정책에 관한 협력이나 협약 등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발틱 3국은 독립과정에서도 3국간의 연대가 중요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1989년 5월에 결성된 발틱의회(Baltic Assembly)가 같은 해 8월에 발틱의 길(Baltic way)이라고 불리는 평화적 저항 운동을 성사시키는 것이라든지, 3국간의 연대를 통한 EU가입과 NATO가입을 위한 발틱해 이사회(BBS: Council of Baltic Sea States) 결성 등이 있습니다)

A 9. 경제정책/사회정책 관련 협력 또는 협약은 없음. 그러나 모두 EU 회원국이며, 외교에 대한 정치적 협력 있음. 사회정책에 대한 협력 없고 경제의 경우 협력이라고 하기 보다는 경쟁자임.

Q 10. 체제전환 이후 사회를 주도하는 주된 세력이 누구(노멘클라투라,

시민단체, 노동조합, 정부관료 등)이며, 그 배경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A 10. 노멘클라투라 90년대 gradually live in the stage 첫해에는 노멘클라투라와 엘리트들(서구 국가에서 라트비아로 돌아온)의 협력. NATO, EU, EU이사회, 서유럽의 일원이 되고자 하는 의지(willingness to become NATO, part of EU, part of EU council, part of western EU). 노동조합은 아주 약하고 지금까지도 약함. 정부관료(civil servants)는 국제기구가 트레이닝 한 정부관료는 중요한 역할 함. 사회구조 및 사회지원에 대한 행정적 역할의 적절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함.

Q 11. 발틱 3국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이 체제전환 된다면, 어떠한 사회문제가 예상되며, 그 해결을 위해 어떠한 사회복지정책을 준비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A 11. 발틱 국가는 좋은 예시가 되지 못할 것이고 오히려 독일의 예시를 찾아보길 권함. 발틱 국가의 제안으로는 보편적 체계를 최대한 길게 가져가고 급격히 개별화 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중요하지만 북한의 사회정책 알지 못하여 대답할 수 없음.

Q 12. NDC(Nominal Defined Contribution) 연금제도를 도입했는데, 그 배경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NDC 도입 이후에도, 연금 급여액이 적어 노후빈곤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금액이 왜 이렇게 낮은지 그리고 연금의 노후빈곤문제 해결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A 12. 배경: 연금이 기여금에 의해서만 운영됨. 보편주의(universalism) →개인주의(individualized)에 대한 강한 연결고리 구성. 연금액 낮은 이유를 보면 NDC는 기초연금 포함하지 않음. 아주 flat한 요인.

why are there so low pension in Latvia - research gate에서  
 페이퍼 찾아서 보길 권함. 이유로는 짧은 커리어로 커버할 수 있는 연  
 금 제도 매커니즘 없음. 기존의 제도를 새로운 양식에 넣는 방식의 잘  
 못된 선택에 의함(bad coincident).

Q 13. 사회주의 시대 주요 당, 정, 군 엘리트 집단들이 체제전환 이후 연  
 금혜택을 많이 받은 것에 대하여 비판은 없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A 13. 당연히 비판은 있지만, 엘리트 집단은 아주 자주적이며(autono-  
 mous), 같은 정당(parties)으로 20년 이상 있었고, 당 이름은 바뀌  
 었어도 동일한 인물들이 집권하였음. 그럼에도 엘리트집단은 비판에  
 대한 두려움 없음.

### 3. 리투아니아 - Professor Egle Sumskiene (Vilnius University) (2021.10.29.)

Q 1. 체제전환 이후 정치(서구식 민주주의, 노멘클라투라 청산 등), 경제  
 (경제개방성, 국제기구의 영향, 경제불평등, 지하경제 등), 사회(빈곤  
 율, 출산율, 사회적 신뢰 등) 부문에서 어떠한 변화를 겪었는지에 대  
 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A 1.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침. 처음으로 느낀 변화는 정치적 변화로 민  
 주주의로의 변화(political changes to democracy)이며, 시민사  
 회, 정치 정당, NGO들의 재탄생(rebirth of civil society and po-  
 litical parties, NGOs)으로 변화를 위한 기본사항임(elemental  
 things for changes). 변화할 수 있음에 자유 느낄 수 있음.

시민사회(civil society) - 장애, 아동, 노인 등 환경 문제, 스포츠, 문화,  
 인권 등 해외원조 및 타 유럽국가의 지원(supported by foreign

donors and other European countries) → 지원은 시민사회 기관으로 지원되었으며, 옹호, 정치적 영향, 사회 이동, 사회구성원으로 역할에 지원됨

경제는 자유시장으로 변화됨 → 개인 사업 소유할 수 있으며, 소득의 다양화로 어떤 사람들은 부유해지고(삶이 좋아지고) 다른 사람들은 취약한 수준에 위치하게 됨. 이러한 취약계층은 국가지원에 의존하고 끈임없는 협상이 이루어짐 → 지속적인 지원 필요(장애, 보건, 접근성 등)  
해외국가에서의 지원: 훈련 프로그램 지원, 협동 프로젝트 등으로 지원  
국제기구: EU에 가입하기를 원하였는데 가입을 위해서는 특정 조건이 충족되어야함. 의식(attitude), 가치(values) 등이 있고, 2004년 5월 1일 가입하게 되었고, 가입유지를 위해 특정 규정을 따라야 하는데 종종 이 규정을 따르기 어렵지만 EU의 가치를 따르는게 다행이라고 생각됨.

NATO 가입: 안전과 안보를 위해 가입하였는데, 러시아 및 벨라루스의 이웃으로 있는 것이 안전하지 않게 느껴짐.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s)을 적용하게 됨: 아동권리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장애인권리협약, 국제이주협약 등

시민사회기관: 세계화를 위해 다양한 국제기구 및 국제NGO 가입

Q 2. 체체전환 이후 어떠한 사회문제(빈곤, 실업, 연금, 건강, 보육, 돌봄 등)가 발생하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대적으로 심각한 사회문제와 덜 심각한 사회문제가 무엇이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A 2. 가장 문제되는 부분은 현재 뉴스나 티비, 라디오에서 언급되는 내용은 불법 이민자(illigal migrants)인데, 벨라러시아 국경지역, 아프리카 등에서 오는 불법이민자들 문제가 사회적 이슈뿐만이 아닌 정치적, 안보 및 치안, 인권 부분까지의 문제로 나타남. 이런 불법이민자

들이 국경에서 넘어오지 못하고 국경에 남아있게 되는데 안보 및 치안상의 문제로 경찰당국은 입국허가를 하지 않고, 또 이러한 문제는 인권문제로도 나타남: 국가안보 측면에서는 불법이민자가 리투아니아로 들어오면 안된다는 주장이고, 인권 관련 기관에서는 사람들이 입국해야한다는 주장. 사회적 문제로는 코로나 문제, 격리문제 등이 부분에서 사회서비스, 사회지원 등을 제공하는 것 그리고 이에 대한 사회복지사가 지속적으로 follow-up하는 부분 중요함.

청년 문제: 사회에서 청년이 속하는 위치 찾고 있지만 아직 독립하지 못한 청년, 폭력, 범죄, 학교 밖 청소년/청년,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청년, 불법적근로 등의 문제가 있음.

장애 문제: 현재 리투아니아에서는 장애인을 커뮤니티케어의 방식으로 전화점에 있으나, 사회적 인식 및 태도에 대한 문제 나타남. 장애인에 대한 스티그마/낙인(stigma)이 있는데 지역사회에서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생활하는 것 보다는 기관 혹은 시설에서 치료받고 지내기를 원함. 이들을 이웃으로 같은 사회에 있기 싫어하고, 지역사회의 슈퍼, 동네에서 만나지 않았으면 함.

고용 문제: 실업자 많은 동시에 공장 및 기업 등에서 근로자 부족함. 기업이 믿음직스러운 근로자를 찾아야 하는데 일할 사람을 찾기 어려움. 많은 사람들이 일하려하지 않으려 하고, 실업상태가 많음.

Q 3. 체체전환 이후 발생한 사회문제에 대한 대응으로서 어떠한 사회복지정책을 시행하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대표할만한 사회복지정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A 3. 고용문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 정치인들이 취약그룹의 문제를 해결하려하는데 죄수자, 전 죄수, 범죄자 등의 범죄기록이 취업 시장 애가 되는데 이 갭을 채우는 문제. 이민자, 아동, 정신건강/보건정책,

사회정책

Q 4. 체제전환의 충격으로 출생률이 낮아졌습니다.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실시한 정책들은 무엇이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A 4. 가족지원은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족에게 지원됨: 18세까지 아 이당 1달에 17 유로 지급. 장애아동이 있는 가정에도 지원이 됨. 아 동관련 지원으로 1학년 및 2학년을 위한 무료급식 제공. 비공식 교육 (informal education) 지원으로 1달에 15유로를 지급하며 스포츠, 댄스, 노래, 밴드 등 방과후 활동에 대한 지원 등이 생겼음. 단, 이러 한 지원은 “일반적인 가정”에게 지원됨. 예를 들어 한부모 가정 아동, 장애아동 가정, 이민 가정 아동 등은 적절한 지원 받지 못함. 이러한 가정은 표준(norm)에서 벗어난다고 보아서 보수적 관점에서 벗어나 는 가족은 충분한 지원 받지 못함. 이런 가정이 문제에 직면함. 가족 정책은 표준적인 접근방식(normative approach)로 시행됨 - 가족 은 아버지, 어머니, 아동으로 구성되어야 함. 예를들어 동성애자 커플 가족은 지원받을 수 없음. 또한 장애아동이 있는 가족 또한 장애아동 이 18세가 되면 많은 지원이 끊김. 이러한 지원 접근방식은 구식의 보수적인 가치 기반의 접근방식임.

Q 5-1. 체제전환 이후 나타났던 의료시설의 부족(노인 요양 및 의료시설 포함)을 어떤 정책으로 대처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A 5-1. 의료시설 부족은 없었다고 봄. 몇몇 시골 지역의 작은 의료클리닉 에서 1년에 40명의 환자만 본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는 인구밀도 줄 어 듬에 따라 의료기관이 필요없는 것이고 이로 인해 의료기관이 닫 게 됨. 재정적으로 시골지역에 의료기관, 외래병원이 필요가 없게 됨. 문제는 노인요양 문제인데 이는 의료 문제가 아닌 사회영역의 문 제임. 요양원에 들어가기 위한 대기리스트 김. NGO에서 새로운 노

인요양원을 설립하고 있고, 다양한 대체서비스로 재가서비스 등의 해결방법으로 적용하려 문제해결위해 노력 중임.

Q 5-2. 체제전환 이후 알코올 소비량이 늘어났습니다. 알코올 소비량의 증가 배경은 무엇이며,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A 5-2. 알코올 문제가 있고, 이는 사회에 정신건강 취약성 문제로 나타남. 소련 시대 때부터의 전통으로 음주를 하고 과음하는 문제가 있음. 알코올 소비가 저렴하여 이에 대한 도움을 구하기 보다는 알코올 중독이 됨. 이는 다른 부분으로 자해(self-destruction, self-harm)의 방식으로 나타남. 사람들이 스트레스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대처능력 부재로 음주를 하게 됨. 음주는 또다른 문제로 나타나는데, 범죄행동, 폭력, 자살 등으로 나타남. 알코올 소비는 사망률(다음 질문)과도 연관됨.

Q 5-3. 발틱 3국은 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유럽연합 국가들 중 최상위권입니다. 그 배경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A 5-3. 자해적인 행동 경향(tendency to self-destructive behavior)으로, 남성에서 높은 사망률이 나타남. 남성이 여성보다 10년 정도 빠르게 사망하는데 이는 그들의 행동, 건강, 도움요청, 특정 습관 - 음주 관련, 흡연, 안전하지 않은 운전 습관, 정신건강 문제 등으로 인함. 정신건강 및 자살 등에 대한 문제도 있고, 높은 자살률 및 정신건강 취약에도 관심 필요. 정신건강 문제는 낙인(stigma)와도 관련이 있음. 생물의학적(bio-medical) 접근방식으로 이러한 사람들에게 의약을 제공하고 정신치료법 대신 의료적 치료를 하는 부분.

Q 5-4. 발틱3국의 진료대기시간이 상당히 깁니다. 진료대기시간이 긴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의료진 부족? / 시설의 도시

집중화? / 의료비의 자기부담금이 많아서? / 기타)

A 5-4. 특정 의료전문의/의사의 진료대기시간이 길지만 모든 의료에 대한 대기시간 긴 것 아님. 진료대기시간이 긴 것은 의료진 부족으로 인함이며, 많은 의료진은 북유럽국가, 독일, 영국 등으로 이주하였는데 이는 높은 임금을 주기 때문임. 시골지역에서 높은 급여를 준다고 하여도 의료진 채용되지 않고 전문의 부족현상 나타남. 사람들이 도시로 집중되고 의료 또한 집중되기 때문임. 의료비의 자기부담금이 높아서 아님.

Q 6. 서유럽 등으로 이주한 젊은 세대들이 다시 본국으로 얼마나 돌아오고 있는지,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유인하는 정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A 6. 사람들이 돌아오긴하지만, 주요 정책은 전문가를 위한 정책임. 예를 들면, 매니저, 개인사업자 등이며, 미숙련 및 자격미달 직업(unskilled & unqualified job)의 근로자를 위한 정책 아님. 이런 미숙련 직업 이민자는 아직도 영국, 독일, 북유럽, 미국, 캐나다 등에서 이러한 근로를하며 이들은 언급되지 않고 다시 리투아니아로 돌아오는 부분 및 정책 논의되지 않음. 전문가와 같이 리투아니아에 도움이 되는 대상 위주의 이민정책

Q 7. CIS가 아닌 EU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A 7. EU 선택은 당연함. 리투아니아는 거대한 문명(vast civilization)으로 유럽의 부유한 국가 중 하나였고, 식민국이 되면서 억압되었고, 소련의 동맹국이 될 수 없었음.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역사적, 문화적 등 모든 부분을 합해 EU를 선택하지 않을 이유 없었음.

Q 8. 발틱 3국간의 경제정책 또는 사회정책에 관한 협력이나 협약 등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발틱 3국은 독립과정에서도 3국간의 연대

가 중요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1989년 5월에 결성된 발틱의회(Baltic Assembly)가 같은 해 8월에 발틱의 길(Baltic way)이라고 불리는 평화적 저항 운동을 성사시키는 것이라든지, 3국간의 연대를 통한 EU가입과 NATO가입을 위한 발틱해 이사회(BBS: Council of Baltic Sea States) 결성 등이 있습니다)

A 8. 모든 영역에서 모든 발틱 3국간 협력을 한다고 볼 수 있음. 대학, NGO, 등 협력하며, 발틱 3국의 장관들도 공통문제에 대해 협력하고 EU의 수준에 맞추기 위해 함께 노력함. 발틱 3국은 가깝고 모두 작은 국가이며, 역사, 소련의 식민통치, 언어, 문화, 등 공통점이 많으며 에너지, 정치, 사회 등에서 많은 프로젝트 함께 수행함. 발틱 3국간 높은 연대감 있음

Q 9. 체제전환 이후 사회를 주도하는 주된 세력이 누구(노멘클라투라, 시민단체, 노동조합, 정부관료 등)이며, 그 배경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A 9. 시민사회(시민단체)가 아주 중요함 약하고 통합력이 적다고 비판을 받지만 중요한 역할을 함. 정치인들은 또한 중요한데 이들 또한 약하고 실수를 하였다고 비판받지만 사회의 웰빙에 대한 방향을 갖고 있음. 개인적으로 노동조합은 아니라고 봄. 노동조합은 약하고 분절되고, 영향을 미치지 않음. 천천히 추진력이 생기기에는 하나 주도하는 주된 세력은 아님. 영향력 있는 여론 주도자(influential opinion leader)가 있음: 전 정치인으로 소련으로부터 독립 시기에 활발하고 공적으로 인정된(public figure) 인물 등.

Q 10. 발틱 3국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이 체제전환 된다면, 어떠한 사회문제가 예상되며, 그 해결을 위해 어떠한 사회복지정책을 준비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A 10. 거의 독립한지 31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소련시대의 전통이 남아있음. 사람들이 아직 단절됨: 예를들면 코로나 백신접종 관련 반대(against COVID vaccine), 학교에서 정규 테스트에 대한 반대(against regular testing at school), 정부 불신(mistrust in government), 높은 낙인 및 차별(high levels of stigma and discrimination). 북한에 대해 잘 하는 것은 아니지만, 더 심하고 더 큰 강제 수용소(larger concentration camp) 성격으로 생각함. 이럴 경우 사람들에게 심한 트라우마가 있을 것임. 이런 심적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같은 부분이 정신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북한 국민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적 방법이 필요할 것임 (people will be heavily traumatized, and will need professional measure to solve the public mental health of NK.) 이는 국민의 일반 트라우마때문인데 이를 해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함. 아동, 청소년, 청년, 노인, 여성 등 비슷한 경험의 그룹을 구별하고 개인적 접근방식을 활용하여 정확히 해결하는 것이 중요함. 또한 약을 사용하는 의료/생물의학적(bio-medical) 접근방식이 아닌 정신치료요법(psychotherapy)가 중요함. 다른 차원으로는 자해 관련 있을수 있음. 마지막으로 시민사회에 큰 투자를 하여 NGO를 세우고, 건설 및 재건설하여 사람을 인도주의적으로 돕고, 권리를 위해 옹호(advocacy for their rights)하고 정치인, 지방정부, 중앙정부 차원에서 니즈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해야 함. 재정적 측면에서, 직업, 안보, 교육 - 모든 아동에 대한 교육 접근성, 유아교육, 비공식 교육(informal education), 성인교육(adult education) - 직업을 갖고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사회의 다양성으로 성적소수자(LGBTQ)에 대한 부분 논의 필요 - 이들은 억압되어있을 것이고 언

젠가 사회로 나오면 낙인될텐데 이들에 대한 권리, 필요, 문제에 대해 언급되어야 함.

Q 11. 농촌지역의 빈곤층 중 의료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않은 집단이 있습니다.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배경은 무엇이며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A 11. 농촌지역 빈곤층도 의료서비스 이용하고 접근성 있음. 다만 교통편에 대한 제약 관련 문제일것임. 버스가 자주오지 않고 이동하기 어려움에 인함. 이를 해결하기위해 이동식 의료서비스 있음(mobile medical service).

Q 12-1. 공공일자리 창출은 어떤 분야에서 이루어졌으며, 어떤 집단이 수혜를 받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A 12-1. 의료 영역, 교육 영역, 사회영역 등 많은 일자리 있음. 교사는 필요하지만 채용되지 않아 학교 운영에 어려움 있음. 유치원에서도 간호사 및 교사 필요한데 계속 부족함. 병원에서도 큰 고용격차 있음. 사회서비스 영역 또한 사회복지사 필요한데 채용되지 못하고 있음. 이러한 영역에서 채용되어야 하는데 사람들이 교사, 간호사, 의사 등이 되고 싶어 하지 않음. 이것이 문제임.

Q 12-2. 왜 청년들은 교사 혹은 간호사가 되고 싶어하지 않나요? 안정적인 직업인데.

A 12-2. 맞다. 안정적인 직업이지만 안정적인 직업은 좋은 직업이라는 것이 아님. 교사가 되는 것은 어려움. 아주 어려움. 아이들이 시끄럽고 요구가 많고, 그들의 부모 또한 티칭 방식에 개입하고 복잡함. 업무 어려움. 안정적이지만 보수가 좋은 직업 아님. 청년들에게 안정성은 중요한 것이 아님. 또한 장기간 한곳에서 근무하고 싶어하지 않음. 다양한 곳에서 근무하고 해외에서 근무하고, 사업을 시작하기도 하

고, 공공영역에서 근무하기도 하고, NGO세팅에서 일하기도 하고 등 세계화로부터 혜택과 다양한 기회를 가짐. 더 좋은 급여를 위해 타 국으로 가기도 함.

Q 13. 체제전환 이후 공공 보육시설이 축소되면서 민간 보육시장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A 13. 대체되고 축소된 것 아님. 아동돌봄 시장에 추가적으로 생긴 부분임. 민간 보육원, 민간 학교 등 추가된 것이지 공공보육은 여전함. 시골/지방(rural)에서 도시로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수요가 적어져 지방의 보육시설이 닫은 것은 있지만 민간이 대체한 것은 아님. 여성이 노동시장 참여함. 소련 시대 때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음. 체제전환 이후 몇몇 여성은 가정에 남아 아이를 돌보고 가정주부를 선택하였지만 이는 이러한 시기적인 부분 있음. 지금 여성은 보인의 커리어를 갖으려 하고 좋은 교육을 받고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함.

Q 14. 2000년대 후반 경제 위기 이후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예산이 삭감되면서 사회복지정책을 집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최근 10년간 경제가 다시 활성화되면서 지방정부에 대한 예산 지원이 확대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A 14. 예산 금액은 정확히 모르지만, 예산이 줄어들었지만 상황은 괜찮아짐

Q 15. 체제전환 이후 독립 직전 노멘클라투라였던 사람들에 대한 리투아니아의 태도는 어떠한지.

A 16. 현재 31년이 지났고, 공산주의였던 사람들은 체제전환 당시에는 선출되고 장관이 되고 등 정부 관료로 있었지만, 자연적인 이유로 감소함 - 사망하거나, 은퇴연령이 되어 정치보다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

기로 선택함. 노멘클라투라는 리투아니아에서 점점 덜 관련이 있음. 체코의 경우 대통령이 아주 늙고 아직도 공산주의 정신을 갖고 있음. 리투아니아의 경우 소련시대 영향력이 있는 정치인이 아직까지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 거의 없음

Q 17. 정당의 성격은 어떠한가.

A 17. 국회에 연합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보수와 진보 정당임. 둘은 잘 하고 있으며, 이들은 유일하게 노멘클라투라가 없음. 진보(liberal): 젊고, 총명하고, 혁신적임(young, bright, innovative). 정부에 예전에는 좌측성향의 정당이 더 많았음. 이들은 공산주의 이후 문제에 더 관련됨(usually relation to post-communist issue). 다만 리투아니아의 전통으로(나쁜 전통이지만) 중요한 것은, 선거 전에 반대하기 위한 정당이 만들어짐. 이들은 이념이 좌측성향과 우측성향에서 왔다갔다 명확한 정치적 성향이 없이 정치적 배경 없이 신흥 정치인으로 나타나는 정당.



## 간행물 회원제 안내

### 회원제에 대한 특전

-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판매용 보고서는 물론 「보건복지포럼」, 「국제사회보장리뷰」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비매용 간행물은 실비로 제공합니다.
- 가입기간 중 회비가 인상되는 경우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 회원 종류

전체 간행물 회원

120,000원

보건 분야 간행물 회원

7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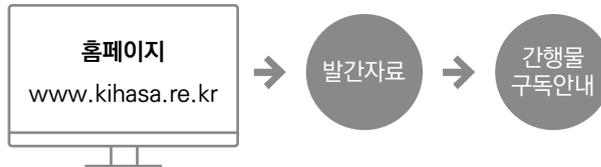
사회 분야 간행물 회원

75,000원

정기 간행물 회원

35,000원

### 가입방법



### 문의처

-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1~5F  
간행물 담당자 (Tel: 044-287-8016)

## KIHASA 도서 판매처

- 한국경제서적(총판) 02-737-7498
- 영풍문고(종로점) 02-399-5600
- Yes24 <http://www.yes24.com>
- 교보문고(광화문점) 1544-1900
- 알라딘 <http://www.aladdin.co.kr>